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기획조정실, 무역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2024. 1.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기획조정실 · 무역위원회 · 국가기술진흥원

2024 · 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I. 세 입 3

<일반회계>

(1) 토지대여료	6
(2) 건물대여료	10
(3) 기타재산이자수입	13
(4) 과태료	15
(5) 과징금	19
(6) 가산금	21
(7) 기타경상이전수입	24
(8) 기타잡수입(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27
(9)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	29

II. 세 출 31

<일반회계>

(1)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1-501)	34
(2) 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7132-303)	47
(3)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7133-301)	62
(4)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7142-317)	71

2. 무역위원회 81

<일반회계>

- (1) 무역구제지원사업(1233-301) 84

3. 국가기술표준원 97

<일반회계>

- (1)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101
- (2) 국제표준활동지원(3731-302) 128
- (3)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3731-303) 148
- (4)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3731-304) 190
- (5)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3731-305) 207
- (6)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3731-306) 244
- (7)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3731-307) 268
- (8)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3731-308) 280
- (9) 국가표준활성화(3731-309) 301
- (10) 시험인증산업경쟁력및신뢰성제고(3731-312) 331
- (11)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R&D)(3731-318) 357
- (12)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R&D)(3731-320) 370
- (13) 스마트계량측정기술기반조성(3731-323) 387
- (14) 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3731-328) 409
- (15)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3732-303) 426
- (16) 안전제도기반조성(3732-304) 446
- (17)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관리(3732-306) 470
- (18)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3732-307) 485
- (19) 어린이제품안전성평가역량강화사업(3732-308) 502
- (20) 제품위해성평가및안전관리(3732-310) 511

(21)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3736-301)	520
(22)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3736-302)	562
(23)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3736-304)	584
(24)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7134-301)	612
(25) 기술표준정책(7134-302)	619

기획조정실

세 입

세입예산 총괄표(기획조정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결산	2023예산 본예산(A)	2024예산안		증 감	
			정부안	확정	(B-A)	%
<일반회계>						
총 계	171,394	182,944	157,872	157,872	△25,072	△13.7
5 관유물대여료	24,916	23,157	23,077	23,077	△80.0	△0.3
토지대여료 (51-511)	21,036	17,779	18,162	18,162	383	2.2
건물대여료 (51-512)	3,880	5,378	4,915	4,915	△463	△8.6
54 기타이자 수입 및 재산수입	11,982	15,102	12,774	12,774	△2,328	△15.4
기타재산이 자수입 (54-546)	11,975	15,102	12,774	12,774	△2,328	△15.4
기타재산이 자외수입 (54-547)	8	0	0	0	0	0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031	1,109	820	820	△289	△26.1
과태료 (56-563)	68	600	150	150	△450	△75.0
과징금 (56-565)	963	509	670	670	161	31.6
57 변상금및 위약금	21	0	0	0	0	0
변상금 (57-571)	21	0	0	0	0	0
58 가산금	1	18	6	6	△12	△66.7
가산금 (58-581)	1	18	6	6	△12	△66.7
59 기타경상 이전수입	106,214	142,660	120,302	120,302	△22,358	△15.7
기타경상이 전수입 (59-596)	106,214	142,660	120,302	120,302	△22,358	△15.7
69 잡수입	907	898	893	893	△5	△0.6
기타잡수입 (69-691)	907	898	893	893	△5	△0.6
84 유가증권 매각대	26,332	0	0	0	0	0
기타잡수입 (84-843)	26,332	0	0	0	0	0

토지대여료
51 - 51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액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토지대여료	21,036	17,779	18,162	18,162	383	2.2%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를 외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게 임대한 토지 임대료

다. 2024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17,77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지역 : $6,938,081.16\text{m}^2 \times 1,375.26\text{원} = 9,542\text{백만원}$ ▪ 자유무역지역 : $\text{예상임대면적} \times \text{예상단가} = 8,237\text{백만원}$ - 마산 : $625,208.51\text{m}^2 \times 6,984\text{원} = 4,366\text{백만원}$ - 군산 : $958,816\text{m}^2 \times 1,147\text{원} = 1,100\text{백만원}$ - 대불 : $936,862.5\text{m}^2 \times 912\text{원} = 854\text{백만원}$ - 동해 : $136,093\text{m}^2 \times 946\text{원} = 108\text{백만원}$ - 울춘 : $251,437.8\text{m}^2 \times 1,236\text{원} = 310\text{백만원}$ - 김제 : $477,400\text{m}^2 \times 775\text{원} = 369\text{백만원}$ - 울산 : $404,489\text{m}^2 \times 2,796\text{원} = 1,130\text{백만원}$
2024예산	18,16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지역 : $7,254,585.04\text{m}^2 \times 1,392.57\text{원} = 10,103\text{백만원}$ ▪ 자유무역지역 : $\text{예상임대면적} \times \text{예상단가} = 8,059\text{백만원}$ - 마산 : $637,750.93\text{m}^2 \times 6,108\text{원} = 3,895\text{백만원}$ - 군산 : $958,816\text{m}^2 \times 1,147\text{원} = 1,100\text{백만원}$ - 대불 : $936,862.5\text{m}^2 \times 1,092\text{원} = 1,023\text{백만원}$ - 동해 : $148,688\text{m}^2 \times 877\text{원} = 130\text{백만원}$ - 울춘 : $184,157\text{m}^2 \times 1,488\text{원} = 274\text{백만원}$ - 김제 : $535,553.6\text{m}^2 \times 791\text{원} = 424\text{백만원}$ - 울산 : $404,489\text{m}^2 \times 3,000\text{원} = 1,213\text{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	17,148	17,148	17,148	17,294	15,712	91.6	90.9	1,581	-
'21	16,722	16,722	16,722	16,388	14,892	89.1	90.9	1,496	-
'22	17,480	17,480	17,480	22,798	21,036	120.3	92.3	1,762	-
'23	17,779	17,779	17,779	18,784	16,607	93.4	88.4	2,177	-
'24	18,162	18,162	-	-	-	-	-	-	-

마. 최근 3년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 정 운		박 한 솔
		044-203-5080		044-203-5086

건물대여료
51 - 51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액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건물대여료	3,880	5,378	4,915	4,915	△463	△8.6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자유무역지역의 표준공장, 물류창고 및 청사·업무지원동 입주기업에 부과한 건물임대료

다. 2024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5,37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지역) 예상임대면적 × 예상단가 - 마산 : $185,031.85\text{m}^2 \times 14,538\text{원} = 2,690\text{백만원}$ - 군산 : $73,717\text{m}^2 \times 11,056\text{원} = 815\text{백만원}$ - 대불 : $60,998.45\text{m}^2 \times 11,902\text{원} = 726\text{백만원}$ - 동해 : $34,862\text{m}^2 \times 9,122\text{원} = 318\text{백만원}$ - 울춘 : $12,359.12\text{m}^2 \times 13,836\text{원} = 171\text{백만원}$ - 김제 : $25,926\text{m}^2 \times 9,990\text{원} = 259\text{백만원}$ - 울산 : $36,680\text{m}^2 \times 10,877\text{원} = 399\text{백만원}$
2024예산	4,91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지역) 예상임대면적 × 예상단가 - 마산 : $232,219.61\text{m}^2 \times 10,270\text{원} = 2,385\text{백만원}$ - 군산 : $71,398\text{m}^2 \times 11,989\text{원} = 856\text{백만원}$ - 대불 : $62,295.75\text{m}^2 \times 8,234\text{원} = 513\text{백만원}$ - 동해 : $34,913\text{m}^2 \times 6,816\text{원} = 238\text{백만원}$ - 울춘 : $12,359.12\text{m}^2 \times 8,181\text{원} = 101\text{백만원}$ - 김제 : $35,149.78\text{m}^2 \times 10,393\text{원} = 365\text{백만원}$ - 울산 : $44,378.86\text{m}^2 \times 10,320\text{원} = 457\text{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	4,562	4,562	4,562	3,286	2,917	63.9	88.8	369	-
'21	5,378	5,378	5,378	2,941	2,525	47.0	85.8	416	-
'22	5,378	5,378	5,378	4,497	3,880	72.1	86.2	617	-
'23	5,378	5,378	5,378	4,931	3,934	73.1	79.7	996	-
'24	4,915	4,915	-	-	-	-	-	-	-

마. 최근 3년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 정 운		박 한 솔
		044-203-5080		044-203-5086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액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기타재산이자수입	11,975	15,102	12,774	12,774	△2,328	△15.4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 민간보조금 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다. 2024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15,1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사업비 총액 × 예상 이자수입율(최근 3개년 이자수입율 가중평균 × 예상증감율)* = 3,775,500백만원 × 0.004= 15,102백만원 * {(0.49% × 0.2) + (0.39% × 0.3) + (0.16% × 0.5)} × 1.38
2024예산	12,77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사업비 총액 × 예상 이자수익율(최근 3개년 이자수익율 가중 평균) = 4,389,690백만원 × {(0.39% × 0.2) + (0.16% × 0.3) + (0.33% × 0.5)} = 12,774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	-	-	-	-	-	-	-	-	-
'21	-	-	-	-	-	-	-	-	-
'22	20,891	20,891	20,891	12,437	11,974	96.2	96.2	462	-
'23	15,102	15,102	15,102	32,864	32,825	217.3	99.8	38	-
'24	12,774	12,774	-	-	-	-	-	-	-

마. 최근 3년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정운		박한솔
		044-203-5080		044-203-5086

과태료
56 - 56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액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과태료	68	600	150	150	△ 350	△ 58.3

가. 법적 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31조(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4항
 - ④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46조(과태료) 제1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3.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과태료) 제3항 제1호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1. 녹색경영체제 인증사업

⑧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②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준용한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8항(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舊)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정받거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경영체제인증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舊)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나. 세입 개요

○ 전기공사허위실적 제출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규정(연비등급 등)을 위반한 제작사·수입사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 품목(TV, 냉장고 등)의 등급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업체에 과태료 부과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舊)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다. 2024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6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21년 수납액 산술평균 × 수납액 증가율 = 265백만원 × 2.264= 600백만원
2024예산	1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개년('20~'22년) 수납액 × 가중평균 = 150백만원 * [(251*0.2) + (220*0.3) + (67*0.5)] = 150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	600	600	600	369	252	42	68.2	117	-
'21	600	600	600	358	220	36.6	61.4	138	-
'22	600	600	600	195	68	11.3	34.8	127	-
'23	600	600	600	243	92	15.3	37.8	151	-
'24	150	150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정운 팀장		박한솔
		044-203-5080		044-203-5086

과징금
56 - 565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액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과징금	963	509	670	670	161	31.6

가. 법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과징금)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다. 2024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509,000	▪ '19~'21년 수납액 산술평균 × 수납액 증가율 = 407백만원 × 1.25= 509백만원
2024예산	670,000	▪ 최근 3개년('20~'22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670백만원 * [(502*0.2) + (294*0.3) + (962*0.5)] = 670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	1,251	1,251	1,251	7,942	502	40.1	6.3	7,441	-
'21	1,251	1,251	1,251	7,466	295	23.5	3.9	7,171	-
'22	1,251	1,251	1,251	8,090	963	76.9	11.9	7,127	-
'23	509	509	509	7,959	818	160.7	10.2	7,140	-
'24(안)	670	670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정운 팀장		박한솔
		044-203-5080		044-203-5086

가산금
58 - 58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액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토지대여료	0.2	18	6	6	△12	△66.6

가. 법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6(가산금) 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도록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가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과징금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 부과
-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부과 후,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 부과

다. 2024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1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년('19~'21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18백만원 * $[29 \times 0.2] + (6 \times 0.3) + (16 \times 0.5) = 18$백만원
2024예산	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년('20~'22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6백만원 * $[(6 \times 0.2) + (16 \times 0.3) + (0 \times 0.5)] = 6$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	14	14	14	264	6	42.8	2.2	258	-
'21	18	18	18	269	16	88.8	5.9	253	-
'22	18	18	18	256	0.2	1.1	0.07	256	-
'23	18	18	18	257	0.8	4.4	0.3	256	-
'24(안)	6	6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정운 팀장		박한솔
		044-203-5080		044-203-5086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액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기타경상이전 수입	106,214	142,660	120,302	120,302	△22,358	△15.6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

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 민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기타 반납금, 연체료 등

다. 2024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142,660,000	<div>▪ 연도별 사업비(보조금, 출연금) 총액 및 반환률 (백만원, %)</div> <table><tr><th>연도별</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r><tr><td>사업비</td><td>2,798,353</td><td>3,449,139</td><td>3,613,227</td><td>3,839,602</td><td>3,681,346</td></tr><tr><td>반환액**</td><td>127,522</td><td>104,666</td><td>106,575</td><td>135,398</td><td>-</td></tr><tr><td>반환률</td><td>4.56%</td><td>3.03%</td><td>2.95%</td><td>3.53%</td><td>-</td></tr></table> <div>* '21년도 추경액(6,999백만원) 포함 ** '18년 순기조정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수입증가액(215억원) 제외, '20년 연말징수분 납기미도래에 따른 일시적 미수납액(52억원) 가산</div> <div>▪ '22년 사업비 총액 × 예상 반환율(최근 4개년 반환율 산술평균 × 예상증감율)* = 3,681,346백만원 × 0.03875= 142,660백만원 * {(4.56%+3.03%+2.95%+3.53%)/4} × 1.101</div>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비	2,798,353	3,449,139	3,613,227	3,839,602	3,681,346	반환액**	127,522	104,666	106,575	135,398	-	반환률	4.56%	3.03%	2.95%	3.53%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비	2,798,353	3,449,139	3,613,227	3,839,602	3,681,346																					
반환액**	127,522	104,666	106,575	135,398	-																					
반환률	4.56%	3.03%	2.95%	3.53%	-																					
2024예산	120,302,000	<div>▪ 연도별 사업비(보조금, 출연금) 총액 및 반환률 (백만원, %)</div> <table><tr><th>연도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tr><td>사업비</td><td>3,449,139</td><td>3,613,227</td><td>3,839,602</td><td>3,681,346</td><td>3,670,634</td></tr><tr><td>반환액**</td><td>104,666</td><td>106,575</td><td>135,398</td><td>106,214</td><td>-</td></tr><tr><td>반환률</td><td>3.03%</td><td>2.95%</td><td>3.53%</td><td>2.88%</td><td>-</td></tr></table> <div>* '21년도 추경액(6,999백만원) 포함 ** '18년 순기조정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수입증가액(215억원) 제외, '20년 연말징수분 납기미도래에 따른 일시적 미수납액(52억원) 가산</div> <div>▪ '23년 사업비 총액 × 예상 반환율(최근 4개년 반환율 산술평균 × 예상증감율)* = 3,670,634백만원 × 0.0327= 120,302백만원 * {(3.03%+2.95%+3.53%+2.88)/4} × 1.055</div>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3,449,139	3,613,227	3,839,602	3,681,346	3,670,634	반환액**	104,666	106,575	135,398	106,214	-	반환률	3.03%	2.95%	3.53%	2.88%	-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3,449,139	3,613,227	3,839,602	3,681,346	3,670,634																					
반환액**	104,666	106,575	135,398	106,214	-																					
반환률	3.03%	2.95%	3.53%	2.88%	-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	154,190	154,190	154,190	107,800	101,217	65.6	93.8	6,583	-
'21	163,595	163,595	163,595	136,664	135,398	82.7	99.0	1,266	-
'22	163,595	163,595	163,595	111,161	106,214	64.9	95.5	4,946	-
'23	142,660	142,660	142,660	84,764	83,437	58.4	98.4	1,327	-
'24(안)	120,302	120,302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정운 팀장 044-203-5080		박한솔 044-203-5086

기타잡수입(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13 - 69 - 69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액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기타잡수입	38	34	26	26	△8	△23.5

가. 법적 근거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입주업체의 전기·수도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등

다. 2024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34,000	▪ 최근 3개년('19~'21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34백만원 * $[46 \times 0.2 + (8 \times 0.3) + (19 \times 0.5)] = 34$ 백만원
2024예산	26,000	▪ 최근 3개년('20~'22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26백만원 * $[(8 \times 0.2) + (19 \times 0.3) + (38 \times 0.5)] = 26$ 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	45	45	45	9	8	17.7	88.8	1	-
'21	45	45	45	19	18	40.0	94.7	1	-
'22	21	21	21	39	38	180.9	97.4	1	-
'23	34	34	34	12	10	29.4	83.3	2	-
'24(안)	26	26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정운 팀장		박한솔
		044-203-5080		044-203-5086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

14 - 69 - 69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액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기타잡수입	869	864	867	867	3	0.3

가. 법적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 ①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해당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비용 전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권자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자유무역지역 내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공동부담금

다. 2024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864	▪ 최근 3개년('19~'21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864백만원 * $[860 \times 0.2 + (855 \times 0.3) + (871 \times 0.5)] = 864$ 백만원
2024예산	867	▪ 최근 3개년('20~'22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867백만원 * $[(855 \times 0.2) + (871 \times 0.3) + (869 \times 0.5)] = 867$ 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	896	896	896	991	855	95.4	86.2	136	-
'21	734	734	734	1,031	871	118.6	84.4	160	-
'22	807	807	807	1,056	869	107.6	82.2	187	-
'23	864	864	864	1,108	871	100.8	78.6	236	-
'24(안)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정운 팀장		박한솔
		044-203-5080		044-203-5086

세 출

세출예산 총괄표(기획조정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결산	2023예산 본예산(A)	2024예산		증 감	
			정부안	확정(B)	(B-A)	%
<일반회계>	7,213	7,956	7,741	8,402	446	5.6
총 계	7,213	7,956	7,741	8,402	446	5.6
7131 산업통상자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2,975	3,007	2,749	2,749	△258	△8.6
산업통상자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7131-501)	2,975	3,007	2,749	2,749	△258	△8.6
7132 행정능률향상 및능력개발	823	1,333	1,715	2,376	1,043	78.2
행정능률향상 및능력개발 (7132-303)	823	1,333	1,715	2,376	1,043	78.2
7133 본부정책수립 운영	1,145	1,391	1,393	1,393	2	0.1
산업통상자원 정책지원 (7133-301)	1,145	1,391	1,393	1,393	2	0.1
7142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2,270	2,225	1,884	1,884	△341	△15.3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정보화) (7142-317)	2,270	2,225	1,884	1,884	△341	△15.3

사 업 명
(1)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1-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5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산업통상자 원행정정보 시스템구축 (정보화)	소관부처 사업시행주체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 응 대	박 성 배	나 응 주
		정보관리담당관	044-203-5550	044-203-5552	044-203-555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산업통상자원행정 정보시스템구축	2,976	3,007	2,749	2,749	-258	△8.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65	3,319	2,976	215	128	3,007	3,222	3,031	3,007	2,816	100	91	2,749	
· 정보시스템고도화	886	940	644	215	81	602	817	639	602	424	100	78	612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380	1,380	1,349	-	31	1,420	1,420	1,412	1,420	1,412	-	8	1,430	
· 정보보호체계구축	799	799	794	-	5	985	985	979	985	979	-	5	707	
·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200	200	189	-	11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3,265	3,319	2,976	215	128	3,007	3,222	3,031	3,007	2,816	100	91	2,749	
· 관 리 용 역 비 (210-15)	1,425	1,425	1,389	-	36	1,465	1,465	1,457	1,465	1,457	-	8	1,475	
· 사 업 추 진 비 (240-01)	7	7	7	-	-	6	6	6	6	6	-	-	6	
· 일 반 연 구 비 (260-01)	689	689	441	188	60	250	438	352	250	164	62	24	453	
· 자 산 취 득 비 (430-01)	1,144	1,198	1,139	27	32	1,286	1,313	1,215	1,286	1,188	38	59	81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265	3,319	2,976	215	128	3,007	3,222	3,031	3,007	2,816	100	91	2,749	
· 정보시스템고도화	886	940	644	215	81	602	817	639	602	424	100	78	612	
-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6	6	6	6	6	-	-	6	
- 일반연구비(260-01)	689	689	441	188	60	250	438	352	250	164	62	24	453	
- 자산취득비(430-01)	390	444	385	27	32	346	373	281	346	254	38	54	153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380	1,380	1,349	-	31	1,420	1,420	1,412	1,420	1,412	-	8	1,430	
- 관리용역비(210-15)	1,380	1,380	1,349	-	31	1,420	1,420	1,412	1,420	1,412	-	8	1,430	
· 정보보호체계구축	799	799	794	-	5	985	985	979	985	979	-	5	707	
- 관리용역비(210-15)	45	45	40	-	5	45	45	45	45	45	-	-	662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자산취득비(430-01)	754	754	754	-	-	940	940	934	940	934	-	5	45
·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200	200	189	-	11	-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200	200	189	-	11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시스템고도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시급성 등에 따른 단계별 기능 고도화를 통해 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및 효율성 제고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해 정책업무의 안정적 수행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 (정보보호체계구축) 보안장비 도입·유지관리, 보안정책 최적화를 통해 고도화·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5조의2, 제30조, 제52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9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② 추진경위

- 'e-산자부 선언('00)
- 산자부 중장기정보화추진전략 수립('01)

- 산업자원 지식행정체제 확대 중장기정보화추진계획 수립('03)
- 산업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05)
- 산업자원 데이터웨어하우스 정보전략계획 수립('06)
- 산업자원부 정보기술아키텍처적용 기본계획 수립('07)
- 지식경제부 정보화전략 수립('08)
-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12)
-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554	3,220	3,265	3,007	2,74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부내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정보시스템 고도화 : 612백만원

①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606백만원

가. 소속기관 홈페이지 개편(158백만원)

○ (사업목적)

- 소속기관(전기위원회·무역위원회·광산안전사무소·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노후화에 따른 이용자 불편 개선을 위한 개편 추진
- 국문·영문홈페이지 개편('23년)에 맞춰 UI/UX 개편

○ (추진내용)

- 통계정보 등록기능 추가
- 콘텐츠 관리 기능 추가
- 검색엔진 최적화
- 웹에디터 개선을 통한 게시글 관리기능 개선
- 대표홈페이지에 적용한 UI/UX에 맞춰 디자인 개편

○ (산출내역)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총 기능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75	553,114	1.28	0.88	0.95	1.06	1.06	46,351,607
합 계 ((개발원가+이윤(개발원가 10%)) × 1.1(부가가치세))							51,000,000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총 기능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75	553,114	1.28	0.88	0.95	1.06	1.06	46,351,607
합 계 ((개발원가+이윤(개발원가 10%)) × 1.1(부가가치세))							51,000,000

·광산안전사무소(4개소) 홈페이지

총 기능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28	553,114	1.28	0.88	0.95	1.06	1.06	17,000,000
합 계 ((개발원가+이윤(개발원가 10%)) × 1.1(부가가치세))							18,700,000

·자유무역지역관리원(7개소) 홈페이지

총 기능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55	553,114	1.28	0.88	0.95	1.06	1.06	33,909,000
합 계 ((개발원가+이윤(개발원가 10%)) × 1.1(부가가치세))							37,300,000

나. 업무포털 개선(94백만원)

○ (사업목적)

- 부내 사용자 간 효율적으로 프로젝트 또는 작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업무포털 내 협업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업무관리에 있어 팀별로 빠르게 협업을 진행하고 실시간 진행상황 공유

○ (추진내용)

- 업무방 생성 및 구성원 설정
- 담당자별로 작업 단계 관리(대기→진행→완료)
- 담당자별 설정 관리(업무기한일, 체크리스트 등)
- 작업이력 관리 및 업무시스템(메신저 등)간 연계 추진

○ (산출내역)

총 기능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99	553,114	1.28	0.94	1.05	1.06	1.06	77,730,006
합 계 ((개발원가+이윤(개발원가 10%)) × 1.1(부가가치세))							94,000,000

다. 업무연락시스템 개선(85백만원)

○ (사업목적) 우리부와 산하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개선 등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 (추진내용)

- 업무연락방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실시간 대화 등)
- 공지, 답변 등의 알림 기능 강화

- 엑셀자료 등의 취합 기능 개선

○ (산출내역)

총 기능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90	553,114	1.28	0.94	1.05	1.06	1.06	70,663,631
합 계 ((개발원가+이윤(개발원가 10%)) × 1.1(부가가치세))							85,000,000

라. IT지원센터·변화관리 시스템 개선(60백만원)

○ (사업목적)

- 부내 사용자의 IT 서비스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 업무 지원
- 체계적인 업무분석으로 시스템을 개편하여 처리과정에서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추진내용)

-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 분석 및 처리 프로세스 시스템 내 개선
-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 및 접수·처리 과정의 편의성 개선

○ (산출내역)

총 기능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75	553,114	1.28	0.88	0.95	1.06	1.06	49,887,410
합 계 ((개발원가+이윤(개발원가 10%)) × 1.1(부가가치세))							60,000,000

마. 업무자동화(RPA) 구축 및 서버 교체(132백만원)

- (사업목적) 단순반복적 업무를 로봇이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여 비용,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혁신 추진

○ (추진내용)

- 로봇엔진 라이선스 구입
- 자동화 4개 과제 발굴 및 개발
- 노후화된 RPA 서버 교체

○ (산출내역)

- 로봇라이선스 구입

품명	수량	단가	금액
RPA 관리용 웹페이지	2	13,200,000	26,400,000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	1	4,950,000	4,950,000
자동화 실행 프로그램(봇)	4	6,050,000	24,200,000
합 계			56,000,000

- RPA 서버 구입

구 분	단 가	대 수	합 계
RPA서버(내·외)	10,000,000	2	20,000,000

- 신규 업무자동화 과제(4건) 개발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업무분석가	IT기획자	IT컨설턴트
투입인력	1	1	2.15
노임단가	11,409,840	8,124,332	10,082,426
인건비	11,409,840	8,124,332	21,677,216

제경비	직접인건비×15%	1,711,476	1,124,158	3,251,582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1,312,132	861,854	2,492,880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1,443,345	948,040	2,742,168
합 계				56,000,000

바. 광업정보시스템 서버 이중화 구축(77백만원)

- (사업목적) 단일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시스템 장애에 취약한 광업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중화 구축
- (추진내역) 업무망/인터넷망 DB서버 이중화용 HW 및 시스템 SW구매
- (산출내역)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업무망/인터넷 DB 서버(OS 포함)	2	6,000,000	12,000,000
시스템 SW(업무망 DBMS SW)	1	22,000,000	22,000,000
시스템 SW(인터넷 DBMS SW)	1	43,000,000	43,000,000
합 계			77,000,000

② 정보화 협의체 운영: 6백만원(240-01/업무추진비)

- (사업목적) 산업부 본부 외 16개 소속기관 및 41개 공공기관 등 전자정부 서비스 주체가 다양하고 산업·무역·에너지 등 경제관련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빅데이터 수집, 발굴, 품질관리 등을 위한 산·학·민·관 협의체 운영 필요
- (추진내용)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간의 시스템 통합관리 및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화 협의체 구성·운영
- (산출내역) 산업부 정보시스템(16개 소속기관 포함) 및 41개 공공기관 시스템 통합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0.3백만원×18회), 산업부 및 산하공공기관 정보화책임관 간담회(0.3백만원×2회)

(2) 행정시스템 유지보수 : 1,430백만원

① H/W 유지보수: 120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 행정정보시스템(20종): 117백만원, 디지털도서관(1종): 3백만원

구분	HW		
	도입가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2등급	548,576,000	8.0%	43,886,080
3등급	1,095,827,000	7.0%	76,707,890
합계	1,644,403,000		120,593,970

②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28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구분	네트워크 장비		
	도입가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합계	352,813,000	8.0%	28,225,040

③ 상용 S/W 유지보수: 278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 행정정보시스템(20종): 256백만원, 디지털도서관(1종): 5백만원,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1종): 2백만원, 광업정보시스템(1종): 15백만원

구분	상용 SW
----	-------

	도입가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2등급	2,245,981,000	12.0%	269,518,720
3등급	86,100,000	10.0%	8,610,000
합계	2,332,081,000		278,128,720

④ 개발 S/W 유지보수: 803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 행정정보시스템(20종): 560백만원, 디지털도서관(1종): 17백만원,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1종): 22백만원, 광업정보시스템(1종): 148백만원, 무역구제업무시스템(1종): 18백만원, 수입동향시스템(1종) : 15백만원, 자유무역지역통합홈페이지관리시스템(1종): 23백만원

구분	개발 SW		
	구축비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합계	8,030,632,000	10%	803,063,200

⑤ 위탁운영비 : 126백만원(위탁운영, 210-15/관리용역비)

가. 정보화사업(시스템) 운영지원: 64백만원

- 사업-품질관리 및 의사결정, 정보시스템 및 통합정보 보호시스템 운영지원, RPA SW 지원 등 (기술자 1인)

* 산업부 대표 홈페이지, 16개 소속기관 홈페이지 및 각종 실물경제 지원시스템 등에 대한 업무지원·민원 대응 소요가 많아 전문 인력(1명) 상주 필요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IT지원 기술자
투입인력		12
노임 단가		3,840,221
인건비		46,082,652
제경비	직접인건비×15%	6,912,398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5,299,505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5,829,456
합 계		64,124,011

나. 광업정보시스템 위탁운영: 62백만원

- 사용자 업무지원, 민원대응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기술자 1인)

* 광업정보시스템은 광업권 행정업무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으로, '22년 온라인 민원발급건수가 78,455건에 달하는 등 업무지원·민원대응 소요가 많아 전문 인력 상주 필요

업무활동		직무별 투입공수(MM)		
		IT프로젝트관리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투입인력		0	0	12
평균임금		9,543,259	6,729,052	3,918,511
인건비		0	0	47,022,132
직접인건비합계				47,022,132
제경비	직접인건비×15%			7,053,320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5,407,545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5,948,300
합 계				65,431,297
할인율	5.2%			62,000,000

⑥ 기타 운영비 (1종): 75백만원(기타 운영지원, 210-15/관리용역비)

-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WACS) 데이터 및 분석 자료 구매: 75백만원

* 국제 원자재 시장의 산업 관련 주요 16개 품목별 원자재 지수 데이터 및 분석 자료를 전문 분석기관을 통하여 제공받음

(3) 정보보호체계구축 : 707백만원

① 정보보호 프로그램 구입: 320백만원

○(사업목적)

- 바이러스 감염 위협대응 및 운영체제 최신 패치 등 보안기능 유지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지능화·고도화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사용자 및 서버용 내·외부망 보안 프로그램 연간 라이선스 유지

○ (산출내역)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백신	2,000	29,096	58,192,000
내PC지키미	2,000	23,570	47,140,000
패치관리시스템(PMS)	2,000	28,484	56,968,000
Microsoft GA Subscription	600	261,800	157,080,000
합 계			319,380,000

② 정보보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40백만원

○(사업목적)

-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장애 범위 최소화를 위하여 장비 교체, 이중화 구축
- 주요 백신 서버의 제조사 기술지원 중단 및 장비 노후화로 장비 교체 필요

* 서버 도입 시기 : 내PC지키미 서버 '13년 도입 / 리눅스백신 서버 '11년 도입

**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용연수(컴퓨터 서버 : 6년) 경과된 전산장비 교체

○ (산출내역)

품명	수량	단가	금액
VPN	5	18,183,900	90,919,500
서버팜 스위치	2	18,651,000	37,302,000
백신 서버(내PC지키미)	2	5,500,000	11,000,000
합 계			139,221,500

③ 비밀관리시스템 솔루션 구매: 25백만원

○(사업목적)

-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비밀관리시스템(보안나라)의 서버보안솔루션 내용연수 도래로 구매 필요
- 비밀문서 수발신을 위한 비밀관리시스템으로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체가 불가피함

○ (산출내역)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서버보안솔루션	5	5,000,000	25,000,000
합 계			25,000,000

④ 유해정보차단 강화: 138백만원

○(사업목적)

- 악성코드, 유해사이트 차단을 통한 지능화·고도화 사이버 공격에 보안기능 유지, 개인정보 유출방지 강화
- 기존 장비 기술지원 중단 및 CC인증 만료로 장비 교체 필요

○ (산출내역)

품명	수량	단가	금액
Webkeeper	2	49,500,000	99,000,000

Webkeeper 검색 모듈	1	17,820,000	17,820,000
바이패스 스위치	2	10,500,000	21,000,000
합 계			137,820,000

⑤ 광업정보시스템 보안 SW 이중화: 39백만원

○(사업목적)

- 단일체제로 구성되어 시스템 장애에 취약한 광업정보시스템 DB의 서비스 중단 위험에 대비하고, 노후화된 업무망 DB 암호화 SW('11년 도입) 교체
- 업무망/인터넷 DB 서버 이중화 및 노후 SW 교체용 보안 SW 구매

○ (산출내역)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업무망 DB 암호화 SW	2	13,000,000	26,000,000
인터넷 DB 암호화 SW	1	13,000,000	13,000,000
합 계			39,000,000

⑥ 정보보안 수준 강화: 45백만원

○(사업목적)

- 지능화·고도화되는 해킹시도 및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 웹사이트 점검 및 부내 전 직원 맞춤형 보안교육 실시 필요

* (공공 웹사이트 점검)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보안강화를 위해 비표준 기술 제거, 유해 게시물 등록 차단, UI/UX 최적화 등 주기적 점검 진행

** (보안교육) 부내 소속직원 보안의식 개선을 위한 보안교육 주기적 실시, 해킹 침해 실전훈련, 맞춤형 교육(교재 및 영상 제작) 등 실시

○ (산출내역)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공공 웹사이트 점검	1식	40,000,000	40,000,000
전직원 보안의식 활성화 교육 (소속기관 포함)	10회	500,000	5,000,000
합 계			45,000,000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07	(1)정보시스템고도화:602백만원 ■행정정보시스템고도화(596) ■정보화 협의체 운영지원(6.3) (2)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1,420백만원 ■H/W 유지보수(120)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28) ■상용 S/W 유지보수(278) ■개발 S/W 유지보수(803) ■위탁운영비(121) ■기타운영비(70) (3)정보보호체계구축:985백만원 ■보안 S/W 구입(288) ■방화벽 교체(314) ■서버팜 구역 보안강화(282) ■광업정보시스템 서버 이중화(56) ■정보보안 수준 강화(45)	2,749	(1)정보시스템고도화:612백만원 ■행정정보시스템고도화(606) ■정보화 협의체 운영지원(6) (2)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1,430백만원 ■H/W 유지보수(120)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28) ■상용 S/W 유지보수(278) ■개발 S/W 유지보수(803) ■위탁운영비(126) ■기타운영비(75) (3)정보보호체계구축:707백만원 ■보안 S/W 구입(320) ■보안통합관리시스템(140) ■비밀관리시스템 솔루션(25) ■유해정보차단강화(138) ■광업정보시스템 서버 이중화(39) ■정보보안 수준 강화(45)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정보시스템 장애처리율(%)	목표	91	92	92	92	92	최근 3년간 실적 을 바탕으로 상향 조정하여 설정	{장애등급별 허 용시간 내 장애 처리건수(A) / 전체 장애발생 건수(B)} x 100	정보시스템 SLA 실적
	실적	91.6	100	100	-	-			
	달성도	100.6	108.6	108.6	-	-			
②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점)	목표	73.35	73.35	73.35	73.35		최근 3년간 실적 및 통상적인 사 업수행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수준 등을 고려 하여 목표 설정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결과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결과 (국정원)
	실적	74	75.75		-	-			
	달성도	100.9	103.2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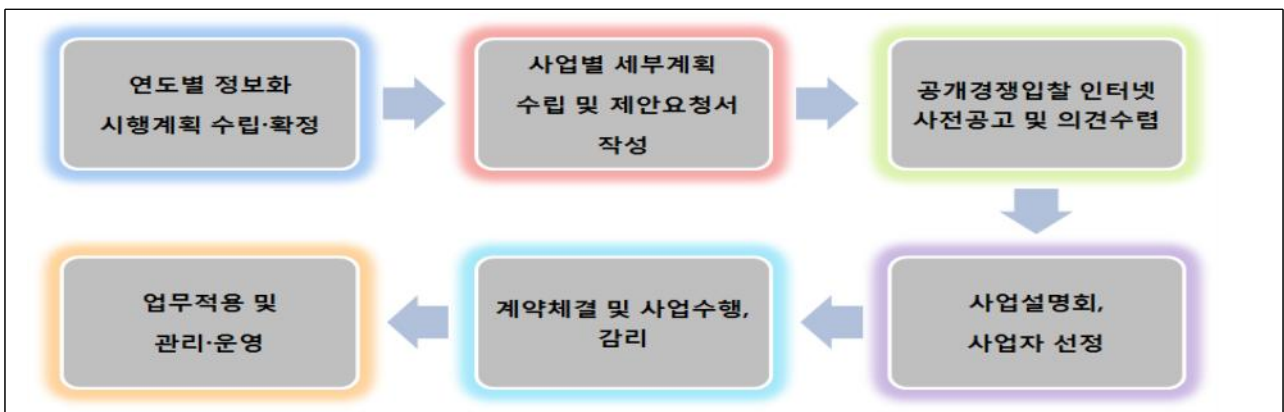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부내 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
- 정보보호체계 보안환경 등 인프라 강화로 사이버 침해사고 시 효과적인 대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3,265	4,301	4,004	4,284	4,565	
'23~'27		3,007	3,222	3,472	3,622	3,87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정책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홈페이지 등 안정적 운영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평가시기	회계/기금	평가등급	비고
2020년도	일반	보통	
2021년도	일반	보통	
2022 도	일반	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산업부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정책업무 지원, 대국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기 운용한 정보시스템의 단계별 고도화 필요
- 나날이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안 대응체계 강화 필요 (방화벽 등 노후 H/W 교체 및 보안시스템 개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3,554	-	3,554	-	-	-	3,554	3,551	99.9	99.9	-	3
2021	3,220	-	3,220	-	-	-	3,220	3,175	98.6	98.6	54	55
2022	3,265	-	3,265	54	-	-	3,319	2,976	91.1	89.6	215	128
2023	3,007	-	3,007	215	-	-	3,222	3,031	101	94.1	100	91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 불용(3백만원) : 집행잔액
2021	- 이월(54백만원) : 계약기간 미종료로 인한 계약잔금 이월 - 불용(55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2022	- 이월(215백만원) : 계약기간 미종료로 인한 계약잔금 이월 - 불용(128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2023	- 이월(100백만원) : 계약기간 미종료로 인한 계약잔금 이월 - 불용(91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 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71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일반회계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3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정책기획관	김종연	나윤정	김훈경
		혁신행정담당관	044-203-5530	044-203-5565	044-203-5536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김훈경	044-203-553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823	1,333	1,715	2,376	1,043	78.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47	967.3	826	100	40	1,333	1,433	1,287	1,333	1,187	115	28	2,376	
· 변화관리 및 혁신 교육	97.4	128.6	118.1	10.5	-	473.19	483.6	432	473.19	422	41	-	340.19	
· 규제개혁 및 갈등 관리 지원	94	94	83.482	-	10.518	99.21	99.21	71	99.21	71	-	28	99.21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50	50	50	-	-	100	100	94	100	94	6	-	100	
· 정책지원 연구	486	490.4	455.839	4.799	29.761	500	504	504	500	500	-	-	392.6	
· 자체평가 및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91.6	176.3	91.441	84.859	-	132.6	217.4	149	132.6	132.6	68	-	240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28	28	28	-	-	28	28	28	28	28	-	-	28	
· 청년인턴 운영	-	-	-	-	-	-	-	-	-	-	-	-	1,109	
· 2030자문단 운영	-	-	-	-	-	-	-	-	-	-	-	-	67	
○ 비목별 분류(합계)	847	967.3	826	100	40	1,333	1,433	1,287	1,333	1,187	115	28	2,376	
· 일용임금(110-04)	-	-	-	-	-	-	-	-	-	-	-	-	976	
· 일반수용비(210-01)	79.466	79.466	79.466	-	-	227	227	227	227	227	-	-	276.21	
· 일반용역비(210-14)	105	136.2	125.7	10.5	-	359	369	318	359	318	41	-	246.68	
· 국내여비(220-01)	-	-	-	-	-	-	-	-	-	-	-	-	63	
· 사업추진비(240-01)	4.934					4.51	4.51	3	4.51	3	-	-	8.51	
· 일반연구비(260-01)	641.6	730.7	600.7	89.6	40.2	727	816	720	727	631	68	28	726.6	
· 정책연구비(260-02)	-	-	-	-	-	-	20	14	20	14	6	-	-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포상금(310-03)	16	16	16	-	-	16	16	16	16	16	-	-	16
· 고용부담금(320-09)	-	-	-	-	-	-	-	-	-	-	-	-	6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47	967.3	826	100	40	1,333	1,433	1,287	1,333	1,187	115	28	2,376
· 변화관리 및 혁신 교육	97.4	124.6	118.1	10.5	-	473.19	483.6	432	473.19	422	-	-	340.19
-일반수용비(210-01)	29.4	29.4	29.4	-	-	137	137	137	137	137	-	-	112
-일반용역비(210-14)	50	81.2	70.7	10.5	-	318.68	328.6	287	318.68	277	41	-	206.68
-사업추진비(240-01)	4.9	4.9	4.9	-	-	4.51	4.51	4.51	4.51	4.51	-	-	8.51
-포상금(310-03)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3
· 규제개혁 및 갈등 관리 지원	94	94	83.4	-	10.5	99.21	99.21	71	99.21	71		28	99.21
-일반수용비(210-01)	40	40	40	-	-	45.21	45.21	45.21	45.21	45.21	-	-	45.21
-일반연구비(260-01)	54	54	43.4	-	10.5	54	54	26	54	26	-	28	54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50	50	50	-	-	100	100	94	100	94	6	-	100
-일반수용비(210-01)	-	-	-	-	-	20	20	20	20	20	-	-	20
-일반용역비(210-14)	40	40	40	-	-	40	20	20	20	20	-	-	40
-일반연구비(260-01)	10	10	10	-	-	40	40	40	40	40	-	-	40
-정책연구비(260-02)	-	-	-	-	-	-	20	14	20	14	6		-
· 정책지원 연구	486	490.4	455.8	4.8	29.7	500	504		500		-	-	392.6
-일반연구비(260-01)	486	490.4	455.8	4.8	29.7	500	504	504	500	500	-	-	392.6
· 자체평가 및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91.6	176.3	91.4	84.8	-	132.6	217.4	149	132.6	132.6	68	-	240
-일반연구비(260-01)	91.6	176.3	91.4	84.8	-	132.6	217.4	149	132.6	132.6	68	-	240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28	28	28	-	-	28	28	28	28	28	-	-	28
-일반수용비(210-01)	10	10	10	-	-	25	25	25	25	25	-	-	25
-일반용역비(210-14)	15	15	15	-	-	-	-	-	-	-	-	-	-
-포상금(310-03)	3	3	3	-	-	3	3	3	3	3	-	-	3
· 청년인턴 운영	-	-	-	-	-	-	-	-	-	-	-	-	1,109
-일용임금(110-04)	-	-	-	-	-	-	-	-	-	-	-	-	976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7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국내여비(220-01)	-	-	-	-	-	-	-	-	-	-	-	-	63
-고용부담금(320-09)	-	-	-	-	-	-	-	-	-	-	-	-	63
· 2030자문단 운영	-	-	-	-	-	-	-	-	-	-	-	-	67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부내 조직문화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변화관리 활동 지원을 통해 조직 생산성 제고 및 직원역량 강화 도모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규제비용·편익분석, 자체규제개혁위원회 및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기반 마련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다량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민관 협의회 운영 등을 수행 및 공공데이터 표준체계 마련 및 품질 강화 실시,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의사결정 활용을 위한 데이터분석 실시,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로 데이터행정 기반 구축 및 산업부 데이터 기반행정 중장기계획 수립
- (정책지원 연구) 재정, 정책홍보, 조직관리 등 정책 지원 분야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
- (부내 및 기타공공기관 평가업무 지원) 평가단 구성 및 평가기준 마련 등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부내 자체평가 업무수행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부내 직원 및 국민대상 각종 지원 제도 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국가공무원법 제50조(교육훈련), 제53조(제안제도)

제50조 (교육훈련)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과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의 능력을 발전시킬 책임을 진다.

제53조 (제안제도) ①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를 둔다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규제개혁)**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신설·강화규제 도입 시 규제심사 및 기존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혁신'은 국조실 주관 국정과제 16번(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협조부처, 국정과제 17번(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의 주관부처로서 역할 수행

<행정규제기본법상 관련 조항>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 후 정비하여야 한다.

<국정과제 이행계획>

국정과제 16(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간주도의 규제개혁 추진 기반 구축, 획기적인 규제비용 감축 등

국정과제 17(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별 혁신전략을 공동 수립하는 협의체 운영등

- **(갈등관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중 관련 조항>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한 행정혁신 추진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법」(‘20.12월) 시행 및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1년~’23년) 확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 지원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영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기술적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음

- (자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3조

※ 지원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②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대통령 말씀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 지원근거 : 「적극행정 운영 규정」

- ▶ 제8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제11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둔다
- ▶ 제14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 ▶ 제18조 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변화관리능력개발(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경제안보·디지털 전환·ESG)에 따라 산업부 고유 업무에 대한 실무자 역량개발·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확대 절실
- 대내외 환경 변화로 산업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전례없이 높으나, 직원 사기저하와 업무회피 성향 강화로 조직활력 제고책 마련 필요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규제개혁)**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98.2.28)되어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심사'가 필수 절차로 정착됨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 이후 '규제개혁신문고'가 설치되었으며, '규제비용총량제'가 시행됨('16~)에 따라 비용-편익 분석 등 제도관련 예산수요 증대됨, 아울러 산업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개혁 교육 등 실시 필요
- 새 정부 출범('22.5.10.) 이후 저성장·고물가 등 경제 안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이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르게 됨

* (국무총리, '22.5.24) 부처별 규제개혁 TF 구성 지시

- **(갈등관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07.2.12)에 따라 산업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밀양송전선로 건설 등 대규모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갈등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산업부는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및 갈등관리심의 등을 추진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13년부터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21년 3월 기준 2,273건)
- 현재까지('19년~'21년 최근 3년 기준) 진행된 산업부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팀) 중 약 25% 이상이 신규 창업에 성공하였으며 투자유치, 특허획득, 벤처기업인증 등 다양한 기업 활동을 통해 혁신 데이터 기업으로 성장 중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한 행정혁신 추진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시행(‘20.12)에 따라 공공기관 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업무 추진실시
- 現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공약’에 따라 데이터 업무에 대한 실무자 역량개발·정보습득 지원 프로그램 확대 절실
- * (MP, ‘22.3.31) 디지털 플랫폼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국민의 참여를 이끌 것
- 과거에 비해 산업정책의 업무범위가 넓고 유동적으로 변모하여 부처 내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 필요

○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 (기타공공기관) ‘13.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이후, 기타공공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주무부처에서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14.3.20)하여 매년 경영평가 실시
- (자체평가) ‘01.5.1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본격 실시 → ‘01.9.24(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정하여 매년 자체평가 실시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정부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발표(‘19.3.14.)
- 그 후속조치로 적극행정의 체계적 제도화를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6.)
- 이와 함께, ‘19년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실행(‘19.07.) 및 ‘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20.0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산업통상자원부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33	<p>①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22) 97.4백만원 → ('23요구) 473.19백만원</p> <p>□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및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을 통한 민간과의 네트워크 형성, 연속성 있는 전문 강연 설치 등 변화관리 활동 지원을 통해 조직 생산성 제고 및 직원역량 강화 도모 <p>□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혁신교육: 319.1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계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79.1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료) 4백만원×10회×3분야+14.42백만원×4회 * (운영비) 1.52백만원 소요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14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조직) 20개교×6.85백만원(전문가 초빙 1.37백만원×5회)+운영비 3백만원 협업행정을 위한 소통촉진 프로그램: 14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현장 방문프로그램 지원: 14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지원) 0.51백만원×100명(10개교×10명) * (해외 현장체험) {항공료(3.1백만원)+숙박비(1.5백만원)+일비(0.32)+식비(0.6백만원)+PCR 등(0.48백만원)} * 15명 규모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의 정책 우수부서 및 산업통상자원인 선정: 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부서) 1백만원 × 4개교 + 0.5백만원 × 6개국 * (우수직원) 0.2백만원 × 30명(3개분야, 분야별 10인) <p>②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22) 94백만원 → ('23요구) 99.21백만원</p> <p>□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핵심규제 발굴·개선 수요 대응 <p>□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37.2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37.2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12명×10회×0.25백만원 * (안전 인쇄 및 회의 준비 등) 0.721백만원×10회 	1,715	<p>①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23) 473.19백만원 → ('24요구) 340.19백만원</p> <p>□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및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을 통한 민간과의 네트워크 형성, 연속성 있는 전문 강연 설치 등 변화관리 활동 지원을 통해 조직 생산성 제고 및 직원역량 강화 도모 <p>□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혁신교육: 177.1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화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120.5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비) 25개교×4.48백만원 * (운영비) 8.51백만원 소요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56.6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문화 개선, 업무역량 향상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 부내 업무환경 개선 등 변화관리 추진으로 56.68백만원 소요 협업행정을 위한 소통촉진 프로그램: 1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현장 방문프로그램 지원: 1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지원) 0.8백만원×100명(산업부 정원의 약 7%) * (해외 현장체험) {항공료(3.5백만원)+숙박비(1.5백만원)+일비(0.3)+식비(0.7백만원)+환율 등(1백만원)} * 10명 규모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부서 및 산업통상자원인 선정: 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원×10명×4분기+50만원×1개국×4분기+100만원×3개과 <p>②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23) 99.21백만원 → ('24요구) 99.21백만원</p> <p>□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핵심규제 발굴·개선 수요 대응 <p>□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 갈등관리심의, 제안 및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41.2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37.2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13명×12회×0.15백만원 * (안전 인쇄 및 회의 준비 등) 1.151백만원×12회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div>-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3백만원 * (회의) 10명×2회×0.125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 준비 등) 0.25백만원×2회</div> <div>○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교육 및 홍보: 4백만원</div> <div>-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교육 * 강사료 0.5백만원×2회</div> <div>-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홍보 * 상하반기 2회×2백만원</div> <div>○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연구용역: 54백만원</div> <div>-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 규제비용, 편익분석: 27백만원 * 15건(예상 분석대상 건수)×1.8백만원</div> <div>- 민간활동 저해 핵심규제 개선방안 연구: 27백만원 * 규제 연구 3개 분야×9백만원</div> <div>③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과학적 행정체계 기반 마련: ('22) 50백만원 → ('23요구) 100백만원</div> <div>□ 요구<div>○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한 행정혁신 추진 및 산업·에너지·통상 등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다량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촉진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등 프로그램 운영 필요</div></div> <div>□ 산출<div>○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60백만원</div><div>-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40백만원 * 공모전 개최, 상금 지급, 홍보 및 수요조사 등 40백만원 소요</div><div>- 민·관 데이터 전문가 연구협의회 운영: 20백만원 * 협의체 구성·운영 16백만원 + 인쇄비 등 4백만원</div><div>○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체계 기반 마련: 40백만원</div><div>- 산업부 협업부서 지원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 분석: 40백만원 * 과제 발굴 및 전문가 분석: 10백만원 × 4개 과제</div></div> <td><div>-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3백만원 * (회의) 10명×2회×0.125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 준비 등) 0.25백만원×2회</div><div>- 제안 및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1백만원 * (회의) 4명×2회×0.1백만원 * (회의진행경비 등) 0.1백만원×2회</div><div>○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교육 및 홍보: 4백만원</div><div>-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교육 * 강사료 0.5백만원×2회</div><div>-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홍보 * 상하반기 2회×1.5백만원</div><div>○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연구용역: 54백만원</div><div>-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 규제비용, 편익분석: 27백만원 * 15건(예상 분석대상 건수)×1.8백만원</div><div>- 민간활동 저해 핵심규제 개선방안 연구: 27백만원 * 규제 연구 3개 분야×9백만원</div><div>③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과학적 행정체계 기반 마련: ('23) 100백만원 → ('24요구) 100백만원</div><div>□ 요구<div>○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한 행정혁신 추진 및 산업·에너지·통상 등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다량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촉진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등 프로그램 운영 필요</div></div><div>□ 산출<div>○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40백만원</div><div>-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백만원 * 공모전 개최, 상금 지급, 홍보 및 수요조사 등 20백만원 소요</div><div>-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개방·품질관리 용역: 20백만원</div><div>○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체계 기반 마련: 60백만원</div><div>- 산업부 협업부서 지원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 분석: 40백만원 * 과제 발굴 및 전문가 분석: 10백만원×4개 과제</div><div>- 민·관 데이터 전문가 연구협의회 운영: 20백만원 * 협의체 구성·운영 16백만원 + 인쇄비 등 4백만원</div></div></td>	<div>-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3백만원 * (회의) 10명×2회×0.125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 준비 등) 0.25백만원×2회</div> <div>- 제안 및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1백만원 * (회의) 4명×2회×0.1백만원 * (회의진행경비 등) 0.1백만원×2회</div> <div>○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교육 및 홍보: 4백만원</div> <div>-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교육 * 강사료 0.5백만원×2회</div> <div>-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홍보 * 상하반기 2회×1.5백만원</div> <div>○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연구용역: 54백만원</div> <div>-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 규제비용, 편익분석: 27백만원 * 15건(예상 분석대상 건수)×1.8백만원</div> <div>- 민간활동 저해 핵심규제 개선방안 연구: 27백만원 * 규제 연구 3개 분야×9백만원</div> <div>③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과학적 행정체계 기반 마련: ('23) 100백만원 → ('24요구) 100백만원</div> <div>□ 요구<div>○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한 행정혁신 추진 및 산업·에너지·통상 등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다량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촉진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등 프로그램 운영 필요</div></div> <div>□ 산출<div>○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40백만원</div><div>-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백만원 * 공모전 개최, 상금 지급, 홍보 및 수요조사 등 20백만원 소요</div><div>-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개방·품질관리 용역: 20백만원</div><div>○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체계 기반 마련: 60백만원</div><div>- 산업부 협업부서 지원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 분석: 40백만원 * 과제 발굴 및 전문가 분석: 10백만원×4개 과제</div><div>- 민·관 데이터 전문가 연구협의회 운영: 20백만원 * 협의체 구성·운영 16백만원 + 인쇄비 등 4백만원</div></div>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p>④ 정책지원 연구: ('22) 486백만원 → ('23요구) 500백만원</p> <p>☐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조직관리, 국민인식 제고, 대내외 정책 홍보지원 등 정책분야 역량강화 <p>☐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지원 연구: 500백만원- 정책홍보,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태진단 등 운영관련 용역비: 500백만원* 정책홍보, 재정사업평가, 실태진단 등 운영 관련 용역 10건 × 50백만원 <p>⑤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22) 91.6백만원 → ('23요구) 132.6백만원</p> <p>☐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검증된 전문가 평가단 구성 및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23년부터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증가(9→11개)와 강화된 공공기관 경영평가('21.8월, 기재부)의 수행을 위해 타부처 수준*의 용역예산 배정 필요* 타부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용역 비용 : 문화부 2.5억, 교육부 2억, 복지부 1.5억 <p>☐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131.6백만원* 자체평가 용역 66.3백만원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용역 66.3백만원 <p>⑥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22) 28백만원 → ('23요구) 28백만원</p> <p>☐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직원 및 국민 대상 각종 지원 제도 기반을 구축할 필요 <p>☐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대국민 홍보: 15백만원-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10백만원* 5회×2백만원(위원수당 1.4 + 운영비 0.6)- 적극행정 대국민 홍보: 5백만원* 카드뉴스,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5백만원○ 적극행정 면책관련 소송비 지원: 10백만원* 적극행정 징계절차 지원 5백만원 + 소송비용 지원 5백만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3백만원* 4회(분기별)× 3명 × 0.25백만원		<p>④ 정책지원 연구: ('23) 500백만원 → ('24요구) 392.6백만원</p> <p>☐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조직관리, 국민인식 제고, 대내외 정책 홍보지원 등 정책분야 역량강화 <p>☐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지원 연구: 392.6백만원- 정책홍보,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태진단 등 운영관련 용역비: 392.6백만원* 정책홍보, 재정사업평가, 실태진단 등 운영 관련 용역 5건 × 78.52백만원 <p>⑤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23) 132.6백만원 → ('24요구) 240백만원</p> <p>☐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검증된 전문가 평가단 구성 및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 <p>☐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240백만원* 자체평가 용역 140백만원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용역 100백만원 <p>⑥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23) 28백만원 → ('24요구) 28백만원</p> <p>☐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직원 및 국민 대상 각종 지원 제도 기반을 구축할 필요 <p>☐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대국민 홍보: 15백만원-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10백만원* 5회×2백만원(위원수당 1.4 + 운영비 0.6)- 적극행정 대국민 홍보: 5백만원* 카드뉴스,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5백만원○ 적극행정 면책관련 소송비 지원: 10백만원* 적극행정 징계절차 지원 5백만원 + 소송비용 지원 5백만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3백만원* 4회(분기별)× 3명 × 0.25백만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⑦ 청년인턴 운영: ('24요구) 1,109백만원 ○ 인건비: 976백만원 ○ 일반수용비: 7백만원 ○ 국내여비: 63백만원 ○ 고용부담금: 63백만원 ○ 정책참여 활동비: 28백만원 ⑧ 2030자문단 운영: ('24요구) 67백만원 ○ 회의체 운영 및 외부활동 지원: 67백만원 - 2030자문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운영: 54백만원 * 6개월×20명×15만원+12개월×20명×15만원 - 청년 정책간담회, 청년 관련 행사·포함 참여: 1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변화관리 마일리지 획득자 수	목표	-	-	-	-	-	기재부 지침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 제외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310명
2021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500명
2022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900명
2023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1,000명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2024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1,200명
------	---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주요업무	수행 주체
수행방향 설정	당해연도 수행방향 설정	산업부
▼		
계획 수립	당해연도 계획 수립	산업부
▼		
사업 수행	계획에 따라서 사업 수행	산업부
▼		
실적 관리	수행 결과를 지식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관리	산업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1,315	1,320	1,330	1,340	1,350	
'23~'27		1,333	1,400	1,456	1,500	1,53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대상과의 소통 및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중요시하는 업무분위기 형성과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조직구성원의 역량 강화 도모 ○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규제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및 품질제고 사례 발굴,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혁신성장 기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객관적인 평가기반을 구축하여 부내 및 기타공공기관 평가업무의 신뢰도 제고 ○ 적극행정문화 정착화 및 관련 지원 활성화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 및 법·제도와 현장간 괴리 극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637	-	637	129.9	-	-	767	696.9	109	90.8	27.8	42.2
2021	965	-	965	27.8	18	-	992.8	869.8	90.1	87.6	120.3	2.7
2022	847	-	847	120.3	-	-	967.3	826.8	97.6	85.5	100.1	40.2
2023	1,333	-	1,333	100.1	20	-	1,433	1,287	96.5	89.8	115	28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 이월 : 28백만원,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과 연구용역 완성도 증진을 위해 이월 - 불용 : 42백만원, 코로나19 확산상황으로 인한 용역(국가방호 관련 등) 미체결 및 축소 시행
2021	- 조정 : 18백만원, 적극행정 운영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조정 - 조정 : 112백만원,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등으로 기존사업 추진 어려움 및 효과적인 행정능률 사업 집행을 위해, 일반수용비, 임차료의 일반용역비로 조정 - 전용 : 18백만원,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등으로 기존사업 추진 어려움 및 효과적인 행정능률 사업 집행을 위해, 국내·외여비의 일반용역비로 조정(국가재정법 46조3항, 47조3항의거) - 불용 : 2.5백만원,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방안연구 추진 간,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불용
2022	- 이월: 100백만원,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과 연구용역 완성도 증가를 위해 이월 - 불용: 40백만원, 연구용역의 낙찰차액 발생 등
2023	- 이월: 115백만원,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과 연구용역 완성도 증가를 위해 이월 - 불용: 28백만원, 연구용역의 낙찰차액 발생 등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11.3.)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7132-303)	210-14	20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7132-303)	260-02	- 산업부 소관 데이터의 산업 데이터로서의 특 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책 수단 발굴 소요 제기에 따라 공모전 개최 예산 중 일부를 절감하여 정책연구에 활용하고자 함

사 업 명
(3)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71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3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본부정책수립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산업통상자 원정책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정재환과장	김정운팀장	김정미주무관
		재무팀	044-203-5050	044-203-3890	044-203-508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산업통상자원정책 지원	1,145	1,391	1,393	1,393	2	0.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34	1,197	1,149	20	28	1,391	1,411	1,343	1,391	1,323			1,393
· 무기계약직 보수 등	36	36	32	-	4	38	38	33	38	33			40
· 업무보고 준비 및 시책홍보	539	539	519	-	20	771	771	721	771	721			771
· 차량·통신·사찰원등	107	107	106	-	1	107	107	100	107	100			107
· 해외파견자 임차 지원 등	280	280	277	-	3	280	280	275	280	275			280
· 연구용역	71	134	114	20	-	71	91	91	71	71			71
· 정책지원 우수부서 포상 등	12	12	12	-	-	22	22	22	22	22			22
· 업무협의 여비	77	77	77	-	-	80	80	80	80	80			80
· 산업통상자원정책 지원 간담회	12	12	12	-	-	22	22	22	22	22			22
○ 비목별 분류(합계)	1,134	1,197	1,149	20	28	1,391	1,411	1,343	1,391	1,323			1,393
· 상용임금(110-03)	29	29	29	-	-	30	30	30	30	30			32.5
· 일반수용비(210-01)	296	296	296	-	-	528	528	528	528	528			528
· 임차료(210-07)	338	338	335	-	3	338	338	333	338	333			338
· 유류비(210-08)	30	30	30	-	-	30	30	24	30	24			30
· 사찰장비유지비(210-09)	19	19	18	-	1	19	19	18	19	18			19
· 복리후생비(210-12)	0.4	0.4	0	-	0.4	0.4	0.4	0.4	0.4	0.4			0.4
· 국내여비(220-01)	77	77	77	-	-	80	80	80	80	80			80
·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	-	22	22	22	22	22			22
· 일반연구비(260-01)	314	377	337	20	20	314	334	284	314	264			314
· 포상금등(310-03)	12	12	12	-	-	22	22	22	22	22			22
· 고용부담금(320-09)	6	6	3	-	3	7	7	2	7	2			7
· 공사비(420-03)	0.1	0.1	.	-	0.1	0.1	0.1	0	0.1	0			0.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34	1,197	1,149	20	28	1,391	1,411	1,343	1,391	1,323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무기계약직 보수등	36	36	32	-	4	38	38	33	38	33			40
-상용임금(110-03)	29	29	29	-	-	30	30	30	30	30			32.5
-복리후생비(210-12)	0.4	0.4	0	-	0.4	0.4	0.4	0.4	0.4	0.4			0.4
-고용부담금(320-09)	6	6	3	-	3	7	7	2	7	2			7
· 업무보고 준비 및 시책홍보	539	539	519	-	20	771	771	721	771	721			771
-일반수용비(210-01)	296	296	296	-	-	528	528	528	528	528			528
-일반연구비(260-01)	243	243	223	-	20	243	243	193	243	193			243
· 차량·통신·시설자원 등	107	107	106	-	1	107	107	100	107	100			107
-임차료(210-07)	58	58	58	-	-	58	58	58	58	58			58
-유류비(210-08)	30	30	30	-	-	30	30	24	30	24			3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9	19	18	-	1	19	19	18	19	18			19
-공사비(420-03)	0.1	0.1	0	-	0.1	0.1	0.1	0	0.1	0			0.1
· 해양수산분야인사관리 등	280	280	277	-	3	280	280	275	280	275			280
-임차료(210-07)	280	280	277	-	3	280	280	275	280	275			280
· 연구용역	71	134	114	20	-	71	91	91	71	71			71
-일반연구비(260-01)	71	134	114	20	-	71	91	91	71	71			71
· 정책지원 우수부서 포상 등	12	12	12	-	-	22	22	22	22	22			22
- 포상금 등(310-03)	12	12	12	-	-	22	22	22	22	22			22
· 업무협의 여비	77	77	77	-	-	80	80	80	80	80			80
-국내여비(220-01)	77	77	77	-	-	80	80	80	80	80			80
-국외여비(220-02)	0	0	0	-	-	0	0	0	0	0			0
· 산업통상자원 정책지원 간담회	12	12	12	-	-	22	22	22	22	22			22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	-	22	22	22	22	22			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통상자원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 각 실국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 특히, 타 부처에 비해 매우 부족한 기본경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가 불가피
-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등을 위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도 필요
- 아울러, 서울 등 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발전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등
- 대외무역법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등
- 에너지법 제1조, 제4조, 제12조, 제16조 등

② 추진경위

- 10~12회계연도 19억원 예산규모 편성
- '13회계연도-전년 대비 1억원 삭감, '14회계연도-전년 대비 2.3억원 삭감되는 등 2회계연도 동안 총 3.3억원 삭감되어 정책추진 활동 지원 애로
- '15, '16, '17회계연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18회계연도에 일반수용비 1.2억원 등 총 1.6억원 삭감되어 재정 지원 애로
- '19, '20년도 13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동 예산규모로는 각 실국의 정책추진 활동의 적극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
- '21년도 주요 정책 홍보 강화 등을 위해 18억원 규모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없음
- 사업기간 :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304	1,865	1,134	1,391	1,39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3) '2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무기계약직 보수 등 40백만원

: ('23) 38백만원 → ('24) 40백만원

- (산출) (상용임금 210-03) 무기계약직 상용임금 1명 × 12개월 × 2.7백만원 = 32.5백만원
(복리후생비 210-12) 복리후생비 1명 × 0.4백만원 = 0.4백만원
(고용부담금 320-09) 퇴직금 1명 × 7백만원 = 7백만원

② 연두 업무보고, 정부업무평가, 주요시책 홍보 등 : 771백만원

: ('23) 771백만원 → ('24) 771백만원

- (산출) (일반수용비 210-01) 연두업무보고 등 5건 × 49.4백만원 = 247백만원
(일반수용비 210-01) 부처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 등 3건 × 7백만원 = 21백만원
(일반수용비 210-01) 주요시책 홍보 등 자료인쇄 2건 × 19.5백만원 = 40백만원
(일반수용비 210-01) 온라인 콘텐츠 제작 위한 연간 라이선스 등 25백만원
(일반수용비 210-01) TV, 라디오, 전광판, 열차 등 정책광고 4건 × 50백만원 = 195백만원
(일반연구비 260-01) 디지털콘텐츠 홍보 1건 × 243백만원 = 243백만원

③ 차량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지원 등 107백만원

: ('23) 107백만원 → ('24) 107백만원

- (산출) (임차료 210-07) 장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차량임차 3대 × 18백만원 = 54백만원
(임차료 210-07) 부내 행사차량 임차 8회 × 0.5 = 4백만원
(유류비 210-08) 관용차량 유류지원 30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차량유지보수 8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10-09) 통신시설유지보수비 11백만원
(공사비 420-03) TF조직 등 사무실 공사 0.1백만원

④ 해외파견자 임차지원 등 280백만원

: ('23) 280백만원 → ('24) 280백만원

- (산출) (임차료 210-07) 국제기구 파견관 주택임차 지원 280백만원

⑤ 연구용역비 71백만원

: ('23) 71백만원 → ('24) 71백만원

- (산출) (일반연구비 260-01) 산업통상자원부 기록물 관련 용역 2건 × 35.5백만원 = 71백만원

⑥ 정책지원 우수부서 포상 등 22백만원

: ('23) 22백만원 → ('24) 22백만원

- (산출) (포상금등 310-03) 우수부서 포상 12회 × 1.8백만원 = 22백만원

⑦ 부처간 또는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실무협의를 위한 여비 및 업추비 : 102백만원

: ('23) 102백만원 → ('24) 102백만원

- (산출) (국내여비 220-01) 국내여비 × 12개월 = 80백만원

(사업추진비 240-01)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간담회 개최를 위한 업추비 12회 × 1.8백만원 = 22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91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30백만원 가. 무기계약직 상용임금 1명 × 12개월 × 2.5백만원 = 30백만원	1,411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32.5백만원 가. 무기계약직 상용임금 1명 × 12개월 × 2.7백만원 = 32.5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528백만원 가. 연두업무보고 등 5건 × 49.4백만원 = 247백만원 나. 부처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 등 3건 × 7백만원 = 21백만원 다. 주요시책 홍보 등 자료인쇄 2건 × 19.5백만원 = 40백만원 라. 온라인 콘텐츠 제작 위한 연간 라이선스 등 25백만원 마. TV, 라디오, 전광판, 열차 등 정책광고 4건 × 50백만원 = 195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528백만원 가. 연두업무보고 등 5건 × 49.4백만원 = 247백만원 나. 부처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 등 3건 × 7백만원 = 21백만원 다. 주요시책 홍보 등 자료인쇄 2건 × 19.5백만원 = 40백만원 라. 온라인 콘텐츠 제작 위한 연간 라이선스 등 25백만원 마. TV, 라디오, 전광판, 열차 등 정책광고 4건 × 50백만원 = 195백만원
	○ 임차료(210-07) : 338백만원 가. 장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차량임차 3대 × 18백만원 = 54백만원 나. 부내 행사차량 임차 8회 × 0.5 = 4백만원 다. 국제기구 파견관 주택임차 지원 280백만원		○ 임차료(210-07) : 338백만원 가. 장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차량임차 3대 × 18백만원 = 54백만원 나. 부내 행사차량 임차 8회 × 0.5 = 4백만원 다. 국제기구 파견관 주택임차 지원 280백만원
	○ 유류비(210-08) : 30백만원 가. 관용차량 유류지원 30백만원		○ 유류비(210-08) : 30백만원 가. 관용차량 유류지원 30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9백만원 가. 차량유지보수 8백만원 나. 통신시설유지보수비 11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9백만원 가. 차량유지보수 8백만원 나. 통신시설유지보수비 11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0.4백만원 가. 복리후생비 1명 × 0.4백만원 = 0.4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0.4백만원 가. 복리후생비 1명 × 0.4백만원 = 0.4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80백만원 가. 국내여비 × 12개월 = 8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80백만원 가. 국내여비 × 12개월 = 80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22백만원 가.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간담회 개최를 위한 업추비 12회 × 1.8백만원 = 22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22백만원 가.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간담회 개최를 위한 업추비 12회 × 1.8백만원 = 22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314백만원 가. 디지털콘텐츠 홍보 1건 × 243백만원 = 243백만원 나. 산업통상자원부 기록물 관련 용역 2건 × 35.5백만원 = 71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314백만원 가. 디지털콘텐츠 홍보 1건 × 243백만원 = 243백만원 나. 산업통상자원부 기록물 관련 용역 2건 × 35.5백만원 = 71백만원
	○ 포상금 등(310-03) : 22백만원 가. 우수부서 포상 12회 × 1.8백만원 = 22백만원		○ 포상금 등(310-03) : 22백만원 가. 우수부서 포상 12회 × 1.8백만원 = 22백만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고용부담금(320-09) : 7백만원 가. 퇴직금 1명 × 7백만원 = 7백만원 ○ 공사비(420-03) : 0.1백만원 가. TF조직 등 사무실 공사 0.1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7백만원 가. 퇴직금 1명 × 7백만원 = 7백만원 ○ 공사비(420-03) : 0.1백만원 가. TF조직 등 사무실 공사 0.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메세지 제작, 규제사무 정비방안 용역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21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메세지 제작 등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22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메세지 제작, 재무결산 용역 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23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메세지 제작 등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홍보 및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정책지원 강화
- 해외파견관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활동 및 외국정부와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주요업무	수행 주체
추진방향 설정	전반적인 연간 추진방향 설정	각 실국
▼		
추진계획 수립	당해연도 연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각 실국
▼		
사업 수행	계획에 따라서 각 건별로 사업 수행	각 실국
▼		
소요 예산 요청	각 건별로 예산지출 요청	각 실국
▼		
예산 지출	각 개별 건별로 예산 지출	재무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1,146	1,304	1,322	1,395	1,487	
'23~'27		1,391	1,460	1,533	1,610	1,69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홍보 및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정책지원 강화 계속 추진
- 해외파견관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활동 및 외국정부와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산업통상자원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 각 실국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대가 필요함
- 특히,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 강화 등에 재정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1,304	-	1,304	13			1,317	1,144	87.7	86.8	21	153
2021	1,865	-	1,865	21			1,886	1,686	90.4	89.4	63	137
2022	1,146	△12	1,134	63			1,197	1,145	101.0	95.7	20	32
2023	1,391	-	1,391	20			1,411	846	60.8	6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연구용역비 이월 및 집행잔액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연구용역비 이월 및 집행잔액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연구용역비 이월 및 집행잔액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4)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7142-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2 산업통상자 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42	317
명칭	산업통상자원행정지원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지운	방만희	이기성
		정보보호담당관	044-203-5590	044-203-5597	044-203-556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2,270	2,225	1,884	1,884	△341	△15.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85	2,285	2,270	-	15	2,225	2,225	2,215	-	-	-	10	1,884	
·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	1,240	1,240	1,227	-	13	1,260	1,260	1,257	-	-	-	3	1,460	
· 사이버안전세스팀 고도화	1,045	1,045	1,044	-	1	965	965	959	-	-	-	6	424	
○ 비목별 분류(합계)	2,285	2,285	2,270		15	2,225	2,225	2,215				10	1,884	
· 일반수용비(210-01)	10	10	10	-	-	10	10	10	-	-	-	-	10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400	400	400	-	-	400	400	400	-	-	-	-	578	
· 관리용역비(210-15)	830	830	817	-	13	850	850	847	-	-	-	3	872	
· 자산취득비(430-01)	1,045	1,045	1,044	-	1	965	965	959	-	-	-	6	42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285	2,285	2,270	-	15	2,225	2,225	2,215	-	-	-	10	1,884	
·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	1,240	1,240	1,227	-	-	1,260	1,260	1,257	-	-	-	3	1,460	
- 일반수용비 (210-01)	10	10	10	-	-	10	10	10	-	-	-	-	10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400	400	400	-	-	400	400	400	-	-	-	-	578	
- 관리용역비 (210-15)	830	830	817	-	13	850	850	847	-	-	-	3	872	
· 사이버안전세스팀 고도화	1,045	1,045	1,044	-	1	965	965	959	-	-	-	6	424	
- 자산취득비 (430-01)	1,045	1,045	1,044	-	1	965	965	959	-	-	-	6	4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 o 에너지·무역·산업 등 실물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기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o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안관제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 취약점분석을 위한 최신 보안솔루션을 발굴·구축하여 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제1항,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조

-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 :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 o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2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o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제1항 :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 o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조(훈령 제154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무역 등 산업통상자원 분야 사이버공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MOTIE-CSC(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Cyber Security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경위

- '06.5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의장 : 국가정보원장) 의결
 - * 기존의 국방, 금융, 행정, 통신, 안보분야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핵심분야(에너지, 교통, 교육, 보건, 외교)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결정
- '07.7월 산업자원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립 계획수립
- '07.12월 산업자원 사이버보안센터 운영규칙 제정(훈령 제128호)
- '08.8월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 및 센터 개소(28개 기관)
 - '10.1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14개 기관)
 - '11.1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7개 기관)
 - '18.9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3개 기관)
 - '18.10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1개 기관)
- '10.1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8호)
- '12.2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91호)
- '13.6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미래부 이관(ETRI, 한국생산기술연구원, NIPA)
- '14.12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9호)
- '16.8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102호)
- '19.6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154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789	1,709	2,285	2,225	1,88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 및 주요기반시설 안전확보에 따른 전국민 생활안정 보장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1,26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유지보수(850백만원) - 전용회선 임차(400백만원) - 소모품비(10백만원) ○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96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보안설비 교체 등(965백만원) 	1,8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1,460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유지보수(87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4백만원(AI보안관제장비 자산취득비) X 6.3953%(유지보수요율)=22백만원 증가 - 전용회선 임차(57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사 전용회선 노후 스위치장비교체 임대갱신 82백만원 + 주요기관 및 센터 전용회선 이중화 96백만원 증가 - 소모품비(10백만원) ○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42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장비 이중화(26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MS위협관리시스템 3식(89백만원 X 3식 = 267백만원) 예산 실링액에 따른 산출금액 - 노후 보안설비 교체(15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oS대응시스템 1식(87백만원) + TMS관리시스템SW 1식(70백만원) = 15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안관제 정탐율 (단위: %)	목표	98.2	98.3	98.3	98.3	98.4	최근 3개년간 평균 추이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사이버공격 정탐건수/ 총사이버공격 탐지통보건수) *100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시스템 (SCMS)
	실적	98.23	98.33	98.41	98.57	-			
	달성도	100	100	100	100	-			
관제시스템 안정가동율 (단위: %)	목표	99.5	99.5	99.5	99.5	99.5	최근 3개년중 실현 가능한 목표치로 설 정(정보시스템은 내 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한 장애발생으로 100% 가동율은 불가 99.5%의 가동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	(가동계 획 시 간- 관제서비스중단시간) /가동계 획시간*100	관제시스템 장애복구 보고서 및 월별 서비스 수준협약(SLA) 보고서
	실적	99.57	99.60	99.57	99.58	-			
	달성도	100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2,088건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분석·평가 컨설팅(11개 기관, 49개 시설)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안수준 진단 현장점검(7개 기관, 7개 시설) ○ 회원기관 정보보호 교육(12개 과정, 16회, 403명 수료) ○ 정보보안최고관리자(CISO) 과정 운영 : 19개 기관 22명 선발 ○ 침해사고대응 국제협의체(FIRST) 가입 및 활동 ○ 회원기관 대상 인터넷망·업무망 모의해킹(24개 기관) ○ 산업부 및 41개 공공기관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부12회, 공공기관 6회) ○ 제8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11.20~21, 17개 기관 31개팀 참가) ○ 2019 을지연습 사이버공격 대응훈련(27개 기관)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2,271건 ○ VPN 전용 관제시스템 자체 개발 및 시범운영('20.8~12) ○ 정보보호교육(5개 과정, 18회, 288명 수료) ○ 정보보안최고관리자(CISO)과정 운영 : 19개 기관 22명 선발 ○ 회원기관 대상 인터넷망·업무망 모의해킹(17개 기관) ○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부12회, 공공기관 6회) ○ 제9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온라인 개최(11.17~18, 16개 기관 27개팀 참가)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1,758건 ○ 한전, 한수원 등 단위관제센터 운영 14개 기관 현장방문 기술교류회 개최(6월~10월) ○ “VPN접속 이상행위 탐지시스템” 특허 등록 및 품질분임조경진대회 대통령 금상 수상(11월) ○ 회원기관 홈페이지 위변조 감시 대상 확대(57개→18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개(회원기관 53개+ 부처홈페이지 4개(산업부1개, 국표원2개, 부산엑스포1개)) ○ 오픈소스 활용 빅데이터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비용 절감 및 독자기술 확보(7억/년 절감) ○ 회원기관 대상 인터넷망·업무망 모의해킹 실시(21개 기관) ○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부5회, 공공기관 5회) ○ 산업·무역·에너지 분야 13개 주요 공공기관 합동으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실시(7.4) ○ 제10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11.1~2, 26개 기관 36개팀 참가) ○ 제14회 산업부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12.15, 53개 기관 200여명 참가)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1,678건 ○ 단위관제센터 운영기관 대상 보안관제 전문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과정(5.17~19, 8개 기관), 심화과정(10.23~26, 6개 기관) ○ 회원기관 대상 인터넷망·업무망 모의해킹 실시(23개 기관) ○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부 4회, 공공기관 6회) ○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백업복구 훈련 실시(6.12~16, 21개기관) ○ 제11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3개분야 26개기관 37개팀 참가, 7.6~7) ○ “VPN접속 이상행위 탐지시스템” ‘23년 국제품질분임조대회 금상수상(중국,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국내대회 금상수상 자격으로 국제대회 참가 ○ 탐지규칙 개발 및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모의 침해사고 분석시스템” 구축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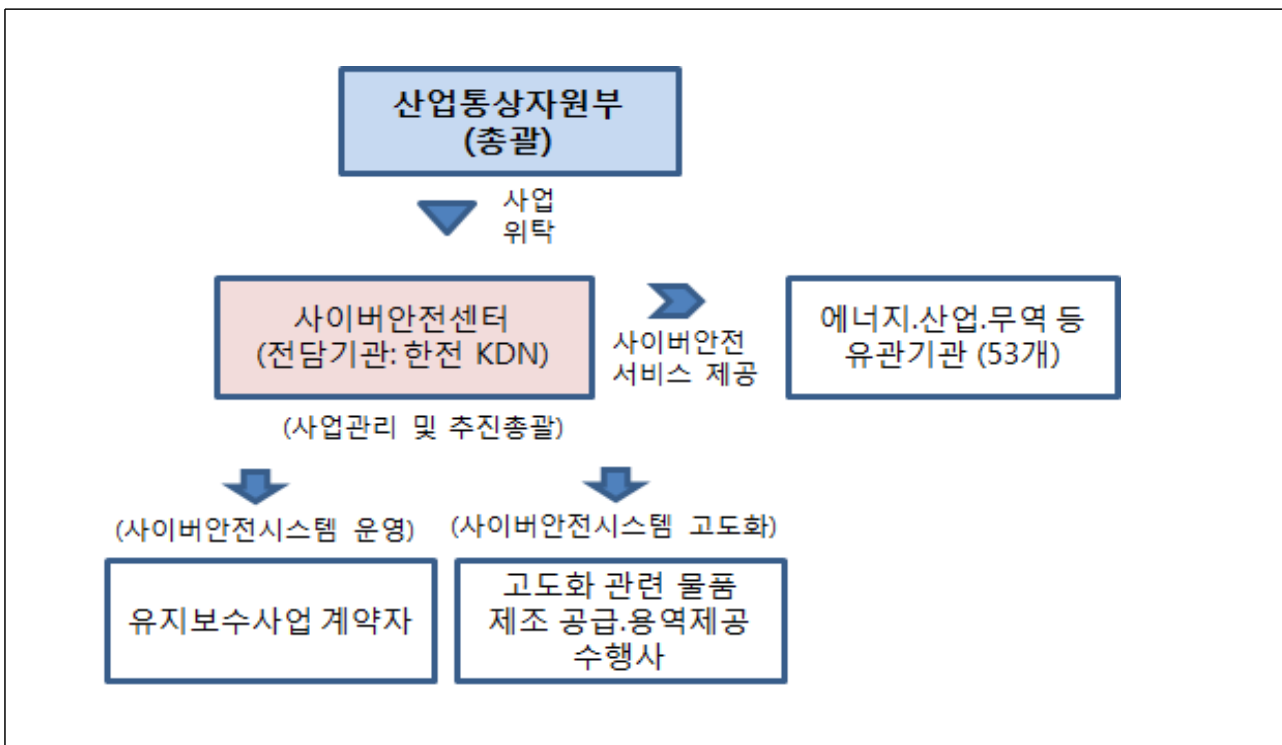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정원-산업부-기관” 3중 보안관제 중요 보안장비 이중화 및 에너지 기반 시설 관리기관 전용회선 이중화로 무중단 보안관제 체계 확립
- 러시아·우크라이나戰 확대, 사회공학 기법의 지능화된 사이버공격 등 보안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
- 사이버안전센터를 기반으로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산업·무역·에너지 등 산업부 소관기관 사이버안전을 확보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 365일 24시간 보안관제 및 사이버공격 탐지
 -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확산 방지 및 긴급복구
 - 취약점분석평가, 모의해킹 등을 통한 산업부 소관기관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
 - 정보보안 전문교육, 인력 양성 등 정보보안 대응기반 강화
 - 회원기관과 정보보안 관련 정책·기술 교류회를 통한 협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2,285	2,345	1,863	1,966	2,094	
'23~'27		2,225	2,375	2,452	2,525	2,57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안전센터 관제 데이터 대폭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업무 확대,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확대, IoT 이용 증가 등 날로 지능화·고도화 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
 - AMI 모뎀 미라이 봇넷 감염으로 고압 AMI검침시스템의 일시적 장애 발생('21.3), 러-우 전쟁이 물리적 공간에서 확전이 자제되었으나, 양국간 사이버 공간의 전쟁은 무차별적인 원전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전혀 제어되지 않고 전개('22.2) 되는 등 새로운 사이버위협이 등장 및 피해 지속 발생
 - 체크포인트, 카스퍼스키 등 사이버보안 관련기관에서 chat GPT 악용 사례 발표 및 해커 커뮤니티인 다크웹에서 챗봇 관련 문의 대폭 증가 및 최근 10년간 산업부사이버안전센터 공격 이벤트 20배 이상 증가
 - 특히, chat-GPT를 활용한 악성도구 개발 및 교묘한 피싱정보 생성 등 대량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진화하는 사이버공격에 신속·정확하게 방어해 나갈 계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1,789	1,789	-	-	-	-	1,789	1,769	98.9	98.9	-	20
2021	1,709	1,709	-	-	-	-	1,709	1,685	98.6	98.6	-	24
2022	2,285	2,285	-	-	-	-	2,285	2,270	99.3	99.3	-	15
2023	2,225	2,225	-	-	-	-	2,225	2,215	99.5	99.5	-	10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 불용사유 :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 차액(20백만원)
2021	- 불용사유 :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 차액(6백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약정만료후 무상사용에 대한 미사용액 발생(18백만원)
2022	- 불용사유 :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 차액(15백만원)
2023	- 불용사유 :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 차액(10백만원)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무역위원회

세출예산 총괄표(무역위원회)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결산	2023예산 본예산(A)	2024예산		증 감	
			정부안	확정(B)	(B-A)	%
<일반회계>						
총 계	1,564	1,644	1,793	1,793	149	9.1
1233 무역구제지원	1,564	1,644	1,793	1,793	149	9.1
무역구제지원사업 (1233-301)	1,564	1,644	1,793	1,793	149	9.1
단위사업계	1,564	1,644	1,793	1,793	149	9.1

사 업 명
(1) 무역구제지원사업(12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74	무역위원회		110	113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무역 및 투자유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1
명칭	무역구제	무역구제지원	무역구제지원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무역구제 지원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김진수	-	임은영
		무역구제정책과	044-203-5850	-	044-203-5855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044-203-585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무역구제지원	1,564	1,644	1,793	1,793	149	9.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15 (△68)	1,647	1,564	26	57	1,644	1,670	1619	1644	1593	-	51	1,793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강화	548	548	516	-	32	566	566	529	566	529	-	37	749	
· 무역구제진흥	281	281	280	-	1	281	281	270	281	270	-	10	281	
·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500	500	258	26	16	450	476	450	450	449	-	-	450	
· 무역구제 국제협력	386 (△68)	318	310	-	8	347	347	343	347	343	-	4	313	
○ 비목별 분류(합계)	1,715	1,647	1,564	26	57	1,644	1,670	1,619	1,644	1,593	-	51	1,793	
· 일 반 수 용 비 (210-01)	837 (△68)	769	767	-	2	886	912	875	886	846	-	11	995.8	
· 일 반 용 역 비 (210-14)	255	255	249	-	6	194	194	190	194	190	-	4	244	
· 국내여비 (220-01)	26	26	26	-	-	24	24	24	24	24	-	-	21.6	
· 국외여비(220-02)	86	86	53	-	33	79	79	53	79	53	-	26	70.6	
· 사 업 추 진 비 (240-01)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1	
· 일 반 연 구 비 (260-01)	500	500	458	26	16	450	450	465	450	465	-	11	4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 **(사업목적)** 덤핑, 지재권침해 등 해외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산업 피해를 조사(조사→판정→제재)하고 무역구제 기반을 강화
- ☐ **(사업내용)** 덤핑여부, 국내산업피해 여부 조사(조사→판정→제재), 홍보,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국제협력 4개 내역사업 추진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강화)** 덤핑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 피해여부 조사, 판정(무역위원회 개최), 제재(행정소송대응 포함) 추진
 - **(무역구제 진흥)** 국내 기업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촉진을 위해 인지도 제고·저변확대를 위한 학술세미나, 대학(원)생 논문대회/경연대회, 동영상 등 홍보와 시장조사·상담지원 추진
 -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산업피해 예상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 제도/현안 연구 등 정책연구 추진
 - **(무역구제 국제협력)** 무역구제제도 발전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개최, 주요국과의 무역구제 협력·협상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5조, 제15조, 제25조)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①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특정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무역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 수입이나 서비스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의 체결이나 국제무역제도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대외무역법(제33조)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 관세법(제51조, 제57조, 제65조)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87년 무역위원회 설립(근거 : 대외무역법)
- '89~'99년 무역구제 세미나 매년 개최(「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행사로 발전)
- '93년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권한을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
- '95년 반덤핑 및 보조금 제도 운용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덤핑·보조금 조사업무 관세청에서 이관)
- '99년 한·중 무역구제기관간 MOU 체결
- '00년 제1회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및 제1회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개최
- '01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제정, 제1회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 '01년 무역구제 소식지 '무역구제' 창간
- '02년 산업경쟁력조사* 최초 실시(예산 3억원, 자동차변속기 등 4개 과제)
 - * 미국 ITC의 개별산업 경쟁력조사 및 무역정책연구(美 관세법332조) 벤치마킹
- '03 제1회 한·EU 무역구제협의회 개최
- '07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개소(시계, 의류, 시계 등 3개 업종단체)
- '14~'15년 무역위원회-WTO 협력 양해각서 체결(「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WTO 후원)
 - 제1회 한·미 무역구제기관간 기술협의회 개최
- '14년 무역위-관세청 업무협력 MOU 체결
- '18년 한-인도 무역구제협력 MOU 체결 및 제1차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 '19년 무역위-경찰청 간 업무협력 MOU 체결, 무역구제 수입동향시스템 구축
- '20년 관세법/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고시 등 법규 재정비
- '21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덤핑·상계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 세부운영규정 개정
- '23년 제3차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 수립(4.20 무역위 안건 상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57	1,633	1,647	1,644	1,79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 사업 수혜자 : 국내기업, 대학, 유관 협회 및 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피해 조사(조사 → 판정 → 제재), 홍보, 정책연구,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149백만원 증액 요구

: ('23) 1,644백만원 → ('24) 1,793백만원, 149백만원

①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 : (2023) 566 → (2024요구) 749백만원, +183(32.3%)

- (요구) 덤핑·지재권 침해 등 무역구제 조사수요 증가 전망(연평균 증가율 32%)*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사 활동비' 전년대비 32.3%(1.8억) 증액 요구

* 국내 무역구제신규조사(건, 무역위) : ('20)8→('21)11→('22)25 연평균 증가율 32%

* 세계 무역구제신규조사(건, WTO) : ('19)199→('20)143→('21)336, 연평균증가율 30%

- (산출) 조사활동(629백만원), 무역위원회 운영(120백만원)

* 조사활동 : 현지조사(덤핑, 국내산업 피해 여부), 공청회·기술설명회 개최, 법률 자문, 행정소송 대응 등 ('23년 446백만원 → '24년 629백만원, 183백만원(41.1%) 증액)

* 무역위원회 개최(위원수당 등 회의운영비) : ('23)120 → ('24)120, 전년동

② 무역구제 진흥 : (2023) 281 → (2024요구) 281백만원, 전년수준

- (요구) 무역구제제도 활용 촉진을 위해 홍보 및 저변 확대,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구제 조사·상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수준 요구

- (산출) 학술세미나(26백만원),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28백만원)·경연대회(46백만원), 무역구제지 발간(50백만원), 제도홍보(99백만원), 무역구제조사·상담지원(32백만원)

③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 (2023) 450 → (2024요구) 450백만원, 전년수준

- (요구) 국내산업 피해예상품목 도출·경제분석, 피해예상품목 산업경쟁력조사, 제도·현안 연구를 위해 전년수준 요구

- (산출) 산업경쟁력조사/제도현안 연구 : 300 → 300백만원

수입동향시스템 활용 피해예상품목 도출 : 75 → 75백만원

산업피해 조사·조치품목 경제분석 : 75 → 75백만원

④ 무역구제 국제협력 : (2023) 347 → (2024요구) 313백만원, △34백만원(△9.9%)

- (요구) 항공료 등 물가인상율을 반영하여 '무역구제 서울포럼' 운영 예산의 현실화를 위해 전년대비 50백만원(25.8%) 증액(요구액은 '20년도 예산 수준)하고, 이를 위해 화상회의 유도 등 국제협력예산을 감액 (전년대비 △84백만원)

- (산출)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 194 → 244백만원, 50백만원(25.8%)

무역구제 국제협력 : 153 → 69백만원, △84백만원(△54.9%) 감액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44,000	○ 일반수용비(210-01) : 886,084천원	1,793,000	○ 일반수용비(210-01) : 995,800천원
	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경쟁력 강화(491,084천원)		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경쟁력 강화(680,800천원)
	· 조사활동(현지조사, 자문감정, 소송비용 등)		· 조사활동(현지조사, 자문감정, 소송비용 등)
	: 18,060천원×16.8건(조사 등)=303,484천원		: 18,060천원×16.8건(조사 등)=512,200천원
	· 무역위원회 운영 : 8,966천원×12회=107,600천원		· 무역위원회 운영 : 8,966천원×12회=108,600천원
	· 안건 인쇄비 등 : 2.2권×2,000천원×18회=80,000천원		· 안건 인쇄비 등 : 2.2권×2,000천원×18회=61,000천원
	나. 무역구제진흥(281,000천원)		나. 무역구제진흥(281,000천원)
	· 학술세미나 : 13,000천원×2회(하계-동계)=26,000천원		· 학술세미나 : 13,000천원×2회(하계-동계)=26,000천원
	· 논문발표대회·경연대회 : 71,000천원		· 논문발표대회·경연대회 : 74,000천원
	· 무역구제지 발간(계간지) : 12,500천원×4회=50,000천원		· 무역구제지 발간(계간지) : 12,500천원×4회=50,000천원
	· 홍보 : 25,500천원×4건=102,000천원		· 홍보 : 25,500천원×4건=99,000천원
	· 무역구제 조사·상담 : 3,200천원×10건=32,000천원		· 무역구제 조사·상담 : 3,200천원×10건=32,000천원
	다.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국제협력 업무협의 등 (114,000천원)		다.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국제협력 업무협의 등 (33,400천원)
	· 영문회의자료 번역 및 제작 : 1,200천원×15회=18,000천원		· 영문회의자료 번역 및 제작 : 1,200천원×15회=18,000천원
	· 소모품 구입 등 운영경비 : 5,000천원×14회=70,000천원		· 소모품 구입 등 운영경비 : 5,000천원×2회=10,000천원
	· 동시통역비(한-영) : 900천원×2명×14회=25,200천원		· 동시통역비(한-영) : 900천원×2명×3회=5,400천원
	라. 조정재원 (+800천원)		라. 조정재원 (+6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94,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44,000천원
	가.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194,000천원)		가.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44,000천원)
	· 수행사 용역 : 194,000,000원×1회=194,000천원		· 수행사 용역 : 244,000,000원×1회=24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1,600천원
	가. 무역구제조사, 무역위원회 참석		가. 무역구제조사, 무역위원회 참석
	75,800원×20명×15회 =22,740천원		75,800원×20명×15회 =22,740천원
	나. 국제협력 업무협의 및 회의 등 참석 :		나. 국제협력 업무협의 및 회의 등 참석 :
	75,800원×6명×7회 =3,183천원		75,800원×6명×7회 =3,183천원
	다. 조정재원 (-1,923천원)		다. 조정재원 (-4,323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78,43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70,600천원
	가. 덤핑 해외 현지조사(47,591천원)		가. 덤핑 해외 현지조사(47,591천원)
	· 항공료(5급) : 1,612,200원×2명×4.5회=14,508천원		· 항공료(5급) : 1,612,200원×2명×4.5회=14,508천원
	· 일비 : \$30×15일×2명×4.5회=4,576천원(\$4,050)		· 일비 : \$30×15일×2명×4.5회=4,576천원(\$4,050)
	· 숙박비 : \$137×14일×2명×4.5회 =19,506천원(\$17,262)		· 숙박비 : \$137×14일×2명×4.5회 =19,506천원(\$17,262)
	· 식비 : \$59×15일×2명×4.5회=9,000천원(\$7,965)		· 식비 : \$59×15일×2명×4.5회=9,000천원(\$7,965)
	나. WTO 등 회의 참석(8,788천원)		나. WTO 등 회의 참석(8,788천원)
	· 항공료(유럽 기준, 5급) : 3,171,500원×2명×1회=6,343천원		· 항공료(유럽 기준, 5급) : 3,171,500원×1명×1회=6,343천원
	· 일비 : \$30×6일×2명×1회=406천원(\$360)		· 일비 : \$30×6일×2명×1회=406천원(\$360)
	· 숙박비 : \$137×4일×2명×1회=1,238천원(\$1,096)		· 숙박비 : \$137×4일×2명×1회=1,238천원(\$1,096)
	· 식비 : \$59×6일×2명×1회=800천원(\$708)		· 식비 : \$59×6일×2명×1회=800천원(\$708)
	다. 무역구제협력회의 등 회의 참석(26,097천원)		다. 무역구제협력회의 등 회의 참석(26,097천원)
	· 항공료(유럽 기준, 5급) : 1,612,000원×3명×3회=14,508천원		· 항공료(유럽 기준, 5급) : 1,612,000원×3명×3회=14,508천원
	· 일비 : \$30×6일×3명×3회=1,830천원(\$1,620)		· 일비 : \$30×6일×3명×3회=1,830천원(\$1,620)
	· 숙박비 : \$137×4일×3명×3회=5,573천원(\$4,932)		· 숙박비 : \$137×4일×3명×3회=5,573천원(\$4,932)
	· 식비 : \$59×6일×3명×3회=3,600천원(\$3,186)		· 식비 : \$59×6일×3명×3회=3,600천원(\$3,186)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라. 조정재원 (-4,04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1,486천원 가. 무역구제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등(2,000천원) • 오·만찬비 등 : 30천원×8명×8.3회=2,000천원 나. 무역위원회 운영 등(5,400천원) • 오·만찬비 등 : 30천원×14명×12.8회=5,400천원 다. 무역구제 국제 협력회의 등 (4,200,천원) • 오/만찬비 50천원×20명×3회=3,000천원 • 기념품 구입 등 30천원×20명×2회=1,200천원 라. 조정재원 (-2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50,000천원 가.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280,000천원) • 연구용역 : 35,000천원×8개 과제=280,000천원 나. 수입동향시스템 활용 연구(100,000천원) • 산업영향조사 : 100,000천원×1개=100,000천원 다. 산업피해 조사·조치품목 경제분석(70,000천원) • 품목 경제분석 : 14,000천원×5개=70,000천원		라. 조정재원 (-11,87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1,000천원 가. 무역구제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등(2,000천원) • 오·만찬비 등 : 30천원×8명×8.3회=2,000천원 나. 무역위원회 운영 등(5,400천원) • 오·만찬비 등 : 30천원×14명×12.8회=5,400천원 다. 무역구제 국제 협력회의 등 (4,200,천원) • 오/만찬비 50천원×20명×3회=3,000천원 • 기념품 구입 등 30천원×20명×2회=1,200천원 라. 조정재원 (-6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50,000천원 가.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280,000천원) • 연구용역 : 35,000천원×8개 과제=280,000천원 나. 수입동향시스템 활용 연구(100,000천원) • 산업영향조사 : 100,000천원×1개=100,000천원 다. 산업피해 조사·조치품목 경제분석(70,000천원) • 품목 경제분석 : 14,000천원×5개=7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경쟁력조사 사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목표	72.5	72.8	73.0	73.2	73.3	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설정	업체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72.9	72.9	73.0	-	-			
	달성도	100.5	100.0	100.0	-	-			
홈페이지 무역구제 DB 만족도 (단위:%)	목표	76.0	76.2	76.4	76.5	76.6	최근 3년간의 실적 평균치를 고려하여 설정	홈페이지 이용자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76.0	76.3	76.4	77.0	-			
	달성도	100.0	100.1	100.0	100.5	-			
무역구제 지원건수 (단위: 건)	목표	48	49	52	53	54	최근 3년간의 무역구제 지원건수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반덤핑 및 불공정무역행위 현지조사, 상담 등 업체 지원 건수	출장내역 및 지원보고서 등
	실적	48	51	54	-	-			
	달성도	100.0	104.1	103.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 : 조사개시 5건, 최종판정·덤핑관세부과 7건 · 불공정무역행위(지재권침해 등) : 조사개시 4건, 판정 및 시정조치(수출입중지 등) 8건 · 법적기반 강화 :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12월),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6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고시/예규 개정('20.11.20.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진흥(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 세미나(하계 7월, 동계 11월), 대학생 논문대회(11월), UCC공모전(11월), 심포지엄(12월) · 무역구제지 발간(4회), 무역구제 홍보영상 및 사례집(e-북) 제작·배포, 협단체/전문가 간담회·15개 신고센터 방문·조치기업 현장방문 등 21회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급회의 : 위원장 미 ITC 위원장 및 위원 면담(1~2월) · 양자·다자협력 :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10월), 한-베 무역구제협력회의(11월), 한-EU 무역구제협력회의(11월)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 : 조사개시 7건(신규 5, 재심2), 최종판정 6건, 덤핑관세부과 5건 · 불공정무역행위(지재권침해) : 조사개시 5건, 최종판정 4건 · 법적기반 강화 :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7월), 고시 개정(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진흥(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 정책세미나(6.24/11.25), 무역구제 학술세미나(하계 7.16, 동계 11.5), 대학생 논문대회(11.5), 모의무역위원회(10.3), 보조금상계관세 제도 정비를 위한 전문가 회의(11.25) · 무역구제지 발간(4/6/9/12월), '무역구제 뉴스레터' 제작·배포(연 5회), 무역구제 홍보 시리즈 영상 제작(3편) 및 유튜브 홍보(6~10월), 업계·전문가 대상 간담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온/오프방식 병행) : 11.15, 코엑스 · 한-베 무역구제협력회의(12월, 영상회의)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 : 조사개시 5건(신규 3, 재심2), 최종판정·덤핑관세부과 5건 · 불공정무역행위(지재권침해 등) : 조사개시 6건, 최종판정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진흥(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 학술세미나(하계 6.17., 동계 11.11), 대학생 논문대회(11.11), 모의무역위원회(11.2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세미나(11월) · 무역구제지 발간(4/6/9/12월), 무역구제 홍보영상 제작(9월), 제17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2.10), 업계·전문가 대상 간담회 지속 추진 및 현장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10.12.(수)~14(금),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 양자 협력 : 한-이집트 무역구제 협력 MOU 체결 (1월), 한-중국 무역구제 협력회의·FTA 이행위(4월), 한-EU FTA작업반(6월), 한-WTO 고위급 면담(위원장-사무차장, 6월), 한-EU & 한-영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 면담(9월),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11월)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 : 조사개시 7건(신규 1, 재심6), 최종판정 6건(조사종결 1), 덤핑관세부과 5건 · 불공정무역행위(지재권침해 등) : 조사개시 10건, 최종판정 5건 · 제3차 무역구제기본계획 수립(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진흥(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 학술세미나(하계 6.16., 동계 11.17), 대학생 논문대회(11.10), 모의무역위원회(11.2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세미나(11.12) · 무역구제지 발간(4/6/9/12월), 무역구제 홍보영상 서울국제포럼 오픈링 영상 활용(10.13), 지역별 통상진흥기관 협의회와 연계하여 무역구제제도 홍보< 대구·경북(5.31,대구인터불고),전북(6.21,전북대), 경남(6.27,창원컨벤션센터),대전·세종(9.8,대전오노마)>, 업계·전문가 대상 간담회 지속 추진 및 현장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10.12.(목)~14(토), COAX 아셈볼룸) · 무역구제회의 개최·참석 : WTO 무역구제 기관장회의(5월),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FTA 이행위(11월), 한-베트남 FTA 공동위(12월) · 고위급 면담(5월)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의장, 호주 반덤핑위원회 위원장(5.3), 영국 무역구제청 청장, 인도 무역구제총국 부국장(5.4), 중국 무역구제 부국장(10.13) ·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참여 및 타결: (타결)걸프협력이사회(GCC)·아랍에미리트(UAE)·에콰도르·과테말라, (협상중)한-몽고 E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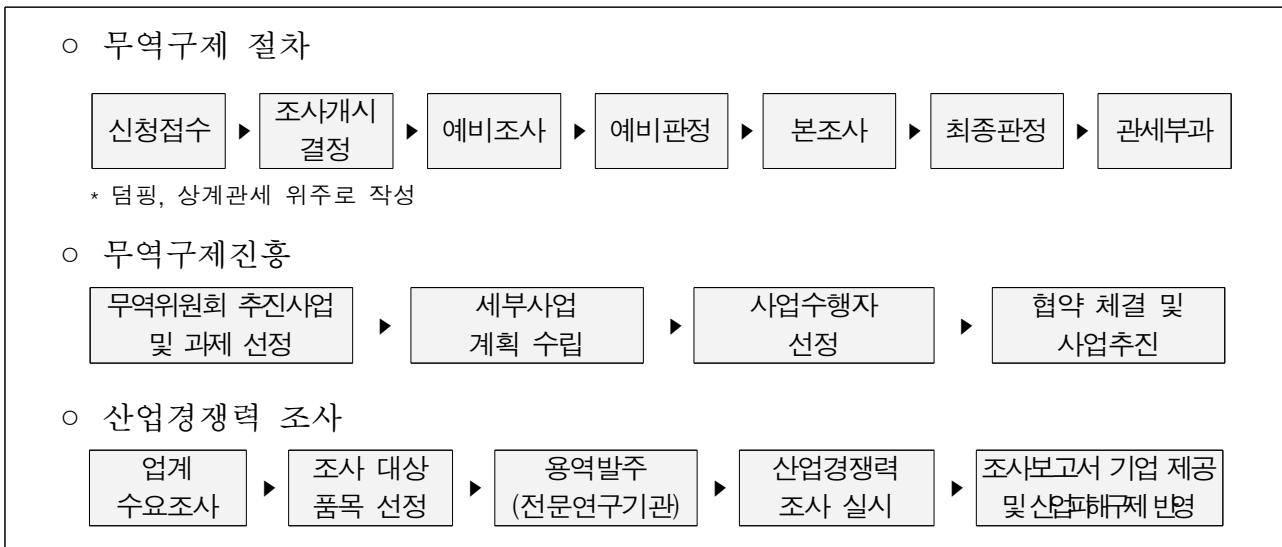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덤핑수입, 지적권 침해 등 해외기업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신속·공정한 조사 및 실효적인 조치로 산업피해 등 국내산업 보호
- WTO,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을 초청하는 및 미국, 중국, EU 등 해외 주요국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회의,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수입규제 애로 대응 및 자유·공정무역 확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1,715	1,801	1,917	2,125	2,377	
'23~'27		1,644	1,726	1,795	1,849	1,88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무역구제 조치의 실효성 강화)** 반덤핑조사 등 무역구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개시 및 잠정조치 활성화로 무역구제 조치의 실효성 강화
- **(중소기업 제도이용 활성화)**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무역구제 관련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무역구제 활용 컨설팅 지원 등 추진
- **(산업피해 예방 선순환 체계 구축)** 수입 급증 및 산업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무역구제 신청검토를 위한 '산업·시장동향 조사' 추진 등을 통해 수입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산업피해를 예방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국제협력)** 외국 무역구제기관과 양자·다자 협력 확대로 국제무역규범 주도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수입규제 대응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1,657	1,657	1,657	-	-	-	1,657	1,334.6	80.5	80.5	-	322.4
2021	1,633	1,633	1,633	-	-	-	1,633	1,476.6	90.4	90.4	-	156.4
2022	1,715	△68	1,647	-	-	-	1,647	1,564	94.9	94.9	26	57
2023	1,644	1,644	1,644	26	-	-	1,670	1,619	97.0	97.0	-	5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 322백만원 -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행사 및 국외출장(해외 현지조사 및 국제협력) 취소에 따른 행사비와 국외여비 등 집행잔액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 156백만원 -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 현지조사·국제협력행사 미실시에 따른 국외여비와 행사비 집행 잔액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 56.8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봉쇄로 현지조사 미실시 국외출장(33백만원), 포럼 낙찰차액(6백만원), 기타 집행 잔액(연구용역비 16백만원, 기타 2) ○ 이월 : 26.4백만원 - 하반기에 추진한 정책연구과제(2건)의 과제기간('22.10~'23.3월) 미도래에 따른 이월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 50.9백만원 - 홍보, 용역, 포럼 등 낙찰 차액 발생(15천만원), 현지조사 일정 변경(26백만원), 연내 법원 판결 미완료로 예산 집행 보류(10천만원)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국가기술표준원

세출예산 총괄표(국가기술표준원)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결산	2023예산 본예산(A)	2024예산		증 감	
			정부안	확정(B)	(B-A)	%
<일반회계>						
총 계						
[3731]국가표준협식및 국제협력	122,367	116,253	73,143	73,143	△43,110	△37.1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3,320	3,425	2,461	2,461	△964	△28.1
국제표준활동지원 (3731-302)	1,990	3,052	3,232	3,232	180	5.9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CDA) (3731-303)	1,382	2,036	2,890	2,890	854	41.9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3731-304)	1,813	1,725	1,725	1,725	-	-
국가표준기술 개발및보급(R&D) (3731-305)	69,995	74,495	42,187	42,187	△32,308	△43.4
국제적합성평가 기반구축 (3731-306)	1,848	2,029	2,088	2,088	59	2.9
국가인증제도혁신 기반구축 (3731-307)	1,051	1,052	947	947	△105	△10.0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 (3731-308)	1,305	1,886	1,517	1,517	△369	△19.6
국가표준활성화 (3731-309)	7,077	6,834	6,000	6,000	△834	△12.2
시험인증산업 경쟁력및신뢰성제고 (3731-312)	5,587	6,345	4,760	4,760	△1,585	△25.0
규제샌드박스융합 신제품인증기술개발 (R&D) (3731-318)	6,513	4,862	352	352	△4,510	△32.8
신산업단체표준화촉진 (3731-319)	711	747	-	-	△747	순감

구분	2022결산	2023예산 본예산(A)	2024예산		증 감	
			정부안	확정(B)	(B-A)	%
융복합신기술제품 안전기술지원사업(R&D) (3731-320)	6,690	5,208	2,788	2,788	△2,420	△46.5
스마트계량측 정기술기반조성사업(R&D) (3731-323)	2,890	2,457	336	336	△2,121	△86.3
지능형스마트랩구축 (3731-327)	196	100	-	-	△100	순감
해외인증지원기반구축 (3731-328)	-	-	1,860	1,860	1,860	순증
[3732]제품안전관리 기반조성	12,655	16,548	16,881	16,881	333	2.0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3732-303)	6,843	7,211	7,211	7,211	-	-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1,530	2,915	3,888	3,888	973	33.4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3732-306)	1,227	1,865	1,679	1,679	△186	△10.0
어린이제품안전관리 생태계조성 (3732-307)	1,070	1,857	1,543	1,543	△314	16.9
어린이제품안전성 평가역량강화 (3732-308)	115	1,640	1,606	1,606	△34	△2.1
제품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3732-310)	836	1,060	954	954	△106	△10.0
[3736]무역기술장벽대응 기반강화	10,677	12,411	11,318	11,318	△1,093	△8.8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3736-301)	7,231	8,474	7,869	7,869	△605	△7.1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3736-302)	1,139	1,178	1,060	1,060	△118	△10.0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 체계구축(정보화) (3736-304)	2,307	2,759	2,389	2,389	△370	△13.4
[7134]국가기술표준원 정책수립운영	1,938	2,404	2,651	2,651	247	10.3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7134-301)	1,311	1,665	1,702	1,702	37	2.2
기술표준정책 (7134-302)	627	739	949	949	210	28.4

사 업 명
(1) 신기술제품인증(37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1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신기술제품인증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세부사업) 신기술제품인 증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정두식	-	지세한울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0	-	043-870-5581
(내역사업) 신기술인증 등 지원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장인증본부	김정환 본부장	02-3460-902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엔지니어링표준실	장근영 실장	053-718-8493
		자원순환산업인증원	-	박성호 사무국장	02-538-6537
(내역사업) 인증제품 판로 지원 및 확산	사업시행주체	한국신제품인증협회	-	김성섭 사무국장	031-8064-1360
(내역사업) 융합신제품적합 성 인증 지원	사업시행주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김형진 팀장	031-8040-683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신기술제품인증	3,320	3,425	2,461	2,461	△964	△28.1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20	3,320	3,320 [3,320]	-	-	3,425	3,425	3,425 [3,425]	3,425	3,425 [3,425]	-	-	2,461
· 신기술인증 등 지원	2,604	2,604	2,534 [2,534]	-	-	2,709	2,709	2,709 [2,709]	2,709	2,709 [2,709]	-	-	1,896
· 인증제품 판로지 원 및 확산	402	402	402 [402]	-	-	402	402	402 [402]	402	402 [402]	-	-	281
·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30	30	100 [100]	-	-	30	30	31 [31]	30	31 [31]	-	-	-
· 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 지원	284	284	284 [284]	-	-	284	284	284 [284]	284	284 [284]	-	-	284
○ 비목별 분류(합계)	3,320	3,320	3,320 [3,320]	-	-	3,425	3,425	3,425 [3,425]	3,425	3,425 [3,425]	-	-	2,461
· 일반수용비(210-01)	84.38	84.38	14.37 [14.37]	-	-	84.519	84.519	83.519	84.519	83.519	-	-	58
· 시험연구비(210-13)	30	30	100 [100]	-	-	30	30	31 [31]	30	31 [31]	-	-	-
· 사업추진비(240-01)	1.62	1.62	1.62 [1.62]	-	-	1.481	1.481	1.481 [1.481]	1.481	1.481 [1.481]	-	-	1
· 일반연구비(260-01)	25	25	25 [25]	-	-	25	25	25 [25]	25	25 [25]	-	-	18
· 민간경상보조(320-01)	3,179	3,179	3,179 [3,179]	-	-	3,284	3,284	3,284 [3,284]	3,284	3,284 [3,284]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2,38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320	3,320	3,320 [3,320]	-	-	3,425	3,425	3,425 [3,425]	3,425	3,425 [3,425]	-	-	2,461
· 신기술인증 등 지원	2,604	2,604	2,534 [2,534]	-	-	2,709	2,709	2,709 [2,709]	2,709	2,709 [2,709]	-	-	1,896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2,493	2,493	2,493 [2,493]	-	-	2,598	2,598	2,598 [2,598]	2,598	2,598 [2,598]	-	-	-
- 민간위탁사업비	-	-	-	-	-	-	-	-	-	-	-	-	1,819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320-02) - 사 업 추 진 비 (240-01) - 일 반 연 구 비 (260-01) - 일 반 수 용 비 (210-01) · 인증제품 판로지 원 및 확산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 시 험 연 구 비 (210-13) · 융합신제품적합 성인증 지원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62 25 84.38 402 402 - 30 30 284 284 -	1.62 25 84.38 402 402 - 30 30 284 284 -	1.62 [1.62] 25 [25] 14.37 [14.37] 402 [402] 402 [402] - 100 [100] 100 [100] 284 [100] 284 [284] -	- - - - - - - - - -	- - - - - - - -	1.481 25 84.519 402 402 - 30 30 284 284 -	1.481 [1.481] 25 [25] 83.519 [83.519] 402 [402] 402 [402] - 31 [31] 31 [31] 284 [284] 284 [284] -	1.481 [1.481] 25 [25] 83.519 [83.519] 402 [402] 402 [402] - 31 [31] 31 [31] 284 [284] 284 [284] -	- - - - - - - - -	- - - - - - - -	1 18 58 281 - 281 - - 284 - 2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기술인증 등 지원) 국내 개발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재활용제품(GR)의 평가·인증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 및 인증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신제품(NEP)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 설명회, 구매상담회, 판매 실적 조사 등을 통한 인증제품 판로개척 추진
-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의 인증 취득 당시의 품질 유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적합한 인증 차단 및 소비자 보호
-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지원) 융합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적합성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적시 시장출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3. 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
5. 기술력평가에 따른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6. 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으로 본다.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2. (생략)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기관과 총괄지원기관이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심사의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적합성 인증 심사)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적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

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2.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5.05.10 : 제15회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시행토록 결정
 - '04.11.25 : 각부처의 유사기술 및 제품인증에 대한 정부인증제도 통폐합(5개 부처, 7개 신기술 인증 업무를 신기술·신제품 인증으로 통합 정비)
 - '06.10.30 : NEP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 '07.10.29 : 공공구매제도 주관부처가 산자부에서 기술표준원으로 변경
 - '08.02.29 :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던 IT분야 신제품 (NEP)인증 업무 및 과기부의 신기술(NET) 인증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11.10.06 :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 도입
 - '16.02.17 :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신속 시장진입지원체계로서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 구축 등 보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614	3,010	3,320	3,425	2,46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사업자(공모)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수혜자 : 전 산업분야 인증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신기술인증 등 지원

: ('23) 2,709백만원 → ('24) 1,896백만원, 813백만원 감액

- (요구) NEP, NET, GR 인증 평가위탁에 따른 인증평가비용 및 제도 운영 예산으로,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육성 및 K-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지속적 지원 필요
- (산출) 신제품(NEP), 신기술(NET),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1,393백만원
NET·NEP 100대 신산업 전략품목 발굴·지원 216백만원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기준 개발 210백만원
인증제도 효율화를 위한 조사·분석 1백만원
연구용역비 18백만원
법률자문 등 일반수용비 58백만원

② 인증제품판로지원 및 확산

: ('23) 402백만원 → ('24) 281백만원, 121백만원 감액

- (요구) 인증 신제품(NEP)의 판로지원과 공공기관 의무구매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산출) 의무구매 실적 및 인증기업 판매 실적 조사 68백만원
공공구매 워크숍, 현장방문 상담회 등 213백만원

③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 ('23) 30 → ('24) - 순감

④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지원

: ('23) 284백만원 → ('24) 284백만원, 전년동

- (요구)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제도운영 및 인증조사·분석 264백만원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홍보 20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25 백만원	(1) 신기술인증 등 지원 : 2,709백만원 (1-1) NEP, NET, GR 인증 : 1,990백만원 - 정기인증평가 1,034건 × 3.85백만원 × 0.5 (1-2) NEP, NET 100대 신산업 전략품목 발굴·지원 : 293백만원 - (품목발굴) 100백만 + (상시인증평가) 50건×3.85백만원 (1-3) 우수재활용(GR)인증기준 개발 : 315백만원 - 기준개발 15건 × 21백만원 (1-4) 인증제도 효율화를 위한 조사·분석 : 1.481백만원 - 9명 × 18천원 × 9회 (1-5) 연구용역비 : 25백만원 - 연구용역 1건 × 25백만원 (1-6) 법률자문 등 일반수용비 : 84.38백만원 (2)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 402백만원 (2-1) 의무구매 실적 및 인증기업 판매 실적 등 조사 : 68백만원 - 실적 조사 1건 × 68백만원 (2-2) 공공구매, 현장 방문 상담회 등 : 334백만원 - 상담회 등 35회 × 9.55백만원	2,461 백만원	(1) 신기술인증 등 지원 : 1,896백만원 (1-1) NEP, NET, GR 인증 : 1,393백만원 - 정기인증평가 724건 × 3.85백만원 × 0.5 (1-2) NEP, NET 100대 신산업 전략품목 발굴·지원 : 216백만원 - (품목발굴) 100백만 + (상시인증평가) 30건×3.85백만원 (1-3) 우수재활용(GR)인증기준 개발 : 210백만원 - 기준개발 10건 × 21백만원 (1-4) 인증제도 효율화를 위한 조사·분석 : 1백만원 - 6명 × 18천원 × 9회 (1-5) 연구용역비 : 18백만원 - 연구용역 1건 × 18백만원 (1-6) 법률자문 등 일반수용비 : 58백만원 (2)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 281백만원 (2-1) 의무구매 실적 및 인증기업 판매 실적 등 조사 : 68백만원 - 실적 조사 1건 × 68백만원 (2-2) 공공구매, 현장 방문 상담회 등 : 213백만원 - 상담회 등 22회 × 9.55백만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p>(3)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 30백만원 - 사후관리 15개 품목 × 2백만원</p> <p>(4)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지원 : 284백만원 (2-1) 제도운영 및 인증조사 · 분석 : 264백만원 - (인증평가)16건 X 3백만원 - (조사분석)8건 X 27백만원 (2-2)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홍보 : 20백만원 - 홍보 1회 X 20백만원</p>		<p>(3)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 -(순감)</p> <p>(4)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지원 : 284백만원 (4-1) 제도운영 및 인증조사 · 분석 : 264백만원 - (인증평가)16건 X 3백만원 - (조사분석)8건 X 27백만원 (4-2)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홍보 : 20백만원 - 홍보 1회 X 20백만원</p>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구매품목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1.5	71.7	71.7	72	72.5	'12년도 성과지표 설정 후 장기간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만족도는 일정 수준 이상 증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공기관(450개 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구매 만족도 평균 점수	외부 전문 기관의 만족도 설문 조사
	실적	71.5	71.4	72.0	73.6	-			
	달성도	100	99.6	100.4	102.2	-			
기관별 의무구매 이행률 (단위: 점)	목표	-	-	48.7	43	42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산출함. 22년 도입된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실적 추이 관찰 필요	인증 신제품(NEP)의 의무구매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중 법정구매비율(20%)을 준수한 기관의 비율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시스템, 기관별 재정시스템 등 온라인 조사
	실적	-	-	42	40.9	-			
	달성도	-	-	86.2	95.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NEP) 인증(신청 362건/인증 50건) - 신기술(NET) 인증(신청 499건/인증 86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98건/인증 100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1회, 설명회 6회, 구매상담회 3회, 현장방문 상담회 19회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NEP: 35건, GR : 78건) ④ 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지원건수 61건, 인증건수 7건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NEP) 인증(신청 431건/인증 68건), 신기술(NET) 인증(신청 438건/인증 97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125건/인증 114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1회, 설명회 5회, 구매상담회 6회, 현장방문 상담회 16회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NEP: 46건, GR : 67건) ④ 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지원건수 46건, 인증건수 7건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NEP) 인증(신청 424건/인증 53건), 신기술(NET) 인증(신청 533건/인증 91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164건/인증 112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1회, 설명회 6회, 구매상담회 8회, 현장방문 상담회 27회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NEP: 50건, GR : 102건) ④ 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지원건수 64건, 인증건수 5건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NEP) 인증(신청 372건/인증 57건), 신기술(NET) 인증(신청 479건/인증 68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190건/인증 131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1회, 설명회 6회, 구매상담회 7회, 현장방문 상담회 16회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NEP: 53건, GR : 114건) ④ 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지원건수 63건, 인증건수 1건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중소기업 성장 기여) 2022년 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인증신제품(NEP)의 구매총액은 2,845억원, 한 개 제품 당 평균 구매액은 16.7억원으로 중소기업 신제품의 초기 판로개척에 기여하고 있음

<최근 3년 NEP 의무구매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년	'21년	증감률	'22년	증감률
NEP제품 구매액	2,435	2,441	0.2	2,845	16.7
품목당 구매액	18.6	15.5	△16.7	16.7	7.7

-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이 ①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취득을 위해, ② 인증 취득 후 생산·관리를 위해 기술 및 행정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

<신기술, 신제품 인증의 일자리 창출 효과>

(고용실시기업(%) / 고용규모(명))

구 분	① 인증 취득 전 [인증 취득을 위한 고용]	② 인증 취득 후 [생산·관리를 위한 고용]
신기술(NET) 인증	48.8% / 4.0명	52.4% / 4.3명
신제품(NEP) 인증	60.6% / 2.9명	48.5% / 2.6명

※ 조사 대상/기간 : 신기술·신제품 인증 취득 중소기업 175개사 / '18.8.~'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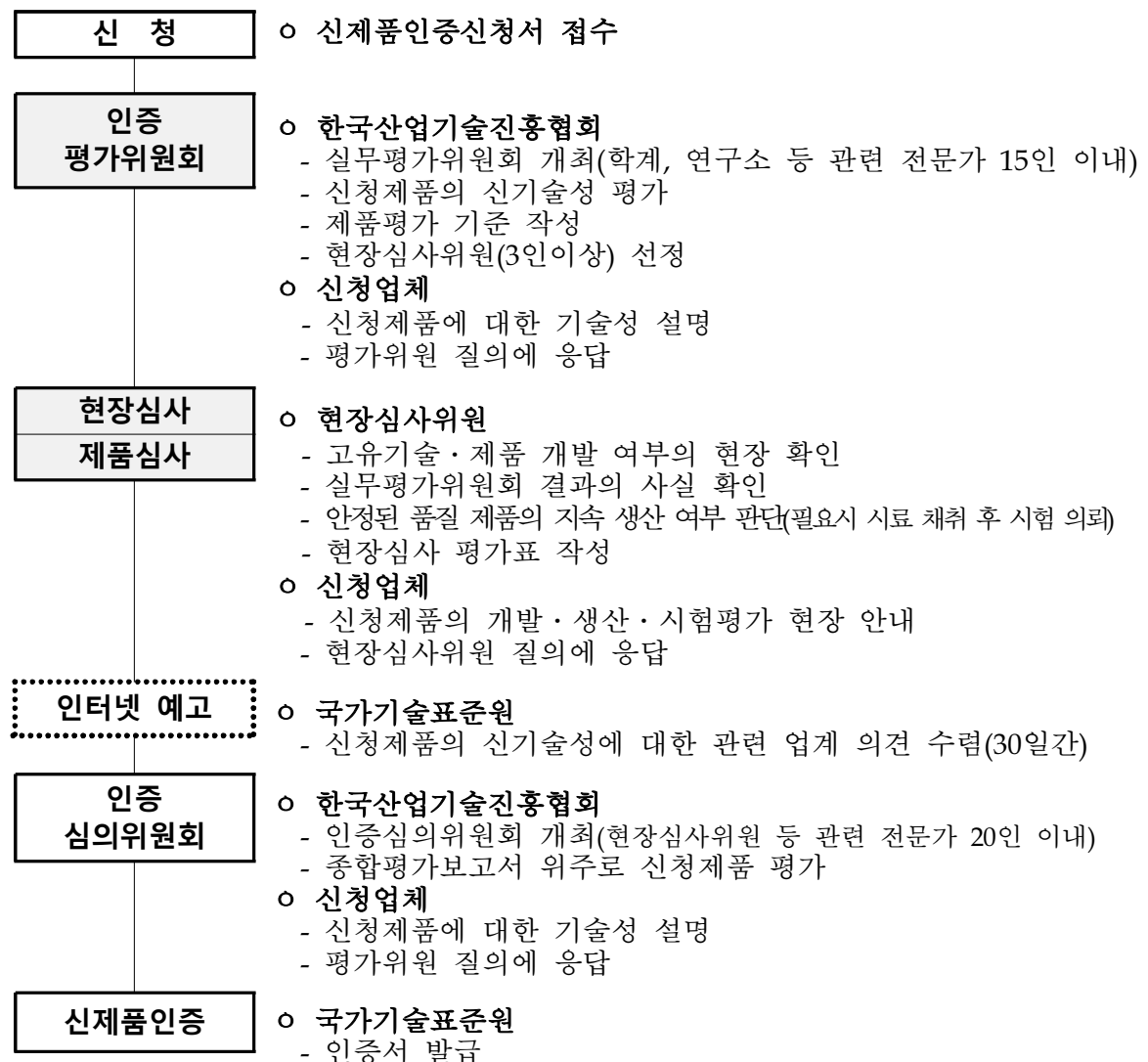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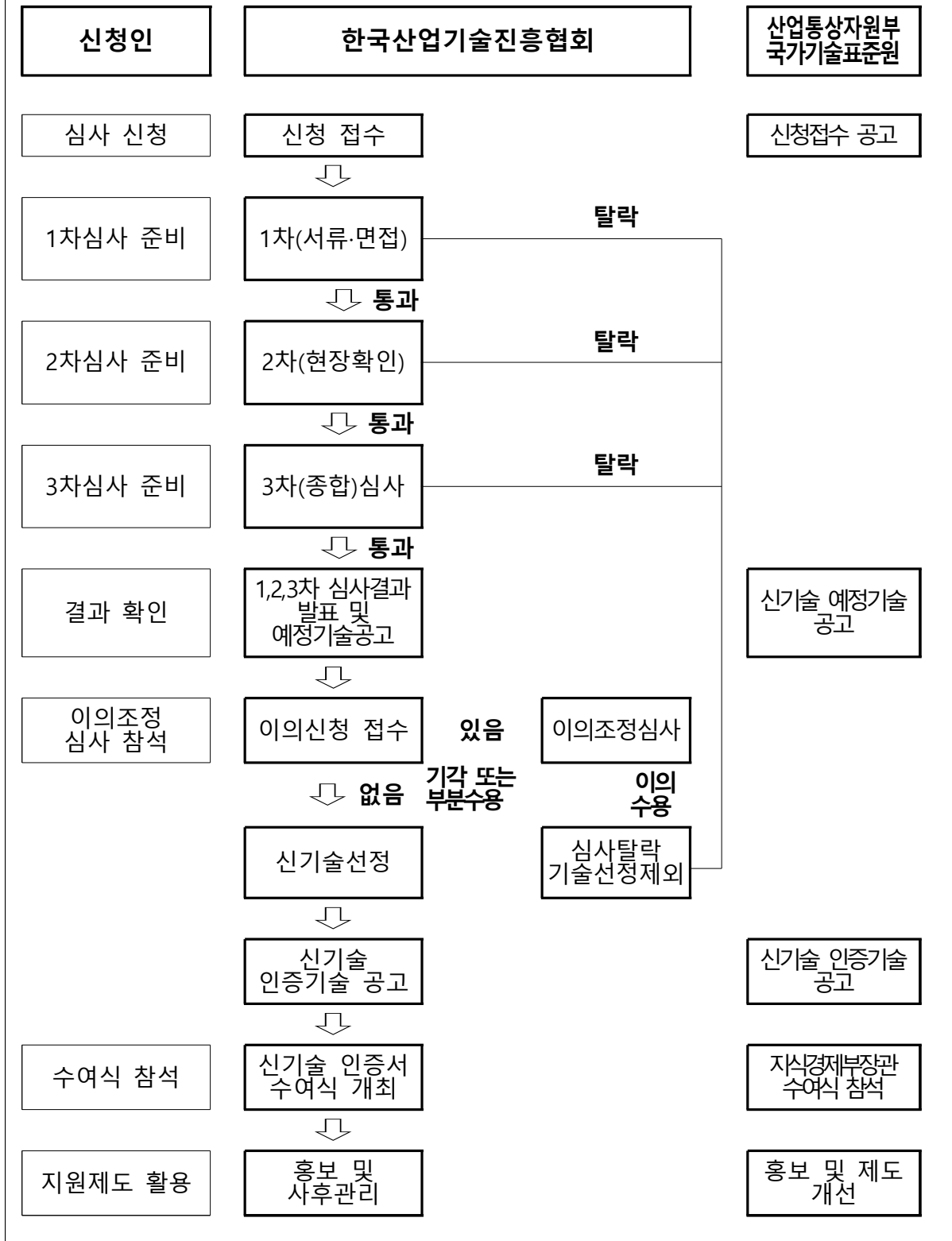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국가기술표준원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② 보조금 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모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		
③ 사업 수행	보 조 사 업 자	각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		
④ 사업 점검 및 평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 실적 및 집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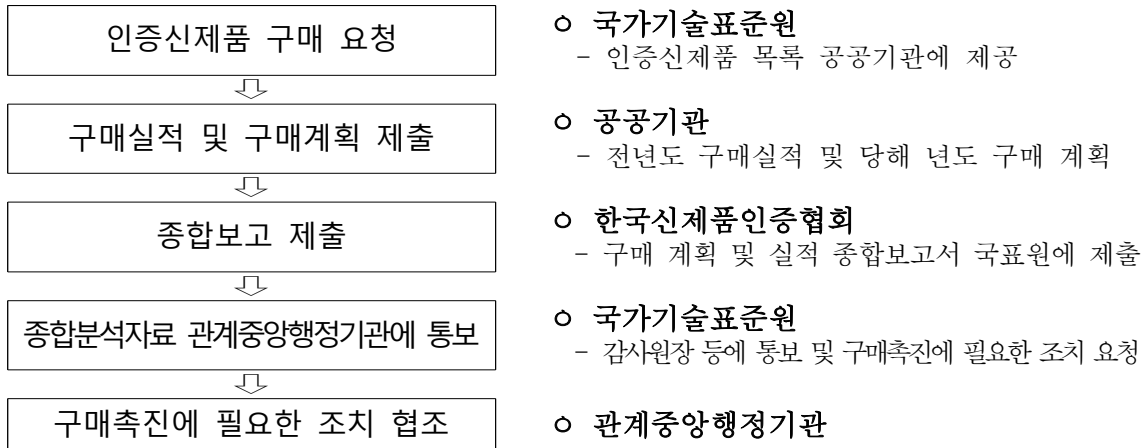
① NEP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9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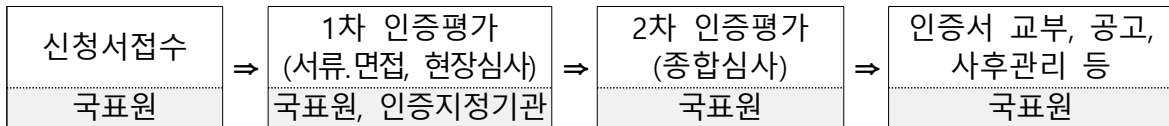
② NET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1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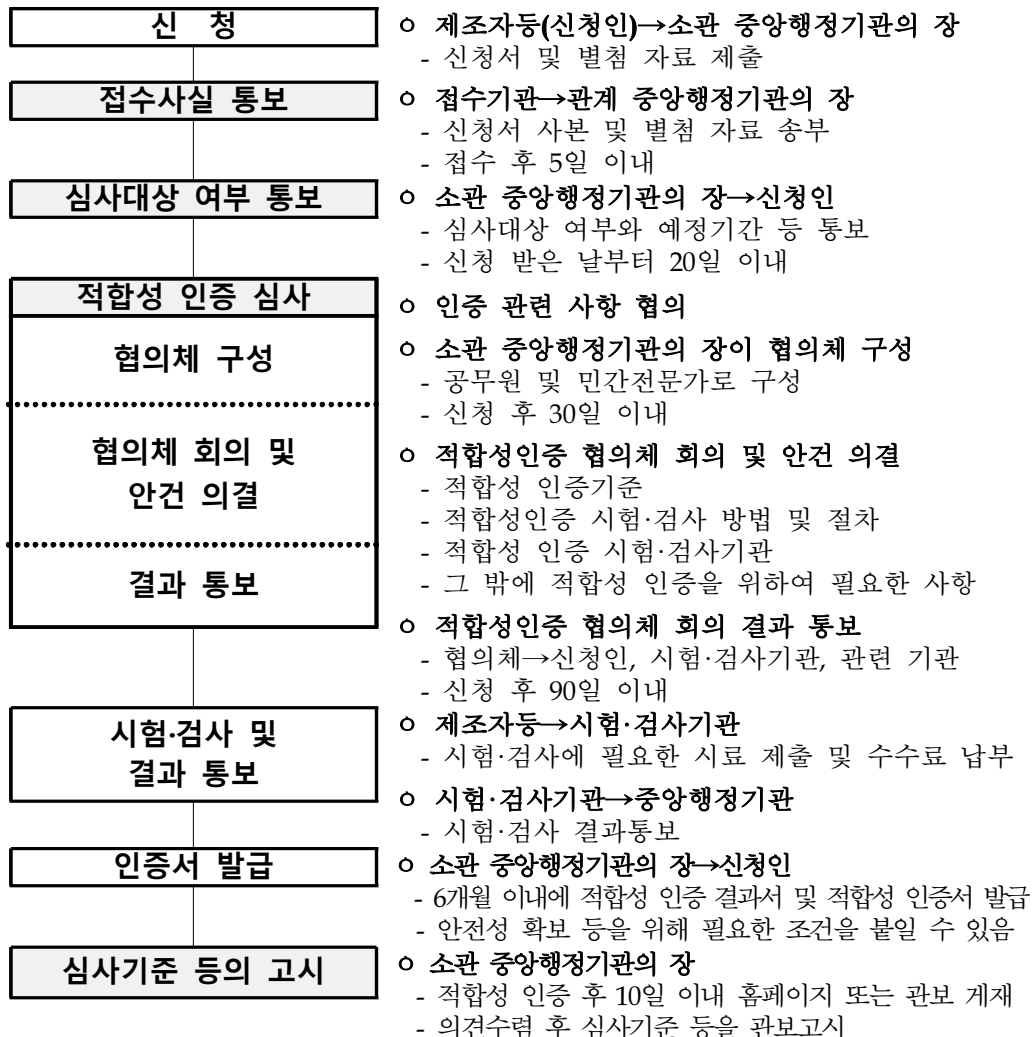
③ 인증제품 판로지원



④ GR인증 집행절차 (소요기간 : 90일)



⑤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소요기간 : 6개월)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3,320	3,154	3,059	2,998	2,968	
'23~'27		3,425	3,596	3,740	3,852	3,92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 산중위 결산 검토보고서

○ '20년 결산

- (지적) 중소기업 신기술·신제품 인증률 제고 필요
- (조치) 제도 개선(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가점 부여, 재신청 횟수 제한 규정 폐지 등) 및 인증 신청 지원을 위한 Help Desk 도입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NET, NEP, GR,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신시장 개척, 고용 창출 등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마련 도모
- 신산업 분야의 NET·NEP 인증품목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신산업 분야 육성
- 우수 제품 인증을 통해 인증 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
- 탄소중립 실현과 해외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인증기준개발 확대 등 우수재활용제품 인증(GR) 활성화 추진
-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인증애로 발굴 통로 다각화 및 적합성 인증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인증 관련 애로지원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재정사업 자율평가('21회계연도)
 - 보통, 80점(단위사업명: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 2) 보조사업 연장평가('21년)
 - 사업방식변경, 79.3점
 - 신기술제품 20% 의무구매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동 사업의 예산 대부분이 인증소요 비용인 만큼, 심사절차 개선 등을 통해 소요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동 사업의 특징점이 혁신조달이라는 점을 감안 공공 구매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2,614	2,614	2,614	-	-	-	2,614	2,612	99.9	99.9	-	2
2021	3,010	3,010	3,010	-	-	-	3,010	3,008	99.9	99.9	-	2
2022	3,320	3,320	3,320	-	-	-	3,320	3,320	100	100	-	-
2023	3,425	3,425	3,425	-	-	-	3,425	3,425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2,523	2,523	2,523	2,523	-	2,523	2,515	-	8	99.7
2021	2,869	2,869	2,869	2,869	-	2,869	2,869	-	-	100
2022	3,179	3,179	3,179	3,179	-	3,179	3,179	-	-	100
2023. 12월기준	3,284	3,284	3,284	3,284	-	3,284	3,284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 불용 : 2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1	- 불용 : 2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2	-
2023	-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1.11.1.)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210-01	43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210-13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세목변경
세목조정 (“22.12.12)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210-01	70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210-13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세목변경
세목조정 (“23.12.21.)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210-01	1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210-13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세목변경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신제품(NEP) 인증



□ 제도개요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인증함으로써, 판로 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 신제품인증은 제품인증이며, 최초 개발(개선) 기술을 적용 상용화에 성공하고 동종 제품과 비교하여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인증 요건
- * (근거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등

□ 인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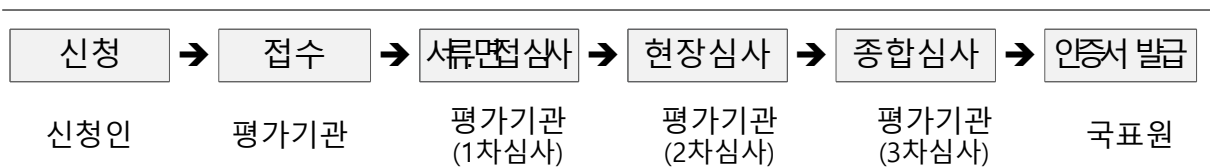
- 인증평가는 3차례 평가(서류→현장→종합)로 구성되며, 획득한 인증은 3년간 유효(3년 연장 가능)

<연도별 신제품(NEP) 인증 현황>

(단위 : 건)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건수	374	39	395	46	362	50	431	69	424	53

< 신제품(NEP)인증 평가 절차(90일 이내) >



- * (평가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신제품(NEP)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 수행

□ 주요 지원 제도

- 공공기관 구매 지원(의무구매, 우선구매, 수의계약 등)
- 기술금융 지원 사업, 정부 R&D 사업 신청 시 우대 등

참고 1-1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제도

□ 제도개요

- (의무구매)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NEP제품이 있는 경우 일정 비율(20%)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업부장관 고시에 따른 공공기관(시행령 제22조)

* 의무구매 대상기관 현황 (457개 공공기관, '21년 기준)

(기관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총 계
45(9.8)	243(53.2)	17(3.7)	152(33.3)	457(100.0)

□ 추진현황

- 신제품(NEP) 공공구매 이행 실적 및 구매계획 조사

* 감사원 등 5개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및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공고 실시, 구매실적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정부 포상 추진

- 신제품(NEP) 공공구매 촉진 홍보 지원

* 신제품(NEP)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 및 인증제도 안내를 위한 워크숍, 설명회, 구매상담회, 현장 방문 상담회 등 진행

- (의무구매 현황) '22년 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인증신제품(NEP)의 구매 총액은 2,845억원, 한 개 제품당 평균 구매액은 16.6억원으로 중소기업 신제품의 초기 판로개척에 기여

<연간 의무구매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년	'21년	증감률	'22년	증감률
NEP제품 구매액	2,435	2,438	0.1	2,845	16.7
품목당 구매액*	18.6	15.5	△16.7	16.6	7.7

* 유효인증품목 수 : '19년(122품목) → '20년(131품목) → '21년(157품목) → '22년(170품목)

□ 제도개요

- 국내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조기 발굴 및 인증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상용화 촉진 기반 조성
 - 신기술인증은 기술인증이며, 국내 최초 개발(대체) 기술로써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 요건
 - * (근거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등
- 신기술인증은 현재 우리부를 포함하여 8개 부처에서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총 11개 분야에 대해서 시행 중
 - * 산업부(산업), 국토부(건설, 교통, 물류), 복지부(보건), 농림부(농식품, 농기계), 산림청(목재), 행안부(방재), 환경부(환경), 해수부(해양수산, 물류)

□ 인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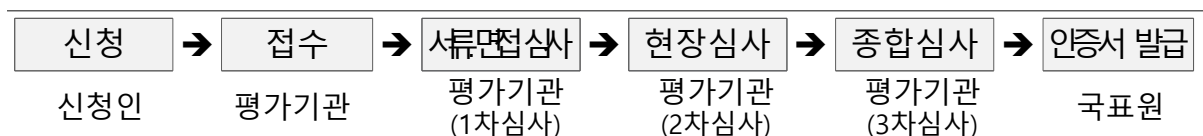
- 인증평가는 3차례 평가(서류→현장→종합)로 구성되며, 획득한 인증은 3년 이내 유효(3년 연장 가능)

<연도별 신기술(NET) 인증 현황>

(단위 : 건)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건수	465	54	425	57	499	86	438	97	533	91

<신기술(NET)인증 평가 절차(120일 이내)>



- * (평가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신제품(NEP)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 수행

□ 주요 지원 제도

- 공공기관 구매 지원(우선구매, 수의계약 등)
- 기술금융 지원 사업, 정부 R&D 사업 신청 시 우대 등

참고 3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 제도개요

- 국내 폐자원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인증 제도로 재활용 산업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순환경경제 실현

- 재활용 원료 사용, 제품 품질의 우수성, 품질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품질의 재활용제품에 GR 인증을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

* 예) 재생신문용지 : 폐지 40%이상 사용, 재활용 플라스틱제품 : 폐플라스틱 80%이상 사용

- (근거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의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재활용촉진법」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대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표지인증, 2. 환경성적표지인증, 3. 우수재활용제품인증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예) GR 인증 인쇄용지(GR M 7002) 국정교과서 납품 등

□ 인증현황

- '97년 대통령주재 “긴급경제장관회의” 에서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를 통산부(현 산업부)로 추진한 후, 국립기술품질원(현 국표원)에 위임

* '97.10월 GR 제1997-01호 대한제지 전자복사용지 등 7건 최초인증

- GR 대상 17분야 361품목* 지정, 266개 업체, 324개 제품 인증('22.12.)

* 폐요업(55종), 폐유리(11종), 폐목재(21종), 폐플라스틱(108종), 폐고무(28종), 폐식용유(8종), 폐산·폐알칼리(8종), 폐유기용제(3종), 폐수처리오니(2종), 폐유(3종), 유기성폐기물(15종), 식물성잔재물(3종), 수산물가공잔재물(4종), 폐전지(6종), 폐섬유(13종), 폐금속(41종), 폐지(32종)

□ 목 적

- (순환경제 실현)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경제 실현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0)」, 「K-순환경제 이행계획(‘21.12)」 등 자원의 재활용 및 재생원료 이용 확대 강조

< K-순환경제이행계획(안) 中 >

■ 자원순환 전과정 관리

- ① (재생원료 이용확대) GR 등 인증기준 마련 및 품질개선
- ② (친환경소비촉진) GR 등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의무화(일정비율이상), 조달 등록시 GR인증 등 재활용 품질기준 반영

- GR 인증을 통해 철강산업 등 탄소 多배출 기업의 ESG 경영 지원
 - * 철강산업 온실가스 배출량('19) : 1.17억톤(국가배출량의 17%, 산업부분의 30% 차지)
- (재자원화) 자원 재활용 기술혁신을 통한 천연자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실현하여 국부유출 방지에 기여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 폐자원에서 금속물질 추출 → 고순도 배터리소재로 재활용
 - * 폐배터리 물질 재활용을 위한 표준물질, 시험방법 개발 및 GR 인증기준 마련 필요
- (해외환경규제 대응) EU,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활용 제품 등을 규제로 활용함에 따라 해외규제 대응
 - (EU) 배터리에 재활용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新지속가능배터리 규제” 발표('20.12.), (미국) 조달물품에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화
 - * ('30) 코발트 12%, 리튬 4%, 니켈 4% → ('35) 코발트 20%, 리튬 10%, 니켈 12%

③ 순환경제 활성화

◇ (필요성) 폐기물 처리 문제의 빈번한 발생, 플라스틱·일회용품 관련 글로벌 규제 확산→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위한 순환경제 전환 필요

- 순환경제를 통해 투입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동시 구현

☞ (추진방향) 제품 지속가능성 제고 및 부문별 폐자원 순환망 구축 등으로 경제성장과 자원사용의 탈동조화(decoupling)

① (생산·공정) 제조 공정의 원료·연료 순환성 강화

- 재생원료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주요 원료의 순환 로드맵 마련
-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강화하여 원자재 절감 추진
 - * (철강) 철스크랩 이용목표 상향(現 50%), (석유화학) 폐플라스틱 사용 확대 등
- 철강,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혁신소재(탄소섬유, 그래핀 등) 개발
 - * 석유계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 CO₂ 포집 플라스틱으로 납사사용 감소
- 제조공정 발생 폐에너지·부산물 등의 기업간 연계 순환이용 촉진

② (사용)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

- 부품확보 등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리받을 권리 강화, 제품 탄소발자국* 및 재활용 용이성 등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 * 제품 생산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③ (재활용) 선별·재활용 시스템의 선진화 및 재제조 산업 활성화

- 폐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 및 도시 광산 활성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 구축
- 노후 산업기계·전력기자재 등 사용 후 제품·부품 성능 복원 및 ICT 융합을 통한 사업화 추진

④ (순환) 부문별 탄소중립 방안 연계 및 자원 모니터링 강화

- (부문별) 탄소중립과 연계한 순환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 (모니터링) 주요 업종에 대한 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 구축

3

자원순환 분야 [총 10건]

1. 신산업 · 신기술 활성화

① 고부가가치 재생 플라스틱 GR 인증 연계

- (기존) 고품질 재생플라스틱에 대한 우수재활용(GR; Good Recycled) 품질 기준을 보증하는 국내 인증이 전무하여 활용 애로*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거나, 국내 재생업체에 해외 인증 획득을 요구

- (개선)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전기전자 부품 · 제품에 대한 GR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신청시 제품별 품질기준 제정*

* 해당 제품의 안전 · 환경기준 등 법적기준도 고려

- ☞ (효과) 재생플라스틱 활용 활성화를 통한 수출기업 비용절감 및 경쟁력 향상 기대

② 복합재질 필름 제품 GR 인증규격 마련

- (기존) 現 GR인증 품질규격은 단일재질 필름류 위주로 복합재질 필름류 재활용제품은 규격 충족이 어려움
- (개선) 복합재질 필름류 재활용 제품 4개에 대해 신규 대상제품 선정 공고(‘20.7.2) 및 품질기준 제정 예정*

* 대상제품선정(선정위원회)→기준제정(기준위원회)→심의 · 확정(심의위원회)

· 기준을 효율적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기존 규격의 시험항목에 대해 해당기업이 변경 제안을 해야 하므로 규격 개정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기업에 안내(‘20.5)

- ☞ (효과) 복합재질 필름류 재활용제품의 GR인증 활성화 및 공공기관에 구매 유인 제공

1 순환 단계별 자원순환 수과정(Life-cycle) 관리 中

① (원료 생산 단계)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원료 사용 촉진

(3) 재생원료 이용 확대

- (품질개선) 재생원료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및 사용제품 인증기준을 마련(GR, 환경표지 등)하고, KS 및 단체표준 규격에 반영('22~)
 - 재생원료 고품질·고부가가치화 및 이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표준화

③ (유통 단계) 친환경 소비 촉진

(2) 재생원료 사용 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기 근거 마련(~'22, 자원재활용법 개정)
 - 지자체 대상 재생원료 사용제품* 일정 비율 이상 구매 의무화('23)
 - *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표지 등 최소한의 품질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조달제도 개선) 조달 등록시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기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조달구매 정보 사전 공개
 - 재활용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해 건설시방서 등에 재활용 품질기준(환경표지·GR인증 등) 반영

2 정책 주체별 순환경제 이행 확산 中

① (소비자) 소비자 권리 강화

(1) 환경표지 등 에코 라벨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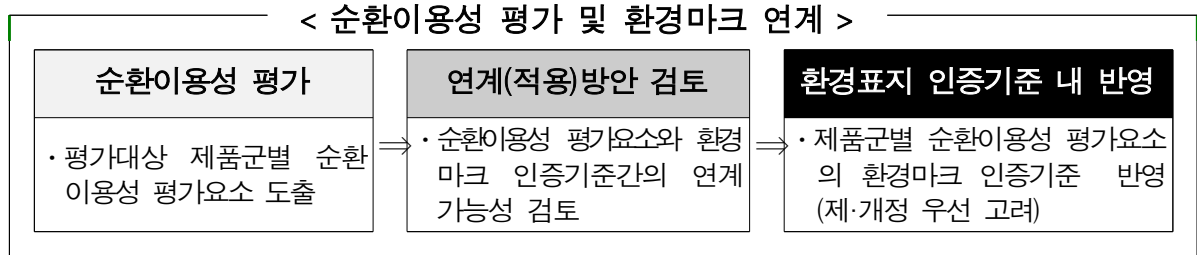
- (환경표지, GR) 인증기준에 자원순환성 및 탄소감축 효과 반영
 - ①인증대상에서 1회용품 제외, ②바이오매스 합성수지의 바이오매스 함량 강화(現 20% → '30년 50% 이상), ③재생원료 사용비율 확대 등

세부 추진과제

① 공공·민간부문의 친환경 소비 확산

- 환경마크 인증 시 제품의 순환이용 용이성에 대한 항목을 강화하는 등 녹색제품 인증제도의 자원순환성 강화

- 주요 제품별 순환이용성 평가요소와 환경마크 인증기준 간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환경표지 인증 기준 제·개정('18~)



- 녹색제품 인증 품목에 재활용제품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이용률 명시, 재활용제품 공공구매 활성화(공공기관 녹색구매비율 49% → 70%)

- * 환경표지 인증기준(총 165개) 내 폐재(34개), 포장재(61개) 및 재활용 용이성(56개) 항목이 포함된 기준을 검토하여 단계별로 개정 추진('19.1 ~)

- 공공부문 공사·조달 관련 구매지침·규격 제·개정 및 조달 가점 부여* 등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해 재활용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

- * 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GR), KS 및 단체표준 인증 등 신인도 가점 부여

- 중소형 매장(나들가게) 등으로 녹색매장 확대지정, 친환경생활지원센터(구 녹색구매지원센터) 확대설치 등 민간부문 녹색제품 유통·소비 다각화

- 신규업체(인테리어 전문점 등) 참여유도를 통한 녹색매장 지속 확대

- * '18년까지 520개소 → '27년 800개소까지 확대 지정

- 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중점사업(녹색제품 교육 및 홍보, 유통매장 모니터링 등) 추진을 통해 지역밀착형 녹색제품 보급 활성화 유도

- * '18년 기준 8개소 운영 중으로 '19년 1개소(전남) 추가 지정 예정

참고 4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 (배경) 4차 산업혁명으로 융합신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나 인증기준이 없거나 기존 인증기준과 맞지 않아 시장출시에 어려움* 발생

* 인증기준 제정에 평균 2~3년의 장시간이 소요되어 적시 시장진출 실패

(사례) 트럭 자동차에 지게차 기능 추가한 융합신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해당되지 않아 국토부 법령개정을 통해 3년 9개월만에 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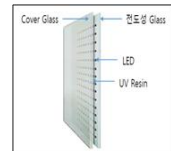
- (특징) 인증획득이 어려운 융합신제품에 신제품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인증과 동일 효력의 적합성인증 부여
- 모든 부처가 활용할 수 있는 쏜부처 제도로 기업의 인증신청 이후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적합성인증 부여
 - 제품의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해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 제품 품질 및 제조공장에 대한 인증기준·심사기준 제정(90일 이내)

◆ LED 투명전광유리

(특징) 기존 접합유리에 LED를 융합한 디스플레이 기능 제품

(애로) 기존 접합유리 관련 인증규격(KSL2004)에 맞지 않아 인증취득 불가

(결과) 접합유리의 물리적 특성(내광성, 내열성 등) 외 소비전력, 색도, 내전압 등 기준을 마련하여 적합성인증 취득



- (현황) 법시행('11.10) 이후, 융합신제품 시장출시에 대한 애로 발굴 357건('14년~'22년) 중 342건의 애로 해소 완료

- 342건 중 79건이 적합성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부여 43건*, 유권해석 등 종결 31건**, 인증 진행 중 5건

* 인증부여 건수(최근 5년) : ('18) 5, ('19) 12, ('20) 7, ('21) 7, ('22) 5건

** 소관부처 협의로 애로 해소 3건, 제품 개선을 위한 신청 철회 21건, 기타 7건 등

제품명: LED 투명전광유리

- **제품특징** 접합유리 사이에 LED를 삽입하여 디스플레이 기능을 융합한 제품
- **애로내용** 일반 접합유리 관련 기존 KS표준으로는 LED가 융합된 접합유리의 광학 특성 및 전기적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없어 KS인증 취득 불가
*KS L 2004(접합유리)
- **애로해소** KS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제품명: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 **제품특징** 고체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여 기존 고분자 연료전지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며 고효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3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 **애로내용**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 시스템 관련 기존 KS표준으로는 고체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전지(SOFC)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없어 KS인증 취득 불가
*KSC 8569(고분자연료전지 시스템)
- **애로해소** KS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적합성 인증 후 KS표준 개정



<div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0px;">사 업 명</div> <div style="font-size: 1.1em;">(2) 국제표준활동지원(3731-302)</div>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제표준활동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표준 활동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박종섭		김효중 연구사
		국제표준협력과	043-870-5350		043-870-531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국제표준활동지원	1,990	3,052	3,232	3,232	180	5.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82	2,402	1,990	-	412	3,052	3,052	3,019	3,052	3,019	-	33	3,232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635	635	269	-	366	656	781	773	781	773	-	7	655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190	190	148	-	42	252	252	239	252	239	-	13	184
· 사실상표준포럼 지원	447	397	396	-	1	534	534	525	534	525	-	9	534
· 국제표준화선도 정책연구	100	70	67	-	3	100	100	97	100	97	-	3	100
· 국제의장간사활동 지원	1,110	1,110	1,110 [857]	-	-	1,510	1,385	1,385 [1,385]	1,385	1,385 [1,385]	-	-	1,159
· 한·아세안 표준협력	-	-	-	-	-	-	-	-	-	-	-	-	600
○ 비목별 분류(합계)	2,482	2,402	1,990	-	412	3,052	3,052	3,019	3,052	3,019	-	33	3,232
· 일반수용비 (210-01)	126	126	68	-	58	145	145	143	145	143	-	2	144.5
· 임차료(210-07)	462	462	154	-	308	462	587	582	587	582	-	5	462
· 국외업무여비 (220-02)	190	190	148	-	42	252	252	239	252	239	-	13	184
· 사업추진비 (240-01)	42	42	42	-	-	44	44	44	44	44	-	-	43.5
· 일반연구비 (260-01)	547	467	463	-	4	634	634	622	634	622	-	12	1,234
· 민간경상보조 (320-01)	1,110	1,110	1,110 [857]	-	-	1,510	1,385	1,385 [1,385]	1,385	1,385 [1,385]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1,159
· 자산취득비 (430-01)	5	5	5	-	-	5	5	5	5	5	-	-	5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2,482	2,402	1,990	-	412	3,052	3,052	3,019	3,052	3,019	-	33	3,232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635	635	269	-	366	656	781	773	781	773	-	7	655	
- 일반수용비 (210-01)	126	126	68	-	58	145	145	143	145	143	-	2	144.5	
- 임차료(210-07)	462	462	154	-	308	462	587	582	587	582	-	5	462	
- 사업추진비 (240-01)	42	42	42	-	-	44	44	44	44	44	-	-	43.5	
- 자산취득비 (430-01)	5	5	5	-	-	5	5	5	5	5	-	-	5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190	190	148	-	42	252	252	239	252	239	-	13	184	
- 국외업무여비 (220-02)	190	190	148	-	42	252	252	239	252	239	-	13	184	
· 사실상표준포럼 지원	447	397	396	-	1	534	534	525	534	525	-	9	534	
- 일반연구비 (260-01)	447	397	396	-	1	534	534	525	534	525	-	9	534	
· 국제표준화선도 정책연구	100	70	67	-	3	100	100	97	100	97	-	3	100	
- 일반연구비 (260-01)	100	70	67	-	3	100	100	97	100	97	-	3	100	
· 국제의장간사활동 지원	1,110	1,110	1,110 [857]	-	-	1,510	1,385	1,385 [1,385]	1,385	1,385 [1,385]	-	-	1,159	
- 민간경상보조 (320-01)	1,110	1,110	1,110 [857]	-	-	1,510	1,385	1,385 [1,385]	1,385	1,385 [1,385]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1,159	
· 한·아세안 표준협력	-	-	-	-	-	-	-	-	-	-	-	-	600	
- 일반연구비 (260-01)	-	-	-	-	-	-	-	-	-	-	-	-	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국제표준화 활동 및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표준 협력·대응 체계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신산업·기술 핵심 분야 표준 선점 등 전략적 표준외교 추진 및 수행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지원)** ISO/IEC 정회원국으로서 국제회의(기술위원회 총회 등) 유치 및 개최, ISO 회장 임기 간 국제표준협력 활동 지원 및 표준 전략 대응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입지 구축을 통해, 국내 기술·제품 국제표준 제안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와 협력 확보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우리 정부대표단의 국제표준화기구·지역협력기구 등 국제기구 회의(기술위원회·포럼·세미나 등) 참가를 통해, 국제표준 제안·협약, 양자/다자 간 표준협력 강화 등 글로벌 표준화 협력·대응 체계 구축
 - **(사실상표준포럼 지원)** 시장의 요구사항 및 기술의 발전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사실상 표준규격*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사실상 표준화기구별 포럼/권소사업 구성, 전문가 인력풀 확보 등의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산업 및 주력사업 관련 핵심기술 국제표준화 선점, 국내기업 대응 역량 제고 등 추진
- * 사실상 표준 : 빠르게 다양화, 융합화, 고도화되는 산업과 기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정 산업 분야의 구성원(개인 혹은 기업·단체)을 중심으로 제정된 민간부문 표준규격
-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대응, D.N.A·BIG3 등의 신산업 핵심 분야 국제표준화 전략 도출 등 국제표준 동향 및 국제표준화 협력 방안 조사·연구
 - **(국제 의장·간사활동 지원)**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임원(의장, 간사, 컨비너 등 직책 수임 인원) 및 민간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통해, 표준화기구 내 영향력 확대 및 표준외교 역량을 확보하여 국제표준 제안·선점, 상임이사국 진출 등 추진
 - **(한-아세안 표준협력)** 한-아세안 공동 표준개발 및 전략적 표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표준을 아세안으로 보급·확산하여, 각 국가 간 상이한 표준으로 발생하는 기술장벽을 사전 해소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아세안시장 진출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표준기본법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참고) < WTO/TBT 협정 >

- WTO TBT 2.6조, 5.5조 WTO 회원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 WTO TBT 11.1조, 11.6조 WTO 회원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② 추진경위

- '95년, WTO 출범에 따라,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세계시장 진출과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02년, 국내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정책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
- ISO·IEC의 국제표준화는 회원국간 합의와 투표(1국 1투표권)로 진행되며, 기술위원회(TC), 분과위원회(SC), 작업반(WG) 회의를 통해 각국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하는 과정(약 3~5년)을 거치므로 국제표준의 제안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 지지·협력도 중요

- '17년도,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산업 경쟁력 증가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추진
- '19.4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19.6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 표준화 선점전략」*을 마련하여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 DNA, Big3 등 핵심분야에서 '23년까지 국제표준 300종 제안, 의장단 60명 확대
- '20.6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을 발표, '20~23년까지 18종을 국제표준 제안 추진
- '21.2월, 우리산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별 저탄소 기술, 시험평가 등에서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표준화 추진
- 반도체, 배터리, 자율차 등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분야의 사실상 표준활동 지원을 통해, 국제표준 선점으로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22.1월, 사실상표준화기구와의 파트너십 형성 및 국내창구 단일화로 사실상 표준화활동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실상표준포럼운영 추진('22.1.1.)
-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외교 역량 강화 기반 마련
 - '22.9월,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당선(임기 '24~'25년도) 및 '23.9월 ISO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국 진출, 이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주도적 참여를 통해 표준 강국으로의 기반 마련
- '23.8월,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를 통한, 핵심·신흥기술분야 미래지향적 표준 파트너십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915 (1,835)	2,050	2,497 (2,482)	3,052	3,23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모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국내 기업 및 소비자(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표준화회의 개최지원

: ('23) 656백만원 → ('24) 655백만원, $\Delta 0.15\%$

- (요구) ISO/IEC 정회원국으로서 국제회의(기술위원회 총회 등) 유치 및 개최, ISO 회장 임기 간 국제표준협력 활동 지원 및 표준 전략 대응 등을 위한 예산 반영 요청
- (산출)
 - 회의장 임차비 : 22회 $\times$ 21백만원(1회 평균 임차비용) = 462백만원
 - * ('23년) 회의수 22회 → ('24) 회의수 22회
 - 통역비, 자료인쇄 등 : 30회 $\times$ 3.5백만원 = 105백만원
 - * ('23년) 회의수 23회 → ('24) 회의수 30회
 - 주요국 표준 기관(ASTM, ASME, DIN) 자료구입 등 : 40백만원
 - 국제표준화회의 지원장비(노트북 등) 구축 : 5백만원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시 업무협력비 : 43.5백만원 (조정 : $\Delta 0.5$ 백만원)

②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 ('23) 252백만원 → ('24) 184백만원, $\Delta 27.0\%$

- (요구) 정부대표단의 표준화기구 수임 역할 수행·지원, 국제표준 제안·협의, 양자/다자 간 표준협력 강화 추진 등 표준화 협력·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 반영 요청
- (산출)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 51명 $\times$ 3.6백만원(1회 출장여비) = 183.6백만원
 - * ('23년) 70명 → ('24) 21명 (조정 : +0.4백만원)

③ 사실상표준포럼 지원

: ('23) 534백만원 → ('24) 534백만원, +0.0%

- (요구) 사실상 표준규격 영향력 증대에 따른, 사실상 표준화기구별 포럼/컨소시엄 구성, 전문가 인력풀 확보 등 대응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 요청
- (산출)
 - 국외업무여비 : 10명 $\times$ 4.3백만원 $\times$ 6포럼 = 258백만원
 - 국내여비 : 10명 $\times$ 0.3백만원 $\times$ 6포럼 = 18백만원
 - 전문가활용 및 위원회 운영비 : 2회 $\times$ 5백만원 $\times$ 6포럼 = 60백만원
 - 회의비 : 5회 $\times$ 5백만원 $\times$ 6포럼 = 150백만원
 - 교육세미나 : 2회 $\times$ 4백만원 $\times$ 6포럼 = 48백만원

④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23) 100백만원 → ('24) 100백만원, +0.0%

- (요구)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대응, D.N.A-BIG3 등의 신산업 핵심 분야 국제표준화 전략 도출 등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국제표준 동향 및 국제표준화 협력 방안 조사·연구
- (산출)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3건 $\times$ 약 33.3백만원 = 100백만원

⑤ 국제 의장·간사활동 지원

: ('23) 1,510백만원 → ('24) 1,159백만원, $\Delta 23.2\%$

- (요구)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임원(의장, 간사, 컨비너 등 직책 수임 인원) 및 민간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하여, 표준화기구 내 영향력 확대 및 표준외교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반영 요청

- (산출)

-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 : 196명×4.2백만원×100% = 823백만원
* ('23년) 국제임원 약196명 → ('24) 국제임원 약 196명 산정
- ISO 회장 출장지원 : 10회×15백만원×100% = 150백만원
- 전문간사 인건비 : 5명×3.1백만원×12월×100% = 186백만원 (조정 : △ 0.2백만원)

⑥ 한-아세안 표준협력

: ('23) 0백만원 → ('24) 600백만원

※ (내역사업 이관) [3736-301]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 [3731-302] 국제표준활동지원

- (요구) 한-아세안 공동 표준개발 및 전략적 표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표준을 아세안으로 보급·확산하여, 기술장벽을 사전 해소 및 수출기업의 원활한 아세안시장 진출을 위한 예산 반영 요청
- (산출) 한-아세안 표준협력 : 4개분야 × 150백만원 = 600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52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45,086천원 가 통역비, 자료인쇄 등(105,000천원) · 30회×3,500천원= 105,000천원 나. 주요국 표준 기관(ASTM, ASME, DIN) 자 료구입 등(40,000천원) · 8개 기관×5,000천원= 40,000천원 다. 조정재원(86천원)	3,232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44,500천원 가 통역비, 자료인쇄 등(105,000천원) · 30회×3,500천원= 105,000천원 나. 주요국 표준 기관(ASTM, ASME, DIN) 자 료구입 등(40,000천원) · 8개 기관×5,000천원= 40,000천원 다. 조정재원(△500천원)
	○ 임차료(210-07) : 462,0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462,000천원)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21,000천원×22회= 462,000천원		○ 임차료(210-07) : 462,0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462,000천원)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21,000천원×22회= 462,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52,2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및 국제기구 표준협력(252,200천원) · 3,540천원×71명= 251,340천원 나. 조정재원(+86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84,0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및 국제기구 표준협력(184,000천원) · 3,600천원×51명= 183,600천원 나. 조정재원(+4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3,714천원 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관계자와 간담회(14,500천원) · 기념품 구입 등 : 30천원×200개= 6,000천원 · 오·만찬비 등 : 85천원×100명= 8,500천원 나. 국제표준화 참가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14,500천원) · 기념품 구입 등 : 30천원×200개= 6,000천원 · 오·만찬비 등 : 85천원×100명= 8,500천원 다. 국제표준화회의 국내개최 관련 간담회 개최(14,000천원) · 오·만찬비 50천원×100명×2회= 10,000천원 · 기념품 40천원×100명= 4,000천원 라. 조정재원(71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3,500천원 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관계자와 간담회(14,500천원) · 기념품 구입 등 : 30천원×200개= 6,000천원 · 오·만찬비 등 : 85천원×100명= 8,500천원 나. 국제표준화 참가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14,500천원) · 기념품 구입 등 : 30천원×200개= 6,000천원 · 오·만찬비 등 : 85천원×100명= 8,500천원 다. 국제표준화회의 국내개최 관련 간담회 개최(14,500천원) · 오·만찬비 50천원×100명×2회= 10,000천원 · 기념품 45천원×100명= 4,5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634,000천원 가.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99,900천원) · 3건 × 33,300천원= 99,900천원 나. 사실상표준포럼 지원(534,000천원) · 6포럼 × 89,000천원= 534,000천원 다. 조정재원 (1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234,000천원 가.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100,000천원) · 3건 × 33,000천원= 100,000천원 나. 사실상표준포럼 지원(534,000천원) · 6포럼 × 89,000천원= 534,000천원 다. 한-아세안 표준협력(600,000천원) · 4개 분야 × 150,000천원= 600,000천원 라. 조정재원 (100천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p>○ 민간경상보조(320-01) : 1,510,000천원</p> <p>가.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823,2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196명×4.2백만원= 823.2백만원 <p>나. 민간전문가 출장지원(216,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60명×3.6백만원= 216백만원 <p>다. 전문간사 인건비(9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2.5백만원×3명×12월= 90백만원 <p>라. 의장간사협의회 및 워크숍 운영(11,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11백만원×1회= 11백만원 <p>마. ISO회장 출장지원(15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10회×15백만원= 150백만원 <p>바. ISO전문간사 인건비(96,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2명×4백만원×12개월= 96백만원 <p>사. ISO사무실 임차료(124,8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12개월×10.4백만원월= 124백만원 <p>자. 조정재원 (△1,000천원)</p> <p>○ 자산취득비(430-01) : 5,000천원</p> <p>가. 국제표준화회의 지원장비 구축(5,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장비 구축 : 5백만원×1회= 5백만		<p>○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159,000천원</p> <p>가.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823,2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196명×4.2백만원= 823.2백만원 <p>나. 전문간사 인건비(111,6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5명×3.1백만원×12월= 186백만원 <p>다. ISO회장 출장지원(15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10회×15백만원= 150백만원 <p>라. 조정재원 (△200천원)</p> <p>○ 자산취득비(430-01) : 5,000천원</p> <p>가. 국제표준화회의 지원장비 구축(5,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장비 구축 : 5백만원×1회 = 5백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기술위원회 P멤버 가입수 (단위 : 건, 누적)	목표	-	-	735	738	740	국제회의 참석 예산 증감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목표설정	$\sum B$ (B: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P멤버 가입수)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 통계자료
	실적	718	729	736	742	-			
	달성도	-	-	100	100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건수 (단위 : 건)	목표	105	131	-	-	-	-	-	-
	실적	6	315	-	-	-			
	달성도	5.7	240.5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79건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3.6%(556개), IEC 68.9%(151개)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0,884건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80건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1.4%(573개), IEC 73.6%(156개)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2,160건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81건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1.4%(578개), IEC 73.8%(158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1,296건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82건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0.5%(582개), IEC 73.7%(160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0,796건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국제표준화활동 증대에 따른 표준역량 제고 기대

○ ISO 발표, 23년도 대한민국 국제표준화활동 순위*는 세계 8위

* ①간사수임(20%), ②정회원(P멤버) 가입률(20%), ③분담금(60%)으로 책정

- 간사수임 10위, 정회원(P멤버) 가입률 8위, 분담금 납부 10위

○ 국제표준화기구 회장 임기 시작, 정책이사회 임원 3명 신규선출 및 2명 연임

* (신규) 김세종 원장(ISO Council), 이정준 고문(IEC IB), 김태균 본부장(IEC MSB)
(연임) 권대현 팀장(IEC SMB), 장경진 센터장(IEC BAC)

→ 국제표준 무대에서 표준리더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여,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및 표준외교 역량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가기술표준원 직접수행】

- ① 국가기술표준원 내, 국제표준화 활동 수요조사(전년 11월)
- ②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계획 확정 및 각과 통보(12월)
- ③ 연중 사업시행 및 사업수행결과 분석 및 평가 (1월-12월)

【연구용역 및 민간위탁사업】

- ① 사업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1월)
- ② 사업계획 심의확정(1-2월)
- ③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2-3월)
- ⑤ 사업비 교부 및 사업수행(연중)
- ④ 사업 결과 평가 및 정산 처리(12월-다음해 2월)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2,497	3,697	7,294	8,081	9,040	
'23~'27		2,584	5,227	7,644	8,291	9,12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지적사항 반드시 업데이트
-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 보고서명·감사명 등 출처 기재
 - * 지적사항 말미에 괄호()로 기관명 및 출처 표시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 재정사업 자율평가 : '22년도, “보통” (‘20년 우수, 21년 보통)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우리나라는 '15년 「ISO 서울총회」, '18년 「IEC 부산총회」, 20년~22년 「한-미, 한-독 표준포럼」의 성공적 개최 및 '19년, '20년 ISO 이사국 선임, '22년 우리나라 최초 ISO 차기 회장 당선(9월)과 '22년 IEC 시장전략이사회(MSB) 이사,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SEG) 의장 선임, ISO 기술관리이사회 이사국 재진출, '23년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 등을 계기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 역량을 인정받고 있음
- 탄소중립 표준화, D.N.A·BIG3 등의 신산업·신기술 핵심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중소·대기업)들이 공적표준화기구(ISO, IEC 등) 등에서 국제표준화 무대에 전면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에서 국내 전문가/임원 진출 확대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주도를 위한 신규 국제표준 제안 확대 추진
 -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우리나라 임원 수
'19년 216 → '20년 237명 → '21년 243명 → '22년 250명 → '23년 263명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및 표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ISO 및 IEC 상임 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
 - * 現 ISO/IEC 상임이사국(6개국) :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전략적 표준외교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 증액 요청

- 美·中·EU 등 주요국들, 미래 핵심기술 주도 및 新시장 선점·확보를 위해 국가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여 표준개발역량 집중
 - * (美) 「핵심 신기술에 대한 미국 국가표준전략」(백악관, '23.5월)
 - (中) 「신산업 표준화 및 시범사업 실시방안」(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 '23.8월), 「국가표준화발전계획」(국무원, '21.10월)
 - (EU) 「EU 표준화 전략」(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2.2월)
 - (日) 「일본형 표준 가속화 모델」(경산업, '23.6월), 「통합 혁신(이노베이션) 전략 2023」(내각부, '23.6월)
 -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도구로 표준을 활용하면서 적극적 통상 정책과 표준화 활동 강화
 - * 美-EU는 통상·기술위원회(TTC)를 출범하고 기술 표준을 포함한 협력 강화('21.10월)
 - * 中은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수임('1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회장 수임('20)
 - 우리나라도 신산업 핵심 기술분야 및 탄소중립 표준화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진행 중임
 - (표준 선점)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 기구(IEC, ISO) 및 사실상(de facto) 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 신규 제안
 - *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 250건 제안(~'27년)
 - * 첨단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분야는 IEC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 의장 수임('22.6월)을 통해 우리 산업기술 반영 및 국제표준화 로드맵 개발 등 추진
 - (리더십 강화)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화 정책·전략을 리드하는 ISO 회장직에 한국 기업인 진출('22.9월 ISO 회장 당선)
 - * 그간 국제표준화 성과(ISO 국가별 순위 8위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3대 국제표준 개발 기구(ISO, IEC, ITU)의 회장직에 우리나라는 진출 경험 전무
 - (국제 협력) 美·獨 등 기술 강국과 양자기술, AI, 자율차, 반도체 등 분야에서 표준 공동개발 및 정보교류 등 전략적 국제 협력 추진
 - * '한-독 표준협력대화('22.11월), 한-미 표준협력대화('23.8월) 등 정례 회의체 운영
- ⇒ 자국 기업·제품·기술의 표준 선점을 위해 각국의 표준 전략이 점차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품·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국내 기업에 용이한 표준 제안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표준활동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1,915	△80	1,835	-	-	-	1,835	887	48.3	48.3	-	948
2021	2,050	-	2,050	-	-	-	2,050	1,001	48.8	48.8	-	1,049
2022	2,497	△15	2,482	-	△80	-	2,402	1,990	80.1	82.8	-	412
2023	3,052	-	3,052	-	- (125)	-	3,052	3,019	98.9	98.9	-	3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900	900	500	500	-	500	342	-	-	38.0
2021	900	900	500	500	-	500	483	-	-	53.6
2022	1,110	1,110	1,110	1,110	-	1,110	857	-	-	77.2
2023. 12월기준	1,510	1,510	1,385	1,385	-	1,385	1,385	-	-	91.7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액 948백만원(집행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일반수용비(210-01) 잔액(31백만원), 임차료(210-07) 잔액(210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298백만원), 민간경상보조(320-01) 잔액 400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계약 차액(9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국제표준화회의가 '20. 2월부터 연기 및 3월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 확산방지 정책에 따른 국내개최 국제표준화 회의 취소로 미집행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액 1,049백만원(집행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일반수용비(210-01) 잔액(22백만원), 임차료(210-07) 잔액(237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391백만원), 민간경상보조(320-01) 잔액 400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국제표준화회의가 취소 또는 비대면 개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 확산방지 정책에 따른 국내개최 국제표준화 회의 취소로 미집행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액 412백만원(집행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일반수용비(210-01) 잔액(58백만원), 임차료(210-07) 잔액(308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42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잔액 4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국제표준화회의가 취소 또는 비대면 개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 확산방지 정책에 따른 국내개최 국제표준화 회의 취소로 미집행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액 33백만원(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210-01) 잔액(2백만원), 임차료(210-07) 잔액(5백만원),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 (13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낙찰차액 및 잔액 12백만원 ※ 집행 잔액 및 계약 낙찰 차액 33백만원 발생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2.28.)	국제표준화활동지원 (3731-302)	민간경상보조 320-01	124.8	국제표준화활동지원 (3731-302)	임차료 210-07	ISO 전략대응팀 사무소 계약(집행) 주체가 한국표준 협회에서 산업부(국표원) 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비목 변경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붙임 1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조직 현황

□ 기구별 현황

기구명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
설립연도	1947	1906	1865
담당분야	전기전자(IEC), 전파통신(ITU)을 제외한 모든 기술 분야	전기전자 기술 분야	전파통신 기술 분야
지위	비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회원국	165개국 (정회원 122, 통신회원 39, 구독회원 4)	173개국 (정회원 62, 준회원 27, 개도국회원 84)	193개 회원국 (약 900개 민간회원, 학계전문가 20,000여명)
표준 수	23,574종	10,992종	6,981종
위원회 수	TC: 254개 SC: 501개 WG: 2,832개	TC: 110개 SC: 101개 WG: 1565개	ITU-R, SG: 6개 ITU-T, SG: 11개 ITU-D, SG: 2개

□ 국제표준화 필요성



세계시장 선점

무역 및 수출의존도가 높은 (GDP 대비 무역비율 104.2%)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을 통해 세계 시장 선점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무역기술장벽 대응

WTO/TBT 협정 제2조4항에 따라 수출 대상국은 국제표준을 자국 기술규정으로 채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기술의 표준 선점 실패 시 수출경쟁력 저하 불가피



환경규제 대응

우리나라 무역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은 각종 환경규제를 시행하여 우리 산업에 큰 부담, 따라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이러한 규제에 적기 대응하는 표준개발 필요

□ ISO/IEC 표준개발위원회 구조 및 의장·간사·컨비너 역할



TC (기술위원회)

SC (분과위원회)

WG (작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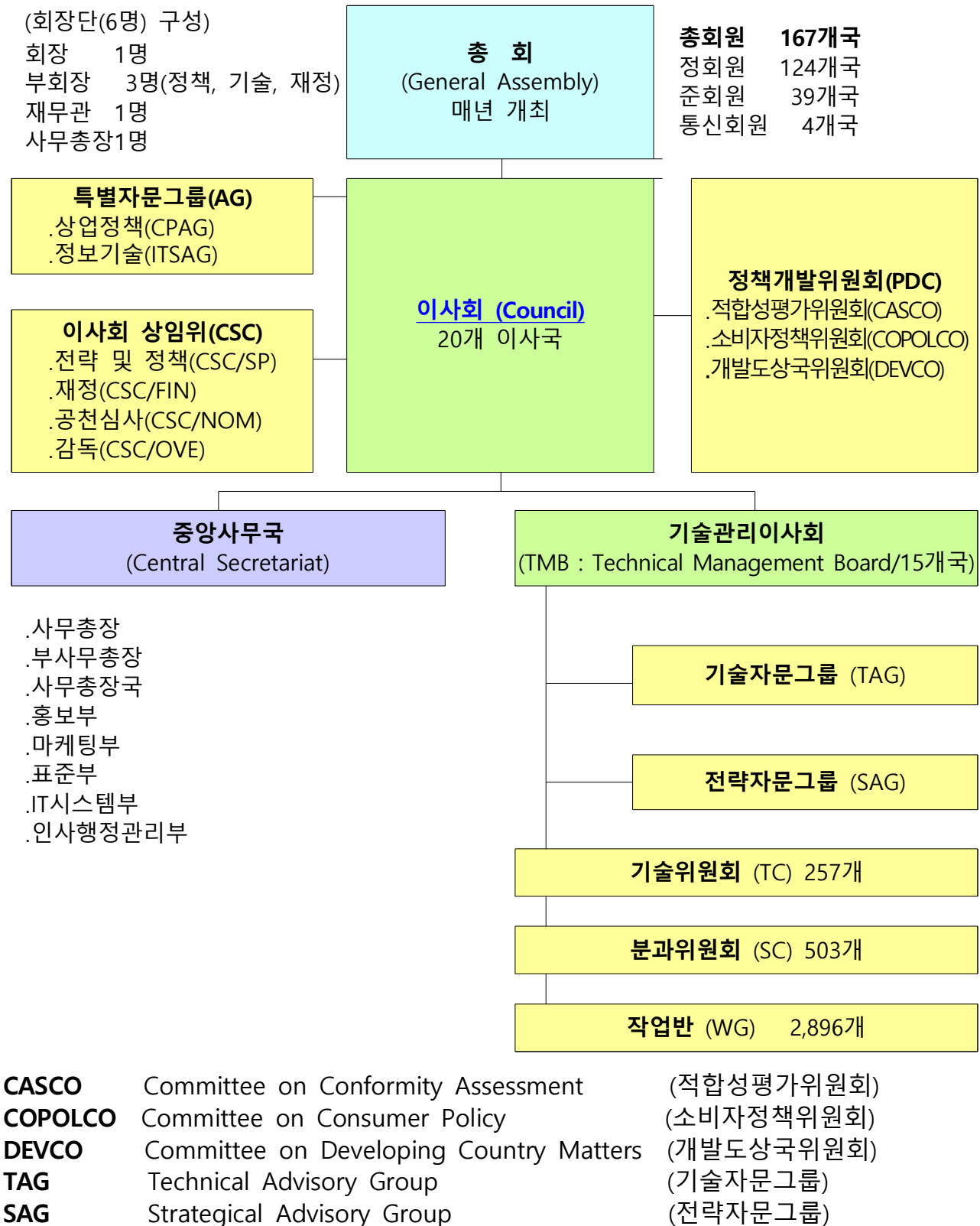
STRUCTURE

ISO/IEC는 기술 분야별로 TC를 설립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TC는 기술 분야를 세분화하여, 다수의 SC를 둘 수 있으며 표준안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기술 분야를 더욱 세분화 하여, 다수의 WG 운영 가능

OFFICERS

의장은 위원회 운영과 표준개발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간사는 위원회 내 개발하는 모든 표준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책임. 컨비너는 WG의 장으로서, 국제표준제안 및 개발을 주도하고 참여

□ ISO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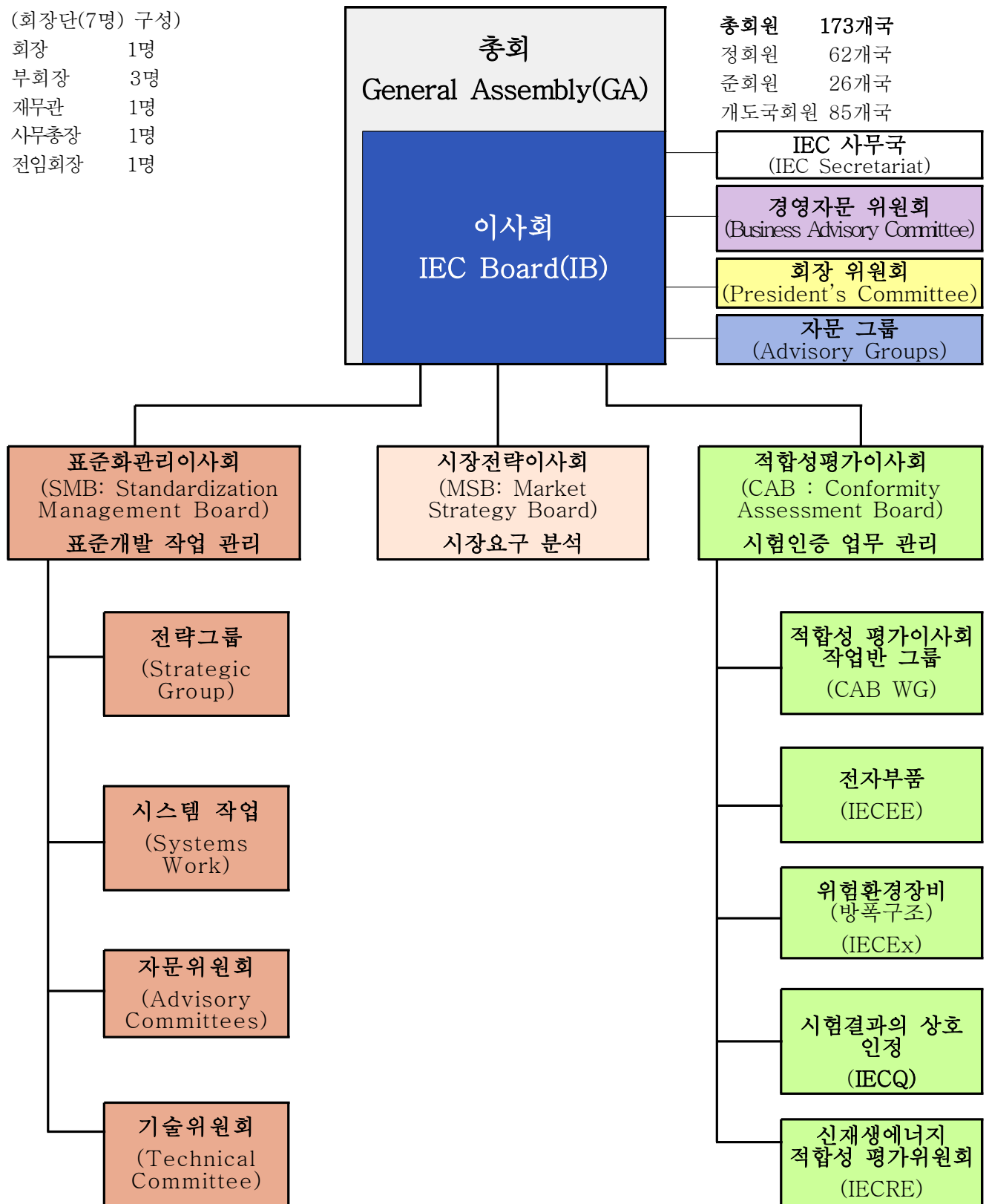


★ ISO 중앙사무국 직원 현황 : 28개국 162명

□ IEC 조직도

(회장단(7명) 구성)

회장 1명
부회장 3명
재무관 1명
사무총장 1명
전임회장 1명



□ 사실상 표준화 동향

-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반도체, 미래차 등 분야*에서는 국제표준보다 민간 표준(사실상 표준)을 우선 개발하여 시장 지배

* SAE(미래차), ASTM(첨단소재), 3GPP(통신), SEMI (반도체), IEEE(전자) 등

< 사실상 표준화 주요 분야 >

- ▶ (SAE : ) 자율차 레벨표준(J3016) 등을 개발 → ISO PAS 22736으로 수용
- ▶ (ASTM : ) ISO와 공동으로 3D프린팅 표준(ISO/ASTM 52900) 등을 개발
- ▶ (3GPP : ) ITU에서 정한 비전에 따라 5G·IMT 등의 국제표준을 개발

< 미국 사실상 표준화 정책 >

- ▶ 미국 사실상 표준화 활동은 정부에서 지원, 민간 주도 표준화
- 국가기술이전법(NTTAA)을 통해 정부가 민간 표준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국가표준 개발보다 민간표준을 인용·활용토록 권고

구분	ASTM (재료시험협회)	ASME (기계기술자협회)	NFPA (화재방재협회)	SAE (자동차기술자협회)	UL (보험연구소)	IEEE (전기전자기술자협회)
표준수	12,000종	600종	300종	10,000종	1,500종	1,300종

□ 사실상 표준 협력 강화

-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이 시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중심의 사실상 표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산업계 중심의 사실상 표준화 활동 대응을 위해 산업 분야별 포럼 구성 및 운영 활성화 필요

- ▶ ASTM, IEEE, SEMI 등 주요 표준화기구 대응(산업계 중심 포럼 운영 등)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참고 3

국제표준화 관련 현황('23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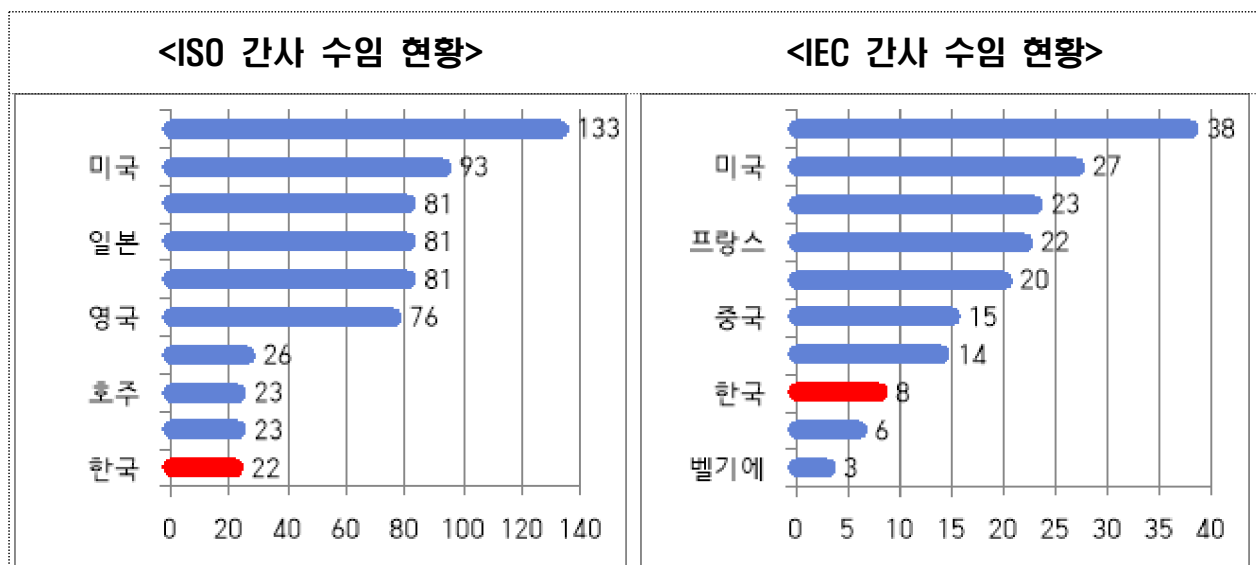
○ ISO/IEC 기술위원회 국제간사 및 의장 수입현황

구분(명)	국제의장	국제간사	컨비너	계
ISO	18	22	136	176
IEC	7	8	72	87
계	25	30	208	263

○ ISO/IEC 기술위원회 가입 현황('22년 말)

구분	기술위원회 수			우리나라 가입									P 멤버 가입율
				P 멤버			O 멤버			계			
	계	TC	SC	계	TC	SC	계	TC	SC	계	TC	SC	
ISO	825	268	557	582	197	385	148	54	94	730	251	479	70.5%
IEC	217	115	102	160	92	68	24	19	5	184	111	73	73.7%
합계	1,042	383	659	742	289	453	172	73	99	914	362	552	71.2%

○ 간사국 수입 순위 : **ISO 10위, IEC 8위** ('23년 기준 해당기구 집계순)



사 업 명
(3)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37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3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개도국표준 체계보급지원 (ODA)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국제표준협력과	박종섭		장준규
	사업시행주체	한국표준협회	표준협력센터	조서영	02-6240-4593
		한국건설생활환경 경시험연구원	에너지본부 에너지소재센터	박재성	043-718-9010
		한국건설생활환경 경시험연구원	에너지본부 공기환경센터	이경수	043-753-318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안(B)		
개도국표준체계보 급지원(ODA)	1,382	2,036	2,890	2,890	854	41.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43	2,143	1,382 [1,382]	-	761	2,036	2,036	2,036 [2,036]	2,036	2,036 [2,036]	-	-	2,890	
·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 지원	385	385	-	-	385	-	-	-	-	-	-	-	-	
·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터 설립	376	376	-	-	376	-	-	-	-	-	-	-	-	
·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 효율 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570	570	570 [570]	-	-	716	716	716 [716]	716	716 [716]	-	-	760	
· 라오스 국가표준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	-	-	-	-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	700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	-	-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630	
· 표준체계전수협력	612	612	612 [612]	-	-	520	520	520 [520]	520	520 [520]	-	-	800	
· 협력타당성조사	200	200	200 [200]	-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2,143	2,143	1,382 [1,382]	-	761	2,036	2,036	2,036 [2,036]	2,036	2,036 [2,036]	-	-	2,89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143	2,143	1,382 [1,382]	-	761	2,036	2,036	2,036 [2,036]	2,036	2,036 [2,036]	-	-	2,890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 시험 센터구축 지원	385	385	-	-	385	-	-	-	-	-	-	-	-
- 민간경 상 보 조 (320-01)	385	385	-	-	385	-	-	-	-	-	-	-	-
·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 센터 설립	376	376	-	-	376	-	-	-	-	-	-	-	-
- 민간경 상 보 조 (320-01)	376	376	-	-	376	-	-	-	-	-	-	-	-
· 우즈베키스탄 에 어컨 에너지효 율인증 국제공 인시험소 설립 지원	570	570	570 [570]	-	-	716	716	716 [716]	716	716 [716]	-	-	760
- 민간경 상 보 조 (320-01)	570	570	570 [570]	-	-	716	716	716 [716]	716	716 [716]	-	-	760
· 라오스 국가표준 역량 강화를 위 한 시험·검사 인 프라 구축 지원	-	-	-	-	-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	700
- 민간경 상 보 조 (320-01)	-	-	-	-	-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	700
· 인도네시아 미세 먼지 대응제품 시험인증 기반구 축 사업	-	-	-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630
- 민간경 상 보 조 (320-01)	-	-	-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630
· 표준체계전수협력	612	612	612 [612]	-	-	520	520	520 [520]	520	520 [520]	-	-	800
- 민간경 상 보 조 (320-01)	612	612	612 [612]	-	-	520	520	520 [520]	520	520 [520]	-	-	800
· 협력타당성조사	200	200	200 [200]	-	-	-	-	-	-	-	-	-	-
- 민간경 상 보 조 (320-01)	200	200	200 [200]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국가 차원의 에어컨 에너지효율등급제도 구축을 통한 제도 활성화 및 내수시장 안정화 촉진을 원하는 우즈베크를 대상으로 에어컨 국제공인시험소 및 에너지효율 등급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우즈베크 에너지효율등급제도의 활성화 및 우리 기업의 우즈베크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및 수출 증대 지원
- (라오스 국가표준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라오스 전기용품 제품안전제도와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인력 및 조직 역량 강화와 시험검사 인프라 지원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미세먼지 대응 제품(공기청정기, 에어필터, 마스크)의 시험·인증 체계 수립, 시험실무자 및 품질담당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표준체계 전수협력)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자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표준, 인증제도, 법정계량 등의 표준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개도국의 기술규제를 완화 또는 사전대응 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촉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② 추진경위

- WTO 출범 이후,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활동 강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2년부터 추진된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기적으로 개도국과 협력 사업을 진행
- 하지만 최근 개도국은 국가필수인프라의 표준인증체계의 부재로 불량제품 유통 등으로 인한 자국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무역활성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표준 체계 확립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해외사업 확대 추진
 - * 우리 기업들도 개도국이 표준화, 적합성평가 등의 표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 직면
- 또한, 동 사업은 2010년 12월 21일 발표한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공익사업으로, '11년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승인되었고, 기재부의 요구의 따라 2012년부터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추진
 - * OECD 개발원조위원회 신규 공여국이자,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 수입국으로써, 개도국에 한국의 선진화된 표준체계를 보급하는 공적원조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559	1,453	2,143	2,036	2,890

- 기타: 민간보조(보조율 100%), 보조사업자 공모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공모)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정부기관, 우리 수출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 효율 국제공 인인증 시험소 설 립 지원	보조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 원	76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라오스 국가 표준역량 강 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보조	한국표준 협회	700	100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 응제품 시험 인증 기반구 축 사업	보조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 원	630	100	
표준체계 전 수협력	보조	공모	800	100	

3) '2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계속)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 ('23) 716
→ ('24확정) 760백만원, +5.8%

- (요구) 시험장비 및 시스템 비용 일부 증가, 운영기술 이전을 위한 국내 전문가
국외파견 증가 등 감안, '23년 대비 +5.8% 증액 요구

- (산출) 760백만원(3차연도 사업비)

*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 컨설팅	: ('23) 4백만	→ ('24) 10백만	+6백만
*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 ('23) 7백만	→ ('24) 6.1백만	-0.9백만
* 시험장비 및 시스템 구축	: ('23) 595백만	→ ('24) 607.5백만	+12.5백만
* 국제공인시험소 컨설팅	: ('23) 3백만	→ ('24) 15백만	+12백만
*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 ('23) 107백만	→ ('24) 121.4백만	+14.4백만

② (계속)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 ('23) 500
→ ('24확정) 700백만원, +40%

- (요구) 024년도부터 정량인증 L-마크 뿐만 아니라 제품안전 Q-마크 기초
검사 장비 구축 진행 감안, '23년 대비 +40% 증액 요구

- (산출) 700백만원(2차연도 사업비)

* 관련제도 정책컨설팅	: ('23) 100백만	→ ('24) 50백만	-50백만
* 정량인증제도 검사교정장비 지원	: ('23) 230백만	→ ('24) 200백만	-30백만
* 제품안전 공산품 검사장비 지원	: ('23) 0백만	→ ('24) 200백만	+200백만
* 전문인력 양성교육	: ('23) 80백만	→ ('24) 100백만	+20백만
* 사업운영비, 제도홍보지원 등	: ('23) 90백만	→ ('24) 150백만	+60백만

③ (계속)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 ('23) 300→ ('24
확정) 630백만원, +110%

- (요구) 본 사업의 핵심 목표인 한국형 시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차연도
부터 시험 인프라 기자재 구축(구입, 배송, 설치 등) 시작 감안, '23년 대비
+110% 증액 요구

- (산출) 630백만원(2차연도 사업비)

* 국가표준 제개정 컨설팅	: ('23) 65백만	→ ('24) 65백만	-
*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 ('23) 45백만	→ ('24) 45백만	-
* 한국형 시험 인프라 구축	: ('23) 100백만	→ ('24) 430백만	+330백만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23) 90백만	→ ('24) 90백만	-

④ (계속) 표준체계 전수협력 : ('23) 520 → ('24확정) 800백만원, +65.0%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명	구분	'24예산	산출내역
르완다 섬유, 가죽분야 시험, 검사 역량강화 지원	신규	200	○ 국제공인시험능력 구축 지원 : 40 ○ 시험역량강화 : 77 ○ 기술교류회 개최: 20 ○ 사업운영비 : 63
우즈베키스탄 섬유분야 표준, 인증 역량강화 지원	신규	200	○ 표준인증제도 현황 조사 및 교육 자료 제작 등 : 20 ○ 전문가 파견 교육 및 현지 세미나 : 70 ○ 초청 교육 : 50 ○ 사업운영비 등 : 60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관리시스템 역량강화 지원	신규	150	○ 교육자료 제작 등 : 26 ○ 전문가 파견 교육 : 48 ○ 초청교육 : 46 ○ 사업운영비 등 : 30
베트남 태양광제품 시험인증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계속	250	○ 시험인증시스템 구축 지원 컨설팅 : 40 ○ 표준화 역량강화 전문가 파견 교육 : 90 ○ 초청교육 : 40 ○ 사업운영비 : 80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36,000천원	<p>○ 민간경상보조(320-01) : 2,036,000천원</p> <p>1.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 시험소 설립 지원(716,000천원) 가.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 컨설팅 : 4,000천원 나.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 7,000천원 다. 시험장비 및 시스템 구축 : 595,000천원 라. 국제공인시험소 컨설팅 : 3,000천원 마.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 107,000천원</p> <p>2.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500,000천원) 가. 관련제도 정책컨설팅 : 100,000천원 나. 정량인증제도 검사교정장비 지원 : 230,000천원 다. 제품안전 공산품 검사장비 지원 : 0 라. 전문인력 양성교육 : 80,000천원 마. 사업운영비, 제도 홍보지원 등 : 90,000천원</p> <p>3.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300,000천원) 가. 국가표준 제개정 컨설팅 : 65,000천원 나.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 45,000천원 다. 한국형 시험인프라 구축 : 100,000천원 라.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 90,000천원</p> <p>4. 표준체계전수협력(520,000천원) 가. 에티오피아 섬유/가죽분야 표준/적합성평가 선진화 지원 : 150,000천원 나. 인도네시아 법정계량 역량강화 지원 : 120,000천원 다. 베트남 태양광제품 시험인증시스템 구축지원 : 250,000천원</p>	2,890,000천원	<p>○ 민간경상보조(320-01) : 2,890,000천원</p> <p>1.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 시험소 설립지원(760,000천원) 가.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 컨설팅 : 10,000천원 나.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 6,100천원 다. 시험장비 및 시스템 구축 : 607,500천원 라. 국제공인시험소 컨설팅 : 15,000천원 마.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 121,400천원</p> <p>2.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700,000천원) 가. 관련제도 정책컨설팅 : 50,000천원 나. 정량인증제도 검사교정장비 지원 : 200,000천원 다. 제품안전 공산품 검사장비 지원 : 200,000천원 라. 전문인력 양성교육 : 100,000천원 마. 사업운영비, 제도 홍보지원 등 : 150,000천원</p> <p>3.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630,000천원) 가. 국가표준 제개정 컨설팅 : 65,000천원 나.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 45,000천원 다. 한국형 시험인프라 구축 : 430,000천원 라.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 90,000천원</p> <p>4. 표준체계전수협력(800,000천원) 가. 르완다 섬유, 가죽분야 시험, 검사 역량강화 지원 : 200,000천원 나. 우즈베키스탄 섬유분야 표준, 인증 역량강화 지원 : 200,000천원 다.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관리시스템 역량강화 지원 : 150,000천원 라. 베트남 태양광제품 시험인증시스템 구축지원 : 250,000천원</p>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프로젝트 지표	상대국 표준체계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달성률 (단위: %)						100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연도 ODA시행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사업 세부계획을 고려하여 산출	프로젝트 사업 당해연도 시행계획(인프라, 시험장비 구축) 대비 달성률	해당국 기관자료
							-			
							-			
공동 지표	상대국 표준체계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단위: 건)						10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연도 ODA시행계획 에 따른 협력대상 국가 수를 감안하여 산출	ODA 협력국의 관리자·실무자 대상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건수	해당국 기관자료
							-			
							-			
	국내기업 상대국 진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단위: 건)						3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연도 ODA시행계획 에 따른 협력대상 국가 수를 감안하여 산출	ODA 시행계획에 따른 국내기업 상대국 진출 지원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 프로그램 운영 건수	해당국 기관자료
							-			
							-			
	상대국 표준체계 제도도입 준비 및 완료 (단위: 건)	목표	7	7	7	7	7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연도 ODA시행계획 에 따른 협력대상 국가 수를 감안하여 산출	ODA 협력국의 표준제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및 마스터플랜 수립·제도 도입 건수	해당국 기관자료
		실적	8	7	7	7	-			
		달성도	105	100	100	100	-			
	성과평가 종합점수 (단위: 점)	목표	11	11	13	13	13	종합점수가 '성공적' 등급으로 평가되는 13점을 기준	해당연도 성과분석 진행한 국가의 종합점수 평균	성과분석 및 수원국 만족도 조사 보고서 등 「ODA 평가등급제 시행지침」 기준
		실적	14.2	14.6	16.2	17.0	-			
		달성도	129	132	125	13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p>▶ (표준체계 전수협력) 4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p> <p>- (페루) 한국의 비대면 교육 및 관련 표준화 경험 공유(국제세미나 참가 1회), 세탁기·냉장고 등 에너지효율 시험규격에 따른 시험방법 교육(영상교재), 표준과 R&D 연계 정책운용 경험 및 IWA 30 공유(실시간 온라인 트레이닝 1회), 적합성평가 주요 국제표준 교육(실시간 온라인 트레이닝 2회)</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르기스스탄) 한국 및 유럽 등 선진국의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영 상황을 비교 소개, EAEU의 공통 기술규정에 따른 섬유제품 시험방법 교육(영상교재), 현지 한국업체를 통한 섬유제품 시장조사 실시 - (에티오피아) 국제기준(ISO)에 따른 섬유, 가죽제품의 시험방법 교육(영상교재, 숙련도 비교), 제품안전관리제도 홍보용 자료 제작(모션그래픽) - (미얀마) 미얀마 섬유의류 분야 우선 제정 표준 분야 목록 전달, 제품안전 정책홍보 등 제품안전 관리의 필요성 인식 제고 교육(영상교재) <p>▶(협력타당성조사)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등 4개국과 신규협력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시험소 설립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 (베트남) 태양광모듈 표준체계 전수협력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 (인도네시아) FRP 선박건조기술 표준화 지원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 (에콰도르) 에너지효율라벨링 제도에 대한 표준체계지원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p>▶(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시험센터 구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인시험능력 구축) 인정기구 선정, 품질문서 개발(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장비 검교정(11종 21세트) 등 - (시험장비 지원) 구축 장비 선정, 섬유 시험장비 및 환경설비 구축 등 - (섬유기술센터 운영) 미얀마 섬유·의류분야 현지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2021	<p>▶(표준체계 전수협력) 4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르기스스탄) EAEU 제품안전제도 및 기술규정 정책 현황조사, 제품안전관리제도 구축 지원(홍보물, 영상교재), 시장감시 시뮬레이션(안전성조사보고서, 영상교재), 장비도입현황 및 시험능력 모니터링, 섬유제품 시험·분석 능력 구축 지원(영상교재) 등 -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시험기관(ECAE)의 시험 역량구축을 위한 기술 전수, 제품안전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영상교재), 섬유·가죽 환경규제 대응 적합성 평가 센터 구축을 위한 전방위적 컨설팅, 양국 정부·수행기관 간 공동 세미나 개최 등 - (미얀마) 섬유·의류 분야 미얀마 국가표준개발 지원, 카테고리 별로 표준설명서(General Contents of Standard)의 개발, 섬유제품 표시·안전기준 개발 지원(영상교재, 해설서 제작), 한국형 품질관리 시스템 전수(영상교재, 시험컨설팅 보고서) 등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무역부와 법정계량 역량강화 사업전반의 협력계획 수립, 인도네시아 법정계량 현황조사(설문조사), 계량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온라인강의), 법정계량분야 이해관계자 교육(콘텐츠 제작) 등 <p>▶(협력타당성조사)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페루 등 3개국과 신규협력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테말라) 에너지효율 표준체계 지원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시험인증 지원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 (페루) 인체치수 조사체계 구축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2022	<p>▶(표준체계 전수협력) 4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르기스스탄) 법·제도 정착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시장조사 시뮬레이션 실시 및 결과 피드백, 섬유제품 시험·분석 능력 구축 지원 등 - (에티오피아) 섬유분야 표준화정책 개선로드맵 개발, 전문인력 시험역량강화 교육, 시험인력 양성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등 - (인도네시아) 계량공무원(중앙/지역) 적합성평가 심화교육, OIML 기준 시험실 컨설팅, 산업계 이해관계자 대상 법정계량 활동 전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공동합의체 구성·운영, 시험·인증 제도 기초(안) 마련, 연구원 운영 인력양성(초청), 태양광모듈 시험인증센터 운영 컨설팅 등 ▶(협력타당성조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2개국과 신규협력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에너지효율 건물설계기준 보급 지원 기획 및 타당성조사 - (베트남) 유해물질 관리표준화 역량강화 기획 및 타당성조사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 및 에너지효율등급제도 컨설팅) 에어컨 관련 국제표준(또는 한국산업표준) 도입 및 에어컨 에너지효율등급제도 개정 컨설팅 - (시험장비 구축 지원) 시험소 실시설계 및 기초 인프라 시공 컨설팅,장비 및 기자재 세부 구축계획 수립 지원, 장비 및 기자재 발주·입찰 -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관리자 및 실무자 초청연수(10명 규모), 시험 장비·기자재 검수 및 시운전을 위한 전문가 파견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체계 전수협력) 3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티오피아) 섬유분야 표준화정책 개선로드맵 개발, 전문인력 시험역량강화 교육, 시험인력 양성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국제공인시험기관 획득 지원 등 - (인도네시아) 계량공무원(중앙/지역) 적합성평가 심화교육, OIML 기준 시험실 컨설팅, 산업계 이해관계자 대상 법정계량 활동 전파 등 - (베트남) 공동합의체 구성·운영, 시험·인증 제도 기초(안) 마련, 연구원 운영 인력양성(초청), 태양광모듈 시험인증센터 운영 컨설팅 등 ▶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 및 에너지효율등급제도 컨설팅) ISO 5151 국제표준 기술 사항, 우즈베크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개선을 위한 ISO 16358 기반 기술 데이터 산출 컨설팅 - (시험장비 구축 지원) 시험장비 관부가세 면제 합의(우즈베크 관세당국), 에어컨 시험소 건물 리모델링 및 시험장비 기초 구조물 제작/현지 설치 -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관리자 및 실무자 초청연수(10명 규모), 한-우즈베크 표준/적합성 분야 공동세미나 개최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프라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관(인도네시아 산업부, 표준청, 시험기관) 관리자급 9명(중앙부처 차관 보급 1명, 과장급 3명 포함) 국내 초청 연수 - 한국형 마스크 시험인프라(Particle Photometer 외 7개 시험 장치) 구축 - 국내 표준에 부합화된 인니 마스크 시험 표준 제개정(안) 마련 ▶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인프라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마크, L-마크 인증제도 운용방안 및 근거 법령 개정방안 컨설팅 - L-마크 검사 및 교정장비 설치·구축 - Q마크, L-마크 전문가 파견을 통해 해당 분야 관리자·실무자 대상 교육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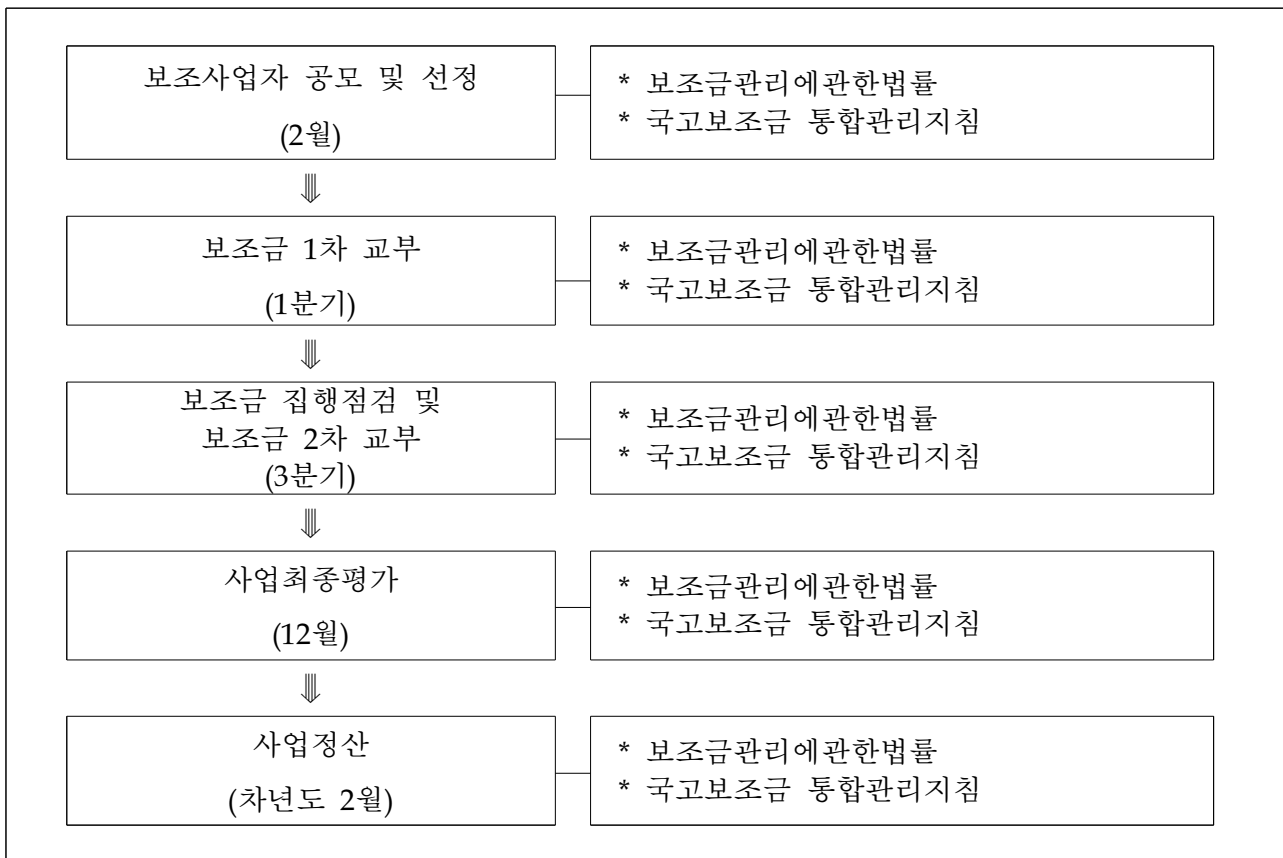
- ▶ 한국형 표준, 인증제도, 법정계량 등 표준체계 전수협력 및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지원을 통해 개도국 산업발전 지원
- ▶ 한국 표준체계의 확산을 통한 사전 기술규제 대응 및 수출시장 확대 기대

- 수원국 내 한국형 표준·인증체계 시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인증기관 수출시장 확대
- 신남방, 신북방, 아프리카 등 표준 및 기술규제 공무원대상 역량강화 교육(초청, 전문가 파견 또는 영상교재 제작을 통한 비대면 교육) 추진
 - *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표준·시험인증·계량 체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우리나라의 인증마크를 별도 시험인증 절차 없이 개도국이 수용하도록 추진
- ▶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 수원국 내 국가대표 표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 위상 제고
- 협력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국제표준 제안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의장국 및 간사국 진출확대 등을 통해 국제표준 강국으로 도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24년 내역사업별 보조금 흐름도

-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기술표준원 (760백만원)	=> (760백만원)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760백만원)		-

-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기술표준원 (700백만원)	=> (700백만원)	한국표준협회 (700백만원)		-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기술표준원 (630백만원)	=> (630백만원)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630백만원)		-

- 표준체계 전수협력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기술표준원 (800백만원)	=> (800백만원)	공모	=> (800백만원)	공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2,143	2,697	3,214	3,409	4,153	
'23~'27		2,036	2,890	3,179	3,338	3,50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한국형 제도 전수를 통해 개도국에 만들어지는 시험검사시장에 국내 시험기관이 진출하기 위해 공동시험소, 시험검사 대행, 성적서 인정 등을 추진
 - * 개도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수출시 외국에 의존하던 시험검사업무를 현지에서 실시하여 비용·시간을 절감,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표준·인증체계를 전수하는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 * 협력 타당성조사, 표준체계 전수협력, 인프라구축 등 체계적인 개도국 표준·인증 지원
 - (1단계) 우리의 표준·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지원 가능한 개도국 협력사업 조사
 - (2단계) 전문가방문을 통해 국가표준화능력 제고를 위한 기본적 컨설팅 제공
 - (3단계) 공동연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한 제도도입 지원 및 시험인프라 구축지원
- 초청교육, 공동연구를 통한 제도컨설팅 등 표준·인증체계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시험인증산업 진출을 위한 시험소 설립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 특히 ODA 중점협력국 및 전략적 신흥시장국을 대상으로 긴밀한 협력 사업 발굴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결과 : (사업방식 변경) 현행 성과지표의 개선, 보조사업자 관리 효율화 측면에서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 개선 : 국제공인시험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지표 개발 마련, 표준체계전수협력 사업의 추진체계 효율화를 위해 전담기관 공모 실시
-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 결과 : 보통, 80.0점(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1,559	-	1,559	-	-	-	1,559	1,559	100	100	-	-
2021	1,453	-	1,453	-	-	-	1,453	690	47.5	47.5	-	763
2022	2,143	-	2,143	-	-	-	2,143	1,382	64.5	64.5	-	761
2023	2,036	-	2,036	-	-	-	2,036	2,036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1,559	1,559	1,559	1,559	-	1,559	1,559	-	-	100
2021	1,453	1,453	690	690	-	690	690	-	-	47.5
2022	2,143	2,143	1,382	1,382	-	1,382	1,381	-	-	64.5
2023	2,036	2,036	2,036	2,036	-	2,036	2,036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액 763백만원(집행잔액) -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21년 2월)으로 인해 미얀마 ODA 사업 지원 중단 ※ 미얀마 사태 장기화 여부 불투명으로 인해 예산 미집행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액 761백만원(집행잔액) - 미얀마 군부 쿠데타(21년 2월)장기화로 인해 미얀마 ODA 사업(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 시험센터구축 지원,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터 설립 / 총 761백만원) 지원 중단 ※ 미얀마 사태 장기화 여부 불투명으로 인해 예산 미집행(21년과 동일)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액 : -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관계 법령
- 내역사업 설명자료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사업(ODA) 추진실적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참고2

내역사업별 설명자료

1.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사업(계속)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22 ~ 2025년(총 4년)
- 사업 예산: 2,804백만원('24년 760백만원)
- 수요 기관: 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s(우즈베키기술규제청)
- ODA 모델



□ 세부 사업 목표

세부 목표	세부내역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 제개정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 예산 : 39.9백만 원 * '24년 : 10백만 원 ▪ 국제표준 부합화(ISO 5151) 및 국제표준에 기반한 우즈베키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개정 실무
한국형 시험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 예산 : 137.2백만 원 * '24년 : 6백만 원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어컨 시험소 건물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전기, 통신, 수도 등) 시험소 경영 및 시험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시험 장비/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 예산 : 2,175백만 원 * '24년 : 607.5백만 원 에어컨 시험 장비 조달(발주, 제작, 국제운송, 통관 등) 시험 장비 검수, 설치, 교정, 시운전(커미셔닝)
국제공인시험소 인정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 예산 : 41.7백만 원 * '24년 : 15백만 원 국제공인시험소 컨설팅(ISO/IEC 17025) 국제공인시험소 평가 및 자격 획득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 예산 : 429백만 원 * '24년 : 90.5백만 원 수요기관 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초청연수 시험소 운영 기술이전 및 전문가 파견 교육

□ 연차별 추진내용

연차 (예산)	사업 내용
2022년, 1차년도 (5.7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표준 및 에너지효율등급제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어컨 관련 국제표준(또는 한국산업표준) 소개 국제표준 기반 에어컨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기준 소개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소 실시설계 및 기초 인프라 시공 컨설팅 장비 및 기자재 구축 세부계획/설계 지원 시험장비 및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장비 및 기자재 규모/리스트 확정 시험장비 및 기자재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시험장비 및 기자재 발주 및 입찰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전문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국가표준 및 제도 조사 및 과업 추진 전략 수립 우즈베크 인정기구 현황 조사 및 관련 규정 파악
2023년, 2차년도 (7.16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표준 기반의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산정 컨설팅 시험 장비 및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 기자재 업체 현지 착수조사 시험 기자재 설계 및 제작 시험 기자재 기초 프레임 설치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자 초청연수 (1주, 5명) 실무자 초청연수 (2주, 5명) 전문가 파견 : 시험 장비/시스템 설치 감독 및 현지 교육 국제세미나 개최 : 표준 및 적합성 평가 분야 기술교류

<p>2024년, 3차년도 (7.6억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소 경영 마스터플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소 경영 및 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 국제표준 도입(부합화)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5151 세부 내용 및 기술사항 교육 • 시험 장비 및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장비 운영시스템 설치 - 시험 장비 및 시스템 시운전 및 검교정 - 시험 장비 운영법 및 검교정 기술 전문가 교육 • 국제공인시험소 자격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인시험소 품질문서 작성 지원 - 숙련도 시험(PT) 지원 및 인증서 확보 - 국제공인시험소 (ISO/IEC 17025) 인정평가 및 자격 획득 지원 • 역량강화 및 기술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초청연수 보수교육(1주, 5명) - 현지교육 : 시험 장비 운전 및 운영법 교육 - 전문가 파견 : 시험 장비 검수/시운전 및 국제공인시험소 인정 평가 지원
<p>2025년, 4차년도 (7.58억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소 경영 마스터플랜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인시험소 운영시스템 구축 및 SOP 수립 • 국제표준 도입(부합화) 및 에너지효율인증제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컨 에너지효율 국가표준/인증제도 제개정 점검 및 대응 지원 • 시험 장비 및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기자재 스페어파트 제작 및 현지 설치 - 시험 시스템 보수 및 유지관리법 교육 • 역량강화 및 기술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교육 : 국제공인시험소 운영 점검 및 기술 이전 - 전문가 파견 : 시험 장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 노하우 전수 - 워크샵 개최 : 표준/인증제도/적합성 평가 체계 운영 노하우

2.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프라 구축(계속)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23 ~ 2026년(총 4년)
- 사업 예산: 2,200백만원('24년 630백만원)
- 수요 기관: BSN(인니 표준청), 인니 산업부 산하 시험기관 2곳 (BBT, B4T)*

* BBT: 마스크 시험기관, B4T: 공기청정기, 에어필터 시험기관 구축 예정

○ ODA 모델

한국-인니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프라 구축 사업 공동 추진 체계



세부 사업 목표

세부 목표	세부내역
국가표준 제개정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요 예산 : 226백만 원 * '24년 : 64.5백만 원 미세먼지 대응 제품 관련 국제 표준(또는 KS 표준) 도입 컨설팅
시험소 운영 마스터 플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요 예산 : 155백만 원 * '24년 : 45백만 원 시험소 경영 및 관리시스템 구축, 교정 프로세스 컨설팅 ISO 부합화(ISO/IEC 17025, 17065) 지원 컨설팅
한국형 시험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요 예산 : 1,390백만 원 * '24년 : 430백만 원 시험소 기초인프라 구축 컨설팅 시험 장비 구축(커미셔닝), 운영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요 예산 : 429백만 원 * '24년 : 90.5백만 원 수요기관 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초청연수 시험소 운영 기술이전 및 전문가 파견 교육

□ 연차별 추진내용

연도	세부내역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현지 니즈 분석/한국측 실무자 현지 착수조사, 국가표준 제정을 위한 TC 활동 지원 • 시험 표준 제개정(안)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대응 제품 관련 국가표준 조사/국제표준 부합화 컨설팅 • 시험 인프라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가 기초 설계(전력, 수도 등) 지원 - 구축 시험 장비 선정 • 시험 기자재 입찰(설계/제작/설치업체 선정) •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력 양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표준청 및 시험기관 초청 교육 • 사후관리 계획 마련(사후관리위원회 구성 및 계획(안) 마련)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 제개정 컨설팅(국가표준 제개정(안) 마련) •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소 운영 품질문서 검토 • 시험 장비 제작 및 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시험 장비 설치, 검수 및 시범운영 • ISO/IEC 17025, 17065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인정 스킴 검토 •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력 양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기관 초청 교육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 제개정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 제개정(안) 마련('24년 계속) • 시험 장비 제작 및 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시험 장비 설치, 검수 및 시범운영 •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소 운영 SOP 수립 지원 • ISO/IEC 17025, 17065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기관 품질문서 제개정 지원 •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력 실무자 양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기관 실무 교육을 위한 현지 파견 교육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장비 제작 및 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시험 장비 설치, 검수 및 시범운영 •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SOP 수립 지원 • ISO/IEC 17025, 17065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기관 품질문서 제개정 지원('25년 계속) •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력 실무자 양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기관 실무 교육을 위한 현지 파견 교육

3. 라오스 국가표준 역량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계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2027년(총 5년)
- (사업예산) 2,500백만원('24년 700백만원)
- (수원국 관계기관) 산업통상부(MOIC) 표준계량국(DOSM)
- (연차별 추진내용)

연도	추진내용(요약)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스 제품안전관리제도 및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구축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컨설팅) 중장기 발전방향 마스터플랜 수립 2건 • 근거 제도 개선방안 제안 - (역량강화) 전문가 파견교육 실시 2회 • 전문가 별 교육 커리큘럼 개발 - (시험검사장비 지원) 시험검사 필요 장비 목록 합의 • 제품안전 : 구입 장비 목록 합의 • 계량 : 구입 장비 목록 합의, 장비 구입 및 라오스 설치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스 제품안전관리제도 및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구축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컨설팅) 각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 근거 법령 개정(안) 공동 개발 • 정책홍보 지원방안 수립 - (역량강화) 전문가 파견 2회 및 초청교육 1회 실시 •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 정량인증제도 적용 업체 대상 교육/인증심사원 교육 - (시험검사장비 지원) 시험검사 장비 구입 및 장비활용법 교육 • 제품안전 : 장비 구입 및 라오스 설치 및 시운영 등 전문가 파견 교육 • 계량 : 장비 구입 및 라오스 설치 및 시운영 등 전문가 파견 교육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스 제품안전관리제도 및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컨설팅) 각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법령 제·개정 지원 • 정량상품 검사기준 5종 근거 법령 제정 지원 - (역량강화) 전문가 파견 2회 및 초청교육 1회 실시 • 장비활용법 교육 • 17025 시험원 양성/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 (시험검사장비 지원) • 제품안전 : 장비 구입 및 라오스 설치 및 시운영 등 전문가 파견 교육 • 계량 : 장비 구입 및 라오스 설치 및 시운영 등 전문가 파견 교육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스 제품안전관리제도 및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운영 조직 및 인력의 역량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컨설팅) 인증마크 통합관리 방안 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간 설명회(정부)/공청회(산업계) 지원 - (역량강화) 전문가 파견 2회 및 초청교육 1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활용법 교육 • 교정요원 교육/정량인증 적용업체 확대 및 교육 - (시험검사장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 장비 구입 및 라오스 설치 및 시운영 등 전문가 파견 교육 • 계량 : 시험자 교육, 시험소 공식 인정 획득 지원
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스 제품안전관리제도 및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운영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컨설팅) 제도 안정화를 위한 근거 법령 제·개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설명 공청회(산업계) 등 정책홍보(리플렛 등 안내자료) 지원 - (역량강화) 전문가 파견 2회 및 초청교육 1회 실시 - (시험검사장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 시험자 교육, 시험소 공식 인정 획득 지원 • 계량 : 시험자 교육, 시험소 공식 인정 획득 지원

○ ODA 모델



□ 2023년 추진 실적

- ('23년 1차 업무협약) 5개년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23년 실행계획 합의, 양국 간 공동연구팀 구성 완료, 협조 요청 사항(장비 이전 관세 등) 등 합의('23.3.)



- (DOSM 시험소 환경 조사) 시험실 배치 및 면적 현황 조사, 시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수 정보 확인
 - 시험 장비 이전 장소 환경과 규모(수용 정도) 파악, 시험소 운영·관리 현황, 보유 장비 목록 관련 데이터 확보
 - 각 인증제도 별 시험인력 현황 및 향후 충원 계획 등

4. [표준체계 전수협력] 베트남 태양광제품 시험인증시스템 구축 지원(계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2024년(총 3년)
- (사업예산) 700백만원('24년 250백만원)
- (수원국 관계기관) VSQI(표준개발연구원), IEMM(에너지광산기계연구원)

○ (연차별 추진내용)

연도	추진내용(요약)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협의체 구성 - 한-베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베트남 국가표준제정을 위한 TC 활동 지원/베트남 국가표준 초안 작성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 한-베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속) - 베트남 국가표준제정을 위한 TC 활동 지원/베트남 국가표준 2차 초안 작성 - 베트남 공무원 관리자 운영시스템/실무자 시험실무 초청교육 - 베트남 건물형태양광제품 품질표시기술규정 및 인증체계 개발 지원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베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속) - 베트남 국가표준제정을 위한 TC 활동 지원/베트남 국가표준(TCVN) 제정 추진 - 시험실무자/공장심사자/품질관리자 대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 - 베트남 공무원 관리자 운영시스템/실무자 시험실무 초청교육 - 베트남 건물형태양광제품 TCVN 인증제도 개발 지원

○ ODA 모델(예)



□ 추진 실적



- (국가표준 제·개정 지원) KS C 88577(건물일체형태양광모듈 성능) 전수 컨설팅
- 태양광제품 한국-베트남 국가표준 비교 분석
- KS C 8577 기반 신규 국가표준 제정, 한국-베트남 기술 운영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구성 및 운영

한국-베트남 TC기술위원회 구성

✓ ('22.9.22) TCVN/TC/E13 기술위원회 구성 및 1차 세미나

▶ 장소 : SMBL* office, Hanoi, Vietnam
현지 컨설팅업체, KCL 위탁용역기관(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회의 주요내용 : TCVN 6781은 2017년 IEC 61215-2016를 기반으로 제정한 표준임. 최근 태양광모듈 신기술이 빠르게 출시되고 있기에 기존 표준개정과 신기술 관련 신규 표준 제정이 필요함. 하지만 테스트에 의한 검증이 필요함.

✓ ('22.11.17) TCVN/TC/E13 기술위원회 2차 세미나

▶ 장소 : SMBL office, Hanoi, Vietnam

▶ 회의 주요내용 : KS C 8577 기반 건물형태양광모듈 표준에 신규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베트남 시장 제품에 맞춘 대표 샘플 유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베트남 건물형태양광 제품 성능표준(TCVN) 초안 작성




TC기술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 2건, TCVN 초안 1건

TC 기술위원회 구성

 Mr. Nguyễn Đình Quang 베트남 에너지과학기술연구소(IES) 소장 생년월일: 1955-12-25 연락처: 84 917 887 346 이메일: ndquangn@gmail.com	 Mr. Nguyen Thanh Trung 기술연구소(INACENTECH) 생년월일: 1988-01-19 연락처: 84 975 519 188 이메일: nguyentrongvsq@gmail.com
 Mr. Phạm Hồng Minh 베트남 계측 연구소(VMI) 과장 생년월일: 1963-09-29 연락처: 84 903 428 878 이메일: minhvm@gmail.com	 Ms. Luong Hoang Anh VSQI 팀장 생년월일: 1982-04-26 연락처: 84 913 011 982 이메일: hoanganh264.tcvn@yahoo.com
 Mr. Nguyễn Khắc Diem 베트남 전력공사(EVN) 산하 전자정보 센터(EVNBC) 소속 전문가 생년월일: 1946-04-11 연락처: 84 968 303 746 이메일: khdiem@yahoo.com	 Mr. Hoang Quoc Viet VSQI 팀장 생년월일: 1986-08-10 연락처: 84 868 411 368 이메일: vietq108@gmail.com
 Mr. Vũ Hữu Trung QUATEST 1 소속 전문가 생년월일: 1986-10-20 연락처: 84 937 871 986 이메일: trungquatest@gmail.com	 Mr. Nguyen Ngoc Thuy VSQI 연구원 생년월일: 1987-06-23 연락처: 84 968 163 087 이메일: ngocthuqt50@gmail.com
 Mr. Hoàng Văn Thanh QUACERT 생년월일: 1978-05-25 연락처: 84 989 967 715 이메일: thanhhv@quacert.gov.vn	 Mr. Nguyen Trung Huy 환경기술연구소(ITT) 팀장 생년월일: 1984-02-12 연락처: 84 983 817 214 이메일: trunghuy1284@gmail.com

○ (한-베 공동협의체 구성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 KCL-VSQI & IEMM 업무협약 체결
- KS C 8561, 8563 기반 표준인증 관리자/실무자급 교육훈련
- 태양광신기술 표준개발 및 인증심사자, 관리자/실무자 양성

KCL-VSQI 업무협약 및 1차 초청 교육

- ✓ ('22.8.22일~27일) STAMEQ 부원장 외 2명, VSQI 부원장 외 2명 방문
 - ▶ (8.23(월)) KCL-VSQI 업무협약 체결* KATS & STAMEQ 참관
 - * 태양광신기술 제품 KS 표준/인증제도 전수 및 교육훈련
 - ▶ (8.24 화) KATS 원장님 방문 및 업무협력 방안 토의(국표과 주관)
 - ▶ (8.23 수~26 금) VSQI 실무진 2명 KCL 태양광센터 방문 및 기술교육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STAMEQ	부원장	Mr. Linh H. Nguyen	-
STAMEQ	국제협력국 과장	Mrs. Nguyen Thi Mai Sinh	국제협력
STAMEQ	표준인증과 주무관	Ms. Hoang Ngoc Minh	표준인증제도
VSQI	부원장 (원장대행)	Mr. Phuong Manh Trough	업무총괄
VSQI	센터장	Mr. Hoang Quoc Viet	표준개발
VSQI	연구원	Mr. Ngoc Thuy Nguyen	표준개발



MOU 1건, 교육훈련결과보고서(실문조사/교육자료 포함) 1건

KCL-IEMM 업무협약

- ✓ ('22.12.22) KCL-IEMM 업무협약 체결
 - ▶ 장소 : 베트남 하노이 IEMM 세미나실
 - ▶ 협약내용 : 건물형태양광 제품 성능표준 기술교육(23년 진행), 건물형 태양광 시험소 구축 ODA사업 추진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IEMM	원장	Mr. Le Thai Ha	-
IEMM	부원장	Ms. Nguyen Thu Hien	-
IEMM	본부장	Mr. To Manh Linh	국제협력



MOU 1건

5. [표준체계 전수협력] 르완다 섬유, 가죽분야 시험·검사 역량강화 지원(신규)

□ 사업 개요

- (사업기간/예산) 2024~2026년(총 3년) / 600백만원('24년 200백만원)
- (수원국 관계기관) RSB(르완다표준원)

연도	추진내용(요약)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기관의 시험·검사 역량 향상을 위한 3개년 협력계획 수립 협의 1회 - 협력기관시험실 현황(보유 장비, 인력 등) 파악 - 섬유·가죽분야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노하우 전수(현지교육 1회 10명) - 한-르 양국 간 기술공유회 개최(현지교육 1회 10명)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가죽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험역량 강화 교육(현지교육 2회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활용 교육(영상교재 제작 및 비대면 지원) * 시험분석 기술교육(영상교재 제작 및 현지 방문 교육 지원) * 비교속련도 평가 - 국제인증제도 교육(초청교육 1회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인증제도 교육(섬유·가죽·환경 등)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가죽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험역량 강화 교육(현지교육 2회 10명/초청교육 1회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활용 교육(영상교재 제작 및 비대면 지원) * 시험분석 기술교육(영상교재 제작 및 현지 방문 교육 지원) * 비교속련도 평가 - 한-르 공동세미나 개최(1회 10명)

○ ODA 모델(예)

▶ 수행체계



6. [표준체계 전수협력] 우즈베키스탄 섬유 분야 표준·인증 역량 강화 지원(신규)

□ 사업 개요

- (사업기간/예산) '24~'26년(총 3년) / 500백만원('24년 200백만원)
- (수원국 관계기관) O'ZTTSA(우즈베키스탄 표준원)

연도	추진내용(요약)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즈베키스탄 현지 섬유제품 품질관리 법적 규제사항 및 표준, 인증제도, 시험구축 현황 파악 - 3개년 인력양성 추진계획 수립 -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 시험실 직원 교육 (초청교육 1회 5명, 현지교육 1회 20명)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산업계 이해관계자 KC 제도 및 글로벌 유해물질 규제 동향 교육(초청교육 1회 5명) - 섬유제품 이화학 시험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 시험실 직원 교육 (현지교육 1회 20명)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제품 검사(Inspection)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 기관 직원 교육 (초청교육 1회 5명, 현지교육 1회 10명)

○ ODA 모델(예)



7. [표준체계 전수협력]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관리시스템 역량 강화 지원(신규)

□ 사업 개요

- (사업기간/예산) '24~'26년(총 3년) / 600백만원('24년 150백만원)
- (수원국 관계기관) MOT(인도네시아 무역부)

연도	추진내용(요약)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충전기 관리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의 선진화 방안 교육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검정을 위한 장비구성 기본 교육(현지교육 2회 15명) - 전기차 충전기 관리 정책 담당자 초청교육(1회 5명)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충전기 관리를 위한 계량법 하위법령 및 관련 규정의 선진화 방안 교육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검정을 위한 시험소 구축방안 교육(현지교육 2회 15명)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실무담당자 초청교육(1회 5명)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교육(현지교육 2회 15명) - 성과 공유회 개최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실무담당자 초청교육(1회 5명)

○ ODA 모델(예)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수행기관	수원기관(인니 무역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추진 방향 설정 및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수원기관 업무협약 •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초청/현지연수 진행 및 사업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 선정을 위한 해당 분야 현황 제공 • 초청/현지연수 계획 공동 기획
주요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충전기 정확도 관리를 위한 법령 선진화 방안 교육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검정 기술 역량강화 교육 • 전기차 충전기 분야 이해관계자 현지교육 	주요 산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충전기 관리 정책 관리인력 5명 확보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검정 실무인력 10명 확보 • 전기차 충전기 관리를 위한 법령 및 인프라 개선방안 보고서 • 산업계 이해관계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자료 • 산업계 이해관계자 교육 수료인원 45명 	
후속 조치 사항	수원기관(인니 무역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과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 연수사업 성과 활용계획 제시 • 후속사업 추진협의 	사업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기관 피드백에 대한 후속조치 • 국내기업 지원방안 검토 • 후속사업 기획 및 추진
기대 효과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충전기시험소 구축·운영을 위한 인적 역량마련 • 전기차충전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인적 역량마련 • 전기차 충전기 관리를 통한 공정거래 기반 마련 	사업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플랫폼 사업자의 현지 진출 기회 확대 •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법정계량 분야 우호국 확보

참고3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ODA)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예산	890	900	900	890	1,115	1,200	1,275	1,020	1,559	1,453	2,143	2,036	2,890

□ 지원국가 : 4대륙 16개국

* 중남미(5개국), 아시아(7개국), 중앙아시아(2개국), 아프리카(2개국)

□ 법령개정,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초청연수 등 주요실적

○ 법령제정 및 개정 : 5건(라오스, 베트남)

국가 *지원기관	완료 시기	주요 내용	실적(OUTCOME)
베트남 *STAMEQ	2014 (KASTO/KSA)	-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 고시 제정 완료 * V-마크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상품목 선정 및 표시요건 규정 제정	과기부 고시 제정(CIRCULAR 21, No. 21/2014/TT-BKHCHN) - 포장상품 양 관리 규칙 - 우리나라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및 OIML 참고하여 제정 완료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2019 (KTR)	- LED 조명 품목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기술규정) 개정 지원	베트남 기술규정 개정(QCVN 19:2019/BKHCHN) - LED 제품 Safety, EMC, RoHS 분야에 대한 규정 - 한국의 규격 개선 시스템 및 절차 소개·건의를 통해 개정 지원
베트남 *VSQI	2024 (KCL)	- 국가표준 제·개정 지원 : KS C IEC 61730, IEC 61710 기반 - 시험인증제도 수립 지원 : KS C 8561 인증심사기준서(공장 인증 체계, 품질표시 기준 등) 개발 컨설팅 등	- 베트남 국가표준 제정 1건, 개정 1건 예정
라오스 *DOSM	2020 (KSA)	- 전기용품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기존 근거 규정 개정 완료	장관 결정문 개정(no. 1573) - 전기전자제품안전관리 과기부 장관 결정문(Decision)

국가 *지원기관	완료 시기	주요 내용	실적(OUTCOME)
			- 우리나라 KC 인증제도 참고하여 개정 완료
		-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기존 근거규정 개정 완료	장관결정문 개정(no. 1572) - 포장상품관리 과기부 장관 결정문 (Decision) - 우리나라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참고하여 개정완료

○ 국내기업 지원 : 3개국 대상 기업 지원(브라질, 페루, 베트남)

구분			실적	주요 내용
국내 기업 지원	브라 질	애로사항 접수	1건	- 한-브 기술협력센터를 통해 브라질 기술규제 동향 수집 중, 기술규제강화 동향 파악 * 모든 수입 전기전자제품에 EMC에 대한 INMETRO 인증 획득 규정 발표
		EMC 시험 상호인정 추진		- 한-브 EMC 규제 공동 연구 :규제부합화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토의 :한국의 EMC규격 소개 및 브라질 전자파규제 일반요구사항(RGEMC) 도입 제안 :선대응 품목 설정: LED 조명등 - 브라질 LED 규정, KOLAS 지정 추진
		애로해소		EMC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통한 LED 인증획득(3건)
	페루	애로사항 접수	1건	-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시행계획 발표 *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에어컨, 보일러, 조명등 등 대상 강제 규제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 파악 한계
		적합성평가 기관 지정 추진		- 페루 인정기구 인정을 획득*한 현지 인증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한 기술규제 상황 * ISCP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주 수출품목인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을 추가로 인정했음을 확인('20.) - 기존 협력 채널(NYCE Colombia, 인증기관)을 통해 국내 시험 성적서 활용 및 페루 인증서 획득 방안 마련 * KTR-NYCE Colombia : 시험·인증기관 간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협력
		애로해소		- KTR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현지 인증기관에서 인증서 발급 추진
	베트 남	애로사항 접수	2건	- (QCVN 19) 베트남 MOIT에서 규제 시행 발표가 지연되면서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 (LED 에너지효율) 2020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LED 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정보 부족
		LED 제품 수출·인증 세미나		- 베트남 LED 조명 및 제품 시장 동향 및 신규 규제* 소개 * QCVN 19 : Safety 및 EMC 규제 (과학기술부, 인증서 필요) CIRCULARS 30/2011/BCT : RoHS 규제 (산업통상부, 성적서 필요)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규제 (산업통상부, DoC letter 필요)
		애로해소		- (QCVN 19) 업체 대상 세미나를 통해, 1)규제 발표 시점, 시행 시점, 대상품목, 유예기간 등의 세부 정보 안내 2)각 기업이 본인 제품의 특이사항에 대해 직접 질

구분			실적	주요 내용
				문하고 답변을 받는 기회 제공 - (LED 에너지효율) LED제품을 수출시 필요한 강제인증 전반에 대한 사항을 기업에 알려주어 원활한 인증 획득 및 수출 지원 가능
	베트남	애로사항 접수	5건	- 베트남 현지 연락사무소 운영을 통한 기업 애로 상시 접수 및 해소 지원
		애로해소		-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선적전 검사 업무 등 사무소 시험.인증 업무 범위 확대 추진 :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신규 시험인증 협력 사업, 목재펠릿 공동시험소 운영추진 등 신규사업 협력 중

□ 대륙별 주요 실적(요약)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기관
중남미 (5개국)	페루 (전기 등)	2013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2명	KTL
		2014	안전관리대상 6개 전기용품군* 안전기준 개발 * 전선 및 코드류, 전기기기류 등	
		2019	표준화 이해를 위한 현지 세미나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1회 15명	KSA
			에너지효율 규제 시행을 위한 현지 교육 ※ 현지 인증기관 담당자 등 1회 30명	KTR
			적합성평가 및 표준화 역량강화 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2명	
		2020	한-페루 현지 시험인증기관(Lenor Peru) 협력 * (MOU) Certification service agreement between LENOR PERU S.A.C. and KTR (에너지효율 관련 국내 시험성적서 인정)	
	브라질 (전기 등)	2014	한-브 기술협력센터 개소(~2020) * (MOU) Agreement between KTR and NCC Certification Brazil on TESTING and CERTIFICATIONS (의료기기 등 안전 관련 국내 시험성적서 인정)	KTR
	파라과이 (전기)	2015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제시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3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워크숍 1회 50명	KTC
		2016	파라과이 전기용품 기초시험설비(테스트베드) 구축 * 에어컨, 냉장고, 전기샤워, 전기온수탱크, 세탁기,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기관
			다리미, 전기포트 등 7개 전기용품 품목에 대한 14개 설비로 구성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워크숍 1회 23명	
		2017	전기설비 시험업무를 위한 시험절차서 마련 * 시험절차서(Test Method) 개발하고, 시험성적서 초안 1건을 시범 발행하여 테스트베드 정상운용 지원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요령 마련	
	콜롬비아 (전기)	2018	한-콜롬비아 공동시험소 구축 * (MOU) Agreement between NYCE Colombia and KTR (냉장고, 세탁기 등 안전 및 에너지효율 관련 국내시험성적서 인정) ※ 표준협력 공무원 및 인증기관 초청교육 1회 4명	KTR
	에콰도르 (전기)	2020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도에 대한 표준체계 보급지원 타당성조사 완료 (MOU) Certification service agreement between LENOR ECUADOR and KTR (냉장고, 세탁기 등 에너지효율 관련 국내시험성적서 인정)	KTR
아시아 (7개국)	인도네시아 (선박)	2020	선박건조기술 표준화 지원 타당성조사 완료	KOMSA
	인도네시아 (계량)	2021	인도네시아 계량제도 조사 및 정책 제언(컨설팅) 비대면 동영상 제작 계량공무원 법정계량분야 실시간 비대면 세미나 ※ 표준협력 실시간 비대면 교육 1회 공무원 78명	KTC
		2022	법정계량 시험소 선진화 컨설팅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5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1회 30명	
		2023	인도네시아 법정계량 역량강화 ※ 실무자 초청교육 1회 5명 ※ 현지 전문가 파견교육 1회 45명 ※ 세미나 개최 1건	
		2023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 ※ 관리자급 국내 초청교육 1건 9명	KCL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기관
	베트남 (계량, 태양광, 섬유, 건설)	2012	한-베 국장급 협의회 및 액션플랜을 통한 협력 기반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2회 13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세미나 1회 20명	KSA KAST O
		2013	계량법 및 하위법령 개선방안 마련 * 계량법 구성분석을 통한 하위법령체계 수립 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8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세미나 1회 13명	
		2014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 고시 제정 완료* * V마크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상품목 선정 및 표시요건 규정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8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교육 및 세미나 3회 45명	
		2017	주유기 조작방지 기술 및 표준 전무 ※ 표준협력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현지 세미나 2회 20명	KTC
		2018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적용품목 및 기준 단위 확대를 위한 STAMEQ* 고시 개정(안) 마련 * 과기부 산하, 베트남 국가표준화기구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3회 12명	KSA
		2018	식생매트 단체표준 제정안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7명	KCL
		2019	식생매트 단체표준 제정안 마련 및 제도 컨설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세미나 1회 27명	
		2019	LED 제품 신규 규제 대응방안 마련 ※ Quacert 공무원 등 현지교육 2회 32명 ※ 표준협력 공무원 등 초청연수 1회 4명	KTR
		2019	섬유분야 시험·인증 및 제품안전제도 선진화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 등 초청연수 2회 6명	KATRI
		2020	베트남 태양광 시험인증제도 구축 타당성조사 완료	KCL
		2022	베트남 태양광 시험인증제도 전수 및 베트남 국가표준 개발 컨설팅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3명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기관
		2022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비산배출 관련 표준체계 및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지원 타당성조사	KSA
		2023	베트남 태양광 신제품 시험인증 시스템 구축 교육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관리자2명 / 실무자3명 ※ 현지 전문가 파견교육 2회 ※ 세미나 개최 1회	KCL
	몽골 (건설)	2012	몽골 국가표준원 역량강화 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9명	KCL
		2013	몽골 적합성체계 분석 및 타당성조사 실시 ※ 표준협력 공무원 등 초청연수 1회 5명	
		2014	건설표준 제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3회 13명	
			건설분야 국가표준(MNS) 10종 제정안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1회 4명	
		2015	몽골 시험인증서비스 산업진출 타당성조사 실시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2회 10명	
		2016	몽골 신재생에너지 기술센터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13명	
	캄보디아 (계량, 섬유)	2015	법정계량 및 제품안전제도 개선방안 도출 * 법정계량 및 제품안전제도 개선방안 제언보고서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7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워크숍 1회 40명	KTC
		2016	섬유분야 품질표시 심층협력과제 도출 ※ 표준협력 시험기관 초청연수 1회 3명	KATRI
		2017	검정업무 운영요령 및 기술기준 초안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워크숍 1회 65명	KTC
		2018	계량기 기술기준 개선방안* 제안 * 우리나라 및 국제 기준과의 비교·분석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5명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기관
		2018	주유기 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안) 제언	
		2018	주유기 조작방지를 위한 주유기 및 관제시스템 현지시험실 설치	
		2019	LPG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제언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6명	
		2018	섬유제품 품질관리 표시 기술규정 제정(안) 마련	KATRI
		2019	섬유제품 품질관리제도 선진화 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3명	
		2019	농기계 계량측정제도 선진화 지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공무원 등 초청교육 1회 4명	KTL
	라오스 (계량)	2015	법정계량 및 제품안전제도 현황 조사 및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2회 10명	KTC
		2017	한-라 표준체계 정보공유 현지 세미나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1회 12명	KSA
		2018	법정계량 및 제품안전제도 개선방안 도출 * 법정계량제도 개선방안 제언보고서(영문) * 제품안전제도 개선방안 제언보고서(영문)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3명	
		2019	제품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법령 개정(안)개발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근거 법령 개정(안)개발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2회 6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교육 1회 12명	
		2020	제품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과기부 장관결정문 개정 완료 * 고시명 : 전기전자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부 장관결정문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과기부 장관결정문 개정 완료 * 고시명 : 포장상품관리에 관한 과학기술부 장관결정문	
		2023	시험 검사 인프라 구축 마스터 플랜 수립 ※ 현지 전문가 파견 교육 2회	
	미얀마 (섬유, 건설)	2015	섬유분야 시험검사제도 선진화 사업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세미나 1회 20명	KATRI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 기관
		2016	시험·검사제도 선진화 마스터플랜 수립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2회 10명	
			시험검사 절차 및 검사원 역량강화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교육 2회 22명	
			섬유제품 품질검사 기술규정(안) 마련 * Quality Inspection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세미나 1회 90명	
		2017	섬유제품 품질표시 기술규정(안) 마련 * Quality labelling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세미나 2회 105명	
			섬유분야 표준 제정을 위한 WG 구성 완료	
		2018	섬유분야 기술규정(안)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2회 11명	
		2019	섬유제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 및 제도 구축 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1회 11명	
		2020	섬유·의류 분야 국가표준 우선 제정 목록 마련 및 제안	
			섬유제품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제안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발방안* 제안 * 적용품목:어린이용품, 대상연령, 안전요건 등 * 섬유공동시험소 법인설립 완료 ('20. 12. 31)	
		2021	섬유제품 국가표준개발 지원 및 섬유제품 표시기준(안전기준) 개발 지원 - 표준설명서 제작 * 총 9개 카테고리, 62건 ISO표준 - 비대면 교육 동영상 4건 * 1) 한국 섬유제품(유아동 및 성인) 표시방법, 2) 섬유제품(유아동 및 성인) 유해물질 중요성 및 안전기준, 3) 섬유제품 검사 개론, 4) 섬유제품 검사 실무	KCL
		2017	기초 건설재료 시험인증체계 선진화 로드맵 수립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3명	
		2018	건설분야 국가표준안 47종 제정안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8명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기관
	방글라데시	2019	레미콘 공장심사 매뉴얼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3명	
		2016	향후 협력방안 도출 현지 워크숍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워크숍 1회 7명	KTC
		2016	표준인증협력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4명	KSA
중앙아시아 (2개국)	키르기스스탄 (섬유)	2015	표준인증협력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공무원 등 초청연수 1회 5명	KATRI
		2016	표준인증협력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성과확산 현지 세미나 25명	
		2017	섬유분야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제도 선진화 마스터 플랜제품안전 운용요령(안) 전달 등 ※ 표준협력 공무원 등 초청연수 1회 8명 ※ 정부관계자 및 산업체 대상 현지 세미나 1회 43명	
		2018	경공업제품 시험법 및 제품안전제도(리콜) 실무 세미나 안전성조사매뉴얼(안) 마련	
		2019	국제표준화 활동 및 유해물질 시험법 교육 세미나 ※ 표준협력 성과확산 현지 세미나 10명	
		2020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작성 및 전달 * 의류인증 및 기업현황 조사, 현지 유통 제품의 유해물질 시험 기술규정에 따른 제품적합성평가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규정 관련 시험법 교육 (혼용률 정성, 정량분석)	
		2021	정책홍보 지원 * 제품안전제도 홍보물(브로슈어, 동영상) 제작 시장감시 시뮬레이션 멘토링 지원 * 보건부 시장감시 실무자 주도 안전성조사 샘플 수거, 유해물질 시험 지원(원격)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기관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2022	정책홍보 지원 * 제품안전제도 홍보물(브로슈어, 동영상) 배포 시장감시 시뮬레이션 멘토링 지원 * 보건부 시장감시 실무자 주도 안전성조사 샘플 수거, 유해물질 시험 지원(원격) <div>※ 표준협력 공무원 비대면 교육 5명</div>	KCL																																																
		2020	에어컨 에너지효율 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지원 타당성조사 완료																																																	
		2022	에어컨 에너지효율 인증 국제공인시험소 마스터플랜 수립																																																	
		2023	한-우즈베크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div>※ 실무자 초청 교육 1회 5명(2주)</div> <div>※ 관리자 초청 교육 1회 5명(1주)</div>																																																	
아프리카	ARSO	2012	한-ARSO 표준협력 활동 <div>※ EMC 현지 기술 세미나 1회 47명</div> <div>※ ARSO 회원국 초청교육 1회 12명</div>	KSA																																																
		2013	아프리카 지역표준 97종 제.개정(안) 마련 <table><tr><th>분야</th><th>작업대상</th><th>폐지</th><th>개정</th><th>재검토</th><th>기타</th></tr><tr><td>기본.일반</td><td>64</td><td>13</td><td>43</td><td>4</td><td>-</td></tr><tr><td>건설</td><td>48</td><td>6</td><td>13</td><td>12</td><td>17종 불필요</td></tr><tr><td>기계</td><td>26</td><td></td><td>23</td><td>3</td><td>-</td></tr><tr><td>화학</td><td>22</td><td>-</td><td>18</td><td>-</td><td>3종 제외</td></tr><tr><td>전기전자</td><td>0</td><td></td><td></td><td></td><td></td></tr><tr><td>환경</td><td>0</td><td></td><td></td><td></td><td></td></tr><tr><td>에너지</td><td>0</td><td></td><td></td><td></td><td></td></tr></table> * KATS-ARSO Action Plan 갱신(2017) <div>※ 표준교육 현지 워크숍 1회 40명</div>		분야	작업대상	폐지	개정	재검토	기타	기본.일반	64	13	43	4	-	건설	48	6	13	12	17종 불필요	기계	26		23	3	-	화학	22	-	18	-	3종 제외	전기전자	0					환경	0					에너지	0				
		분야	작업대상		폐지	개정	재검토	기타																																												
		기본.일반	64		13	43	4	-																																												
		건설	48		6	13	12	17종 불필요																																												
기계	26		23	3	-																																															
화학	22	-	18	-	3종 제외																																															
전기전자	0																																																			
환경	0																																																			
에너지	0																																																			
2016	<div>※ ARSO 회원국 초청교육 1회 6명</div>																																																			
2017	<div>※ ARSO 회원국 초청교육 1회 6명</div>																																																			
	<div>※ 아프리카 4개국 현지 워크숍 1회 7명</div>	FITI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 기관
	우간다	2018	표준인증협력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2명	KSA
	에티오피아 (섬유)	2018	섬유 가죽 품질관련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부합화 지원,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컨설팅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9명	FITI
		2019	ECAE, 수출시험 필수시험항목 제안 * 필수 시험항목 교재 매뉴얼 개발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5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1회 6명	
		2020	섬유 등 제품안전제도 도입방안 제안 * 제품안전제도 설명자료(범용 인포그래픽) 제작	
		2021	국제공인 시험기관 자격 확대 지원 * 국제 공인인증 획득계획 수립(인정분야 선정 등) ※ 표준협력 공무원 실시간 비대면 세미나 1회 2명	
		2022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이해 및 제도개선방안 컨설팅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4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1회 3명	
		2023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획득 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1회	

사 업 명
(4)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37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3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보급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최정식	이상하(연구사)	김정훈
		바이오화학 서비스표준과	043-870-5390	043-870-5393	043-870-5401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한국인인체치수 조사보급	1,813	1,725	1,725	1,725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32	1,832	1,813.28	-	18.72	1,725	1,725	1,720	1,725	1,720	-	5	1,725
· 인체치수측정사업	872	872	857.4	-	14.6	865	865	860	865	860	-	5	865
· 인체정보보급사업	360	360	355.88	-	4.12	360	360	360	360	360	-	-	360
· 휴먼빅데이터구축	600	600	600	-	-	500	500	500	500	500	-	-	500
○ 비목별 분류(합계)	1,832	1,832	1,813.28	-	18.72	1,725	1,725	1,720	1,725	1,720	-	-	1,725
· 시험연구비(210-13)	46.73	46.73	37.76	-	8.97	46.93	46.93	46.75	46.93	46.75	-	0.18	46.93
· 업무추진비(240-01)	2.27	2.27	2.27	-	-	2.04	2.04	2.04	2.04	2.04	-	-	2.04
· 일반연구비(260-01)	1,403	1,403	1,397.37	-	5.63	1,296	1,296	1,291	1,296	1,291	-	5	1,296
· 민간위탁사업(320-02)	360	360	355.88	-	4.12	360	360	360	360	360	-	-	360
·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832	1,832	1,813.28	-	18.72	1,725	1,725	1,720	1,725	1,720	-	-	1,725
· 인체치수측정사업	872	872	857.4	-	14.6	865	865	860	865	860	-	-	865
-시험연구비(210-13)	46.7	46.7	37.76	-	8.97	46.96	46.96	46.75	46.96	46.75	-	0.18	46.96
-업무추진비(240-01)	2.27	2.27	2.27	-	-	2.04	2.04	2.04	2.04	2.04	-	-	2.04
-일반연구비(260-01)	823	823	817.37	-	5.63	816	816	811	816	811	-	5	816
· 인체정보보급사업	360	360	355.88	-	4.12	360	360	360	360	360	-	-	360
-민간위탁사업(320-02)	360	360	355.88	-	4.12	360	360	360	360	360	-	-	360
· 휴먼빅데이터구축	600	600	600	-	-	500	500	500	500	500	-	-	500
-일반연구비(260-01)	580	580	580	-	-	480	480	480	480	480	-	-	480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한국인 인체치수·형상 데이터의 수집 및 보급을 통해 국민의 편리 증대 및 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 * '79년 이래 약 5년 주기의 한국인 인체치수·형상 데이터 확보로 우리 국민의 신체변화에 따른 제품·공간설계 등에 기여
- (인체치수측정) 국가통계작성과 산업계의 데이터 수요 대응을 위해 한국인 인체치수·형상 정보를 조사하고 데이터화 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산·학·연에 보급하기 위한 DB 구축
- (인체정보보급) 산·학·연의 서비스·제품 개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즈 코리아센터를 통한 기업 컨설팅 지원, 홍보 및 교육, 측정장비 무상대여 등 온·오프라인 데이터 보급·활용 활동 추진
- (휴먼빅데이터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계의 인체정보 활용도 및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제공을 위한 인체정보 통합체계(휴먼빅데이터) 구축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표준기본법

-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 ①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참조표준을 제정·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과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 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① 삭제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표준화법

-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 확인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통계법

-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 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계법시행령

-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법 제9조제1항 본문과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79년부터 : 의류치수 규격 마련을 위해서 '79년 처음으로 국민체위조사를 실시한 이후 5~7년 주기로 4차례 측정 사업 수행
- '00년 이후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급격한 체형변화로 최신의 인체치수 정보조사 필요성 제기 및 3차원 인체형상, 동적치수 정보 등 다양한 인체치수 정보에 대한 산업계 요구 증가
- '03~'04년 : 전국 남녀(0~70세이상) 2만여명에 대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및 인체형상 측정 사업 실시 및 DB 구축
- '05~'09년 : ① 한국인 인체정보 보급 확대를 위한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 (sizekorea.go.kr) 및 인체표준정보실 개설 ② 통계청으로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 ③ 장애인 인체치수 등 다양한 분야로 측정사업 확대
- '10~'14년 :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을 통해 유아부터 노인의 계층별 3D 인체형상 측정과 표준인체형상을 개발하여 보급
- '15~'19년 :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 및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동적범위를 측정하여 보급하였고, 인체치수 정보의 산업계 보급 확대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14종)을 개발·보급
 - * 안경, 스마트글라스, 머리범용, 학생용책걸상, 장애인 보조기기, 몸통범용, 안마의자, 기능성베개, 손범용, 욕실공간, 퍼스널모빌리티, 다리범용, 핸디형청소기, 캠핑용품
- '20년~'21년 :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제1차 조사('20.6월~'21.2월)를 20세~44세 남녀 3,299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45세~69세 남녀 3,381명에 대한 제2차 조사('21.5월~'21.12월)를 진행하여 만20세~69세 한국인 6,680명의 인체치수 데이터 확보
- '22년 : 70~84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직접측정 1,014명(남441명, 여573명) 및 3D측정 429명(남192명, 여237명)의 고정밀 인체데이터를 확보하고,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결과 공식 발표, 성과전시 및 활용확산을 위한 협력 MoU(육군본부, 대한인간공학회 등 5개 단체) 등 추진
- '23년 : 20세 미만 미성년 1,300여명 대상 3D측정을 통한 고정밀 인체데이터 확보, 고령자 데이터보급을 통한 시니어산업 기업 대상 데이터활용 컨설팅 지원 등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039백만원	1,832백만원	1,832백만원	1,725백만원	1,725백만원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기업, 연구소, 학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편성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체치수조사를 통해 고품질 2D·3D 인체정보 수집 및 산학연 참조표준 데이터 제공으로 패션·디자인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민간 인체데이터 수요 뒷받침

- 관련 산업계(의류, 신발, 가구, 자동차, 헬스케어 등)에 인체데이터 제공으로 인간공학적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기여하고, 3D 스캐너로 생성되는 디지털 인체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개인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창출 유도

☞ **AS IS** : 제품·서비스 설계 기여 → **TO BE** : 디지털 신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기반으로 활용(예. 원격진료, 가상피팅 등 패션, 의료 분야 개인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메타버스 등 온라인 신산업)

- **(지원 필요성)**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본 사업을 통해 40여년 축적된 인체데이터의 활용도 증대 → 측정 보강을 통해 산업계 제공 시급

- (인체치수측정) 외부평가 지적사항의 성실 이행을 위한 자원 확보 →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모집단 관리개선' 권고에 따라 측정군·항목 보완 및 다음 차수 정기조사 대비 측정사업 추진
- (인체정보보급) 민간기업 데이터 활용 컨설팅, 데이터 가공 및 홍보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자원 확보
- (휴먼빅데이터구축) 신성장 4.0 전략 등 '24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된 3D 인체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 인체데이터 활용 세부 산업 및 서비스 분야 예시

① 의료분야 (재활치료 자세교정, 원격진료), ② 3D 가상 피팅(메타버스 등), ③ AR/VR 서비스 (5G 기반 증강현실 콘텐츠), ④ 게임 및 영화 (Depth 센서 대체), ⑤ 스마트 홈 (독거노인 비상 상황 관제), ⑥ AI 로봇 (인간의 자세를 분석하고 보조를 맞추는 연구), ⑦ 홈트레이닝 (운동자세 분석 및 추천) 등

○ '24년 예산 편성방향 관련성

- (사회적 약자) '24년 측정에는 고령자, 미성년 등 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사업결과는 향후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전망됨

○ 신성장 4.0 전략 관련성

- (신시장) 3D 스캔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디지털 휴먼 등 차세대 콘텐츠 개발에 활용 중
- (미래의료) 3D 인체 형상 데이터에 기반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 헬스케어 분야 서비스 개발
- * 질환 진단 기준 및 분석/예측 기술을 통한 건강상담, 운동처방 등

(1) 인체치수측정 : ('23) 865 → ('24) 865백만원, 전년동

- (내용) 통계청의 정기통계품질진단 지적사항 중 모집단 관리개선 필요 이행을 위한 보충 데이터 확보 및 '25년에 시작하는 제9차 조사에 대비하는 3D동적데이터 시범측정 추진

* 20년~21년 동안 시행된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에서는 20세~69세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기타 연령대에 대한 추가 조사사업을 22년부터 시행하여, 22년도에는 70세이상 초고령자 측정, 23년도에는 19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조사사업 진행

- (산출) 가. 인체치수측정사업 816백만원

[측정 인건비] 480백만원 (20명×8개월×3백만원)
[측정경비] 256백만원 (측정장비이용·유지·관리 214, 교육·재료비 등 42)
[피측정자사례비] 80백만원 (1000명×8만원)

- 나. 인체치수조사 부대경비 49백만원

[시험연구비] 47백만원 (수용비 10, 피복비 14, 임차·시설유지 23)
[사업추진비] 2백만원 (0.4백만원×5회)

(2) 인체정보보급 : ('23) 360 → ('24) 360백만원, 전년동

- (내용) 한국인 인체정보를 사이즈코리아센터 및 사이즈코리아 포털* 등을 통해 보급하여 산업계 지원. 최신 인체정보 데이터 수요 대응

* 중소·스타트업 기업 인체치수 컨설팅 지원, 사이즈코리아 홍보·교육·세미나, 해외 인체정보조사 및 정보교환, 인체측정 및 데이터 가공 제공, 측정장비 무상대여, 체험존 운영

- (산출) 가. 사이즈코리아센터 운영지원 360백만원

[운영인력 등 인건비] 160백만원(5명×8개월×4백만원)
[운영경비] 200백만원(센터운영·유지관리비 114, 컨설팅·회의비 등 86)

(3) 휴먼빅데이터구축 : ('23) 500 → ('24) 5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3D 인체정보를 빅데이터화 하기 위한 휴먼빅데이터구축 사업의 확대를 통해 신규 데이터 활용 사업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국내외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 공공(육군, 공군) 및 민간(패션, 의료기기, 인간공학) 분야 협력기관과 인체정보 공유·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한 MoU 이행 및 인체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 (산출) 가. 휴먼빅데이터구축 연구 480백만원

[개발 인건비] 308백만원(11명×7개월×4백만원)
[개발경비] 172백만원(시제품 및 서비스모듈개발 110, 재료비·회의비 등 62)

- 나. 측정장비구입 20백만원 (20백만원 x 1종)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25 백만원	<p>○ 인체치수측정 : 865백만원</p> <p>가. 인체치수측정사업 816백만원</p> <p>- 일반연구비(260-01) : 81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인건비] 480백만원 (20명×8개월×3백만원) · [측정경비] 256백만원 (측정장비이용·유지·관리 214, 교육·재료비 등 42) · [피측정자사례비] 80백만원 (1000명×8만원) <p>나. 인체치수조사 부대경비 49백만원</p> <p>- 시험연구비(210-13) : 4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비 10백만원 (조달수수료등 납부 4건×2.5백만원) · 피복비 14 (1000매×1.4만원) · 임차·시설유지 23 (회의실 임차 3, 시설장비유지비 20) <p>- 사업추진비(240-01) : 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 2백만원 (0.4백만원×5회) <p>○ 인체정보보급사업 : 360백만원</p> <p>가. 사이즈코리아센터 운영지원 360백만원</p> <p>-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6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인력 등 인건비] 160백만원(5명×8개월×4백만원) · [운영경비] 200백만원(센터운영·유지관리비 114, 컨설팅·회의비 등 86) <p>○ 휴먼빅데이터구축사업 : 500백만원</p> <p>가. 휴먼빅데이터구축 연구 480백만원</p> <p>- 일반연구비(260-01) : 48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인건비] 308백만원(11명×7개월×4백만원) · [개발경비] 172백만원(시제품 및 서비스모듈개발 110, 재료비·회의비 등 62) <p>나. 측정장비구입 20백만원</p> <p>- 자산취득비(430-01) : 2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구입 20백만원 (20백만원 x 1종) 	1,725 백만원	<p>○ 인체치수측정 : 865백만원</p> <p>가. 인체치수측정사업 816백만원</p> <p>- 일반연구비(260-01) : 81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인건비] 480백만원 (20명×8개월×3백만원) · [측정경비] 256백만원 (측정장비이용·유지·관리 214, 교육·재료비 등 42) · [피측정자사례비] 80백만원 (1000명×8만원) <p>나. 인체치수조사 부대경비 49백만원</p> <p>- 시험연구비(210-13) : 4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비 10백만원 (조달수수료등 납부 4건×2.5백만원) · 피복비 14 (1000매×1.4만원) · 임차·시설유지 23 (회의실 임차 3, 시설장비유지비 20) <p>- 사업추진비(240-01) : 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 2백만원 (0.4백만원×5회) <p>○ 인체정보보급사업 : 360백만원</p> <p>가. 사이즈코리아센터 운영지원 360백만원</p> <p>-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6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인력 등 인건비] 160백만원(5명×8개월×4백만원) · [운영경비] 200백만원(센터운영·유지관리비 114, 컨설팅·회의비 등 86) <p>○ 휴먼빅데이터구축사업 : 500백만원</p> <p>가. 휴먼빅데이터구축 연구 480백만원</p> <p>- 일반연구비(260-01) : 48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인건비] 308백만원(11명×7개월×4백만원) · [개발경비] 172백만원(시제품 및 서비스모듈개발 110, 재료비·회의비 등 62) <p>나. 측정장비구입 20백만원</p> <p>- 자산취득비(430-01) : 2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구입 20백만원 (20백만원 x 1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국인인체정보 보급 건수 (단위: 건)	목표	8,600	8,600	8,600	10,000	10,000	과거실적 및 증가추세 감안	Σ(보고서 다운로드수+ 인체정보 가공요청 건수)	국가기술표준 원 내부통계 및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
	실적	8,391	6,728	12,559	13,062	-			
	달성도	97.6%	78.2%	148%	13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을 '19년 개발한 프로토콜에 따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1차년도, 20~44세) 3,299명 남자1,469명+여자1,830명 ·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 內 누적된 인체치수 DB 활용 유도를 위한 기업-전문가의 1:1 매칭 및 맞춤형 컨설팅 · 휴먼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신발, 가발 및 공군 신병 인체데이터 수집 · 인체치수사업 컨설팅 교수를 거점으로 관련 학과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통해 인체치수 인식확산 및 활성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계명대 등 7개 대학 504명 교육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을 '19년 개발한 프로토콜에 따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2차년도, 45~69세) 3,381명 남자1,539명+여자1,842명 · 인체치수 측정항목 표준안 기반 데이터 저장 체계 설계 및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작, 자세, 치수, 부위, 기준점/축/면, 측정방법 등 6개 분류형태에 따라 도출된 측정항목(310개)과 코드(537개)에 따른 인체치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이즈코리아와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통합 모델 구축을 위한 사이트 안정화 및 개선모델 개발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84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직접측정 1,014명(남441명, 여573명) 및 3D측정 429명(남192명, 여237명)의 고정밀 인체데이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 산업제품 생산 및 의료기기, 고령자 생활공간 설계 자료로 제공 ·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결과 공식 발표, 협력 MoU 등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YTN, 조선·중앙·동아 등 주요 매체가 8차 조사결과 및 보급사례 중심으로 보도(78건) · 인체데이터 생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공간을 통해 가상착의 등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메타커머스 모델 제안, 설계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19세 미성년층 1,300여명을 대상으로 3D측정을 통한 고정밀 인체데이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청소년용 제품 생산 및 생활공간 설계 자료로 제공 · 시니어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인체데이터 데이터활용 컨설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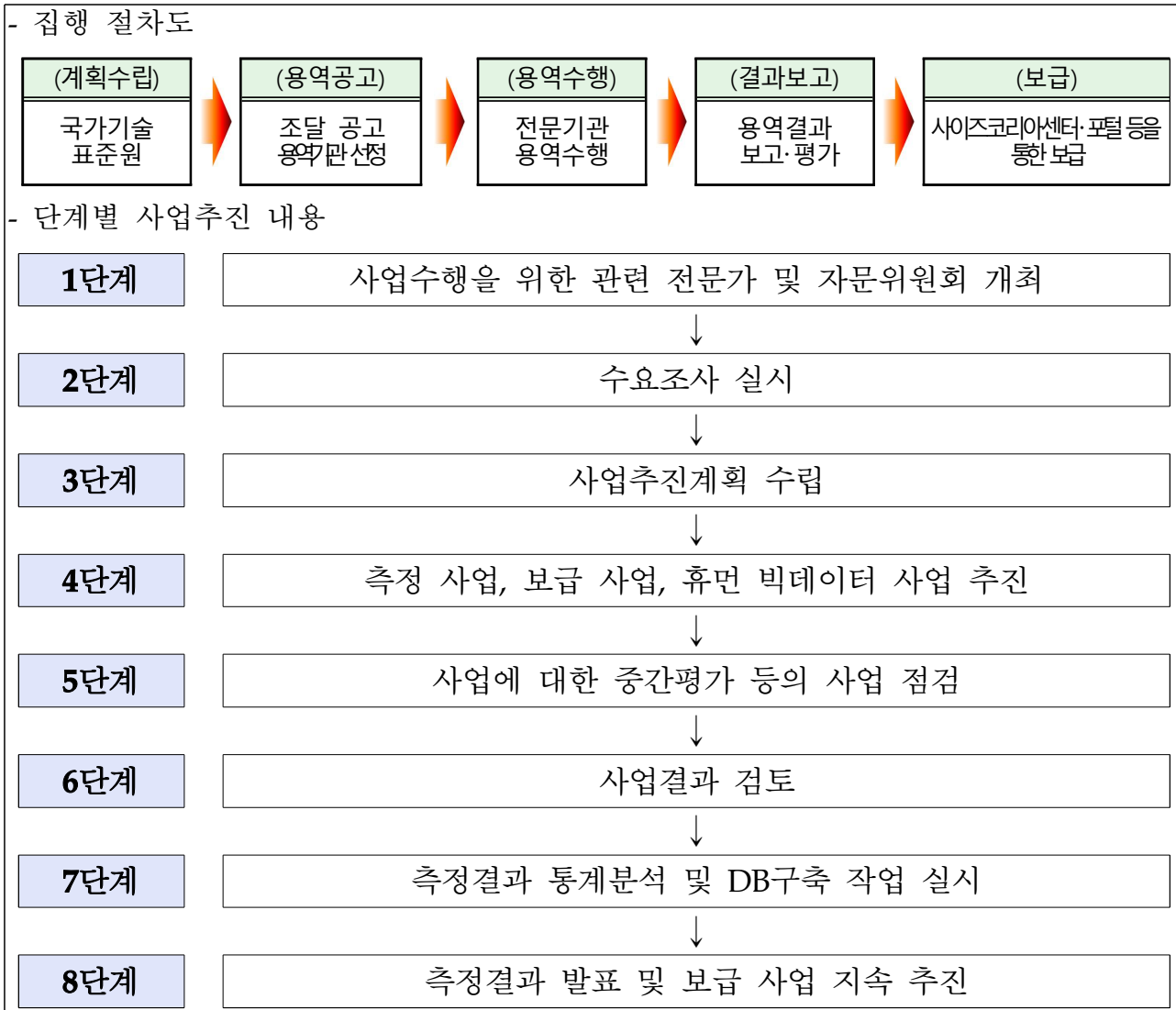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23년도 사업을 통해 획득한 만6세~19세 아동·청소년 1,300여명의 인체치수·형상 정보를 관련 산업계에 보급하고 KS표준 제·개정에 이용하여 제품설계 등에 활용
- 제품 설계에 필요한 인체치수정보 및 3차원 인체형상정보, 동적측정정보 등 종합적인 인체표준정보 DB 구축 및 주기적인 인체정보 업데이트 정보 제공
-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매년 한국인인체관련 정보 보급 추진을 통하여 산업계가 인체 친화적 제품 생산 및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 기업 대상 인체치수 활용 컨설팅 사업 지속 추진으로 의류, 가구, 스마트폰, 자동차, 헬스케어, 유통산업 등 인체치수가 활용되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인체친화적 제품생산과 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1,832	1,725	2,636	3,210	3,762	
'23~'27		1,725	1,725	2,608	2,608	2,47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사이즈코리아센터 상시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산중위, 2022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 사이즈코리아센터는 민간위탁을 통해 기업·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등 인체데이터의 민간 대상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연초 사업계획 확정 후 조달공고 및 계약절차에 약 3개월이 소요, 센터의 실제 운영은 약 9개월가량 진행되었음. 공백기가 없도록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조기 조달공고 및 긴급입찰 등을 통해 계약체결 일정을 앞당겨 센터 운영의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인체치수측정
 - 국제 기준에 상응하는 고품질의 한국인 최신 인체치수 및 산업계 인체형상정보 활용도 향상을 위한 기업 맞춤형 데이터제공 기반 구축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대한 측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사업 성장 도모
 - 국가표준 및 산업규격의 설정을 위한 과학적 자료의 제공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미국, EU 등의 인체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수출 제품의 경쟁력 강화
 - 2025년 5년 주기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을 대비하여 최신 측정 프로토콜 마련 및 제8차 조사 사업의 보완조사(19세 미만 미성년, 70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및 특수계층 등) 수행으로 최신 인체정보를 산·학·연에 보급
 - * 2010(6차 조사) → 2015(7차 조사) → 2020(8차 조사) → 2025(9차 조사)
- 인체정보보급
 - 인체치수정보 보급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산업체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체정보 보급 및 활용기술 개발지원 활성화 추진
 - Size-Korea DB 개선, 지속적인 기초 통계자료 제공으로 효율적인 DB 관리·운영 및 웹기반 User Interface 시스템을 개발

- 누구나 인체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DB 구축 및 관련 웹사이트 정비
- 측정된 인체정보를 이용하여 연령별 대표 체형, 특이 체형 정보 제공 및 관련된 규격에 최신 정보의 지속적 반영
- 미국, 유럽 등의 해외 인체치수정보를 확보·보급함으로써 현지인 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
- 산업군별 응용 통계 및 3차원 모형 제공 서비스 추진으로 연령, 성별에 따른 표준 인체 부위별 분석자료 및 3차원 모형 제공
- 산·학·연·관(軍 포함)의 인체표준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 휴먼빅데이터구축

-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개인 인체정보를 3차원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각종 산업에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휴먼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 휴먼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는 온·오프라인에서 맞춤 제품, 건강, 최적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등 인간 삶의 질 향상
- 3D스캐너로 생성된 디지털인체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신산업 창출 및 육성
- 초기 휴먼 빅데이터 사업은 민간에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국방부, 교육부 등 공공부문에서 추진 후, 민간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의 데이터베이스와 휴먼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인체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지원 필요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별 인체 데이터 수요 증대로 데이터 수집 범위와 데이터 품질(동적데이터 등)을 제고할 필요에 따라 지출소요 증가
- (정기조사) 특히, '25 ~ '26년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추진에 따라 지출 소요가 큰 폭으로 증가 예상 (인건비, 측정장비 대여료, 피측정자 사례비 등)
 - * 5년 주기 정기 통계측정 사업: (2015) 7차 조사 → (2020) 8차 조사 → 9차 조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2,039	-	2,039	-	-	-	2,039	1,658.5	81.3	81.3	355.5	25
2021	1,832	-	1,832	355.5	-	-	2,187.5	2,160.9	118	98.8	-	26.6
2022	1,832	-	1,832	-	-	-	1,832	1,813.3	99.0	99.0	-	18.7
2023	1,725	-	1,725	-	-	-	1,725	1,720	99.7	99.7	-	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 이월 사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1일 측정 인원의 제약이 발생하여 (동일 공간 내 잔류인원에 의한 규제)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못하고 지연되었고, 이로인하여 용역사업의 최종금(사업비의 30%)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2021년 02월 사업이 종료되어 집행 완료함.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및 조달차액
2021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및 조달차액
2022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및 조달차액
2023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및 조달차액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참고자료 참조

참고 1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한국인 인체치수·형상 데이터의 수집 및 보급을 통해 국민의 편리 증대 및 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및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공표하는 국가승인 통계('05년 최초승인)
- (주요내용) '79년 이래 약 5년 주기의 한국인 인체치수·형상 데이터 확보로 우리 국민의 신체변화에 따른 제품·공간설계 등에 기여



① (인체치수측정) 국가통계작성과 산업계의 데이터 수요 대응

- 한국인 인체치수·형상 정보를 조사하고 데이터화 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산·학·연에 보급하기 위한 DB 구축
 - * '79년 국민체위조사(공업진흥청)를 시작으로 '03년 '한국인 인체치수조사(국표원)'로 명칭변경, 5년 주기 정기 및 수요 분야 인체치수측정 실시(직접측정 및 3D측정)
 - ** (추진경과) ('20~'21) 성인(20~69세) → ('22) 고령자(70~84세) → ('23) 미성년(6~19세)

② (인체정보보급) 산·학·연의 서비스·제품 개발 경쟁력 향상

- 사이즈코리아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홍보 및 교육, 측정장비 무상대여 등 민간의 데이터 보급·활용 지원(온·오프라인)



③ (휴먼빅데이터)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인체정보 통합체계 마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체정보 활용도 증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제공을 위한 휴먼빅데이터 구축

참고 2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사업 추진 현황

차수	실시연도	측정	조사대상 (연령)	조사 인원수	측정 항목수	조사용역기관
1차	'79	직접/간접(사진)	0-45	16,977명	117개	한국과학기술원
2차	'86	직접	0-51	21,480명	80개	한국표준연구소
3차	'92	직접	6-50	8,886명	84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차	'97	직접	0-70	13,062명	120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차	'03-'04	직접	0-90	15,576명	119개	대한인간공학(주관) 한국의류학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동적	2-70	551명	35개	
		3차원	8-75	5,168명	205개	
6차	'10	직접	7-69	14,016명	139개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3차원	20-39	848명	177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 동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11	3차원	7-12	1,238명	177개	(재)아이패션비즈센터(주관) 동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12	3차원	40-69	1,228명	182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주관)
	'13	3차원	13-19	1,464명	160개	전남대학교 연세대학교
	'14	3차원	70-85	938명	199개	서울대학교(주관) 동서울대학교 한경대학교
	'15	직접	16-69	6,410명	133개	한국디자인진흥원(주관) 동서울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8차	'20-'21	직접	20-69	5,092명	137개	동서울대학교(주관)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3차원	20-69	4,545명	293개	
	'22	직접	70-84	1,014명	73개	포항공과대학교(주관) 서울대학교 동서울대학교
		3차원	70-84	476명	293개	
	'23	3차원	7-19	1,300명	293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참고 3

기타 참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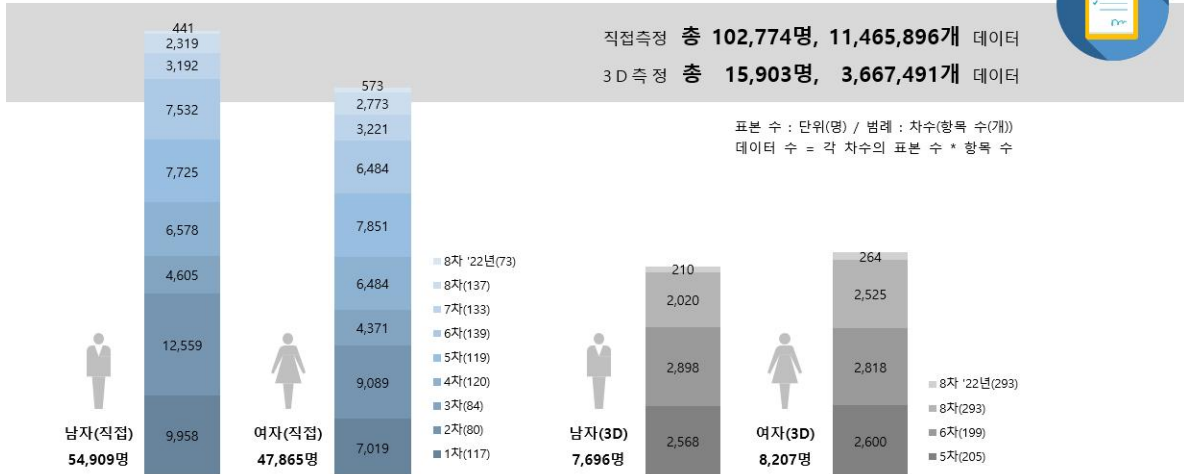
□ 해외 사례

국가/민간	사례내용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CAESAR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사업명 : Civilian American and European Surface Anthropometry Resource project(CAESAR)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2D·3D 피측정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998.4.~2000.9. / Ames(IA), Atlanta(GA), Ottawa(Ontario, 캐나다) 등 12개 도시 / 2,375명 - (네덜란드) 1999.8.~2000.9. / Soesterberg 1개 도시 / 1,255명 - (이탈리아) 2001.2.~2001.9. / Genova 1개 도시 / 796명 ○ 결과물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측정치 및 3차원 영상' 또는 '네덜란드+이탈리아 측정치 및 3차원 영상'에 대한 구입비용은 각각 10,000USD이며, 3차원 형상을 제외한 인체 측정치만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국 측정치' 또는 '네덜란드+이탈리아 측정치'가 각각 3,500USD임
독일 (Size GERM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사업명 : SizeGERMANY - Die deutsche Reihenmessung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3D 피측정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7.1.~2008.10.31. / 독일 전역(North Germany, South Germany, New Federal) / 12,331명 ○ 결과물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GERMANY에서 결과물 관리(iSize 포털에서 제공) - 인체측정치 전체 자료 구매를 위해서는 15,600€가 소요되며, 3차원 형상 열람을 위해서는 3,200€가 추가 소요
일본 (Size-JP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사업명 : 人間特性基盤整備事業(인간특성기반정비사업, Size- JPN2004-06)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2D·3D 피측정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10.~2006.10. / 도쿄, 오사카, 고베, 모리구치 / 6,707명 ○ 결과물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자료를 묶은 세트는 판매하지 않으며, 측정 항목별 및 분석 항목별로 개당 가격이 책정됨(2D : 200~20,000엔, 3D : 10,000~60,000엔) - 외국인에게는 결과물을 판매하지 않으며, 외국 기관과의 결과물 교환은 가능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사업명 : 중국 미성년 인체측정사업, 중국 성인인체치수에 대한 예비조사, 제2차 중국 성인인체치수 조사항목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2D·3D 피측정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미성년 인체측정사업) 2006년~2007년 / 중국 전역(동북화북지역, 중서부지역, 장강중류지역, 장강하류지역, 광둥·광서·북건지역, 운남·귀주·사천구역) / 19,829명 - (중국 성인인체치수에 대한 예비조사) 2009년 / 시안, 톈진, 상하이, 북경 / 3,100명 - (제2차 중국 성인인체치수 조사항목) 2014.12.1.~2018.1.30. / 중국 전역(동북화북지역, 중서부지역, 장강중류지역, 장강하류지역, 광둥·광서·북건지역, 운남·귀주·사천구역) / 약 24,000명 ○ 결과물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수행기관인 Chin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에서 결과물을 관리

□ 관련 도면 및 사진

① 인체데이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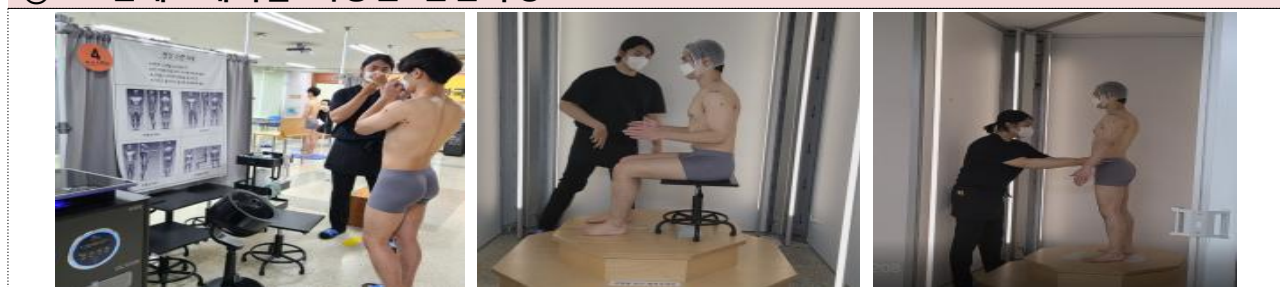
약 11.8만 명, 1,500만 개 이상의 치수(2D) 및 형상(3D) DB 보유



② 인체치수데이터 활용 사례

유아교사용 의자 (무궁유교) 	어린이 머리보호대 (오라운드) 	한국형 노인 보행 보조기 (라이프패킹) 	인체치수활용 의류 (FRU, 홈앤쇼핑)
마스크 사이즈 체계 (LG 생활건강) 	의료용 부목 (코루닷컴) 	웨어블로봇 (혈사휴먼케어) 	검체 채취 부스 설계 (지티사이언)
버스 좌석 설계 (현대자동차) 	대중교통 좌석 개선 (서울교통공사) 	재난구급용 장비 개선 (국민안전처) 	수리온헬기 및 KF-21 보라매 전투기 조종공간 설계

③ 3D인체스캐너를 이용한 전신측정



사 업 명
(5)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37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5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표준기술 개발및보급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장혁조	윤승환 연구사	-
		표준정책과	043)870-5340	043)870-5344	-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 /표준실	김원형 선임	053)718-823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국가표준기술개발 및보급	69,995	74,495	42,187	42,187	△ 34,466	△ 46.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9,995	69,995	69,995	-	-	74,495	74,495	74,495 [74,495]	74,495	74,495 [74,495]	-	-	42,187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40,333	40,333	40,333	-	-	43,339	43,339	43,339 [43,339]	43,339	43,339 [43,339]	-	-	34,910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7,502	7,502	7,502	-	-	7,502	7,502	7,502 [7,502]	7,502	7,502 [7,502]	-	-	3,823
· 상용표준물질개발 보급	13,600	13,600	13,600	-	-	12,236	12,236	12,236 [12,236]	12,236	12,236 [12,236]	-	-	-
· 산업데이터표준화 및인증지원	2,973	2,973	2,973	-	-	3,931	3,931	3,931 [3,931]	3,931	3,931 [3,931]	-	-	629
· R&D사업화표준연계	5,597	5,597	5,597	-	-	7,487	7,487	7,487 [7,487]	7,487	7,487 [7,487]	-	-	1,198
· 국제표준화협력	-	-	-	-	-	-	-	-	-	-	-	-	1,627
· 기획평가관리비	-	-	-	-	-	-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69,995	69,995	69,995 [69,995]	-	-	74,495	74,495	74,495 [74,495]	74,495	74,495 [74,495]	-	-	42,187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4)	69,995	69,995	69,995 [69,995]	-	-	74,495	74,495	74,495 [74,495]	74,495	74,495 [74,495]	-	-	42,18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9,995	69,995	69,995	-	-	74,495	74,495	74,495	74,495	74,495	-	-	42,187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69,995]					[74,495]		[74,495]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40,333	40,333	40,333 [40,333]	-	-	43,339	43,339	43,339 [43,339]	43,339	43,339 [43,339]	-	-	34,910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4)	40,333	40,333	40,333 [40,333]	-	-	43,339	43,339	43,339 [43,339]	43,339	43,339 [43,339]	-	-	34,910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보급	7,502	7,502	7,502 [7,502]	-	-	7,502	7,502	7,502 [7,502]	7,502	7,502 [7,502]	-	-	3,823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4)	7,502	7,502	7,502 [7,502]	-	-	7,502	7,502	7,502 [7,502]	7,502	7,502 [7,502]	-	-	3,823
· 상용표준물질개발 보급	13,600	13,600	13,600 [13,600]	-	-	12,236	12,236	12,236 [12,236]	12,236	12,236 [12,236]	-	-	-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4)	13,600	13,600	13,600 [13,600]	-	-	12,236	12,236	12,236 [12,236]	12,236	12,236 [12,236]	-	-	-
· 산업데이터표준화 및인증지원	2,973	2,973	2,973 [2,973]	-	-	3,931	3,931	3,931 [3,931]	3,931	3,931 [3,931]	-	-	629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4)	2,973	2,973	2,973 [2,973]	-	-	3,931	3,931	3,931 [3,931]	3,931	3,931 [3,931]	-	-	629
· R&D사업화표준연계	5,587	5,587	5,587 [5,587]	-	-	7,487	7,487	7,487 [7,487]	7,487	7,487 [7,487]	-	-	1,198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4)	5,587	5,587	5,587 [5,587]	-	-	7,487	7,487	7,487 [7,487]	7,487	7,487 [7,487]	-	-	1,198
· 국제표준화협력	-	-	-	-	-	-	-	-	-	-	-	-	1,627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4)	-	-	-	-	-	-	-	-	-	-	-	-	1,627
· 기획평가관리비	-	-	-	-	-	-	-	-	-	-	-	-	-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4)	-	-	-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우리 기술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화 정책 수립, 국제표준(ISO/IEC) 개발·제안 등을 지원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산업·연구·공공분야에서 사업화 연계가 가능한 고품질 참조표준데이터를 개발·보급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핵심소재(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개발 시 품질·정확도 확인, 시험측정 장비의 교정 등에 활용되는 '표준물질' 개발·보급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핵심산업(스마트제조·자율차·로봇)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에서 활용하는 데이터의 표준화 및 실증을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 추진
- (R&D사업화표준연계) 국가 R&D와 표준화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혁신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R&D에 따른 표준개발 지원
- (국제표준화협력) 주요 표준 선도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첨단분야 국제표준 공동 개발, 국제표준 포럼 구성·운영 등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96년 :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제27조) 제정으로 표준개발 지원근거 마련
- '00년 : 30억원 예산지원으로 표준화기술개발사업 시작
- '07년 : '표준화기술개발사업'과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합
- '09년11월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수립
- '09년 5월 : 녹색성장위원회(지경부)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
- '10년 6월 : 지식경제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으로 통합
- '15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19년 6월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발표
- '21년 4월 :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 '21년 11월 :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 '23년 : 자율주행차, 희토류 등 표준화 전략 수립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참조표준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06년 : 「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참조표준개발계획 반영·개발 추진
- '06년 8월 :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 '06년 8월 :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 및 참조표준 평가·보급
- '11년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규 지원
- '15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20년 : 36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
- '21년 : 55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
- '22년 : 63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

- '23년 : 64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09년 4월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표준물질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09년 6월 : 제42회 국제표준물질위원회(ISO/REMCO) 총회 개최
- '19년 8월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년 2월 : 신규과제 지원 (반도체 불화수소 가스 등)
- '21년 4월 : 신규과제 지원 (이차전지용 다성분계 양극활 물질 등)
- '22년 2월 : 신규과제 지원 (상용표준물질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성능검증 등)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 산업표준화법 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② 추진경위

- '19년 1월 : 424개 데이터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기업 동향조사 (2018)'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업 기획
- '19년 3월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에 반영
- '20년 8월 :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성장전략(경제중대본)에 반영
- '20년 11월 : 비대면 경제 활성화방안(경제중대본)에 반영
- '21년 4월 : 신규과제 지원(자율차, 스마트제조 등)

- '22년 4월 : 계속과제 지원(자율차, 스마트제조 등)

○ R&D사업화표준연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공통운영요령 제18조(과제기획)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연구개발성과),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 연구성과평가법 제2조(정의)

② 추진경위

- '19년 3월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R&D 단계별 표준연계 체계 구축 등 반영
- '19년 6월 :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R&D 전주기 표준연계 등 반영
- '19년 12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등 산업부 R&D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R&D 과제기획시 표준화 동향조사 의무화
- '20년 6월 :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을 통해 표준을 특허, 논문과 같이 R&D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로 명시
- '21년 1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표준을 연구개발성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역할 정의
- '21년 1월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과기부 제2020-107호)
 - *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2년 1월 : R&D 사업화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지정 사업 시행
 - * '22~'26년(표준화 전략 컨설팅,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등)

○ 국제표준화협력

① 법령상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23년 5월 : 미국 국가표준화 전략 발표
- '23년 5월 : 韓-美 표준정책 비교·검토를 통한 첨단산업 14개 중점분야 도출
- '23년 6월 : 한-미 고위급 표준화 협력 채널 신설 추진
- '23년 7월 : 한-독 양자 협력 채널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년 ~ 계속(일물관리혁신)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58,464	62,235	69,995	74,495	42,18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표준 기술력향상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 기관 등	34,910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국가참조 표준데이터 개발·보급	출연	국가참조 표준데이터 센터	3,823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표준물질 생산기관 등	-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 기관 등	629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R&D사업화 표준연계	출연	한국표준 협회,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1,198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국제표준화 협력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 기관 등	1,627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3) 43,339백만원 → ('24요구) 34,910백만원, 8,429백만원 감액

- (요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ISO/IEC) 개발·제안, 표준화 정책 수립 등으로 초격차 분야에 대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등을 위해 34,910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과제 : $197\text{개} \times 154.32\text{백만원} \times 12/12\text{개월} = 30,402\text{백만원}$
신규과제 : $10\text{개} \times 325\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23\text{개} \times 120\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4,508\text{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3,339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43,339백만원 가. 계속과제 (35,692백만원) • $195\text{개} \times 183.04\text{백만원} = 35,692\text{백만원}$ 나. 신규과제 (7,647백만원) • $11\text{개} \times 352.7\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6\text{개} \times 342\text{백만원} \times 6/12\text{개월} + 26\text{개} \times 120\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7\text{개} \times 120\text{백만원} \times 6/12\text{개월} + 1\text{개} \times 1,630.3\text{백만원} \times 7/12\text{개월} = 7,647\text{백만원}$	34,910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34,910백만원 가. 계속과제 (30,402백만원) • $197\text{개} \times 154.32\text{백만원} = 30,402\text{백만원}$ 나. 신규과제 (4,508백만원) • $10\text{개} \times 325\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23\text{개} \times 120\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4,508\text{백만원}$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23) 7,502백만원 → ('24요구) 3,823백만원, 3,679백만원 감액

- (요구) 산업·연구·공공분야에서 사업화 연계가 가능한 고품질 표준데이터를 개발·보급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해 3,823백만원 요구
- (산출) 신규과제 : $1\text{개} \times 4,164\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3\text{개} \times 311.1\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3,823\text{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502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7,502백만원 가. 계속과제 (7,502백만원) • $13\text{개} \times 577.1\text{백만원} = 7,502\text{백만원}$	3,823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3,823백만원 가. 신규과제 (3,823백만원) • $1\text{개} \times 4,164\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3\text{개} \times 311.1\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3,823\text{백만원}$

③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 ('23) 12,236백만원 → ('24요구) -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236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12,236백만원 가. 계속과제 (11,950백만원) • $43\text{개} \times 277.9\text{백만원} = 11,950\text{백만원}$ 나. 신규과제 (286백만원) • $1\text{개} \times 286\text{백만원} \times 12/12\text{개월} = 286\text{백만원}$	-	○ -

④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 ('23) 3,931백만원 → ('24요구) 629백만원, 3,302백만원 감액

- (요구) 스마트제조, 자율차, 로봇 등 핵심 산업 분야 산업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화를 위한 계속
과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629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과제 : 4개x157.2백만원x12/12개월 = 629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31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3,931백만원 가. 계속과제 (3,931백만원) · 4개x982.7백만원 = 3,931백만원	629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629백만원 가. 계속과제 (629백만원) · 4개x157.2백만원 = 629백만원

⑤ R&D사업화표준연계

: ('23) 7,487백만원 → ('24요구) 1,198백만원, 6,289백만원 감액

- (요구) 산업기술 R&D 단계에서 표준개발을 병행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고 우리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 추진 등을 위해 1,198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과제 : 3개x399.3백만원x12/12개월 = 1,198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487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7,487백만원 가. 계속과제 (7,487백만원) · 3개x2,495.7백만원x12/12개월 = 7,487백만원	1,198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1,198백만원 가. 계속과제 (1,198백만원) · 3개x399.3백만원x12/12개월 = 1,198백만원

⑥ 국제표준화협력

: ('23) - → ('24요구) 1,627백만원, 신규

- (요구) 주요 표준 선도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초격차 분야 국제표준 공동 개발,
국제표준 포럼 구성·운영 등을 위해 1,627백만원 요구

- (산출) 신규과제 : 6개x361.6백만원x9/12개월 = 1,627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	1,627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1,627백만원 가. 신규과제 (1,627백만원) · 6개x361.6백만원x9/12개월 = 1,62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안 제안건수 (단위: 건)	목표	48	50	51	52	53	최근 5개년도 성과 평균인 50개를	지원과제로 국제 표준화기구(공적, 사실상)에 제안한 국제표준안 건수의 합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안 제안 여부 확인
	실적	50	51	54	57	-	'21년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차년도 부터 지속적으로		
	달성도	104.2	102.0	105.9	109.6	-	상향하는 방향으로 목표치를 수정		
국제표준화기구 승인 신규 국제표준안 건수 (단위: 건)	목표	34	38	39	40	41	국제표준안 제안 건수 대비 국제 표준화기구 신규	국제표준화기구 (공적, 사실상) 신규 국제표준안 채택 건수의 합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추진 승인 여부 확인
	실적	38	40	43	43	-	국제표준안 제안 건수 상향건수를		
	달성도	111.8	105.3	110.3	107.5	-	반영하여 목표치 산출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참조표준 DB 활용도 증가 (단위: 건수)	목표	-	-	60,000	62,000	64,000	직전 5개년도 접속건수 추이를 고려하여 증가량의 평균치 수준인	(금년도 접속건수 - 작년도 접속건수)	국 가 참 조 표 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전수조사 (www.srd.re.kr)
	실적	57,903	84,597	88,530	90,351	-	60,000건을 '22년 목표로 설정하고 차년도부터 상향		
	달성도	-	-	147.6	145.7	-	하는 방향으로 목표치를 설정		

* '22년 일몰 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접속 건수 위주의 성과지표를 사업화 연계수, 활용만족도 등을 반영한 “참조표준 활용지수”로 변경 추진 중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상용표준물질 보급 (단위: %)	목표	신규	80	80	80	80*	ISO 17034 인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기관이 한국인정 기구(KOLAS) 인정 획득 난이도를 고려하여 80% 수준으로 성과 목표설정 후 매년 유지	표준물질 보급수 /지원 표준물 질의 수 x 100	한 국 인 정 기 구 인정서 취득 여부 확인
	실적	-	85	100	100	-			
	달성도	-	106.0	125.0	125.0	-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상호운용 데이터 표준제정 (단위: 종)	목표량	-	신규	1	1	1*	사업분야별 상호 운용 관련 데이터 표준 제정	매년 초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성과조사를 통한 표준개발 수	NTIS(국가과학 기술 지식 정보 서비스)
	실적	-	-	1	2	-			
	달성도	-	-	100	200	-			

* '24년 예산이 84% 삭감되어 예산 당국과 성과목표 협의 추진

○ R&D사업화표준연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R&D 표준연계 과제 건수 (단위: 건)	목표	-	-	신규	30	60*	'22년 수행예정인 표준화동향조사 120건 대비 표준 연계과제 도출 25% 수준으로 설정 후 매년 유지	기 술 분 야 별 R&D 표준연계 과제 지정 건수의 합	NTIS(국가과학 기술 지식 정보 서비스)
	실적	-	-	-	35	-			
	달성도	-	-	-	117	-			

* '24년 예산이 84% 삭감되어 예산 당국과 성과목표 협의 추진

○ 국제표준화협력 : 해당없음('24년 신규사업)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차세대 LED 칩 광소자의 분광학 기반 특성평가 국제표준 개발 등 156개 ○ 신규과제 : 글로벌 표준화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한미 표준화 협력 기반 조성 등 80개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고레벨 자율주행을 위한 긴급대응 기능(MRM Minimal Risk Maneuver) 시험평가방법 국제표준 개발 등 152개 ○ 신규과제 : 혹한 및 해양 환경에서 체온저하 특성을 고려한 체온보호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성능평가 국제표준 개발 등 82개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다수의 API 기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API 중계방식 국제표준 개발 등 164개 ○ 신규과제 :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누설 안전 요구사항 국제표준개발 등 76개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친환경 선박용 고망간 압연강판 및 고망간강 플랜지 국제표준 개발 등 195개 ○ 신규과제 : 자율주행차 5G 통신 기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 국제표준 개발 등 51개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과제 : 심전도 참조표준 진단 알고리즘 탑재한 의료 사고 예방기기 개발 등 7개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과제 : 관절가동범위 참조표준 개발보급을 위한 측정 디바이스 개발 및 웹서비스 제공 등 13개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참조표준데이터를 활용한 냄새물질 유입 예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13개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심장질환 진단지원 시스템 및 3채널 웨어러블 심전도기기 개발 등 13개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과제 :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 표준가스 개발 및 보급 등 45개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과불화합물(PFCs)분석용 인증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등 45개 ○ 신규과제 : 이차전지용 다성분계 양극활물질 상용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등 12개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고경도 세라믹 및 초경합금용 비커스 경도 상용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등 12개 ○ 신규과제 : 브롬계 난연제 HBCDD(Hexabromocyclododecane) 분석용 EPS 표준물질 개발 등 42개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식육 중 퀴놀론계 항생제 표준물질 개발 등 43개 ○ 신규과제 : 상용표준물질 활용 성능분석 및 중기사업 기획 1개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2021	○ 신규과제 : 자율주행차 분야 데이터 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운영 등 3개
2022	○ 계속과제 : 스마트제조 분야 데이터 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운영 등 3개 ○ 신규과제 : 지능형 로봇 분야 데이터 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 운영 등 1개
2023	○ 계속과제 : 스마트제조 분야 데이터 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운영 등 4개

○ R&D사업화표준연계

2022	○ 신규과제 : R&D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표준화 동향조사 및 전략 창출 등 3개
2023	○ 계속과제 : R&D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표준화 동향조사 및 전략 창출 등 3개

○ 국제표준화협력 : 해당없음('24년 신규사업)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전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기술 등 우리나라 첨단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

- (중점분야) 韓·美 산업 정책* 비교를 통해 선정한 12개** 첨단분야

* (韓)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23.4), (美) 8대 핵심 신기술·6대 응용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전략('23.5) → 韓-美 정책 검토를 통해 12개 중점 추진 분야 도출

** AI, 양자기술, 디지털 ID, 청정에너지, 스마트제조, 지능형 로봇,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반도체 장비, 미래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생명공학, 핵심소재, 이차전지, 항공·방산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디지털전환시대 핵심인 참조표준데이터(고품질 빅데이터)를 지속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데이터 기반 신 사업화 연계 지원
- 참조표준 전문생산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국가 R&D 결과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연계하여 국가지식 자산화
- 참조표준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신산업 창출 기대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 국외 의존도가 높은 표준물질 개발, 보급을 통해 표준물질 관련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산업의 측정 정밀도 향상 효과 기대
-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중장기적 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체계 수립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표준물질 활용 기대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 분야의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로 기업의 데이터 활용성 제고에 따른 신제품·서비스 창출 가속화로 데이터 관련 산업 발전

○ R&D사업화표준연계

- 국가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친 표준연계를 통해 R&D 투자 효과성 제고, 도출된 표준성과의 체계적인 관리로 연구성과 확산 및 글로벌 주도권 강화 기대

○ 국제표준화협력('24년 신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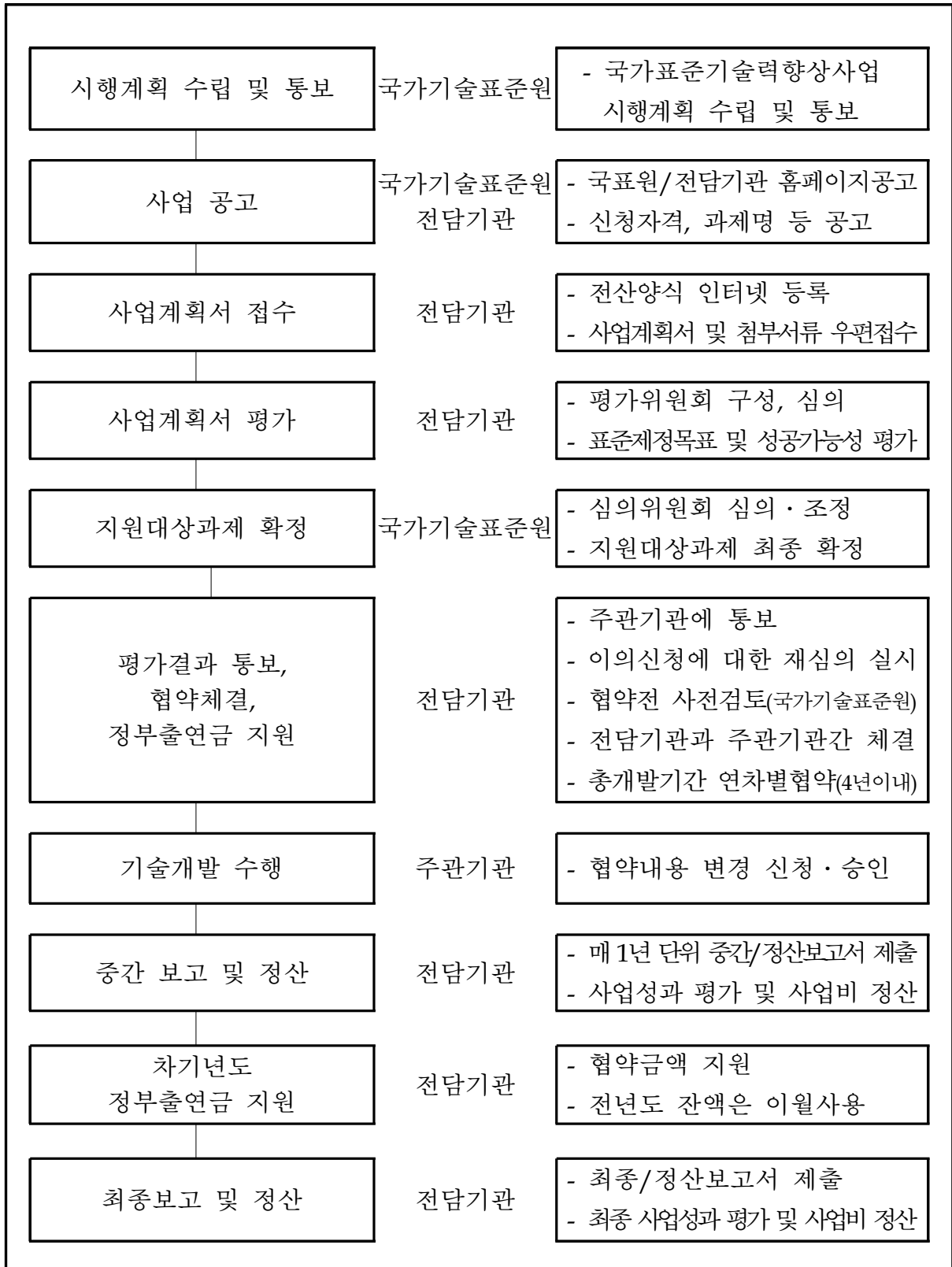
-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첨단 융복합 분야의 기술교류를 통해 공동의 미래시장 선점 가능·국제표준 개발 추진 용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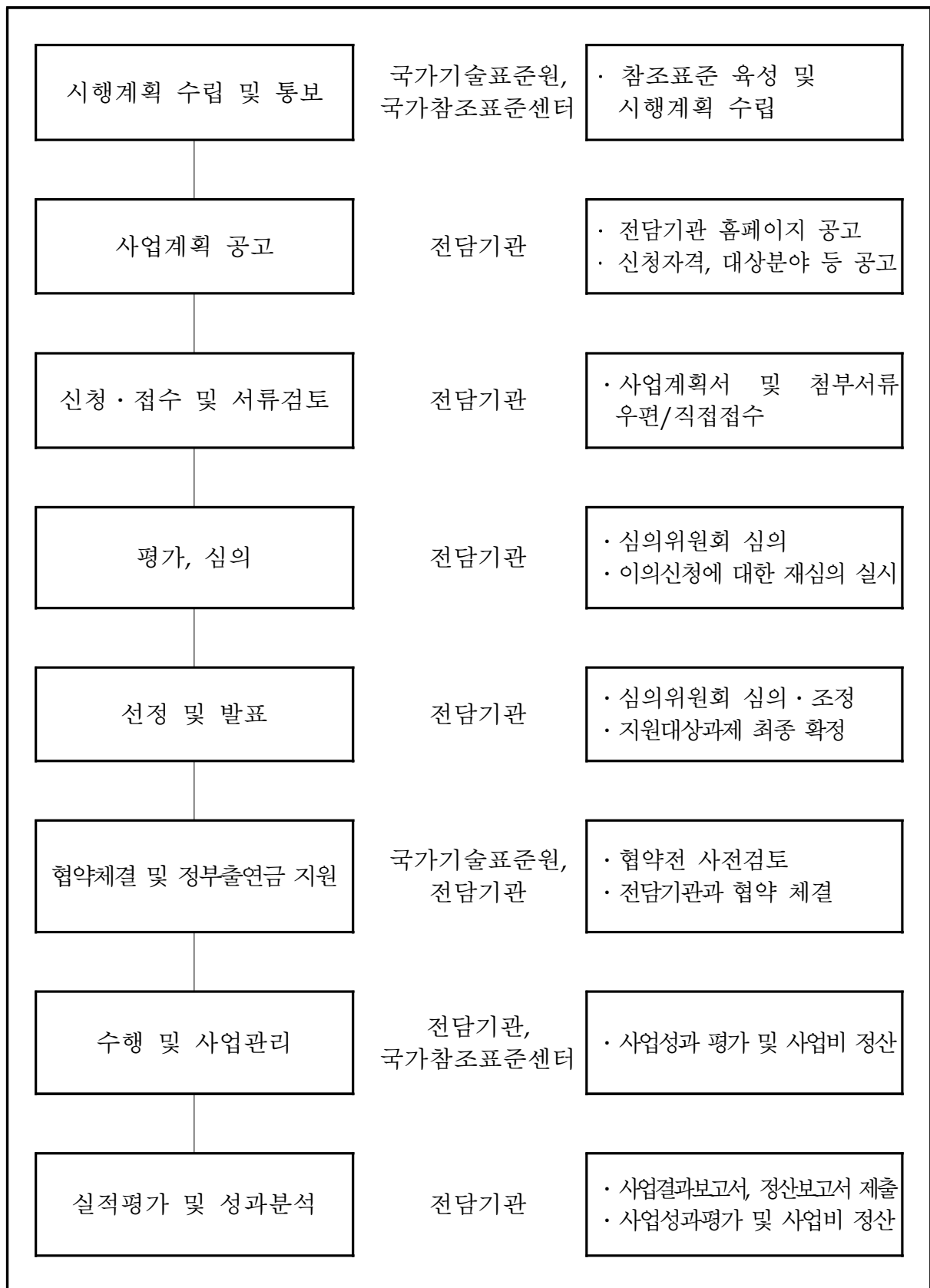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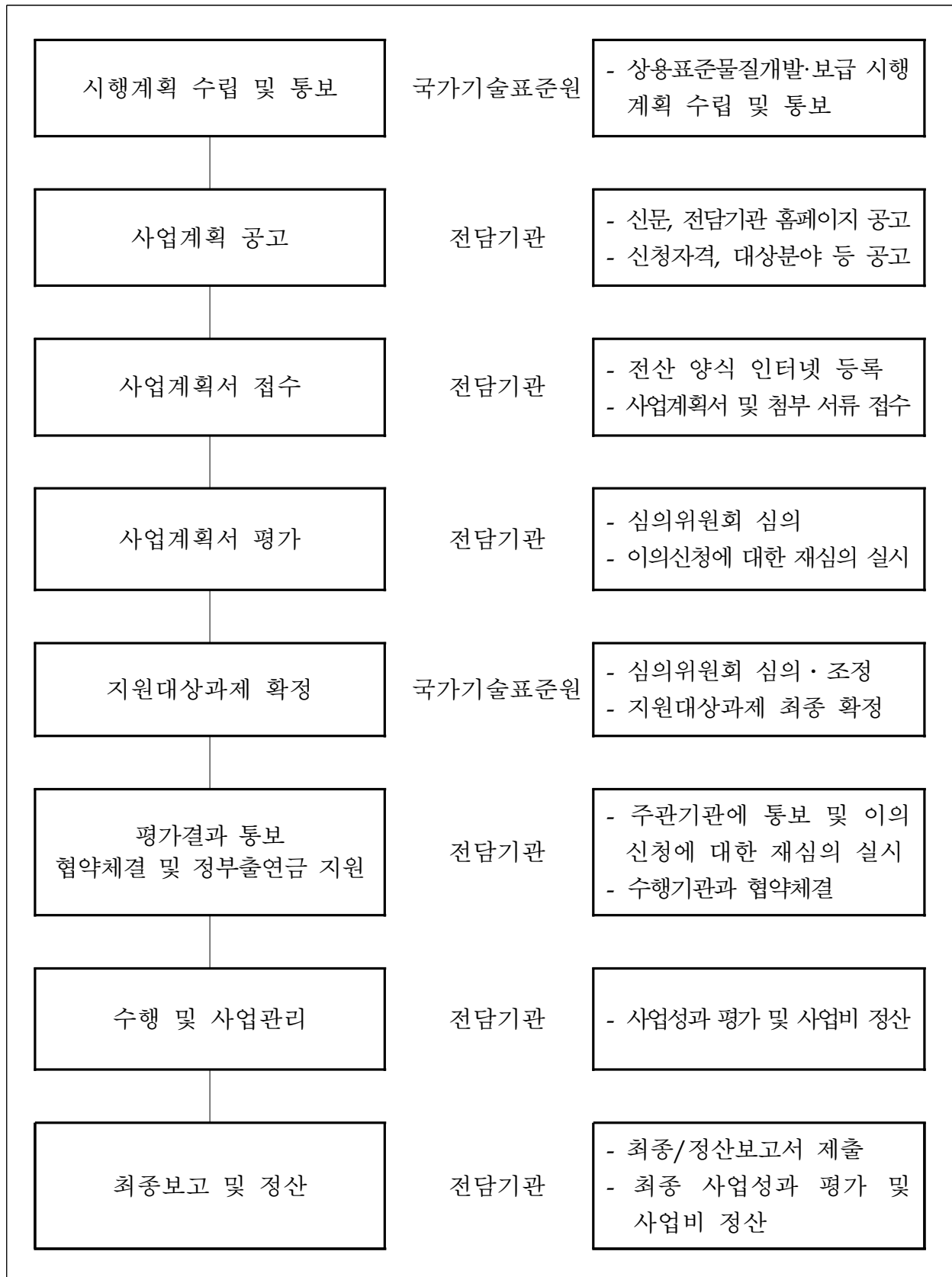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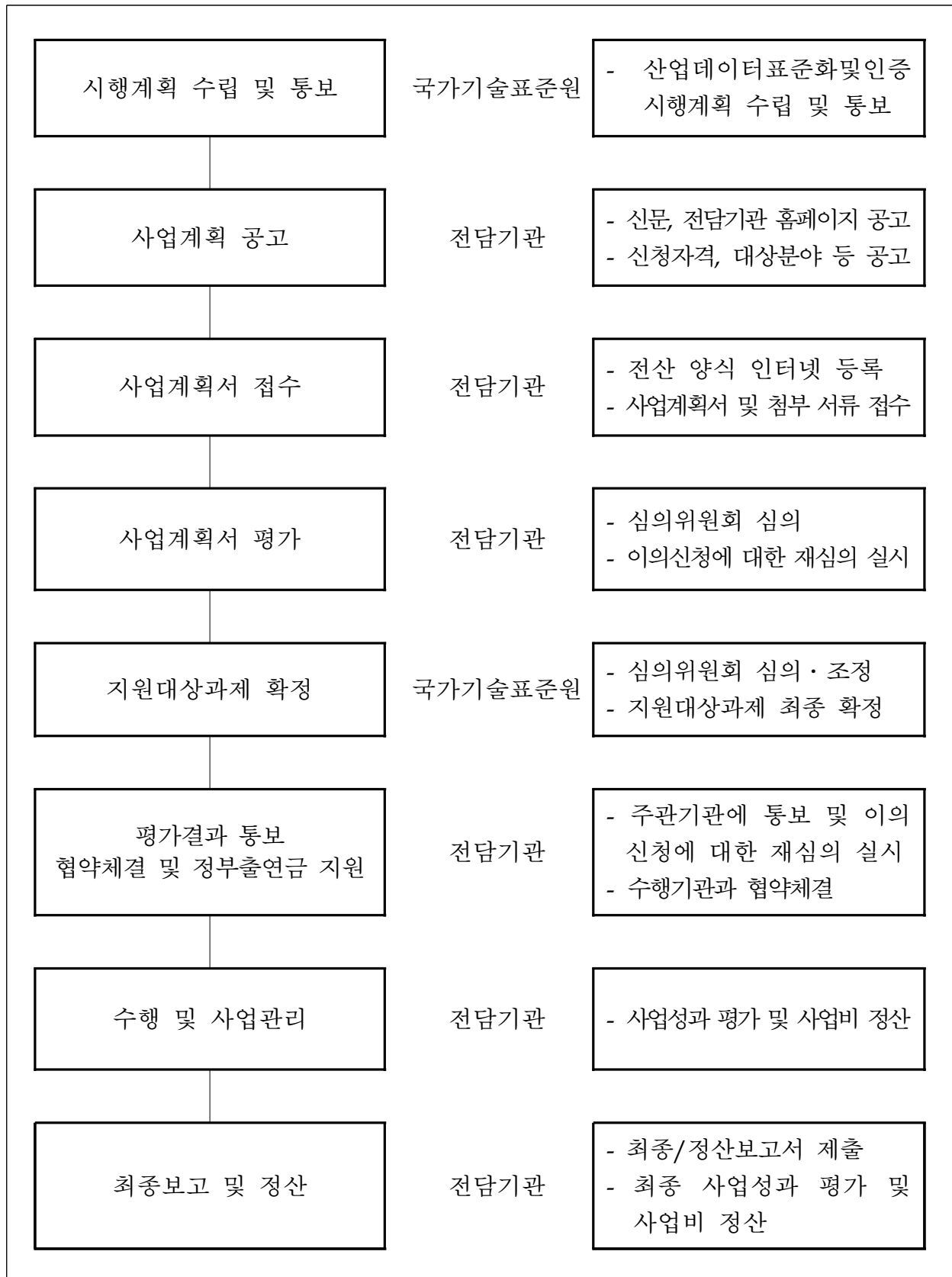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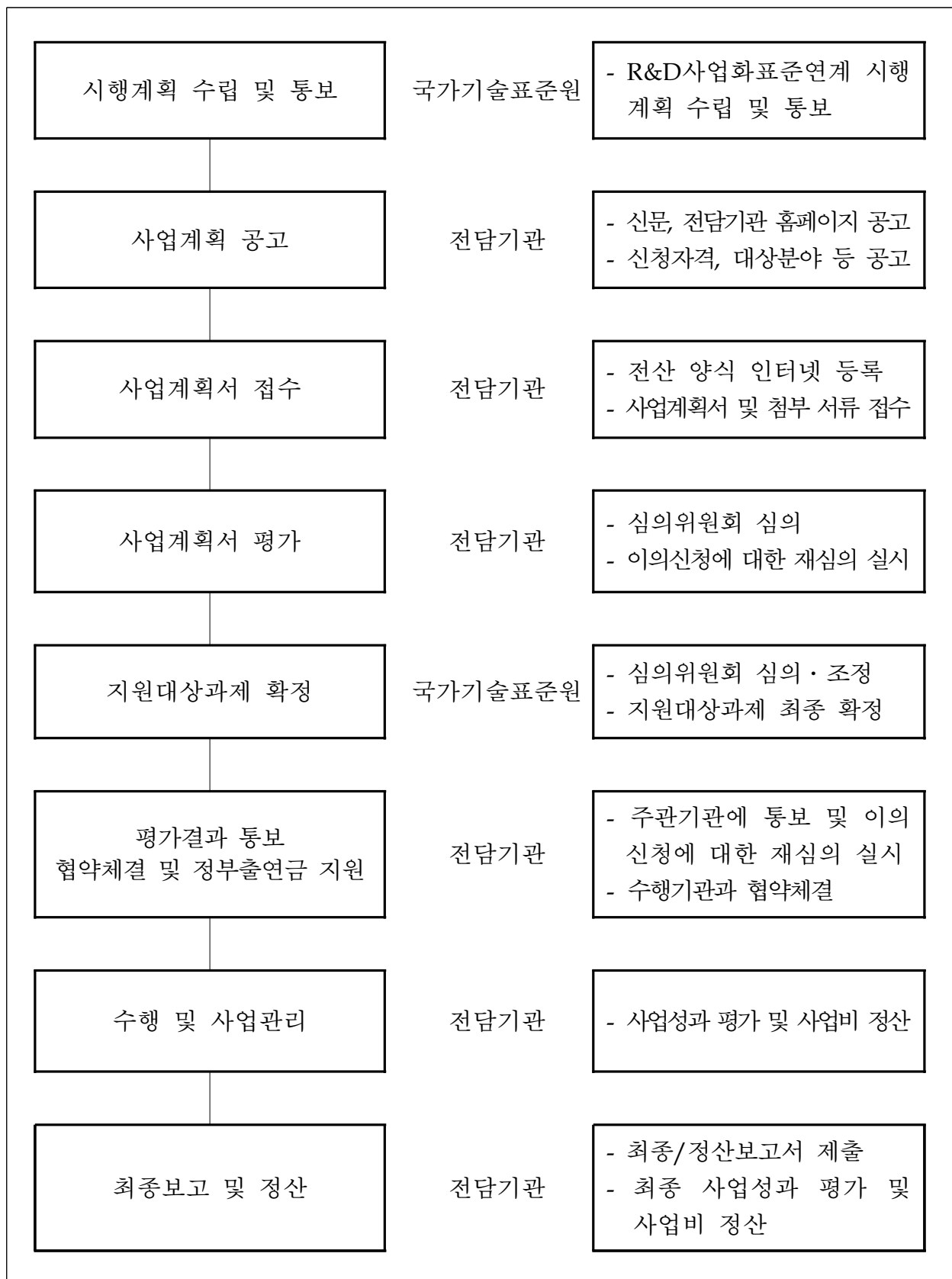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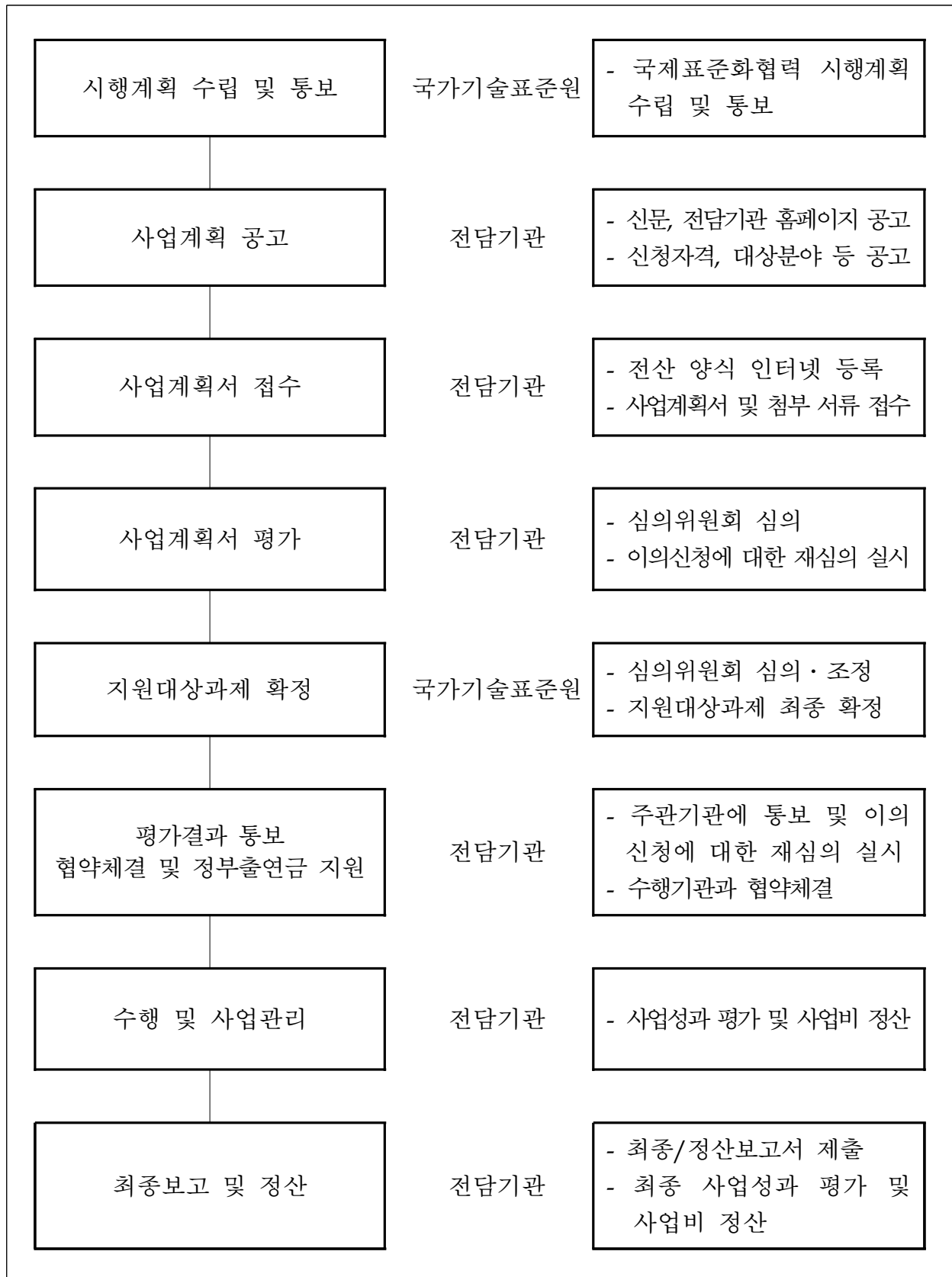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 R&D사업화표준연계



○ 국제표준화협력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69,995	69,995	91,616	127,291	152,719	
'23~'27		74,495	74,869	77,864	80,200	81,80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산중위 '20년 결산보고서) 지적

○ 지적사항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사업으로 수행한 7개 과제 중 6개 과제는 과제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음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 하도록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향후추진 방향

- 국가간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의 표준·기술 규정에 국제표준 수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략적 도구로서의 미래 유망 첨단산업 분야 표준 발굴
- 우리 기술 선도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및 표준화기반조성 추진
 -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과 중소·중견 기업 보유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제안 확대로 국제적 강소기업 육성

○ 세부추진 계획

- 표준화 정책과 국가 상위계획(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2대 국가전략기술, 국가 탄소중립 기본 계획,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등)에 따른 전략적 국제표준화 추진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향후추진 방향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데이터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운영

과 데이터센터간 연계율 통해 신뢰성 있는 국가참조표준데이터 제정 및 보급

○ 세부추진 계획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의 필수 기반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추진

③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 해당없음('23년 종료사업)

④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

○ 향후추진 방향

- 데이터 상호운용성 수준 진단 및 인증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의 개발을 촉진

○ 세부추진 계획

- 3대 시범분야(자율차, 스마트제조, 로봇)로 시작하여 지속 확대할 예정

⑤ R&D사업화표준연계

○ 향후추진 방향

- 국내 단독 R&D 표준연계에서 국제협력 R&D 표준연계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R&D 사업의 효과성 제고 마련

○ 세부추진 계획

- R&D 사업화 지원을 위해 과제 기획시 표준선행기술조사·전략연구, R&D 표준 성과에 대한 전문 관리·유통 등 R&D 전주기 표준연계 지원

⑥ 국제표준화협력

○ 향후추진 방향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세계지형이 재편됨에 따라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확보를 위해 선도국(美·獨 등)과의 표준 협력을 강화

○ 세부추진 계획

-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 교류, 국제표준 아이템 발굴 등을 통한 국제표준(안) 공동 개발, 국제표준 포럼 구성·운영
- 향후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기술
- 사업의 전체 계획 및 중장기 재정소요와 재원조달계획 등의 예산조치 가능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 평가 결과('23) : 우수(91.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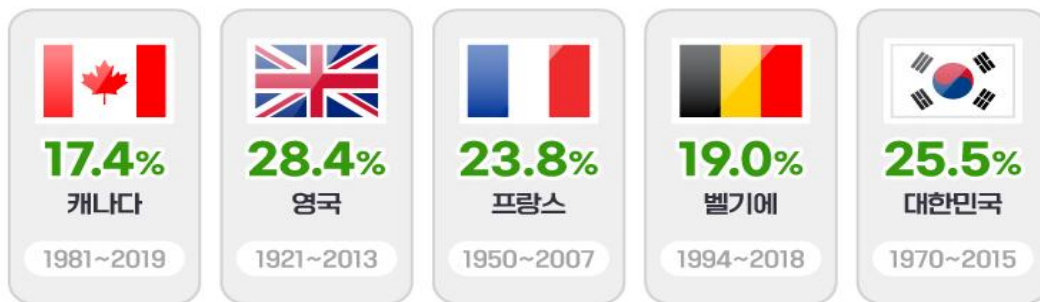
12) 부처 건의사항

- 최근 “표준”이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라 과학기술적 연구성으로 인정된 만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표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
 - **全 산업분야를 다루는 만큼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사업에 대한 지속 투자 필요**

연구성과평가법 제2조 정의 ('20.12 개정)

4.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 표준이 연구성으로 인정되는 등 그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민간 주도의 표준화 기반이 부족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수립 등 지원 필요
 - 개별표준의 경제적 효과 등을 직접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미래 투자임(참고 : 표준의 경제적 효과분석)



※ 출처: ISO paper, “Standards & economic growth”(2021)
KOTIS, 표준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분석(2022)

- WTO/TBT 협정에 따라, 기술 분야별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국가별로 추가적인 기술기준 제정을 금지하고 해당 국제표준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수출 위주 국가는 “표준” 개발에 국가적 관심이 필요
 - 반도체·양자기술·AI 등 핵심분야에 대한 美·中의 표준·기술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첨단기술 및 미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가 시급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56,664	1,800	58,464	-	-	-	58,464	58,464	100	100	-	-
2021	62,235	-	62,235	-	-	-	62,235	62,235	100	100	-	-
2022	69,995	-	69,995	-	-	-	69,995	69,995	100	100	-	-
2023	74,495	-	74,495	-	-	-	74,495	74,795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56,664	58,464	58,464	58,464	-	58,464	58,464	-	-	100
2021	62,235	62,235	62,235	62,235	-	62,235	62,235	-	-	100
2022	69,995	69,995	69,995	69,995	-	69,995	69,995	-	-	100
2023.	74,495	74,495	74,495	74,495	-	74,495	74,495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18억 증액 (국가표준기술력향상 30억 증액,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12억 감액)
2021	- 해당없음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붙임)

1.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07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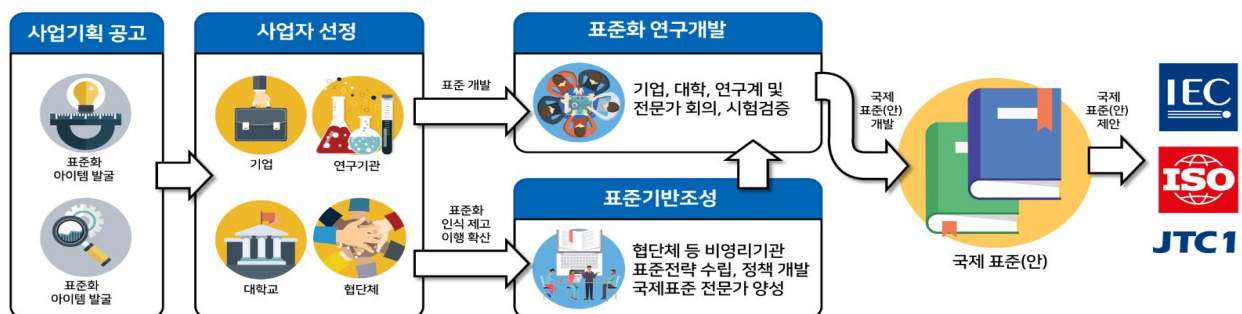
□ 사업개요

사업기간	'07 ~ '계속(일몰관리혁신)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윤승환 연구사(☎ 043-870-5344)		

- 국내 유일의 산업 소분야 범부처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으로, 우리나라 유망 기술의 국제표준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 사업내용

-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ISO/IEC) 개발과 국제표준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대응,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등 기반조성 추진
- (표준화연구개발) 국제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리기술의 국제표준(안)을 개발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에 제안
 -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제표준(안) 개발, 국내 전문가 회의 개최, 시험·분석
- (표준화기반조성) 우리 제품·서비스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국제표준화기구 주요 정책·이슈 대응, 국제협력 등 국제표준 개발 기반 구축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업무흐름도 〉

□ 사업성과

- 국제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영향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 수출 경쟁력 확보
- 국제표준 제안 264건/승인 200건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국제표준 제안(건수)	52	50	51	54	57	264
국제표준 승인(건수)	36	38	40	43	43	200

- (대표 우수사례) 반도체 바이오 센서 성능평가 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제품 사업화 성공((주)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카메라렌즈 방식의 한계(오차,크기)를 극복한 '렌즈프리 반도체 센서' 개발 및 국제표준 제정(IEC 60747-18-1) ·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 '솔'과 '광운대,성균관대'가 공동 연구개발하고, SK하이닉스가 인프라 및 상용화 지원 · '19년 IEC1906어워드 및 '23년 CES혁신상 수상 · '28년 반도체 바이오센서 시장은 10조원 규모 성장 예상 	
-------	--	--

○ '23년 우리나라 국제표준 제안/승인현황

- (성과) 유망산업 분야 관련 총 100건* 신규표준 제안·승인

* ('19) 88건 → ('20) 88건 → ('21) 91건 → ('22) 97건 → ('23) 10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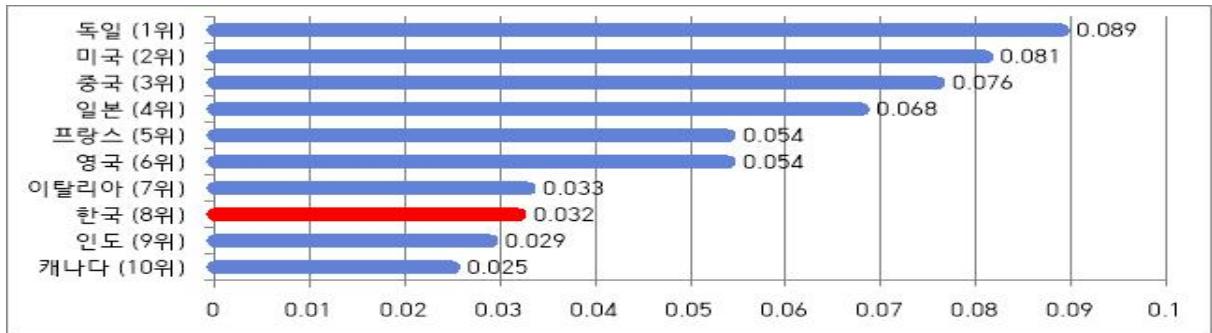
- (내용) 자율·전기차, 로봇, 스마트 선박, 반도체 등

< '22년 국제표준 제안 분야 >

분야		주요 내용
산업경쟁력 강화 (55종)	ISO	제조
		자율·전기차
		선박
		로봇
		인공지능
		드론 등
		기타
	IEC	반도체 등
		원자력
		광섬유·나노
국민행복 실현 (26종)	ISO	기타
		의료·보건
		건축
		환경·자원
		기타

○ 국제표준화 활동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 **ISO 국가별 순위는 8위***로, 최근 8년간('15~'22)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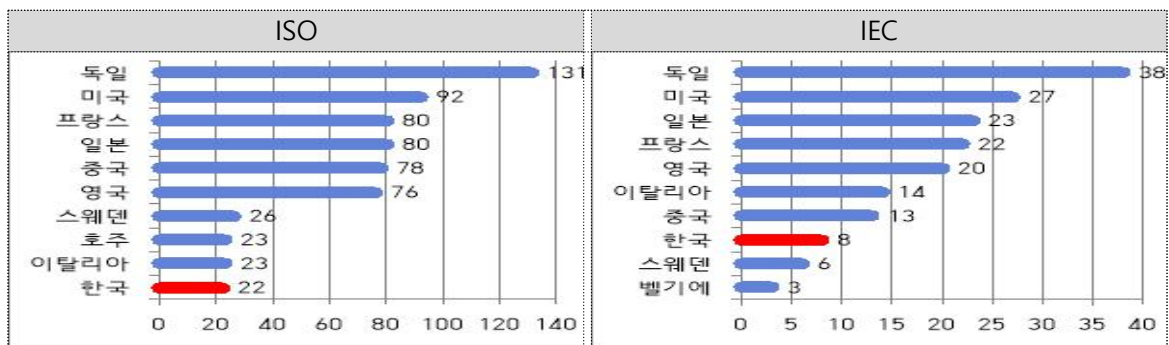


* ISO 분담금(60%), 간사수입(20%), 정회원률(20%)로 순위 산출

** IEC는 별도의 국가간 활동 순위 발표하지 않음

*** (출처) ISO Member body ranking for appointment/election to Council

- '22년 간사 수입은 **ISO 10위('21년 9위), IEC 8위('21년 8위)***



* 국제표준화 참여도는 간사 수입과 국제표준 제안 활동이 핵심 지표이며, 국제표준 제안 수는 현재 ISO/IEC 모두 미공개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통계(국표원 홈페이지, '22.12 기준)

- '22년 한국 최초 **ISO 회장*** 당선, ISO/IEC 정책위원회 이사(9명) 배출 및 국제 임원(의장, 간사, 컨비너) 수입 증가('17년 180명 → '22년 251명)



*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임기 : '24년~'25년)

□ 사업의 성과확산 현황

- (우수성과 발굴·포상) 국제표준화 및 R&D-표준연계 우수사례 발굴·포상을 통해 표준화 활동 독려 및 지속적 참여를 유도

- ① 사례집 보급 : 표준 개발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산·학·연 보급



- ② 포상

- 표준화 활동으로 국가혁신성장 등에 기여한 유공자·단체를 발굴하여 매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

*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4점, 총리 표창 4점 등 40점

- R&D-표준연계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확산을 위해 R&D 연계 우수 표준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우수 연구자 포상

* 장관 표창 3점, 국표원장 표창 3점, 산기평 원장 표창 2점 등 10점



- (기업 지원) 우수기술 보유기업과 표준 전문가를 매칭하여 해당 기술의 국제 표준 개발* 컨설팅('22년 45건) 등 추진

* (사례) 가상현실을 이용한 헬스 및 안전관리 국제표준 개발 등

- (對국민 인식제고) 국제표준화, R&D-표준연계, 표준화 성과관리 등 표준의 역할과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지속



○ 주요 국제표준 제정 우수사례

분야	표준명 (표준번호/발간연도)	주요 표준내용	제안기관 (제안자)
반도체	이식형·패치형 헬스케어용 반도체 센서의 표준화 연구개발 (IEC 60747-18-1 / 2019)	바이오·의료분야에서 현미경을 대체하여 렌즈없이 세포·혈구 등의 계수가 가능한 반도체 센서의 평가 방식에 대한 표준	(주)솔 (이종묵 대표)
보일러	열펌프 보일러·성능시험평가 (ISO 19967-1~2 / 2019)	기존의 보일러 시장을 대체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공기열원 열펌프 보일러의 성능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한국산업기술시험 원 (최준영 수석연구원)
인쇄 전자	인쇄 박막 트랜지스터의 채널 특성 측정 방법 (IEC 62899-503 / 2020)	전자제품 제조시 필수적인 부품이면서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쇄 박막트랜지스터(인쇄 TFT)의 성능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	한국플렉시블일렉 트로닉스산업협회 (정안정 사무국장)
	절연 기판상에 인쇄된 전도성 레이어의 기계적 굽힘 시험법 (IEC 62899-202-5 / 2018)	폴더블 스마트폰, 롤러블 TV 등에 적용되는 기초 소재·부품의 기계적 안정성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안동대학교 (김병준 교수)
IoT	수중센서네트워크 - 개요 및 요구사항 (ISO/IEC 30140-1 / 2018)	국방, 수중플랜트, 항만 등의 분야에 활용 가능한 한국 주도의 세계최초 수중 IoT 및 통신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표준	국민대학교 (박수현 교수)
	미디어중심의 사물인터넷 - API 연구 및 통신 / 미디어 데이터포맷과 API (ISO/IEC 23093-2~3 / 2019)	웨어러블 기기(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사물인터넷 기기간 인터페이스 표준	(주)인시그널 (천승문 소장)
보청기	보청기 적합관리 (ISO 21388 / 2020)	보청기 관련 시설, 장비, 교육, 윤리지침부터 사후관리 에 이르는 적합관리(서비스 기준) 방법과 절차에 대한 표준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이정학 교수)
선박	전기 히트 트레이싱 핸드레일 성능 절차 (ISO 22419 / 2019)	선박의 해양사고방지 및 안전보장을 위한 빙해선박용 결빙방지 핸드레일의 발열 성능 측정 관련 표준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오수연 선임연구원)
철도	철도차량 재활용 및 회수 가능율 산정방법 (ISO 21106 / 2019)	철도차량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재활용 부품 산업 창출을 위한 재활용 및 회수 가능율 산정 방법 표준	한국철도기술연구 원 (이철규 책임연구원)
한방	무연뜸 기구의 일반요구사항 (ISO 21366 / 2019)	주요 한방 치료법인 뜸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무연뜸의 성능과 안전성 보장 관련 시험평가 기준에 대한 표준	원광대학교 (권오상 교수)
베어링	무윤활 스러스트 에어포일 베어링 성능평가 (ISO 22423 / 2019)	산업용 압축기, 항공기,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무윤활 에어포일 베어링의 성능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충현 선임연구원)
체외 진단	체외진단 시험시스템·미생물 병원체의 검출과 동정을 위한 핵산 증폭 기반 검사시험기관 품질관리 실행 지침 (ISO 17822 / 2020)	감염병 진단의 소요기간 단축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한 분자유전학적 검사방법 및 절차에 대한 포괄적 기준 관련 표준	바이오메듀스 (박애자 대표)

2.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 보급사업('11 ~ 계속)

□ 사업개요

사업기간	'11 ~ 계속(일물관리혁신)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이보하 연구관(☎ 043-870-5341)		

□ 사업내용

- **(상용표준물질 개발)** 시제품 제작, 균질성·안전성평가 등을 통한 인증평가를 실시하여 상용표준물질을 개발
 - * 표준물질 : 소재 성분·특성 등을 평가·확인하거나, 장비 개발·교정 등에 사용되는 기준물질
- **(상용표준물질 활용·보급)** 개발된 상용표준물질의 활용·보급이 가능하도록 평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표준물질등록센터 등록 등

□ 주요 성과

- **(물질 개발)** '23년 177종 표준물질 개발(~'23년 223종 개발, 총 400종)

구분	'20-'21년 과제	'21-'22년 과제	'22-'23년 과제
개발과제수(개)	40	12	37
표준물질수(종)	190	33	177

* 반도체디스플레이 140종, 기초화학 83종, 기계금속 61종, 바이오 46종, 전기전자 54종, 환경 16종

- **(보급·활용)** 개발된 표준물질 223종을 376개 기관에 보급

< 업체 형태별 표준물질 보급 현황 >

구분	보급 기관 수	주요 보급대상
기업	255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전자,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등
기관	7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광해광물공단 등
학교	44	한국공학대학교, 경북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 표준물질 활용 형태별 현황 >

품질 관리	시험/교정	연구	숙련도	교육
761	491	309	84	8

— <참조표준데이터 활용 사업화 사례> —

- ① **‘플라즈마 물성’** 참조표준 기술이전(‘11)으로 (주)경원테크는 해외 제품에 의존해 온 반도체 공정해석 핵심기술의 국산화에 성공(‘13)
 - * 경원테크, 두뇌역량우수기업 선정(‘16, 산업부)
 - * ‘K-Speed’ 개발, 누적 매출액 12억원(‘16)
- ② **‘한국인 뇌 MR 영상’** 참조표준 기술이전(‘17), 참조표준 기반 뇌혈관질환 진단 및 예측용 의료기기 개발(‘18)
 - * JLK 인스펙션, 인공지능 뇌경색 분석 솔루션 등 유럽 CE의료기기 인증 7건(‘19)
 - * JLK 인스펙션, AI 뇌 노화 측정 솔루션 등 4건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19)
 - * JLK 인스펙션, 5개 벤처캐피탈로부터 200억 투자유치 및 기술특례 상장에 비심사통과 및 코스닥 상장(‘19)
- ③ **‘한국인 뇌파’** 참조표준 기술이전으로 (주)아이메디신은 뇌파 자동분석 솔루션 플랫폼 iSyncBrain[®] 개발(‘18)
 - 뇌파 참조표준을 이용한 경도인지장애(치매 前 단계) 확률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허가(‘18)
 - * 치매예방 뇌파분석 솔루션 임상 성공(‘19.10)
- ④ **‘기상데이터’**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신재생에너지 종합평가 솔루션’ 개발(‘19)
 - * 기상데이터 참조표준을 사용가능한 형태로 가공해주는 웹변환 서비스 개발(‘20년 운영 예정)하여 사업화 추진
- ⑤ **‘천문학’**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주)라스테크는 태양광 추적 제어기 및 관제시스템 개발(‘19)
 -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태양광 추적제어
 - * 경기도 화성 먹우 태양광 발전소, 발전용량 2MW급 적용 약 10% 효율 향상
 - * 남양호, 새만금 등 발전소에 기술연계 2.5억원이상 매출 예정(‘20)
- ⑥ **‘자동차용 강판’** 동적물성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은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고, 회원제 서비스로 제공(포항공대, 삼성전자 등)(‘21)
 - * 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하여 지속 매출 발생
- ⑦ **‘한국인 변이체’**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주)클리노믹스는 항우울제 종류 및 복용량 결정에 도움주는 유전 판별 키트 제품을 개발(‘21)
- ⑧ **‘세라믹 재료의 전기적 특성’**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주)퍼스트랩은 계면활성제 없이 물가 기름을 섞는 장비를 개발(‘23)하여, 친환경 화장품, 비누, 페인트, 잉크 등 생산 공정에 활용 예상

3.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사업('20년 신규~'23년 종료)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 ~ '23(종료)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기업/대학/연구소/표준물질생산기관 등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이보하 연구관(☎ 043-870-5341)		

□ 사업내용

- **(상용표준물질 개발)** 시제품 제작, 균질성·안전성평가 등을 통한 인증 평가를 실시하여 상용표준물질을 개발
 - * 표준물질 : 소재의 성분·특성 등을 평가·확인하거나, 장비의 개발·교정 등에 사용되는 기준물질
- **(상용표준물질 활용·보급)** 개발된 상용표준물질의 활용·보급이 가능하도록 평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표준물질등록센터 등록 등

□ 주요 성과

- **(물질 개발)** '22년 33종 표준물질 개발('21년 190종 개발, 총 223종)

구분	'20-'21년 과제	'21-'22년 과제	'22-'23년 과제
개발과제수(개)	40	12	37
표준물질수(종)	190	33	진행 중

* 반도체디스플레이 77종, 기초화학 57종, 기계금속 36종, 바이오 34종, 전기전자 13종, 환경 6종

- **(보급·활용)** 개발된 표준물질 190종을 280개 기관에 보급

< 업체 형태별 표준물질 보급 현황 >

구분	보급 기관 수	주요 보급대상
기업	198	삼성전자, LG전자, SK이노베이션, POSCO 등
기관	45	국립환경과학원, 당진화력발전소, 원주지방환경청 등
학교	37	서울대, 울산과학기술원, 성균관대 등

< 표준물질 활용 형태별 현황 >

품질 관리	시험/교정	연구	숙련도	교육
554	357	225	61	6

4.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21년 신규~'24년 종료)

□ 사업개요

사업기간	'21 ~ '24(종료)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김용득 연구관(☎ 043-870-5347)		

□ 사업내용

- 분야별 데이터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상호운용성 수준을 진단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 **(표준제정)** 상호운용성 확보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기존 KS 분석, 보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 대상 선정 및 표준 개발
 - *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시스템 별로 상이한 데이터 형식, 공통요구사항 등을 데이터 관련 이해관계자(산·학·연·관)와 합의
- **(상호운용성)**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 또는 제품·서비스의 상호운용성 수준을 진단하여 기업활동 지원
 - * 기업이 활용할 데이터 또는 출시할 제품·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표준을 기반으로 출시 전 단계에서 확인하여 상용화 가능성 제고 및 출시시기 단축

<데이터표준 및 실증 추진>

자율주행차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표준) 위도, 경도, 고도 등 위치데이터, 브레이크압력, 가속도 등 차량데이터, 교차로, 신호정보 등의 교통데이터 표현형식(format) 표준화 ○ (상호운용성 실증) 실증단지·센터 간 데이터 연계방안 및 지역 간 호환성 확보전략 수립, 자율주행차 데이터 호환성 실증
스마트제조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표준) 스마트팩토리 내 센서 간, 센서-솔루션 간, 솔루션 간 (MES↔ERP↔PLM↔SCM), 밸류체인 간 데이터 교환 KS 개발 ○ (상호운용성 실증) 스마트 제조 관련 산업현장 기반 실증 방안 수립, 솔루션 간 상호운용성 교차검증

□ 주요 성과

- **(표준제정)** 스마트제조 상호운용성 2종 및 자율주행차 상호운용성 2종 제정

5. R&D 사업화 표준연계('22년 신규~'26년 종료)

□ 사업개요

사업기간	'22 ~ '26(종료)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김영국 연구관(☎ 043-870-5346)		

- 산업기술 R&D 단계에서 표준개발을 병행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고 우리기술의 세계시장 선점 추진

< 정부 120대 국정과제('22.7.) >

◇ (국정과제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內 “R&D 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국가 R&D 성과물을 표준으로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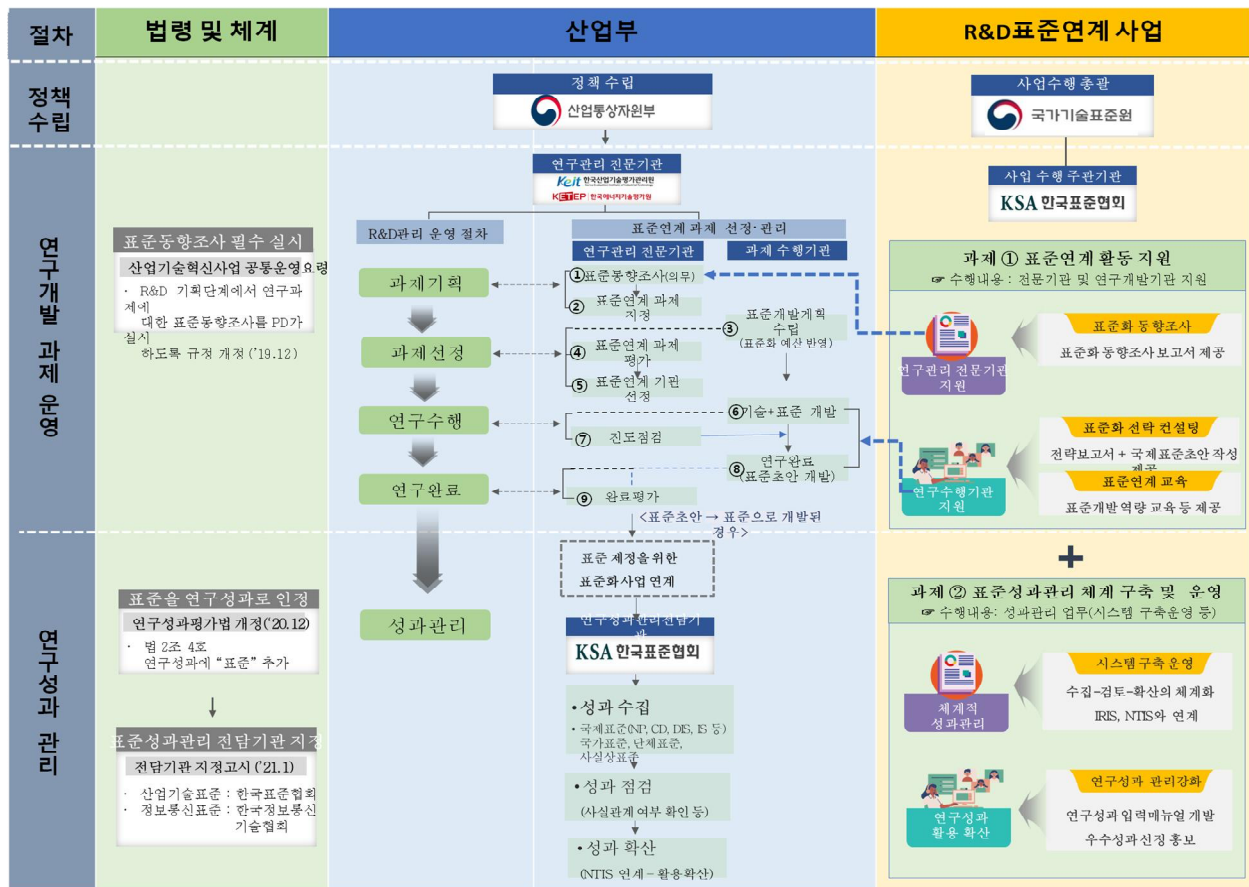
□ 사업내용

- R&D 과제기획·평가 단계에서 표준동향조사·전략연구, 표준성과의 관리·유통·활용확산 등 R&D 전주기 표준연계 지원
- (표준연계지원) R&D 기획단계에서 “표준동향”을 분석하여 표준 선점이 시급한 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수행기관 대상 표준화를 위한 컨설팅 수행
 - * 신기술 및 기술발전이 빠른 분야는 국제표준(IEC, ISO 등)을 선점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
- (표준성과관리)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표준으로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성과관리전담기관 운영
 - * (제28조)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은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관리,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운영 해야하며, 해당 성과를 유지, 보관, 관리 해야한다.

□ 주요성과

- ‘자율주행이 가능한 서비스 로봇플랫폼 개발’ 등 로봇, 자율주행차 등 133건의 신성장기술 분야 표준동향조사를 통해 ‘23년 산업부 R&D 과제 중 표준연계 과제 30건 도출(‘23.8월 기준)
- 21건의 표준화전략컨설팅을 통해 국제표준기구에서 ‘드론 소프트웨어 품질기준’ 등 10건의 국제표준 개발계획 발표
- 표준연구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R&D 표준 연계 상세 절차



- **(기획단계)** 연구관리전문기관(산기평, 예기평)은 신규 연구과제(매년 1,000여 건)에 대한 표준개발 필요성 검토 후 표준연계과제를 지정
 - 국표원은 표준개발 필요성 검토 지원을 위해 매년 300여 과제에 대한 표준화동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제공
 - * 국내외 표준동향, 표준연계 타당성 및 표준화 전망 등이 포함
- **(선정단계)** 연구관리전문기관은 표준연계과제의 표준개발 계획을 평가하고, 표준활동을 위한 표준화 예산*을 과제 내 할당
 - * 1억원 이내를 연구비에 포함하도록 의무화('18)
- **(수행단계)** 한국표준협회는 표준개발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 R&D 수행기관의 효율적 표준개발을 지원
- **(완료단계)** 국제표준 제정으로 즉시 연계가 필요한 과제(표준안)에 대해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으로 후속 지원

6. 국제표준화협력[24년 신규]

□ 사업개요

사업기간	'24 ~ '28(종료)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김영국 연구관(☎ 043-870-5346)		

- 주요 표준 선도국과의 첨단산업 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표준 주도권 확보 및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내용

- 주요 표준 동맹국(미, 독 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포럼 운영, 국제표준(안) 공동개발 등
 - **(표준공동 개발)** 작업반 구성운영, 표준개발 아이템 선정, 국제표준(안) 공동개발, 국제표준화기구 대응
 - **(국제포럼 운영)** 국내외 전문가 교류, 신규아이템 발굴, 표준화 로드맵 개발, TC/SC 신설 협력 추진, 표준 협력 현황 공유 등
- * 국내외 기술표준전문가 및 기업인이 포함된 오픈포럼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분과위원회, 작업반 등을 운영

□ 기대효과

- 기술교류를 통해 공동의 미래시장 선점 가능
- 표준선도국과의 선제적 합의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제정이 용이

사 업 명
(6)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37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국가기술표준원	-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정책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6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3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100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적합성 평가기반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남 하 옥	송 승 용	한 정 민
	사업시행주체	적합성평가과	043-870-5490	043-870-5495	043-870-5491
국제상호인정 협정체결·유지	소관부처 (직접수행)	한국계량측정협회	적합성평가지원센터	양 승 배	02-3489-1373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남 하 옥	송 승 용	한 정 민
숙련도시협 개발·운영	소관부처 (직접수행)	적합성평가과	043-870-5490	043-870-5495	043-870-5491
		한국계량측정협회	적합성평가지원센터	양 승 배	02-3489-1373
	사업시행주체 (출연, 보조)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국제적합성평가 기반구축	1,847.9	2,029	2,088	2,088	59	2.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95	1,995	1847.9	-	147.1	2,029	2,029	1,991	2,029	1,991	-	38	2,088
·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891	891	744.2	-	146.8	905	905	867	905	867	-	38	1,064
· 숙련도시험 개발· 운영	804	804	803.7	-	0.3	804	804	804 [804]	804	804 [804]	-	-	724
· 국제공인기관 인정 업무 지원	300	300	300 [300]	-	-	320	320	320 [320]	320	320 [320]	-	-	300
○ 비목별 분류(합계)	1,995	1,995	1,847.9	-	147.1	2,029	2,029	1,991	2,029	1,991	-	38	2,088
· 일반수용비(210-01)	333.5	333.5	333.1	-	0.4	310.9	278.9	259.7	278.9	259.7	-	19.2	442.6
· 임차료(210-07)	47	47	40.4	-	6.6	30	30	29.8	30	29.8	-	0.2	50
· 재료비(210-11)	14	14	13.7	-	0.3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	-	-	-	-	98	98	97	98	97	-	1	98
· 국내여비(220-01)	7	7	7	-	-	-	-	-	-	-	-	-	-
· 국외여비(220-02)	66	66	0	-	66	45.7	77.7	76.6	77.7	76.6	-	1.1	76
· 사업추진비(240-01)	12.5	12.5	12.5	-	-	11.4	11.4	11.4	11.4	11.4	-	-	11.4
· 일반연구비(260-01)	1,215	1,215	1141.2	-	73.8	409	409	392.5	409	392.5	-	16.5	386
· 민간경상보조 (320-01)	300	300	300 [300]	-	-	320	320	320 [320]	320	320 [320]	-	-	300
· 사업출연금(350-02)	-	-	-	-	-	804	804	804 [804]	804	804 [804]	-	-	724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1,995	1,995	1,847.9	-	147.1	2,029	2,029	1,991	2,029	1,991	-	38	2,088
·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891	891	744.2	-	146.8	905	905	867	905	867	-	38	1,064
- 일 반 수 용 비 (210-01)	305.5	305.5	305.1	-	0.4	310.9	278.9	259.7	278.9	259.7	-	19.2	442.6
-임차료 (210-07)	47	47	40.4	-	6.6	30	30	29.8	30	29.8	-	0.2	50
- 관 리 용 역 비 (210-15)	-	-	-	-	-	98	98	97	98	97	-	1	98
- 국 외 여 비 (220-02)	66	66	0	-	66	45.7	77.7	76.6	77.7	76.6	-	1.1	76
- 사 업 추 진 비 (240-01)	12.5	12.5	12.5	-	-	11.4	11.4	11.4	11.4	11.4	-	-	11.4
- 일 반 연 구 비 (260-01)	460	460	386.2	-	73.8	409	409	392.5	409	392.5	-	16.5	386
· 숙련도시험 개발· 운영	804	804	803.7	-	0.3	804	804	804 [804]	804	804 [804]	-	-	724
- 일 반 수 용 비 (210-01)	28	28	28	-	-	-	-	-	-	-	-	-	-
-재료비 (210-11)	14	14	13.7	-	0.3	-	-	-	-	-	-	-	-
- 국 내 여 비 (220-01)	7	7	7	-	-	-	-	-	-	-	-	-	-
- 일 반 연 구 비 (260-01)	755	755	755	-	-	-	-	-	-	-	-	-	-
- 사 업 출 연 금 (350-02)	-	-	-	-	-	804	804	804 [804]	804	804 [804]	-	-	724
· 국제공인기관 인정 업무 지원	300	300	300 [300]	-	-	320	320	320 [320]	320	320 [320]	-	-	30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300	300	300 [300]	-	-	320	320	320 [320]	320	320 [320]	-	-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국내 공인기관(시험·교정 등) 발급 성적서에 대한 국제 상호 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인정기구(ILAC, IAF)**와의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체결·유지 및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등의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

* 국제인정기구와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설립·운영 중

**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nt'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AF(국제인정기구포럼, Int'l Accreditation Forum)

-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국제인정기구와의 상호인정협정* 유지를 위한 인정제도 및 공인기관 지속적 관리, 국제상호인정분야 유지·확대 및 정기적 국제동등성평가** 대응

* 국제인정기구의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각 국의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등의 성적서를 국제적으로 상호인정

** 국제기구는 국제상호인정을 받은 분야에 대해 정기적(4년주기)으로 국제기준의 준수·이행여부 평가

-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국제기준에서 공인기관의 시험측정능력을 숙련도시험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국내 공인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국제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시험기관 간 비교 등을 통해 시험기관의 시험측정능력을 비교·평가하는 것

-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한국인정기구(국가기술표준원)의 공인기관 인정·관리 업무를 지원(평가계획 수립, 평가반 구성 등)하는 지원기관에 대한 민간보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국가표준기본법>

-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9. 그 밖에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①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①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그 밖에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인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인기관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기관 인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인정기구는 법률과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그 밖에 인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 ①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설비, 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 제3항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한 자를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신청절차, 인정요건,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은 제7조 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관계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협력)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적합성평가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기술 교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2. 12월 :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설립
- '98. 6월 : APLAC-MRA 체결(시험 분야)
- '00. 8월 : APLAC-MRA 체결(교정 분야)
- '00. 11월 : ILAC-MRA 체결(시험 분야)
- '01. 2월 : 제품인증기관 인정기구(KAS) 운영체계 도입
- '01. 2월 : PAC 정회원 가입(제품인증 분야)
- '01. 5월 : ILAC-MRA 체결(교정 분야)
- '02. 3월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2. 9월 : IAF 정회원 가입(제품인증 분야)
- '04. 4월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4. 5월 : 권역별 종합교정기관 육성대책 수립(장관 보고)
- '04. 10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 '07. 4월 : 한국인정기구(KOLAS)로 개칭
- '07. 10월 : PAC-MLA(IAF-MLA) 체결(제품인증 분야)
- '08. 10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 '10. 7월 : PAC-MLA 갱신평가 수검(제품인증 분야)
- '12. 5월 : 국가단일인정체계 구축방안 마련
- '12. 6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 '14. 8월 : PAC-MLA 갱신평가 수검(제품인증 분야)
- '16. 6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및 MRA 확대(메디컬 분야)
- '18. 5월 : PAC-MLA 갱신평가 수검(제품인증 분야)
- '18. 9월 : KOLAS 공인기관 전환(ISO/IEC 17025:2017) 계획 수립 및 시행('19. 4월)
- '20. 4월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1. 4월)
- '21. 3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및 메디컬 분야)
- '21. 5월 : KOLAS 공인기관 전환 완료
- '22. 4월 : KOLAS-KAS 통합 및 생물자원은행 신규 인정제도 시범도입 실시
- '22. 8월 : ILAC-MRA/IAF-MLA 갱신(제품인증) 및 확대(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 Global G.A.P.)
- '23. 1월 : 검증분야 신규 인정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088	4,134	1,995	2,029	2,08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직접수행), 한국계량측정협회(출연, 보조)
- 사업 수혜자 : KOLAS(시험, 교정, 검사, 메디컬, 숙련도, 표준물질, 생물자원은행, 제품인증, 검증 등) 공인기관, 성적서를 활용·수출하는 기업·연구소 및 소비자, 정부 및 공공기관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출연	한국계량 측정협회	724백만원	100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9.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민간 보조	공모선정 ("23 : 한국계량 측정협회)	300백만원	100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 1,064백만원

('23) 905백만원 → ('24) 1,064백만원, +159백만원, +17.6%

- (요구) 국제상호인정협정 유지를 위한 국제동등성평가* 수검('24.5월) 대응예산 관련 증액 요구

* 국제기구는 국제상호인정을 받은 분야에 대해 정기적(4년주기)으로 국제기준(인정절차, 기준 등)의 준수 이행여부 평가

- (산출)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제도 운영 및 공인기관 인정·관리 874백만원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대응 190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05 백만원	<p>○ 일반수용비(210-01) : 310.9백만원</p> <p>- 인정위원회 수당 288백만원 : 12명 × 0.15백만원 × 160회 - 국제문서 번역, 법률자문 및 위원회 개최 지원 등 22.9백만원 : 22.9백만원 × 1회</p> <p>○ 임차료(210-07) : 30백만원</p> <p>- 세계인정의 날 및 평가사 교육 30백만원 : 5백만원 × 6회</p> <p>○ 관리용역비(210-15) : 98백만원</p> <p>- 인정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98백만원 : 98백만원 × 1건</p> <p>○ 국외여비(220-02) : 45.7백만원</p> <p>- 국제회의 참석·대응 45.7백만원 : 3명 × 3.05백만원 × 5회</p> <p>○ 사업추진비(240-01) : 11.4백만원</p> <p>-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방안 협의 11.4백만원 : 0.025백만원 × 10개 기관 × 5분야 × 9회</p> <p>○ 일반연구비(260-01) : 409백만원</p> <p>- 국제동등성유지 및 국제기구 개편에 따른 운영기준 정비 409백만원 = 29.2백만원 × 14과제</p>	1,064 백만원	<p>○ 일반수용비(210-01) : 442.6백만원</p> <p>- 인정위원회 수당 288백만원 : 12명 × 0.15백만원 × 160회 - 국제문서 번역, 법률자문 및 위원회 개최 지원 등 14.6백만원 : 14.6백만원 × 1회 -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통역비 40백만원 : 5명 × 1.33백만원 × 6회 -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운영비 100백만원 : 100백만원 × 1건</p> <p>○ 임차료(210-07) : 50백만원</p> <p>- 세계인정의 날 및 평가사 교육 30백만원 : 5백만원 × 6회 - 국제동등성평가 수검장 임차 20백만원 : 20백만원 × 1회</p> <p>○ 관리용역비(210-15) : 98백만원</p> <p>- 인정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98백만원 : 98백만원 × 1건</p> <p>○ 국외여비(220-02) : 76백만원</p> <p>- 국제회의 참석·대응 46백만원 : 3명 × 3.1백만원 × 5회 -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평가반 여비 30백만원 : 5명 × 6백만원</p> <p>○ 사업추진비(240-01) : 11.4백만원</p> <p>-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방안 협의 11.4백만원 : 0.025백만원 × 10개 기관 × 5분야 × 9회</p> <p>○ 일반연구비(260-01) : 386백만원</p> <p>- 국제동등성유지 및 국제기구 개편에 따른 운영기준 정비 386백만원 = 35.1백만원 × 11과제</p>

②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 724백만원

('23) 804백만원 → ('24) 724백만원, △80백만원, △10.0%

- (요구)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실적 분석을 통한 低수요·既개발 및 유사과제 축소 등 효율화를 통해 전년대비 감액된 예산 요구

- (산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724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04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804백만원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804백만원 : 29.8백만원 × 27건	724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724백만원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724백만원 : 30.2백만원 × 24건

③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 300백만원

('23) 320백만원 → ('24) 300백만원, △20백만원, △6.3%

- (요구) 인정절차 개정 등 인정제도 효율화를 통해 전년대비 감액된 예산 요구
- (산출)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300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0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20백만원 -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320백만원 : 320백만원 × 1건	300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00백만원 -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300백만원 : 300백만원 × 1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숙련도 프로그램 평균 이용 기업수 (단위: 개)	목표	40	40	40	40	-	·사업비 증감과 숙련도 프로그램 최근 3년간 개발건 고려하여 산출	·당해연도 총 숙련도 프로그램 참여기관수 /총 숙련도프로그램 운영건수	·국 가 기 술 표 준 원 내부 통계 및 학술 연구용역 수행 결과 보고서
	실적	48	42	41	-	-			
	달성도	120	105	103	-	-			
숙련도 프로그램 합격률 (단위: %)	목표	79	79	80	80	-	·사업비 증감과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들의 합격률 감안	·(숙련도프로그램의 합격기관수/숙련도 프로그램 참여 기 관수)×100	·숙 련 도 프 로 그 램 결과 보고서 및 KOLAS 시스템 자료
	실적	80	83	90	-	-			
	달성도	101	105	113	-	-			
인정 공인기관 수 (단위: 건)	목표	-	-	-	-	1,212	·공인기관 연평균 증가율(최근 10년간)을 고려하여 산출	·해당 년도 말(12월 31일 기준) 인정 공인기관 수(누적)	·KOLAS 인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산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슬라임의 유해화학물질 분석 시험 분야 숙련도시험 등 24건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위해우려제품 중 MIT/CMIT 분석 등 시험, 교정, 메디컬 등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65건 운영 • KOLAS/K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LAC-MRA, PAC-MLA 동등성평가 대응 및 시정조치를 위한 KOLAS/KAS 품질문서 정비 및 영문화 등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건축 자재의 불연성 시험 분야 숙련도시험 등 26건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배터리팩 내부저항 및 방전성능 분석 등 시험, 교정, 메디컬 등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68건 운영 • 新 국제기준에 따른 국내 KOLAS 공인기관(시험·교정) 운영체계 전환 완료 • 2021년 APLAC-MRA 동등성평가 수검 대응 완료 및 시정조치 완료 • 2022년 APLAC/PAC-MRA 동등성평가 수검을 위한 KOLAS/KAS 통합 추진 • 신규 MRA 스킵 (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기관, Global G.A.P) 확대 추진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태블릿 PC의 접촉 온도 측정 숙련도시험 등 25건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염기성 용액 중 베타 방출 핵종 방사능 분석 등 시험, 교정, 메디컬시험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70건 운영 • 인정기구 통합(KOLAS+KAS) 및 홈페이지(www.knab.go.kr/kolas) 개편 완료 • 생물자원은행 신규 인정제도 시범인정 도입 • 2022년 APLAC/PAC-MRA 확대(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 Global G.A.P)를 위한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 탄소 검증 분야 신규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창호의 기밀성 시험 등 24건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현장시험등 시험, 교정, 메디컬시험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73건 운영 • 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 Global G.A.P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확대 완료 • 검증 분야 신규 인정제도 도입 및 국제상호인정협정(MLA) 확대 신청 • KOLAS 국제동등성평가 수검대비를 위한 절차, 기준개정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동등성평가 대응을 위한 KOLAS 규정·품질문서 개정 및 영문화 - 국제표준 개정(메디컬시험, 숙련도운영)대응을 위한 전환계획 수립 등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동등성평가* 수검을 통한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효력을 유지,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및 검/인증서의 지속적인 국제통용성 확보

* 국제기구(ILAC, IAF)는 각 국의 인정기구와 상호인정협정(MRA/MLA)을 통하여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시험·검/인증 등의 결과를 국제적으로 상호인정하고, 인정기구에 대해 주기적(4년)으로 동등성평가 실시

- MRA/MLA 효력이 유지됨에 따라 국내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가 국제기구(ILAC, IAF)와 MRA/MLA를 체결한 116개국에서 추가·중복시험 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수출기업 지원
- 한국인정기구 및 공인기관의 신뢰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따라, 인정 신청 및 공인기관 수 지속 증가*(연평균 약 6%)

* ('18) 908개 → ('19) 939개 → ('20) 984개 → ('21) 1,049개 → ('22) 1,140개 → ('23.7월) 1,17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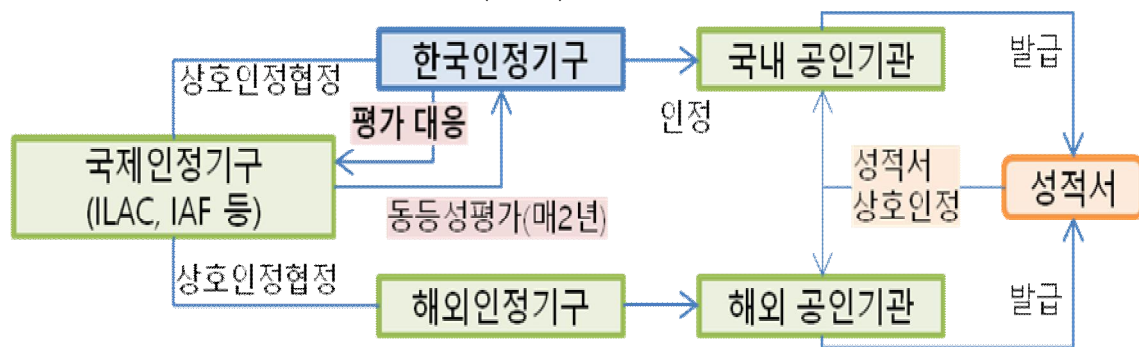
- 생물자원은행(22.4) 및 검증분야(23.1) 신규 인정제도 도입*을 통해, 신산업 수요 및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기업을 지원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 * 한국인정기구 인정분야 : (기존) 시험, 교정, 검사,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표준물질생산기관, 제품인증 총 7분야 → (추가) 기존 분야 + 생물자원은행, 검증 총 9분야
-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 확대 평가(22.8~9월) 성공적 수검*을 통해, 확대 분야 공인기관의 국제 경쟁력 제고
 - *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체결 분야 : (기존) 시험, 교정, 메디컬시험, 제품인증 4분야 → (확대) 기존 + 제품인증(G.GAP 추가), 숙련도시험, 표준물질 6분야
- 환경규제·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수요 대응 및 기업지원을 위해 검증분야의 국제 상호인정 확대신청(24 평가수검) 등 지속적인 국제상호인정분야 확대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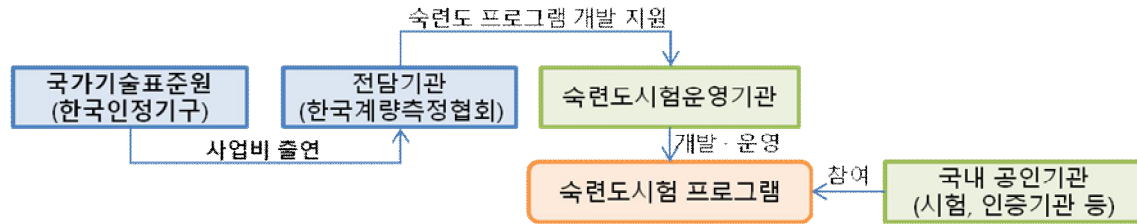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①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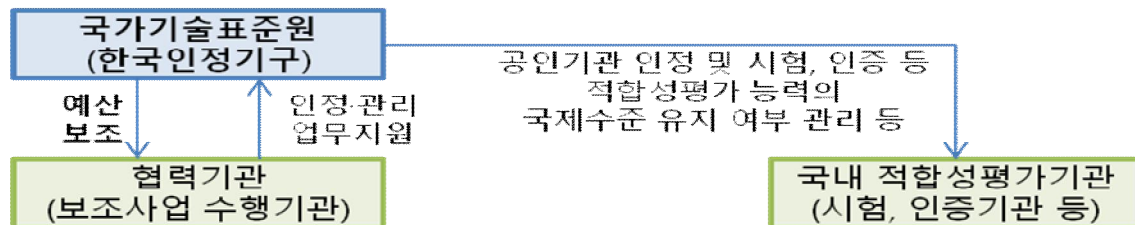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상호인정협정(MRA/MLA) 체결	산업부 및 국제기구	교정, 시험 등 적합성평가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 * MRA/MLA 체결국은 성적서 등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기준 준수/유지 필요
② 국제평가 수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로서 인정체계 국제수준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4년마다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국제동등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이 없는 경우 MRA/MLA 유지

②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출연)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조사/분석	산업부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 교정 등 적합성평가 능력, 평가 분야 국내외 규정, 표준 등 기술문서, 숙련도시험 수요 등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② 기본계획 수립	산업부	시험평가용 숙련도 시료 개발 및 보급체계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③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기관 선정	산업부	숙련도시험(시험능력 비교평가) 프로그램 개발기관 선정 및 개발
④ 숙련도시험운영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	개발시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비교 숙련도시험 실시 (국내·외)
⑤ 후속조치	참여기관	시험능력 비교평가에 대한 결과보고, 분석 및 시정조치를 통한 적합성평가능력 제고

③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보조)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공고	산업부	국가인정체계 운영 지원 보조사업 공고
② 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산업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금 지급
③ 인정체계 운영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인정업무 및 평가사 등록 업무 지원 - (기관 관리지원) 현장평가 후보군 구성, 평가 일정 조율, 인정위원회 심의자료 검토, 인정서 발송 등 - (평가사 관리 지원) 심의 대상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검토 및 등록증 발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2,009	1,909	1,851	1,814	1,796	
'23~'27		2,029	2,224	2,195	2,260	2,30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제동등성평가 수검을 통한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효력 유지 및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검/인증서의 지속적인 국제통용성 확보
 - 지속적 국제동향 파악 및 대응을 통한 국제기준 부합화 추진
- 국내 인정분야 신규도입 및 국제상호인정분야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생물자원은행 및 검증분야 신규 인정제도 도입을 통해, 신산업 수요 및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기업을 지원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 숙련도시험, 표준물질, Global G.A.P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확대 평가의 성공적 수검을 통해, 확대 분야 공인기관의 국제 경쟁력 제고
 - 환경규제·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수요 대응 및 기업지원을 위해 검증분야의 국제 상호인정 확대 신청 등 지속적인 국제상호인정분야 확대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① '20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69.2)
- (결과 요약)
 -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국제동등성평가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 대응 인정
 - 전체사업에 대한 상반기 집행률 미흡
 - 예산절감 노력 필요

② '21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80.0)
- (결과 요약)
 -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비대면평가 진행 등 탄력적 대응 등 노력 인정

③ '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75.1)
- (결과 요약)
 - 예산 보조에 대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적 근거 정비 필요
 - 세부사업명(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과 실질 내역사업명(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이 일치하지 않아 내역사업명 전환 필요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3,088	-	3,088	-	-	-	3,088	2,897.4	93.8	93.8	49	141.6
2021	4,134	-	4,134	49	-	-	4,183	4,035.6	97.6	96.5	-	147.4
2022	2,009	△14	1,995	-	-	-	1,995	1847.9	92.6	92.6	-	147.1
2023	2,029	-	2,029	-	±32	-	2,029	1,991	98.1	98.1	-	38.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1,513	1,513	1,513	1,513	-	1,513	1,513	-	-	100
2021	2,372	2,372	2,372	2,372	-	2,372	2,372	-	-	100
2022	300	300	300	300	-	300	300	-	-	100
2023. 12월기준	1,124	1,124	1,124	1,124	-	1,124	1,124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 (불용) 집행잔액 141.6백만원(업무용역 정산잔액 및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동등성평가가 원격평가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비용(평가반 국외출장비, 임차료 등) 절감 - (이월) 다음연도 49백만원 이월(코로나 19로 인한 국제동등성평가 연기('20.6월 → '21.3월)로 통역비(40백만원) 및 운영비(9백만원) 이월(집행 완료, '21.4월))
2021	- (불용) 집행잔액 147.4백만원(업무용역 정산잔액 및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동등성평가가 원격평가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비용(평가반 국외출장비, 임차료 등) 절감
2022	- (불용) 집행잔액 147백만원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평가 및 회의가 원격회의로 전환되어 국외여비 (66백만원) 절감. 또한 국제기구 동등성평가 수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정책용역비를 예비로 확보하였으나 평가 수검결과, 정책용역 및 기준개정 등이 필요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관련 비용(연구비 등)을 절감)
2023	- (불용) 집행잔액 38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 - (전용) 자체전용 32백만원 (국제상호인정협정 유지를 위한 국제동등성평가 수검('24.5월)대비 관련 국제기구 규정변경사항 파악·대응, 한국인정기구 대표자의 국제기구 총회참석 및 의견제출(투표 등) 등 필수 국제회의의 참석을 위해 일반수용비를 국외업무여비로 자체전용)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9.8.)	국제적합성평가 기반구축 (3731-306)	일반수용비 (210-01)	32	국제적합성평가 기반구축 (3731-306)	국외업무 여비 (220-02)	국제동등성평가("24.5월) 수검대비 관련 국제기구 규정변경사항 파악·대응 및 의견제출(투표 등)을 위한 필수 국제회의 참석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적합성평가 및 인정제도 개요

□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개요

- (정 의) 제품, 공정 등이 규정된 요건(표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시험, 검사, 인증, 검증 등을 통칭
 - * 시험(Testing), 검사(Inspection), 인증(Certification), 검증(Validation & Verification)
- (필요성) 정부, 기업, 소비자 등 각 주체별 목적에 따라 활용 가능
 - (정부/규제기관) 국민 안전, 건강, 환경 등을 위한 제도 운영시 적합성평가기관을 활용 또는 성적서를 수용
 - (기업) 원료·부품 품질확인 및 완제품 성능평가, 해외수출 시 국제적합성평가기관의 성적서를 활용
 - (소비자) 제품 구매시 상품의 안전성 및 품질을 확인

□ 인정(Accreditation) 개요

- (정 의) 국제표준에 따라 적합성평가(시험, 검사, 인증, 검증 등)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권한있는 제3자 기관*이 평가·승인하는 행위
 - * 국제표준(ISO/IEC 17011)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인정기구
- (필요성) 적합성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제인정기구(ILAC, IAF)와 각국 인정기구 간 국제상호인정협약체결*로 시험성적서 등의 국제통용성 확보를 통한 국제무역장벽 해소
 - * 국제인정기구는 각국의 인정기구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동등함을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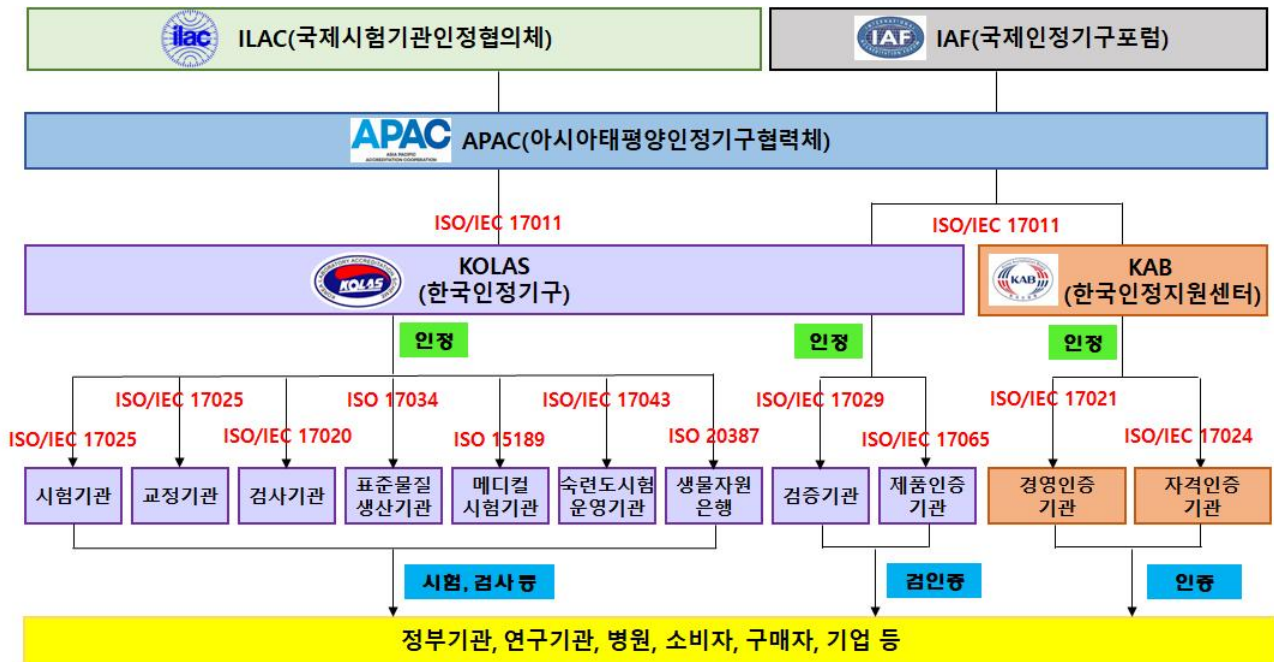
□ 한국인정기구(KOLAS, 국가기술표준원 내 설치)

- KOLAS는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숙련도시험운영, 메디컬시험, 제품인증기관, 생물자원은행 등 인정업무 수행
 - *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 KOLAS는 '92년 설립되어 1,218개 공인기관(23.12)을 관리하며 ILAC/IAF 내 한국 대표기관으로 활동

참고 2

국내외 인정기구 체계 및 현황

□ 인정기구 체계



□ 국내 인정기구 현황

구분	KOLAS	KAB
국문명칭	한국인정기구	한국인정지원센터
영문명칭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 Accreditation Board
로고		
설립년도	'92.12월	'95.9월
인정분야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 메디컬, 숙련도, 생물자원은행, 검증, 제품인증 등 9개	경영시스템인증, 자격인증 등 2개
적합성평가기관 ('22.7월 기준)	1,096개	72개
국제기구	ILAC, IAF	IAF
국내운영기관	정부(국가기술표준원)	민간(한국인정지원센터)

*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기구(IAF)의 확인평가('22.8) 후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로 확정 예정

□ 국제인정기구(ILAC 및 IAF) 현황

-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on,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 (연혁) 1977년 시험기관 등이 발행한 성적서의 국제상호인정(MRA)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해소 및 세계무역 촉진에 기여하고자 설립
 - (조직 및 운영현황)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장 : Ms. Etty Feller(ISRAC, 이스라엘) ○ 12개 위원회 구성 : ILAC 정책 및 지침서작업 진행
규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AC-MRA 서명 : 104개국 102개 인정기구 ○ 지역협력체기구(6개) : APAC(아태), EA(유럽), IAAC(미주) 등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및 유지 ○ 시험·검사기관 인정에 관한 적용문서, 지침문서 발간 ○ 평가사훈련, 숙련도시험 등 정보 및 전문가 교환 지원
ILAC MRA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LAS(한국인정기구) : 시험('00.11), 교정('01.6), 메디컬시험('16.11)

-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국제인정기구포럼)
 - (연혁) 1993년 경영시스템 등 분야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LA)을 통해 검인증서의 신뢰성을 보장을 위해 설립
 - (조직 및 운영현황)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장 : Mr. Emanuele Riva(Accredia, 이탈리아) ○ 10개 위원회 구성 : IAF 정책 및 지침서작업 진행(FOC, DMC포함)
규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F-MLA 서명 : 74개국 82개 인정기구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MLA) 체결 및 유지 ○ 제품 및 경영시스템 인정에 관한 적용문서, 지침문서 개발
IAF-MLA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LAS(한국인정기구) : 제품인증('07.10) ○ KAB(한국인정지원센터) : 7개 경영시스템(품질경영시스템('99.9), 환경경영시스템('04.10), 식품경영컨설팅('15.10) 등), 자격인증('18.10)

붙임 對 브라질 가전 수출규제 대응 KOLAS 지원 사례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기업(삼성, LG 등)의 냉장고를 브라질로 수출 시 현지 시험소에서 안전 및 에너지효율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만 수출 가능
 - * 브라질 국립계량품질기술원(INMETRO) 규정에 따라 브라질 현지 시험소에서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INMETRO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수입허가
- 해외소재 시험기관의 경우, INMETRO의 현장평가 통과후 브라질 시험소와 MOU 체결한 기관만 해외에서 시험 대행 가능
 - **ILAC MRA에 기반한 공인성적서 발행이 가능한 기관만 가능**
 - * KOLAS(시험)는 ILAC MRA 협정 체결을 통해 ILAC 가입국에서 성적서 호환 가능

□ 추진경과 (국내 KOLAS 공인기관인 KTC 사례)

'16. 8.	KOLAS 공인 시험기관 자격 획득 * 냉장고의 안전(IEC 62552) 및 에너지효율(IEC 60335-2-24) 분야
'17. 1.	INMETRO/LABELO(현지 시험기관) 현장평가 수검
'17. 7.	브라질 현지 시험소(LABELO)와의 MOU 체결
'17. 11.	국내에서 브라질 수출을 위한 냉장고 안전/에너지효율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

□ 파급효과

- KOLAS 지원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은 국내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수출 가능 → **수출준비 비용 및 시간부담 경감, 기술유출방지**
 - * 수출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 및 소요시간 (KTC 추산)

구분	브라질 현지 기관	국내기관(KTL 등)
시험성적서 비용	약 300만원 / 모델 + 샘플 운송비(500만 이상) 별도	약 450만원 / 모델
소요 시간	약 9개월	약 8주

※ 냉장고 수출액 [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단위: 천불)

구분	'18	'19	'20
냉장고·냉동고 (HS 8418)	8,411	11,815	14,601

□ 숙련도시험(PT, Proficiency Testing)

- **(정의)** 시험기관간 비교를 통하여 미리 확립된 기준에 대한 참가자의 수행도를 평가하는 것
 - 국제기준에 따라 공인기관은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3년에 1회 이상 (메디컬 분야는 1년에 2회) 숙련도시험에 참가/합격 필요
 - 부적합 시 원인파악 및 시정조치를 통해 해당기관의 시험분석 및 측정 능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회로 활용
- **(운영현황)** 14개*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지정, 169개 기술분야 운영 중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주)한국첨단시험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경찰청 등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절차(현행)



□ 숙련도시험의 효과

- KOLAS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시험·교정성적서가 협정국가에서 동시에 통용이 가능한 국제상호인정 지위 유지를 위한 필수조건 만족

참고 4

「한국인정기구 주요 통계」

□ KOLAS/KAS 공인기관 인정추이 및 현황 ('23.12월 기준)

구분	시험	교정	검사	표준 물질	메디컬	숙련도	제품 인증	생물자 원은행	검증	계
2011년	403	193	46	9	0	0	15	0	0	666
2012년	416	189	49	11	0	0	16	0	0	681
2013년	460	192	52	11	0	7	17	0	0	739
2014년	468	201	50	13	2	7	20	0	0	761
2015년	487	209	55	13	5	8	20	0	0	797
2016년	496	212	58	12	6	9	20	0	0	813
2017년	532	226	61	13	8	9	19	0	0	868
2018년	564	231	62	13	8	11	19	0	0	908
2019년	576	243	67	12	9	12	20	0	0	939
2020년	606	254	68	13	9	12	22	0	0	984
2021년	652	259	75	14	12	13	24	0	0	1,049
2022년	723	274	76	15	13	13	23	3	0	1,140
2023년 12월	774	290	76	18	13	14	22	6	5	1,218

□ 평가사 인정현황 ('23.12월 기준)

구분	시험	교정	검사	표준 물질	메디컬	숙련도	제품 인증	생물자 원은행	검증	계 (중복제외)
선임평가사	148	69	35	5	5	12	13	9	12	308
평가사	302	197	52	12	5	12	30	10	6	626
평가사보	371	178	84	23	9	56	44	25	10	800
기술전문가	13	1	2	9	9	47	0	21	1	103
계	834	445	173	49	28	127	87	65	29	1,837 (1,335)

□ 최근 5년간 KOLAS 공인성적서 발급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험	134,827	175,937	187,059	203,116	167,294
교정	1,887,006	2,051,654	2,169,536	2,309,249	2,187,131
검사	40,062	56,270	71,681	67,381	127,194
메디컬	29,404	59,927	60	510,212	562,010
표준물질	6,494	6,017	5,686	6,005	7,346
계	2,097,793	2,349,805	2,434,022	3,095,963	3,050,975

사 업 명						
(7)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37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7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인증제도 혁신기반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정두식	-	지세한울
	사업시행주체	인증산업진흥과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043-870-5500 1381정보지원팀	- 함종오 팀장	043-870-5581 138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국가인증제도 혁신기반구축	1051	1052	947	947	△105	△1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52	1,052	1,051 [1,051]	-	1	1,052	1,052	1,052	1,052	1,051 [1,051]	-	1	947	
· 1381인증표준정보 센터 운영·개선	1,015.45	1,015.45	1,015.3 [1,015.3]	-	-	1,016.863	1,016.863	1,016.863	1,016.863	1,016.863 [1,016.863]	-	-	911.863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16.55	16.55	16.55 [16.55]	-	-	15.137	15.137	15.137	15.137	15.137 [15.137]	-	-	15.137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0	20	19 [19]	-	1	20	20	20	20	19 [19]	-	1	20	
○ 비목별 분류(합계)	1,052	1,052	1,051 [1,051]	-	1	1,052	1,052	1,052	1,052	1,051 [1,051]	-	1	947	
· 일반수용비(210-01)	71.45	71.45	71.34 [71.34]	-	-	72.863	72.863	72.863	72.863	72.683 [72.683]	-	-	60.863	
· 국내여비(220-01)	3.8	3.8	3.8 [3.8]	-	-	3.484	3.484	3.484	3.484	3.484 [3.484]	-	-	3.484	
· 사업추진비(240-01)	12.75	12.75	12.75 [12.75]	-	-	11.653	11.653	11.653	11.653	11.653 [11.653]	-	-	11.653	
· 일반연구비(260-01)	20	20	19 [19]	-	1	20	20	20	20	19 [19]	-	1	20	
· 민간경상보조(320-01)	944	944	944 [944]	-	-	944	944	944	944	994 [944]	-	-	85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52	1,052	1,051 [1,051]	-	1	1,052	1,052	1,052	1,052	1,052 [1,051]	-	1	947	
· 1381인증표준정보 센터 운영·개선	1,015.65	1,015.65	1,015.3 [1,015.3]	-	-	1,016.863	1,016.863	1,016.863	1,016.863	1,016.863 [1,016.863]	-	-	911.863	
- 일반수용비(210-01)	71.45	71.45	71.34 [71.34]	-	-	72.863	72.863	72.863	72.863	72.863 [72.863]	-	-	60.863	
- 민간경상보조(320-01)	944	944	944 [944]	-	-	944	944	944	944	944 [944]	-	-	851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16.35	16.35	16.55 [16.55]	-	-	15.137	15.137	15.137	15.137	15.137 [15.137]	-	-	15.137	
- 국내여비(220-01)	3.8	3.8	3.8 [3.8]	-	-	3.484	3.484	3.484	3.484	3.484 [3.484]	-	-	3.484	
- 사업추진비(240-01)	12.75	12.75	12.75 [12.75]	-	-	11.653	11.653	11.653	11.653	11.653 [11.653]	-	-	11.653	
· 인증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0	20	19 [19]	-	1	20	20	20	20	19 [19]	-	1	20	
- 일반연구비(260-01)	20	20	19 [19]	-	1	20	20	20	20	19 [19]	-	1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국내기업이 제품 출시 또는 수출 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개선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KC마크의 소비자 인지도,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만족도·인지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성과 분석 및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법정 의무 인증을 KC마크로 수렴하고 KC마크를 국내 대표인증 브랜드로 육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등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 7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제15조의7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①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추진경위

- '04.10. 국정감사 : 인증제도 난립에 따른 통합 필요성 제기
- '05.5.~'06.5. : 「인증제도 혁신 T/F팀」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 * 12차에 걸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개최 (산업자원부)
 - * 국내 인증업체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500여 기업)

< 「국가표준·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주요내용 >

- ① 부처별 인증업무를 종합·조정할 총괄관리 체계 구축
- ② 국가통합인증마크 및 모듈방식 인증제도 검토
- ③ 인증기관의 시설·인력 강화 및 인증정보 네트워크 구축
- ④ 국제적 인정기구 육성 및 인증기준의 국제부합화, 규격간 통일화

- '09.4.1.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공포(KC마크 도입 등 규정)
- '09.7.1. : 산업부 소관 9개 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도입
- '10.6.30.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고시
 - * 복수의무인증제품에 대한 시험성적 상호인정 및 일괄신청제 도입
- '11.1.1. : 산업부 등 5개 부처 13개 법정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전면 시행
- '13.8.7. : “수출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활성화 계획” 장관님 보고시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을 지시
 - * 1380 FTA 콜센터와 같은 138Y 계열의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을 지시
- '13.10.28. :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추진 계획” 장관님 보고 시 4자리 특수번호 및 운영기관을 확정

<추진방안 확정결과>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특수번호 : 1381

- * 산업부 무역실, 중기청,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시험연구원 등 협업 확인

- '14.1.27. :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기본계획을 수립

- 사용번호 : 1381 • 서비스시간 : 8:00~19:00, 주5일
- 관리주체 : 국가기술표준원(“인증·표준 정보제공 콜센터”설치)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조 직 : 12명 [국표원 1명(총괄), KTR(운영실무,상담) 11명]
- 제공정보 :
 - 인증 : 350여개의 해외인증(110여개국) 및 300여개 국내인증
 - 표준 : 43천여종 국가표준 & 국제표준(ISO, IEC, ITU 등)

- '14.3.19. : KATS - KTR “1381”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협약 체결
- '14.3.20. : VIP지시 '정부 콜센터 홍보 강화' 지시
- '14.3.26. : “1381” 인증표준콜센터 개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24	922	1,052	1,052	94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기업 또는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1381인증표 준정보센터 운영·개선	보조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911.863	100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위탁운영)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 ('23)1,016.863 → ('24) 911.863백만원

- (요구) 다양하고 복잡한 인증·표준 환경에 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상담 전문성 강화
- (산출)
 - 인건비 보조 (320-01, 민간경상보조) : 720백만원
 - * ('23) 18명 × (3.33백만원 × 12개월) → ('24) 18명 × (3.33백만원 × 12개월)
 - 대면상담 전문가 수당 (320-01, 민간경상보조) : 20백만원
 - * ('23) 140회 × 0.25백만원 → ('24) 80회 × 0.25백만원
 - 유지보수, 관리비 등 (320-01, 민간경상보조) : 102백만원
 - * ('23) 12개월 × 8.5백만원 → ('24) 12개월 × 8.5백만원
 - 상담원 재교육 (320-01, 민간경상보조) : 9백만원
 - * ('23) 9회 × 1백만원 → ('24) 9회 × 1백만원
 - 1381 이용 유도 및 활성화 (210-01, 일반수용비) : 60.863백만원
 - * ('23) 5회 × 14.5726백만원 → ('24) 5회 × 12.1726백만원

(2)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23) 15.137 → ('24) 15.137백만원

- (요구)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범부처 확산을 위해 협의체 운영 및 실태조사 예산 요구
- (산출)
 - 인증제도 실태조사 (220-01, 국내여비) : 3.484백만원
 - * ('23) 2명 * 0.1백만원 * 19회 → ('24) 2명 * 0.09백만원 * 19회
 - 인증제도 혁신 관련 회의 (범부처 실무자 협의 등) (240-01, 사업추진비) : 11.653백만원
 - * ('23) 25명 * 0.03백만원 * 17회 → ('24) 25명 * 0.027백만원 * 17회

(3)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23) 20 → ('24) 20백만원

- (요구) 사업 효과 개선을 위한 사업성과 분석과 차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 (산출) ('23) 1개과제 x 20백만원 → ('24) 1개과제 x 20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상담건 (단위: 건)	목표	68,021	64,120	67,326	70,692	69,100	실적 추이를 감안하여 목표치 산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온·오프라인 상담 건수 합계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통계
	실적	87,130	71,222	57,024	57,595	-			
	달성도	128	111	84.7	81.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KC마크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추진 - 라디오, 지하철, 포털사이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승강기 광고 등 ②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상담서비스 확대 및 질적 서비스 개선 - 콜시스템과 1381 홈페이지 연동 및 통합으로 시스템 안정성 제고 - 전문가 대면(심층)상담 서비스 분야 확대 등 중소기업 애로 해소 강화 (전화·인터넷·심층 상담 87,130건, 온라인정보제공(페이지뷰) 301,267건) - 1381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2021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유튜브 스트리밍, 포털사이트, 산업단지 승강기, 지하철 광고 등 ②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서비스 다양화 추진 및 질적 개선 - 화상 상담 시스템 도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문 상담의 어려움 해소 - 1381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상담 유형별 만족도 조사 강화)
2022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유튜브 스트리밍, 포털사이트, 산업단지 승강기, KTX 역사 광고 추진 ②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 안정적 서비스 제공 환경을 위해 노후 전산 인프라 고도화 작업 추진 -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챗봇 상담 도입 추진(카카오프러스)
2023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유튜브 스트리밍, 포털사이트, 대형디지털 전광판, 지하철 역사 광고 추진 ②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 서비스 제공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전산 인프라 고도화 작업 추진 - KC인증 관련 인터넷 상담 자료집 제작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 및 개선을 통해 인증·표준 관련 정보취득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국내 시장출시에 필요한 국내 인증 관련 정보와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인증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
- 특히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선호 추세에 따라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이용자 접근성 제고 기대
 - * 인터넷 상담 이용(건) : ('20) 3,151 → ('21) 4,966 → ('22) 3,728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국가기술표준원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② 보조금 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모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		
③ 사업 수행	보 조 사 업 자	각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		
④ 사업 점검 및 평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 실적 및 집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국가기술표준원 (851백만원)	=> (851백만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851백만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1,052	1,014	1,116	1,227	1,350	
'23~'27		1,052	1,105	1,149	1,183	1,207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국내 시장출시 및 해외수출 관련 인증표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의 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對기업 인지도 제고
- 안정적인 상담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 노후 장비 단계적 교체
- KC인증 관련 인터넷 상담 자료의 D/B구축(자료집 제작)을 통한 고객의 활용성 증대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향상
-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비대면 상담서비스(챗봇, 인터넷 상담 등) 활성화 유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재정사업 자율평가('20회계연도)
 - 보통, 69.2점(단위사업명: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 2) 보조사업 연장평가('21년)
 - 지원방식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소비자 편의성 높은 전화상담 비중이 높은 편
 - 수요자 측면의 성과측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시대 변화에 맞게 정보전달 방법을 다원화·고도화할 필요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1,024	1,024	1,024	-	-	-	1,024	1,023	99.9	99.9	-	1
2021	922	922	922	-	-	-	922	921	99.9	99.9	-	1
2022	1,052	1,052	1,052	-	-	-	1,052	1,051	99.9	99.9	-	1
2023	1052	1052	1052	-	-	-	1052	1,051	99.9	99.9	-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857	857	857	857	-	857	857	-	-	100
2021	814	814	814	814	-	814	814	-	-	100
2022	944	944	944	944	-	944	944	-	-	100
2023. 7월기준	944	944	944	944	-	944	944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 불용 (1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1	- 불용 (1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2	- 불용 (1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3	- 불용 (1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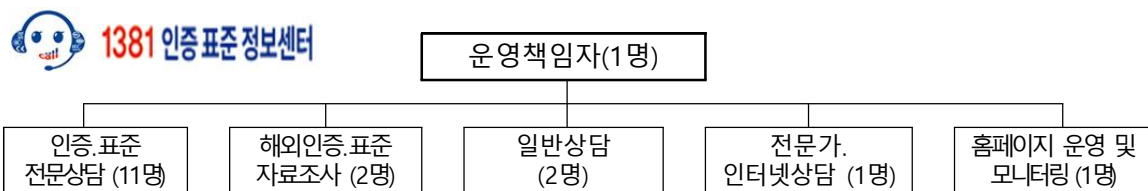
- 인증·표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는 종합 지원 창구로, 제품 출시 또는 수출시 필요한 국가별·품목별 맞춤형 통합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 지원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품목별·국가별 인증 및 획득절차 정보가 가장 필요 ('13.6 한국무역협회)

* 기업의 41.7%가 정보탐색(품목,종류,절차 등)에 어려움('20.4. 중소기업중앙회)

□ 사업내용

- (운영조직)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리 총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운영 실무 및 상담 업무 수행(운영책임자 포함 총 18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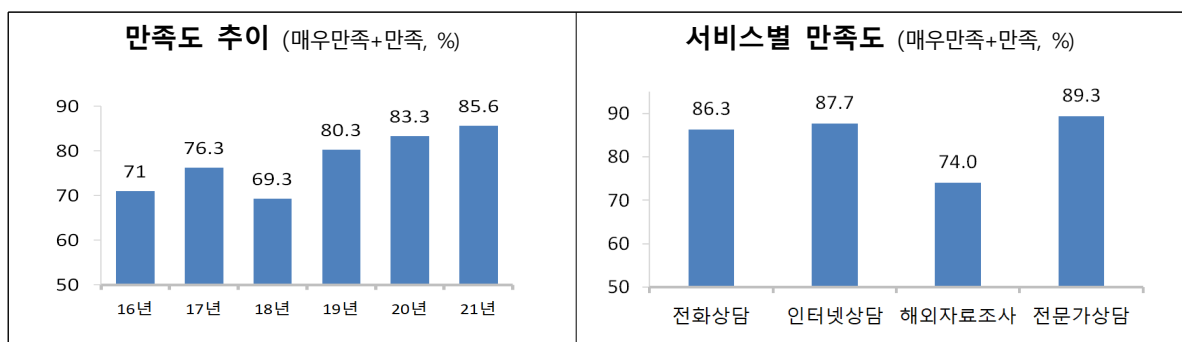
- (서비스 고도화) 전화·인터넷·화상 상담, 온라인 정보제공 등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문가 대면상담 등으로 심층 서비스 제공

* [추진경과] 인터넷 상담·정보제공('18), 전문가대면상담('18), 화상상담('21), 신기술·신제품 Help Desk('22)

- (상담 현황) '21년 상담 71,251건(286건/일), 온라인 페이지뷰 336,621건

* 누적('14.3.~) : 전화상담(455,958), 인터넷상담(9,008), 전문가상담(819), 해외인증자료제공(4,173)

- (이용자 만족도)



□ 사례1 - 제품 통관 후 바이어 상담 진행, 수출 진행

- (기업개요) 리OOO사는 헤어샴푸, 헤어에센스 미국 수출을 위해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고자 함.
- (기업애로) 미국 수출 상담을 위해 바이어에 샘플(무상)을 보내려고 하였음. 운송사를 통해 미국 통관시 FDA인증 번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당시 신제품이라 FDA 인증이 없는 상태였음.
- (지원사항) 전문가용으로 살롱이나 스파를 통해서만 유통되는 제품이거나 교육용 (institutional use), 혹은 무료샘플이나 호텔 편의용품(amenities)의 경우 제품의 라벨링 (성분표시, 사용법, 경고문구 등) 규제에서 면제되나 돈을 받고 일반 소비자에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함. 이에 따라 미국 세관 통관 시 무료샘플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안내하였으며 통관은 세관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 발송 시 제품의 용도와 무료 샘플임을 눈에 띄게 표시하고 해당제품의 정보를 포함한 인보이스를 동봉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 (지원성과) 제품 통관하여 미국 바이어와 상담 진행 중이며, 수출 타진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센터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 준비 중에 있음. 사업 신청 예정

□ 사례2 - 1381 제공 정보로 유관기관과 협력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신청 예정

- (기업개요) M사는 일본으로 육아 용품인 유모차와 아기띠를 수출하고자 하였음.
- (기업애로) 일본에는 우리나라의[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KC인증과 같이 어린이/유아용 제품 전반에 적용되는 강제 규제가 없어 일본 내 판매 촉진을 위해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음
- (지원사항) 일본 제품안전협회에서 부여하는 SG(Safe Goods) 마크에서 유모차와 아기띠가 대상임을 안내하고 임의인증으로써 제조자가 인증 획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일본 내 소비자의 인지도 및 신뢰도가 높은 인증임을 고려하여 판매 촉진에 유리함을 안내. 또한, SG마크 획득 기준과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경로를 첨부하였음. 하지만 유아용품의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인증기관이 부재하며 기업 내 해당 언어에 대한 인력이 없어 직접 인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
- (지원성과) S-Mark는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으로 2022년 1차 참여기업 모집에 신청하여 선정 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인증 및 시험비용 등을 지원받아 수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 외에도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교육 과정 등을 1381로부터 안내받아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도 수출을 확대할 예정임.

사 업 명
(8)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3731-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국가기술표준원	0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정책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8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정부안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이용현	하정운	한지훈
	사업시행주체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0	043-870-5518	043-870-5511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	1,304.08	1,886	1,517	1,517	△369	△19.5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 액	불용 예상 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86	1,386	1,304.08 (1,304.08)	-	81.92	1,886	-	1,886	1,849.11 (1,849.11)	1,886	1,849.11 (1,849.11)	-	36.89	1,517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612.65	612.65	558.61 (558.61)	-	54.04	614.69	-	614.69	608.33 (608.33)	614.69	608.33 (608.33)	-	6.36	581.025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122	122	120.3 (120.3)	-	1.7	122	-	122	119.73 (119.73)	122	119.73 (119.73)	-	2.27	-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245	245	221.02 (221.02)	-	23.98	245	-	245	219.55 (219.55)	245	219.55 (219.55)	-	25.45	221
· 계량기·정량표시 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406.35	406.35	404.15 (404.15)	-	2.2	904.31	-	904.31	901.50 (901.50)	904.31	901.50 (901.50)	-	2.81	714.975
○ 비목별 분류(합계)	1,386	1,386	1,304.08 (1,304.08)	-	81.92	1,886	-	1,886	887.57 (464.47)	1,886	1,849.11 (1,849.11)	-	36.89	1,517
· 일 반 수 용 비 (210-01)	27.1	27.1	24.9 (24.9)	-	2.2	26.6	-	26.6	7.7 (7.7)	26.6	26.4 (26.4)	-	0.2	17.4
· 임차료(210-07)	7.51	7.51	-	-	7.51	7.51	-	7.51	0 (0)	7.51	7.51 (7.51)	-	-	7.51
· 시험연구비(210-13)	375	375	375 (375)	-	-	874.64	-	874.64	874.64 (874.64)	874.64	872.06 (872.06)	-	2.58	684
· 일반용역비(210-14)	80	80	78.3 (78.3)	-	1.7	80	-	80	77.73 (77.73)	80	77.73 (77.73)	-	2.27	-
· 관리용역비(210-15)	200	200	176.02 (176.02)	-	23.98	200	-	200	174.55 (174.55)	200	174.55 (174.55)	-	25.45	176
· 국내여비(220-01)	14.25	14.25	14.25 (14.25)	-	-	13.07	-	13.07	13.04 (13.04)	13.07	13.04 (13.04)	-	0.03	13.57
· 국 외 업 무 여 비 (220-02)	17.1	17.1	-	-	17.1	15.57	-	15.57	15.21 (15.21)	15.57	15.21 (15.21)	-	0.36	15.57
· 사 업 추 진 비 (240-01)	5.04	5.04	4.27 (4.27)	-	0.77	4.61	-	4.61	4.60 (4.60)	4.61	4.60 (4.60)	-	0.01	4.61
· 일반연구비(260-01)	120	120	91.34 (91.34)	-	28.66	120	-	120	114.01 (114.01)	120	114.01 (114.01)	-	5.99	91.34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 액	불용 예상 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민간경상보조(320-01)	540	540	540 (540)		-	544		544	544 (544)	544	544 (544)	-	-	506.99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86	1,386	1,304.08 (1,304.08)	-	81.92	1,886	-	1,886	1849.11 (1849.11)	1,886	1849.11 (1849.11)	-	36.89	1,517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612.65	612.65	558.61 (558.61)	-	53.27	614.69	-	614.69	608.33 (608.33)	614.69	608.33 (608.33)	-	6.36	581.025
-임차료(210-07)	7.51	7.51	-	-	7.51	7.51	-	7.51	7.51	7.51	7.51 (7.51)	-	-	7.51
- 국외업무여비 (220-02)	17.1	17.1	-	-	17.1	15.57	-	15.57	15.21	15.57	15.21 (15.21)	-	0.36	15.57
- 사업추진비 (240-01)	5.04	5.04	4.27 (4.27)	-	0.77	4.61	-	4.61	4.60	4.61	4.60 (4.60)	-	0.01	4.61
- 일반연구비 (260-01)	120	120	91.34 (91.34)	-	28.66	120	-	120	114.01	120	114.01 (114.01)	-	5.99	91.34
- 민간경상보조 (320-01)	463	463	463 (463)	-	-	467	-	467	467.00	467	467.00 (467.00)	-	-	461.995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122	122	120.3 (66.55)	-	1.7	122	-	122	119.73	122	119.73 (119.73)	-	2.27	-
- 일반수용비 (210-01)	10	10	10 (10)	-	-	10	-	10	10.0	10	10.0 (10.0)	-	-	-
- 일반용역비 (210-14)	80	80	78.3 (78.3)	-	1.7	80	-	80	77.73	80	77.73 (77.73)	-	2.27	-
- 민간경상보조 (320-01)	32	32	32 (32)	-	-	32	-	32	32.0	32	32.00 (32.00)	-	-	-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245	245	221.02 (221.02)	-	23.98	245	-	245	219.55	245	219.55 (219.55)	-	25.45	221
- 관리용역비 (210-15)	200	200	176.02 (176.02)	-	23.98	200	-	200	174.55	200	174.55 (174.55)	-	25.45	176
- 민간경상보조 (320-01)	45	45	45 (45)	-	-	45	-	45	45.0	45	45.00 (45.00)	-	-	45
· 계량기·정량표시 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406.35	406.35	404.15 (404.15)	-	2.2	904.31	-	904.31	901.50	904.31	901.50 (901.50)	-	2.81	714.975
- 일반수용비 (210-01)	17.1	17.1	14.9 (14.9)	-	2.2	16.6	-	16.6	16.40	16.6	16.40 (16.40)	-	0.2	17.4
- 시험연구비 (210-13)	375	375	375 (375)	-	-	874.64	-	874.64	872.06	874.64	872.06 (872.06)	-	2.58	684.005
- 국내여비 (220-01)	14.25	14.25	14.25 (14.25)	-	-	13.07	-	13.07	13.04	13.07	13.04 (13.04)	-	0.03	13.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계량기 기술기준·지침 개발, 계량공무원/사업자 교육, 불법계량기 신고제도 및 소비자감시원 운영, 국제법정계량기구(OIML)과 국제협력 등을 통한 법정계량제도 관리
- **(법정단위 홍보 및 모니터링)** '평(坪)', '돈' 등 非법정단위 근절 및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언론, 사업자 등 모니터링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지자체, 검정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계량기 검사·단속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계량기·정량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법정계량기(13종) 및 정량표시상품(27종)에 대한 시판품 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 6, 14, 41, 54, 57, 60, 61, 65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계량관리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소비자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계량 산업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2. 계량 산업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3. 계량 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4. 계량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5.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개발에 관한 사업
 7. 형식승인 및 검정 평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량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수출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계량 산업의 발전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지도, 조사, 통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계량·측정 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3. 계량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업
 5. 계량·측정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6. 계량기 사후관리 및 비법정단위 사용 단속 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7.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8. 그 밖에 계량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계량에 관한 법률』은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여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1961년)
 - * 면적의 단위에 대하여 평(坪)단위는 1983년부터 사용을 금지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05)에 따라 법정단위 정착을 추진
 - '07년 7월부터 “평”, “돈”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사전 홍보 부족 및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홍보·계도(경고) 위주로 추진
 - '10.6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게 「과태료 부과」를 병행 추진
 - “계량제도 선진화 종합계획” 수립(장관/'12.16) : '12년부터 현장 중심의 홍보·계도와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불법제품 단속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법정계량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정계량선진화 추진
 - 「계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추진 및 시행('15.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200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103	1,400	1,386	1,886	1,51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계량기 사용 전국민 및 관련 기업, 유관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년 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선진 법정계량 체계 확립	보조	한국계량 측정협회	461.995	100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65조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보조	한국계량 측정협회	45	100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65조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4년 정부안내역 : 1,517백만원(전년대비 369백만원 감액, 19.57% ↓)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23) 614.69 → ('24) 581.025백만(33.665백만, 5.48% ↓)

- * 정책·기술기준·표준·지침 개발: 91.34백만=4건×22.835백만
- * 계량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 104백만=260명×0.4백만
- * 불법계량기 신고 제도 운영: 90백만=37.5건×2.4백만
- * 소비자 감시원제도 운영: 267.995백만=153.14명×1.75백만
- * 국제법정계량기구 대응 및 국제협력 : 27.69백만
 - 국제회의 참석: 15.57백만(4.91회×3.17백만)
 - 국제회의 개최: 7.51백만(1회×7.51백만)
 - 간담회: 4.61백만(3.07회×10명×0.15백만)

○ 법정단위 홍보·모니터링: ('23) 122 백만 → ('24) 0 (순감)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23) 245 → ('24) 221백만(24백만, 9.80% ↓)

- * 계량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76백만=1식×176백만
- *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서비스: 45백만=0.9만건×5천원

○ 계량기·정량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23) 904.31 → ('24) 714.975백만 (전년대비 189.335백만, 20.94% ↓)

-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 조사: 535.420백만(59.5종×3백만×3개)
- *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 사후관리: 2.135백만
 - 전문가 수당: 1.2백만(2명×0.15백만×2개 기관×2일)
 - 출장비: 0.935(2명×0.117백만×2개 기관×2일)
- * 사용중인 계량기 오차검사: 28.835백만원
 - 전문가 수당: 16.2백만(4개 권역×0.15백만×3명×9일)
 - 출장비: 12.635백만(4개 권역×0.117백만×3명×9일)
-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148.585백만(2,477품목×5천원×3개+2,477품목×45천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86	①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614.69백만 · 정책·기술기준·표준·지침 개발: 120백만 - 연구 및 조사 용역 : 120백만 (일반연구비)4건x30백만=120백만 · 지자체 계량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 104백만 - 교재 제작, 강사료, 임차료, 워크숍 개최 등 : 104백만 (민간경상보조) : 260명x0.4백만=104백만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제도 운영신고센터 운영비, 조사단 활동비 및 신고포상금 등: 90백만 (민간경상보조) 37.5건x2.4백만=90백만 · 소비자감시원 운영: 273백만 - 감시원 수당, 교육, 운영비 등: 273백만 (민간경상보조) 156명x1.75백만=273백만 · 국제법정계량기구 대응 및 국제협력 : 27.69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법정계량기구포럼(APLMF) 등 국제회의 참석 : 15.57백만 (국외업무여비) 4.91회x3.17백만=15.57백만 - 일본, 중국 등 양자 협력 회의 개최: 7.51백만 (임차료) 1회x7.51백만=7.51백만 - 국제기구 대응 등 간담회 개최 : 4.61백만 (사업추진비) 3.07회x0.15백만x10명=4.61백만 ②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 122백만 · 법정단위 홍보 : 90백만 (일반용역비) 1건x80백만=80백만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2종) x5백만=10백만 · 대중매체 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및 사용 촉진 : 32백만 - 언론사 광고 비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및 제도 : 30백만 (민간경상보조) 20개사x1.5백만=30백만 - 언론사·소비자 등 협단체 법정단위 확산 현장협의체 운영: 2백만 (민간경상보조) 1회x0.15백만x13명=2백만 ③계량 측정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245백만 · 계량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구축: 200백만 (관리용역비)1식x200백만=200백만 ·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45백만 (민간경상보조) 9,000건x5천원=45백만 ④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904.31백만 · 형식승인계량기 시판품조사: 678.64백만 - 시료구입 및 시험수수료: 678.64백만 (시험연구비) 75.41중x3백만x3개=678.64백만 ·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 사업자 사후관리: 1.1백만 - 전문가 수당: 0.6백만 (일반수용비) 2명x0.15백만x1개기관x2일 - 출장비 0.5백만 (국내여비) 2명x0.125백만x1개기관x2일=0.5백만 · 사용중인 검정계량기 오차검사: 28.57백만 - 전문가 수당: 15.5백만 (일반수용비) 4개권역x0.15백만x3명x8.6일=15.5백만 - 출장비 13.07백만 (국내여비) 4개권역x0.117백만x3명x9.31일=13.07백만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196백만 - 시료구입 및 시험수수료: 196백만 (시험연구비) 3,267품목x5천원x3개+3,267품목x45천원=96백만	1,517	①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581.025백만 · 정책·기술기준·표준·지침 개발: 91.34백만 - 연구 및 조사 용역 : 91.34백만 (일반연구비)4건x22.835백만=91.34백만 · 지자체 계량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 104백만 - 교재 제작, 강사료, 임차료, 워크숍 개최 등 : 104백만 (민간경상보조) : 260명x0.4백만=104백만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제도 운영신고센터 운영비, 조사단 활동비 및 신고포상금 등: 90백만 (민간경상보조) 37.5건x2.4백만=90백만 · 소비자감시원 운영: 267.995백만 - 감시원 수당, 교육, 운영비 등: 267.995백만 (민간경상보조) 153.14명x1.75백만=267.995백만 · 국제법정계량기구 대응 및 국제협력 : 27.69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법정계량기구포럼(APLMF) 등 국제회의 참석 : 15.57백만 (국외업무여비) 4.91회x3.17백만=15.57백만 - 일본, 중국 등 양자 협력 회의 개최: 7.51백만 (임차료) 1회x7.51백만=7.51백만 - 국제기구 대응 등 간담회 개최 : 4.61백만 (사업추진비) 3.07회x0.15백만x10명=4.61백만 ②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 0(순감) ③계량 측정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221백만 · 계량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구축: 176백만 (관리용역비)1식x176백만=176백만 ·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45백만 (민간경상보조) 9,000건x5천원=45백만 ④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714.975백만 · 형식승인계량기 시판품조사: 535.420백만 - 시료구입 및 시험수수료: 535.420백만 (시험연구비) 59.5중x3백만x3개=535.420백만 ·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 사업자 사후관리: 2.135백만 - 전문가 수당: 1.2백만 (일반수용비) 2명x0.15백만x2개기관x2일 - 출장비: 0.935백만 (국내여비) 2명x0.117백만x2개기관x2일=0.935백만 · 사용중인 검정계량기 오차검사: 28.835백만 - 전문가 수당: 16.2백만 (일반수용비) 4개권역x0.15백만x3명x9일=16.2백만 - 출장비: 12.635백만 (국내여비) 4개권역x0.117백만x3명x9일=12.635백만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148.585백만 - 시료구입 및 시험수수료: 148.585백만 (시험연구비) 2,477품목x5천원x3개+2,477품목x45천원=148.585백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계량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건)	목표	-	신규	150,000	160,000	165,000	'22년(정기검사 실시, 짜수해) 목표 대비 10% 증가로 설정	계량정보시스템 주요 메뉴 서비스 접속 건수	계량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metrology.kr)
	실적	-	-	181,662	164,259	-			
	달성도	-	-	121%	103%	-			
계량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신규	82.5	84.0	84.4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0.5% 증가로 설정	계량정보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 점수	계량 공무원 및 일반인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실적	-	-	84.0	85.9	-			
	달성도	-	-	102%	10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스마트미터 제도화 실행방안 수립 등 연구용역 3과제 수행 중('20.3~11월) ☐ 법정단위 계도·홍보관련 ● sns홍보 : 11건(공모전 안내, 카드뉴스 등) ● 오프라인 광고 : 2건(바른단위 ucc, 어린이 포스터) ☐ 사후관리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접수/처리 : 43/41건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 : 온수미터, 가스미터 등 등 4개 품목 24개 모델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538개 제품)
2021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스마트전력량계 프로토콜 권고안 개발 등 연구용역 3과제 수행 중('21.4~11월) ☐ 법정단위 계도·홍보관련 ● sns홍보 : 27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 사후관리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접수/처리 : 50/50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 : 전력량계, 적산열량계 등 등 4개 품목 36개 모델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1,000개 제품)
2022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스마트전력량계 프로토콜 권고안 개발 등 연구용역 3과제 수행 완료('22.4~11월) ☐ 소비자감시원 운영 및 사전알림 서비스 ● 22개 지역 200여명 활동으로 판매업소 5,000개소 1900여 제품 수검확인 ● 정기검사 안내문 배포(지자체 및 시장상인회 등 1,049개소), 재검정 대상 사업자 SMS 알림 ☐ 사후관리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 접수/처리 : 158건/행정처분35건(고발 17건, 과태료 11건, 사용중지 7건)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 : 전력량계, 적산열량계 등 등 4개 품목 25개 모델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702개 제품)

2023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OIML Digitalisation 추진에 따른 현황 파악 및 국내 디지털 계량측정기술 대응 방안 마련 등 연구용역 4개 과제 수행 ('23.4~10월) ☐ 법정단위 계도·홍보관련 : 대학생 법정단위 홍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 사후관리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 : 전력량계, 적산열량계 등 등 개 5개 품목 27개 모델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700여개 제품)
------	---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법정계량의 선진화 기반마련
 - 국제무역, 상거래 및 측정의 기본인 법정계량에 대한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법정계량제도의 선진화 기반 마련
- 법정단위 사용 정착률 향상을 통한 상거래질서 확립
 - 법정단위의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언론·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률 향상을 통해 상거래 질서 확립과 국제교역 촉진
- 불법·불량계량의 유통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손실방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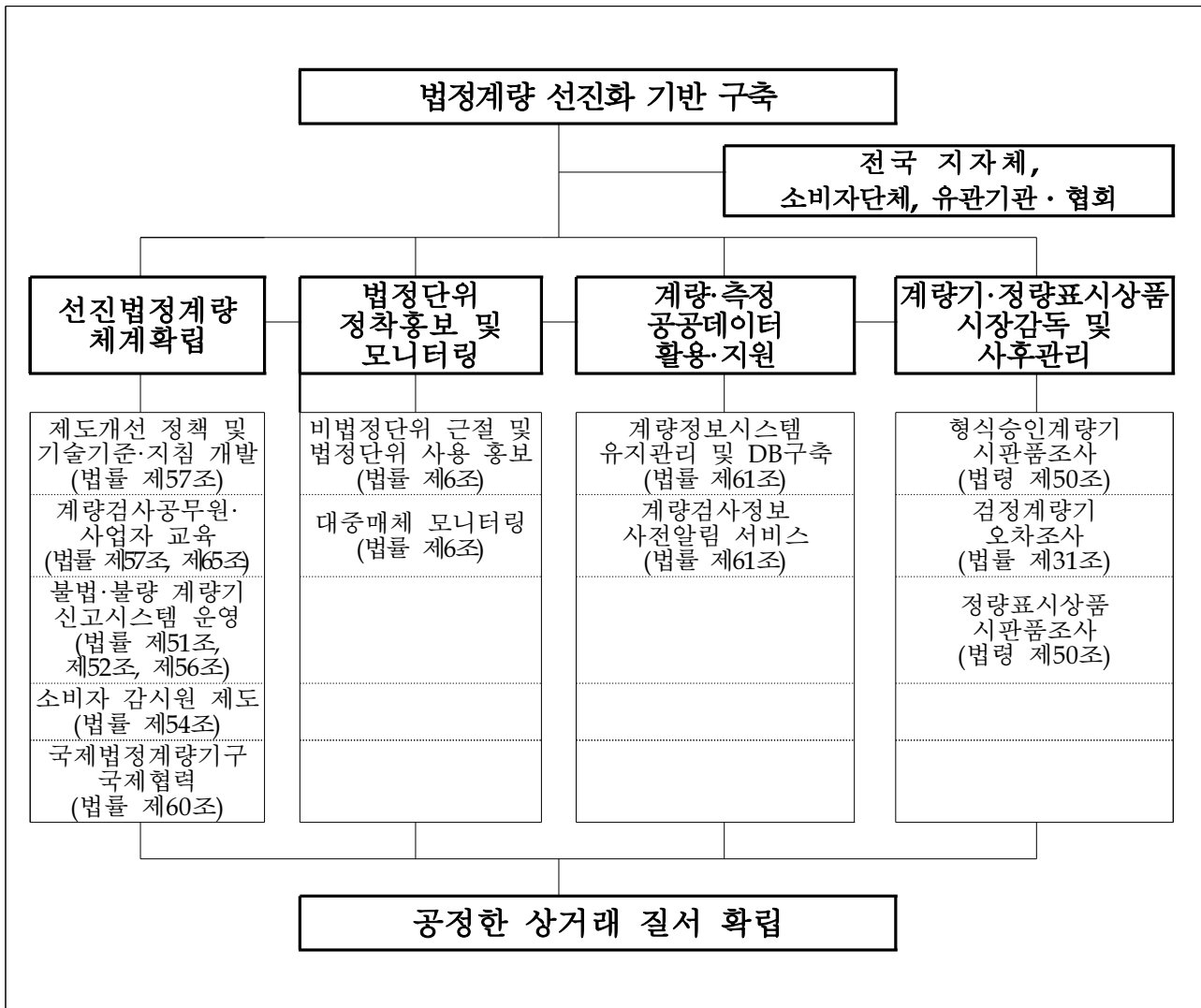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1,386	1,455	2,576	2,718	2,896	
'23~'27		1,886	1,980	2,059	2,121	2,16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법정계량제도 운영

- 전세계 나라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값을 결정하는 체계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최근 계량기 산업 실태조사 결과, 법정계량기를 사용한 거래규모는약 700조원으로 추정되며, 모든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는 기반산업으로 지속적인 사업 운영 필요
 - * 비자동 저울 534.5조, 주유기 53.3조, 전력량계 55.6조, 가스미터 15.7조, LPG미터 4.7조 등
- 계량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OIML 등 국제기준 대응 및 주요국간의 협력을 추진 하여,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 여건 마련

☐ 불법·불량 계량기 사후관리 대응체계 강화

- 시판품 조사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판품 조사 부적합 계량기의 철저한 재조사 및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현장조사단 운영을 확대

☐ 비법정단위사용 거래관행 변화를 위해 국가주도의 국민 인식전환을 지속 추진

- 정책 인지도 확대하고, 고의성일 경우만 단속을 추진했던 '인치', '파운드' 등 국제적인 비법정단위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홍보 및 단속 정책을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23.4)

- **(평가결과)** : 80점, 사업의 적정성, 성과목표 달성도 및 제도개선 노력 등이 인정되어 보통 이상의 결과로 정상 추진

2) 보조사업 연장평가 ('21.5)

- **(평가결과)** : 68점, 보조사업 목적이 계량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해 일반 국민의 피해방지라는 차원에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지적사항)** △사업방식변경: 내역사업 통합 (소비자감시원의 온라인 모니터링사업 (13백만원, '20년 기준)을 대중매체의 모니터링사업과 통합, △일정수준 감축: 사업자교육 자부담 전환(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자교육 제외)

12) 부처 건의사항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 조사 등을 통한 시장 사후관리 확대·강화 필요

- **(필요성①)** 계량기 법정관리(형식승인·검정)는 他강제인증제도 대비 사전 규제완화*로 인해 사후관리를 통한 계량기 품질(계량오차) 확인이 필요

* 제24차('11.1.19) "5 %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 유효기간 (10년)을 폐지('11.4.6, 계량법 시행령 개정·시행) 등

<KC안전인증과 계량기 형식승인 제도 비교>.

구분	KC안전인증	계량기 형식승인
제품시험	안전성 시험	계량오차
공장심사	○	×
정기사후관리	○	×

- **(필요성②)** 계량기 시판품 조사는 年1,000여건의 형식승인 품목 中 3%미만으로 조사 (약 26%의 불합격을)*되어 조사범위 확대 필요

* ('18)가스미터(10종/40%), ('19)수도미터(18종/22%), ('20)온수미터(11종/36%), ('21) 저울(1종/6.3%)

* 시판품조사 규모[예산(백만원)/대상수(형식)] : 151/10('18) → 187/27('19) → 177/24('20) → 279/36('21)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1,103	-	1,103	-	±4.8	-	1,103	1,085	98.3	98.3	-	18
2021	1,400	-	1,400	-	-	-	1,400	1342	95.9	95.9	-	58
2022	1,386	-	1,386	-	-	-	1,386	1304.08	94.09	94.09	-	81.92
2023	1,886	-	1,886	-	-	-	1,886	1849	98.03	98.03	-	36.8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583	583	583	583		583	583	-	-	100
2021	554	554	554	554		554	554	-	-	100
2022	540	540	540	540		540	540	-	-	100
2023. 12월기준	544	544	544	544		544	544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 이·전용 등 사유 : 시험연구비 부족으로 동일사업 운영비(210)내에서 4.8백만원 세목조정 (일반수용비, 관리용역비 등 → 시험연구비) - 불용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취소 및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18백만원)
2021	- 불용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및 행사 취소(27.9백만원),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 (27.5백만원)
2022	- 불용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및 행사 취소(24.6백만원),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 (56.55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용역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36.89백만원)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계량에 관한 법률』 요약

- 계량은 경제활동의 근간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모든 나라에서 법제화하고 있음



< 계량에 관한 법률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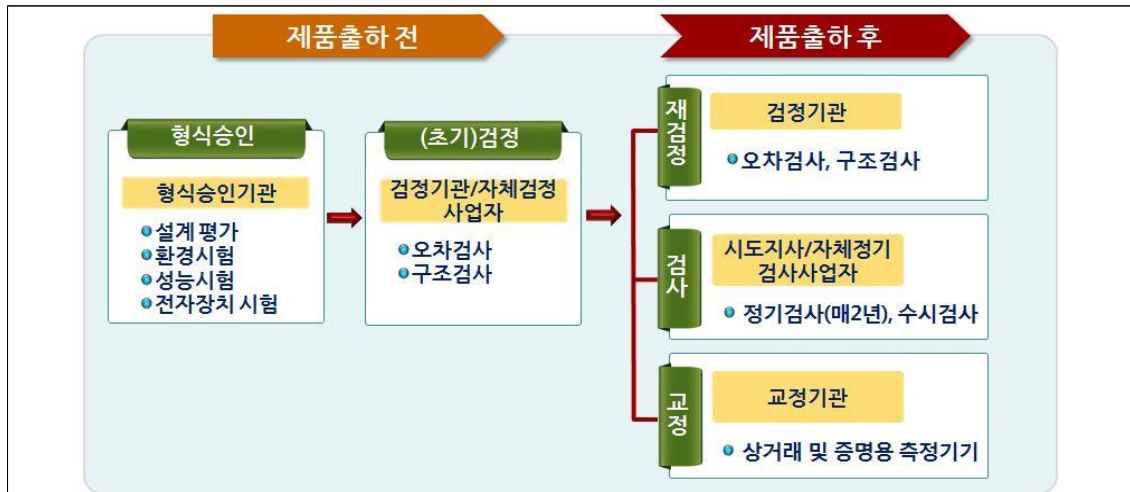
- ① **(법정단위)** 상거래 기본수단으로 7개 기본단위* 등의 법정단위를 규정하고, 상거래 및 증명에서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

* m(길이), kg(질량), s(시간), K(온도), mol(물질량), A(전류), cd(광도)

- ② **(법정계량기)**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값의 오차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법으로 정하여, 사전관리(형식승인·검정) 및 사후관리(재검정·정기검사) 의무화

<법정계량기 13종>





< 법정계량기 관리 체계 >

③ **(정량표시상품)** 포장 개봉없이 실제량 확인이 어려운 상품을 법으로 정하여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

* 곡류, 과자류, 육류, 유제품, 음료 및 주류,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27종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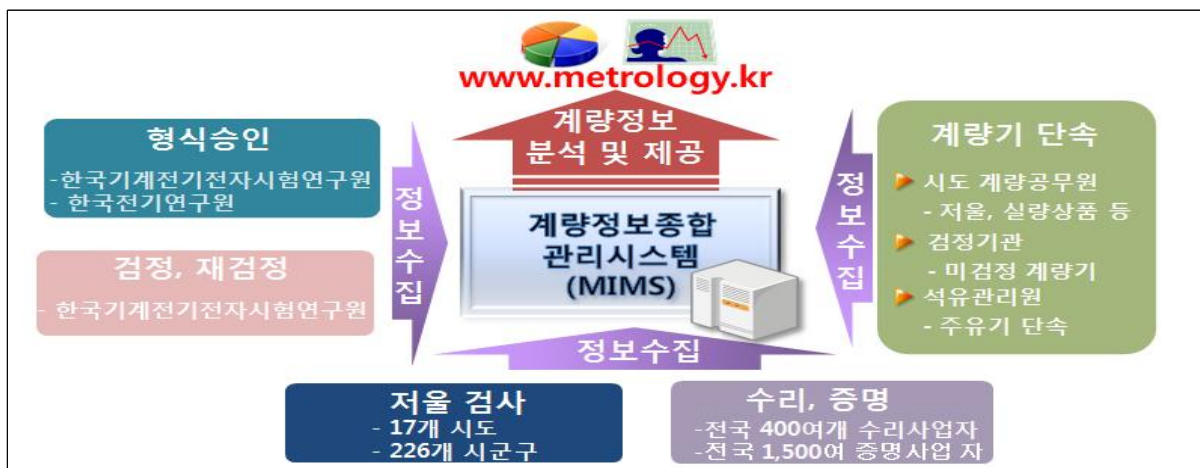
계량정보시스템 현황

- **(배경)** 전국 지자체 및 시험기관 등 이해관계자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계량기 시험·검사·단속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계량업무 처리의 체계화

* 2개의 형식승인, 1개의 검정기관,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등에서 계량 관련 정보가 전자·비전자문서 형태로 연간 약 900만건 이상 발생

Before	Af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체계화 계량업무처리 ·이해관계자들간의 정보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체계화 및 계량기의 생애주기 관리체계* 마련 ·이해관계자들간 정보 공유

*“최초시험(형식승인)→검정→정기검사(재검정)→폐기”에 대한 추적·관리가 가능



< 계량정보시스템 개념도 >

- **(법정계량기 관리)** 계량정보시스템(www.metrology.kr)을 통해 승인 및 검정·재검정 등 시험 진행상황과 최종승인 여부 등 계량기 이력정보의 관리 및 공유

* 시스템의 일평균 이용건수: '18(5,722건)→'19(6,924건)→'20(7,624건)

- **(수입계량기 관리)** 법률로 규정된 수입계량기 형식승인·검정 여부가 통관 단계에서 관리되도록 계량정보시스템과 전자통관시스템(관세청)을 연계
- **(사전알람)** 계량기 사용자에게 재검정·정기검사 일정 알람을 제공

참고 3

법정계량관련 국제 대응 현황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étrologie Légale)

- (설립목적) 계량기의 국제적 통일로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 1955년 24개국이 참가한 프랑스 파리에서 OIML 협약 체결
 - ※ OIML 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회원국 현황('17년 기준)
 - 정회원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62개국, 준회원국은 필리핀, 이란, 북한, 우크라이나 등 66개국
 - 우리나라는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통일을 위해 1978년 가입
- (주요활동) 회원국 간 법정계량제도의 통일을 위한 법·제도·기술관련 국제기준 제정 및 국제상호인정제도 운영
 - 상거래, 안전, 보건 및 환경 분야에서 소비자 등 일반국민의 보호를 위한 법정계량제도 규제 및 개발도상국의 법정계량기관을 지원 등

□ 아태 법정계량 포럼(APLMF, Asia-Pacific Legal Metrology Forum)

- (설립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가의 정부 간 회의로, 회원국 간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조화로 기술장벽 해소 및 국제교역 촉진을 위해 1994년 설립
- 회원국 현황('17년 기준)
 - 정회원국: 20개국(한국, 호주,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북한,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 준회원국: 6개국(부르나이,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라오스)
- (주요활동) 아태 지역 내의 법정계량기관들 사이의 상호 신뢰 유지 및 개발 / 법정계량분야에서 무역에 대한 기술 및 행정 장벽 제거 등

□ 한·일 계량협력위원회

- (배 경) 1975년 양국의 계량측정분야 상호 기술협력을 위해 「한·일 계량 계측표준협력위원회」를 구축, 이후 2016년 법정계량중심의 「한·일 법정계량협력위원회」로 전환하여 개최
 - (추진경위) 한일과학기술장관회담에서 위원회 설립 합의('75.8월) / (韓) 공진청 국립공업시험원—(日)공업기술원 계량연구소간 회의('76~' 00) / (韓) 산업부 기술표준원—(日)계량표준종합센터간 회의('01~현재)
 - (주요활동) 상설 대화기구로 계량협력위원회를 구축하여, 계량 및 기술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계량 기술 및 법규 등 양국 관심사항 논의
- * 개최방식 : 매년 하반기 짝수년은 우리나라 홀수년은 일본에서 개최

□ 한·중 계량협력위원회

- (배 경)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 양국 간 계량기 교역 증대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등 법정계량분야의 협력 채널 필요에 따라, 2016년 한중법정계량협력 양해각서 체결
 - (추진경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간한중 계량협력 양해각서 체결하고, 제1회 한중 법정계량협력위원회 회의 개최('16.3월) / (韓)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中)시장관리감독총국(SAMR)간 회의(' 18~현재)
 - (주요활동) 계량 및 기술 정보교환 및 R&D 공동 수행, 국제 및 지역별 기구에서의 상호협력 등을 도모
- * 개최방식 : 매년 상반기 홀수년은 우리나라 짝수년은 중국에서 개최

참고 4

2023년 계량측정제도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 중점 추진목표

- ▶ 계량측정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 신수요 계량기 기술 변화에 대응한 법정계량 제도 정비
- ▶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 차단 등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세부 추진계획

1 계량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 ① 계량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령 개정
- ② 계량기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2 신수요 계량기 기술 변화 대응

- ①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 제도 안정화
- ② 수소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 제도 기반 마련

3 시장감시 등을 통한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 차단

- ① 상거래 유통 법정계량기 사후관리 강화
- ②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③ 소비자 감시원 활동 내실화
- ④ 계량업무 관련 지정기관 사후관리 실시

4 계량측정산업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

- ① 디지털 계량측정 협의회 운영
- ② 계량·측정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
- ③ 계량산업 종사자 역량 제고 및 협력 강화
- ④ 정량표시상품 제도 효율화 및 사후관리 강화
- ⑤ 국민 참여를 통한 법정단위 정착
- ⑥ 「계량측정의 날」 정부포상 및 기념행사 개최
- ⑦ 국제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확립

목 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지원 및 법정단위 사용 촉진

추진 방향

- IT 기술을 활용한 신고시스템 및 감시원 운영으로 시장감시 강화
-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홍보 업무 효율화

추진 전략

사업자 자율관리 확산 및 소비자 시장감시 강화	
▶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 소비자감시원 운영
▶ 계량검사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제도 운영
▶ 대중매체 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및 사용 촉진	

보조사업 전개 전략

구축단계 (2015년 ~ 2017년)	성장단계 (2018년 ~ 2020년)	확산단계 (2021년 ~ 2023년)	성숙단계 (2024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구축 • 전담인력 확보 • 시범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운영 • 전문성 함양 • 지속사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개선 • 전문성 향상 • 지속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계량제도 정착 • 전담기관 운영 • 계량산업 육성지원

사 업 명						
(9) 국가표준활성화(3731-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표준정책국	-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9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국가표준활성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장혁조		박정민 연구사
	사업시행주체		043-870-5340		043-870-5343
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장혁조		박정민 연구사
		표준정책과	043-870-5340		043-870-5343
	사업시행주체	한국표준협회	표준R&D센터	김단비 위원	02-6240-4584

표준화 실태조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배진한	김성민	도혜준
		산업표준혁신과	043-870-5380	043-870-5382	043-870-5471
	사업시행주체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배진한	이재준	도혜준
		산업표준혁신과	043-870-5380	043-870-5388	043-870-5471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국가표준활성화	7,078	6,834	6,000	6,000	△ 834	△ 12.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024	7,104	7,077 [4,282]	-	27	6,834	6,834	6,763	6,834	6,763	-	70.4	6,000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1,115	1,115	1,089	-	26	1,111	1,111	1,076.8	1,111	1,076.8	-	34.2	1,088
· 표준개발협력 기관 지정·운영	3,862	3,862	3,862 [3,862]	-	-	4,317	4,317	4,317 [4,317]	4,317	4,317 [4,317]	-	-	3,862
· 표준화 실태조사	70	70	70 [70]	-	-	70	70	64.9	70	64.9	-	5.1	70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914	980	914	-	-	980	980	980	980	980	-	-	980
· 국가표준화혁신 생태계조성	313	356	313	-	-	356	356	324.9	356	324.9	-	31.1	-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750	750	750 [350]	-	1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7,024	7,104	7,077	-	27	6,834	6,834	6,763	6,834	6,763	-	70.4	6,000
· 일반수용비 (210-01)	88	88	88	-	-	86	86	85.5	86	85.5	-	0.5	88
· 시험연구비 (210-13)	1,262	1,342	1,342	-	-	1,328	1,328	1,328	1,328	1,328	-	-	1,329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일 반 용 역 비 (210-14)	313	313	313	-	-	356	356	324.9	356	324.9	-	31.1	-	
· 국내여비(220-01)	14	14	14	-	-	13	13	13	13	13	-	-	13	
· 국외업무여비 (220-02)	6	6	6	-	-	5	5	4.5	5	4.5	-	0.6	5	
· 사 업 추 진 비 (240-01)	29	29	29	-	-	28.4	28.4	28.4	28.4	28.4	-	-	28	
· 일 반 연 구 비 (260-01)	1,030	1,030	1,003	-	27	630	630	597	630	597	-	33	604	
· 민간경상보조 (320-01)	350	350	350	-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70	70	64.9	70	64.9	-	5.1	70	
· 사 업 출 연 금 (350-02)	3,932	3,932	3,932	-	-	4,317	4,317	4,317 [4,317]	4,317	4,317 [4,317]	-	-	3,862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7,024	7,104	7,078 [4,282]	-	27	6,834	6,834	6,763	6,834	6,763	-	70.4	6,000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1,115	1,115	1,090	-	26	1,111	1,111	1,076.8	1,111	1,076.8	-	34.2	1,088	
- 일 반 수 용 비 (210-01)	88	88	88	-	-	86	86	85.5	86	85.5	-	0.5	88	
- 시 험 연 구 비 (210-13)	348	348	348	-	-	348	348	347.8	348	347.8	-	-	348	
- 국 내 여 비 (220-01)	14	14	14	-	-	13	13	13	13	13	-	-	13	
- 국외업무여비 (220-02)	6	6	6	-	-	5	5	4.5	5	4.5	-	0.6	5	
- 사 업 추 진 비 (240-01)	29	29	29	-	-	28.4	28.4	28.4	29	28.4	-	-	29	
- 일 반 연 구 비 (260-01)	630	630	604	-	26	630	630	597	630	597	-	33	604	
· 표준개발협력기 관 지정·운영	3,862	3,862	3,862 [3,862]	-	-	4,317	4,317	4,317 [4,317]	4,317	4,317 [4,317]	-	-	3,862	
- 사 업 출 연 금 (350-02)	3,862	3,862	3,862 [3,862]	-	-	4,317	4,317	4,317 [4,317]	4,317	4,317 [4,317]	-	-	3,862	
· 표준화 실태조사	70	70	70 [70]	-	-	70	70	64.9	70	64.9	-	5.1	70	
- 사 업 출 연 금 (350-02)	70	70	70 [70]	-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70	70	64.9	70	64.9	-	5.1	70	
· K S 인 증 제 품 시 판 품 조 사	914	994	994	-	-	980	980	980	980	980	-	-	980	
- 시 험 연 구 비 (210-13)	914	994	994	-	-	980	980	980	980	980	-	-	980	
· 국가표준화혁신	313	313	313	-	-	356	356	324.9	356	324.9	-	31.1	-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생태계조성 - 일반용역비 (210-14)	313	313	313	-	-	356	356	324.9	356	324.9	-	31.1	-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차기 플랫폼 구축	750	750	749 [350]	-	-	-	-	-	-	-	-	-	-
- 일반연구비 (260-01)	400	400	399	-	1	-	-	-	-	-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350	350	350 [350]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표준체계 확립·운영을 위한 유일한 국가 예산으로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국가 표준활성화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과 기업 지원
 - 표준 저변확대→KS(안)개발→KS제개정→기업지원→사후관리의 KS활성화를 위해 내역사업 간 연계를 통해 사업목적인 국가표준활성화 달성
- ①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국가표준(KS) 검토·심의 등을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표준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표준화 정책연구 등
- ②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국가표준의 개발·정비 등의 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및 운영(표준안 개발)
- ③ **(표준화 실태조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매년 정부가 의무로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 실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사업
- ④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라 KS인증 제품에 대해 매년 불시 점검을 실시, 불량 KS인증 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헌법 제127조 제2항

* 제127조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제18조(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정부는 제품등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의 향상, 단순화·공정화(公正化)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문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제품등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관한 자료 제공, 훈령 및 규정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의 제정 등을 위한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 중복성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정 및 보급
2. 제품인증체제 구축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8.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9. 그 밖에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 *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적합성평가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26조(국제 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3.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운영 및 지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보급
 7.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8.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제정, 총괄관리를 위한 기획 및 조사 연구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11. 그 밖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정부는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5조의2(출연금), 제6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협의), 제15조(제품의 인증), 제20조(시판품조사 등),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제30조의2(실태조사), 제31조(보조금)

- *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공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⑥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5조의2(출연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①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공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받은자(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제30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는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 WTO/TBT협정 제2조 제4항(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기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 **2.4** 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예를 들어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06.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07.5. 산업표준화법 개정(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민간의 표준 참여확대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12.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2016.4.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17.12. 『유망 신산업(12대 분야) 표준화 로드맵』수립
- 2018.9.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의 개선과제 발표
 - * 기업애로 해소 :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부담 완화(LED 조명 제품 관련 원스톱 창구 마련 및 유사·동일시험항목의 절차 비용 면제 추진
- 2019.3.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수립
 - : 2023년까지 10대 신산업 분야 고유표준 300종 개발 목표
- 2019.4.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경제관계장관회의) 수립
- 2019.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수립 : 「300-60 프로젝트」 -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 국제표준 300종 개발,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60명 배출 목표

- 2021.4.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 회의) 수립 : 2025년까지 유망·생활안전·사회안전 분야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
- 2021.6.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21.11.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
: 2050년까지 신규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목표
- 2022.9. 『2050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이행계획』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6,229	6,042	7,024	6,834	6,0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산·학·연 및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표준개발협 력기관 지정·운영	출연	한국표준 협회	3,862	100	산업표준화법 5조3항, 산업표준화법 5조 의2,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3) '2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요구방향 및 지원필요성

- 국가표준체계(한국산업표준, KS) 운영을 위한 유일한 국가예산
 - 국가표준(한국산업표준, KS) 개발·정비를 통해 기술·사회적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증액을 추진할 예정
 - * 4차 산업혁명, ESG, 서비스표준, 탄소중립 등 융복합 기술 및 글로벌 통상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세계 시장 선점, 국민안전 담보 등에서 표준 역할이 더욱 부각
- 국가표준 활성화 사업은 '2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4대 중점투자 분야 중 ①민간 경제 활력 제고, ③경제체질 혁신 뒷받침에 해당
 - 특히,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통한 '①세계시장 선점*·③국민의 행복 증진**' 달성을 위해 본 사업의 지속적 증액 필요
 - * 디지털기술, 국가유망기술(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첨단소재 등)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 개발 추진
 - ** 생활제품호환성(전자기기 충전기 등), 생활안전, 공공데이터 등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표준화 추진
- ▲신제품·서비스의 표준 제정, ▲2만 여종 국가표준의 주기적 정비, ▲표준의 효과적인 활용·확산, ▲고품질 KS인증제품 유통 등이 필요

세부 요구내용

(1)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2023) 1,111백만원 → (2024) 1,088백만원, △2%

- 국가표준체계 운영의 핵심사항인 국가표준 재개정 심의 등 KS 정비를 위한 290여개의 전문위원회, 기술심의회 등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국가표준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제도 연구, 분야별 표준화 정책 및 전략로드맵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 (요구) 신규 표준 수요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산업표준심의회 개최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나 예산 현황을 고려하여 작년수준의 예산 요구
 - * 회의개최(건수) 현황 : ('20) 537 → ('21) 685 → ('22) 710
- (산출) 1,088백만원 = 일반수용비(인쇄비, 발표수당, 회의비등)(1식 x 88백만원)
 - + 시험연구비(기술·전문위원회 수당) : 201회 x 14.5만원 x 10명
 - + 국내여비(186회 x 7만원)
 - + 국외업무여비(2회 x 250만원)
 - + 사업추진비(1식 x 29백만원)
 - + 일반연구비(학술연구용역)(14과제 x 43.1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11 백만원	<p>○ 일반수용비(210-01) : 86,258천원</p> <p>가. 신산업, 신구요분야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34,795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수당 : 150,000원*10명*8회=12,000천원 · 자료인쇄 : 12,150*60p*5분야*6회=21,870천원 · 조정재원 : 925천원 <p>나. 국가표준화 전략 자문회의, 설명회 등(51,463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수당 : 150,000*10명*13회=19,500천원 · 자료인쇄 : 12,150*60p*5분야*9회=32,805천원 · 조정재원 : -842천원 <p>○ 시험연구비(210-13) : 348,000천원</p> <p>가. 신규표준 및 신제품의 기술기준 개발(349,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표준심의회 개최 : 145,000원*12명*200=348,000천원 <p>○ 국내여비(220-01) : 13,237천원</p> <p>가. 표준개발협력기관 현장평가(6,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 : 20,000원*3명*20분야=1,200천원 · 시외 : 120,000원*3명*20분야=4,800천원 <p>나. 분야별 표준화 간담회, 설명회 등 참석(3,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 : 20,000원*3명*10회=600천원 · 시외 : 120,000원*2명*10회=2,400천원 <p>다. 표준안 개발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등(3,72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 : 20,000원*2명*7분야*3회=840천원 · 시외 : 120,000원*2명*4분야*3회=2,880천원 <p>○ 국외업무여비(220-02) : 5,103천원</p> <p>1. 해외표준화 기구 표준화 정책 현황 조사(5,103천원)</p> <p>가. DIN(독일, 베를린, 5급, 2.7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 : 2,000,000원*0.85*2명=3,400천원 · 일비 : \$30*7일*2명=546천원(\$420) · 숙박비 : \$137*5일*2명=1,781천원(\$1,370)) · 식비 : \$59*7일*2명=1,074천원(\$826) · 조정재원 : -1,720천원 <p>○ 사업추진비(240-01) : 28,432천원</p> <p>1. 표준심의 관련 사업추진비 : 17,100천원</p> <p>2. 분야별 간담회 및 공청회 사업추진비 : 2,800천원</p> <p>3. 자료수집 관련 사업추진비 : 8,1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재원 : 432천원 <p>○ 일반연구비(260-01) : 630,000천원</p> <p>가.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604,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발전을 위한 표준정책개발 및 법적 연구 : 31,500,000*20개 과제=630,000천원 	1,088 백만원	<p>○ 일반수용비(210-01) : 88,258천원</p> <p>가. 신산업, 신구요분야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34,868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수당 : 150,000원*10명*9회=13,500천원 · 자료인쇄 : 12,150*60p*5분야*6회=21,870천원 · 조정재원 : -502천원 <p>나. 국가표준화 전략 자문회의, 설명회 등(53,39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수당 : 150,000*10명*14회=21,000천원 · 자료인쇄 : 12,150*60p*5분야*9회=32,805천원 · 조정재원 : -415천원 <p>○ 시험연구비(210-13) : 349,000천원</p> <p>가. 신규표준 및 신제품의 기술기준 개발(349,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표준심의회 개최 : 145,000원*12명*201=349,740천원 · 조정재원 : -800천원 <p>○ 국내여비(220-01) : 13,237천원</p> <p>가. 표준개발협력기관 현장평가(6,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 : 20,000원*3명*20분야=1,200천원 · 시외 : 120,000원*3명*20분야=4,800천원 <p>나. 분야별 표준화 간담회, 설명회 등 참석(3,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 : 20,000원*3명*10회=600천원 · 시외 : 120,000원*2명*10회=2,400천원 <p>다. 표준안 개발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등(3,72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 : 20,000원*2명*7분야*3회=840천원 · 시외 : 120,000원*2명*4분야*3회=2,880천원 <p>○ 국외업무여비(220-02) : 5,101천원</p> <p>1. 해외표준화 기구 표준화 정책 현황 조사(5,101천원)</p> <p>가. DIN(독일, 베를린, 5급, 2.7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 : 2,000,000원*0.85*2명=3,400천원 · 일비 : \$30*7일*2명=546천원(\$420) · 숙박비 : \$137*5일*2명=1,781천원(\$1,370)) · 식비 : \$59*7일*2명=1,074천원(\$826) · 조정재원 : -1,700천원 <p>○ 사업추진비(240-01) : 28,404천원</p> <p>1. 표준심의 관련 사업추진비 : 17,100천원</p> <p>2. 분야별 간담회 및 공청회 사업추진비 : 2,800천원</p> <p>3. 자료수집 관련 사업추진비 : 8,1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재원 : 404천원 <p>○ 일반연구비(260-01) : 604,000천원</p> <p>가.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604,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발전을 위한 표준정책개발 및 법적 연구 : 43100000*14개 과제=603,400천원 · 조정재원 : 600천원

(2)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2023) 4,317백만원 → (2024) 3,862백만원, △10%

- 산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신속히 발굴·반영하기 위해 국가표준 개발·관리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민간주도형 국가표준화생태계 운영('07~)
-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디지털·반도체·생활밀착 서비스 등의 표준 제정·개정·중복검토 수요 증가 예상
- (요구) 차년도 표준개발(고유표준개발, 국자표준정비 등)에 대비하기 위한 3,862백만원 요구
 - * ('21)제정·부합화 296건, 정비 2,749건 → ('22)제정·부합화 341건, 정비 4,024건
- (산출) 3,862백만원 = 고유표준 개발(30종 x 20백만원)
 - + 국제표준 부합화(78종 x 1백만원)
 - + 국가표준 정비(확인·개정·폐지 3612종 x 0.75백만원)
 - + 기관별 TC/SC 대응(69개 기관 x 5백만원)
 - + 대표기관 운영비(130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317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4,317,000천원 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4,317,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표준개발 : 75종*20,000,000원=1,500,000천원 · 국제표준부합화 : 250종*1,000,000원=250,000천원 · 국가표준 정비(확인, 개정, 폐지) : 2810종*750,000원=2,107,500천원 · 기관별 TC, SC 대응 : 66개*5,000,000=330,000천원 · 대표기관운영비 : 1개기관*130,000,000원=130,000천원 	3,862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3,862,000천원 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3,86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표준개발 : 30종*20,000,000원=600,000천원 · 국제표준부합화 : 78종*1,000,000원=78,000천원 · 국가표준 정비(확인, 개정, 폐지) : 3612종*750,000원=2,709,000천원 · 기관별 TC, SC 대응 : 69개*5,000,000=345,000천원 · 대표기관운영비 : 1개기관*130,000,000원=130,000천원

(3)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 (2023) 70백만원 → (2024) 70백만원, 전년동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업분야별 국내 기업의 표준화 및 인증제품의 활용 실태 등을 조사, 표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 표준화 전략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 실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사업
- (요구) 전년도와 동일 요구내역 유지
- (산출) 1,000개 업체 x 7만원 = 70백만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 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70,000천원 가. 표준화실태조사(7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실태조사 : 70,000원*1000개업체=70,000천원 	70 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70,000천원 가. 표준화실태조사(7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실태조사 : 70,000원*1000개업체=70,000천원

(4)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2023) 980백만원 → (2024) 980백만원, 전년동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불량 KS제품 시중유통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년 실시
- KS인증제품 중 품질취약 품목을 중점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표시제거, 판매정지 등 행정조치 수행(제품구매/현장채취 → 공인시험기관 의뢰 → 행정조치)

* 산업표준화법(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

- (요구) 정기심사 주기 조정(3년에서 4년) 등에 따른 KS인증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판품조사 예산 980백만원 요구

- (산출) 전체13,628개 업체 중 5% (680개 업체) x 1회 x 1.44백만원 = 980백만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80 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980,000천원 가.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980,000천원) · 시판품조사 : 1,440,000원*680개업체=980,000천원 · 조정재원 : 800천원	980 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980,000천원 가.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980,000천원) · 시판품조사 : 1,440,000원*680개업체=980,000천원 · 조정재원 : 8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산업·신수요 분야의 국가표준 개발율(단위: %)	목표	75	75	75	75	75	국제표준화 동향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표준화 우선 순위 예산 등을 감안 하여 신산업·신수요 분야의 국가표준 개발율 목표치 설정	신산업·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수 /신국가표준 개발수 *100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통계자료,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실적	77	76.2	75.3	75.6	-			
	달성도	103	101	100.4	100.8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KS) 심의('20년 12월 말 기준 KS 20,017종 유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310종 개정 1,325종, 확인 2,068종, 폐지 127종 등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개 기관 지정, KS 중 약 75%(약 15,000여종) 관리 이행 ○ '20년 표준화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표준·인증 관련 대국민 인지도 조사(1,000명) - 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 KS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1,000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20년 총 48개품목 40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 : 레미콘 206개 업체, PVC/PE관 4개품목 17건 조사 - 일반관리 : LED조명, 단열재, 차단기 등 43개 품목 180건 조사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사업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시나리오 개발(6개 품목, 세부 62개 제품) 및 원스톱처리 온라인 플랫폼 ISP 도출 - 기업상담·홍보(상담: 39건, 홍보: 약 344건), 통합 인증진행(완료7건, 진행중 4건, 기타 4건) ○ 제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후원 ISO, IEC, NIS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예선 및 본선 개최 - 중국 인도네시아 케냐 싱가포르 한국 등 5개국 중·고등학생 및 지도교사 등 총 300명 참여 ○ 초·중고 표준화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교육 시범학교 운영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 - 찾아가는 표준교육 진행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46개교, 고등학교 23개교 / 15,904명) - 교원 및 관리자 직무연수(6회 / 118명)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KS) 심의(‘21년 12월 말 기준 KS 21,221종 유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469종 개정 1,641종, 확인 2,878종, 폐지 176종 등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개 기관 지정, KS 중 약 78%(약 16,500여종) 관리 이양 ○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기업 대상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조사 (1,000개) ○ KS인증제품 시판품 및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재산 및 신체 위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KS인증제품의 품질 확보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시판품·현장 조사 (조사건수 661건, 표시/판매정지 41건, 인증취소 31건(20건 완료, 11건 진행중), 개선명령 43건)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시나리오 개발(14개 품목, 세부 39개 제품) 및 다수인증 지원센터 개소 확대 운영(상담창구 전국 11개, 제품별 전문창구 6개) - 기업상담·홍보(상담: 약 120건, 홍보: 약 400건), 통합 인증 서비스(20건) ○ 제16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후원 ISO, IEC, NIS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예선 및 본선 개최 - 일본,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케냐, 르완다, 한국 등 7개국 중·고등학생 및 지도교사 등 총 300명 참여 ○ 초·중고 표준화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교육 시범학교 운영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9개교 / 1,846명) - 찾아가는 표준교육 진행(초등학교 72개교,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17개교 / 16,370명)

2022

- 국가표준(KS) 심의('22년 12월 말 기준 KS 21,347종 유효)
 - 제정 356종, 개정 1587종, 확인 3,227종, 폐지 130종 등
- 우수사례
 - ① USB-C타입 전원 데이터 접속 표준화로 환경보호 및 비용절감, 국민편익 증진
 - ② 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화 - 충전스테이션 관리시스템의 통신 방식 표준화
 - ③ KS X 9101 국가표준 제정 - 고객 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 가능 (동아일보 언론보도)
 - ④ 건축물 내구성 강화를 위한 KS D 3034 제정으로 국민안전 확보
 - ⑤ 높은 난연 등급 외장전력케이블 요구사항 KS C 3993 제정으로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 한국인 최초 ISO 회장 당선(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으로 국제표준기구 내 표준강국 입지 강화 및 우호국 확보로 우리나라 영향력 확대('22.9)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
 - 66개 기관 지정, KS 중 약 80%(17,000여 종) 관리 이양
- KS인증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 공공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효과가 발생되어, 중소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및 매출 확대, 기업의 표준 개발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표준 생태계 조성 가능
- '22년 표준화 실태조사 (22.10~11)
 - 제조업체 대상 KS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1,000개)로 표준정책 수립에 활용
- KS인증제품 581개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통해 142건의 부적합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안전 확보 (인증취소 7건, 표시 및 판매정지 55건, 개선명령 80건)
-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
 - (국제표준포럼 운영) 국제표준포럼 및 국내패널 등 네트워크 기반 조성
 - (세계표준의 날) 유공 정부포상 및 기념행사 개최 :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0점 수여,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일본,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르완다, 한국 등 7개국 중·고등학생 및 지도교사 총 300여 명 참여, 온라인 예선 및 본선 대회 개최
 - (초·중·고 표준교육) 표준교육 시범학교 운영(25개교 2,330명), 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170개교 29,700명), 교원연수 개최(진행중) 등 표준교육 확대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시나리오 개발('24년까지 5개 신규품목 추가, 총 25개 품목)
 - 다수인증 지원 품목에 대한 원스톱처리 지원센터 운영 및 참여기관 확대,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
- 국조실 요청으로 규제혁신 우수정책 홍보 프로그램 촬영 및 방영
 - KTV 정책다큐에서 원스톱 다수인증 처리 서비스를 소개하고 LED 제품 사례 홍보

정책다큐K 숨은 일꾼을 찾아서 매주 수, 목요일 16시 00분

원스톱 다수인증 시나리오, 시간과 비용이 확 줄었어요!

회차: 18회 방송일: 2022.12.15 재생시간: 25:34
- * 보조사업 연장평가('22년 실시) 결과에 따라 '23년 예산안부터 타 세부사업으로 이관(3731-312 시험인증산업경쟁력및신뢰성제고)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 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23년 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351종, 개정 832종, 확인 2,439종, 폐지 92종 등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9개 기관 지정, KS 중 약 78%(16,000여 종) 관리 이양 ○ '23년 표준화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체 대상 KS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 추진(1,000개)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0여개 업체에 대한 시판품조사 추진 ○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23년 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포럼 운영) 국제표준포럼 및 국내패널 등 네트워크 기반 조성 추진 - (세계표준의 날) 유공 정부포상 및 기념행사 추진 :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0점 수여,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 (국제표준올림픽아드) 일본,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르완다, 한국 등 9개국 참가한 제18회 국제표준올림픽아드 개최 완료 - (초중고 표준교육) 표준교육 시범학교 운영(25개교 2,358명), 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151개교 16,143명) 등 표준교육 추진
------	---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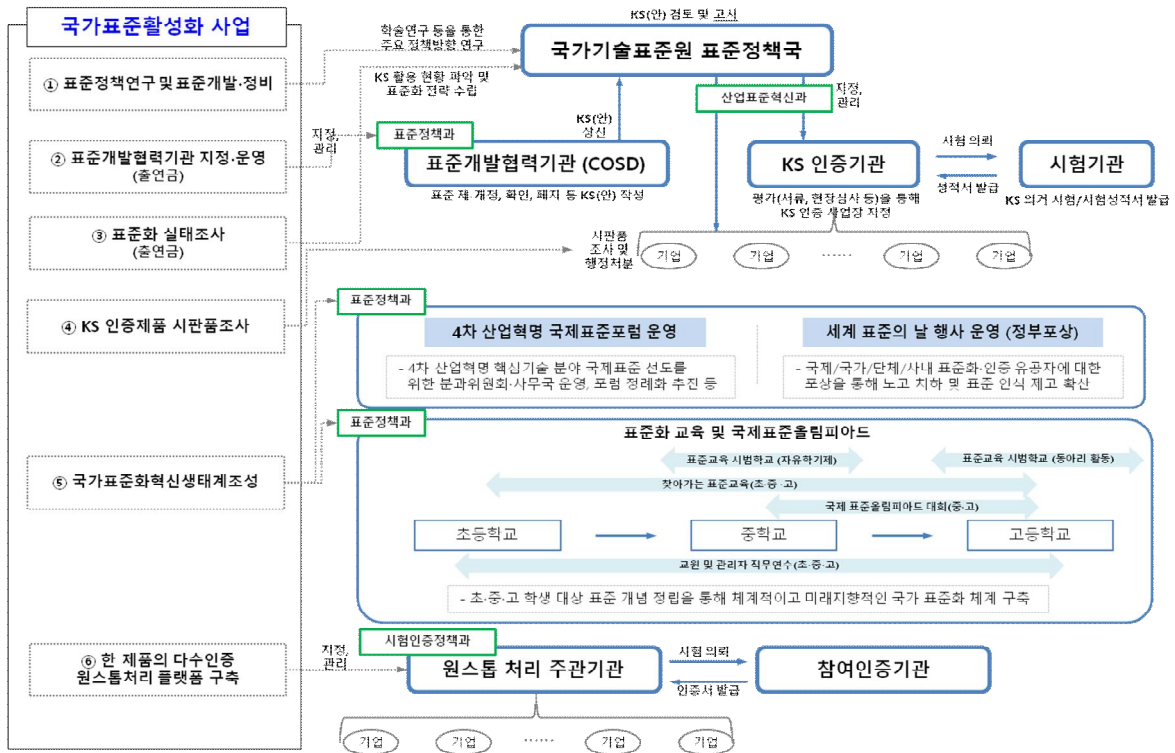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 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108종, 개정·확인·폐지 3,612종 등 목표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9개 기관 지정, KS 중 관리이양 약 80% 이상 ○ '23년 표준화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1,000개)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판품조사 대상 업체(680여개 업체) 실시 ○ 국가표준화 혁신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예산 전액 삭감
------	--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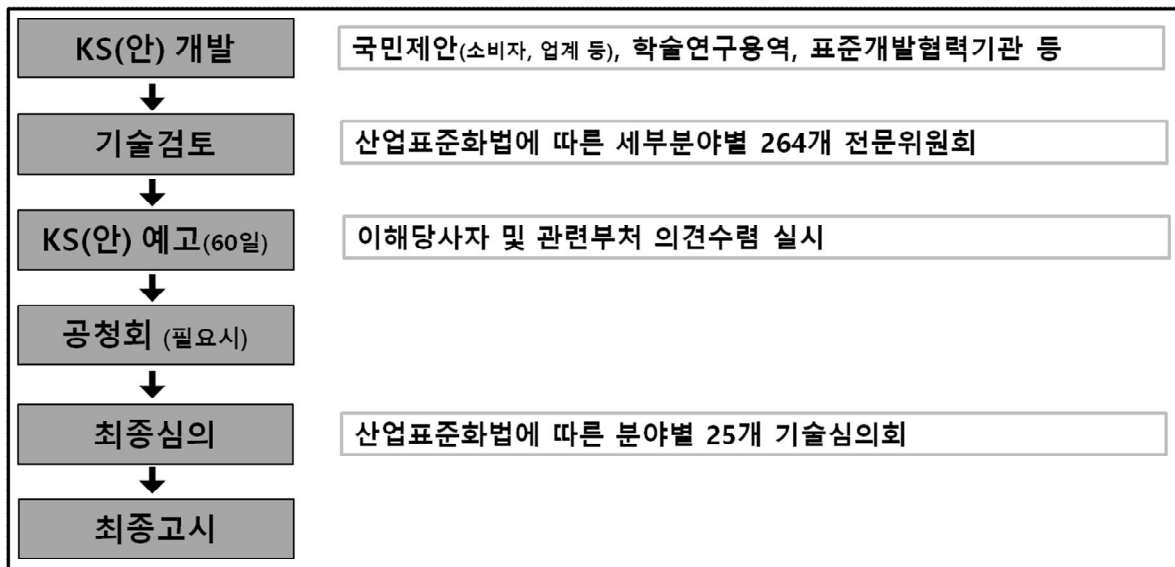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수행체계 (세부사업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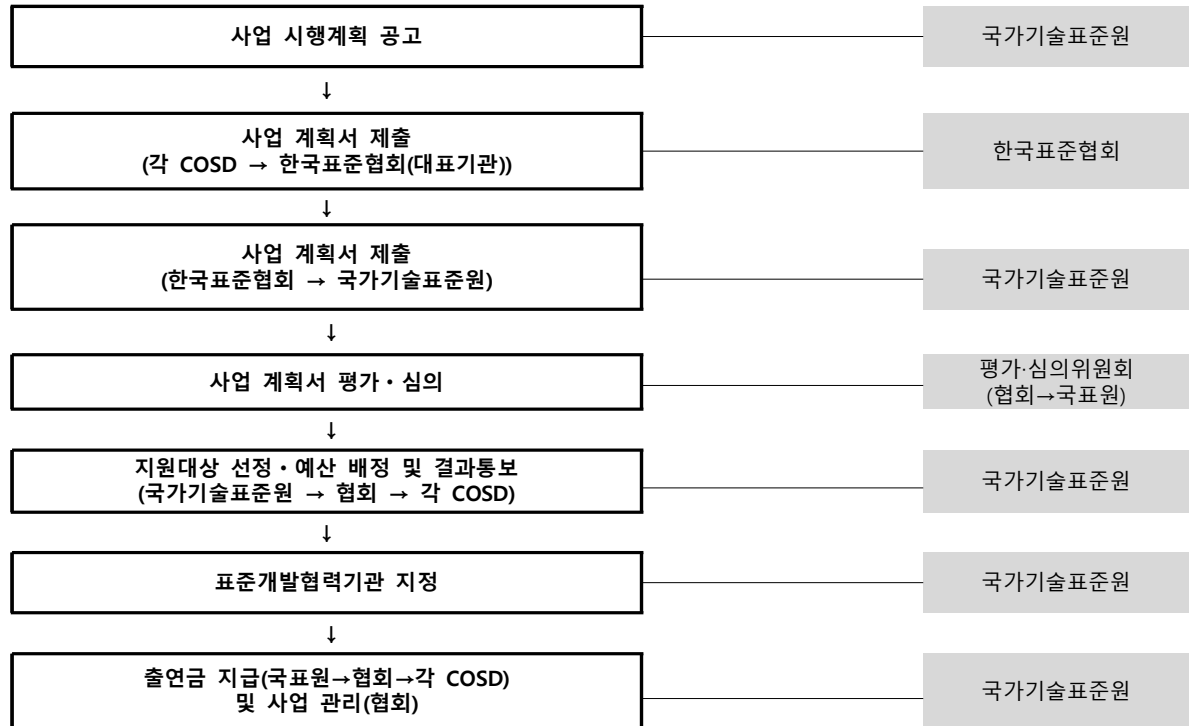


■ 사업수행체계 (국가표준 제·개정 절차)



■ 내역사업별 사업수행체계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추진체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일반용역) >

표준의 날 기념식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포상자 선정 ▶ 기념식 기획 ▶ 기념식 개최
청소년국제 표준올림피아드	과제 개발 ▶ 국내외 홍보 ▶ 예선대회 개최 ▶ 본선대회 개최 ▶ 결과 시상
표준화 교육	연구학교 신청·지정 ▶ 교사 연수 ▶ 연구학교 운영 ▶ 평가 실시 ▶ 운영보고회
국제표준포럼	용역공고 및 접수 ▶ 수행기관 선정 ▶ 포럼 수요 발굴 ▶ 포럼 개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7,135	6,660	9,971	10,943	12,009	
'23~'27		6,834	7,392	7,687	7,918	8,07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❶ (지적사항) 표준화실태조사사업(7,000만원)은 사업출연금(350-02)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출연금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에 출연금을 집행하였음(구자근, 박수영 위원, '21년 결산 산중위)
 - 산업통상자원부는 표준화실태조사사업 비목을 출연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할 것(박수영 위원-시정, 구자근 위원-제도개선)
 - * 「산업표준화법」은 표준화실태조사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할 수 있음.
 - (결과) '23년 예산안 내 민간위탁사업비로 반영
- ❷ (지적사항) 내역사업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9억 3,700만원)의 시험연구비(산업표준심의회 수당 1억 7,400만원)는 산업표준심의회 개최 횟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7억원 증액 필요(구자근·김경만·노용호·박영순·송기현·신영대·양금희·이인선·이철규·정운천·정일영·최형두·한무경 위원, '23년 예산안 예결위)
 - * 2021년 산업표준심의회는 678회 개최되어 수당으로 868백만원이 집행되었음
 - (결과) '23년 예산 확정시 증액되어 348백만원 반영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충실한 조치를 이행하고, 예산 불용 최소화 등 집행을 제고 노력을 인정함('2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 적극적인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한 노력이 확인됨, 추진 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사업성과 제고에 기여('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 예산 미집행에 대한 원인분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며,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은 정책용역 등으로 일부 사용을 위해 노력('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상기 국회 지적사항 내용에 기재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본 사업 관련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및 그 내용에 따라 표준 개발,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겠음

관련 국가계획	상정 회의	본 사업 관련 내용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경제관계 장관회의('19.4월)	· 연료전지, 공급시설 분야 '21년까지 국가표준 18종 제정, KS인증품목 30건 지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19.6월)	· 신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국가표준개발 및 기업제공, 인증품목 지정·관리
「비대면경제 표준화 전략」	비대면경제 표준 오픈 포럼 출범('20.9월)	· 비대면 경제 분야 핵심표준 50종 개발 및 실증·인증체계 구축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21.3월)	· 4-1-2 : 표준인증체계 선제적 구축 → 탄소중립 표준화전략 수립·발표('21.11) (국가표준 개발 100종, 국제표준 도입 400종, 인증품목 20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검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21.4월)	· '25년까지 100대 핵심 서비스표준 개발 (▲유망서비스, ▲생활서비스, ▲사회안전서비스)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제4차 국가표준심의회 (21.6월)	· 혁신기술*의 표준(국가표준(KS)·국제표준)을 선점하여 산업주도권 확보 및 기업성과 창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저탄소기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보조사업 연장평가('22.05)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 (최종의견 및 점수) 사업방식 변경 / 75.1점
 - (결과 요약)
 - ① 사업명 재조정 및 보조사업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사업방식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② 세부사업명과 실질 내역사업 간 불일치 조정이 필요함
→(3731-312)시험인증산업경쟁력및신뢰성제고 세부사업으로 이관

12) 부처 건의사항

- 국가표준체계(한국산업표준, KS) 운영을 위한 유일한 국가예산
 - 국가표준(한국산업표준, KS) 개발·정비를 통해 기술·사회적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증액을 추진할 예정
 - 국가대표 기술기준인 국가표준*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표준 제정, 국가표준의 주기적 정비, 고품질 KS인증제품 유통 등을 수행
- *全本야 2만여종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5년 마다 의무적 검토를 통해 ▲제정, ▲개정, ▲확인, ▲폐지 절차를 진행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반도체·디스플레이·AI 등 미래전략기술 및 글로벌통상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세계 시장 선점, 국민안전 담보 등에서 표준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6,229	-	6,229	-	±45	-	6,229	6,124	98.3	98.3	-	105
2021	6,042	-	6,042	-	-	-	6,042	5,981	99.0	99.0	-	61
2022	7,135	△111	7,024	-	+80	-	7,104	7,078	100.8	99.6	-	26
2023	6,834	-	6,834	-	-	-	6,834	6,763	98.9	98.9	-	70.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3,467	3,467	3,467	3,467	-	3,467	3,467	-	-	100
2021	3,456	3,456	3,456	3,456	-	3,456	3,456	-	-	100
2022	3,932	3,932	3,932	3,932	-	3,932	3,932	-	-	100
2023. 12월기준	4,317	4,317	4,317	4,317	-	4,317	4,317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 표준화 교육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수용비 38백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전용 국내여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 국외여비 7백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 용역 낙찰차액(올림픽아드 7백만원, 교육 15백만원)의 불용 발생 최소화를 위해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사업 일반연구비로 전용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시판품조사 불용 최소화를 위해 110백만원을 표준개발 심의수당으로 전용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105백만원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출장에 비해 국내출장수요 증가, 국외여비 6백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61백만원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추경 감액 :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고통분담 감액 - 시험연구비(210-13) 66,400천원, 일반용역비(210-14) 43,279천원, 사업추진비(240-01) 1,705천원 - 전용 :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는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사업 수행을 위해 국제표준활동지원(3731-302) 사업의 일반연구비(260-01) 80백만원을 국가표준활성화(3731-309) 사업의 시험연구비(210-13)으로 전용 80백만원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26백만원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70.4백만원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해당없음)

1.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 정비

□ 사업개요

사업기간	'00~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박정민 연구사(☎ 043-870-5343)		

- 국내 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 국민생활밀착형 국가표준 보급 등 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상 정부 임무인 국가표준체계 운영

□ 사업내용

- (위원회 운영) 국가표준체계 운영의 핵심사항인 국가표준 재개정 심의 등 KS 정비를 위한 260여개의 전문위원회,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정책연구) 국가표준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제도 연구, 분야별 표준화 정책 및 전략로드맵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 (사업예산) 1,111 백만원('22년도)

세사업 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1,117	1,115	1,115	1,089	1,115	1,089	26	1,111
－ 일반수용비 (210-01)	88	88	88	88	88	88	－	86
－ 시험연구비 (210-13)	348	348	348	348	348	348	－	348
－ 국내여비 (220-01)	14	14	14	14	14	14	－	13
－ 국외업무여비 (220-02)	6	6	6	6	6	6	－	5
－ 사업추진비 (240-01)	31	29	29	29	29	29	－	29
－ 일반연구비 (260-01)	630	630	630	604	630	604	26	630

□ '22년 주요성과

- 국가표준(KS) 심의 5,300건(제정 356·개정 1,587·확인 3,227·폐지 130)
* (우수사례) USB-C 타입 전원 접속 표준화, 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표준화 등
- 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표준화 방안 연구 등 14개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여 해당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2.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사업개요

사업기간	‘08~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박정민 연구사(☎ 043-870-5343)		

- 국가표준의 개발·정비 등의 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하고 운영

* COSD :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및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 사업내용

- 산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신속히 발굴·반영하기 위해 국가표준 개발·관리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민간주도형 국가표준화생태계 운영
- (추진체계) 국표원, 대표협력기관, 79개 분야별 69개 협력기관 지정
 - 대표협력기관은 협력기관과 사업협약 체결, 사업비 지급 등 실무 전담
 - 협력기관은 국가표준(KS) 제정 및 정비(개정·확인·폐지 등) 수행
- (사업예산) 4,317 백만원

(세부사업) 국가표준활성화	예 산		전담기관
	23년	24년	
(내역사업)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4,317	3,862	표준협회

□ '23년 주요성과

- (표준개발) 23년 총 3,714건 표준 제정·정비 (제정 351, 정비 3,363)

■ 우수 국가표준 개발 사례 (산업부 장관상 수여)

- ① 서비스·의료 로봇에서 사용되는 모듈의 표준인 KS B 7321-1 제정으로 로봇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② 차량의 브레이크 마모입자 측정을 위한 KS R 1190 제정으로 차량 미세먼지 저감 기반 마련

- (성과공유) 표준화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 23.12)

3. 표준화 실태조사

□ 사업개요

사업기간	'15~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염동석 사무관(☎ 043-870-5386)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업분야별 국내 기업의 표준화 및 인증제품의 활용 실태 등을 조사, 표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30조의2(실태조사)

□ 사업내용

- 표준화 전략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 실태를 정량적으로 파악,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의무 실시
-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관련 표준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기업의 표준화 활동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표준화 전략 수립 등에 참고

□ '22년 주요성과

- 국가표준 현황조사 ; 21,245건 대상 온라인 판매 및 구독현황을 조사
- 단체표준 현황조사 ; 단체표준 제개정 현황, 인증활용현황 등 조사
-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 1,000개 기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시사점 도출

- ① 온라인 표준 보급 서비스 질적 제고 필요
- ② 국제표준 인증에 대한 선제적 도입 필요

4.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사업개요

사업기간	'00~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이재준 사무관(☎ 043-870-5388)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인증 제품에 대해 매년 불시 점검을 실시, 불량 KS인증 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조사)

□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유통 등에서 채취한 **KS** 제품의 표준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인증취소, 표시·판매정지 등 처분
 - 불량 KS인증 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매년 시판품조사 등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가 직접 주관·실시

□ '22년 주요성과

- (조사현황) 64개 품목, 635건을 대상으로 시판품조사 실시
 - 중점관리 품목(레미콘, **PVC/PE관**, **LED 조명**), 일반관리 품목(차단기 등) 은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정기조사,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민원 발생품목에 대해서 수시조사 실시
 - 전체 635개 중 채취가 된 583개 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품질시험)을 통해 150건의 부적합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안전 확보
- (행정처분) 부적합 제품 생산 업체에 대해 사전 처분통지, 업체의견 접수·검토 및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 실시 (150건)
 - 인증취소 15건, 표시 및 판매정지 55건, 개선명령 80건

5. 국가표준화 혁신 생태계조성

□ 사업개요

사업기간	'00~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박정민 연구사(☎ 043-870-5343)		

- 민간주도형 국가표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 정부포상, 국제포럼 운영 등을 통해 표준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 사업내용

- 표준 인식 제고를 위한 초중고 표준교육활동 및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국제표준화 기구와 교류 및 전략논의를 위한 국제표준포럼, 세계 표준의 날 운영
- (초중고 표준교육) 표준교육 활동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미래 국제·국가표준 인재양성의 기반 마련
-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국내·외 청소년 대상으로 표준과 관련된 과제를 세계 유일의 표준화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나라의 표준화 교육 주도국 위상 강화
- (국제표준포럼 운영) 국제표준포럼 및 국내정책패널 구성·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표준 선도국 및 국제표준화기구 등과의 전략논의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
- (세계표준의 날) 세계표준의 날 유공 정부포상 및 기념식 개최를 통해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 '23년 사업 성과

- (초중고 표준교육) 표준교육 시범학교 운영(25개교 2,358명), 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171개교 16,143명), 교원연수 개최(105명) 등 표준교육 확대
-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일본,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르완다, 한국 등 9개국 중·고등학생 및 지도교사 총 200여 명 참여, 대회 개최
- (국제표준포럼 운영) 국제표준포럼 및 국내패널 등 네트워크 기반 조성
- (세계표준의 날)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를 위해 유공 정부포상 :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0점 수여

<div style="margin-bottom: 10px;">사 업 명</div> <div>(10) 시험인증산업경쟁력및신뢰성제고(3731-312)</div>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12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2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박형민	노학엽 연구관	이진구
		적합성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시험인증정책과	043-870-5480	043-870-5487	043-870-5482
		한국제품안전 관리원	시험인증조사팀	조희래 팀장	070-5223-1415
		한국표준협회	KS인증센터	권영상 센터장	02-6240-4639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권옥향 팀장	053-718-851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5,587	6,345	4,760	4,760	△1,585	△25.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5,595	5,587 [5,587]	-	8	6,345	6,345	6,332 [6,328]	6,345	6,332 [6,328]	-	-	4,760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	300	292 [292]	-	8	300	300	292 [292]	300	292 [292]	-	-	300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	1,250	1,250 [1,250]	-	-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	-	1,125	
· 시험인증산업 현황 파악 및 기초인력 양성	-	320	320 [320]	-	-	320	320	317 [317]	320	317 [317]	-	-	-	
· 항바이러스 국제 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	3,725	3,725 [3,725]	-	-	3,725	3,725	3,725 [3,725]	3,725	3,725 [3,725]	-	-	2,785	
·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 폼 구축·운영	-	-	-	-	-	750	750	744 [744]	750	744 [744]	-	-	550	
○ 비목별 분류(합계)	-	5,595	5,587 [5,587]	-	8	6,345	6,345	6,332 [6,328]	6,345	6,332 [6,328]	-	-	4,760	
· 일반연구비 (260-01)	-	-	-	-	-	225	225	220 [220]	225	220 [220]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550	550	550 [546]	550	550 [546]	-	-	55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00	300	292 [292]	-	8	300	300	292 [292]	300	292 [292]	-	-	300	
· 사업출연금 (350-02)	5,245	5,245	5,245 [5,245]	-	-	5,270	5,270	5,270 [5,270]	5,270	5,270 [5,270]	-	-	3,910	
· 기획평가관리비 (360-06)	50	50	50 [50]	-	-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5,595	5,587 [5,587]	-	8	6,345	6,345	6,332 [6,328]	6,345	6,332 [6,328]	-	-	4,760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	300	292 [292]	-	8	300	300	292 [292]	300	292 [292]	-	-	30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00	300	292 [292]	-	8	300	300	292 [292]	300	292 [292]	-	-	300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	1,250	1,250 [1,250]	-	-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	-	1,125	
-사업출연금 (350-02)	-	1,250	1,250 [1,250]	-	-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	-	1,125	
· 시험인증산업 현황 파악 및 기초인력 양성	-	320	320 [320]	-	-	320	320	317 [317]	320	317 [317]	-	-	-	
-일반연구비 (260-01)	-	-	-	-	-	25	25	22 [22]	25	22 [22]	-	-	-	
-사업출연금 (350-02)	-	320	320 [320]	-	-	295	295	295 [295]	295	295 [295]	-	-	-	
· 항바이러스 국제 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	3,725	3,725 [3,725]	-	-	3,725	3,725	3,725 [3,725]	3,725	3,725 [3,725]	-	-	2,785	
-사업출연금 (350-02)	-	3,675	3,675 [3,675]	-	-	3,725	3,725	3,725 [3,725]	3,725	3,725 [3,725]	-	-	2,785	
-기획평가관리비 (360-06)	50	50	50 [50]	-	-	-	-	-	-	-	-	-	-	
·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	-	-	-	-	750	750	748 [744]	750	748 [744]	-	-	550	
-일반연구비 (260-01)	-	-	-	-	-	200	200	198 [198]	200	198 [198]	-	-	-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550	550	550 [546]	550	550 [546]	-	-	5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시험인증산업 고도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및 역량을 제고하고, 부정성적서 발행·유통·사용을 감시하여 시험인증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 강화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제품·서비스의 안전기준, 성능 미달 사례 등 부정·부실 성적서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및 적합성평가*의 신뢰 저하를 방지하고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운영

* 적합성평가 : 제품·서비스·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시험, 검사, 인증 등의 활동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미래 유망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 개발(공인성적서발행)을 통해 신뢰성·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의 조기산업화 및 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함

* 객관적인 제3자가 표준 혹은 안전기준에 기반한 시험·인증 평가 결과를 제공

-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국민생활과 밀접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민간 국제인증체계 구축지원을 통해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 안전과 수출기업 및 시험인증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함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단일제품에 관리부처 및 목적이 다른 다수의 인증 취득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시간·비용)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국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가 발행·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사용 등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에 성적서 관련 자료 요구
 4. 성적서 관련 사업장 조사
 5. 그 밖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적합성평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의 장 또는 적합성평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 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적합성평가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의 개발과 운영
 3.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4. 그 밖에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사업자와 공인기관에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부정 또는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기관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부정행위조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3.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어 것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③ 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은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하여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정행위조사기관이 수행하는 부정행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8. (생략)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이하 생략)

< 산업표준화법 >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략)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 6. (생략)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자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0.09. :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규정에 따라「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03.12. : 신성장 산업의 국제표준화 5개년 계획 수립(장관 보고)
- '04.02. : “차세대성장동력 관련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시장 선점” 산자부 업무보고
- '04.04.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5.07. : 국가측정표준의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12. : 제2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수립(장관 보고)
- '05.12.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개정을 통해 인증기관의 “인증현황보고” 제도 도입('06.12월 시행)
- '07.02. : 「시험분석서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07.11. : 「시험분석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수립」 제24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07.12. : ISO 9001/14001 인증제도 관리업무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10.04. : 국민권익위원회, 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 권고
- '10.09.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 '12.07. :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VIP 보고)
- '13.08. : 서비스산업 발전(국정과제 14)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13.7.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보고) 세부과제로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추진
- '14.01.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보고
- '14.04. : '2015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선정
- '14.12. : '14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 ①자동차/철도 기능안전성 시험평가 및 기업지원 서비스,
 - ②무선충전 시험인증 서비스 등
- '15.03. : '2015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 '15.07. : '15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 ①스마트 에코 빌딩 구현을 위한 건축용 고성능 단열재 시험인증 서비스,
 - ②철도부품 중소기업의 신뢰성 지원 서비스 등
- '16.02. : '2016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 '16. : '16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 ①웨어러블 스마트 밴드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인증서비스,
 - ②전자상거래(O2O)기반 포장화물의 안전운송 시험인증서비스 등
- '17. : '17년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 '17. : '17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 ①산업기반시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준 수립 및 기업 컨설팅,
 - ②가상현실 디바이스의 인체 유해성 및 성능 평가 서비스 등
- '18.09 :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 규제혁신 방안으로 'LED제품 인허가 간소화 과제' 채택
- '18. : '18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3개 과제 지원
 - * ①모바일 무선충전 제품의 효율 시험인증 서비스 체계구축,
 - ②국내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인증 서비스 유망분야 발굴 및 정보제공,
 - ③ 실내 유입 초미세먼지 차단망 성능평가방법 개발 및 성능시험평가 등
- '19. : '19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3개 과제 지원
 - * ①석면 안정화제 성능 표준 마련 및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
 - ②해상안전통신기기 융복합시험인증,
 - ③직류 전압 500V이하 직류 전류 1600A 이하의 대전력을 위한 전력량계 시험방법 개발 등
- '20.04.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20.05.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관련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지원 검토

- '20. : '20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6개 과제 지원
 - * ①무선 전기진공청소기 성능 시험평가 서비스 개발,
 - ②소형무인동력비행장치의 배터리 수명시험 서비스 및 선정가이드라인 개발,
 - ③실내·외 조명 제품의 시험실 수준 빗공해 시험평가 서비스 개발,
 - ④급속 전기차 충전기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시험평가 서비스 개발,
 - ⑤전기구동시스템 효율등급 시험인증서비스 개발,
 - ⑥유망 시험인증서비스 로드맵
- '21.04.08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시험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
- '21.05.18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 * 시험 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한국제품안전관리원)
- '21.07.29 :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 및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협약식」 개최 (산업부장관 주관)
- '21. : '21년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 사업 8개 과제 지원
 - * ①살균 기능이 포함된 LED 조명기구 안전성 시험인증 서비스,
 - ②치과용 임플란트의 피로성 시험인증 서비스,
 - ③지능형 전력기기 통신 프로토콜 시험인증 서비스,
 - ④가정용 미용기기(LED 마스크, 두피 관리기, 눈 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의 안전성 시험인증 서비스,
 - ⑤체외진단용 검출기기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
 - ⑥건물 일체형 태양광 외장재에 대한 안전성 시험인증 서비스,
 - ⑦귀금속 합금의 X선 형광 분광 분석 시험인증 서비스,
 - ⑧가스용 밸브의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 '22.09.15 : 한수원 및 발전5社 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 업무협약 체결
- '22. : 다수인증 원스톱 기업지원 제품군 확대(총 22개 제품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	5,595	6,345	4,760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민간위탁,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민간위탁), 한국표준협회(보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출연/전담기관)
- 사업 수혜자 : 적합성평가기관 및 사업자, 일반 국민(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출연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1,125백만원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출연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2,785백만원	86.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보조	한국표준협회	550백만원	100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 ('23) 300백만원 → ('24 정부안) 300백만원 → ('24 확정) 300백만원

- (요구) '적합성평가관리법'('21.04.08 시행)에 따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운영 확대에 지원 필요성 증대, 적합성평가기관·사업자 및 발행성적서의 발행 건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 요청

- (산출)

- 조사센터인건비 : 150백만원 = 35백만원 x 10명 x 42.8%
- 조사센터출장비 : 15백만원=0.1백만원×3명×50회
- 외부전문가 조사수당 : 84백만원
= 현장조사 24백만원=0.3백만원×2명×40회 + 자문회의 60백만원=0.3백만원×5명×40회
- 시험수수료 : 20백만원 = 1백만원×20회
- 홈페이지 유지 및 홍보 : 30백만원

②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 ('23) 1,250백만원 → ('24 정부안) 1,125백만원 → ('24 확정) 1,125백만원

- (요구) '시험인증서비스 기반이 미약하거나 없는 분야를 대상으로 시험절차서, 치공구(지그) 등의 기반 구축 과정, 비용을 감안하여 지원 요청

- (산출)

- 과제수행비 : 1,103백만원 = 7개(과제선정 수)×157.6백만원(지원금액)
- 사업관리비(기획평가관리비) : 22백만원

③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및 기초인력 양성

: ('23) 320백만원 → ('24 정부안) 미반영 → ('24 확정) 미반영

- (요구) 국내외 시험인증 관련 시장동향, 규모 등의 현황 파악 및 마이스터·특성화 등 직업계 고등학교 대상 시험인증 분야 기초인력 양성 추진 위한 지원 필요

④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 ('23) 3,725백만원 → ('24 정부안) 2,785백만원 → ('24 확정) 2,785백만원

- (요구) 국민생활과 밀접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민간 국제인증체계 구축지원을 통해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안전과 수출기업 및 시험인증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

- (산출)

- 민간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 1,700백만원
= 운영체계 마련 400백만원 + 인증기준 마련 750백만원(150백만원×5회)
+ 시범운영 550백만원(11품목×5회×10백만원)
- 시험인프라 구축 : 1,050백만원 = 5품목 x 300백만원 x 70%(인프라구축에 대한 지원율)
- 사업관리비(기획평가관리비) : 35백만원

⑤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 ('23) 750백만원 → ('24 정부안) 550백만원 → ('24 확정) 550백만원

- (요구) 한 제품에 대한 다수인증 취득 과정에서 상담·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수인증 지원 센터'의 운영 및 온라인 플랫폼 확대, 원스톱처리 품목 발굴·개발·유지·보수를 위한 지원 필요

- (산출)

- 다수인증 지원센터 운영 : 550만원
= 원스톱처리 서비스 200백만원(25품목×8백만원) + 센터운영지원 230백만원(6개기관×38.5백만원)
+ 온라인 플랫폼 운영·관리 120백만원

⑥ 시험인증분야 스마트랩 구축 (세부사업 통·폐합)

: ('23) 100백만원 → ('24 정부안) 미반영 → ('24 확정) 미반영

- (요구) '22년도 스마트랩 구축 타당성 조사 결과 및 '23년도 스마트랩 우선 적용 분야 RFP 수립을 토대로 스마트랩 구축 시범사업 수행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345 백만원	<p>○ 일반연구비(260-01) : 225백만원</p> <p>가.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2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스톱처리방안 마련 : 200백만원 = 25품목x8백만원 <p>나.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및 기초인력 양성 (2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 : 25백만원 = 1건 x 25백만원 <p>○ 민간경상보조(320-01) : 550백만원</p> <p>가.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5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인증 지원센터 운영 : 550만원 = 원스톱처리 서비스 220백만원=22품목x10백만원 + 센터운영지원 210백만원=6개기관x35백만원 + 온라인 플랫폼 운영·관리 120백만원 <p>○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00백만원</p> <p>가.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3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센터인건비 : 150백만원 = 35백만원 x 10명 x 42.8% 조사센터출장비 : 15백만원=0.1백만원x3명x50회 외부전문가 조사수당 : 84백만원 = 현장조사 24백만원=0.3백만원x2명x40회 + 자문회의 60백만원=0.3백만원x5명x40회 시험수수료 : 20백만원 = 1백만원x20회 홈페이지 유지 및 홍보 : 30백만원 <p>○ 사업출연금(350-02) : 5,270백만원</p> <p>가.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1,2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수행비 : 1,225백만원 = 7개(과제선정 수)x175백만원(지원금액) 사업관리비(기획평가관리비) : 25백만원 <p>나.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및 기초인력 양성 (29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인력 양성 및 현황파악 : 290백만원 = 인력양성 220백만원=50명x4.4백만원 + 현황파악 70백만원=1건x70백만원 사업관리비(기획평가관리비) : 5백만원 <p>다.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3,72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 1,705백만원 = 운영체계 마련 : 295백만원=1건x295백만원 + 인증기준 마련 : 450백만원=3품목x150백만원 + 시범운영 : 960백만원=6품목x16건x10'백만원 시험인프라 구축 : 1,974백만원 = 개별품목 시험평가 : 630백만원=3품목x300백만원x70% + 실증체계 시험평가 : 1,344백만원=2건x960백만원x70% 사업관리비(기획평가관리비) : 46백만원 	4,760 백만원	<p>○ 민간경상보조(320-01) : 550백만원</p> <p>가.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5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인증 지원센터 운영 : 550만원 = 원스톱처리 서비스 200백만원=25품목x8백만원 + 센터운영지원 230백만원=6개기관x38.5백만원 + 온라인 플랫폼 운영·관리 120백만원 <p>○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00백만원</p> <p>가.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3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센터인건비 : 150백만원 = 35백만원 x 10명 x 42.8% 조사센터출장비 : 15백만원 = 0.1백만원x3명x50회 외부전문가 조사수당 : 84백만원 = 현장조사 24백만원=0.3백만원x2명x40회 + 자문회의 60백만원=0.3백만원x5명x40회 시험수수료 : 20백만원 = 1백만원x20회 홈페이지 유지 및 홍보 : 30백만원 <p>○ 사업출연금(350-02) : 3,910백만원</p> <p>가.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1,12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수행비 : 1,103백만원 = 7개(과제선정 수)x157.6백만원(지원금액) 사업관리비(기획평가관리비) : 22백만원 <p>나.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2,78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 1,700백만원 = 운영체계 마련 : 400백만원 + 인증기준 마련 : 750백만원(150백만원x5회) + 시범운영 : 550백만원(11품목x5회x10'백만원) 시험인프라 구축 : 1,050백만원(5품목x300백만원x70%) 사업관리비(기획평가관리비) : 3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OLAS 인증 시험절차서· 시험성적서 발행 (단위 : 건)	목표	-	-	7	7	7	당해연도 선정과제 수 7개	시험절차서 및 기술로드맵 제작, 시험성적서 발행 건수	시험절차서 및 성적서 발행 집계 (수행기관)
	실적	-	-	7	-	-			
	달성도	-	-	100	-	-			
유망시험서비스 교육·세미나 개최 (단위 : 건)	목표	-	-	7	7	7	당해연도 선정과제 수 7개	신규 개발 유망시험서비스 관련 산업계 대상 교육·세미나 개최 횟수	개발 시험서비스 별 교육·세미나 개최회수 집계 (수행기관)
	실적	-	-	7	-	-			
	달성도	-	-	100	-	-			
시험인증 기관 채용 인원* (단위 : 명)	목표	-	-	15	15	-	최근 직업계고 취업률 (27.7%→13.85명) 고려하여 목표산정	시험인증 기초인력 채용연계 인원수	교육수료자에 대한 채용확인서 (수행기관, 채용기관)
	실적	-	-	15	18	-			
	달성도	-	-	100	120	-			

*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및 기초인력 양성 미반영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
2021	-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유입 (초)미세먼지 차단망 성능평가개발」 등 새로운 시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관련 시장 창출에 기여('14~'21 동안 총 28개 시험 서비스 개발)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운영, '22년도 15건 접수·처리 * 부실·부정 성적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여 국민(소비자) 보호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발전사*와 부정·부실 시험성적서 신고·조사체계 구축 MoU 체결 * 한수원 및 발전5社 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 업무협약 체결 - 다수인증 지원센터 개소 운영 통합창구 11개소, 전문창구 6개소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본·심화 상담 및 인증 취득 시나리오 제공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 착용형 IoT 융합 제품의 사용 환경 내구성 시험인증 서비스」 등 새로운 시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관련 시장 창출 기여 ('14~'22 동안 총 35개 시험 서비스 개발)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운영, '23년도 16건 접수·처리 - 적합성평가기관 및 성적서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개최(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인증 지원센터 확충 및 온라인 플랫폼 개시 (오프라인) 전국 기업 대상 다수인증 제품 관련 인증제도 안내, 상담, 기술지도 등을 위한 다수인증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통합창구 11개소, 전문창구 7개소) (온라인) 다수인증 온라인 플랫폼 개시('23.7월~, 누적방문 8,703건)를 통해 온라인 상담(1,055건), 다수인증 시나리오 생성(967건) 등 다수인증 지원 서비스 제공
--	---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전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적합성평가 신뢰성 제고)**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 대상으로 부정행위 조사 센터를 운영하여 신뢰성* 확보

* 부정성적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제품·서비스의 성능·안전 미확보, 성적서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문제 방지

- **(산업 및 소비자 지원)** 신수요 시험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조기에 상용화 지원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움

* 시장출시와 유통 촉진 및 국제 상호인정 성적서를 통한 수출 지원

- **(국민 안전 확보)** 국민생활과 밀접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민간국제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제품 신뢰도 및 국민 안전 확보

- **(인증업무 지원)** 한제품에 적용되는 다수의 법정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의 시간·비용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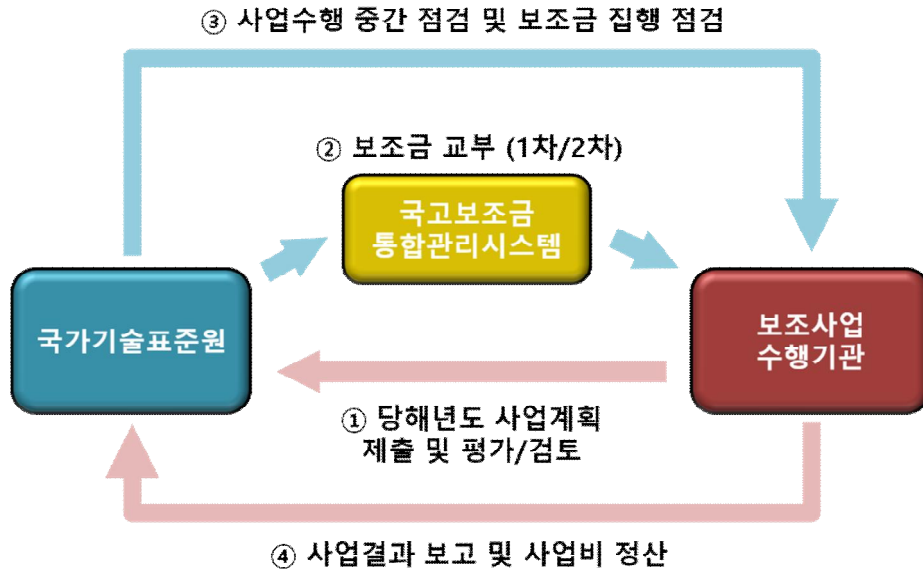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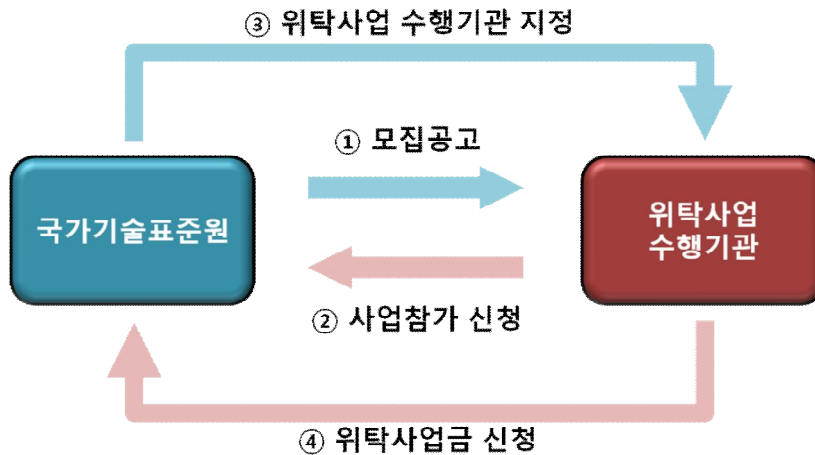
- (320-01)민간경상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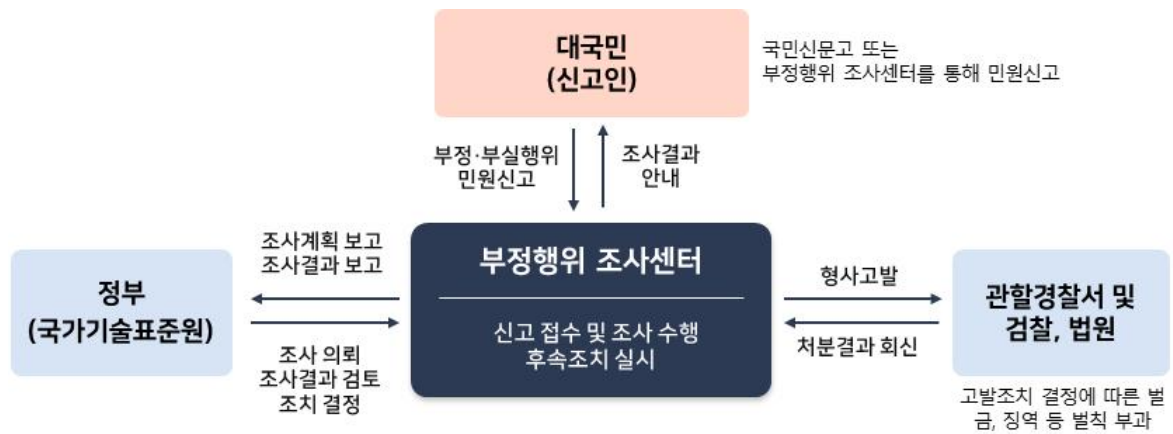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산업부 (550백만원)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550백만원)	한국표준협회 (550백만원)	-	-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 (320-02)민간위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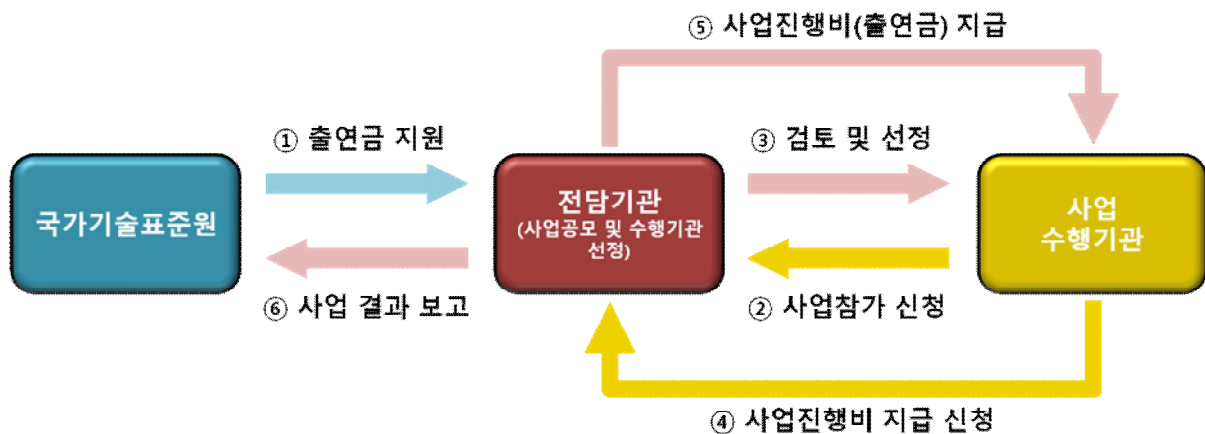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체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산업부 (300백만원)	적합성평가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300백만원)	한국제품안전 관리원 (300백만원)	-	-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 (350-02)사업출연금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산업부 (3,910백만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 (3,910백만원)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3,910백만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제관리 지침 => (3,910백만원)	수행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5,595	5,315	5,156	5,053	5,002	
'23~'27		6,445	7,862	8,429	8,637	7,27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지적사항 반드시 업데이트
-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 보고서명·감사명 등 출처 기재

* 지적사항 말미에 괄호()로 기관명 및 출처 표시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행위조사센터 조사범위가 확대되었고 적합성 평가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음.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3) 자체평가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통해 허위인증 및 부정성적서 등을 근절하여 적합성평가 신뢰성 제고 추진
- 4차산업의 도래로 인한 신제품 인증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미래 유망분야 시험인증 서비스 선제적 발굴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설계를 통한 시험·평가시스템 구축으로, 항바이러스 제품·성능에 대한 인증체계 고도화(실증체계 마련) 및 안정화 추진
- 기업의 다수 인증 취득 부담완화 지원 서비스를 기존 통합인증 간접 지원 중심에서 인증업무 대행 등으로 직접지원 기능 확대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적합성평가관리법'을 기반으로 시험인증기관, 적합성평가사업자의 부정·부실 성적서 발행을 방지하여 신뢰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안전의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21.04.08)에 따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의 업무확대로 각종 용역 필요성 증대, 적합성평가기관·사업자* 및 발행성적서의 발행 건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증액이 필요
 - * (조사대상) '23년 조사대상, 5000여개 적합성평가기관 및 사업자
 - ** (발행성적서) 연간 약 730만 건 이상의 성적서 발행('22년도)
 - 또한,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도정착·활성화를 위해 조사 확대, 대국민 홍보 강화, 시험인증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요구됨
-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실태조사)**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시장규모·현황을 파악하는 유일한 통계조사 사업으로, 업계 동향 파악 및 정책 수립 기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반영 요청('24회계 정부안 편성 당시,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및 기초인력 양성" 내역사업의 인력양성 분야 타부처 유사·중복으로 폐지 통보)
 -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현황·규모(인력, 매출 등), 전망, 외부 요인에 의한 업계 변화·대응 등 정책수립 기반 데이터 도출
 - * 시험인증산업시장은 '22년 기준 총규모 약 14.6조원, 연평균 성장률 약 6.5%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종사자 약 25만명 규모의 주요 산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	-	-	-	-	-	-	-	-	-	-	-
2021	-	-	-	-	-	-	-	-	-	-	-	-
2022	5,595	-	5,595	-	-	-	5,595	5,587	99.9	99.9	-	8
2023	6,345	-	6,345	-	-	-	6,345	6,332	99.8	99.8	-	1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	-	-	-	-	-	-	-	-	-
2021	-	-	-	-	-	-	-	-	-	-
2022	5,245	-	5,245	5,245	-	5,245	5,245	-	-	100
2023. 12월기준	5,820	-	5,820	5,820	-	5,820	5,816	-	-	99.9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
2021	-
2022	○ 불용액 발생 사유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내역사업(320-02, 민간위탁사업), 조달청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 8백만원
2023	○ 불용액 발생 사유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등 3개 내역사업의 낙찰차액 13백만원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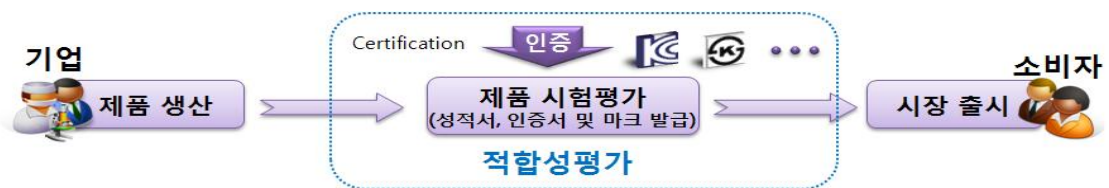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날짜)
합 계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적합성평가의 정의 및 종류

□ 적합성평가의 정의

-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
 - ① 제품출시를 위한 성능검증, ② 국민안전, 환경 등 정부정책 이행, ③ R&D 성공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



- 신뢰성이 핵심요소로, 부정·부실시험 등이 있을 경우 ① 소비자 피해 발생, ② 성능 및 안전 미확보, ③ 시험·인증 자체의 공신력 상실 우려

□ 적합성평가의 종류

- 적합성평가에는 시험·검사·교정·인증 등이 있으며, 적합성평가기관이라 함은 교정기관·인증기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함



참고 2

「적합성평가관리법」 주요내용

①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 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 위반 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
 -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시험인증 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 권한 명시

② 국제 공인기관 관리 강화

- 인정취소, 정지 등 징벌적 행정처분 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과징금 제도 도입
 - 인정정지에 해당하나, 시험기관 이용자의 업무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 다만, 해당 기관이 지적받은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

③ 시험인증산업 역량강화 지원

- 신제품 시험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시험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 >

- (1장) 총칙(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장) 적합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업무, 성적서 발급, 부정행위 조사)
- (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인정기구, 정기검사, 인정취소, 과징금)
- (4장)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강화 지원(실태조사, 인력양성, 국제협력, 기술개발의 추진, 시설·장비 고도화)
- (5장) 보칙(자료요구 및 검사, 청문, 권한 위임·위탁)
- (6장) 벌칙(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참고 3

부정행위 조사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 추진배경

- 부정성적서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제품·서비스의 성능·안전 미확보, 성적서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정성적서 확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기관의 부정성적서 유통 차단 제도 필요

< 참고 : 부정·부실행위 사례 >

- ◇ 층간소음 왜 심한가 했더니... 인증등급 96% 부실 ('19.5.3., 동아일보 등)
 - 감사원 조사결과 시공업체 A는 공인 받지 않은 기관에서 발급한 '허위성적서' 를 제출, 시공업체 B는 품질 시험성적서 위조했으나 인정기관이 성능인정서 발급
- ◇ 원전 납품 발전차 성적 조작해 66억 챙겼다. ('20.12.30., 조선일보)
 - C사는 한수원이 발주한 비상용발전차 4대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관리법은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의 부정성적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음

법 제5조(성적서 발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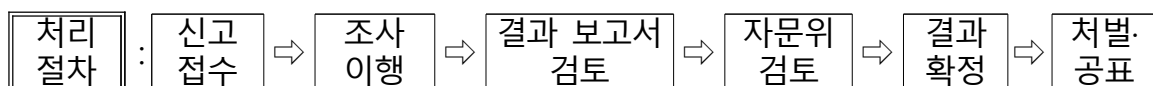
- ③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2.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법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 ⑤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하여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성적서가 유통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동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부정행위 조사를 이행하고 부정행위 사업자에 대한 조치 이행

<조사추진 순서>



참고 4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참고 자료

공인성적서 발행을 통해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의 조기 산업화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움으로써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등 혁신 산업 생태계 미중물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목적)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 제공(공인성적서발행)을 통해 신뢰성·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의 조기 산업화 및 시장 창출 지원

* 객관적인 제3자가 표준 혹은 안전기준에 기반한 시험·인증 평가 결과를 제공

- (주요내용) 분야발굴* → 공인성적서 발급서비스개시 → 산업현장 보급·확산**

* '22년 사업의 경우 57건의 기술수요가 발굴되었고 그 중 7건이 최종 개발과제로 선정(과제당 1.75억원 이내/1년이내)

** (사업성과) 「살균 기능이 포함된 LED 조명기구의 안전성 시험인증 서비스」 등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새로운 시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과 더불어 관련 시장 창출에 기여('14~'21년 동안 총 28개 시험서비스 개발)

□ 개선 추진 필요사항

- (지원과제수) '22년 7건 선정(57건 접수)으로 8:1의 경쟁률 기록
- (지원금액) 과급력이 큰 시험서비스 개발보다는 기존 시험서비스의 확장에 그치는 등 한계 노출
- (정책연계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극대화를 위한 과제선정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과제 수와 과제당 지원금액 확대를 통해 기술수요과제에 대응하고, 산업 과급력이 큰 혁신 제품에 대한 시험서비스개발 지원
- 표준기술향상력사업과 같은 타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디지털전환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정 공모 등을 통한 과제 발굴 추진

□ 사업목적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활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신뢰성 있는 방역제품 및 이에 대한 인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대두
 - 그러나, 국내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인증은 부재
 - * 현재 출시되고 있는 손소독제, 항균마스크, 항균필름 → 섬유제품, 생활가전용품 및 벽지·페인트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촉·사용되는 제품군으로 점차 확대 예상
- 국제 민간인증체계구축 및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국민 안전확보, 국내 수출기업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22년)인증체계 설계→(23년)실증체계 마련→(24년)안정화

□ 주요 사업내용

- 항균필름 등 표면방역제품에 대한 항바이러스 민간 인증체계 수립 및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요청
 - * ❶ 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❷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❸ 기획평가관리비
- **(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국제표준 기반의 항바이러스 생활용품 민간 인증제도를 확립하고 대상 품목범위 확대 및 시범운영
-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품목별 특화된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인프라 마련

□ 기대효과

- 바이러스 전파·확산으로부터 ❶국민안전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❷수출기업과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경쟁력 제고
 - **(소비자)** 항바이러스 인증마크를 통해 신뢰성 있는 K-방역 생활용품 구별이 가능하고 항바이러스 제품의 오남용 방지
 - **(기업)** K-방역 생활용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을 지원
 - **(시험인증기관)** 세계시장에서 항바이러스 시험인증서비스 시장 선점

참고 6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운영 참고자료

□ 배경 및 현황

- 한 제품에 대해, 관리부처 및 목적은 상이하나 인증 방법, 시험 항목 등이 유사한 인증들이 존재하여 기업의 부담(시간·비용) 발생
- * 다수인증 예시 : LED조명 제품 관련 7개 인증제도는 시험내용 및 방법 유사·중복 (의무) KC안전, KC전자파, 효율등급 (임의) KS, 고효율, 녹색, 환경표지
- 이에,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사업을 추진·이행
- *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18.9월)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으로 채택되 ('19년도) 시범사업 → ('20~'24년도) 사업 확대, 본사업 수행 중

<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품목 현황 >

개발연도	제품군명(세부제품 수)	제품군 수
'19년	LED조명(14)	1개
'20년	펌프(10), 가구(7), 창호(5), 수도꼭지(20), 전선(6)	5개
'21년	환풍기(2), 조명(2), 꽃음접속기(2), 플라스틱 기타 배관(4), 도료(4), 차단기(4), 밸브(2), PE배관(3), 문세트(5), 생활가전(2), 위생도기(2), 전선관(2), 무정전전원장치(4), 생활용품(3)	14개
'22년	스마트LED조명(2), 체육시설바닥재(2)	2개
합계	22개 제품군(107개 세부제품)	

□ 사업 주요내용

- ① 다수인증 서비스 품목 전문상담사 양성,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 25개 제품군에 대하여 '다수인증 기업지원 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접근성·편의성 제고
 - 다수인증 품목 서비스 매뉴얼을 통한 상담사 양성으로, 기업지원 서비스(전문상담 및 시나리오 제공) 역량 강화
- ② 서비스 고도화 방안 추진 방안 수립
 -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기능 확대 등의 사업 고도화 방안 추진
 - 다수인증 품목 외에도 일반 제품군 인증정보 통합 제공 가능한 포괄적인 지원 플랫폼으로의 확대 방안 등 추진

사 업 명
(11)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R&D)(3731-31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18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인증 기술개발(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정두식		황상훈
	사업시행주체	인증산업진흥과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043-870-5500 엔지니어링/ 표준실		043-870-5502
				장근영 실장	053-718-849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R&D)	6,513	4,862	352	352	△ 4,510	△ 92.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513	6,513	6,513 [6,513]			4,862	4,862	4,862 [4,862]	4,862	4,862 [4,862]			352
· 규제샌드박스기술 기준개발	3,625	3,625	3,625 [3,625]			2,175	2,175	2,175 [2,175]	2,175	2,175 [2,175]			-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 개선 연구지원	2,888	2,888	2,888 [2,888]			2,687	2,687	2,687 [2,687]	2,687	2,687 [2,687]			352
· 기획평가관리비													
○ 비목별 분류(합계)	6,513	6,513	6,513 [6,513]			4,862	4,862	4,862 [4,862]	4,862	4,862 [4,862]			352
· 연구개발활동비 (360-05)	6,513	6,513	6,513 [6,513]			4,862	4,862	4,862 [4,862]	4,862	4,862 [4,862]			352
· 기획평가관리비 (360-0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513	6,513	6,513 [6,513]			4,862	4,862	4,862 [4,862]	4,862	4,862 [4,862]			352
· 규제샌드박스기술 기준개발	3,625	3,625	3,625 [3,625]			2,175	2,175	2,175 [2,175]	2,175	2,175 [2,175]			-
-연구개발활동비 (360-05)	3,625	3,625	3,625 [3,625]			2,175	2,175	2,175 [2,175]	2,175	2,175 [2,175]			-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 개선 연구지원	2,888	2,888	2,888 [2,888]			2,687	2,687	2,687 [2,687]	2,687	2,687 [2,687]			352
-연구개발활동비 (360-05)	2,888	2,888	2,888 [2,888]			2,687	2,687	2,687 [2,687]	2,687	2,687 [2,687]			352
· 기획평가관리비													
-기 획평가관리비 (360-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개발 및 제품개선 연구 지원을 통해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신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도모
- **(규제샌드박스기술기준개발)**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와 적합성인증제도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개발 및 기업의 제품 성능·안전성 제품개선연구 지원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 개선연구지원)** 적합성인증제도 신청품목 대상 인증기준개발,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규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연구지원 및 신규 개발기준의 제도화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산업융합촉진법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융합 신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활성화 지원
 2. 융합 신산업 사업모델의 개발과 확산
 3. 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지원
 4. 융합 신산업의 표준화와 보급에 관한 지원
 5.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6.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이종(異種) 분야 간 교류의 촉진
 7.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융자
 8.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산업융합촉진법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①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2.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산업융합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1.04) 산업융합촉진법 공포
- ('11.10)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시행)
- ('11.12)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
- ('12.08)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제 4-1-2)
- ('17.07)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국정-34, 복합·혁신-2)
- ('18.01)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확정(VIP 주제)
- ('18.03) 규제혁신 5법 국회 발의(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 ('18.10) 산업융합촉진법 개정(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 ('18.12)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역점추진과제 2-3-2)
- ('19.04)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정책과제 2)
- ('19.04) 규제샌드박스 100일 성과점검 및 개선방안
- ('20.01)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 ('20.11) 규제샌드박스 성과보고
- ('22.07) 120대 국정과제(04-22)
- ('22.1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수립
- ('23.05) 해외인증 종합지원전략 수립(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 ~ '2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260	6,348	6,513	4,862	35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규제 샌드박스 기술기준 개발/적합성 인증기준개발 및 융합 신제품개선 연구지원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52	수행기관 유형별 달리 적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정부 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①장관은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 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 개발비로 지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연구 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과 공고 시 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 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 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연구개발 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 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연구개발 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 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
: ('23) 4,862백만원 → ('24) 352백만원, 4,510백만원 감액
- (요구) 기존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출시가 어려운 융합신제품의 인증기준 마련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개선(성능·안전성) 지원 필요
- (산출)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연구 : 1식x352백만원=352백만원
 - (적합성인증 신청품목 인증기준 개발·검증) 2과제x80백만원=160백만원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 연구) 3과제x60백만원 = 180백만원
 - (개발기준의 타당성 검증) 1과제x12백만원 = 12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862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4,862백만원 가.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개발(2,175백만원) · 15과제 x 145백만원 = 2,175백만원 나.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연구지원(2,687백만원) · (적합성인증 신청품목 인증기준 개발 지원) 12과제 x 80백만원=960백만원 · (융합신제품 개선 연구 지원) 26과제 x 60백만원 = 1,560백만원 · (개발기준의 타당성 검증) 1과제 x 167백만원 = 167백만원	352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352백만원 가.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개발(종료) 나.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연구지원(352백만원) · (적합성인증 신청품목 인증기준 개발 지원) 2과제 x 80백만원=160백만원 · (융합신제품 개선 연구 지원) 3과제 x 60백만원 = 180백만원 · (개발기준의 타당성 검증) 1과제 x 12백만원 = 1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융합신제품 제품개선 지원성과 (단위:건)	목표	12	11	14	18	2	규제샌드박스 제품 및 적합성 인증 신청제품에 대해 수립된 기술 및 인증기준을 기업에서 달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업화 지연을 방지 하기 위해 산출 근거로 설정	제품개선 지원 건수 x 55%	제품개선 대상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 달성 및 인증획득 실적을 측정
	실적	12	20	26	28	-			
	달성도	100	180	185	15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기준안개발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위한 기술기준(안) 개발 등 기술기준안 개발 신규과제 15개 지원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연구지원 과제 1식 지원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기준안개발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위한 기술기준(안) 개발 등 기술기준안 개발 신규과제 24개 지원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연구지원 과제 1식 지원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기준안개발 : 전기차 충전용 기계식주차장치 기술기준(안) 개발 등 기술기준안 개발 신규과제 25개 지원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연구지원 과제 1식 지원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기준안개발 :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안) 개발 등 기술기준안 개발 신규과제 15개 지원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연구지원 과제 1식 지원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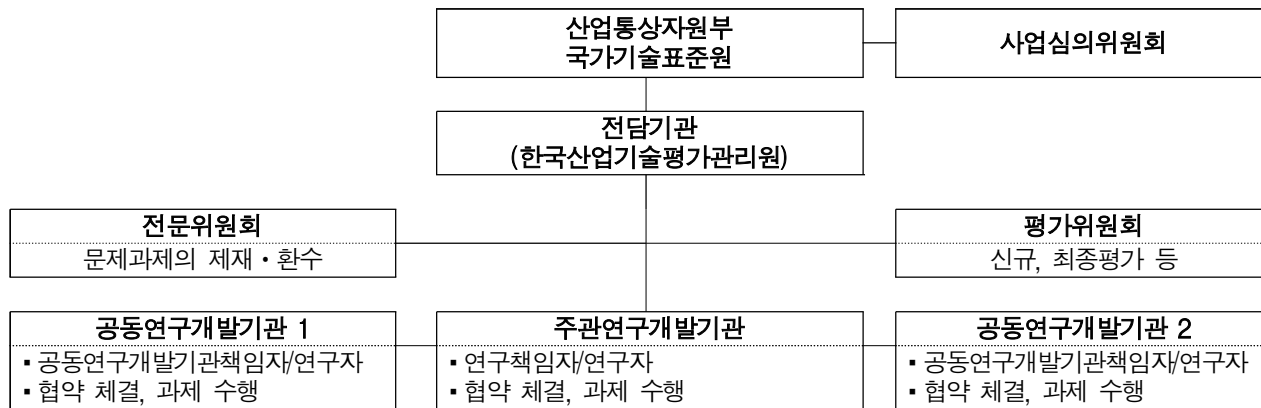
-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의 인증기준 개발 및 제품 개선 지원을 통한 기업의 융합신제품 개발 환경 조성 및 국가 산업 융합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융합신제품에 적합한 인증기준의 신속한 마련을 통해 기업의 인증 취득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법·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시장출시 및 수출 진입장벽 완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공모형)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6,513	6,187	6,002	-	-	
'23~'27		4,862	4,888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과제 난이도, 사업 신청률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과제별 단가 및 사업기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2021회계연도 예결위 결산보고서 검토의견, '21.6월)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021회계연도 예결위 결산보고서 검토의견에 따라 과제 난이도, 사업 신청률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과제별 단가 등을 조정 완료
- 본 사업이 종료('24년)됨에 따라 산업융합신제품의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을 지속하고, 융합신제품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심화하기 위해 신규사업 기획
 -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등 제도 및 글로벌 융합신시장 진출까지 One-stop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및 초격차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규제 샌드박스와 적합성인증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인증기준 연구개발 및 제품개선 연구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개발) 일정기간 규제면제 후,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수 → 기준 정비를 하기 위한 기술기준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
 - (적합성인증 인증기준개발) 전문가협의체에서 인증기준을 신속히 의결할 수 있으나, 인증기준 연구개발 자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4,260	4,260	4,260				4,260	4,260	100	100		
2021	6,348	6,348	6,348				6,348	6,203	97.7	97.7		145
2022	6,513	6,513	6,513				6,513	6,513	100	100		
2023	4,862	4,862	4,862				4,862	4,862	100	10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4,260	4,260	4,260	4,260			4,260			100
2021	6,348	6,348	6,203	6,348			6,203		145	97.7
2022	6,513	6,513	6,513	6,513			6,513			100
2023. 12월기준	4,862	4,862	4,862	4,862			4,862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 특이사항 없음
2021	- 145백만원 불용액 발생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자의 사업지원으로 사업 협약 중 체결 중지 발생(1건))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1) 기재부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 및 설명자료 첨부(필수 제출)
- (2) 부처 내 사업 계획 첨부(필수 제출)
- (3) 기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
- (4) 신규 세부사업 및 신규 내역사업의 경우 추가자료를 반드시 첨부할 것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0 ~ 2024	총사업비	-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황상훈 주무관(☎ 043-870-5502)		

□ 사업내용(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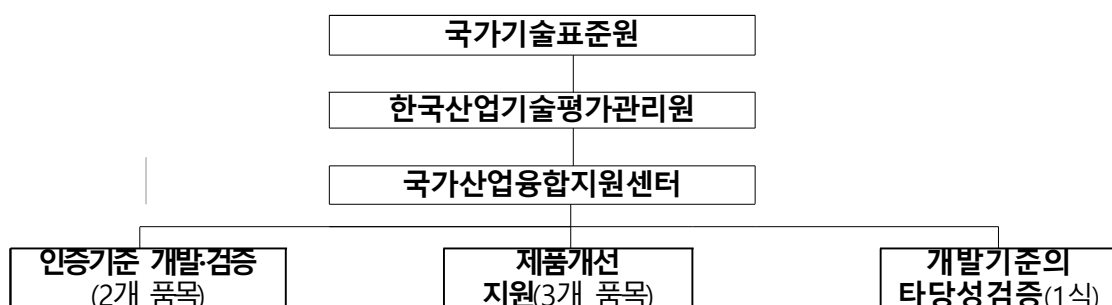
-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개발 및 제품개선 연구 지원을 통해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신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도모

□ 24년 내역 : 352백만원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연구지원 : ①적합성인증제도 신청 품목 대상 인증기준개발, ②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규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연구지원 및 ③개발기준의 타당성 검토 : 352백만원(1식x352백만원)
 - * 적합성인증 신청품목 인증기준 개발·검증(2과제x80백만원=160백만원)
 -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 연구(3과제x60백만원=180백만원)
 - * 개발기준의 타당성 검토(1과제x12백만원=12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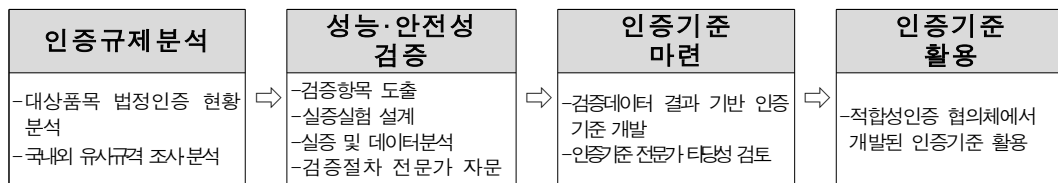
□ 사업추진방법

- (선정) 정책지정과제로 수행기관 선정
 - *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추진
- 수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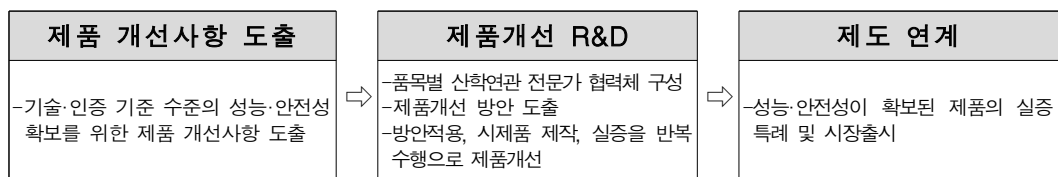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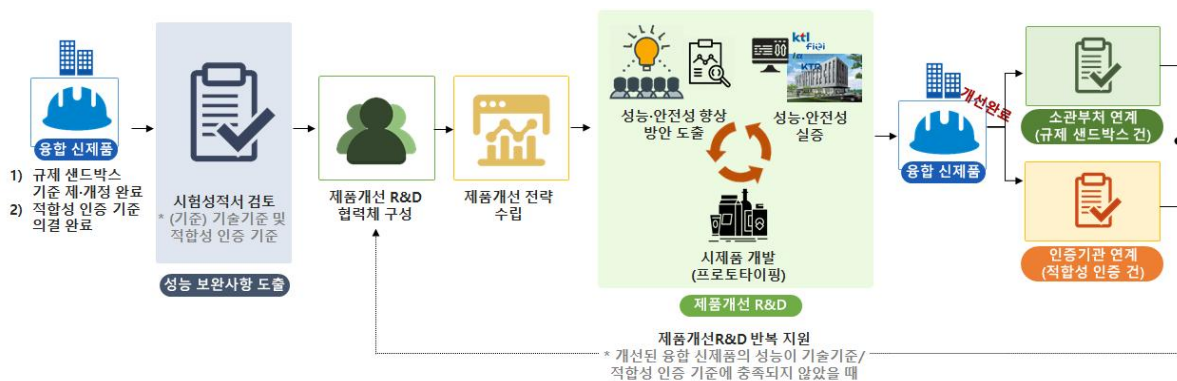
○ (적합성인증기준 개발)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신청 품목을 대상으로 ‘협의체’에서 의결 가능한 인증기준 및 시험·검사 방법을 검증·개발 연구

- 지원대상 : 적합성인증 신청 품목
- 기간/규모 : 6개월 이내 / 100백만원 이내
- 추진프로세스



○ (제품개선 연구) 새롭게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제도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대상 품목의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 연구

- 지원대상 : 규제샌드박스 허가품목 및 적합성인증 신청 품목
- 기간/규모 : 6개월 이내 / 80백만원 이내
- 추진프로세스



< 제품개선 연구 프로세스(안) >

○ (개발기준의 타당성검토) 연구개발을 통해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안)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품목 관련 근거 법령정비에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사 업 명
(12)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R&D)(3731-3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0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20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기술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제품안전정책국	오유천	-	박종훈 연구사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0	-	043-870-5412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혁신성장 사업본부	고은옥 수석	053-718-837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융복합신기술제품 안전기술지원	6,690	5,208	2,788	2,788	△2,420	△46.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690	6,690	6,690 [6,690]	-	-	5,208	5,208	5,208 [5,208]	5,208	5,208 [5,208]	-	-	2,788
· 제품안전기준및평 가기법개발	4,190	4,190	4,190 [4,190]	-	-	3,183	3,183	3,183 [3,183]	3,183	3,183 [3,183]	-	-	1,668
· 제품안전성향상기반 조성	2,500	2,500	2,500 [2,500]	-	-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	-	1,120
○ 비목별 분류(합계)	6,690	6,690	6,690 [6,690]	-	-	5,208	5,208	5,208 [5,208]	5,208	5,208 [5,208]	-	-	2,788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6,690	6,690	6,690 [6,690]	-	-	5,208	5,208	5,208 [5,208]	5,208	5,208 [5,208]	-	-	2,78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690	6,690	6,690 [6,690]	-	-	5,208	5,208	5,208 [5,208]	5,208	5,208 [5,208]	-	-	2,788
· 제품안전기준및평 가기법개발	4,190	4,190	4,190 [4,190]	-	-	3,183	3,183	3,183 [3,183]	3,183	3,183 [3,183]	-	-	1,668
- 연구개 발 활 동 비 (360-05)	4,190	4,190	4,190 [4,190]	-	-	3,183	3,183	3,183 [3,183]	3,183	3,183 [3,183]	-	-	1,668
· 제품안전성향상기 반조성	2,500	2,500	2,500 [2,500]	-	-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	-	1,120
- 연구개 발 활 동 비 (360-05)	2,500	2,500	2,500 [2,500]	-	-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	-	1,1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품(전기용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안전사고 및 소비자요구, 시장환경 등으로 출시되는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제품 안전성향상 기반 조성 등 R&D 사업 지원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융복합 신기술 제품,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의 안전기준과 소비자 특성 및 사용환경에 따른 제품 평가기법 개발
- (제품안전성향상 기반조성)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의 제품 위해정보에 대한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 등 시스템·플랫폼 개발 및 제품안전관리체계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제4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8.12월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10.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및 시행
- '11. 1월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병합
- '11. 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 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 6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및 시행

- '16. 1월 :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재기획
- '17.12월 :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8. 1월 :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으로 재기획
- '20. 7월 : 제4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20.12월 :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 종료
- '21. 1월 :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으로 재기획
- '23. 4월 : 제5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23. 9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 '2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5,826	6,690	5,208	2,78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기업·소비자 등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제품안전 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 기관 등	1,668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 조성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 기관 등	1,120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23) 3,183백만원 → ('24) 1,668백만원, 1,515백만원 감액

- (요구)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산업·기술의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제품과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수요 등을 감안한 예산
- (산출) 9개 과제 x 185.3백만원 x 12/12개월 = 1,668백만원

○ 2023년도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83백만원	17개 과제수 x 187.2백만원 x 12/12개월	1,668백만원	9개 과제 x 185.3백만원 x 12/12개월

②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 ('23) 2,025백만원 → ('24) 1,120백만원, 905백만원 감액

- (요구)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의 위해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안전 플랫폼개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제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예산
- (산출) (3개 과제 x 240백만원 x 12/12개월 = 720백만원) + (2개 과제 x 266.6백만원 x 9/12개월 = 400백만원)

○ 2023년도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25백만원	4개 과제수 x 337.5백만원 x 12/12개월 3개 과제수 x 300백만원 x 9/12개월	1,120백만원	3개 과제수 x 240백만원 x 12/12개월 2개 과제수 x 266.6백만원 x 9/12개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안전기준(안) 개발건수(건)	목표	-	신규	7	8	10	중기계획상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 업비 대비 매년 20% 상향된 목표	전기·생활·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안) 개발 건수	융복합신기술제 품안전기술지원 사업으로 지원한 과제 조사(성과 분석 통계자료 또는 최종보고 서)
	실적	-	-	7	8	-			
	달성도	-	-	100	100	-			
안전기준(안) 채택율(%)	목표	-	신규	14	20	20	선행사업(소비자제 품안전기술기반조 성사업) '18~'20년 3개년 안전기준(안) 채택율 평균 14.3% 보다 상향된 목표	(개발된 안전기준 (안) 중 당해년도 제·개정 고시건수/ 안전기준(안) 개발 건수)×100	제품안전관련 통계자료
	실적	-	-	14.3	25	-			
	달성도	-	-	102.1	125	-			
제품안전정보 일일 평균 이용 건수(건)	목표	-	신규	277,078	304,786	335,265	'23년 목표치에서 10% 상향조정	제품안전정보포털 일일 평균 접속건 수 + 일일 평균 제품안전정보 이용 (Open API) 건수	제품안전관련 통계자료
	실적	-	-	302,535	390,287	-			
	달성도	-	-	109.2	128.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9	-
2020	-
2021	<p>①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4,146백만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복합신제품 안전기준 제개정을 위한 위해관리 및 위해성 평가 방법 개발’ 등 15개 품목지정 과제 수행 (3,146백만원) -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Track Lighting System의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등 5개 자유공모 과제 수행 (1,000백만원) <p>②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1,500백만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사체계 기반조성’ 등 5개 지정 공모 과제 수행 (1,500백만원)
2022	<p>①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4,190백만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사용후전지의 내부 이력정보를 활용한 평가기법 개발’ 등 31개 품목지정 과제 수행 (4,190백만원) <p>②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2,500백만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자율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기반조성’ 등 6개 지정 공모 과제 수행 (2,500백만원)
2023	<p>①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3,183백만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속도 25km/h급 전동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안) 개발’ 등 22개 품목지정 과제 수행 (3,183백만원) <p>②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2,025백만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 안전기준 정비 방안 구축’ 등 6개 지정 공모 과제 수행 (2,025백만원)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품안전 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제품(전기용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을 연간 8건 이상 개발하여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국민 생활안전 확보 기대
- 산업·기술의 발전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출현하는 음복합 신기술 제품과 소비자 특성 및 사용환경에 따른 제품의 안전 기준·평가기법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안전 사고 예방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 제품사고조사체계 기반, 실시간 제품안전관리 기반 및 제품위해도 평가센터 플랫폼 기반조성 등 연간 2건 이상 개발하여 국민 생활안전 관리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등 내역 사업 동일 집행

사업계획 수립·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관리	전담기관, 수행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진도점검 및 보고(중간평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최종점검·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6,690	6,356	6,165	6,042	-	
'23~'27		5,208	5,234	5,443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1년 산중위 예산 검토보고서)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사업 준비 철저('20.10.)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1년 R&D 사업 수행 시 2020년 말까지 협약준비(사업계획 수립, 과제 접수, 지원 과제 선정 등)을 완료하여 2021년 초에 신규 과제를 시작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제4차 산업혁명 도래, 융·복합 신기술 제품 출시 증가 등 제품 위해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비관리 제품 및 사고 다발·사고 우려 제품의 안전성 시험·평가 기반 및 위해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축소
- 세부 추진계획
 - 제품 안전성 강화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현 시장 상황 및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선정·진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본 R&D 사업에 따른 법령은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으로 제품안전과 관련된 유일의 R&D 사업
- 제품안전기본법 제1조(목적) 및 제2조(기본이념)에 의하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R&D 사업 취지는 명확하며,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추진
- 본 R&D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내 재난안전분야 중 생활제품 안전사고로 분류되어 있으며, 산업·기술의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로 새로이 출현하는 제품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	-	-	-	-	-	-	-	-	-	-	-
2021	5,826	-	5,826	-	-	-	5,826	5,826	100	100	-	-
2022	6,690	-	6,690	-	-	-	6,690	6,690	100	100	-	-
2023	5,208	-	5,208	-	-	-	5,208	5,208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2021	5,826	5,826	5,826	5,826	-	5,826	5,826	-	-	100
2022	6,690	6,690	6,690	6,690	-	6,690	6,690	-	-	100
2023	5,208	5,208	5,208	5,208	-	5,208	5,208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19년~2022년 결산사항

2020	-
2021	- 특이사항 없음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첨부] 참조

첨부 1

제품안전관리제도

- **(개요)** 제품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출시 전·후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시장출시 前)**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은 **위해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장 진입 및 유통 허용 등 **사전안전관리**

*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준수)로 관리

** 정부는 안전관리품목 282개에 대한 610여개의 안전기준을 관리(안전기준은 강제 의무사항)

< 안전관리 수준, 절차 및 품목현황 >

관리수준	인증 등 준수절차	안전관리 품목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① 안전 인증 (45개 품목)	제조·수입 검사 → 안전 제품검사 → 공정심사 → 인증서 발급 (인증번호) → 제품 판매	36	5	4
② 안전 확인 (107개 품목)	제조·수입 검사 → 시험 제품검사 → 안전인증기관 신고서류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번호) → 제품 판매	65	26	16
③ 공급자적합성 (106개 품목)	제조·수입 검사 → 자체 또는 제3자 시험기관 제품검사 → 제품 판매	75	17	14
④ 안전기준준수 (24개 품목)	제조·수입 검사 → 자율시험 제품검사 → 제품 판매	-	24	-
총 282개 품목		176	72	34

- **(시장출시 後)** 시중 제품에 대한 **위해요인 확인** 시 제품수거, 유통 차단, 개선권고, 소비자주의보 발령 등 **사후안전관리**

* 안전성 조사, 제품사고조사, 불법제품조사, 해외리콜제품 대응 등

01	안전성조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법적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조사후 조치(리콜처분, 개선권고 등)
02	제품사고조사	동일 유형의 제품사고 재발방지 및 위해 확산방지 등을 위해 사고발생 제품에 대한 사고원인규명 조사후 조치(소비자주의보 등)
03	불법제품조사	미인증·허위표시 제품에 대해 불법제품 신고 내용확인 및 제품정보 검색 등 조사후 조치(판매금지 등)
04	해외리콜제품대응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정보 분석후 조치(수입통관 차단 등)

첨부 2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년)

비전

국민생활 안심을 위한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목표	소비자의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안전인증 품목수) 45 개('22년) (170개 세부품목) → 10% 축소 조정('25년)
		(안전기준 정비) 52 건('22년) → 전수 검토·개정('25년)
		(제품사고조사) 73 개사('22년) → 150 개사('25년)
		(위해차단시스템) 235,129 개('22년) → 246,000 개('25년)
		(제품안전 모니터링) 127,847 건('22년) → 150,000 건('25년)
		(제품안전정보 활용) 350,000 건/일('22년) → 380,000 건/일('25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1	[제도]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관리대상 규제수준 정비 ② 안전기준 전면 재검토 및 일제 정비 ③ 민간주도 안전관리 기반 마련 ④ 국제적 환경변화 신속 대응
2	[사전]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관리제품 규제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 정비 ② 신기술·신수요제품 안전관리 ③ 사회적 배려계층 안전관리 지원 ④ 제품 리스크평가 활성화
3	[사후] 촉촉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데이터 기반 제품사고조사 추진 체계 구축 ② 위해상품 유통·판매 차단 강화 ③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④ 온라인쇼핑몰 위해우려 유통제품 안전관리
4	[기반]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외 제품안전 채널 협력 확대 ②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 ③ 맞춤형 제품안전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 ④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역량강화

첨부 3**내역사업 설명자료****1.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사업개요**

사업기간	'21 ~ '25	총사업비	해당없음, 기투자액 115.2억원
주관기관	대학/연구소/시험인증기관 등 비영리기관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박종훈 연구사(☎ 043-870-5412, 010-2909-8030)		

□ 사업내용(지원내용)

- 전기용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의 사고 및 위해로부터, 국민 생활 안전 보호를 위한 제품 안전기준·평가기법 개발
- 융복합신기술제품,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의 안전기준과 소비자 특성 및 사용환경에 따른 제품의 안전 기준·평가기법 개발

□ '24년 요구내용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년) 및 정부시책을 반영하고 산업·기술의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융복합신기술제품 생산기업 60%^{*}가 신규 안전인증을 필요로 하며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과정에서의 안전기준에 대한 수요 증가
 - * (참고)'21년 학술용역, 제품안전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품목 국내 제조업 실태조사
- 제품시장의 변화에 따라 안전인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기준의 국제표준부합화,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비건수 확대
 - * 안전인증 유지현황 : ('20년) 196,746건 → ('21년) 232,906건 → ('22년) 265,156건

□ 사업성과

- 국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영 중인 정부의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따라 개발된 안전기준(안)은 고유업무인 안전기준 제·개정에 활용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중 '21년에 협약한 20개 과제 중 제품의 안전기준(안) 7건*이 개발되었으며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

구분	과제명	정책반영	비고
1	전동킥보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안) 개발	보류	전동킥보드 불법 개조 방지를 위한 안전요건 개발이나 국토부 PM법 제정 이후 대응 가능
2	최신 IEC 표준으로 현행화된 전기용품 안전기준(안) 개발	예정	2023년 이후
3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안전기준(안) 개발	예정	2023년 이후
4	가죽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안) 개발	예정	2023년 이후
5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Track Lighting System의 안전기준 및 평가방법 개발	예정	안전관리 품목으로 도입('22년)되어 추후 안전기준 개정 추진
6	국제표준 기반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 KC 안전기준 제개정(안) 개발	예정	
7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검사 결과와 BMS 정보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최적의 성능 검사방법 개발	○	예비 안전기준에 반영('22년)

2. 제품안전성향상 기반조성

□ 사업개요

사업기간	'21 ~ '25	총사업비	해당없음, 기투자액 60.3억원
주관기관	대학/연구소/시험인증기관 등 비영리기관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박종훈 연구사(☎ 043-870-5412, 010-2909-8030)		

□ 사업내용(지원내용)

-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에서의 제품의 위해정보에 대한 제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및 플랫폼 등 시스템 구축
- 융복합·신기술 제품에 대한 적응 속도가 느리고 노출 위험이 높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제품 안전성 기반 조성

□ '24년 요구내용

- 제품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 등 위해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안전관리 시스템·플랫폼 개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제품시장의 확대와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조성 과제 필요
 - * 온라인쇼핑 구매동행통계청 : ('20년) 159조원 → ('21년) 187조원 → ('22년) 206조원
- 융복합·신기술 제품에 대한 적응 속도가 느리고 노출 위험이 높은 안전취약계층(어린이·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성 향상 기반 예산 요구

□ 사업성과

구분	과제명	내용
안전관리체계 개선	제품안전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표준제품분류체계 개발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div><div><div><div>사례 Example</div><div></div></div><div><div>대분류 Segment</div><div>51000000 건강관리 Healthcare</div></div><div><div>중분류 Family</div><div>51100000 치료제/보조기구 Health Treatments / Aid</div></div><div><div>소분류 Class</div><div>51101700 응급처치 First Aid</div></div><div><div>세분류 Brick</div><div>10000451 냉/온팩 Ice/Heated Pack</div></div></div><div><div><div>세분류 속성 목록 Brick Attribute Type</div><div>일회용 If Disposable</div><div>자동온열기능 If With Automatic Heating Facility</div><div>사용 부위 Target Use</div><div>응급처치 유형 냉/온팩 Type of First Aid Ice/Heated Pack</div></div><div><div>세분류 속성 값 Brick Attribute Value</div><div><div>· 할 수 없음 Unidentified · 세 Yes · 아니요 No</div><div>· 할 수 없음 Unidentified · 세 Yes · 아니요 No</div><div><div>· 목감 Cold/Flu · 의복 Cloths · 할 수 없음 Unidentified · 온열 Warm · 냉열 Cold · 몸 Body</div><div><div>· 모든 목적 All Purpose · 찜질 Heat · 열찜질 Hot Heat · 온열 Warm · 냉열 Cold · 냉/온팩 Ice/Heated Pack</div></div></div></div></div><div><div>-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각 소관부처 통합에 따른 표준화된 제품분류체계 필요</div><div>- 융복합·신제품 등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안전 기반 분류체계 필요</div><div>→ 국가 차원의 제품안전 통합관리를 위해 범부처 표준제품분류체계(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div></div></div></div>
시스템 구축	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div><div><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div><div>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div></div></div></div></div>

사 업 명
(13) 스마트계량측정기술기반조성(3731-3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23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스마트계량측정기술기반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스마트계량측정 기술기반조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이용현	이희주	양정민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0	043-870-5517	043-870-5514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혁신성장 사업본부	권소현	053-718-835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		
스마트계량측정 기술기반조성사업	2,890	2,457	336	336	△ 2,121	△ 86.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90	2,890	2,890 [2,890]	-	-	2,457	2,457	2,199 [2,199]	2,457	2,199 [2,199]	-	-	336
·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2,320	2,320	2,320 [2,320]	-	-	1,887	1,887	1,689 [1,689]	1,887	1,689 [1,689]	-	-	252
·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570	570	570 [570]	-	-	507	570	510 [510]	570	510 [510]	-	-	84
○ 비목별 분류(합계)	2,890	2,890	2,890 [2,890]	-	-	2,457	2,457	2,199 [2,199]	2,457	2,199 [2,199]	-	-	336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2,890	2,890	2,890 [2,890]	-	-	2,457	2,457	2,199 [2,199]	2,457	2,199 [2,199]	-	-	33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890	2,890	2,890 [2,890]	-	-	2,457	2,457	2,199 [2,199]	2,457	2,199 [2,199]	-	-	336
·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2,320	2,320	2,320 [2,320]	-	-	1,887	1,887	1,689 [1,689]	1,887	1,689 [1,689]	-	-	252
-연구개발활동비 (360-05)	2,320	2,320	2,320 [2,320]	-	-	1,887	1,887	1,689 [1,689]	1,887	1,689 [1,689]	-	-	252
·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570	570	570 [570]	-	-	507	570	510 [510]	570	510 [510]	-	-	84
-연구개발활동비 (360-05)	570	570	570 [570]	-	-	507	570	510 [510]	570	510 [510]	-	-	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기존 재래식 계량기를 네트워크 기반 비대면 검침 스마트 계량 기술개발, 초격차 산업 內 고정밀 계량 기술개발 및 법정 계량기 기반조성
-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4차 산업혁명 데이터기반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용 측정기술 및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한 국내 계량 측정산업 경쟁력 확보

※ 지원 필요성

- 첨단산업 관련성 高 (수소충전 측정표준 개발, 전기차 충전기 시험장비 개발 등)
 - * 관련 정책 : 국정과제 23번(모빌리티 혁명) /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산업부) 등
- 법적 근거 명확(계량법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 소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大 / 국제협력 및 표준 부합화(OIML, IEC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57조(계량산업의 육성 지원)
-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목적),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조(목적),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제6조(혁신 계획 등의 추진체계),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② 추진경위

- '12.2월 :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 추진
- '15.1월 : 계량법 전부개정을 통한 '계량산업 육성' 지원근거 마련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 '16.12월 : '18년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내역사업 일몰
- '18.1월 : 안전인증역량강화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재기획
- '20.12월 : 안전인증역량강화 세부사업 종료
- '20.4월 : 스마트계량측정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재기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 ~ '2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2,961	2,890	2,457	33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 기관 등	252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 기관 등	84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본 사업은 **명확한 법적근거(계량법)에 기초하여** 국민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및 제57조(계량산업의 육성 지원)
- **(국정과제)** 21(에너지신산업), 23(그린 전환·모빌리티 혁명), 75(전략기술 투자 확대) 등*의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계량 R&D 지원 필요
- **(정부R&D 투자방향)**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3.3월, 과기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 계획(2023~2027)」(‘22.12월, 과기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21.4월, 과기부) 등 주요 정책 內 수소, 첨단 이동수단 등의 국가전략기술과 계량 산업 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초격차 프로젝트)**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23.4)의 11대 핵심투자분야* 內 고정밀 계량측정 기술개발 지원 필요 (*미래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등), 에너지신산업, 첨단 제조, 등)
 - 특히, 전기차 급속 충전기 재검정을 위한 휴대용 계량기 개발, 수소의 고정밀 계량장치 개발 및 수소차 충전기 기술기준(안) 마련 등 계량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초격차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 필요

①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 (‘23) 1,887백만원 → (‘24요구) 252백만원, 1,635백만원 감액

- (요구)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현장검증 시험장비 개발, 수소차 충전기 법정 계량제도 확립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미터 계량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 스마트미터 기능 안전성 확보 및 보안 향상 등 계속과제 지원을 위해 252백만원 요구
- (산출) 9개 x 28백만원 x 12/12개월 = 252백만원

②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 (‘23) 570백만원 → (‘24요구) 84백만원, 486백만원 감액

- (요구) 측정데이터 품질 확보 및 교정기술, 고정밀 산업 측정기술 개발 등 계속과제 지원을 위해 84백만원 요구
- (산출) 3개 x 28백만원 x 12/12개월 = 84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57,000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2,457,000천원 가.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1,887,000천원) · 신규(단년도) : 3개 x 194,000천원 x 12/12개월 = 582,000천원 · 신규(다년도) : 9개 x 193,300천원 x 9/12개월 = 1,305,000천원 나.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570,000천원) · 신규(단년도) : 1개 x 174,000천원 x 12/12개월 = 174,000천원 · 신규(다년도) : 3개 x 176,000천원 x 9/12개월 = 396,000천원	336,000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336,000천원 가.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252,000천원) · 계속(종료) : 9개 x 28,000천원 x 12/12개월 = 252,000천원 나.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84,000천원) · 계속(종료) : 3개 x 28,000천원 x 12/12개월 = 84,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등록특허 SMART (단위: 점)	목표	-	신규	3.79	-	-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시제품 제작 (단위: %)	목표	-	신규	80.0	-	-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기술기준 제·개정(안) 개발 (단위: 건)	목표	-	-	신규	2	2	법정계량기 기술 기준(12종)의 재개정 건수(최근3개년, 연1.7건)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스마트계량기 출시 등에 따른 기술 기준 제·개정(안) 개발 건수	진도실적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사업화성공률 (단위: %)	목표	-	-	신규	45.3	46.2	산업부 사업화 성공률('17~'19) 평균값 45.2%를 기준으로 목표치 설정	(기술개발 종료 과제 중 매출실적 발생 과제 수/기술 개발 지원과제 수) x 100	성과조사 시스템 (ITECH) 성과활용 조사 결과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QR코드 기반의 법정계량기 이력 정보 시스템 개발 등 15개 신규과제 발굴 및 지원
2022	○ QR코드 기반의 법정계량기 이력 정보 시스템 개발 등 15개 계속과제 지원 - 법정 계량기 13종 QR코드 체계 정립 및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 법정 계량기 원격검정 시스템 개발 및 제도화 추진 - 전기차 충전기 다기능 멀티 검정시스템 및 비대면 검정 인프라 구축 단체표준 제정 - 법정 계량기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등 시제품 개발
2023	○ 수소차 충전기 법정계량제도 확립을 위한 수소 충전유량 측정표준 기술개발 등 16개 신규과제 발굴 및 지원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스마트계량 기술고도화) 에너지 효율과 직결되는 전력, 가스, 열, 수도(온수) 등 전국 법정계량기 디지털화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및 스마트시티 구현에 기여
- (불법계량기 조작방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정계량기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신산업 근간 마련) 측정기술 개발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기반산업 등 신산업 육성의 근간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관리	전담기관,수행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진도점검 및 보고(중간평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최종점검·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2,890	2,890	4,616	6,331	8,769	
'23~'27		2,457	2,470	2,569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계량기 기술개발, 산업용 측정설비 및 부품 기술 국산화 등을 통해 국내 계량측정산업 경쟁력 확보
- 세부 추진계획
 - 실시간 계량정보를 이용한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활성화, 스마트 홈(HEMS)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
 - 계량기 소프트웨어의 무결성, 보안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통신프로토콜 표준화 및 법정 계량 관련 기술기준 등 신규 제도 개발
 - 데이터 기반 산업의 핵심기기(측정설비, 네트워크장비) 및 부품(센서) 기술개발(국산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본 사업은 계량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계량산업을 육성 지원토록 법적근거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전기·가스 등 법정계량기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SOC로 국민편익 제고 및 계량기의 디지털화를 통한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57조(계량산업의 육성 지원)
 - * 법정계량기의 상거래 규모는 약 640조('15년 기준)으로 추산되는데, 1% 오차 발생시 6.4조원의 국민 손실을 초래함에 따라 계량기 내구성 및 신뢰성 제고 및 비대면 검침으로 국민편익의 제고 위한 지원 필요
-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성 高*, 법적 근거 명확**, 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大 등 감안시 지속적인 초격차 계량R&D 지원 필요
 - * 국가전략산업(미래 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內 계량R&D 지원 中 (계속과제)
 - (수소) 수소 충전 유량 측정표준 개발 /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현장검증 시험장비 개발
 - ** 「계량법」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에 따라 全산업의 근간이 되는 계량R&D 지원
 - ※ 관련 정책 : 국정과제 23번(미래 모빌리티) /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산업부) 등 국제협력과의 연관성 : 국제 표준(OIML, IEC 등) 제·개정 협력, 표준 부합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2,961	2,961	2,961	-	-	-	2,961	2,961	100	100	-	-
2022	2,890	2,890	2,890	-	-	-	2,890	2,890	100	100	-	-
2023	2,457	2,457	2,457	-	-	-	2,457	2,199	89	8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2,961	2,961	2,961	2,961	-	2,961	2,961	-	-	100
2022	2,890	2,890	2,890	2,890	-	2,890	2,890	-	-	100
2023. 7월기준	2,457	2,457	2,199	2,457	-	2,199	2,199	-	-	89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1	- 특이사항 없음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붙임] 참조

<내역①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개요>

- (목적) 기존 재래식계량기를 네트워크 기반 비대면 검침 스마트계량 기술기배라, 초격차 산업 內 고정밀 계량 기술개발 및 법정계량기 기반조성
- (사업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7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1조, 제21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조, 제3조, 제6조 제11조
- (사업내용)
 - (스마트미터링기술개발) ICT 기술 융합 전력·가스·열·수도 등 에너지 계량기의 스마트미터링 관련 기술개발, 기술기준 및 신뢰성 평가기술 마련 등
 - (계량제도 고도화) 스마트계량기와 실시간 빅데이터 측정·처리·활용 기술개발, 검·교정 유효성 검증 방법개발, 불법조작 방지 및 비대면 검침 등
- (총사업비/기간) 해당없음 / '21년~'25년
- (수행주체 및 지원조건)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출연
- (사업추진절차)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수행기관
- (집행실적) 최근 7년간 평균 실행률 100.0%(‘21~’22년 평균)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6월 현재
예산액(a)	-	-	-	-	-	2,305	2,320	1,887
집행액	-	-	-	-	-	2,305	2,320	1,382
실집행액(b)	-	-	-	-	-	2,305	2,320	1,382
실집행률(b/a)	-	-	-	-	-	100.0%	100.0%	73.2%

■ (지원실적) 세부사업 지원 실적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6월
□예산액	-	-	-	-	-	2,305	2,320	1,887
○등록특허 SMART 지수	-	-	-	-	-	-	400	-
○시제품 제작*	-	-	-	-	-	-	88.89	-

* 측정산식 : (시제품 제작 과제 수/기술개발(품목지정) 지원과제 수) × 100

■ (주요 평가결과)

구분	평가 결과 및 지적사항(세부사업)
'21년	※ 해당없음
'22년	※ 해당없음
'23년	■ (사업 중간평가) 보통 (* 세부사업 기준)

< 내역②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개요>

- (목적) 4차 산업혁명 데이터기반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용 측정기술 및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한 국내 계량 산업경쟁력 확보
- (사업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7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1조, 제21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조, 제3조, 제6조 제11조
- (사업내용)
 -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개발) 수소차 충전, 탄소 포집 등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객관적정량적 측정기술 및 핵심 요소 부품개발 이에 대한 기술기준 및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등
 - (측정데이터 품질 확보) 측정데이터 품질 확보 및 교정기술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보급 등
- (총사업비/기간) 해당없음 / '21년~'25년
- (수행주체 및 지원조건)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출연
- (사업추진절차)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수행기관
- (집행실적) 최근 7년간 평균 실적행률 100.0%('21~'22년 평균)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6월 현재
예산액(a)	-	-	-	-	-	562	570	570
집행액	-	-	-	-	-	562	570	417
실집행액(b)	-	-	-	-	-	562	570	417
실집행률(b/a)	-	-	-	-	-	100.0%	100.0%	73.2%

- (지원실적) 세부사업 지원 실적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6월
□예산액	-	-	-	-	-	2,305	2,320	1,887
○등록특허 SMART 지수	-	-	-	-	-	-	400	-
○시제품 제작*	-	-	-	-	-	-	88.89	-

* 측정산식 : (시제품 제작 과제 수/기술개발(품목지정) 지원과제 수) × 100

- (주요 평가결과)

구분	평가 결과 및 지적사항(세부사업)
'21년	※ 해당없음
'22년	※ 해당없음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중간평가) 보통 (* 세부사업 기준)

참고1

법정계량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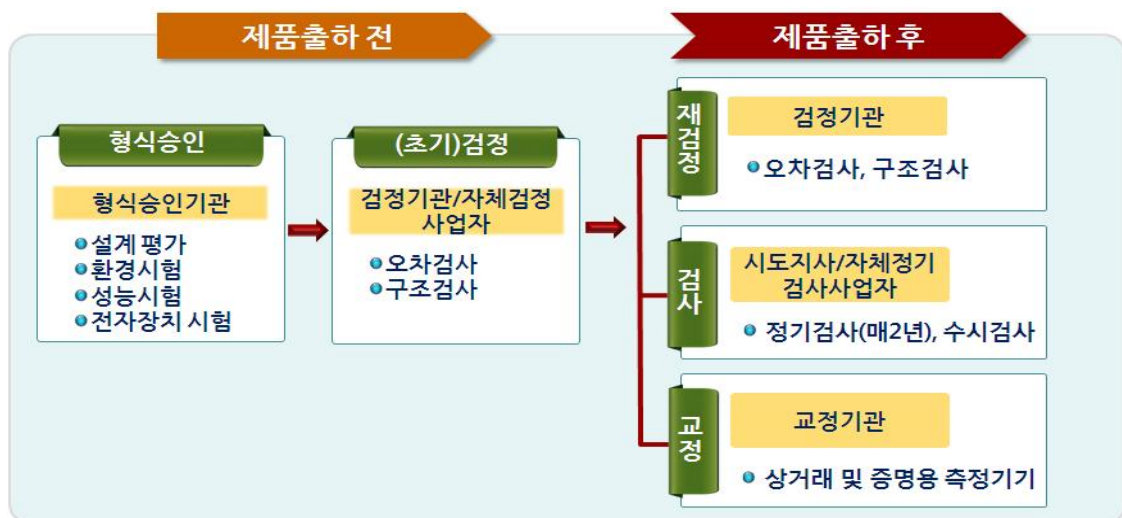
계량은 경제활동의 근간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모든 나라에서 법제화하고 있음

* ① 법정단위 정착, ② 계량기 관리, ③ 정량표시상품 관리 등

- (법정계량기)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차관리가 필요한 **13종** 계량기를 대상으로 형식승인, 검정 및 사후관리 의무화



- 법정 계량기 관리체계



참고2

사업 비전 및 목표 ※ 기존 자료 內 신규 계량 R&D 목표 추가

비전

스마트미터링 보급, 계량부품 국산화, **초격차 산업의 정밀 계량기술 개발** 등을 통한 계량산업 육성

목표

스마트미터링
보급 · 확산

계량 · 측정
요소부품 국산화

초격차 산업의
정밀 계량기술 개발

추진전략

①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1.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계량기 및 실시간 계량정보 플랫폼 개발

- ① 스마트미터의 커넥티비티(Connectivity)를 활용 서비스 개발
- ② 스마트미터의 자가 진단기능 개발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

2. 스마트미터링 보급·인증 인프라 고도화

- ① 스마트미터의 소프트웨어, 데이터 품질에 대한 관리방안 제도화
- ② 편익에 부합한 미터 데이터의 보안 및 변조방지 기술 강화

②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1. 데이터 기반 핵심기기 및 부품, 요소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 ① 제조공정의 혁신을 위한 계측시스템 및 핵심부품 개발
- ② 제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품질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 IoT 측정데이터 유효성 검증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보급

- ① 스마트미터링 서비스의 데이터신뢰성 검증 환경 구축
- ②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개발, 시행

③ 산업 초격차 추진을 위한 고정밀 계량기술·장비 개발

1. 첨단전략산업의 고정밀 계량 기술 및 장비개발

- ① 초격차 프로젝트 內 11대 집중투자 분야 대상 고정밀 계량기 개발 및 시스템 고도화
- ② 新산업 內 B2C 중심 계량 장치의 법정 계량화 검토

2. 고탄소 배출 산업의 탄소 저감을 위한 계량 기술 개발

- ① 주력산업의 탄소 정밀 측정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고도화
- ② 글로벌 규제(CBAM 등)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력양성

참고3

「스마트계량측정 기술기반 조성」(R&D) 로드맵 ※ 초격차 계량 R&D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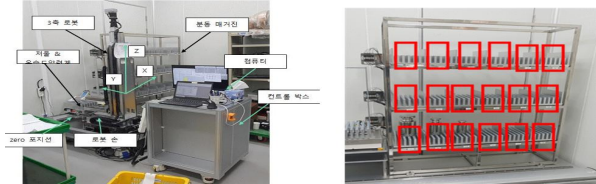
유형	투자 대상	테마	년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기대효과
H/W	계량기기	스마트미터 필수 기능 및 성능		▷(법제도개선) 스마트미터 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및 평가 방안					▷ 스마트미터의 다기능 구현에 따른 차세대 스마트미터 개발
			▷(기술개발) 스마트미터 신뢰성 향상 기술						
			▷(기술개발) 상태 모니터링 및 자가 진단이 가능한 스마트미터 개발						
						▷(기술개발) 원격제어 및 보안 기능이 적용된 스마트미터 개발			
		게이트웨이와 계량기기 연계	▷(기술개발) 스마트미터 고도화						▷ 스마트미터의 제조 생산성 향상 및 가상현실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기술 연계
			▷(기술개발) 스마트미터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 시스템						
		스마트미터 제조기반	▷(기술개발) 스마트미터 생산성 향상 기술						
			▷(기술개발) 스마트미터링 적용 디지털 생산시스템 기술						
S/W	사업자 플랫폼	운영, 관리, 과금 서비스 통합 플랫폼	▷(법제도개선) 스마트미터 법정계량제도 확립 및 형신승인 제도 개선					▷ 신뢰도가 향상된 스마트미터 통합플랫폼 보급을 통한 원격 과금 서비스 및 계량 클라우드 사업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 스마트미터 데이터 수집 및 제어 통합 플랫폼				
					▷(기반조성) 스마트미터 통합 플랫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 기반 구축				
		게이트웨이와 사업자 플랫폼간 연계			▷(법제도개선) 게이트웨이 기술요구사항			▷ 스마트미터 핵심 구성 요소인 통신 게이트웨이 개발을 통한 편의성이 향상된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확보	
					▷(기술개발) 통합 플랫폼 운영을 위한 스마트게이트웨이 개발				
					▷(기반조성) 스마트게이트웨이 평가 기술개발				
	소비자홈 (HEMS)	부하기기 제어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전기차 충전기의 통신 및 원격 제어 평가 기술			▷ 스마트미터의 통신 적합성 평가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실시간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과의 연계	
		실시간 통합 에너지데이터 관리			▷(기술개발) 계량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에너지 사용 패턴 파악 및 예측 기술				
		게이트웨이-HEMS 연계			▷(기반조성) HEMS 기반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 시스템 평가				
	정보보안	통신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기술			▷(기술개발) 스마트미터 계량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			▷ 보안 기능이 향상된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개발	
					▷(기술개발) 계량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 복구 및 백업 기술				
		계량 정보 활용 활성화 기술			▷(기반조성) 스마트미터 제품 전 주기 데이터 공유 플랫폼			▷ 계량 및 에너지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조성) 스마트미터 기능 안전성 등 시험 평가 기반 구축				▷ 안전성 및 안정성이 향상된 스마트미터 보급
					▷(기반조성) 전기차충전기 과충전 방지 및 화재 안전을 위한 평가 기반 구축				
차세대 산업	11대 핵심투자 분야	산업대전환 초격차 계량 기술	※ '24년 신규예산 확보 必	▷(기술개발) 핵심 분야별 고정밀 계량 기술 및 장비개발, 핵심 분야 내 계량·측정 장비의 국산화율 제고					▷ 핵심분야* 관련 고정밀 계량기술 개발 및 국제 계량기준 선도 * 미래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등
					▷(기반조성) 수소차 충전 계량 등 시험 평가(가이드라인 포함) 기반 구축 ▷(법제도개선) 법정 계량화(수소 등, '25년 이후) 검토 및 기술기준(고사) 정립 및 운용, 기존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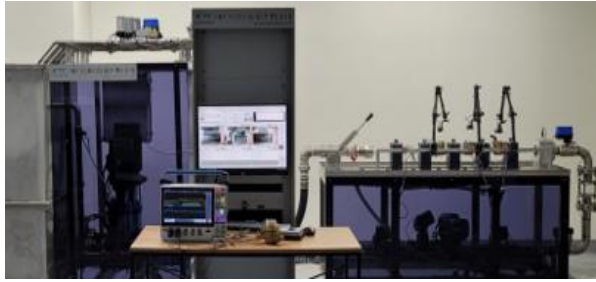
참고4

R&D 과제별 성과 및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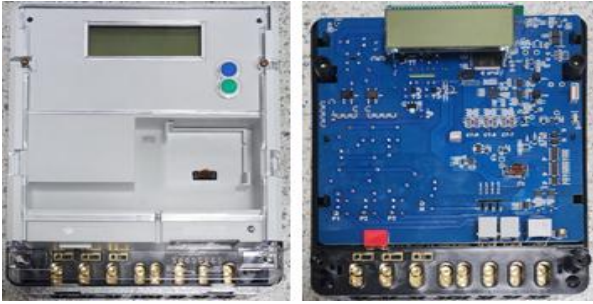
내역1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총 24개 과제 - 종료, 계속 포함)

순번	지원 년도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내용 및 성과	활용방안
1	2021	전기차 충전기 다기능 멀티 검정시스템 및 비대면 검정인프라 구축	(재)한국기계전기전 자시험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속 충전기 대상 1:N 원격 검정시스템 구축(3대 동시) 검정시스템 활용 전기차 충전기 실증 검정 24건 비대면 검정시스템 내부표준화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충전기 제조공장에서 충전기 품질관리를 위한 한번에 여러대의 충전기 검사가 가능
2	2021	저울의 신뢰성 검증능력 향상을 위한 측정자동화 시스템 개발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F 및 M급 분동(5kg~20kg) 자동 측정시스템 개발 고용량 전기식 저울(300kg 이하) 교정자동화 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LAS 인정 획득을 통한 교정 서비스 제공 가능
3	2021	스마트 계량측정 산업발전을 위한 저울관리 기반 구축	(사)한국계량 측정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자동저울의 산업·사용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주요국 저울 관리제도 조사 및 OIML 인증제도 연구 보고서 도출 저울관리제도 법령 개정(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자동저울의 관리제도 개선에 활용
4	2021	스마트워터그리드용 스마트 수도미터의 성능평가 기술개발 및 평가기반 구축	(재)한국기계전기전 자시험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수도미터 성능평가 기술개발 및 단체표준(안) 개발 스마트 수도미터 기능시험용 테스트벤치 구축 및 평가 수행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 사용량 원격확인 누수확인 등 상수도 관리에 활용

순번	지원 년도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내용 및 성과	활용방안
					
5	2021	최신 국제표준(IEC) 기반의 전력량계 및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C 62052, 62053 기반의 전력량계 및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C 62052, 62053 반영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 IEC 62052, 62053 기반 시험평가 KOLAS 인정범위 확대 - 정밀도 0.5급 전력량계 시제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성, 신뢰성,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등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술기준(안) 적용 ○ 전력량계 시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 서비스 제공
6	2021	QR코드 기반의 법정계량기 이력 정보 시스템 개발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계량기 13종별 QR 코드 및 전용 라벨 개발 ○ 검정 및 재검정 데이터 관리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 시범사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저울 제작 및 재검정, 전기차 충전기 제작 검정, 주유기 제작 및 재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계량기의 이력관리를 통한 사후관리 및 검정관리에 활용
7	2021	법정계량기 비대면 실시간 원격검정 시스템 개발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미터용 비대면 원격검정 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미터용 비대면 실시간 원격검정 시스템 구현 (통신 프로토콜, 암호화, 유·무선 보안 인증 등) - 검정 표준절차서, 기술기준 개정(안), 계량법 개정(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원격검정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기준, 검정업무 절차서 등 제도개선

순번	지원 년도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내용 및 성과	활용방안
				<p> • VDC 에이전트 실행 제어 • USB 보안 토큰 제조업체 운영 SW (생산/공정 시 정보 입력 및 수도미터 지시값 수신) 검정측 (검정 SW, API 등) 비대면 원격 검정 사이트 (검정 SW, API 등) VDC 중앙서버 VDC 에이전트 실행 제어 USB 보안 토큰 업체 담당자 (검정 SW, API 등) 검정 담당자 (검정 SW, API 등) 검정 감독관 (검정 SW, API 등) 관리자 콘솔 (검정 SW, API 등) </p>	
8	2023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재검정 현장검증 시험장비 개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재)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 및 DC 전기차 충전기 계량 오차 시험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020년도 이전 설치 충전기의 계량 오차 향상 개선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충전기의 시험방법 표준화 기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계량 성능 검증에 활용
9	2023	50kw 600kW급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험장치 개발 및 구축	(재)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시험 가능한 시험장치 개발 DC 전기차 충전기 시험용 기준기 개발 및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슬라 슈퍼차저, 현대자동차 E-pit 등 600kw 이상급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생산시 시험 및 검정, 재검정에 활용
10	2023	전기분야 법정계량기인 전력량계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형식 승인검정제도 개선(안) 개발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전기분야 법정계량기 형식승인 적합성 평가 사례조사 보고서 도출 전력량계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변경신청 제도 개선(안) 도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검정·재검정 유효기간 개선(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량계 및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운영 및 충전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11	2023	E2급 분동(1kg 이하) 측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E급 분동(50g~1kg) 20개 자동 측정시스템 개발 및 유효성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LAS 인정 획득을 통한 교정 서비스 제공 가능
12	2023	스마트 수도계량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정 자동화장치 기술 개발	(재)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세대 통신장치 하드웨어 및 자동보정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통한 스마트 수도계량기 생산성 향상 EN 13757에 부합하는 보안 및 보정기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개발 스마트 수도계량기 보정 단체표준 또는 표준절차서 개발 현장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수도미터 외 가스계량기, 온수계량기, 적산열량계 생산 자동화 및 스마트화에 확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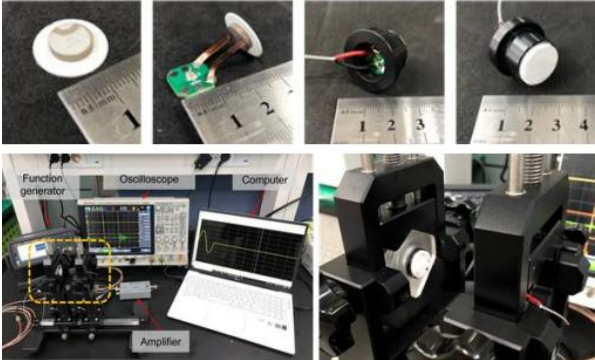
순번	지원 년도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내용 및 성과	활용방안
13	2023	법정계량기(수도미터 온수미터 적산열량계)의 형식승인 검사 데이터 디지털화를 위한 Smart Lab 구축	(재)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오차 검사 수행 자동화, 검사성적서 보안성 강화를 위한 형식승인기관 마스터 인프라 구축 - 3종 계량기 검사 시험 아날로그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및 위변조 방지 암호화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미터 검사절차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시, 검사 자동화 및 신속화 가능 (아날로그→디지털 전환)
14	2023	스마트미터의 센서 신뢰성 평가 기술개발 및 평가기반 구축	(재)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미터, 온수계량기, 적산열량계에 사용되는 센서의 자기장 차폐 성능 기능강화 및 자기장 시험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수도미터, 온수계량기, 적산열량계의 자기장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기준 개선(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식 및 스마트미터의 자체 노출 조건에서의 품질강화 가능
15	2023	수소차 충전기 법정계량제도 확립을 위한 수소 충전유량 측정표준 기술개발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차 충전기 법정계량을 위한 수소 충전유량 측정 표준 시스템 개발 - 수소차 충전기 계량 검사장치 국가 측정표준 확보 및 측정불확도 평가, 현장실증 - 수소차 충전기 법정계량 시행을 위한 현장 교정 절차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차 충전소 법정계량제도 확립에 활용
16	2021	전기 자동차 충전기 AMI 및 전력분석기에 적용 가능한 정밀 전력량 측정(오차등급 0.5 전력 품질 계측등급 S) 기술 개발	(주)남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충전기용 전력량계 시제품 개발 및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충전기 탑재용 전력량계 사업화 가능
17	2021	글로벌 환경에 대응 가능한 전력량계 개발	(주)남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북미 등 국가별 호환이 가능한 전력량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사용 환경에 맞는 전력량계 하드웨어 시제품 개발 ○ 국가별 통신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착탈식 유무선 통신 모듈 디자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시장 대상 전력량계 사업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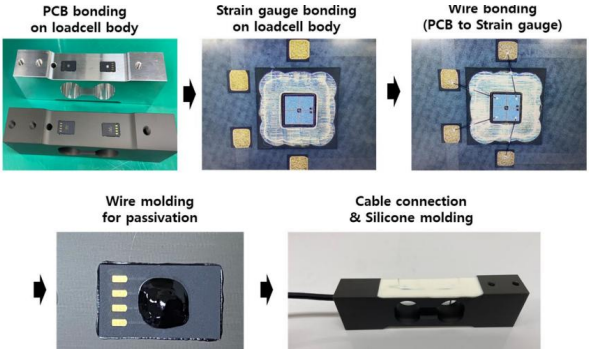
순번	지원 년도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내용 및 성과	활용방안
					
18	2021	3차원 유동해석기반 기준기용 10회선 초음파 유량계 개발	(주)에이치에스 씨엠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 유량계 시제품 개발(100, 150, 250, 400mm) - 우주베키스탄 형식승인 완료 ○ 유량 측정용 알고리즘 및 자가진단기능이 적용된 10회선 유량 컴퓨터 개발 및 KC, GS 인증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미터, 수도미터 등 유량계 적용 스마트 계량기에 활용
19	2021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기반의 지능형 가스미터 개발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초음파 스마트 가스미터 시제품 개발 - LoRa WAN 및 NB-IoT 이중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구축 - 초음파 스마트 가스미터 표준(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 스마트 가스미터 표준 적용 및 사업화 가능
20	2021	차세대 보안을 적용한 실시간 수질 및 유량 측정용 스마트 수도미터 개발	(주)레오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수질 및 유량 측정용 스마트 수도미터 시제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 - 실시간 수질 및 유량 측정용 스마트 수도미터 형식 승인 - 수도미터 및 통신부 KC 인증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돗물의 수질변화에 따른 신속한 감지가 가능한 스마트 수도미터 사업화 가능

순번	지원 년도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내용 및 성과	활용방안
21	2023	열질량식 스마트 가스미터 개발	신한정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질량식 유량 센서 모듈을 적용한 G6 규격의 스마트 가스미터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현장에 적용가능한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 G10, G16, G20, G25 에 확대 적용 가능 국내 열질량식 가스미터 기술기준 및 표준 개발 가능
22	2023	초음파 동시 발생 기술을 이용한 교차상관 방식의 초음파 스마트 가스미터 개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계량기급으로 온압보정된 원격검침용 초음파 스마트 가스미터 개발 - OIML R 137, ISO17089를 고려한 초음파 스마트 가스미터 성능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도 및 압력에 따른 계량편차 해결 현장 가스미터의 신속한 고장 탐지 및 검증에 활용
23	202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무선게이트웨이 및 차세대 과금형 콘센트 개발	주식회사 스타코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충전용 무선게이트웨이 및 과금형 콘센트 개발(WiFi HaLow, WIS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주차장 등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활용한 과금형 콘센트 사업화
24	2023	스마트 전력량계의 온도변화 오차 최소화 기술 개발	스마트전자(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부하, 환경 온도변화에 의한 전력량 측정 데이터 오차를 최소화한 정밀 전류 센싱용 저항기 기술개발 및 스마트 전력량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전력 및 과전력 정밀 전류 해석 분야에 활용 가능

내역2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총 7개 과제 - 종료, 계속 포함]

순번	지원 년도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내용 및 성과	활용방안
1	2021	0.5 정밀도를 갖는 비접촉식 온도 측정 시스템 검교정용 측정기술 개발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및 국내 규격의 온도측정 요구사항이 반영된 비접촉식 온도측정기 교정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화상측정기기, 전자식 체온계 등과 같은 온도측정기기에 대하여 공인교정 및 시험, 성능검증 서비스 제공
2	2023	다축 로드셀 신뢰성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 시스템 개발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X, Y, Z축에 대한 로드셀 시험평가 규격 모델(안) 선정 및 시험평가 시스템 제작 다축 로드셀 표준 시험평가 절차서(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축 로드셀 시험평가 서비스 제공 및 KOLAS 기관에 보급
3	2021	유량정확도 1%급 가스식 유량계용 고감도 공기정합 초음파 트랜스듀서 핵심소재부품 기술개발	한국기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감도 압전 복합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통한 초음파 가스유량계 적용 및 방폭인증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 유량, 바이오가스, 천연가스 등 정밀 측정용 초음파 가스 유량계로 활용 가능

순번	지원 년도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내용 및 성과	활용방안
4	2021	MEMS 기반의 나노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한 초정밀 로드셀 모듈 개발	(주)멤스팩	<p>○ 실리콘 나노와이어 센서가 탑재된 로드셀 시제품 제작</p> 	<p>○ 전자펜용 필압센서, 음식물 처리기용 무게센서, 가전제품용 유량센서 등으로 사업화 가능</p>
5	2023	저농도 감광식 연기농도계 개발	지에프텍(주)	<p>○ 저농도 감광식 연기감지기 시험시스템 개발 - 광학 모듈, 평가소프트웨어, 계측시스템 개발</p>	<p>○ 가정, 산업현장의 화재 사전감지 등에 활용</p>
6	2023	지능형 생육환경 검출 자율주행 로봇 개발	주식회사 디파인	<p>○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생육환경의 온·습도, 토양산도, 토양수분 자동 측정 시스템 개발</p>	<p>○ 스마트팜 내의 무인·자동화 측정기술 및 환경관리에 활용</p>
7	2023	영상장치기반 고중량 이동작업 대상물 감지 및 주변 환경 위험감지기 기술개발	에스아이오티 주식회사	<p>○ 고중량물 운반 현황, 작업자의 동선 등 작업장 내 영상장치 기반 위험상황 예측 감지 기술 개발</p>	<p>○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p>

<div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사 업 명</div> <div style="font-size: 1.1em; margin-top: 10px;">(14) 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3731-328)</div>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28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2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해외인증 지원체계 기반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박형민과장 이민호팀장	양희찬	홍성진
		시험인증정책과	043-870-5480 02-6240-4778	02-6240-4771	02-6240-4769
	사업시행주체	한국표준협회	KS인증센터	권영상 센터장	02-6240-4639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 표준실	장근영 실장	053-718-849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해외인증지원체계 기반구축	-	-	1,860	1,860	순증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1,860
· 해외인증 종합 지원체계 구축· 운영	-	-	-	-	-	-	-	-	-	-	-	-	-	320
·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	-	-	-	-	-	-	-	-	-	-	-	-	1,54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1,860
·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	-	-	-	-	-	-	-	320
· 사업출연금 (350-02)	-	-	-	-	-	-	-	-	-	-	-	-	-	1,540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1,860
· 해외인증 종합 지원체계 구축· 운영	-	-	-	-	-	-	-	-	-	-	-	-	-	320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	-	-	-	-	-	-	-	320
·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	-	-	-	-	-	-	-	-	-	-	-	-	1,540
-사업출연금 (350-02)	-	-	-	-	-	-	-	-	-	-	-	-	-	1,5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 자국 우선주의 확산, 기술규제(인증) 심화에 대응하는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해외 인증취득 애로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정보제공)** 각 부처·기관에 제공하는 해외인증 관련 정보를 ‘해외인증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통합 정보제공
- **(교육·컨설팅)** 해외인증 전문성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해외인증 신청, 심사, 획득까지 기업의 해외인증 준비 단계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상호인정 확대)**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 등을 통한 상호인정 확대로, 해외인증에 요구되는 제품시험을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수행하여 기업의 인증취득 과정 지원

-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해외인증 관련 지원사업 및 기관을 종합·연계 하는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방안 고도화를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 인증 취득을 지원
-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비용 저감 및 기간 단축)하는 시험 인프라 구축
 - *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검사 항목을 국내 시험인증기관 이용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험 인프라 고도화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표준기본법

- 제26조의 2(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 ①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8. (생략)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이하 생략)

○ 산업표준화법

-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 제3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2. 국제표준·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보급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연구·개발·진흥·진단·지도 및 교육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평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략)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 6. (생략)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자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2.11.23. : 제1차 수출전략 회의,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 소기관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정보제공부터 컨설팅, 사업신청까지 원스톱 지원 추진
- '22.12.27. : 산업부 업무보고, 「해외인증지원단」(국표원) 신설을 통한 소 주기 인증 지원체계 확충 추진 보고
- '22.12.29. : 산업부-복지부 합동 업계 간담회, 해외인증 취득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해외인증 지원기관(12개) 협의체를 국표원이 총괄) 체결
- '23.1.18. :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1차 회의, 지원사업기관 및 시험인증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 해외인증 지원단 구성·운영방안 등 논의
- '23.2.23. : 제4차 수출전략 회의,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발표를 통해 해외인증 지원 강화 방안 전략 수립
- '23.2.23. :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 개최, 수출기업 해외인증 애로사항 청취 및 종합 지원포탈 소개·시연회
- '23.3.13. : 수출투자 책임관 회의, 정보제공·컨설팅·취득비용 등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창구를 구축(4월 예정)하여 지원대상 기업의 편의 제고 추진
- '23.4.4. : “해외인증지원단” 개소, 해외인증 소주기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23.6.29. :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발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	-	-	1,860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보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출연/전담기관)
- 사업 수혜자 : 적합성평가기관 및 사업자, 일반 국민(소비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보조	한국표준협회	320백만원	100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출연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1,540백만원	7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 ('23) - 백만원 → ('24 정부안) 320백만원 → ('24 확정) 320백만원

- (요구) 해외인증 관련 지원사업 및 기관을 종합·연계하는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방안 고도화를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반영 요청

- (산출)

■ 인건비 : 150백만원

- 책임연구원 42백만원 (7백만원x12개월x1명x50%(참여율))
- 연구원 64.8백만원 (5.4백만원x12개월x1명)
- 연구보조원 43.2백만원 (3.6백만원x12개월x1명)

■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 170백만원

- 종합 정보플랫폼 구축·운영 85백만원
- 해외인증취득지원 85백만원
 - 회의수당 5백만원(0.2백만원x5명x5회) + 맞춤형 컨설팅 70백만원(0.35백만원x200회)
 - + 업계 설명회 10백만원(5백만원x2회)

②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 ('23) - 백만원 → ('24 정부안) 1,540백만원 → ('24 확정) 1,540백만원

- (요구)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¹⁾ 취득을 지원하는 시험인프라²⁾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요청

1) 대표적인 해외인증 : (북미) UL, CSA / (유럽) CE 등

2) 국내 인증 대비, 해외인증 취득 시 요구되는 추가/강화 시험·검사에 대한 장비를 구축하여 기업수요 대응 및 애로 해소

- (산출)

■ 해외인증 수요 분야 시험인프라 구축 : 1,540백만원

- 전기·전자기기 美방폭(UL)인증 시험 장비 구축 1,500백만원 = (1,640백만원x1건 + 500백만원x1건)x70%
- 사업관리비 : 40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1,860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20백만원 가.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3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150백만원 ■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 17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정보플랫폼 구축·운영 85백만원 • 해외인증취득지원 8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수당 5백만원(0.2백만원x5명x5회) + 맞춤형 컨설팅 70백만원(0.35백만원x200회) + 업계 설명회 10백만원(5백만원x2회) ○ 사업출연금(350-02) : 1,540백만원 가.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1,54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인증 수요 분야 시험인프라 구축 : 1,54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전자기기 美방폭(UL)인증 시험 장비 구축 1,500백만원 = (1,640백만원x1건 + 500백만원x1건)x70% • 사업관리비 : 4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현장 컨설팅 및 기술자문 기업 수 (단위 : 개)	목표	-	-	-	-	130	신규사업 반영에 따른 초기 목표치 설정	설명회 상담부스 운영 등을 통한 현장 컨설팅 기업 수 및 기업 방문 기술자문 기업 수	컨설팅 및 자문 이용기업 수 집계 (수행기관)
	실적	-	-	-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2020	-
2021	-
2022	-
2023	-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해외인증 정보제공, 상담 등의 지원사업 및 관련 기관을 연계한 소주기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 **(해외인증 취득 비용·시간 절감)** 국내 주요 시험기관의 상호인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비용·시간을 대폭 절감 효과 기대

*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상호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해외 심사가 원칙
→ 국내 시험기관에서, 국내 시험을 통한 비용 저감과 기간 단축 효과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0까지 기투자액	2021	2022	2023	2024	2024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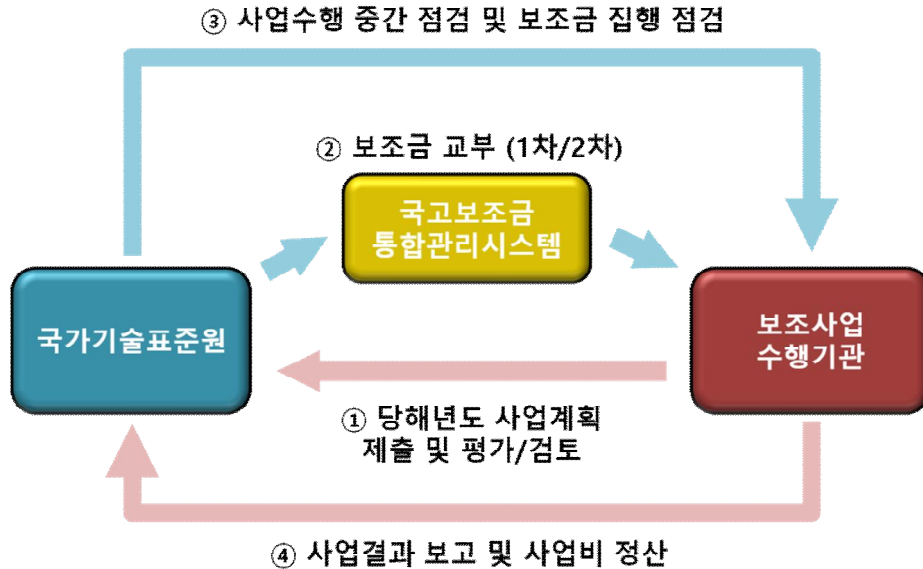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차 변경						
()차 변경						
2024년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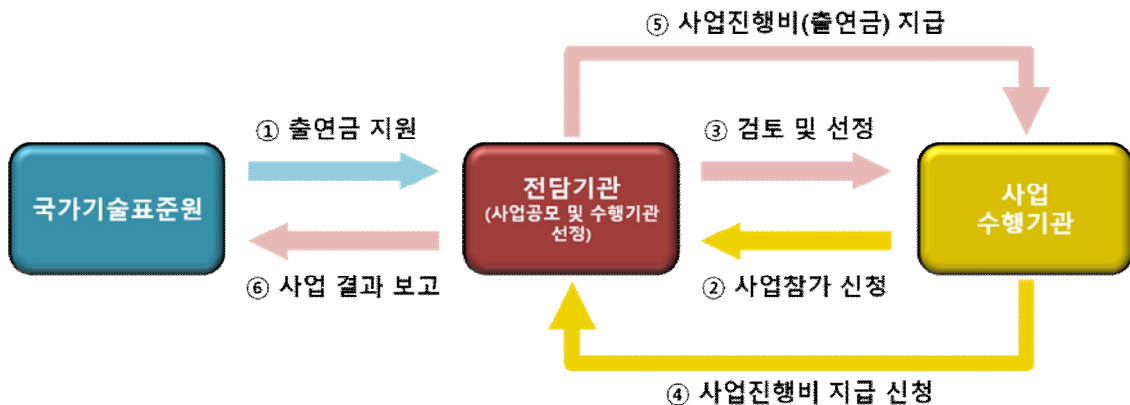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320-01)민간경상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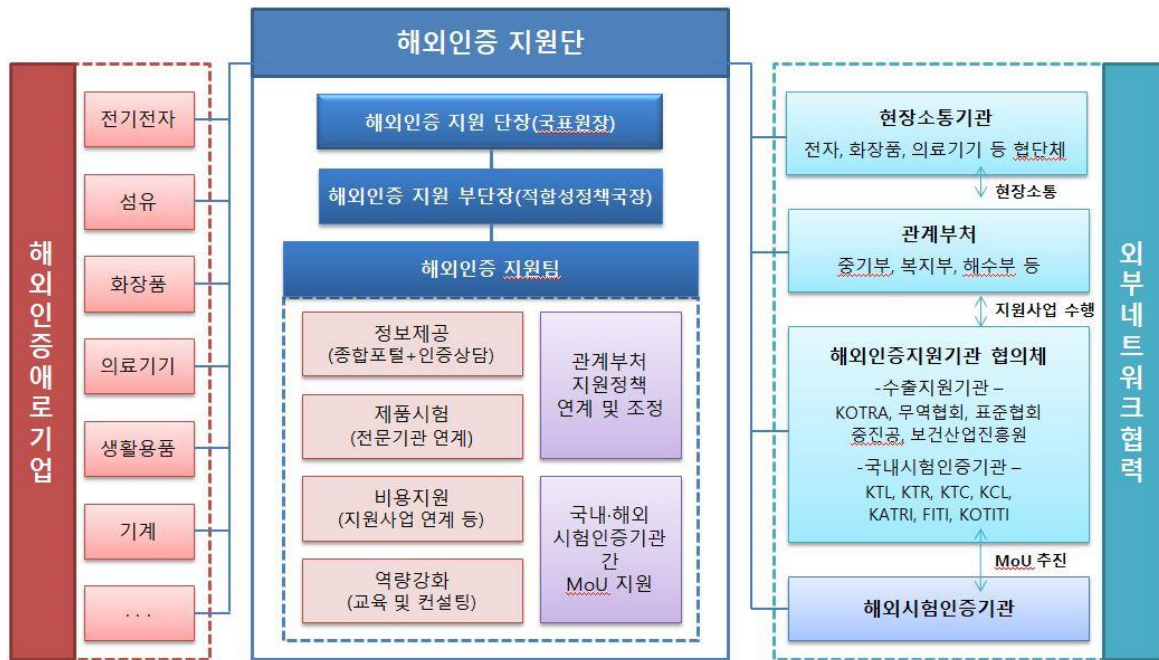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산업부 (320백만원)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320백만원)	한국표준협회 (320백만원)	-	-

□ (350-02)사업출연금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산업부 (1,540백만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 (1,540백만원)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1,540백만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제관리 지침 => (1,500백만원)	수행기관

□ 해외인증종합지원체계 구성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	-	-	-	-	
'23~'27		-	6,447	6,447	6,447	1,44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3) 자체평가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보제공)** 각 부처·기관에 제공하는 해외인증 관련 정보를 ‘해외인증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통합 정보제공
 - **(교육·컨설팅)** 해외인증 전문성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해외인증 신청, 심사, 획득까지 기업의 해외인증 준비 단계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상호인정 확대)** 해외인증에 요구되는 제품시험을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상호인정 확대 추진
- * 국내 인증 대비, 해외인증 취득 시 요구되는 추가/강화 시험·검사에 대한 장비를 구축하여 기업수요 대응 및 애로 해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해외인증 정보제공, 상담 등의 지원사업 및 관련 기관을 연계한 소 주기 종합지원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예산반영 요청
- * 해외인증 취득은 수출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나,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중 약 20%를 차지하는 주요 애로사항
- 해외인증 지원 관련 기관·사업 연계를 통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인증 정보제공,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인증 대응 역량 강화, 상호인정 활용 비용·시간 절감 등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 증액 편성 요청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	-	-	-	-	-	-	-	-	-	-	-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	-	-	-	-	-	-	-	-	-
2021	-	-	-	-	-	-	-	-	-	-
2022	-	-	-	-	-	-	-	-	-	-
2023. 12월기준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 해당 없음

2020	-
2021	-
2022	-
2023	-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날짜)
-	-	-	-	-
-	-	-	-	-
합 계			-	-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설명자료

□ 추진 배경

- 수출기업은 복잡한 해외인증에 대해 정보검색부터 인증획득까지의
 全 과정에서 애로를 호소*하고 통합지원을 요구**

* 코트라 수출기업 상담('22년 27,042건) 中 인증·규격이 5,325건(19.7%) 차지 (해외인증
 종합전략 보고서 1페이지)

** 해외인증 취득 단계별 정보 부족, 비용부담, 시험인증 취득, 판로 개척 등 해외인증
 취득 전반에 대한 지원 요구 ('23.1월, 표준협회 간이조사)

□ 정부지원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다수 부처에서 해외인증 지원 관련 업무 수행 중

* (산업부·국표원) 1381인증표준 정보센터(인증정보 제공),
 Know-TBT 포털(해외기술규제 정보제공) 등
 (중기부) 중소기업 관련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운영 등
 (산업부·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운영(KOTRA·중진공)
 (복지부·해수부 등) 부처 소관 개별품목에 대한 해외인증 지원사업 운영

- (문제점) 여러 부처가 정보제공, 비용지원, 애로대응 등 업무를
 수행 중이나 부처 간 연계가 부족하여 효과적 기업지원에 제한적
 -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기준·규격 등에 대한 전문성 또한 요구됨

□ 추진 경위

- (제1차 수출전략 회의)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 소기관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정보제공부터 컨설팅, 사업 신청까지 원스톱 지원('22.11.23)
- (산업부 VIP업무보고) 「해외인증지원단」(국표원) 신설을 통한 소 주기
 인증 지원체계 확충('22.12.27)
- (산업부-복지부 합동 업계 간담회) 해외인증 취득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해외인증 지원기관(12개) 협의체를 국표원이 총괄) 체결('22.12.29)
-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1차회의) 지원사업기관 및 시험인증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 해외인증 지원단 구성·운영방안 등 논의('23.1.18)

- (수출투자 책임관 회의) 정보제공컨설팅·취득지원 등 기업의 편의 제고 및 부담 완화를 위한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창구 구축방안 논의(‘23.3.13)
- (해외인증 지원단 발족) “해외인증지원단” 개소, 해외인증 소 주기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23.4.4)
- (전략 발표)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발표(‘23.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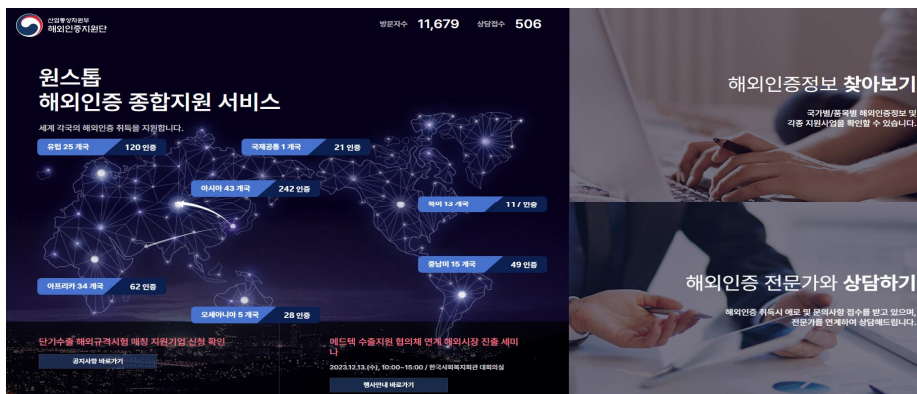
□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

- 해외인증 취득 소 주기(정보제공, 교육·컨설팅, 제품시험)에서 관련 사업(기관)간 연계 등을 통해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① (정보제공) 해외인증 절차·규정·기간, 필요 시험, 국내 시험 가능 기관, 관련 지원사업 등의 종합 안내·상담

- *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구축을 통해 Know TBT, 1381인증표준콜센터, 해외시장 정보(KOTRA) 등의 관련 정보를 개방형(open API)방식으로 실시간 연계
⇒ 각 부처·기관에 분산된 해외인증 관련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

< 해외인증 종합포털 메인 화면 구성(안) >



② (교육·컨설팅) 해외인증 전문성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해외인증 신청, 심사, 획득까지 기업의 해외인증 준비 단계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 수출 대상 품목·국가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시험인증기관 등의 전문가 일대일 매칭을 통해 심층·전문 및 현장 대면 교육·컨설팅 제공

③ (상호인정 확대)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 등)으로, 해외인증에 요구되는 제품시험을 국내 시험기관을 통해 수행하여, 해외인증 취득이 용이하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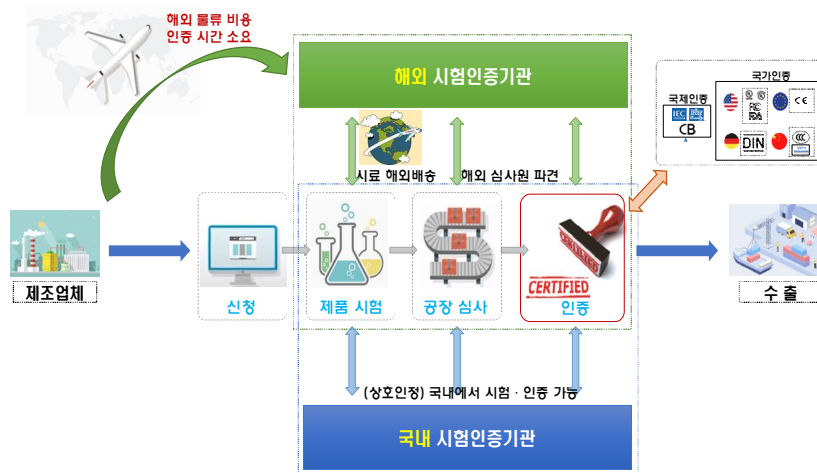
참고 2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설명자료

1. 필요성

- **(해외 시험·심사)**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상호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해외 심사가 원칙
 - 시료 송부, 심사 대응, 외국심사원 국내 공장심사 등에 시간, 비용, 전문성 측면 어려움이 큼

<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활용 해외인증 취득 절차 >



- **(상호인정)** 국내 주요 시험기관의 상호인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비용·시간을 대폭 절감 기대
- **(국내 시험)**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규제 강화 및 차세대 배터리 등 新기술규제 도입 대비 국내시험인증 기반 마련하여 국내시험 지원 추진
 - * ex)국내 방폭 시험기관은 3곳(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으나, 북미 방폭인증(UL)에는 적합하지 않아 시험장비 고도화 필요

2. 24년도 시험인프라 구축

- **(美방폭 인증)** 가스 취급 시설에 사용되는 기자재(센터부, 구동부, 제어부 등 전자기기)의 방폭 및 성능인증 북미 기준은 강제 인증 대상이나, 국내는 시험설비가 미비해 국내 기업은 대부분 북미 현지에서 인증을 획득
 - 국제기준과 상이하고 복잡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국내 시험인증 기관이 전무해 현지 시험인증기관 의존에 따른 기업 애로 발생
 - * (국내) IEC/EN 표준 기반 KS 표준 적용 / (북미) UL/FM/CSA 등 자체 민간규격 적용

사 업 명
(15)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37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3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제품시장 감시역량 강화	산업통상 자원부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최형기	경도현	-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0	043)870-5425	-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시장조사실	신영철 실장	070)5223-1428
		대한상공회의소	데이터정보팀	김성열 팀장	02)6050-1480
시중유통 제품안전 성조사 (내역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연구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최형기	박순영	경도현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0	043)870-5427	043)870-5425
	사업시행주체				

불법·불량 제품 단속 (내역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최형기	이광은	이지원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0	043)870-5428	043)870-5423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조사팀	이광태 팀장	070)5223-1392
리콜제품 이행점검 (내역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최형기	이광은	이지원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0	043)870-5428	043)870-5423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시장관리팀	윤봉 팀장	070)5223-3856
안전모니 터링단 구성·운 영 등 (내역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최형기	이광은	이지원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0	043)870-5428	043)870-5423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조사기획팀	이준행 팀장	070)5223-1434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및 확산 (내역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최형기	이재윤	-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0	043)870-5421	-
	사업시행주체	대한상공회의소	데이터정보팀	김준엽 차장	02)6050-1481
안전기준 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 (내역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연구사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최형기	-	최태식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0	-	043)870-5424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시장관리팀	윤봉 팀장	070)5223-385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제품시장감시 역량강화	6,844	7,211	7,211	7,211	0	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844	6,844	6,843 [6,843]	0	1	7,211	7,211	7,211 [7,211]	7,211	7,211 [7,211]	0	0	7,211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3,219	3,219	3,219 [3,219]	0	0	3,466	3,466	3,466 [3,466]	3,466	3,466 [3,466]	0	0	3,466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 리콜이행점검	2,126	2,126	2,126 [2,126]	0	0	2,126	2,126	2,126 [2,126]	2,126	2,126 [2,126]	0	0	-	
· 불법·불량제품단속	-	-	-	-	-	-	-	-	-	-	-	-	1,595	
· 리콜이행점검	-	-	-	-	-	-	-	-	-	-	-	-	531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등	380	380	379 [379]	0	1	500	500	500 [500]	500	500 [500]	0	0	500	
· 위해상품판매차 단시스템구축 및 확산	340	340	340 [340]	0	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0	0	340	
· 안전기준준수대 상감시체계 구축	779	779	779 [779]	0	0	779	779	779 [779]	779	779 [779]	0	0	779	
○ 비목별 분류(합계)	6,844	6,844	6,843 [6,843]	0	1	7,211	7,211	7,211 [7,211]	7,211	7,211 [7,211]	0	0	7,211	
· 시 험 연 구 비 (210-13)	3,198	3,198	3,198 [3,198]	0	0	3,134	3,134	3,134 [3,134]	3,134	3,134 [3,134]	0	0	3,134	
· 일 반 용 역 비 (210-14)	380	380	379 [379]	0	1	-	-	-	-	-	-	-	-	
· 사 업 추 진 비 (240-01)	21	21	21 [21]	0	0	20	20	20 [20]	20	20 [20]	0	0	2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3,245	3,245	3,245 [3,245]	0	0	4,057	4,057	4,057 [4,057]	4,057	4,057 [4,057]	0	0	4,057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6,844	6,844	6,843 [6,843]	0	1	7,211	7,211	7,211 [7,211]	7,211	7,211 [7,211]	0	0	7,211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3,219	3,219	3,219 [3,219]	0	0	3,466	3,466	3,466 [3,466]	3,466	3,466 [3,466]	0	0	3,466	
- 시 험 연 구 비 (210-13)	3,198	3,198	3,198 [3,198]	0	0	3,134	3,134	3,134 [3,134]	3,134	3,134 [3,134]	0	0	3,134	
- 사 업 추 진 비 (240-01)	21	21	21 [21]	0	0	20	20	20 [20]	20	20 [20]	0	0	20	
-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312	312	312 [312]	312	312 [312]	0	0	312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 리콜이행점검	2,126	2,126	2,126 [2,126]	0	0	2,126	2,126	2,126 [2,126]	2,126	2,126 [2,126]	0	0	-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2,126	2,126	2,126 [2,126]	0	0	2,126	2,126	2,126 [2,126]	2,126	2,126 [2,126]	0	0	-	
· 불법·불량제품단속	-	-	-	-	-	-	-	-	-	-	-	-	1,595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	-	-	-	-	-	-	-	-	-	-	-	1,595	
· 리콜 이행점검	-	-	-	-	-	-	-	-	-	-	-	-	531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	-	-	-	-	-	-	-	-	-	-	-	531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등	380	380	379 [379]	0	1	500	500	500 [500]	500	500 [500]	0	0	500
- 일 반 용 역 비 (210-14)	380	380	379 [379]	0	1	-	-	-	-	-	-	-	-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	-	-	-	-	500	500	500 [500]	500	500 [500]	0	0	500
· 위해상품판매차 단시스템구축 및 확산	340	340	340 [340]	0	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0	0	34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340	340	340 [340]	0	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0	0	340
· 안전기준준수대 상감시체계 구축	779	779	779 [779]	0	0	779	779	779 [779]	779	779 [779]	0	0	779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779	779	779 [779]	0	0	779	779	779 [779]	779	779 [779]	0	0	7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안전성조사)** 시중 유통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험·검사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리콜처분, 개선조치 권고 등 행정조치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 리콜이행점검)** * '24년부터 내역사업 단순 분리
 - ① **불법·불량제품단속** : 국민신문고,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접수된 KC미인증, 도용 등 각종 불법·불량제품 신고건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등 행정조치 및 시정권고
 - ② **리콜이행점검** :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조치된 제품 사업자의 본사, 물류창고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리콜이행실적(수리, 교환, 환불 등)을 진도점검(업체당 3~5회)하고,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에게는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치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안전감시원(약 200명)을 활용,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 대해 리콜제품, 불법의심제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연중 상시 모니터링 실시(조사결과 적발된 제품은 행정조치 요청)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09년 시스템을 구축, 환경부, 식약처 등과 연계하여 공동 운영 중으로, 각 부처별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위해제품(리콜제품) 정보를 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 동 시스템과 연계된 전국 약 25만개 유통매장에서 실시간 유통차단
- **(안전기준준수대상 감시체계구축)** 전안법 개정('18.7)에 따라 사전규제가 완화되어 사후관리만 가능한 23개 품목에 대해, 시장현황조사, 안전기준 준수율 조사를 거쳐 부적합제품 사업자 대상 재발방지 제도·홍보 등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 제9조(안전성조사 등)
-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제19조(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5조(안전인증 등)
-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10조(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등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제6조(안전성조사)
- 제9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 제10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명령)
- 제17조(안전인증 등)
-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 제25조(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② 추진경위

- '03. 5월 대통령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어린이 안전사고 경감 지시
- '04. 4월 감사원은 공산품안전관리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지적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 1월 공산품안전망구축사업(세부사업) 시작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
- '06.12월 공산품안전관리종합 5개년계획 수립
- '08. 5월 대통령 대국민담화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도록 모든 조치강구”
- '08. 9월 대통령 “성인용보다 어린이용을 빨리 조치하여 유통을 중단해야함”
- '09. 1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09.1.1.)
- '09. 7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10.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산 본 사업 추진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 '11. 3월 제1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16. 5월 제1차 어린이안전종합 기본계획 수립
- '16.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17. 2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17.12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기준준수대상 신설)
- '18. 3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 '19. 12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리콜이행점검, 보완명령 등 규정 신설)
- '23. 9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6,870	7,171	6,844	7,211	7,211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지속지원)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대한상공회의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312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4 (운영재원)
불법·불량제품 단속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1,595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4 (운영재원)
리콜이행점검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531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4 (운영재원)
안전기준준수 대상 감시체계구축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779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4 (운영재원)
안전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500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4 (운영재원)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보조	대한상공 회의소	340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 (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23) 3,466백만원 → ('24) 3,466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시중유통중인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가. 시험연구비(210-13) 3,134백만원
 ⇒ 시료구입비 664백만원(5,533건×0.12), 시험수수료 2,379백만원(5,533건×0.43), 일반수용비 67백만원, 국내여비 24백만원
- 나. 사업추진비(240-01) 20백만원
- 다. 민간경상보조(320-01) 312백만원
 ⇒ 시료구입 및 인계 인건비 260백만원(5명×52백만원), 출장비 16백만원, 차량유지비 21백만원, 운영비 15백만원

② 불법·불량제품 단속

: ('23) 1,595백만원 → ('24) 1,595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단속·행정조치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전년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인건비 1,395백만원(31명×45백만원), 출장비 98백만원(31명×63회 ×0.05백만원), 차량유지비 53백만원, 운영비 49백만원

③ 리콜이행점검

: ('23) 531백만원 → ('24) 531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대상제품에 대한 사업자방문 및 이행점검·독려를 통해 국생명 및 재산을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전년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인건비 450백만원(10명×45백만원), 출장비 31.5백만원(10명×63회 ×0.05백만원), 차량유지비 32백만원, 운영비 17.5백만원

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 ('23) 340백만원 → ('24) 340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위해한 제품(리콜제품 등)을 전국 유통매장에 통보하여 실시간 판매 차단을 위해 전년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시스템유지보수 88백만원, 사업운영비 14백만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50백만원, 중소유통매장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88백만원, 시스템 홍보 100백만원

⑤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 ('23) 500백만원 → ('24) 500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안전감시원이 유통매장에서 불법·불량 유통여부를 감시하고 유통감시원 역량 제고 등을 위해 전년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제품안전감시원 관리 120백만원(6개단체×20백만원), 제품안전감시원 수당 260백만원(160명×32.5일 ×0.05백만원), 업무역량 및 후속조치 강화 120백만원(인건비 90백만원(2명×45백만원), 운영비 30백만원)

⑥ 안전기준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

: ('23) 779백만원 → ('24) 779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사전인증의무 등이 전혀 없는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전년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인건비 200백만원, 출장비 32백만원, 시료구입비 100백만원(1,000개×0.1백만원), 시험수수료 347백만원(1,000개×0.347백만원), 안전기준 준수 가이드 제작 및 홍보 100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211,000	<p>○ 시험연구비(210-13) : 3,134,099천원</p> <p>가. 시료구입비 (663,96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533건×120,000원=663,960천원 <p>나. 시험수수료 (2,379,19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533건×430,000원=2,379,190천원 <p>다. 일반수용비 (66,68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성조사결과 분석 보고서(7,560천원) : 12,000원×70부×9개 분야=7,560천원 안전성조사결과 위해 내용 홍보(8,000천원) : 2,000,000원×2종×2회=8,000천원 제품안전관련 회의 수당(36,000천원) : 150,000원×10명×24회=36,000천원 리콜제품 리플렛 및 신종 위해제품 현황 보고서(15,120천원) : 12,000원×140부×9개 분야=15,120천원 <p>라. 국내여비 (23,76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지내 출장(4,000천원) : 20,000원×10개 제품 품목×2명×10회=4,000천원 근무지외 출장(19,760천원) : 76,000원×13개 제품 품목×2명×10회=19,760천원 <p>마. 조정재원 (509천원)</p>	7,211,000	<p>○ 시험연구비(210-13) : 3,134,099천원</p> <p>가. 시료구입비 (663,96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533건×120,000원=663,960천원 <p>나. 시험수수료 (2,379,19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533건×430,000원=2,379,190천원 <p>다. 일반수용비 (66,68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성조사결과 분석 보고서(7,560천원) : 12,000원×70부×9개 분야=7,560천원 안전성조사결과 위해 내용 홍보(8,000천원) : 2,000,000원×2종×2회=8,000천원 제품안전관련 회의 수당(36,000천원) : 150,000원×10명×24회=36,000천원 리콜제품 리플렛 및 신종 위해제품 현황 보고서(15,120천원) : 12,000원×140부×9개 분야=15,120천원 <p>라. 국내여비 (23,76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지내 출장(4,000천원) : 20,000원×10개 제품 품목×2명×11회=4,400천원 근무지외 출장(19,760천원) : 76,000원×13개 제품 품목×2명×10회=19,760천원 <p>마. 조정재원 (109천원)</p>
	<p>○ 사업추진비(240-01) : 19,901천원</p> <p>가. 제품안전자문위원회 간담회(8,8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000원×22회=8,800천원 <p>나. 안전모니터링단 운영 간담회(5,6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000원×14회=5,600천원 <p>다. 시장감시망 등 운영 간담회(5,2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000원×13회=5,200천원 <p>라. 조정재원 (301천원)</p> <p>○ 민간경상보조(320-01) : 4,057,000천원</p> <p>1) 불법불량제품 단속(1,595,000천원)</p> <p>가. 인건비(1,395,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000,000원×31명=1,395,000천원 <p>나. 출장비(129,15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3회×31명×50,000원=97,650천원 <p>다. 차량유지비-임차료(39,6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대×660,000원×12개월=39,600천원 <p>라. 차량유지비-유류비(13,538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대×25,000km/대×108.3원/km=13,538천원 		<p>○ 사업추진비(240-01) : 19,901천원</p> <p>가. 제품안전자문위원회 간담회(8,8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000원×22회=8,800천원 <p>나. 안전모니터링단 운영 간담회(5,6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000원×14회=5,600천원 <p>다. 시장감시망 등 운영 간담회(5,2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000원×13회=5,200천원 <p>라. 조정재원 (301천원)</p> <p>○ 민간경상보조(320-01) : 4,057,000천원</p> <p>1) 불법불량제품 단속(1,595,000천원)</p> <p>가. 인건비(1,395,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000,000원×31명=1,395,000천원 <p>나. 출장비(129,15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3회×31명×50,000원=97,650천원 <p>다. 차량유지비-임차료(39,6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대×660,000원×12개월=39,600천원 <p>라. 차량유지비-유류비(13,538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대×25,000km/대×108.3원/km=13,538천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마. 일반운 영비(49,000천원) · 49,000,000원×1식=49,000천원 바. 조정재원 (212천원) <u>2) 리콜이행점검(531,000천원)</u> 가. 인건비(450,000천원) · 45,000,000원×10명=450,000천원 나. 출장비(31,500천원) · 63회×10명×50,000원=31,500천원 다. 차량유지비-임차료(23,760천원) · 3대×660,000원×12개월=23,760천원 라. 차량유지비-유류비(8,123천원) · 3대×25,000km/대×108.3원/km=8,123천원 마. 일반운 영비(17,500천원) · 17,500,000원×1식=17,500천원 바. 조정재원 (117천원) <u>3)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340,000천원)</u> 가. 시스템유지보수비(80,000천원) · 80,000,000원×1식=80,000천원 나. 사업운 영비(10,000천원) · 10,000,000원×1식=10,000천원 다. 시스템기능고도화(76,000천원) · 76,000,000원×1식=76,000천원 라. 중소유통매장용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54,000천원) · 54,000,000원×1식=54,000천원 마. 시스템 홍보 지원(120,000천원) · 120,000,000원×1식=120,000천원 <u>4)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 감시체계 구축(779,000천원)</u> 가. 인건비(200,000천원) · 50,000,000원×4명=200,000천원 나. 출장비(32,000천원) · 160회×4명×50,000원=32,000천원 다. 시료구입비(100,000천원) · 1,000개×100,000원=100,000천원 라. 시험수수료(347,000천원) · 1,000개×347,000원=347,000천원 마. 안전기준 준수 가이드북 제작 및 홍보(100,000천원) · 100,000,000원×1식=100,000천원 <u>5)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지원(312,000천원)</u> 가. 시료구입 및 인계 인건비(260,000천원) · 52,000,000원×5명=260,000천원 나. 출장비(16,500천원) · 66회×5명×50,000원=16,500천원 다. 차량유지비-임차료(18,000천원) · 2대×750,000원×12개월=18,000천원 라. 차량유지비-유류비(5,415천원) · 2대×25,000km/대×108.3원/km=5,415천원 마. 운 영비(12,000천원)6ro · 12,000,000원×1식=12,000천원 바. 조정재원 (85천원)	마. 일반운 영비(49,000천원) · 49,000,000원×1식=49,000천원 바. 조정재원 (212천원) <u>2) 리콜이행점검(531,000천원)</u> 가. 인건비(450,000천원) · 45,000,000원×10명=450,000천원 나. 출장비(31,500천원) · 63회×10명×50,000원=31,500천원 다. 차량유지비-임차료(23,760천원) · 3대×660,000원×12개월=23,760천원 라. 차량유지비-유류비(8,123천원) · 3대×25,000km/대×108.3원/km=8,123천원 마. 일반운 영비(17,500천원) · 17,500,000원×1식=17,500천원 바. 조정재원 (117천원) <u>3)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340,000천원)</u> 가. 시스템유지보수비(80,000천원) · 80,000,000원×1식=80,000천원 나. 사업운 영비(14,000천원) · 14,000,000원×1식=14,000천원 다. 시스템기능고도화(50,000천원) · 50,000,000원×1식=50,000천원 라. 중소유통매장용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88,000천원) · 88,000,000원×1식=88,000천원 마. 시스템 홍보 지원(100,000천원) · 100,000,000원×1식=100,000천원 <u>4)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 감시체계 구축(779,000천원)</u> 가. 인건비(200,000천원) · 50,000,000원×4명=200,000천원 나. 출장비(32,000천원) · 160회×4명×50,000원=32,000천원 다. 시료구입비(100,000천원) · 1,000개×100,000원=100,000천원 라. 시험수수료(347,000천원) · 1,000개×347,000원=347,000천원 마. 안전기준 준수 가이드북 제작 및 홍보(100,000천원) · 100,000,000원×1식=100,000천원 <u>5)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지원(312,000천원)</u> 가. 시료구입 및 인계 인건비(260,000천원) · 52,000,000원×5명=260,000천원 나. 출장비(16,500천원) · 66회×5명×50,000원=16,500천원 다. 차량유지비-임차료(18,000천원) · 2대×660,000원×12개월=15,840천원 라. 차량유지비-유류비(5,415천원) · 2대×25,000km/대×108.3원/km=5,415천원 마. 운 영비(15,000천원) · 15,000,000원×1식=15,000천원 바. 조정재원 (△5천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500,000천원)		6)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500,000천원)
	가. 제품안전감시원 관리(120,000천원) · 6개 단체×20,000,000원=120,000천원		가. 제품안전감시원 관리(120,000천원) · 6개 단체×20,000,000원=120,000천원
	나. 제품안전감시원 수당(260,400천원) · 186명×28일×50,000원=260,400천원		나. 제품안전감시원 수당(260,400천원) · 160명×32.5일×50,000원=260,000천원
	다. 업무역량 및 후속조치 연계 강화(120,000천원) · 6개 단체×20,000,000원=120,000천원		다. 업무역량 및 후속조치 연계 강화(120,000천원) · 인건비 45,000,000원×2명=90,000천원 · 운영비 30,000,000원=30,000천원
	라. 조정재원 (-400천원)		라. 조정재원 (-4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용점포수(개)	목표	175,000	185,000	222,800	250,000	252,000	대형 유통매장(대형 마트, 백화점, 편의 점 등)은 사실상 보 급이 완료되어 중소 유통매장 도입 확산 중이며, 온라인몰은 매장수를 1개로 계 산하는 점 등을 고 려하여 수치 설정	Σ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점포	운용매장으로 부터 확인 (내부자료)
	실적	180,891	222,481	248,478	250,000 이상 (집계중)	-			
	달성도	103.4	122.5	111.5	100	-			
불법제품 현장 조사수(건)	목표	'23 신설			2,074	2,074	최근 2년간 예산동결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설정	Σ현장조사 건수	불법제품단속 실적보고서 (내부자료)
	실적				2,501	-			
	달성도				120.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p>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5,292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등 327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직접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9,016개 업체를 조사하여, 5,090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 실시 <p>* 형사고발(356), 지자체 통보(239), 판매금지요청(4,493), 인증기관통보 등(2)</p>
------	---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147,628건 모니터링 실시 - 불법이 의심제품 12,081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등 실시 <p>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180,891개 매장에 시스템 설치 - 안전성조사 결과 적발된 327개 제품을 실시간 원천 차단조치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19년(173,723개) → '20년(180,891개) <p>⑤ 안전기준 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준수 23개 품목 시장현황분석 - 9개 품목 1,507개 제품 안전실태조사 실시 - 사업자 홍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2만부) * 지하철역사(동대문역 등)를 중심으로 제도 홍보영상 송출('20.11.~12월) <p>⑥ 위해도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열안대, 어린이안전문 등 비관리품목 11개 품목 280개 제품에 대해 물리·화학적 위해도 평가 실시 → 6개 품목(온열안대, 어린이 안전문 등)에서 안전관리 필요성 및 안전기준 마련 필요) - 전국 소비자 3,000명 대상 이용실태조사 실시
2021	<p>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5,516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등 268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의심제품 신고건에 대해 12,852개 업체를 조사하고 7,542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712), 지자체 통보(594), 판매금지요청(6,228), 인증기관통보 등(8)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대해 144,651건 모니터링 실시 - 불법 의심제품 12,516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등 실시 - 온라인 리콜제품 감시 전담요원제 운영 <p>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222,481개 매장(누적)에 시스템 설치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20년(180,891개) → '21년(222,481개) <p>⑤ 안전기준 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준수대상 안전실태조사 : 510개 제품 안전실태조사 실시 - 부적합 사업자 점검 및 계도 : 424개 업체 - 안전기준준수대상 사업자 제도 홍보 : 1,584개 업체, 74개 협단체 <p>⑥ 위해도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식마스크, 저속전동이륜차 등 비관리 6개품목 105개 제품에 대해 물리·화학적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기준 제·개정 검토 시 활용근거 마련

2022	<p>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4,811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등 238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의심제품 신고건에 대해 7,889개 업체를 조사하고 3,941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746), 지자체 통보(610), 판매금지요청 등(2,579)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대해 127,847건 모니터링 실시 - 불법 의심제품 14,434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등 실시 - 온라인 리콜제품 감시 전담요원제 운영 <p>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248,478개 매장(누적)에 시스템 설치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20년(180,891개) → '21년(222,481개) → '22년(248,478개) <p>⑤ 안전기준 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준수대상 안전실태조사 : 780개 제품 안전실태조사 실시 - 부적합 사업자 점검 및 계도 : 519개 업체 - 안전기준준수대상 사업자 제도 홍보 : 1,812개 업체
2023	<p>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4,645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등 234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의심제품 신고건에 대해 9,744개 업체를 조사하고 4,516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637), 지자체 통보(643), 판매금지요청 등(3,231)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대해 161,483건 모니터링 실시 - 불법 의심제품 12,285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등 실시 - 온라인 리콜제품 감시 전담요원제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p>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S 시스템에 위해상품차단 SW 개발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 개발된 업체를 통해 중소 유통매장 확산(20개 매장 시범운영, 중소매장 400개 확산) <p>⑤ 안전기준 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준수대상 안전실태조사 : 800개 제품 안전실태조사 실시 - 부적합 사업자 점검 및 계도 : 522개 업체 - 안전기준준수대상 사업자 제도 홍보 : 1,911개 업체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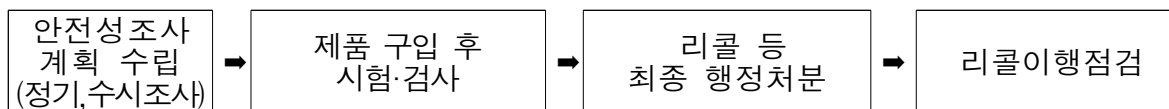
-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위해 제품 적발 및 유통을 차단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연간 4,500개 내외 제품 조사)
 -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안전성조사 실시
 - * 15년부터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분기별로 집중 반복조사
 -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지속 시행
 -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수시 안전성조사를 수행하여 소비자의 위해우려 조기 불식
-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
 -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리콜이행점검의 실효성 제고
 - 온·오프라인 점포를 대상으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지속 확산('24목표 252,000개사)하여 시중유통 차단
- **제품안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위해 우려제품에 대한 **유통시장 감시 강화**
 - 사전규제가 전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18.7.1 신설)에 대한 감시 강화
 - 소비자단체, 온라인쇼핑몰 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리콜제품 유통 차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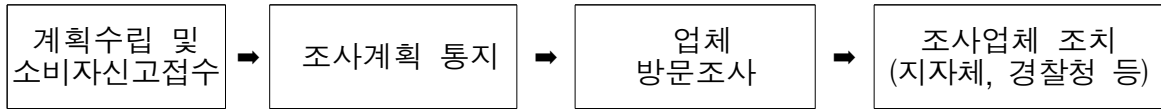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①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등)



- (계획 수립) 연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조사품목, 조사시기 등)
- (시험·검사) 무작위로 선정된 시판품을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적합 여부 조사
- (행정처분)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
 - 최초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및 재시험 등 신청 기회 부여 후 최종 행정처분
- (이행점검) 리콜이행 점검 후 후속조치 실시(고발, 보완명령 등)

② 불법·불량제품 단속, 리콜이행점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등)



- (신고접수) 국민신문고, 제품안전관리원 직접신고 등을 통해 민원 접수
- (계획통지) 조상대상업체에 조사계획 통지
 - 필요에 따라, 통지없이 불시 방문조사
- (방문조사) 신고건에 대해 실제 불법·불량제품 여부 확인
 - 확인서 및 증빙서류 확보
- (조사업체 조치) 불법제품 확인 시 고발 및 행정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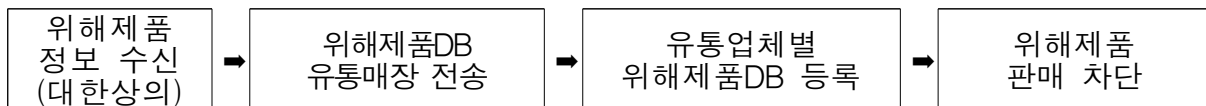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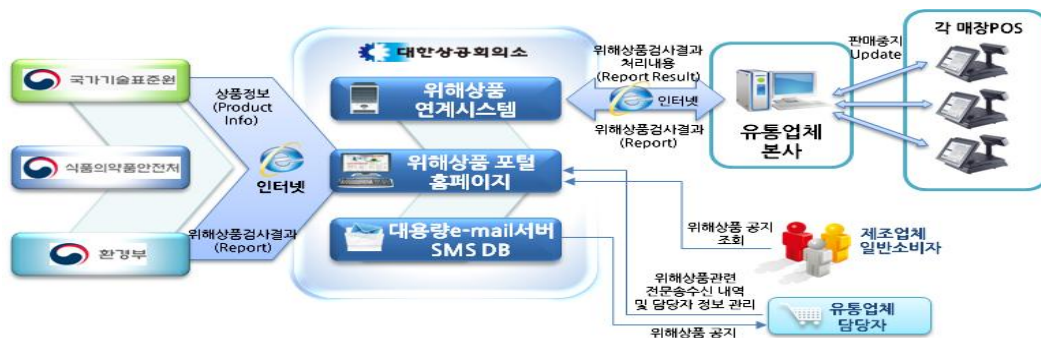
③ 안전모니터링 구성 운영 등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 등)

구 분	운영주체	기능 및 역할
주 관	국가기술표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감시 정책·지침 마련 · 분야별 모니터링 운영주체 선정 등
운 영	모니터링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운영(제품안전감시원포함) · 제품안전감시원 교육·관리 등
시장감시	모니터링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 유통제품의 위해정보 수집·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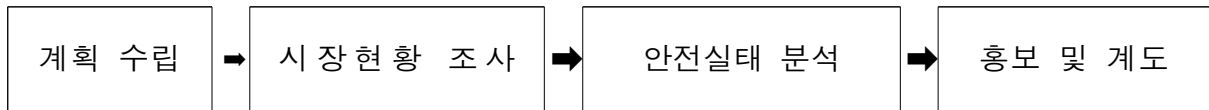
* 제품안전관리가 취약한 문방구,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KC 마크 미부착,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을 집중 단속

- (체계) 위촉된 제품안전감시원이 전국 오프라인 판매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품시장 감시 실시
- (모니터링대상) 불법제품(KC마크 미부착, 표시사항 미비 등) 및 리콜제품
 - 불법제품은 제품안전관리원에 통보·확인 후 형사고발 조치/시·도 알림
 - 리콜제품은 리콜이행점검팀에 인계하여, 조사 실시 후 보완명령 등 실시

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 등)



⑤ 안전기준준수대상감시체계 구축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등)



- (계획수립) 안전기준준수대상 24개 품목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 (시장현황조사) 품목별 제품 유통현황, 사업체 현황 등 시장현황 파악
- (안전실태분석) 품목별 업체규모별 안전기준 준수율, 부적합 부위 등 실태분석
- (홍보 및 계도) 취약원인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후 계도 실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7,091	7,587	8,204	9,150	10,364	
'23~'27		7,211	7,674	8,319	9,275	10,50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

국정감사
(산하기관-
제품안전관리원,
'23.10)

- (감사결과) ① 리튬이온배터리 등 불법제품,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선제적 실시 필요, ② 불법 어린이제품에 대한 후속조치 강화 및 불법 어린이제품 조사를 위한 예산, 인력 확보 필요
- (조치) ① 불법제품,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추진
② 불법 어린이제품에 대한 후속조치 강화 및 관련 예산 인력 확보 추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감사원 특정감사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결과) 산업인증제도 운영 실태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와 인증기관 등에 행정조치 의뢰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 행정조치 누락한 소관 지자체의 적절한 이행 방안 마련 ○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치 누락 방지절차 반영.개선 * 「불법위해 우려제품 감시조사 업무처리 지침」 개정.시행(20.11, 관리원) - “불법제품행정조치실무가이드” 지자체 배포(21.3) 및 담당자 교육(21.10, '22.6(예정) 등))
총리실 합동점검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2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의견 및 점수) : 87.5점, 보통 ○ (결과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분담 적정성, 사업방식의 적정성, 사업추진주체의 명확성,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등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 전체적인 집행실적은 95%를 상회하나 분기별 편차가 매우 큼 등
----------------------------------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위 해당 항목에 같이 기재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사후 안전성조사 및 리콜이행점검 등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소비자에게는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
 - * (해외동향) 美, 日, EU 등은 안전기준(기술기준) 등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활용하는 사후규제 확대 추세
- 리콜조치에 대한 철저한 리콜이행점검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리콜 제품을 사업자가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유도
-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통해 형사고발,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로 불법·불량 제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여 소비자를 보호
- 제품안전감시원을 통해 KC마크 미부착, KC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을 단속하여 불법제품 및 리콜제품의 시중유통을 방지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확산을 통해 위해상품으로 판정시 제품의 바코드, 인증번호 등을 활용 시중유통제품 차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보조사업 연장평가 (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의견 및 점수) 정상추진 / 87.4○ (결과 요약)<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법적근거와 국고지원의 필요성, 효과성과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적절히 추진- 재정사업평가 등과 연계운영하여 성과지표 목표 달성 및 지난 3년간 실집행률 100%로 사업관리도 적정
---------------------------------	--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6,872	-	6,872	-	-	-	6,872	6,870	99.9	99.9	-	2
2021	7,171	-	7,171	-	-	-	7,171	7,171	100.0	100.0	-	-
2022	7,091	△ 247	6,844	-	-	-	6,844	6,843	99.9	99.9	-	1
2023	7,211	-	7,211	-	-	-	7,211	7,211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3,486	3,486	3,486	3,486	0	3,486	3,486	0	0	100.0
2021	3,325	3,325	3,325	3,325	0	3,325	3,325	0	0	100.0
2022	3,245	3,245	3,245	3,245	0	3,245	3,245	0	0	100.0
2023. 12월기준	4,057	4,057	4,057	4,057	0	4,057	4,057	0	0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 특이사항 없음
2021	- 특이사항 없음
2022	- 제2차 추경 편성시 '22 본예산중 절감 가능한 경상경비 일부 감액: △ 247백만원 * 시험연구비 246백만원, 사업추진비 1백만원
2023	- 특이사항 없음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내역사업 단순 분리

(백만원)

구분	'23년 (A)	'24년 (B)	증감 (B-A)	주요내용 및 변경내용
② <내역사업 신규>리스트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불법·불량제품 단속) (리콜이행 점검)	7,211 1,595 531	7,211 1,595 531	- - -	<p>○ 기존 내역사업(민간경상보조사업) 단순 분리</p> <p>- (기존)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이행점검 → (변경) 불법·불량제품 단속 리콜이행점검</p> <p>* (변경사유)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이행점검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과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개 팀이 수행하던 업무였으나 업무량 증가에 따라 현재 2개팀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내용도 별개이나 정산은 1개팀이 수행 중임</p> <p>- 내역사업을 분리하여 사업수행자와 정산책임자를 일치시켜 사업수행의 책임성 및 정산 효율성 제고 필요</p>

사 업 명
(16) 안전제도기반조성(37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0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안전제도기반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안전제도 기반조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오유천 043-870-5410		박종훈 연구사 043-870-5412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경영지원실	민경윤 실장	070-5223-1429
제품안전 관리원 기관운영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오유천 043-870-5410	이동진 연구관	박종훈 연구사 043-870-5412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경영지원실	민경윤 실장	070-5223-142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안전제도기반조성	1,530	2,915	3,888	3,888	973	33.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49	1,549	1,530 [1,530]	-	19	2,915	2,915	2,877 [2,877]	2,915	2,877 [2,877]	-	38	3,888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600	600	586 [586]	-	14	600	600	575 [575]	600	575 [575]	-	25	586
·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857	857	854 [854]	-	3	957	957	944 [944]	957	944 [944]	-	14	957
· 제품안전정책· 정보 안내시스템운영	92	92	90 [90]	-	2	92	92	92 [92]	92	92 [92]	-	-	90
· 제품안전관리원 기관운영비	-	-	-	-	-	1,266	1,266	1,266 [1,266]	1,266	1,266 [1,266]	-	-	2,255
○ 비목별 분류(합계)	1,549	1,549	1,530 [1,530]	-	19	2,915	2,915	2,877 [2,877]	2,915	2,877 [2,877]	-	38	3,888
· 일 반 수 용 비 (210-01)	295	357	357 [357]	-	0	351	382	381 [381]	382	381 [381]	-	1	351
· 임차료(210-07)	41	14	13 [13]	-	1	41	48	48 [48]	48	48 [48]	-	-	41
· 재료비(210-11)	38	3	2 [2]	-	0	38	0	0 [0]	0	0 [0]	-	-	38
· 관 리 용 역 비 (210-15)	92	92	90 [90]	-	2	92	92	92 [92]	92	92 [92]	-	-	90
· 국내여비(220-01)	20	42	42 [42]	-	-	18	34	34 [34]	34	34 [34]	-	-	18
· 국 외 업 무 여 비 (220-02)	31	9	8 [8]	-	1	28	12	12 [12]	12	12 [12]	-	-	28
· 사 업 추 진 비 (240-01)	16	16	16 [16]	-	-	15	15	15 [15]	15	15 [15]	-	-	15
· 일 반 연 구 비 (260-01)	600	600	586 [586]	-	14	600	600	575 [575]	600	575 [575]	-	25	586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416	416	416 [416]	-	-	1,266	1,266	1,266 [1,266]	1,266	1,266 [1,266]	-	-	2,255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466	466	454 [454]	466	454 [454]	-	12	466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49	1,549	1,549 [1,530]	-	19	2,915	2,915	2,877 [2,877]	2,915	2,877 [2,877]	-	38	3,888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600	600	586 [586]	-	14	600	600	575 [575]	600	575 [575]	-	-	586	
- 일 반 연 구 비 (260-01)	600	600	586 [586]	-	14	600	600	575 [575]	600	575 [575]	-	-	586	
·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857	857	854 [854]	-	3	957	957	944 [944]	957	944 [944]	-	-	957	
-일반수용비(210-01)	295	357	357 [357]	-	0	351	382	381 [381]	382	381 [381]	-	-	351	
-임차료(210-07)	41	14	13 [13]	-	1	41	48	48 [48]	48	48 [48]	-	-	41	
-재료비(210-11)	38	3	2 [2]	-	0	38	0	0 [0]	0	0 [0]	-	-	38	
-국내여비(220-01)	20	42	42 [42]	-	-	18	34	34 [34]	34	34 [34]	-	-	18	
- 국 외 업 무 여 비 (220-02)	31	9	8 [8]	-	1	28	12	12 [12]	12	12 [12]	-	-	28	
-사업추진비(240-01)	16	16	16 [16]	-	-	15	15	15 [15]	15	15 [15]	-	-	15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416	416	416 [416]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466	466	454 [454]	466	454 [454]	-	-	466	
· 제품안전정책·정보 안내시스템 운영	92	92	90 [90]	-	2	92	92	92 [92]	92	92 [92]	-	-	90	
-관리용역비(210-15)	92	92	90 [90]	-	2	92	92	92 [92]	92	92 [92]	-	-	90	
· 제 품안전관리원 기관운영비	-	-	-	-	-	1,266	1,266	1,266 [1,266]	1,266	1,266 [1,266]	-	-	2,255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	-	-	-	-	1,266	1,266	1,266 [1,266]	1,266	1,266 [1,266]	-	-	2,2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품(전기용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생산·유통·사용 전(全) 과정에서 제품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제품 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제품안전정책·정보제공시스템 운영,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기관운영비 등의 사업 운영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고우려·사고 다발 제품의 안전사고 및 신기술·신수요 제품의 위해에 대응하여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기업·소비자를 위한 제품안전 교육과 콘텐츠 개발·보급 및 시장변화를 반영한 법·제도개선과 국제기구 교류·협력채널 구축
 - ① 제품안전 보급·확산 : 제품안전 사고예방 및 선제대응을 위한 대국민 제품안전 교육과 참여형 프로그램, 유공자 발굴·포상 및 국내외 제품안전 협의체·포럼 등 운영
 - ② 제품안전 문화확산 및 국제협력 : 제품안전관리제도 및 안전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명회 등 운영 및 제품안전 국제기구 간 교류·협력 채널 구축
 - (제품안전정책·제품안내시스템 운영) 제품사고, 리콜, 인증정보 등 제품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 유지 관리
 - (제품안전관리원 기관운영) 「제품안전기본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기관운영비 지원(민간경상보조)
- * 불법불량제품 단속 등을 위해 '18.9월 설립된 법정 기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 및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유통 또는 사용과정에서 제품안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2.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4.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5.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조사
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작성·관리
8. 제품사고조사분석 및 위해도평가
9. 기업 및 단계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제21조의4(운영재원) ① 관리원은 제21조의3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4. 6월 :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전부 개정
- '06.12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
- '07.12월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 개정
- '10. 1월 : 전기용품 제조자시험결과 인정제도 시행
- '10.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 '11.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 '11. 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2. 5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4. 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 6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및 시행
- '15. 1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5. 5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6. 1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정
- '16. 3월 :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공고
- '17. 1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17. 3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7.12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7.12월 :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8. 3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9.12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9.12월 :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공고
- '20. 7월 : 제4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22. 1월 :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공고
- '23. 4월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23. 9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794	1,579	1,549	2,915	3,88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사업 수혜자 : 기업·소비자 등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제품안전 관리원 기관운영비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2,255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23) 600백만원 → ('24요구) 586백만원, 14백만원 감액
- (요구)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제품의 안전사고에 대응한 제품 안전 정책개발 및 법(제도) 개선을 감안한 연구용역 예산 요구
 - (산출) 45백만원(연구용역 평균단가) × 13종(1년 필요 수요 과제)
- 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 ('23) 957백만원 → ('24요구) 957백만원, 전년동일
- (요구) 온라인쇼핑 구매(해외직구 등) 증가 등 제품환경 변화에 제품안전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소비자 대상 제품안전 교육·홍보 활동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①) 제품안전 교육·홍보 : ('23) 466백만원 → ('24요구) 466백만원, 전년동일
 - *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 체험형 프로그램 등 : 466백만원
 - . 기업·소비자 대상 제품안전관리제도 등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 : 138백만원
 - . 제품안전 인식제고를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공모전 운영 등 : 201백만원
 - . 제품안전 협의체·포럼 구성·운영 및 제품안전관리 유공자 발굴·포상 : 107백만원
 - . 정보관리 운영 및 지원 : 20백만원
 - (산출②) 제품안전 문화확산 및 국제협력 등 : ('23) 491백만원 → ('24요구) 491백만원, 전년동일
 - * 제품안전 관련 회의(자문위, 자료제작·인쇄, 강사수당 등), 재료비, 국제회의 등
 - . 일반수용비 351, 임차료 41, 재료비 38, 국내여비 18, 국외업무여비 28, 사업추진비 15백만원
- ③ 제품안전정책·정보제공 시스템운영 : ('23) 92백만원 → ('24요구) 90백만원, 2백만원 감액
- (요구) 제품위해정보, 리콜정보 등 제품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kr) 유지·보수 등 관리 용역 비용 : 90백만원
- ④ 제품안전관리원 기관운영비 : ('23) 1,266백만원 → ('24요구) 2,255백만원, 989백만원 증액
- (요구)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제품안전관리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서의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영·지원 인력 등 인건비 및 사무공간, 정보화 컨설팅 등 경상비 예산 증액 요구
 - (산출) 경영·지원인력 인건비 및 경상비(임차비, 운영비 등) 및 정보화컨설팅 등 : 2,255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15	○ 일반수용비(210-01) : 350,641천원 가. 제품안전 자료제작, 제도홍보 등(35,497천원) · 설명회 자료인쇄서 및 홍보물제작 : 3,549천원x10종=35,497천원 나. 회의 및 강사수당(130,000천원) · 공산품 안전기준개발회의의 수당 : 150천원x20회x10명=30,000천원 · 전기용품 안전기준개발회의의 수당 : 150천원x20회x10명=30,000천원 · 제품안전자문위원회 회의수당 : 150천원x20회x10명=30,000천원 · 기술세미나 강사수당 등 : 200천원x20회x10명=40,000천원 다. 제품조사 및 평가수수료(180,000천원) 라. 조정 : 5,144천원 ○ 임차료(210-07) : 41,000천원 가. 제품안전 국제 및 국내워크숍(41,000천원)	3,888	○ 일반수용비(210-01) : 350,543천원 가. 제품안전 자료제작, 제도홍보 등(40,547천원) · 설명회 자료인쇄서 및 홍보물제작 : 3,682천원x11종=40,511천원 나. 회의 및 강사수당(130,000천원) · 제품 안전기준개발회의의 수당 : 150천원x40회x10명=60,000천원 · 제품안전자문위원회 회의수당 : 150천원x20회x10명=30,000천원 · 기술세미나 강사수당 등 : 200천원x20회x10명=40,000천원 다. 제품조사 및 평가수수료(180,000천원) 라. 조정 : △4천원 ○ 임차료(210-07) : 41,000천원 가. 제품안전 국제 및 국내워크숍(41,000천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장 임차 : 41,000천원○ 재료비(210-11) : 38,000천원 가. 안전기준개발용 시험제품구입 : 38품목x1,000천원=38,000천원○ 관리용역비(210-15) : 92,000천원 가. 제품안전정보포털시스템 유지 및 보수관리 : 1식 x 92,000천원○ 국내여비(220-01) : 18,338천원 가. 공산품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발 : 10,132천원 나.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 평가방법 개발 : 10,696천원 다. 조정 : △2,490천원○ 국외업무여비(220-02) : 28,369천원, 외화 \$8,784 가. 제품안전국제협력(28,369천원, \$8,784)<ul style="list-style-type: none">• CPSC 국제회의 참석 : 8,182천원(\$2,196)• ICPHSO 국제회의 및 심포지움 참석 : 12,272천원(\$3,294)• OECD CCP 및 소비자협력 국제회의 참석 등 : 12,272천원(\$3,294)• 조정 : △4,357천원○ 사업추진비(240-01) : 14,652천원 가. 공산품 안전기준 개정간담회 : 30천원x9회x20명=5,400천원 나. 전기용품 개정간담회 : 30천원x9회x20명=5,400천원 다. 제품안전정책개발 간담회 : 30천원x9회x20명=5,400천원 라. 제품안전의날 사업추진 : 10천원x1회x100명=1,000천원 마. 조정 : △2,548천원○ 일반연구비(260-01) : 600,000천원 가.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12종x50,000천원=600,000천원○ 민간경상보조(320-01) : 1,266,000천원 가. 기관운영관리(1,266,00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인력 인건비 및 경상비 : 1식x1,266,000천원=1,266,000천원○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66,000천원 가. 민간위탁(466,00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안전 교육·홍보 등 : 1식x466,000천원=466,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장 임차 : 41,000천원○ 재료비(210-11) : 38,000천원 가. 안전기준개발용 시험제품구입 : 38품목x1,000천원=38,000천원○ 관리용역비(210-15) : 90,000천원 가. 제품안전정보포털시스템 유지 및 보수관리 : 1식 x 90,000천원○ 국내여비(220-01) : 18,338천원 가. 제품 안전기준 개발 : 9,442천원 나.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 평가방법 개발 : 8,957천원 다. 조정 : △61천원○ 국외업무여비(220-02) : 28,467천원, 외화 \$8,784 가. 제품안전국제협력(28,369천원, \$8,784)<ul style="list-style-type: none">• CPSC 국제회의 참석 : 8,204천원(\$2,196)• ICPHSO 국제회의 및 심포지움 참석 : 12,306천원(\$3,294)• OECD CCP 및 소비자협력 국제회의 참석 등 : 12,306천원(\$3,294)• 조정 : △4,349천원○ 사업추진비(240-01) : 14,652천원 가. 제품 안전기준 개정 간담회 등 : 30천원x14회x20명=8,400천원 나. 제품안전정책개발 간담회 등 : 30천원x9회x20명=5,400천원 다. 제품안전의 날 사업추진 : 10천원x1회x100명=1,000천원 라. 조정 : △148천원○ 일반연구비(260-01) : 586,000천원 가.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13종x45,000천원=586,000천원○ 민간경상보조(320-01) : 2,255,000천원 가. 기관운영관리(2,255,00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인력 인건비 및 경상비 : 1식x2,255,000천원=2,255,000천원○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66,000천원 가. 민간위탁(466,00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안전 교육·홍보 등 : 1식x466,000천원=466,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제품안전포털 정보이용자수(명)	목표	35,700	-	-	-	-	-	-	-
	실적	33,729	-	-	-	-			
	달성도	94.4	-	-	-	-			
제품안전교육 수료자수(명)	목표	신규	2,300	-	-	-	-	-	-
	실적	-	3,688	-	-	-			
	달성도	-	160.3	-	-	-			
제품안전정보	목표	신규	64,500	-	-	-	-	-	-

제공건수(건)	실적	-	70,081	-	-	-			
	달성도	-	108.7	-	-	-			
국제표준 채택건수(건)	목표	-	신규	81	82	83	최근 4년간 국제표준 채택건수 목표치(최고치)와 예산 반영하여 목표 설정	국제표준 채택건수(건)	국제표준화 기구 홈페이지 및 통계 수치
	실적	-	-	81	82	-			
	달성도	-	-	100.0	100.0	-			
위해상품판매차 단시스템운용점 포수(개)	목표	-	신규	222,800	250,000	-	-	-	-
	실적	-	-	248,478	250,000	-			
	달성도	-	-	111.5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p>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제적 제품안전기준 정비(LED마스크, 배터리 안전기준 등 총 32건) - 전문성있는 안전관리 추진, 기술·환경변화 대응 및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3개년 계획, '20~'22) - 리콜이행점검 상세규정 마련 등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 제품사고추이, 기업부담완화 등 대외적 요건을 고려한 품목별 안전기준 조정(ESS안전관리를 위한 PCS KC 인증, 야외용 운동기구 관리품목 지정 등 시행규칙 개정3회) -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안전 보호 강화를 위한 운용요령 개정(KC인증 비대면 현장평가 심사방식 도입 등 총6회) <p>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1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제품안전혁신포럼: 미ASTM, ISO COPOLCO, OECD, EU집행부 등 국내외 정부 및 국제기구 제품안전 권위자를 초청, '코로나19시대 온라인 제품의 안전 확보' 주제로 포럼 진행.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ZOOM 및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506명 접속 - 포럼 운영위원회 및 제도·기술분과위원회 운영(운영2회, 제도3회, 기술3회)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유튜브 채널(Kats_safetykorea) 신설, 19개 콘텐츠 업로드 - 트럭용 타이어 리콜명령,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등 제품 안전관련 카드뉴스(70회), 영상(19회), 온라인 이벤트(5회) 진행 - 제품안전 인식개선을 위한 OECD 캠페인에 참여, 유명 유튜버(JJ튜브) 섭외하여 “안전한 온라인 판매 완구 구매” 유튜브 홍보(12.17.~) - 어린이 제품 캠페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13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학
------	---

	<p>부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림장 앱(키즈노트) 광고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제품안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진행, 홍보효과를 위해 ‘광화문1번지’ 활용하여 일반인 심사 진행(10월) - 「2020 대학생 제품안전 홍보단」(10.12.~12.18., 100명)을 운영, 제품안전 콘텐츠 확산 및 청년층의 제품안전 관심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 블로그 707개, 인스타그램 228개, 페이스북 19개, 유튜브 10개 등 총 964개 제품안전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장관상 1명 등 총 15명 시상 <p>○ 제품안전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총 40회 3,385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상공인의 제품안전 역량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5회(164명) * 품목별 안전기준 등 유통업체 임직원 교육 13회(쿠팡, 다이소 등 695명) *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비자 교육 13회(1,695명), 자체 소비자 교육 3회(154명) * 해외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관리 영상, 사업자 교육용 리콜이행 매뉴얼, 공산품 표시사항 가이드, 제품사고조사이야기 등 8종 제작·배포 등 <p>○ “2020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11.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옥외광고, 일간지 보도자료 등 적극적 포상홍보 및 안내를 통한 포상신청 접수 확대(‘19년 61건 → ‘20년 87건, 훈장1·포장1 등 50점 포상) - 제품안전분야 유공자 포상 등 본행사 및 어린이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제품안전관리 세미나 등 부대행사 운영(코로나로 참석자 100명 제한) <p>○ 지자체 협력관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대면교육이 어려워져 “불법제품 행정조치 실무 가이드” 제작·배포로 전환(243개 지자체 담당자에 배포) <p>○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PHSO(국제소비자안전보건기구) 심포지엄 및 회의 참석(2월, 11월) - OECD 제품안전작업반 회의 참석(3월·11월, 온라인) : 제품안전 정책 수립 권고 최종안 승인, 글로벌 제품안전 인식개선 캠페인 확정 등 - ISO 소비자정책위 투표(4월·8월·9월·10월, 온라인): 소비자 사고 조사, 신규 PC 설립, 청소년 캠프 위험 관리 등 - TBT위원회(8월9월) : 한-베트남, 한-중 TBT위원회에 참여, 한국의 제품안전관리제도 소개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정보 27,401건, 안전성조사정보 4,513건, 사고조사정보 54건 등 총 31,969건의 정보 제공 - 일평균접속자수 : (‘18) 35,398명 → (‘19) 34,592 → (‘20) 33,729
--	---

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제품안전 빅데이터 구축 로드맵 개발, 비관리제품 분류 가이드라인 개발 등 학술연구용역 21개 과제를 통한 안전제도 기반 조성
- 제4차 제품안전종합계획 내 정보분석, 제품출시 전관리, 제품출시 후관리, 기반조성 등 4대전략 21개 중점과제 적시추진(실적점검 5월, 12월)
- 비대면 안전인증 심사절차 도입, 전자적 인증표시제품 대상 확대, 인증기관 KOLAS 중복평가 개선 등 규제 개선 추진
 - * 리콜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축(2개월→1개월), 반복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심사방식 도입
- 스타트업 기업지원을 위한 MoU 체결('21.4.), 모듈형 인증도입('21.9.),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인증면제('21.10.) 등 기업부담 완화
- 국제적 수준과 동등한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표준 부합화 및 기업애로 해소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기준 정비(총 35건)

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 제품안전 노출위험 및 영향력이 높은 청소년 대상 5개교 700여명 교육
-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등 품목별 안전기준 관련한 소상공인, 유통업자, 기업체 대상 13회 900여명 교육
- 소비자단체 연계한 소비자 교육 14회 1,800여명 교육(노약자 대상 3회 110명 포함)
- 리콜이행매뉴얼북, 표시사항 가이드북 등 제품안전 관련 가이드북 등 교육자료 게시(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
- 제품안전 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 “2021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 일시/장소 : 11.23.(화) / COEX 컨퍼런스룸

*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최소인원 130여명 참석, 자체 제품안전정보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 제품안전관리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훈포장 등 정부포상

* 접수/포상 : ('20년) 87건 → ('21년) 98건 / ('20년) 42점 → ('21년) 98점

** 중소기업 포상수여율 : ('20년) 40.0% → ('20년) 23.1% → ('21년) 46.3%

- 어린이제품 관심제고와 참여유도를 위한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장관상 등 시상

- 제품안전 관련 온라인콘텐츠 홍보활동을 위한 대학생 홍보단 우수단원 장관상 등 시상

- 제품 안전성조사 및 검증을 위한 민간 자문위원(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 위촉장 수여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정기안전성 조사 및 해외리콜 정보 카드뉴스 등 제품안전 정보 및 정책관련 카드뉴스 제작·SNS 게시 40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조회수 : ('19년) 61만건 → ('20년) 106만건 → ('21년) 330만건 - 제품안전 관련 법령, 정책 등 온라인콘텐츠 개발 및 대학생의 제품안전 관심과 참여를 위해 대학생 홍보단 운영 * 대학생 제품안전 온라인콘텐츠1,050여건 제작 및 SNS게시 -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 * 접수(350여건, 8~9월) → 전문가심사(9~10월) → 국민심사(광화문1번가, 10월) → 시상(30점, 11월, 제품안전의 날) ** SafetyKorea 계간지 소개('21년 겨울호) 및 전국 어린이 안전체험관 순회 전시 -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가정 내 리콜제품 확인 및 제품안전관리제도, '21.12.) <p>○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관련 국제기구(OECD, ISO 등)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안전 기술기준의 제·개정 동향 파악을 위해 개최 - 일시/장소 : 11.23.(화) / COEX 컨퍼런스룸 - 주제 : IoT, AI 등 융복합 제품의 안전관리 대응 및 향후 운영방향 - 진행방식 : 해외연사(Zoom 접속), 참가자(실시간 유튜브 접속) * 제품안전정보센터 유튜브 중계(www.youtube.com/kats_safetykorea) <p>○ 국제협력 활동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회의) OECD WPCPS 등 소비자제품안전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제품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공조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의안전기구) 참석(2월, 6월), OECD WPCPS(제품안전작업반) 회의 참석(4월), ISO COPOLCO(소비자정책위) 참석(5월), 국제소비자컨퍼런스(6월) - (양자회의)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 회의(5월), 한-중 FTA TBT 위원회 개최 등 양자회의를 통해 제품안전분야 협력 방안 논의 - OECD('21.11), 글로벌제품안전포럼('21.11) 등 제품안전 관련 회의에 참석·개최를 통해 국제기구와 협력 확대 * 제품안전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시행 중('21.5~) - 최신 국제표준 동향을 파악하여 안전기준 개정 계획 수립 * IEC 일치화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상 품목 33건 개정, 62건 폐지(~'21.12.) - 유아용 섬유제품 한-EU FTA TBT 협의*('21.07., 비대면) 및 전기용품 KC인증 관련 주한프랑스상의 업무협력**('21.09.) *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시험인증 현황 등 관련 현황 공유 ** 우리측 안전관리제도 소개 및 IECEE CB Scheme 등의 정보 제공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SafetyKorea.kr)」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기업의 제품안전정보 수집 및 안전정보 활용을 위한 제품안전 정보센터 유지·관리 * 소비자 위해 사례 접수현황 ('19년) 23,367건 → ('20년) 19,945건 → ('21년) 16,361건 ** 홈페이지 1일 평균 접속건수 : ('19년) 34,592건 → ('20년) 33,729건 → ('21년) 50,887건 제품안전정보(OPEN API) 제공건수 : ('19년) 13.6만건 → ('20년) 20.7만건 → ('21년) 25.3만건
2022	<p>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제품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 마련” 등 13개 연구용역과제를 통한 정책연구 및 제도정비

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 제품안전교육이 미비했던 청소년 및 취약 계층(노인, 장애인 등) 대상의 제품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제품안전 순회교육 실시(15회 883명)
 - 위해제품 확인 및 신고 등을 위한 제품안전정보센터 활용 교육을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일반 국민 대상 제품안전 교육 실시(18회 1,923명)
 - 사업자 인식개선을 통한 불법·불량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중·소상공인 및 기업체* 대상 온라인교육 11회(총 1,054명) 실시
 - 제품안전 정책 인터뷰를 통한 제품안전관심 유도 및 KC 인증 중요성 전파 (연합뉴스TV “출근길인터뷰”, ‘22.11.9.)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게시
 - 제품안전정보센터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제품안전 정책, 동향 및 리콜정보 등 콘텐츠 제작 확대 (‘21) 59회 → (‘22) 82회
 - 유튜브 채널 내 “가정내 리콜제품찾기” 등 영상 2건 게시(조회수 11만회)
 - 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 제품안전관리제도, 리콜제도 및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소개 등 지킴이 운영을 통해 콘텐츠 408개 제작 및 674회 배포
 - 활동우수자에 대한 장관상 1점 등 표창(‘22.11.8. 제품안전의 날 수여)
 -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
 - 공모전 접수 확대를 위해 알립장애포 및 공모전 사이트 홍보로 공모전 접수 확대 (‘21) 354점 → (‘22) 674점
 - 공모전 우수작품에 대한 장관상 2점 등 표창(‘22.11.8. 제품안전의 날 수여)
 - “2022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
 - 일시/장소 : ‘22.11.8.(화) / 코엑스
 - 제품안전관리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훈포장 등 정부포상
 - * 접수 건수 : (‘21) 98건 → (‘22) 107건
 - ** 포상 규모 : 정부포상 6점 등 42점 시상
 - 산업단지공단, 시험인증기관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및 제품안전정보센터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포상 안내(접수 107건)
 - 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 및 어린이 제품안전그림공모전 우수자 시상
 - 제품안전성 강화 기업의 우수 사례 발표(대통령표창 기업)
 - 제품안전혁신 포럼 운영
 - 제품안전제도 및 안전성 기술에 대한 제도·분과위원회 4회 개최
 - 2022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 온라인 개최
 - :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효율적 제품안전 관리’에 대한 주제로 미국 CPSC, 호주 ACCC, 중국 DPAC, 영국 등 해외 제품안전 전문가 참여 (22.11.8. 코엑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제품안전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부담완화 추진
 - (제3차 어린이제품 기본계획)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여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 * ❶ 안전사고예방, ❷ 불법제품 근절, ❸ 기업·소비자 지원강화, ❹ 안전

	<p>관리 인프라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선) 물가·환율·금리 3고 시대,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개발·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❶ 공장심사 수수료를 한시적 인하('22.11.) ❷ 2륜 전기자전거, 운동용 슬라이더 불합리한 요건 개선 등 ❸ 영세기업지원을 위한 '無니켈 도금 공정' 보급, 제품안전관리제도 가이드 보급 등 ○ (안전기준) 개인형이동장치(PM),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등 안전기준 마련, 완구 등 수입제품 표시사항 개선, 운동용 안전모 시험법 단일화, 전기용품 국제표준 부합화 등 규제 정비(56건) ○ 국표원-소비자단체 간 간담회 운영('22.5., '2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1개 기관, '22년 제품안전 관련 주요계획 공유 ○ 국제협력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포럼, OECD 제품안전정책 회의 등 다자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동향 파악(OECD WPCPS 정례회의) - 한-미, 한-일 등 양자 협의 채널을 기반 국내 안전 정책품질 제고 * 국표원-CPSC(美), 국표원-경산성(일) 등 5차례 회의 참석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SafetyKorea.kr)」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기업의 제품안전정보 수집 및 안전정보 활용을 위한 제품안전 정보센터 유지·관리 * 1일 평균 접속건수 : ('21년) 50,887건 → ('22년) 35,000건 ** 제품안전정보센터 OPEN API 1일 평균활용 현황 : ('21년) 25.3만건 → ('22년) 30만건
2023	<p>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국내외 정책동향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등 16개 연구용역과제를 통한 제품안전 정책 및 제도정비 연구 <p>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소비자 및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제품안전교육 ('22) 44회 3,860명 → ('23) 72회, 5,147명 ○ 제품안전 문화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채널 내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등 영상 3건 게시(조회수 5.3만회) - 제품안전정보센터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제품안전 정책, 동향 및 리콜정보 등 콘텐츠 제작 확대 ('22) 82회 → ('23) 96회 - 제품안전 정책홍보 및 대국민 제품안전 관심 유도를 위한 TV인터뷰(연합 뉴스TV, 1차관님 “행사리포트”, '22.11.9. 녹화, 11.10.방송) ○ 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관리제도, 리콜제도 및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소개 등 지킴이 운영을 통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22) 674회 → ('23) 726회 - 활동우수자에 대한 장관상 1점 등 표창('23.11.9. 제품안전의 날 수여) ○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전 접수 확대를 위해 알립장애포 및 공모전 사이트 홍보로 공모전 접

	<p>수 확대 ('22) 674점 → ('23) 1,55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전 우수작품에 대한 장관상 2점 등 표창('23.11.9. 제품안전의 날 수여) <p>○ “2023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 '23.11.9.(목) / 건설회관 - 제품안전관리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훈포장, 장관표창 등 45점 포상 <p>* 접수 건수 : ('22) 107건 → ('22) 127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 및 어린이 제품안전그림공모전 우수자 시상 - 제품안전성 강화 기업의 우수 사례 발표(동탑산업훈장 엘지전자(주)) <p>○ 제품안전 혁신포럼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혁신포럼 운영위원회('23.9.26.,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제도·기술분과 통합위원회(23.12.11.~14. 건설회관) - 2023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 개최('23.11.9., 건설회관) <p>○ 국표원-소비자단체 간 간담회 2회 개최('23.4.14./12.14. 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23년 제품안전 관련 주요계획 공유 <p>○ 신제품 출현 및 온라인시장 확대 등 제품환경변화를 위한 제품안전 관리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23.4.), 제품안전기본법, 전안법 등 제품안전관련 법령 정비 및 안전기준 정비(71건) <p>○ 국제기구 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포럼, OECD 등 다자회의, 한-미 등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제품안전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정책 품질 제고 추진(7회) <p>* 국표원-CPSC 간 양자회의('23.1.12.) 및 세미나('23.7.16.), OECD 소비자제품 안전작업반 정례회의('23.4.11.~13. / 11.13.~15. 비대면), ISO COPOLCO 총회('23.5.23.~25.), GS1 CEO 간담회('23.9.6.) 등</p>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SafetyKorea.kr)」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기업의 제품안전정보 수집 및 안전정보 활용을 위한 제품안전 정보센터 유지·관리 <p>④ 제품안전관리원 기관운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부서(기획조정, 전략기획, 인사 등) 인건비 지원 ○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확장 이전 - (구)서울 금천구에서 (신)서울 서초구로 확장·이전하여 근무환경 개선
--	--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품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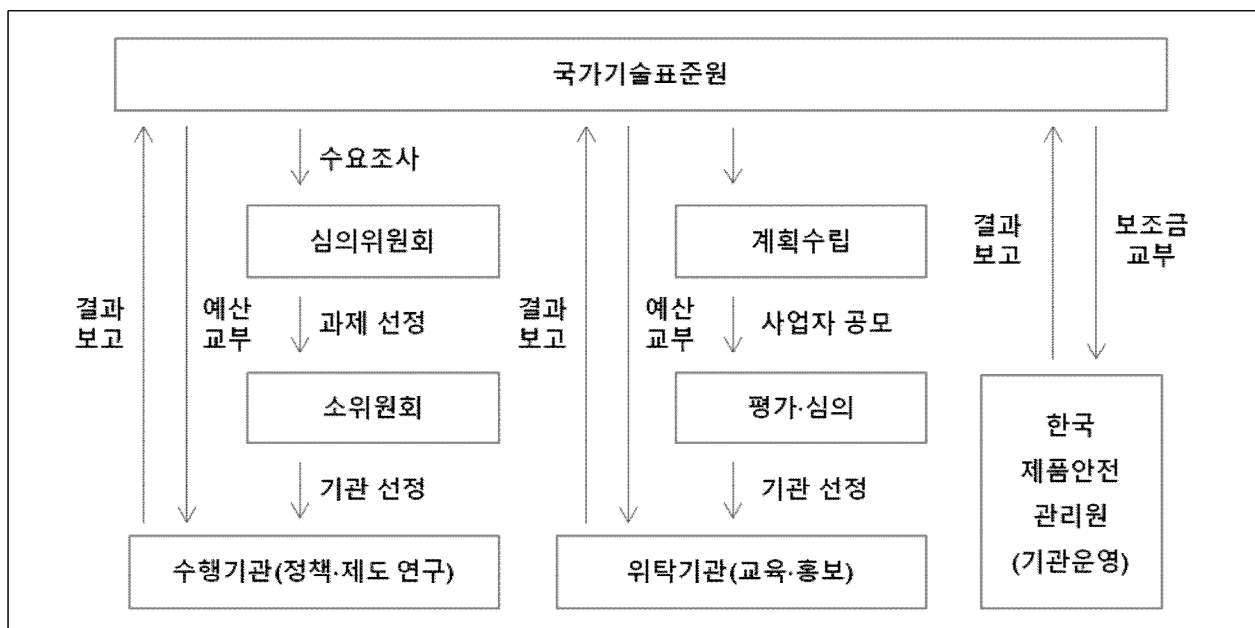
- 국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 과제 연간 12건 이상 수행

- 제품안전문화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확대
 - 신기술 제품 및 소비자 요구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전문가·인증 기관·업계 간 자문회의, 공청회 등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 안전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제품안전관리 선진화 등을 위하여 제품안전 국제 기구(OECD, CPSC 등) 간 교류·협력 채널 구축
 - 기업·소비자 대상 제품안전 교육을 연간 3,300명 이상 실시하고 선진화된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 확대
 - 제품의 인증, 리콜정보 등 제품안전 정보를 카드뉴스 등 콘텐츠로 제작 및 SNS 채널에 게시하고 참여형 프로그램(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 그림공모전 등)을 통해 제품 안전의식 제고
- 제품안전정보시스템(SafetyKorea.kr) 운영
 - 국민의 제품사고 예방 및 소비자·생산자의 제품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제품 안전 정보 OPEN API 활용 일 평균 30만건 이상 제공
- 제품안전관리원 기관운영비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공공기관으로서 재정 안정성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제품안전 업무 추진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1,549	2,915	1,427	1,399	1,385	
'23~'27		2,915	4,263	4,434	4,567	4,56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3년 예산 산중위 검토보고서('22.11.)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재정사업자율평가('20~'21년)

- 제품안전포털 방문건수(일평균)는 제품안전에 대한 사업자/국민의 인식/민감도를 보여주는 유의미한 지표인바, 방문건수 감소 추세가 다른 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접근 때문인지 여부,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간접접근을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20년, 보통)

- 제품안전 사업목적에서 언급한 법/제도 정비 혹은 정책개발 등에 대한 성과지표 추가가 바람직함 ('21년, 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재정사업자율평가) '20, '21회계연도 평가결과에 따라 제품안전 법령·제도개선 등 성과지표 검토 및 추후 반영 예정

*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사업규모 30억원 미만 사업)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제품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 제품 시장 환경과 사회·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지속 추진
- 제품안전문화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확대
 - 제품안전관리 선진화와 안전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등 제품안전 관련하여 국제기구(OECD, CPSC 등) 간 협력 관계 구축
 - 산업·기술 발전 및 사회·환경의 변화 등 소비자 요구에 출현하는 제품, 시장 환경을 반영한 제품에 대한 산업·전문가·인증기관과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 기업·소비자 대상 제품안전 교육 및 참여형 홍보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콘텐츠를 개발하고 SNS에 게시하여 제품 안전의식 제고
-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kr) 운영
 - 제품안전정보포털 DB와 연계하여 제품의 안전인증, 리콜 등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Open API 서비스 추진하여 제품안전 관련 기업 및 소비자·유관기관에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제품 안전사고에 예방
- 제품안전관리원 기관운영비
 -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 및 기관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예산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보조사업연장평가('22년)
 - (결과) 사업방식변경(상위과제와의 연계성 강화 추진, 질적 성과지표로의 개선)
 - (조치) 사업간 연계성 강화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에서 직접수행(민간위탁)으로 사업방식 변경('23년 예산안 반영)

12) 부처 전의사항

- 동 사업은 제품(전기용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생산·유통·사용 과정에서 제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품 안전기본법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추진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안전성조사, 리콜 등 제품안전관리 체계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위해성분 검출, 화재·감전사고 등 위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기에 국민생활 안전 보호를 위한 동 사업 예산 지원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따른 기술의 발전 및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안전 정책이 필요하고 국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제품 안전관리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동 사업 추진 필요
- 또한, 제품의 다변화와 제품 기대수명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의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고, 기업·소비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등 대국민 제품안전정책과 정보에 대한 교육과 홍보·안내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1,794	-	1,794	-	±41	-	1,794	1,753	97.7	97.7	-	41
2021	1,579	-	1,579	-	±27	-	1,579	1,496	94.7	94.7	-	83
2022	1,549	-	1,549	-	±84	-	1,549	1,530	98.8	98.8	-	19
2023	2,915	-	2,915	-	±54	-	2,915	2,877	98.7	98.7	-	38

□ 출연·보조사업 등 실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486	486	486	486	-	486	486	-	-	100
2021	450	450	450	450	-	450	450	-	-	100
2022	416	416	416	416	-	416	416	-	-	100
2023. 12월	1,266	1,266	1,266	1,266	-	1,266	1,266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 ±41백만원, 회의수당(28백만원) 및 재료비(5백만원) 부족으로 임차료(△33백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내여비(8백만원) 부족으로 국외여비(△8백만원)로 조정 - 불용 : 41백만원, 국외여비(30백만원) 미집행(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회의 온라인 전환) 및 학술연구용역(9백만원)과 관리용역비(2백만원) 낙찰차액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 ±27백만원, 회의수당(20백만원) 부족으로 임차료(△20백만원)로 조정하고 국내여비(7백만원) 부족으로 국외여비(△7백만원)로 조정 - 불용 : 83백만원, 학술연구용역(20백만원)과 관리용역비(2백만원) 낙찰차액, 국제 회의·대면회의 제한에 따른 국외여비(26백만원), 대면교육·회의 제한에 따른 임차료와 제품 분석·조사 등 시료채취 제한으로 재료비 등 집행잔액(35백만원)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 ±84백만원, 자문료, 회의수당 등 일반수용비 부족(62백만원)으로 임차료(△27백만원), 재료비(△35백만원)를 조정하고 국내여비 부족(22백만원)으로 국외여비(△22백만원)를 조정 - 불용 : 19백만원, 학술연구용역(14백만원)과 관리용역비(2백만원) 낙찰차액, 국제 회의, 대면교육·회의 제한에 따른 국외여비(1백만원), 임차료(1백만원) 등 집행잔액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 ±54백만원, 사업수행을 위한 자문료, 회의 등 일반수용비(31백만원), 임차료(7백만원) 부족으로 재료비(△38백만원)를 조정하고 국내여비 부족(16백만원)으로 국외여비(△16백만원)를 조정 - 불용 : 38백만원, 학술연구용역(25백만원)과 민간위탁사업비(12백만원) 낙찰차액 및 일반수용비(1백만원) 등 집행잔액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3.9.26.)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220-02	10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220-01	제품안전관리 제도정비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으로 국외여비 조정
조정 ("23.11.8.)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220-02	6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220-01	제품안전관리 제도정비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으로 국외여비 조정
조정 ("23.12.12.)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210-11	7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210-07	제품안전 관련 간담회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임차료 부족으로 재료비 조정
조정 ("23.12.18.)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210-11	31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210-01	제품안전 정책홍보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재료비 조정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첨부] 참고

첨부 1

제품안전관리제도

- **(개요)** 제품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출시 전·후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시장출시 前)**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은 **위해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장 진입 및 유통 허용 등 **사전안전관리**

*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준수)로 관리

** 정부는 안전관리품목 282개에 대한 610여개의 안전기준을 관리(안전기준은 강제 의무사항)

< 안전관리 수준, 절차 및 품목현황 >

관리수준	인증 등 준수절차	안전관리 품목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① 안전 인증 (45개 품목)	제품수입 절차 → 신청 → 안전인증기준 → 제품검사 → 공장심사 → 인증서 발급 (인증번호) → 인증마크	36	5	4
② 안전 확인 (107개 품목)	제품수입 절차 → 신청 → 시험검사기준 → 제품검사 → 안전인증기준 → 신고서류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번호) → 인증마크	65	26	16
③ 공급자적합성 (106개 품목)	제품수입 절차 → 자체 또는 제3자 시험기관 → 제품검사 → 인증마크	75	17	14
④ 안전기준준수 (24개 품목)	제품수입 절차 → 자율시험 → 제품검사 → 인증마크	-	24	-
총 282개 품목		176	72	34

- **(시장출시 後)** 시중 제품에 대한 **위해요인 확인** 시 제품수거, 유통 차단, 개선권고, 소비자주의보 발령 등 **사후안전관리**

* 안전성 조사, 제품사고조사, 불법제품조사, 해외리콜제품 대응 등

01	안전성조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법적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조사후 조치(리콜처분, 개선권고 등)
02	제품사고조사	동일 유형의 제품사고 재발방지 및 위해 확산방지 등을 위해 사고발생 제품에 대한 사고원인규명 조사후 조치(소비자주의보 등)
03	불법제품조사	미인증·허위표시 제품에 대해 불법제품 신고 내용확인 및 제품정보 검색 등 조사후 조치(판매금지 등)
04	해외리콜제품대응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정보 분석후 조치(수입통관 차단 등)

첨부 2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년)

비전

국민생활 안심을 위한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목표	소비자의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안전인증 품목수) 45 개('22년) (170개 세부품목) → 10% 축소 조정('25년)
		(안전기준 정비) 52 건('22년) → 전수 검토·개정('25년)
		(제품사고조사) 73 개사('22년) → 150 개사('25년)
		(위해차단시스템) 235,129 개('22년) → 246,000 개('25년)
		(제품안전 모니터링) 127,847 건('22년) → 150,000 건('25년)
		(제품안전정보 활용) 350,000 건/일('22년) → 380,000 건/일('25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1	[제도]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관리대상 규제수준 정비 ② 안전기준 전면 재검토 및 일제 정비 ③ 민간주도 안전관리 기반 마련 ④ 국제적 환경변화 신속 대응
2	[사전]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관리제품 규제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 정비 ② 신기술·신수요제품 안전관리 ③ 사회적 배려계층 안전관리 지원 ④ 제품 리스크평가 활성화
3	[사후] 촉촉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데이터 기반 제품사고조사 추진 체계 구축 ② 위해상품 유통·판매 차단 강화 ③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④ 온라인쇼핑몰 위해우려 유통제품 안전관리
4	[기반]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외 제품안전 채널 협력 확대 ②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 ③ 맞춤형 제품안전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 ④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역량강화

사 업 명
(17)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관리(3732-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보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6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 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박해범	최준환	
		제품안전정보과	043-870-5430	043-870-543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1,244	1,865	1,679	1,679	△186	△1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44	1,244	1,227	-	17	1,865	1,865	973	1,865	1,747 (1,747)	-	118	1,679	
· 사고조사제도이행	578	578	573.3 (573.3)	-	4.7	1,005	1,005	477 (477)	1,005	913 (913)	-	92	904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220	220	217.9 (217.9)	-	2	314	314	126 (126)	314	301 (301)	-	13	284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 관리	446	446	435.6 (435.6)	-	10.4	546	546	370 (370)	546	433 (433)	-	13	491	
○ 비목별 분류(합계)	1,244	1,244	1,227 (1,227)	-	17	1,865	1,865	973 (973)	1,865	1,747 (1,747)	-	118	1,679	
· 일반수용비(210-01)	29.6	29.6	29.6 (29.6)	-	-	30	30	4 (4)	30	30 (30)	-	-	20	
· 시험연구비(210-13)	95	95	92 (92)	-	3	95	95	38 (38)	95	61 (61)	-	34	95	
· 사업추진비(240-01)	5.4	5.4	5.4 (5.4)	-	-	5	5	3 (3)	5	5 (5)	-	-	5	
· 일반연구비(260-01)	483	483	481.3 (481.3)	-	1.7	859	859	403 (403)	859	803 (803)	-	56	758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631	631	618.6 (618.6)	-	12.4	876	876	525 (525)	876	848 (848)	-	28	80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44	1,244	1,227 (1,227)	-	17	1,865	1,865	973 (973)	1,865	1,747 (1,747)	-	118	1,679	
· 사고조사제도이행	578	578	573.3 (573.3)	-	4.7	1,005	1,005	477 (477)	1,005	913 (913)	-	92	904	
- 시 험 연 구 비 (210-13)	95	95	92 (92)	-	3	95	95	38 (38)	95	61 (61)	-	34	95	
- 일 반 연 구 비 (260-01)	483	483	481.3 (481.3)	-	1.7	859	859	403 (403)	859	803 (803)	-	56	758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51	51	36 (36)	51	49 (49)	-	2	51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220	220	218 (218)	-	2	314	314	126 (126)	314	301 (301)	-	13	284
- 일 반 수 용 비 (210-01)	29.6	29.6	29.6 (29.6)	-	-	30	30	4 (4)	30	30 (30)	-	-	20
- 사 업 추 진 비 (240-01)	5.4	5.4	5.4 (5.4)	-	-	5	5	3 (3)	5	5 (5)	-	-	5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85	185	183 (183)	-	2	279	279	119 (119)	279	266 (266)	-	13	259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446	446	435.6 (435.6)	-	10.4	546	546	370 (370)	546	533 (533)	-	13	491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446	446	435.6 (435.6)	-	10.4	546	546	370 (370)	546	533 (533)	-	13	49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 안전관리)** 전기·생활·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사고조사(사고조사 결과 결함발견 시 리콜 등 후속조치), 소비자 위해정보·수집·분석·보급 및 통관단계에서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등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제품사고조사 제도 이행)** 제품사고·결함신고제품에 대한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결함 제품에 대해 리콜 등 행정조치를 하고, 사고다발 제품 등 안전취약제품에 대한 심층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안전기준 보완 등의 전주기적 제품안전관리 수행

*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제품사고조사를 통해 결함확인 시 제10조, 11조에 따른 제품 수거 등의 행정조치 추진

*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을 통해 연평균 80여 건의 제품사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연평균 약 2.5만여 건의 제품사고 관련 위해정보가 수집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제품인증정보, 리콜정보, 사고·위해정보 등 각종 제품 안전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국민(소비자, 기업, 관련단체 등)에게 보급**을 통해 소비자 안전과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 제고

* (정보원) 안전인증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 (위해정보 보급)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 제품안전매거진 연 4회 발간, “제품사고이야기 WHY” 연 1회 발간 등

- **(통관단계 수입제품안전관리)** 국표원-관세청간 정부3.0협업으로 통관단계에서 전기·생활·어린이제품에 대한 선별·조사를 통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여 해외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 *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확정 (‘14.8.21)
→ ’14.9월 시범사업 시작으로 국표원-관세청 간 협업으로 통관단계 수입제품안전관리 실시
- * ’23년 국표원-관세청 간 협업검사를 통해 9,282건의 수입제품을 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2,669건(291만점)에 대해 국내반입 사전 차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 이행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의2.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한다)
6.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여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2. 제10조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 2의2.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한 수거등의 조치에 관한 정보 및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정보
 - 2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3.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한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이행

-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불법·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관 전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11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4.2.26 “제2차 제품안전종합계획” 발표, '14. 3.5 “제품안전정보센터” 개소
 - '14.8.21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확정
 - '14.9.15 “수입제품 안전관리” 시범사업 실시 (인천본부세관 협업사무소 설치)
 - '15.3.25 “수입제품 안전관리” 본사업 실시 (4개 세관 확대 : 인천본부, 인천공항, 부산, 평택)
 - '15.5.18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제9조의3 신설: 수입제품 안전성조사 근거마련)
 - '15.9.23 “행자부-관세청-국표원-환경부-식약처간 정부3.0 협업검사체계” 협약식
 - '16.1.27 “4개 세관 협업사무소” 상시운영(평택세관 파견 인원 고정배치)
 - '17. 1월 “세관협업사무소 파견인원” 증원(4→5명)
 - '19. 7월 “세관협업사무소 파견인원” 증원(5→6명, 인천본부, 인천공항, 인천신항, 부산 평택)
 - '23. 4월 “세관협업사무소 파견인원” 증원(6→7명, 인천본부·공항, 인천신항, 부산 부산신항 평택)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820	862	1,244	1,865	1,67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제품사고조사 이행 내역 : (2023년) 1,005 → (2024년) 904백만원, (△10%)

- 사고접수제품 결함조사 등(95백만원)
 - 가) 시험비 : 47.5백만원 = 95건 × (40만원(시험수수료)) + 95건×10만원(재료비))
 - 나) 출장비 및 수당 : 47.5백만원 = 95건×2명×10만원 + 95건×2명×15만원
- 사고다발제품 원인 평가·분석(758백만원) : 47.5백만원×16개 품목
-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 등 지원 (51백만원, 전년동) : 7.3백만원×7건
 - 1) 제품개선비 : 34백만원=34건×80만원(개선자문비) + 34건×20만원(재료비)
 - 2) 출장비 : 6.8백만원=34건×2명×10만원
 - 3) 조사자 등 수당 : 10.2백만원 = 34건×2명×15만원

< '23년도 : 1,005백만원 >

- 사고접수 제품 결함여부 조사 등 : 95백만원
 - 1) 시험비 : 47.5백만원=95건×40만원(시험수수료) + 95건×10만원(재료비)
 - 2) 출장비 : 19백만원=95건×2명×10만원
 - 3) 조사자 등 수당 : 28.5백만원 = 95건×2명×15만원
 - * 조사범위 :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및 전기제품을 포함하여 타부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모든 생활 가정용품
- 사고다발제품 등에 대한 원인분석·평가 이행(정기조사) : 859백만원
 - 1) 사고다발 제품, 안전취약 제품 등에 대한 평가·분석 : 47.7백만원 * 18개 품목
-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 등 지원 : 51백만원
 - 1) 제품개선비 : 34백만원=34건×80만원(개선자문비) + 34건×20만원(재료비)
 - 2) 출장비 : 6.8백만원=34건×2명×10만원
 - 3) 조사자 등 수당 : 10.2백만원 = 34건×2명×15만원

(2)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2023년) 314 → (2024년) 284백만원, (△10%)

- 정보수집 및 제품사고정보센터 운영·홍보비 : 73백만원
 - 1) 제품사고정보센터 운영 : 48백만원 = 4백만원×12월
 - 2)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및 업무협의 : 25백만원 = 6.25백만원×4건
- 사고정보, 리콜정보, 위해정보, 제품안전제도 등 제품안전정보 보급 : 142백만원
 - * 각종 제품안전 분석 정보를 소비자단체, 지자체, 연구소, 기업 등에게 오프라인으로 보급(약 1,300부 배포)하고 일반대중에게는 웹진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여 소비자 제품안전강화와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 제고를 유도
 - 1) 계간SafetyKorea발간·보급 : 58백만=14.5백만×4회
 - 2) 웹진 제작 및 운영 : 84백만원=12개월×7백만원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 : 69백만원
 - * 해외 리콜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제품 국내 유통업체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 자발적 리콜 등의 조치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주의·환기하는 서비스
 - 1) 제품안전 경보서비스 : 69백만원 = 69백만×1건

< '23년도 : 314백만원 >

■ 정보수집 및 제품사고정보센터 운영·홍보비 : 83백만원

- 1) 제품사고정보센터 운영 : 48백만원 = 4백만원*12월
- 2)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 35백만원
 - 사고조사건의 홍보 등 : 30.0백만원 = 7.5백만원*4건
 -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등을 위한 업무협의 : 5.0백만원 = 19.8만원*25회

■ 사고정보, 리콜정보, 위해정보, 제품안전제도 등 제품안전정보 보급 : 162백만원

* 각종 제품안전 분석 정보를 소비자단체, 지자체, 연구소, 기업 등에게 오프라인으로 보급(약 1,300부 배포)하고 일반대중에게는 웹진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여 소비자 제품안전강화와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 제고를 유도

- 1) 계간SafetyKorea발간·보급 : 68백만=17백만*4회
- 2) 웹진 제작 및 운영 : 84백만원=12개월*7백만원
- 3) 웹진시스템 구축 : 10백만원=1회*10백만원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 : 69백만원

* 해외 리콜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제품 국내 유통업체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 자발적 리콜 등의 조치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주의·환기하는 서비스

- 1) 제품안전 경보서비스 : 69백만원 = 69백만*1건

(3)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2023년) 546 → (2024년) 491 백만원, (△10%)

■ 인증대상 제품 인증 여부 실물확인 및 안전성조사(제품시험) 수행 : 546백만원

- 1) 시험·평가비 : 142백만원=284건*40만원(시험수수료) + 284건*10만원(운송비)
- 2) 인건비 : 318백만원=17.2만원*22일*12개월*7명
- 3) 통관단계 협업조사시스템 운영 : 31백만원=31백만원*1건

< '23년도 : 546백만원 >

■ 인증대상 제품 인증 여부 실물확인 및 안전성조사(제품시험) 수행 : 546백만원

- 1) 시험·평가비 : 197백만원=394건*40만원(시험수수료) + 394건*10만원(운송비)
- 2) 인건비 : 318백만원=17.2만원*22일*12개월*7명
- 3) 통관단계 협업조사시스템 운영 : 31백만원=31백만원*1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적발율 (단위: %) (하향지표)	목표	26	24	-	-	-	-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적발율 = 적발건수/선별 조사 건수 × 100	안전성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22.1	24.0	-	-	-			
	달성도	115	100	-	-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건수 (단위: 건)	목표	-	-	4,700	5,640	6,204	최근 3년 간 실 시한 수입제품 선별조사 건수를 평균하여 '24년 목표치 산출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수입제품의 선별조사 건수	안전성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	-	7,318	-	-			
	달성도	-	-	15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54건 접수 중 개선조치 5건, 불법조사 조치 12건 등 -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 수행(2개 과제)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4회) - “제품사고이야기 WHY” (사고조사 사례집)발간 발간 (1회) - 해외 리콜제품 2,200건을 모니터링하여 구매대행 중지 33건, 자발적 리콜 7건, 불법조사 의뢰 32건, 해외리콜 보고 5건 등 조치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사업 실시 : 총 5,495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215건(386만점) 적발
2021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80건 접수 중 불법조사 조치 13건 등 50건 조치 -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1건) 및 「제품사고조사 운영 개선방안」 연구과제 등 총 3건 수행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4회) - “제품사고이야기 WHY” (사고조사 사례집)발간 발간 (1회) - 해외 리콜제품 2,278건을 모니터링하여 구매대행 중지 26건, 자발적 리콜 6건, 불법조사 의뢰 13건, 해외리콜 보고 11건 등 조치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사업 실시 : 총 6,691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603건(318만점) 적발
2022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46건 진행, 불법조사의뢰(7건) 등 24건 조치(‘22.7월) - 제품사고조사 관련 연구과제(2건) 수행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2회)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말 누계 실적 : 총 7,318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2,019건 적발(27.6%), 수입차단 442만점
2023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2회)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말 누계 실적 : 총9,282건을 선별 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2,669건 적발, 수입차단 291만점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사고 다발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기업 및 소비자에 제공함으로써 동일사고 재발을 방지(제품사고조사: 90건 이상)
- 각종 사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안전기준 및 표준 등에 반영토록 추진하여 제품안전제도의 효율성 제고 기대(행정조치: 3건 이상)
-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적발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강화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선별·조사 : 6,500건 이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제품사고조사)** 국가기술표준원이 사고정보 수집·관리·보급 및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업무를 이행하고, 제품사고조사센터(11개 지정) 및 시험인증기관은 제품결함여부 평가 (제품시험) 업무 이행

<사고조사 및 리콜조치 이행체계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소비자 신고 및 사고정보 수집	국가기술표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제품사고 신고 접수 ■ 사고사례 정보수집·분석
↓		
② 현장조사	국가기술표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센터(외부전문가) 선정 ■ 사고내용 확인, 사고제품 수거 등
↓		
③ 제품 결함조사 (제품시험)	사고조사센터 (외부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모델 제품 구매(필요시) ■ 안전기준 등에 따른 제품시험 실시
↓		
④ 사고조사 결과 종합	국가기술표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및 결함조사 결과 분석 ■ 종합 보고서 작성
↓		
⑤ 결과조치 (리콜 등)	국가기술표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 결과 통보(신고인) ■ 결함제품 수거 등의 조치(명령, 권고 등)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소비자, 기업 등에 보급

* 인증정보, 소비자위해정보, 안전성조사결과정보 등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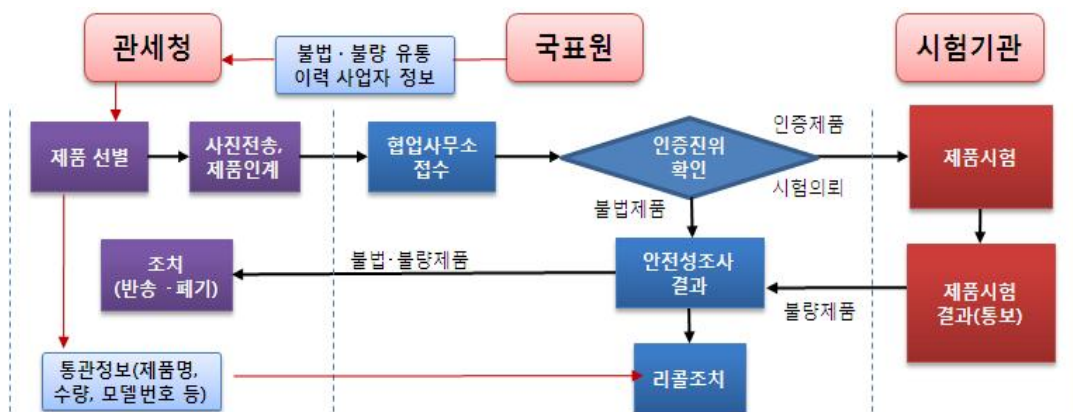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업무 흐름도 >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사고조사 사례 홍보 등	국가기술표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사례 분석 ■ 제품사고조사 사례집 발간·배포
제품사고정보센터 운영	공모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사업계획수립 → 위탁사업 공고(조달청) → 기술제안평가(국표원) 및 입찰가격평가(조달청) → 일상감사(산업부) → 낙찰자 선정(조달청) → 계약체결(조달청)
제품안전 정보보급 (Safety Korea 계간지 발간·보급)	공모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사업계획수립 → 위탁사업 공고(조달청) → 기술제안평가(국표원) 및 입찰가격평가(조달청) → 일상감사(산업부) → 낙찰자 선정(조달청) → 계약체결(조달청)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 전파 (해외 리콜정보 모니터링)	공모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사업계획수립 → 위탁사업 공고(조달청) → 기술제안평가(국표원) 및 입찰가격평가(조달청) → 일상감사(산업부) → 낙찰자 선정(조달청) → 계약체결(조달청)

- (수입제품안전관리)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선별검사시스템(C/S)”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수입사업자를 선별하고,

- 선별된 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 조치 또는 국표원에서 리콜조치

<협업 업무 흐름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1,244	1,865	2,150	2,370	2,370	
'23~'27		1,865	1,950	2,040	2,090	2,13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목표)** 제품안전 정보수집을 기반으로 사고조사제도를 이행(사고조사 후 결함제품 리콜)하고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 반입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관리제도 이행
 - **(제품사고 조사제도이행)** 제품사고 및 위해제품 조사를 통해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 등 행정조치
 - **(소비자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한 제품 위해 정보·인증정보 수집·분석 및 보급 체계 구축, 통합 제품안전정보망 운영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차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단위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 (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 88 ○ (결과 요약)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이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

12) 부처 건의사항

<p>- (제품사고조사 제도 이행) 국내에서 매년 3만 건 이상의 제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융·복합 제품의 경우 사고 원인 분석에 많은 시험 비용*이 소요되어 연례적으로 예산 과소 편성**, 향후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함</p> <p>* '16년 갤럭시노트7(70백만원), '17년 아웃라스트 섬유제품(90백만원), '19년 ESS(1,350백만원), '20년 애플워치 SE(73백만원), '21년 차량용 보조배터리(73백만원) 등</p>	
<p>-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제공) 사고정보, 해외리콜, 인증정보 등 위해정보를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제공*(실시간 반응형 온라인 웹진)하여 선제적인 국민 안전 확보가 필요하나 매년 감소 추세로 예산 편성**, 향후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함</p> <p>*포털 일평균 접속건수 및 API활용건: ('20) 241,505 → ('21) 303,993 → ('22) 354,309</p>	
<p>-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수입제품 증가*에 대응하여 불량·불법 제품 적기 차단, 통관 前 안전성 조사의 회피 수단인 우회 통관 방지를 위한 세관 파견 인력 증원이 필요하나 연례적으로 예산 과소 편성**, 향후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함</p> <p>* 협업조사(건) : ('19) 4,759 → ('20) 5,495 → ('21) 6,691 → ('22) 7,318건 →('23) 9,282</p>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820	-	820	-	-	-	820	813	99.1	99.1	-	7
2021	862	-	862	-	-	-	862	841	97.6	97.6	-	21
2022	1,244	-	1,244	-	-	-	1,244	1,226.7	98.6	98.6	-	17.3
2023	1,865	-	1,865	-	-	-	1,865	1,747	93.6	93.6	-	118

☐ 출연·보조사업 등 실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민간위탁사업비 6백만원, 일반연구비 1백만원)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민간위탁사업비 20.3백만원, 일반연구비 0.7백만원)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민간위탁사업비 12.4백만원, 일반연구비 1.7백만원, 시험연구비 3백만원)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민간위탁사업비 28백만원, 일반연구비 56백만원, 시험연구비 34백만원)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8)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37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7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오재철		김용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50		043-870-5455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안전기반팀	송지환 팀장	070-5223-142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어린이제품안전관리 생태계조성	1,070	1,857	1,543	1,543	△314	△1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70	1,070	1,070	-	-	1,857	1,857	1,843 [1,843]	1,857	1,843 [1,843]	-	-	1,543
·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 역량강화	570	570	570	-	-	520	520	520 [520]	520	520 [520]	-	-	468
·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기반조성	230	230	230	-	-	230	230	230 [230]	230	230 [230]	-	-	-
·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70	270	270	-	-	320	320	320 [320]	320	320 [320]	-	-	288
·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	-	-	-	-	787	787	773 [773]	787	773 [773]	-	-	787
○ 비목별 분류(합계)	1,070	1,070	1,070	-	-	1,857	1,857	1,843 [1,843]	1,857	1,843 [1,843]	-	-	1,543
· 일 반 수 용 비 (210-01)	50	50	50	-	-	50	50	50 [50]	50	50 [50]	-	-	10
· 임차료(210-07)	30	30	30	-	-	30	30	30 [30]	30	30 [30]	-	-	-
· 일 반 연 구 비 (260-01)	140	140	140	-	-	140	140	140 [140]	140	140 [140]	-	-	-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830	830	830	-	-	830	830	830 [830]	830	830 [830]	-	-	746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787	787	773 [773]	787	773 [773]	-	-	787
· 자 산 취 득 비 (430-01)	20	20	20	-	-	20	20	20	20	20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70	1,070	1,070	-	-	1,857	1,857	1,843 [1,843]	1,857	1,843 [1,843]	-	-	1,543
· 어린이제품안전 확보역량강화	570	570	570	-	-	520	520	520 [520]	520	520 [520]	-	-	468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570	570	570	-	-	520	520	520 [520]	520	520 [520]	-	-	468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어린이제품안전 교육기반조성	230	230	230	-	-	230	230	230 [230]	230	230 [230]	-	-	-
- 일 반 수 용 비 (210-01)	40	40	40	-	-	40	40	40 [40]	40	40 [40]	-	-	-
- 임차료(210-07)	30	30	30	-	-	30	30	30 [30]	30	30 [30]	-	-	-
- 일 반 연 구 비 (260-01)	140	140	140	-	-	140	140	140 [140]	140	140 [140]	-	-	-
- 자 산 취 득 비 (430-01)	20	20	20	-	-	20	20	20	20	20	-	-	-
· 어린이제품안전 교육프로그램운영	270	270	270	-	-	320	320	320 [320]	320	320 [320]	-	-	288
- 일 반 수 용 비 (21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260	260	260	-	-	310	310	310 [310]	310	310 [310]	-	-	278
·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	-	-	-	-	787	787	773 [773]	787	773 [773]	-	-	787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787	787	773 [773]	787	773 [773]	-	-	78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을 유지·증진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 강화)** 어린이제품에 대한 선제적 유해성 검증 분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통해 제품안전확보 역량을 강화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신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성을 검증·분석하여 안전관리 방안 도출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통해 범국민적 안전의식 고취
 - 안전교육 선도학교: 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학교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안전교육: 권역별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제품 관련 위해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품안전 체험시설 구축

-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영세·소기업의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 관련 기업의 시험인증 비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 5, 27, 31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3.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대책
4.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기준 및 실시에 관한 사항
5.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 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4.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15. 6월 시행)
- '16. 2월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공고
- '17년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사업 시작
- '19. 11월 “제2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공고
- '22. 11월 “제3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공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990	1,070	1,070	1,857	1,543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어린이(13세 미만) 및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468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운영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278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3) '2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 ('23) 520백만원 → ('24요구) 468백만원, 52백만원 감액

- (요구) 신규 유해물질 모니터링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수행 필요에 따른 사업유지 등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468백만원(12개품목 × 39백만원 = 468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0,000	○ 민간경상보조(310-01) : 520,000천원 가.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520,000천원) · 13개품목 × 40,000천원 = 520,000천원	468,000	○ 민간경상보조(310-01) : 468,000천원 가.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468,000천원) · 12개품목 × 39,000천원 = 468,000천원

②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23) 320백만원 → ('24요구) 288백만원, 32백만원 감액

- (요구) 안전교육 연구학교,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 확대 및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유지를 위하여 전년 대비 증액 요구
- (산출) 안전교육 연구학교 135백만원(15개교 × 9백만원 = 135백만원)
찾아가는 안전교육 63백만원(18개교 × 3.5백만원 = 63백만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90백만원(1개소 × 90백만원 = 90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0,000	○ 민간경상보조(320-01) : 310,000천원 가. 안전교육 연구학교 (150,000천원) · 15개교 × 10,000천원 = 150,000천원 나. 찾아가는 안전교육 (60,000천원) · 20개교 × 3,000천원 = 60,000천원 다.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100,000천원) · 1개소 × 100,000천원 = 10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000천원 가. 찾아가는 안전교육 물품 구입 (10,000천원) · 20개교 × 500천원 = 10,000천원	288,000	○ 민간경상보조(320-01) : 288,000천원 가. 안전교육 연구학교 (135,000천원) · 15개교 × 9,000천원 = 135,000천원 나. 찾아가는 안전교육 (53,000천원) · 18개교 × 3,000천원 = 53,000천원 다.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90,000천원) · 1개소 × 90,000천원 = 9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000천원 가. 찾아가는 안전교육 물품 구입 (10,000천원) · 20개교 × 500천원 = 10,000천원

③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 ('23) 787백만원 → ('24요구) 787백만원

- (요구) 어린이제품 영세기업의 시험인증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요기업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증액 요구
- (산출) 어린이제품 관련 시험인증 비용 및 컨설팅 지원 등 787백만원(500개사 × 1.574백만원 = 787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87,0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787,000천원 가.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787,000천원) · 500개사 × 1,574천원 = 787,000천원	787,0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787,000천원 가.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787,000천원) · 500개사 × 1,574천원 = 787,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참가자(단위: 명)	목표	4,500	5,000	5,500	6,100	6,710	매년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조정 해왔으며,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 전년 목표의 약 10%를 높인 최대 목표치 설정	Σ 연간 교육이수 인력	연구학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참여자 명단
	실적	6,069	7,079	10,006	15,091	-			
	달성도	134.9	141.6	181.9	247.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학용품, 어린이용 안경테 등 10개 품목 및 유해원소 함유량 확인방법 개발 등 검증·분석 진행 - (제조기업 지원)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인증비용 지원(115개) - (안전교육교재 등 콘텐츠 개발) 국내·외 어린이 안전 교육 관련 콘텐츠 조사·분석을 통해 어린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강사 대상 교육 실시 - (어린이제품 선도학교) 17개(유치원 8개, 초등학교 9개) 지정·운영(3,563명) -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45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방문교육 추진(2,506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안전체험관(울산)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구축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유아용침대, 유아용섬유제품 등 13개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 적정성 검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개발 등 진행 - (제조기업 지원)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인증비용 지원(90개) - (안전교육교재 등 콘텐츠 개발) 국내·외 어린이 안전 교육 관련 콘텐츠 조사·분석을 통해 어린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4건)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강사 대상 교육 실시(255명) - (어린이제품 선도학교) 20개(유치원 10개, 초등학교 10개) 지정·운영(4,032명) -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50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방문교육 추진(3,047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한국안전체험관(강원)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구축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 바닥재 등 13개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 적정성 검토 및 신규 유해물질 조사 등 진행 - (제조기업 지원)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인증비용 지원(131개) - (안전교육교재 등 콘텐츠 개발) 국내·외 어린이 안전 교육 관련 콘텐츠 조사·분석을 통해 어린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4건)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강사 대상 교육 실시(272명) - (어린이제품 선도학교) 27개(유치원 24개, 초등학교 3개) 지정·운영(6,473명) -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55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방문교육 추진(3,533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부산)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구축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유아용 섬유제품(유아 침구류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추가), 어린이공동안전기준(간이시험방법 추가) 등 13개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 적정성 검토 및 신규 유해물질 조사 등 진행 - (제조기업 지원)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인증비용 지원(557개) - (안전교육교재 등 콘텐츠 개발) 국내·외 어린이 안전 교육 관련 콘텐츠 조사·분석을 통해 어린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3건)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강사 대상 교육 실시(196명) - (어린이제품 선도학교) 33개(유치원 26개, 초등학교 7개) 지정·운영(9,966명) -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69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방문교육 추진(5,125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충북안전체험관(청주)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구축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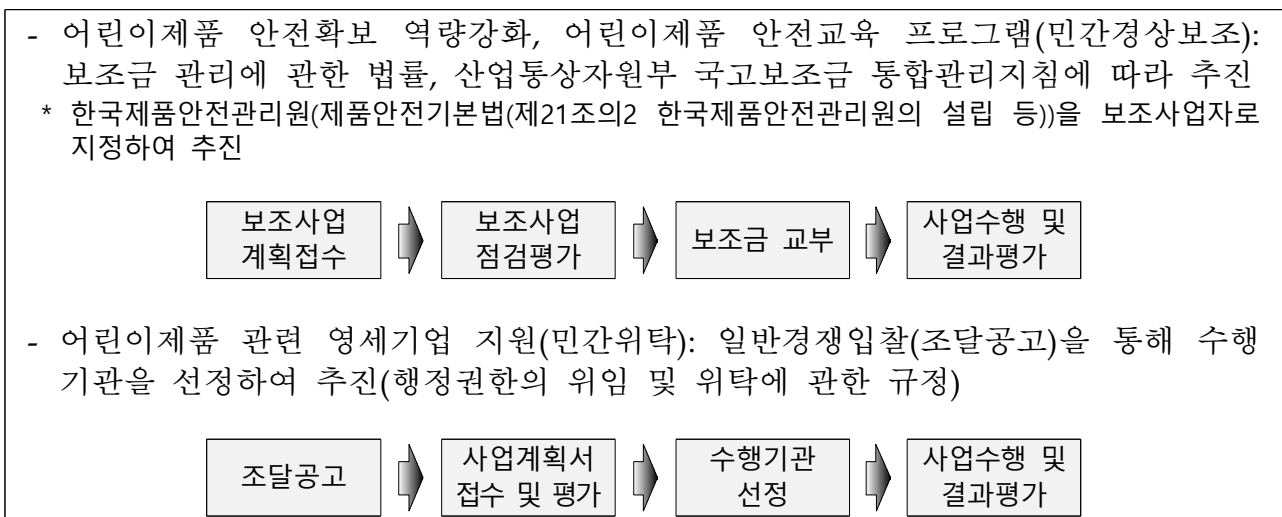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안전 기반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품안전 사고의 선제적인 예방·관리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조사·분석 등을 통한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제품안전 인식 함양
- (어린이제품 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영세기업의 시험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수요기업 대 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인증 비용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1,070	1,070	1,200	1,217	1,284	
'23~'27		1,857	2,805	3,580	4,355	5,13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지적사항 반드시 업데이트
-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 보고서명·감사명 등 출처 기재

* 지적사항 말미에 괄호()로 기관명 및 출처 표시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o 어린이 안전체험관 미구축 지역 어린이를 위한 이동형 체험시설 마련을 위해 예산 증액 필요(황운하 의원(더민주))
 - (조치) 예산 증액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 o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의 권역별, 소외지역 등 고려 설치 필요(고민정 의원(더민주))
 - (조치) '21년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지자체 선정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강원태백, 한국안전체험관) 선정
 - o 기업 수요대비 지원기업 비율이 저조(20% 수준)하여 예산 확대 필요('22년 결산)
 - (조치) '23년 예산 확보(신규내역, 787백만원)
 - o 어린이제품 교육프로그램이 대국민 대상으로 확대 필요('23년 예산 산중위 검토 보고서('22.11.))
 - o 내역사업인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2억 8,800만원)은 교육 대상 및 체험시설 확대를 위해 11억 7,000만원 증액 필요(노용호 위원('23년 산중위))
 - o 내역사업인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7억 8,700만원)은 신청기업 수 대비 지원기업 수가 제한적이므로,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의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위해 3억 1,500만원 증액 필요(노용호 위원('23년 산중위))
 - o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을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치할 필요(정청래 위원('23년 산중위))
 - o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등 다양한 사업방식 개선계획을 마련할 필요(정청래 위원('23년 산중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재정사업자율평가('19~'21년)

-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가 인정되나, 성과목표의 적극성 확인이 어렵고, 학회, 언론보도 등 사업성과 우수성은 다소 부족함('19년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 제품안전포털 방문건수(일평균)는 제품안전에 대한 사업자/국민의 인식/민감도를 보여주는 유의미한 지표인바, 방문건수 감소 추세가 다른 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접근 때문인지 여부,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간접접근을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20년 재정사업자율평가, 보통)
- 제품안전 사업목적에서 언급한 법/제도 정비 혹은 정책개발 등에 대한 성과 지표 추가가 바람직함 ('21년 재정사업자율평가, 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단위사업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20, '21회계연도)에 따라 제품안전 법령·제도개선 등에 대한 성과지표 추가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 강화

- 어린이제품에 대한 신규 유해물질 모니터링, 선제적 유해성 검증·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통해 제품안전확보 역량을 강화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선제적 예방 및 제품안전 인식 함양

○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 영세·소기업의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어린이제품 보급을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시험인증 비용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보조사업연장평가(‘23년)
 - (평가결과) 사업방식변경
 - (결과요약) 현재의 사업내용으로 사업을 지속하기보다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사업효과를 제고 할 수 있는 사업방식 개선 필요, 특히 융복합 신규 제품의 출시 등 새로운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 및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안전성 검증 강화 및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 필요

12) 부처 건의사항

-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른 전주기의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동 사업 지속 확대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990	-	990	-	-	-	990	989	99.9	99.9	-	1
2021	1,070	-	1,070	-	-	-	1,070	1,062	99.3	99.3	-	8
2022	1,070	-	1,070	-	-	-	1,070	1,070	100	100	-	-
2023	1,857	-	1,857	-	-	-	1,857	1,843	99.2	99.2	-	1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990	-	750	750	-	750	750	-	-	100
2021	1,070	-	830	830	-	830	830	-	-	100
2022	1,070	-	830	830	-	830	830	-	-	100
2023. 12월기준	1,857	-	830	830	-	830	83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 불용액(1백만원) 발생 : 연구용역비 낙찰차액(1백만원)
2021	- 불용액(7.5백만원) 발생 : 연구용역비 낙찰차액(6백만원), 임차비 (1.5백만원)
2022	- 해당없음
2023	- 불용액(14백만원) 발생 : 조달 낙찰차액(1백만원)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3.2.1.)	-	-	-	-	-	-
전용 (‘23.2.3.)	-	-	-	-	-	-
조정 (‘23.2.5.)	-	-	-	-	-	-
이체 (‘23.2.9.)	-	-	-	-	-	-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날짜)
-	-	-	-	-
-	-	-	-	-
합 계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사업 설명자료

[참고 2]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공고(‘22~’24)

[참고 3]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사업 주요내용

참고 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사업 설명자료

□ 사업개요

- (목적) 어린이(소비자), 제조·유통기업(사업자), 규제기관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사용환경 구축('17년~)

□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만 13세 이하)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품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 * 정규교육과정으로 교통, 재난 등을 위주로 안전교육(학기당 51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품안전 관련 교육은 매우 미흡(학기당 1~2시간 수준)
- (선도학교) 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안전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선도학교를 운영
- (찾아가는 안전교육) 권역별 유치원·초등학교(선도학교 미선정 지역 우선)에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 해소
 - * 전문강사 양성: 선도학교 교사, 안전교육 강사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제품 교육 방법 교수
- (체험관 구축)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제품관련 위해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품안전 체험시설 구축(기존 지자체 안전체험관 내에 설치)
 - * 국내 안전체험관은 제품안전보다는 교통, 재난 등을 위주로 체험시설 운영
-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을 위해 우리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시험인증 비용 부담을 해소
 - * 제품안전제도, 안전기준 등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 해외동향 분석 등을 통해 적시에 합리적인 안전관리 규제 마련·운영

참고 2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공고('22~'24)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현황

- (대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모든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삼킴, 유해물질 등 위해요소가 많고, 유행에 민감하여 제품 출시가 빈번

* 약 594만 명('20년), ** 완구 등 34개 품목, 인증유지는 약 8.6만 건(생활용품 약 3.3만 건)

- (최근 동향) 어린이제품안전법 시행('15.6) 이후에도 제품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안전의식은 지속해서 높아지는 추세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건수): ('15) 2.5만 → ('17) 2.6만 → ('19) 2.5만 → ('20) 1.8만

- 전체 유통시장(16.2조원) 중 온라인 매출(3.4조원)이 급성장(연 12.6%↑)하는 가운데, 업계 대부분이 영세하고 수입제품의 비중(완구: 90%)이 높은 상황

- (그간의 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조사대상 중 부적합 제품 비중이 지속 감소('19년: 10.9% → '21년: 5.7%)

- 영세기업의 시험·인증 비용을 지원('19년: 25개 → '21년: 90개)하고, 안전한 유통을 위한 협업체계(관세청/교육청) 및 인프라(위해상품차단시스템 등) 구축

- (당면과제) 지속되는 물리적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구매대행·중고 거래 등 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시급

- 지속적인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증대되는 업계 부담을 축소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안전관리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확대·발전 필요

□ 제3차 기본계획 비전 · 목표

- ‘전주기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목표 : 안전사고의 실질적 저감 및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

<성과 목표 >

(안전기준) 유해물질 → 물리적 사고 저감	(사후관리) 적발유주 → 법적 의무처벌 강화
(사고감소) ('20)1.8만 건 → ('24)1.5만 건	(온라인 협의체) ('21)15개사 → ('24)40개사
(기업지원) ('21)90개사 → ('24)500개사	(안전교육) ('21)7천명 → ('24)2만명

□ 제3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4대 중점 추진과제, 12개 세부과제)

① (안전사고 예방) 사고 저감을 목표로 안전기준 재정비 및 유통 관리체계 확립

-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을 대폭 재정비하고, 성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제품**(소파 등)의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상향
- 안전한 제품의 유통관리를 위해 **민·관 온라인 협의체를 확대**(15개사 → 40개사)하고, 위해상품의 식별·추적을 위한 **상품분류체계*** 개발·도입

* 온라인 유통사들은 다양한 제품의 식별, 사후 추적 등을 위한 분류체계 도입 희망

② (불법·불량 제품 근절) 적발위주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

- 법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어린이제품안전법 개정)하고,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의무**(리콜제품 유통금지, 인증정보 공개 등) 부과
-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인증 회피, 반복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유통 **취약채널**(구매대행, 중고거래, 재래시장 등)에 대한 **안전수준도 제고**

③ (기업·소비자 지원)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문화 확산

-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90개사 → 500개사)하고, 제품 출시 전 기업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대처할 수 있는 **자가진단 프로그램*** 보급
- * 기업이 제품 정보를 설계 단계에서 입력하여 위해도, 안전기준 등 안전정보를 사전에 확인보완

- **어린이 안전 교육을 지속 실시**(연 7천명 → 2만명)하고, 메타버스 체험관, 인플루언서 활용 등 **흥미 위주의 제품안전 콘텐츠 제공**

④ (인프라 확충)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시험·인증 역량 강화

-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알림장 앱, 채팅봇 등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안전이슈 실시간 파악을 위한 **AI 기반 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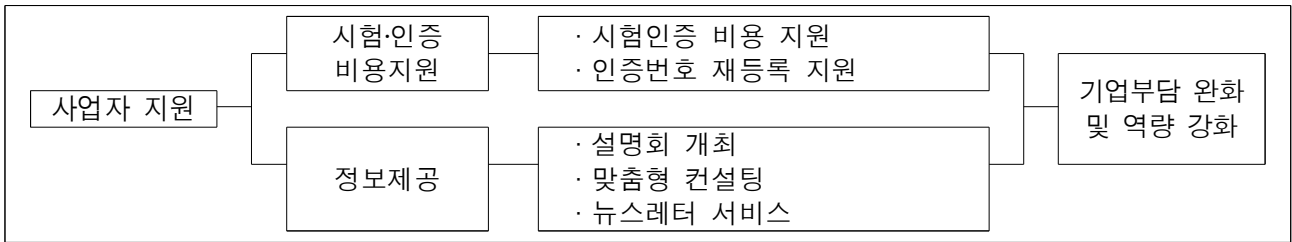
*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맘카페 등을 통해 안전 이슈제품을 선제적으로 파악

- **시험·분석 역량을 강화**(분석장비 도입 지원, 검사지침서 보급 등)하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제품안전센터’ 설립**(제품안전관리원 內)

참고 3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체계 >



□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비용 지원

- (시험·인증 비용지원)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시험인증 비용 부담을 해소

* 어린이제품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 제작 상품이 많고, 유행 주기가 짧아 제품의 시험·인증 비용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

< 지원비용 >

구분	국내제조	국내제조 외
비용	최대 1.5백만원	최대 1백만원

- (인증번호 재등록 지원) 소비자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어린이제품 대상으로 시험·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제품안전 관리 유도

*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 만료 예정으로 재신고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기존 인증번호 유지·사용 → 라벨 교체 등 비용 절감 효과

□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 (설명회 개최) 어린이제품 사업자 대상으로 시험·인증 관련 법령·제도 안내, 품목별 안전기준 해설 등 정보공유를 위한 설명회 개최
- (컨설팅) 어린이제품 품목별 시험·인증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으로 안전하게 어린이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뉴스레터 제공) 어린이제품 관련 법령, 안전기준 제·개정사항 등 제품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뉴스레터 발송

사 업 명
(19) 어린이제품안전성평가역량강화사업(3732-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국가기술표준원	0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8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어린이제품안전성평가 역량강화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3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어이제품 안전성 평가역량 강화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오재철	안재욱 연구관	-
		생활어린이제품 안전과	043-870-5450	043-870-5452	-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권소현 선임	053-718-835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어린이제품안전성 평가역량강화사업	1,150	1,640	1,606	1,606	△34	△2.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								2024 예산
	예 산 액	예 산 현 액	집 행 액 [실집 행액]	이 월 액	불 용 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 월 액	불 용 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50	1,150	1,150	-	-	1,640	1,640	1,640	1,640	1,640	1,640	-	-	1,606
· 어린이제품시험 인프라구축	1,150	1,150	1,150	-	-	1,640	1,640	1,640	1,640	1,640	1,640	-	-	1,606
○ 비목별 분류(합계)	1,150	1,150	1,150	-	-	1,640	1,640	1,640	1,640	1,640	1,640	-	-	1,606
· 사업출연금(350-02)	1,145	1,145	1,145	-	-	1,635	1,635	1,635	1,635	1,635	1,635	-	-	1,601
· 연구개발기획평가 관리비(360-06)	5	5	5	-	-	5	5	5	5	5	5	-	-	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50	1,150	1,150	-	-	1,640	1,640	1,640	1,640	1,640	1,640	-	-	1,606
· 어린이제품시험 인프라구축	1,150	1,150	1,150	-	-	1,640	1,640	1,640	1,640	1,640	1,640	-	-	1,606
-사업출연금(350-02)	1,145	1,145	1,145	-	-	1,635	1,635	1,635	1,635	1,635	1,635	-	-	1,601
-연구개발기획평가 관리비(360-06)	5	5	5	-	-	5	5	5	5	5	5	-	-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어린이제품시험인프라구축)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의 국제기준(UN/ECE)이 강화('13.07.~) 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국제기준 도입 및 관련 시험평가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확대 ('18년 "도로교통법(경찰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부)" 개정)

기존(UN/ECE/R44)	강화(UN/ECE/R129)	비고
체중(kg)에 따른 분류	키(cm)에 따른 분류	분류 체계 변경
9kg(약9개월) 부터 앞보기 가능	15개월까지 뒤보기 의무	목·머리 보호 강화
전방/후방 충돌시험	전방/후방/측면 충돌시험	측면 보호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5.0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16.02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1차 기본계획 수립
- '19.11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2차 기본계획 수립
- '21.08월 감사원은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68.96억원(국고 43.96억원, 민간 현물투자 25억원)
- 사업기간 : '22~'24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	1,150백만원	1,640백만원	1,606백만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출연), 안전인증기관(사업수행)
- 사업 수혜자 :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및 어린이제품 제조·수입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법적근거
어린이제품 시험인프라 구축	출연	한국산업 기술평가 관리원	1,606 백만원	100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어린이제품 시험인프라 구축 : 1,606백만원

- 충돌용 더미 교정장비 : 1,051백만원
- 더미 교정 프로그램 : 100백만원
- 충돌용 벤치 주변장치 : 100백만원
- 충돌용 더미 (2종) : 35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5백만원

* 시험동 건축(건축비, 전기, 소방 등), 항온항습 장비, 소모품 등은 안전인증기관이 현물 투자(약 25억)

※ 사업비 산출 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출연금(350-02) : 1,63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돌용 시험더미 장비세트 일부 : 800백만원 - 속도 데이터 취득 장치 X 1ea : 145백만원 - 충격흡수시스템 X 1ea : 300백만원 - 영상 데이터 취득 장치 X 1ea : 190백만원 - 안전기준개발비 등 : 200백만원 ○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 : 5백만원 	1,6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출연금(350-02) : 1,60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돌용 더미 교정장비 : 1,051백만원 - 더미 교정 프로그램 : 100백만원 - 충돌용 벤치 주변장치 : 100백만원 - 충돌용 더미 (2종) : 350백만원 ○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 : 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어린이제품 시험평가 장비구축 (단위: 여부)	목표	'22년 신설			100%	100%	시험평가장비 1기 구축	계획대비 장비구축 진도율	장비 계약, 시공 일정 등
	실적				100%	100%			
	달성도				100%	100%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
2021	-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시험동 건축 세부설계(전기, 항온항습 등), 지질검사, 기초시공 완료 ○ 장비중복성 검토완료(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앙장비도입심의) ○ 충돌용 레일(유압탱크, 피스톤 등) 도입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스트벤치, 충격흡수시스템(응급브레이크 등), 측면충돌장비, 조명시스템 도입 완료 ○ 속도 및 상해데이터 취득장치, 영상데이터취득장치 도입 완료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관련 국제기준 도입 및 시험평가 장비구축을 통해 차량 사고시 측면충돌 안전확보 등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 차량사고 중 측면충돌 사고비율('15년, 39% → '19년 48%)은 지속적으로 증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측면충돌 (건수)	65,498	73,397	73,857	76,234	83,508
차량사고 (건수)	169,471	162,009	160,065	161,999	173,328
측면충돌 비율	39%	45%	46%	47%	48%

<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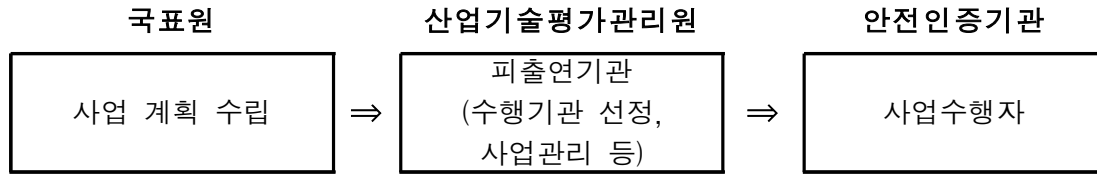
- 기업의 해외(유럽) 수출을 위한 시험이 국내에서 가능하게 되어, 연구개발 비용 및 인증비용(약 1,000~1,500만원)의 약 10% 이상 절감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출연사업(국고 43.96억(총 3년), 안전인증기관 현물투자 25억)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1,150	1,640	1,606	-	-	
'23~'27		1,640	1,606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감사원 지적)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의 시험조건 검토 등 국내 안전기준 강화 요구(산업 인증제도 운영실태 감사, 21.08.)
- (조치사항) 국제기준 반영 등을 통한 안전기준 개정 및 시험장비 구축 추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위해도가 높은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의 국제기준 도입 및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평가장비구축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 시험평가장비 구축 및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
 - * (1차년도) 시험동 건축(전기, 소방 향온향습 장비 등), 기초공사, 충돌용 레일 도입
 - * (2차년도) 충격흡수시스템, 측면충돌장비 등 장비구축 및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
 - * (3차년도) 장비구축 완료, 안전기준 개정고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22년 신규사업)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22년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50	-	1,150	-	-	-	1,150	1,150	100	100	-	-
2023	1,640	-	1,640	-	-	-	1,640	1,64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22년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150	1,150	1,150	1,150	-	1,150	1,150	-	-	100
2023. 12월	1,640	1,640	1,640	1,640	-	1,640	1,64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안전기준)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의 측면충돌 시험방법 도입 등 강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한 국내 안전기준 개정 추진

기 존(UN/ECE/R44)	강화(UN/ECE/R129)	비고
체 중(kg)에 따른 분류	키(cm)에 따른 분류	분류 체계 변경
9kg(약9개월) 부터 앞보기 가능	15개월까지 뒤보기 의무	목·머리 보호 강화
전방/후방 충돌시험	전방/후방/측면 충돌시험	측면 보호 강화

- (장비구축) 강화된 국제기준 적용을 위해 측면충돌 시스템, 상해데이터, 영상데이터 취득시스템 등 주요 시험평가 장비구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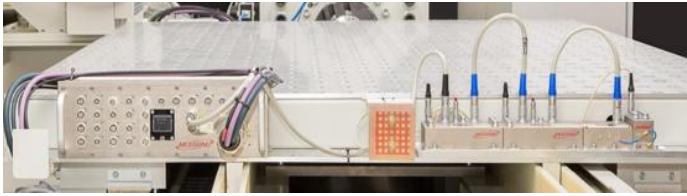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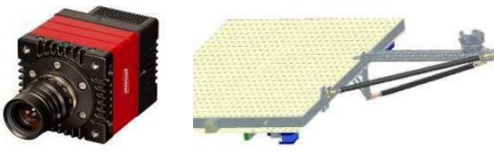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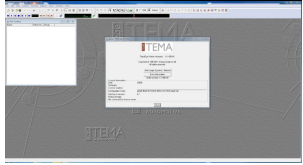
* 부지(약 300평), 시험동 건축(건축비, 전기, 소방 등), 항온항습 장비, 소모품 등은 민간 현물 투자(약 25억)

< 장비비교 >

구분	기존장비(R44)	신규장비(R129)	비고
충돌 방식	공압식	유압식	
레일 방식	1개	2개	측면충돌용
속도제어	절대속도	상대속도	측면충돌용
테스트벤치	-	측면충돌 벤치	측면충돌용
더미	P더미	Q더미	센서3개 → 센서30개

< 장비 구성 >

모의충돌 시험 시스템	 <p>충돌용 기초 레일, 유압 탱크, 가속 피스톤, 브레이크</p>	
	 <p>R44 테스트 벤치</p>	 <p>R129 테스트 벤치</p>

조명 시스템	
속도 및 상해 데이터 취득장치	<div>  <p>데이터 취득장치</p> </div> <div>  <p>소프트웨어</p> </div>
영상 데이터 취득장치	<div>  <p>고속카메라 및 지지대</p> </div> <div>  <p>소프트웨어</p> </div>
Q-더미	

사 업 명
(20) 제품위해성평가및안전관리(3732-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	-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10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 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박해범	박수진	
		제품안전정보과	043-870-5430	043-870-533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835.6	1,060	954	954	△107	△1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60	860	835.6 [835.6]	-	24.4	1,060	1,060	1,049.1 [1,049.1]	1,060	1,049.1 [721.7]	0	10.9	954
·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계도 및 운영	10	10	9.5 [9.5]	-	0.5	10	10	10 [10]	10	10 [10]	0	0	9
· 위해정보를 바탕 으로 한 제품 위해성 평가	850	850	826.1 [826.1]	-	23.9	1,050	1,050	1039.1 [1039.1]	1,050	1039.1 [1039.1]	0	11	945
○ 비목별 분류(합계)	860	860	835.6 [835.6]	-	24.4	1,060	1,060	1,049.1 [1,049.1]	1,060	1,049.1 [1,049.1]	0	11	954
· 일 반 수 용 비 (210-01)	10	10	9.5 [9.5]	-	0.5	10	10	10 [10]	10	10 [10]	0	0	9
· 일 반 연 구 비 (260-01)	850	850	826.1 [826.1]	-	23.9	1,050	1,050	1,039.1 [1,039.1]	1,050	1,039.1 [1,039.1]	0	11	94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60	860	835.6 [835.6]	-	24.4	1,060	1,060	1,049.1 [1,049.1]	1,060	1,049.1 [1,049.1]	0	11	954
·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계도 및 운영	10	10	9.5 [9.5]	-	0.5	10	10	10 [10]	10	10 [10]	0	0	9
- 일 반 수 용 비 (210-01)	10	10	9.5 [9.5]	-	0.5	10	10	10 [10]	10	10 [10]	0	0	9
· 위해정보를 바탕 으로 한 제품 위해성 평가	850	850	826.1 [826.1]	-	23.9	1,050	1,050	1039.1 [1039.1]	1,050	1039.1 [1039.1]	0	0	945
- 일 반 연 구 비 (260-01)	850	850	826.1 [826.1]	-	23.9	1,050	1,050	1039.1 [1039.1]	1,050	1039.1 [1039.1]	0	11	9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 평가) 융·복합 신기술 제품, 소비자 사용패턴 변화 제품 등 사각지대 제품에 대하여 안전관리 필요성 및 여부(기준 제·개정)를 판단하고 규제의 수준(강제인증, 자율규제 등)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조사, 제품시험, 전문가 자문 등 위해성 평가를 실시



-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제도 및 운영) 제품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리콜, 소비자 안전주의보 안내 및 제도 등)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제품안전기본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② 추진경위

- '10.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공포
- '11.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 '11. 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 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5. 6월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17.11월 :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20. 7월 : 제4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21. 1월 : 제품 위해성 평가 사업 기획
- '22. 1월 :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860	1,060	95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및 관련 산업계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 평가

: ('23) 1,050백만원 → ('24요구) 945백만원, (전년대비 105백만원 감액)

- (요구)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출현, 제품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現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한 11개 품목의 위해수준(위해성) 평가 실시
- (산출) 86백만원/품목 X 11 품목, 945백만원

②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제도 및 운영

: ('23) 10백만원 → ('24) 9백만원, (전년대비 1백만원 감액)

- (요구) 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주의보(ex.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유모차 끼임사고 사망) 등 안내홍보를 통하여 대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 (산출) 소비자주의보 등 안내·홍보, 9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210-01) : 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제도 및 운영(10백만원) · 위해성 확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주의보 등 안내·홍보 비용 ○ 일반연구비(260-01) : 1,0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평가(1,050백만원) · 86백만원×13개 품목 	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210-01) : 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제도 및 운영(9백만원) · 위해성 확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주의보 등 안내·홍보 비용 ○ 일반연구비(260-01) : 94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평가(945백만원) · 86백만원 X 11 품목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2021	
2022	①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평가 : 10회 - 에탄올난로, 전기마사지기 등 신기술·신소비 트렌드 제품 ② 소비자 안내 계도 및 운영 : 안전주의보 등 언론을 통한 소비자 계도 2회 - 스타벅스 여행용 가방 유해물질, 유아용 치발기 녹물 등
2023	①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평가 : 13회 - 가열식 가습기, 무시동 히터 등 신기술·신소비 제품 ② 소비자 안내 계도 및 운영 : 안전주의보 등 언론을 통한 소비자 계도 2회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품위해성 평가 (11건)

- 국내외 제품 위해사례 등 실태조사, 위해 심각도파악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위해수준 결정 및 위해도 평가 실시 (규제 완화, 안전사각지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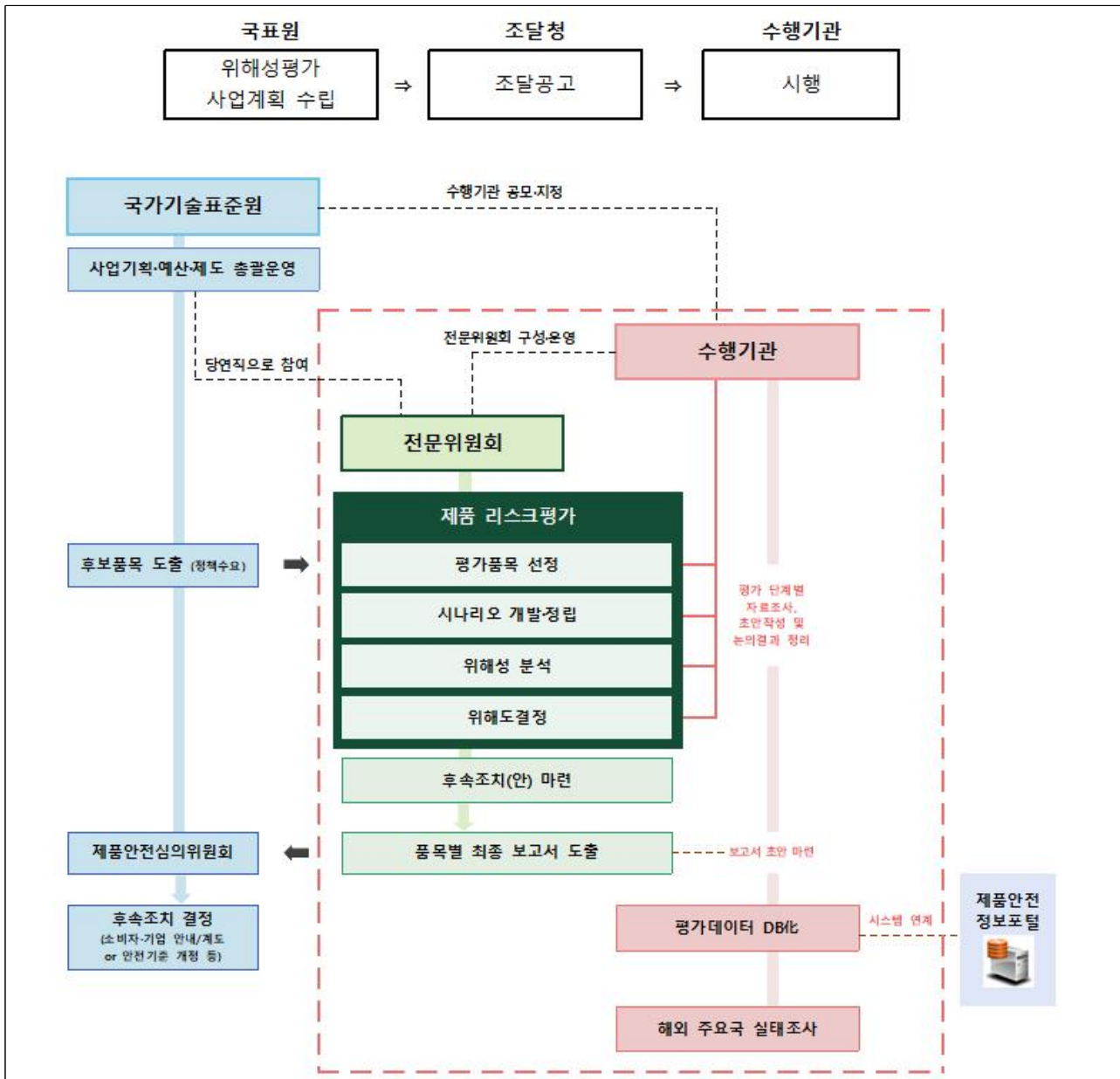
○ 소비자 안내·계도 (2회)

-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른 제품 안내 콘텐츠 개발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계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860	1,582	2,434	2,568	2,736	
'23~'27		1,060	1,113	1,157	1,191	1,21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식약처, 소비자원, 소방청 등 타부처 간 사고·위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하여
위해요인 DB 구축에 대한 실태조사
- 전문가, 전담기관, 시험기관 등을 활용하여 위해 가능성 제품 선정과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 등 제품 위해성평가
- 각 위해분야별 평가를 위한 기관 지정 및 운영

○ 세부 추진계획

- 제품 위해성 평가 실태조사 및 위해수준결정, 위해성 평가를 위한 각 기관 및 전문가를
활용한 컨소시엄을 통한 제품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등장과 비관리제품의 증가 등 국민의 제품 위해에 대한
노출이 심해지고 있어 선제적 제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을 위한 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사업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2021												
2022	860	-	860	-	-	-	860	835.6	97.2	97.2	-	24.4
2023	1,060	-	1,060	-	-	-	1,060	1,049.1	98.9	98.9	-	10.9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해당없음
2021	해당없음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조달공고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24.4백만원)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조달공고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10.9백만원)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21)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37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 기업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1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술규제대응국	전민영	김용태	
		기술규제정책과	043-870-5520	043-870-5524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TBT종합지원센터	오기수 센터장	02-571-005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7,231	8,474	7,869	7,869	△ 605	△ 7.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2.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 액	불용 예상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418	7,418	7,231 [7,231]	15	172	8,474	8,489	8,380 [8,380]	8,474	8,365 [8,365]	15	94	7,869	
· 해외기술규제조사분석 및 대응지원	4,801	4,801	4,801 [4,801]		-	5,800	5,800	5,800 [5,800]	5,800	5,800 [5,800]	-	-	6,039	
· WTO/FTA TBT 및 기 술규제 애로협상	261	261	230 [230]		31	309	309	296 [296]	309	296 [296]	-	13	230	
· FTA TBT 협상 및 이행강화	230	230	186 [186]	15	29	230	245	226 [226]	230	211 [211]	15	4	186	
· FTA TBT 종합지원	1,526	1,526	1,464 [1,464]		62	1,535	1,535	1,504 [1,504]	1,535	1,504 [1,504]		31	1,414	
· 한-아세안 표준협 력 및 기반조성	600	600	550 [550]		50	600	600	554 [554]	600	554 [554]	-	46	-	
○ 비목별 분류(합계)	7,418	7,418	7,231 [7,231]	15	172	8,474	8,489	8,380 [8,380]	8,474	8,365 [8,365]	15	94	7,869	
· 일반수용비(210-01)	157	157	150 [150]		7	209	164	148 [148]	164	148 [148]	-	16	150	
· 임차료(210-07)	50	50	50 [50]		-	50	50	50 [50]	50	50 [50]	-	-	50	
· 일반용역비(210-14)	396	396	386 [386]		10	405	405	384 [384]	405	384 [384]	-	21	386	
· 국외업무여비(220-02)	106	106	75 [75]		31	103	148	145 [145]	148	145 [145]	-	3	75	
·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12]		-	11	11	11 [11]	11	11 [11]	-	-	12	
· 일반연구비(260-01)	1,210	1,810	1,671 [1,671]	15	124	1,810	1,825	1,756 [1,756]	1,810	1,741 [1,741]	15	54	1,071	
· 사업출연금(350-02)	5,487	4,887	4,887 [4,887]		-	5,886	5,886	5,886 [5,886]	5,886	5,886 [5,886]	-	-	6,125	

	2022					2023(22.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본예산	예 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 액	불용 예상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418	7,418	7,231 [7,231]	15	172	8,474	8,489	8,378 [8,378]	8,474	8,363 [8,363]	15	96	7,869	
- 해외기술규제조사분석 및 대응지원	4,801	4,801	4,801 [4,801]		-	5,800	5,800	5800 [5,800]	5,800	5800 [5,800]		-	6,039	
- 사업출연금(350-02)	4,797	4,797	4,797 [4,797]		-	5,796	5,796	5,796 [5,796]	5,796	5,796 [5,796]		-	6,035	
- 사업추진비(240-01)	4	4	4 [4]		-	4	4	4 [4]	4	4 [4]		-	4	
- WTO/FTA TBT 및 기 술규제 애로협상	261	261	230 [230]		31	309	309	296 [296]	309	296 [296]		13	230	
- 국외업무여비(220-02)	106	106	75		31	103	148	145 [145]	148	145 [145]		3	75	
- 임차료(210-07)	50	50	50 [50]		-	50	50	50 [50]	50	50 [50]		-	50	
- 일반수용비(210-01)	97	97	97 [97]		-	149	104	94 [94]	104	94 [94]		10	97	
- 사업추진비(240-01)	8	8	8 [8]		-	7	7	7 [7]	7	7 [7]		-	8	
- FTA TBT 협상 및 이행강화	230	230	186 [186]	15	29	230	245	226 [226]	230	211 [211]	15	4	186	
- 일반연구비(260-01)	230	230	186 [186]	15	29	230	245	226 [226]	230	211 [211]	15	4	186	
- FTA TBT 종합지원	1,526	1,526	1,464 [1,464]		62	1,535	1,535	1,504 [1,504]	1,535	1,504 [1,504]		31	1,414	
- 일반연구비(260-01)	980	980	935 [935]		45	980	980	976 [976]	980	976 [976]		4	885	
- 일반용역비(210-14)	396	396	386 [386]		10	405	405	384 [384]	405	384 [384]		21	386	
- 일반수용비(210-01)	60	60	53 [53]		7	60	60	54 [54]	60	54 [54]		6	53	
- 사업출연금(350-02)	90	90	90 [90]		-	90	90	90 [90]	90	90 [90]		-	90	
- 한-아세안 표준협력 및 기반조성	600	600	550 [550]		50	600	600	554 [554]	600	554 [554]		46	-	
- 일반연구비(260-01)	0	600	550 [550]		50	600	600	554 [554]	600	554 [554]		46	-	
- 사업출연금(350-02)	600	0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현황)**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무역기술장벽(TBT*)이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며, 이에 WTO 통보 규제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음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WTO TBT 사무국 통보규제 : ('18) 3,061건 → ('19) 3,337건 → ('20) 3,354건 → ('21) 3,966건 → ('22) 3,896건

** WTO TBT 사무국 미통보규제 : ('18) 510건 → ('19) 550건 → ('20) 570건 → ('21) 662건 → ('22) 925건

-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①규제정보를 수집·분석(기초/심층)·전파하고, ②WTO/FTA TBT등 협상(양자/다자, 현지방문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③TBT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
-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에 대한 표준 분석 및 컨설팅, TBT 교육 등 수행

- **(내역사업 ① 해외 기술규제 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WTO 통보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우리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통보문 입수 및 분석(기초분석 및 심층분석)을 통해 관련 규제내용을 수출기업에 전파

· 규제대상의 범위, 제개정 주요내용, 국가간 규제내용 과도성 비교,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 산업계 의견수렴(정부/TBT종합지원센터/업계/시험분석기관/업종별 협단체, 무역유관기관등)

- **(내역사업 ② WTO/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양자협상, 다자협상 및 타국 공조를 위한 전문가 협의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

· WTO TBT 위원회(3,6,11월)에 참석, **다자협상**을 실시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FTA TBT 위원회(예: 한-중국, 한-콜롬비아), 현지 규제당국 직접방문 등 **양자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 현안을 적기 해소

- **(내역사업 ③ FTA TBT 협상·이행 강화)** 상대국의 규제현황, 법, 제도 및 기술규정 등을 분석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용

· 분석된 협상 당사국의 규제정보를 사용하여 협상시 우리 국익에 최대 반영

* 협상 전후시 상대국의 각종 기술규제 법령, 제도 등을 충분하게 알고 있어야만 우리의 TBT 협상/이행시 국가이익을 반영할 수 있음

- **(내역사업 ④ FTA TBT 종합지원) (중국, 인도 및 동남아 국가 수출 지원 확대)**

·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제품성능 규제 등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인도, 베트남, 인니 등 국가 수출 비중이 증가(우리 전체수출액의 40%이상)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기술규제 및 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표준분석, 컨설팅 및 TBT 교육, 설명회** 등 정보제공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제1항]** 정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한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① 정부는 국가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합성평가 절차와 달라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이하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가표준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2. 제7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 **[WTO/TBT 협정('95) 제10.1조]**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및 다른 회원국국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아래에 관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이하 생략)

- 발효된 FTA 양자협정에서 규정(현재 15개*)

* 한-칠레 FTA,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한-미 FTA, 한-싱가포르 FTA, 한-EU FTA 등

- (예시) 한-미 FTA 협정('07) 제9.6조 (투명성) 3항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할 때에, 이와 동시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미합중국 질의처, 또는 이 장의 부속서 9-가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② 추진경위

- '06.6 FTA/TBT 협상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과 신설
- '07.4 OECD 보고서 관련 국무조정실에 TBT 중앙사무국 운영 계획보고
- '08.9 TBT 중앙사무국 개설 후 무역기술장벽(TBT)을 전담 대응중
- '13.12 WTO/FTA-TBT 협상·이행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국 신설
- '15.5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既타결 FTA 국내보완대책」 중 한-중 FTA 종합지원 사업 추진
- '17. 5. 대선 10대 공약[주변 4국(중·일·러 등)과의 협력외교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통상외교 역량 강화(국익우선 협력외교 2, 3)]
- '17.8 국정과제 34-6, 미래시장진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혁신
(무역기술장벽대응 지원 및 기술규제 개혁 선진화 체계 구축)
- '18.6 범부처 협의회 구성·운영근거 및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국가표준기본법)
- '19.1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942	6,970	7,418	8,474	7,86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방식, 출연방식(일부내역사업한)
- 사업시행주체 : 국표원, (참여기관) TBT종합지원센터(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시험분석 기관 KTR, KTC, KCL, 업종별협단체 KEA, KSCIA, KOSA, KOCEMA 등
- 사업 수혜자 : 국내 수출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출연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외기술 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지원등	출연	TBT 종합 지원센터 (시험인증 산업협회)	6,125	미정	<p>○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제1항</p> <p>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p> <p>2. 제7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p> <p>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팜팩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p> <p>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팜팩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p> <p>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팜팩 관련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p>

3) '2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1)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 지원 : (2023) 5,800 → (2024요구) 6,039백만원, +4.1%

◇ WTO 통보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우리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통보문 입수 및 분석(기초분석 및 심층분석)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

- WTO TBT 통보문(미통보문)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 4,853백만원 [350-02 사업출연금]
 - * WTO TBT 통보문(미통보문) 기초분석 : 373백만원(4662.5건 × 0.08백만원)
 - * WTO TBT 심층분석(통보문+미통보문+해외기술규제 최종안) : 4,480백만원(896건 × 5백만원)
- 신산업, 신기술 기술규제 분석 : 250백만원[350-02 사업출연금]
 - * 규제 모니터링, 기술동향 및 표준 분석 : 150백만원(30건 × 5백만원)
 - * TBT 메가트랜드 보고서 발간 : 100백만원(20건 × 5백만원)
-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정 및 표준분석: 110백만원 [350-02사업출연금]
 - * 기술규정 및 표준의 모니터링/분석 : 110백만원(11건 × 10백만원)
- TBT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 : 411백만원 [350-02 사업출연금]
 - * 해외기술규제 조사 및 전파 : 385백만원(10개국×11개품목×3.5백만원)
 - * 개도국 규제대응 현지 거점 체계구축 : 26백만원(1건 × 26백만원)
- 주요 수출국의 화학물질 규제정보 조사/대응 : 411백만원 [350-02 사업출연금]
 - * 소재→부품→완제품 단계별 POPs, PFAS 공급망정보 조사 : 411백만원(205.5개물질 × 2백만원)
-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대응회의체 운영 : 4백만원 [240-01 사업추진비]
 - * 10명× 25천원 × 16회 = 4백만원

(2) WTO/FTA TBT 협상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 (2023) 309 → (2024요구) 230백만원, -25.5%

◇ 양자협상, 다자협상 및 타국 공조를 위한 전문가 협의 등 수행

- WTO/FTA TBT 협상 및 애로 협상 여비 : 75백만원 [220-02 국외여비]
 - * 12건 × 2명 × 3.125백만원 = 75백만
- 국제회의, 간담회, 포럼 등 회의장 임차 : 50백만원 [210-07 임차료]
 - * 5회 × 10백만원 = 50백만원
- TBT 대응 전문가 회의비, 법률자문, 인쇄·홍보, 통·번역 등 : 97백만원 [210-01 일반수용비]
 - * 18회(전문가 회의) × 1백만원 = 18백만원
 - 3건(법률자문) × 10백만원 = 30백만원
 - 2.5건(인쇄·홍보) × 10백만원 = 25백만원
 - 1건(통·번역) × 24백만원 = 24백만원
-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대응회의체 운영 : 8백만원 [240-01사업추진비]
 - * 8건 × 1백만원 = 8백만원

(3) FTA TBT 협상 및 이행 강화 : (2023) 230 → (2024요구) 186백만원, -19.1%

◇ 상대국의 규제현황, 법, 제도 및 기술규정 등을 분석

- FTA TBT 제도분석 : 65백만원 [260-01일반연구비]
 - * 2건 × 32.5백만원 = 65백만원
- FTA TBT 기술규정 분석 : 76백만원 [260-01일반연구비]
 - * 2건 × 38백만원 = 76백만원

- FTA TBT MRA 연구 : 45백만원 [260-01일반연구비]
- * 1건 × 45백만원 = 45백만원

(4) FTA TBT 종합지원 : (2023) 1,535 → (2024요구) 1,414백만원,-7.9%

◇ 중국 신남방국 등의 기술규제 및 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표준분석, 컨설팅 및 TBT 교육, 설명회 등 정보제공

- 기술표준 분석: 885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 * 기술표준분석 : 875백만원(175종 × 5백만원)
- * 규제맵 제작 : 10백만원(2건 × 5백만원)
- FTA TBT 종합지원 포털 운영 : 90백만원 [350-02 사업출연금]
- * 1식 × 90백만원
- 현지 대응체제 구축·운영 : 110백만원 [210-14 일반용역비]
- * 애로 접수 및 대응 현지 상담실 운영 : 80백만원(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각 20백만원)
- * 현지 설명회(간담회) 개최 : 30백만원(2회 × 15백만원)
- FTA TBT 애로 해소 지원 : 192백만원 [210-14 일반용역비]
- * 맞춤형 컨설팅 64건×3백 = 192백만원
- 기술표준 교육 및 홍보 : 137백만원
- 기술표준 교육 : 55백만원 [210-14 일반용역비]
- * 교육 11건 × 5백만원 = 55백만원
- SNS 온라인 광고 : 29백만원 [210-14 일반용역비]
- * 2건 × 14.5백만원 = 29백만원
- 기술규제 교육 교재 및 팸플렛 인쇄 : 53백만원[210-01 일반수용비]
- * 5.3건 × 10백만원 = 53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418 <제2회 추경 △56>	○ 일반연구비(260-01) : 1,81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071,000천원(1,071백만원)
	1. FTA/TBT 협상 및 이행 강화 230백만원 가. FTA/TBT 제도분석 2*40,000천원=80,000천원 나. FTA/TBT 기술규정 분석 2*40,000천원=80,000천원 다. FTA/TBT MRA 연구 2*35,000천원=70,000천원 2. FTA/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 980백만원 가. 기술표준분석 980백만원 표준 186종*5,000천원=930백만원+ 표준분석규제맵제작 10건 *5,000천원=50,000천원(50백만원) 3. 한-아세안 표준협력 및 기반조성 : 600백만원 가. 건설자재 표준협력 - 아세안 국가 건설자재 표준분석 10개국*15,000천원=150,000천원 - 아세안 건설자재 기술규정·행정규제 등 현황 분석 84개*1,000천원=84,000천원 - 현지 세미나/전문가 회의 2회*8,000천원=16,000천원 나.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협력 - 아세안 지능형 교통체계에 관한 既마스터플랜 심층분석 3건*10,000천원=30,000천원 - 아세안 국가 교통현황 및 제도분석 10개국*2,000천원=20,000천원 - 아세안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방안 연구 2건*90,000천원=180,000천원 - 현지 세미나/전문가 회의 개최		1. FTA/TBT 협상 및 이행 강화 186백만원 가. FTA/TBT 제도분석 2*32,500천원=65,000천원 나. FTA/TBT 기술규정 분석 2*38,000천원=76,000천원 다. FTA/TBT MRA 연구 1*45,000천원=45,000천원 2. FTA/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 885백만원 가. 기술표준분석 885백만원 표준 175종*5,000천원=875백만원+ 표준분석규제맵제작 2건 *5,000천원=10백만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회*8,000천원=16,000천원 - 전문가 자문비 2회*2,000천원= 4,000천원 다. 신규협력과제 발굴 및 협력전략 수립 3개과제*33,300천원=100,000천원(10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405,000천원(405백만원) 1. FTA/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 가. FTA/TBT 애로 해소 지원 컨설팅 65건*3,000천원=195,000천원 나. 기술표준 교육 12건*5,000천원=60,000천원 다. SNS 온라인 광고 2건*15,000천원=30,000천원 라. 현지대응체제 구축/운영 : 120,000천원(120백만원) - 애로접수 및 대응 현지 상담실 운영 20,000천원*4개국=80,000천원 - 현지 설명회(간담회) 개최 2건*20,000천원=4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09,000천원(209백만원) 1. WTO/FTA TBT 협상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 TBT 대응 전문가 회의비 등 29회*10,000천원=29,000천원(29백만원) - TBT 대응관련 외국법률 자문 4건*10,000천원=40,000천원 - 무역기술장벽보고서 인쇄 및 홍보물 제작 5건*10,000천원=50,000천원 - 통역 및 번역 등 1건*30,000천원=30,000천원 2. FTA 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 - 교육용 교재 및 팸플렛 인쇄 6건*10,000천원=60,000천원 ○ 임차료(210-07) : 50,000천원(50백만원) - 국제회의 간담회 포럼 등 회의장 임차 5회*10,000천원=5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02,856천원 17건*2명*3,025천원=102,85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1,124천원 가.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대응회의체 운영 10명*25천원*16회=4,124천원 나.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대응회의체 운영 7건*1,000천원=7,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5,886.02백만원 1.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지원 가. WTO TBT 통보문 기초분석 4,488건*80천원=359,02백만원 나. WTO TBT 심층분석(통보문+미통보문+해외기술규제 최종안) 900건*500,000천원=4,500백만원		2회*8,000천원=16,000천원 - 전문가 자문비 2회*2,000천원= 4,000천원 다. 신규협력과제 발굴 및 협력전략 수립 3개과제*33,300천원=100,000천원(10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386,000천원(386백만원) 1. FTA/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 가. FTA/TBT 애로 해소 지원 컨설팅 64건*3,000천원=192,000천원 나. 기술표준 교육 11건*5,000천원=55,000천원 다. SNS 온라인 광고 2건*14,500천원=29,000천원 라. 현지대응체제 구축/운영 : 110,000천원(110백만원) - 애로접수 및 대응 현지 상담실 운영 20,000천원*4개국=80,000천원 - 현지 설명회(간담회) 개최 2건*15,000천원=3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50,000천원(150백만원) 1. WTO/FTA TBT 협상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97,000천원 - TBT 대응 전문가 회의비 등 18회*10,000천원=18,000천원 - TBT 대응관련 외국법률 자문 3건*10,000천원=30,000천원 - 무역기술장벽보고서 인쇄 및 홍보물 제작 2.5건*10,000천원=25,000천원 - 통역 및 번역 등 1건*24,000천원=24,000천원 2. FTA 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 53,000천원 - 교육용 교재 및 팸플렛 인쇄 5.3건*10,000천원=53,000천원 ○ 임차료(210-07) : 50,000천원(50백만원) - 국제회의 간담회 포럼 등 회의장 임차 5회*10,000천원=5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75,000천원 12건*2명*3,125천원=75,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2,000천원 가.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대응회의체 운영 10명*25천원*16회=4,000천원 나.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대응회의체 운영 8건*1,000천원=8,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6,125백만원 1.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지원 6,035백만원 가. WTO TBT 통보문 기초분석 4,662.5건*80천원=373백만원 나. WTO TBT 심층분석(통보문+미통보문+해외기술규제 최종안) 896.7건*500,000천원=4,480백만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다. 신산업 신기술 기술규제 분석 350백만원 - 규제 모니터링 기술동향 및 표준 분석 50건*5,000천원=250백만원 - TBT 메가트랜드 보고서 발간 20건*5,000천원=100백만원 라.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정 및 표준 분석 150백만원 - 기술규정 및 표준의 모니터링/분석 15건*10,000천원=150백만원 마. TBT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 437백만원 - 해외기술규제 조사 및 전파 10개국*11개 품목*3.5백만원=385백만원 - 개도국 규제대응 현지 거점 체계구축 2건*26백만원=52백만원 2. FTA 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 - FTA/TBT 종합지원 포털운영 90백만원 1식*90,000천원=90,000천원		다. 신산업 신기술 기술규제 분석 250백만원 - 규제 모니터링 기술동향 및 표준 분석 30건*5,000천원=150백만원 - TBT 메가트랜드 보고서 발간 20건*5,000천원=100백만원 라.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정 및 표준 분석 110백만원 - 기술규정 및 표준의 모니터링/분석 11건*10,000천원=110백만원 마. TBT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 411백만원 - 해외기술규제 조사 및 전파 10개국*11개 품목*3.5백만원=385백만원 - 개도국 규제대응 현지 거점 체계구축 1건*26백만원=26백만원 바. 주요 수출국의 화학물질 규제정보 조사/대응 411백만원 - 소재→부품→원제품 단계별 POPs, PFAS 공급망정보 조사 205.5개 물질 * 2,000,000원= 411백만원 2. FTA 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 - FTA/TBT 종합지원 포털운영 90백만원 1식*90,000천원=9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무역기술장벽 (TBT) 대응 외국과의 협상 건수 (단위: 건수)	목표	107	130	140	150	155	*코로나19 이후 WTO TBT 위원 회 참석(연3회) 다자 및 양자 협 상대응을 대면 협 상으로 전환하고, TBT 대응(애로해 소) 협상건수 목 표치를 최근 3년 (20~22년) 평균실 적(143건) 대비 8% 증가한 155건 으로 설정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외국과의 협상 건수 = Σ(서면대응 건수 + WTO TBT 다자대응건수 + FTA TBT 양자대응 건수 + 해당국 방문 협상 건수)	국가기술 표준원 내부자료
	실적	131	145	155	-	-			
	달성도	122.4	111.5	11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의 발굴·분석/대응 ○ (기초 조사) WTO TBT 통보문(3,354건)을 조사·번역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고, 적용 대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 (미통보 TBT 발굴·대응) 해외규제기관 및 규제 전문사이트 모니터링등을 통해, WTO 사무국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570건 발굴·대응 ○ (심층분석) WTO에 통보된 규제와 미통보된 규제 3,924건(3,354+570) 중 아국에 영향 미치는 주요 규제 730건에 대해 심층분석 수행 ② 해외규제 상대국과의 TBT 다자·양자 협상 등을 통한 수출 애로해소 ○ (WTO TBT 위원회) 정기회의(연3회)를 계기로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
------	--

	<p>해소 (131건 협상, 53건 해소)</p> <p>* EU 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규제 대응을 통해, 8.5억불 규모의 TV 수출장벽해소</p> <p>○ 거대 경제권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FTA TBT 협상 추진</p> <p>- (한·MERCOSUR) 우리측의 對메 TBT 애로*해소 가능 조항 도입 추진 중으로 現 4개 조항(총 15개 中, 진행률 25%) 부분합의(제5차 협상, '20.2월)</p> <p>* △시험·인증관련 정보취득 어려움 → 투명성 강화, △국제 시험성적서 불수용으로 인한 비용 및 시간 소요 증가 → IECEE-CB 스킵 도입 등</p> <p>- (한·캄보디아) 국제표준 부합화 및 투명성 강화 등 우리측 핵심이익을 반영하여 상품 협정문 內 TBT 조항* 합의 완료(회기간 협상, '20.11월)</p> <p>* WTO TBT 협정 확인, 국제표준 부합화, 투명성, 국경조치, 연락처</p> <p>- (디지털 통상) TBT 관련 조항 협상에 대응하고 디지털 통상 규범 內 표준 등 관점 반영한 문(안)**을 제안하고 협상 실시 (제4차 협상, '20.11월)</p> <p>*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20.6월 개시, 총 4회 개최), WTO 전자상거래 협상('20년 전체회의 총 6회 개최, 소그룹 회의도 진행 중)</p> <p>** ①디지털경제에서 표준의 중요성 인정, ②디지털경제 관련 표준제정 일반원칙(투명성, 개방성, 공정성·일관성, 효과성·관련성), ③협력 등</p> <p>- (한·베트남) 제4차 FTA TBT위를 개최('20.8월)하여 베트남 에너지효율 인증제도, 양국 제품안전정책 등 규제정보 교환 및 제품안전, TBT 관련 민·관 협력방안 논의</p> <p>○ FTA 既체결 주요 수출국과의 전략적 FTA TBT이행 협력 확대</p> <p>- (한-EU) 양국은 FTA TBT 이행 과정에서 이슈가 된 유아용 섬유제품 관련 회의 개최(8.21., 10.27.) 및 전기용품 관련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개최(11.19.)를 통해 양국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협력</p> <p>③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지원</p> <p>○ (현장방문 컨설팅)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요청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업종별 협단체(전기전자/정밀화학/건설기계/소프트웨어등)를 통해 기초 컨설팅(410회) 실시</p> <p>- 표준/시험/인증 분야의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심층컨설팅을 실시(270회)</p> <p>○ 중소/중견기업의 TBT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TBT 설명회(36회) 실시</p> <p>④ 한·중 FTA TBT 종합지원 내역사업 주요 성과</p> <p>○ 중국정부의 WTO 통보·미통보 기술규제(5개 분류: 정책, 법규, 시험·인증제도, 강제 표준, 품질검사)에 대한 적시대응을 위해 주요 규제 기관(15개소) 모니터링 실시</p> <p>- 사이버관리국(CAC), 국무원 등 5개 기관은 주간 모니터링; 표준화연구원,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등 4개 기관은 월간 모니터링 실시</p> <p>-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규정보를 발굴(74건)*하고, 분석 보고서 발간**</p> <p>* CCC 인증방식(SDoC) 조정 및 품목조정 (5G 단말기 추가)등</p> <p>** 신규 규제정보 발굴 및 게시판 업로드 74건, 심층분석 20건, 월간 뉴스</p> <p>- (한·중 FTA TBT 위원회) 한-중은 제4차 FTA TBT 위원회를 개최('20.9)하고, TBT 현안* 논의 및 소비자 제품안전관리 협력방안 논의</p> <p>** 전기차 GB 표준, 의료기기 규제, 한약재 관리 등</p> <p>- (한·중 적합성평가소위) 한-중은 제17차 소위원회를 개최('20.11월)하고, 양국 상호인정 협의 및 인증 관련 수출 애로사항 논의</p>
--	---

2021	<p>① 애로발굴 및 규제분석정보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조사) '21년 해외 기술규제 3,966건(통보문+미통보문)을 조사/번역하고, 국제표준 일치 등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기업에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 (미통보 TBT 발굴·대응) 신흥 개도국 및 주요수출국 중심으로 규제전문 사이트 및 현지 주요 규제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미통보문(숨은규제) 662건도 발굴, 관련 분석정보를 기업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숨은 규제 발굴(건): ('18) 510건 → ('19) 550건 → ('20) 570건 → ('21) 662건 ○ (심층분석) 우리 수출기업에 영향력이 지대한 중요규제는 심층분석(816건) 실시 <p>② 해외규제 상대국과의 TBT 다자·양자 협상 등을 통한 수출 애로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TBT 위원회) 정기회의(연3회)를 계기로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 해소 (145건 협상, 56건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생산자책임제도 라벨링 규제 TBT 대응으로, 약 2조 2천억원 규모의 對프랑스 수출 달성이 가능 <p>③ FTA TBT 종합지원사업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및 신남방(베트남·인도네시아) 정부의 WTO 통보·미통보 기술규제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TBT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기업에 정보제공 등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정부의 품질규제 강화, 신산업 제품 및 신남방 국가의 강제성 제품인증 대상 품목에 대해 '규제 및 표준 분석(160건, 중국 110건 신남방 50건)' 실시 ○ 제품별 기술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기술규제맵(110종, 중국 71종 신남방 39종)', '품목별 TBT가이드북(6건)'으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규제대응 KnowTBT포털에 업로드 <p>④ 기술규제 애로해소를 위한 소통(기업, 업종별협단체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협의회) TBT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기전자/금속기계/정밀화학 등 품목별/규제유형별 협의회(53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실시 ○ (TBT 설명회) EU, 중국의 기술규제관련 업계애로 의견수렴 및 對유럽, 對중국 수출시 이슈가 되는 기술규제동향* 설명회 2회 등 총 TBT 설명회(36회)를 개최 ○ (기업간담회) 전기전자/건설기계 분야 기업간담회**(3회)를 통해 기업의견 적극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과불화합물 규제, 탄소중립 및 배터리 등 에너지관련 규제,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인증, 네트워크 보안 동향 등 ** 정부(국표원), TBT종합지원센터(시험인증산업협회), 기업(삼성, 엘지등), 협회단체(전자정보진흥, 에너지기계, 정밀화학등), 시험분석기관(KTR, KTC, KTL, KCL)등 참여 ○ (TBT 컨설팅) 업종별 협단체(전기전자/정밀화학/에너지기계/소프트웨어등)를 통해 기초 컨설팅(429회)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시험/인증 분야 전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심층 컨설팅을 실시(300회)
2022	<p>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의 발굴·분석/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조사) WTO TBT 통보문(3,460건)을 조사·번역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고, 적용 대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 (미통보 TBT 발굴·대응) 해외규제기관 및 규제 전문사이트 모니터링등을 통해,

	<p>WTO 사무국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856건 발굴·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분석) WTO에 통보된 규제와 미통보된 규제 4,316건(3,460+856) 중 아국에 영향 미치는 주요 규제 941건에 대해 심층분석 수행 <p>② 해외규제 상대국과의 TBT 다자·양자 협상 등을 통한 수출 애로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TBT 위원회) 정기회의(연3회)를 계기로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 해소 (155건 협상, 60건 해소) * 인도 플라스틱포장재 폐기물 규제 대응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약 268억불 규모의 전자제품 수출장벽 해소 <p>③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컨설팅)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요청한 수출 중소기업에 업종별 협단체(전기전자/정밀화학/건설기계/소프트웨어등)를 통해 기초상담(409건) 실시 - 표준/시험/인증 분야의 전문가가 심층컨설팅을 실시(338건) ○ (TBT 설명회) 중소기업의 TBT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TBT 설명회(36회) 실시 <p>④ 해외 기술규제대응 역량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기업간담회) 대·중소 기업관계자와 TBT현안 논의 및 신속대응을 위한 민·관 소통채널(2회) 운영 ○ (TBT 홍보) WTO TBT 위원회 성과, TBT 논문공모전 안내 등 SNS 게시(13건), 유튜브 범퍼애드(1회), TBT 종합지원센터 네이버 브랜드광고(1회), 전자신문 지면 하단광고(4회) 실시 ○ (간행물 발간)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1건), 기업애로 해소사례집(1건), TBT 대응가이드 리플릿(1건) 발간 및 배포
2023	<p>①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의 발굴·분석·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조사) WTO TBT 통보문 (2,329건)을 조사·번역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고, 적용대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 (미통보 TBT 발굴·대응) 해외규제기관 및 규제 전문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WTO 사무국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4,156건 발굴·대응 ○ (심층분석) WTO에 통보된 규제와 미통보된 규제 6,485건(2,329+4,156) 중 아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 731건에 대해 심층분석 수행 <p>② 해외규제 상대국과의 TBT 다자·양자 협상 등을 통한 수출 애로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TBT 위원회) 정기회의(연3회)를 계기로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 해소(115건 협상, 29건 해소) * 인도 전자폐기물 규제대응으로, 과도한 규제가 개선되어 43억불 규모의 전기·전자제품 수출장벽 해소 <p>③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컨설팅)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요청한 수출 중소기업에 업종별 협단체(전기전자/정밀화학/건설기계)를 통해 기초상담(29건) 실시 - 표준/시험/인증 분야의 전문가가 현장컨설팅 실시(12건) ○ (TBT설명회) 중소기업의 TBT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TBT설명회(1회) 실시

	<p>④ 해외 기술규제대응 역량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기업간담회) 대중소 기업관계자와 TBT현안 논의 및 신속대응을 위한 민-관 소통채널(1회) 운영 ○ (TBT 홍보) WTO TBT 위원회 성과, TBT 논문공모전 안내 등 SNS(10회), 구글 광고(1회), 네이버 브랜드광고(1회), 네이버 모바일 광고(1회), 기획보도(1회), 지면광고(1회) 실시 ○ (간행물 발간)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1건), TBT대응 가이드북(1건), KnowTBT 리플렛(1건) 발간 및 배포
--	--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수출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 통보문(미통보 규제 포함) 내용에 대한 신속한 입수, 전파 및 이해도 제고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력 향상

* '23년 해외기술규제 입수 1만 여건 예상 (통보문 약 4,100건, 미통보 약 6,500건)

△ WTO TBT 사무국에 통보되는 기술규제 : ('19) 3,337건 → ('20) 3,354건 → ('21) 3,966건 → ('22) 3,866건

- 기업업종별 협단체유관기관간 TBT 대응 실효성 제고 위한 소통 추진

* 품목별/규제유형별 협의회(48회), TBT설명회(4회/분기 1회), 규제정보 교류회(4회), 업종별 기업간담회(2회)

○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발굴 및 해소

- WTO TBT 정례회의(3, 6, 11월, 연3회) 및 FTA 공동위원회 등 채널을 통한 협의
- 필요시 해외기술규제 당국과의 직접협상 실시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TBT 대응역량 지원

- 새롭게 개편한 KnowTBT 포털을 통한 TBT 기초상담 및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300건/연)로 중소기업에 대한 TBT 대응역량을 지원하며, he기관(중소기업부)의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 표준의 동질성 확보를 통한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아세안 진출 기반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표원 직접수행 : 국외여비, 연구용역, 수용비 등

국가
기술표준원
(사업 총괄)

· 정부채널의 외교적 TBT 협상 총괄
 · WTO/TBT 위원회 협상(연3회)
 · FTA/TBT 위원회 협상(수시)
 · 양자 애로 협상(수시)
- 산업부(국표원) → TBT종합지원센터(사업출연금) → 업종별 협단체 및 시험분석기관
 - TBT종합지원센터(시험인증산업협회): WTO/TBT 통보문 분석을 근간으로 정례적·상시적 WTO/TBT 대응업무등 수행

※ TBT 종합지원센터 주요 업무(기능)

- WTO/TBT 통보문 입수, 기초분석, 심층분석, 대응방안 수립
- WTO/TBT 미통보문 입수, 기초분석, 심층분석, 대응방안 수립
- 규제분석서 작성, 통보문 산업계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발굴 (기업 간담회, 품목/규제유형별 협의회)
- 연간 정례(3회) WTO/TBT 위원회 대응, 양자회의(수시) 협상 지원 등(특정무역현안 발굴, 현안에 대한 산업계대응방안마련)
- TBT통계, 주요 통보문동향, TBT대응사례 등 정기 리포트 제공
- 기술규제종합포털(KnowTBT) 운영('22년 이후~)

사업추진절차

```

    graph TD
      A[제외공관 기업해외법인 기술규제정보포털사이트등] --> B[TBT종합사무국 KNOWTBT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C[WTO/FTA TBT 통보] --> B
      B --> D[TBT 분석요청]
      B --> E[TBT 분석결과]
      D --> F[TBT 종합지원센터]
      E --> F
      F --> G[수출기업]
      F --> H[관계부처]
      F --> I[업종별 협단체]
      F --> J[시험인증규정 세부 분석]
      F --> K[기업의견수렴 등 소통]
      F --> L[산업계 의견수렴]
      F --> M[통상채널대응 지원]
      F --> N[TBT 대응지원 정보 산업계 환류]
      F --> O[심층분석]
      F --> P[기초조사 : 수집정보]
      F --> Q[정보수집]
      F --> R[세계 각국의 기술규제]
      F --> S[WTO/FTA TBT 통보]
      F --> T[민간규제포털 감시]
      F --> U[애로조사]
      F --> V[국내 수출기업 요청]
      F --> W[해외규제당국포털감시]
      F --> X[기업 해외지사 협력]
      F --> Y[규제명, 규제목적, 관련규정 대상품목, 수출액등 자료조사]
      F --> Z[규제주요내용 요약]
      F --> AA[통보문 및 규제정보 번역]
      F --> AB[TBT 포털 및 메일등기업연락]
      F --> AC[규제원문 번역]
      F --> AD[주요국 유사규제 비교, 표준 인증제도 현황]
      F --> AE[알계영향 분석 및 조사]
      F --> AF[중요규제 선별 대응전략수립]
      F --> AG[통상채널대응 지원]
      F --> AH[WTO/FTA TBT 위원회 시]
      F --> AI[상대국 대표단 양자다자 협의 지원]
      F --> AJ[현지 규제당국 방문 협의 지원]
      F --> AK[기타 통상 채널 지원]
      F --> AL[TBT 동향보고서, TBT 통계 전파]
      F --> AM[주요 통보문 동향]
      F --> AN[STC(특정무역현안) 현황]
      F --> AO[TBT 대응사례]
      F --> AP[통상채널대응 지원]
      F --> AQ[WTO/FTA TBT 위원회 시]
      F --> AR[상대국 대표단 양자다자 협의 지원]
      F --> AS[현지 규제당국 방문 협의 지원]
      F --> AT[기타 통상 채널 지원]
      F --> AU[TBT 대응지원 정보 산업계 환류]
      F --> AV[TBT 동향보고서, TBT 통계 전파]
      F --> AW[주요 통보문 동향]
      F --> AX[STC(특정무역현안) 현황]
      F --> AY[TBT 대응사례]
      F --> AZ[심층분석]
      F --> BA[규제원문 번역]
      F --> BB[주요국 유사규제 비교, 표준 인증제도 현황]
      F --> BC[알계영향 분석 및 조사]
      F --> BD[중요규제 선별 대응전략수립]
      F --> BE[통상채널대응 지원]
      F --> BF[WTO/FTA TBT 위원회 시]
      F --> BG[상대국 대표단 양자다자 협의 지원]
      F --> BH[현지 규제당국 방문 협의 지원]
      F --> BI[기타 통상 채널 지원]
      F --> BJ[TBT 동향보고서, TBT 통계 전파]
      F --> BK[주요 통보문 동향]
      F --> BL[STC(특정무역현안) 현황]
      F --> BM[TBT 대응사례]
      F --> BN[통상채널대응 지원]
      F --> BO[WTO/FTA TBT 위원회 시]
      F --> BP[상대국 대표단 양자다자 협의 지원]
      F --> BQ[현지 규제당국 방문 협의 지원]
      F --> BR[기타 통상 채널 지원]
      F --> BS[TBT 대응지원 정보 산업계 환류]
      F --> BT[TBT 동향보고서, TBT 통계 전파]
      F --> BU[주요 통보문 동향]
      F --> BV[STC(특정무역현안) 현황]
      F --> BW[TBT 대응사례]
      F --> BX[심층분석]
      F --> BY[규제원문 번역]
      F --> BZ[주요국 유사규제 비교, 표준 인증제도 현황]
      F --> CA[알계영향 분석 및 조사]
      F --> CB[중요규제 선별 대응전략수립]
      F --> CC[통상채널대응 지원]
      F --> CD[WTO/FTA TBT 위원회 시]
      F --> CE[상대국 대표단 양자다자 협의 지원]
      F --> CF[현지 규제당국 방문 협의 지원]
      F --> CG[기타 통상 채널 지원]
      F --> CH[TBT 동향보고서, TBT 통계 전파]
      F --> CI[주요 통보문 동향]
      F --> CJ[STC(특정무역현안) 현황]
      F --> CK[TBT 대응사례]
      F --> CL[통상채널대응 지원]
      F --> CM[WTO/FTA TBT 위원회 시]
      F --> CN[상대국 대표단 양자다자 협의 지원]
      F --> CO[현지 규제당국 방문 협의 지원]
      F --> CP[기타 통상 채널 지원]
      F --> CQ[TBT 대응지원 정보 산업계 환류]
      F --> CR[TBT 동향보고서, TBT 통계 전파]
      F --> CS[주요 통보문 동향]
      F --> CT[STC(특정무역현안) 현황]
      F --> CU[TBT 대응사례]
      F --> CV[통상채널대응 지원]
      F --> CW[WTO/FTA TBT 위원회 시]
      F --> CX[상대국 대표단 양자다자 협의 지원]
      F --> CY[현지 규제당국 방문 협의 지원]
      F --> CZ[기타 통상 채널 지원]
      F --> DA[TBT 대응지원 정보 산업계 환류]
      F --> DB[TBT 동향보고서, TBT 통계 전파]
      F --> DC[주요 통보문 동향]
      F --> DD[STC(특정무역현안) 현황]
      F --> DE[TBT 대응사례]
      F --> DF[통상채널대응 지원]
      F --> DG[WTO/FTA TBT 위원회 시]
      F --> DH[상대국 대표단 양자다자 협의 지원]
      F --> DI[현지 규제당국 방문 협의 지원]
      F --> DJ[기타 통상 채널 지원]
      F --> DK[TBT 대응지원 정보 산업계 환류]
      F --> DL[TBT 동향보고서, TBT 통계 전파]
      F --> DM[주요 통보문 동향]
      F --> DN[STC(특정무역현안) 현황]
      F --> DO[TBT 대응사례]
      F --> DP[통상채널대응 지원]
      F --> DQ[WTO/FTA TBT 위원회 시]
      F --> DR[상대국 대표단 양자다자 협의 지원]
      F --> DS[현지 규제당국 방문 협의 지원]
      F --> DT[기타 통상 채널 지원]
      F --> DU[TBT 대응지원 정보 산업계 환류]
      F --> DV[TBT 동향보고서, TBT 통계 전파]
      F --> DW[주요 통보문 동향]
      F --> DX[STC(특정무역현안) 현황]
      F --> DY[TBT 대응사례]
      F --> DZ[통상채널대응 지원]
      F --> EA[WTO/FTA TBT 위원회 시]
      F --> EB[상대국 대표단 양자다자 협의 지원]
      F --> EC[현지 규제당국 방문 협의 지원]
      F --> ED[기타 통상 채널 지원]
      F --> EE[TBT 대응지원 정보 산업계 환류]
      F --> EF[TBT 동향보고서, TBT 통계 전파]
      F --> EG[주요 통보문 동향]
      F --> EH[STC(특정무역현안) 현황]
      F --> EI[TBT 대응사례]
      F --> EJ[통상채널대응 지원]
      F --> EK[WTO/FTA TBT 위원회 시]
      F --> EL[상대국 대표단 양자다자 협의 지원]
      F --> EM[현지 규제당국 방문 협의 지원]
      F --> EN[기타 통상 채널 지원]
      F --> EO[TBT 대응지원 정보 산업계 환류]
      F --> EP[TBT 동향보고서, TBT 통계 전파]
      F --> EQ[주요 통보문 동향]
      F --> ER[STC(특정무역현안) 현황]
      F --> ES[TBT 대응사례]
      F --> ET[통상채널대응 지원]
      F --> EU[WTO/FTA TBT 위원회 시]
      F --> EV[상대국 대표단 양자다자 협의 지원]
      F --> EW[현지 규제당국 방문 협의 지원]
      F --> EX[기타 통상 채널 지원]
      F --> EY[TBT 대응지원 정보 산업계 환류]
      F --> EZ[TBT 동향보고서, TBT 통계 전파]
      F --> FA[주요 통보문 동향]
      F --> FB[STC(특정무역현안) 현황]
      F --> FC[TBT 대응사례]
      F --> FD[통상채널대응 지원]
      F --> FE[WTO/FTA TBT 위원회 시]
      F --> FF[상대국 대표단 양자다자 협의 지원]
      F --> FG[현지 규제당국 방문 협의 지원]
      F --> FH[기타 통상 채널 지원]
      F --> FI[TBT 대응지원 정보 산업계 환류]
      F --> FJ[TBT 동향보고서, TBT 통계 전파]
      F --> FK[주요 통보문 동향]
      F --> FL[STC(특정무역현안) 현황]
      F --> FM[TBT 대응사례]
      F --> FN[통상채널대응 지원]
      F --> FO[WTO/FTA TBT 위원회 시]
      F --> FP[상대국 대표단 양자다자 협의 지원]
      F --> FQ[현지 규제당국 방문 협의 지원]
      F --> FR[기타 통상 채널 지원]
      F --> FS[TBT 대응지원 정보 산업계 환류]
      F --> FT[TBT 동향보고서, TBT 통계 전파]
      F --> FU[주요 통보문 동향]
      F --> FV[STC(특정무역현안) 현황]
      F --> FW[TBT 대응사례]
      F --> FX[통상채널대응 지원]
      F --> FY[WTO/FTA TBT 위원회 시]
      F --> FZ[상대국 대표단 양자다자 협의 지원]
      F --> GA[현지 규제당국 방문 협의 지원]
      F --> GB[기타 통상 채널 지원]
      F --> GC[TBT 대응지원 정보 산업계 환류]
      F --> GD[TBT 동향보고서, TBT 통계 전파]
      F --> GE[주요 통보문 동향]
      F --> GF[STC(특정무역현안) 현황]
      F --> GH[TBT 대응사례]
      F --
```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7,474	8,474	8,545	9,919	11,625	
'23~'27		8,474	9,245	10,086	11,003	12,00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 예결위 : 중국·신남방국가의 기술 표준분석 확대, 중국 현지 상담실 기업 애로를 고려한 지원 필요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1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2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최근 3년('20~'22년)간 외국의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어서, 해외 기술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정보 분석(기초/심층) 후, 업계에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애로를 사전 해소
* WTO 통보증가 : ('19) 3,337건 → ('20) 3,354건 → ('21) 3,966건 → ('22) 3,896 → ('23) 4,500(예상)
- 증가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통보문 기초분석 및 의견수렴, 국내업체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제동향분석, 국내제품 수출현황 분석, 기업대응 및 협상전략 마련 등을 위해 규제 심층분석(최종안 심층분석 실시) 확대 실시
- 신산업/신기술 및 화학물질분야의 규제도입전 표준동향 분석 및 지역연합체의 기술 규정 분석
- 중소·중견 기업은 TBT 인력·정보력 부족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TBT 애로기업을 찾아가는 시험/인증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컨설팅 실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22년 "우수"

12) 부처 건의사항

- ☐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에 장애가 되는 해외 기술규제(제/개정)내용을 입안 초기단계부터 조사·입수·분석하여, 관련 업계에 그 분석(기초/심층)내용을 전파(온/오프라인)하고,
- WTO 다자협상(3월 6월, 11월), 양자 협상(필요시 현지규제당국자 방문 협상)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사전에 제거(또는 완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수출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
 - 외국의 기술규제를 분석(기초/심층)하여 업계에 전파하고, 금년 21년부터는 TBT종합지원센터(시험인증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시험분석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음
 - 이후 동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건의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4,942	-	4,942				4,942	4,792	97.0	97.0		150
2021	6,970	-	6,970				6,970	6,698	96.0	96.0		272
2022	7,474	△56	7,418		±600		7,418	7,231	97.5	97.5	15	172
2023	8,474		8,474	15	±45		8,489	8,380	98.7	98.7	15	9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4,942	4,942	4,792	-						
2021	6,970	6,970	6,698	2,796			2,796			100
2022	7,474	7,418	7,231	4,887			4,887			100
2023	8,474	8,474	6,994	5,886			5,886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외여비 다수 불용, 132백만원중 28백만원 집행, 또한 국외협상 준비회의 미개최에 따른 회의자문비, 인쇄비등 수용비 일부 불용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여비 118.8백만원 전액 불용 및 집행잔액(조달낙찰차액)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존 일반연구비 편성 권고, 디브레인 시스템상 권고 미반영에 따른 출연금을 일반연구비로 전용(600백만원)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기본성 경비에 대한 제2회 추경 감액 조정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중국 현지 코로나 봉쇄로 인해 공동 연구수행기관간 시험 재료 이동이 불가하여 수행기간 종료 시점을 '23.3월로 연장함에 따라 15백만원 이월 발생, 국외여비 및 일반수용비 코로나19로 38백만원,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집행잔액(조달낙찰차액) 등 134백만원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WTO 3차 정례회의 및 기술규제대응 활동 등에 필요한 국외업무여비 45백만원 전용(일반수용비 45백만원 감액)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중국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일정 지연으로 사업기간 종료 시점을 '24.4월로 연장함에 따라 15백만원 이월 발생, 일반수용비 및 국외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18백만원,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집행잔액(조달낙찰차액) 등 76백만원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9.8.)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3736-301	210-01 (일반수용비)	45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3736-301	220-02 (국외업무여비)	WTO 3차 정례회의 및 기술규제대응 활동 등에 소요액 충당

☐ 2022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 고 1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애로해소 우수사례

◆ 對EU 수출 애로해소 ◆

- ▶ EU 배터리 지침 개정안 중, 시장출시일 라벨링 요건 완화로 약 **6조 7,000억원**(’21년 기준) 수출 애로 해소

1. 규제개요

- '06년부터 시행중인 배터리 지침을 개정 중*으로, 제안된 연도별 폐전지 수거율 향상, 추가적인 라벨링 요구사항 등을 만족해야 함

* 2006부터 적용된 배터리 지침(2006/66/EC)을 개정함

* EU/542/Add1 통보, 초안공개(20.12.10), 의견수렴(~20.2.5), 시행예정(22.1.1)

- (적용대상)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 제품(휴대폰용,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전기자동차용 등)

2. 기업의 애로사항

- 동 규정 부속서 6 Part A, 5항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는 시장출시일 정보를 제공(27.1.1적용)해야 하나, 완제품(휴대폰, ESS, 전기자동차)의 부품으로 공급되는 배터리의 경우 시장출시일 정보 제공이 어려움

개정안 부속서 6 (Part A 배터리에 대한 일반 정보)

배터리 라벨 정보:

1. 제조자의 이름, 등록된 상호 또는 상표
2. 배터리 유형, 배치(batch) 또는 배터리 또는 기타 요소의 일련 번호(명확한 식별이 가능해야 함)
3. 배터리 모델 번호
4. 제조일자
- 5. 시장출시일자**
6. 화학기호;
7. 수은, 카드뮴 또는 납 이외 배터리에 포함된 유해 물질
8. 배터리에 포함된 중요 원자재

3. 주요 대응사항

- 완제품(휴대폰, ESS, 전기자동차)의 부품으로 공급되는 배터리를 공급하는 제조사는 시장출시일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므로 동 조항 삭제 요청

참 고 2

'22년 TBT 대응 애로해소 수출 기대효과

해소 사례	국가	규제명	기대효과 ¹⁾	
			백만불	십억원 ²⁾
1	인도	컨테이너 혼합선적시 BIS 비인증 품목에 인증서 제시요구	15,562	20,137
2	유럽연합	배터리 지침 개정안 (1차)	5,353	6,926
3	인도	철강 제품에 대한 강제 인증	2,686	3,476
4	인도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규제	2,686	3,476
5	미국	PIP 물질 규제	1,376	1,781
6	유럽연합	F-GAS 규정 및 REACH 규정으로 인한 냉매 제한	770	997
7	사우디아라비아	RoHS 규제	391	506
8	칠레	자동차 안전인증 법규 개정	352	455
9	인도	EVA물질 BIS 인증	191	247
10	인도	PC물질 BIS 인증	162	209
11	인도	스티렌 BIS 인증	154	199
12	인도	ABS물질 BIS 인증	139	179
13	인도	톨루엔 BIS 인증	83	107
14	인도	아크릴로니트릴 BIS 인증	76	98
15	인도	PE물질 BIS 인증	46	59
16	태국	태국 가정용 세탁기 MEPS 규정(지정시험소 관련)	45	58
17	사우디아라비아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35	45
18	인도	무수프탈산 BIS 인증	29	37
19	인도	화학섬유 제품 인도 BIS 규제	29	37
20	인도	테레프탈산 BIS 인증	22	28
21	인도	아세톤 BIS 인증	22	28
22	인도	UHD TV 에너지효율 규제	21	27
23	인도	탄산칼륨 BIS 인증	16	20
24	인도	무수말레인산 BIS 인증	5	6
25	말레이시아	제품의 색상별 시료 제출 요건	3	3.9
26	인도	평판 및 안전유리 BIS 인증	2	2.6
27	인도	알킬벤젠 BIS 인증	1	1.3
28	오만	적합성 검증 시스템에 관한 기술규정	0.2	0.26
29	인도	EDC물질 BIS 인증	-	-
30	인도	VCM물질 BIS 인증	-	-
합계			30,257.2	39,146.06

1) 환율 기준 : '22년 평균 USD 매매기준율(1USD = 약 1,294원)

2) 산출 근거 : 규제 해당품목별 수출무역 통계(관세청, 전년 기준)

※ '22년 TBT 대응지원 활동(총 155회) : TBT질의처 공식서한(82회), WTO/TBT위원회 STC제기(40회), WTO/TBT위원회 양자회의(11회), 민간 질의서한(10회), FTA/TBT 양자회의(12회) 수행

참고 3 국가/품목별 시행중 인증제도·기술기준 조사/제공

□ 사업 배경

- 개도국의 기술규제 도입 확산에 따라 국가별 자사 제품에 적용되는 맞춤형 해외규제와 기술기준 정보 수요가 증가
- 기존 시스템은 품목 중심의 정보제공이 미흡하며 제품별 기술기준에 대한 정보 한계로 인해, 규제 전반의 통합적인 종합정보 제공 필요

< 해외기술규제맵 20개국 35개 품목 >

구분		'20년 선정기준	'21년 선정기준	'22년 선정기준
정보 수집 대상	국가	17~19년 3년간 수출 상위 국가	수출상위국, EU, EAEU 등 연합국, 신흥국 기준	중소·중견기업 수요실적, TBT통보, 정부정책 등을 다각도로 반영
	품목	산업부의 13대 주력산업과 5 신산업관련 중요 품목	수출상위 규제빈도, 중소기업 중점품목,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그린뉴딜 등 정책반영	중소기업 수요 기반의 품목 중, 안전, 에너지 등 전 세계 강제 규제빈도가 높은 품목을 중점적으로 반영
선정결과		10개국 10품목	15개국 25품목* (*5개국 15품목 신규)	20개국 35품목* (5개국 10품목 신규)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인도,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시아	독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인도네시아, 호주, 홍콩, 태국, 브라질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배터리, 블루투스 스피커, 소형단상전동기, 초음파 영상진단기, 태양광 모듈,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냉장냉동고, LED램프, 스마트TV	스마트 공기청정기, 스마트 전압검출기, 스마트 세탁기, 스마트 식기세척기, 저장식 냉온수기, 무선 진공청소기, 개인용 플라즈마 피부관리기, 웨어러블 심전도기, 러닝머신, 어린이용물놀이티켓, 오토바이용 헬멧, 담배 라이터, 승용차 타이어, 실내용 PVC바닥재, 가정용 압력솔	전기비데, 실내 CCTV카메라, 스마트모니터, 헤드드라이어, 전기매트, 블렌더, 인덕션(휴대용), 유아용 물티슈, 휴대용 마사지건, 소형 2차전지(리튬)
DB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매핑: 품목별/국가별 인증, 기술기준 매핑데이터 제공 - 인증정보: 인증명, 인증개요, 법령, 법령출처, 규제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규제품목, 인증절차 - 기술기준: 기술기준번호, 기준명(원문/국문), 공표년도, 출처, 유사국제표준 		

□ 주요 내용

○ (품목매핑확대) 기술규제 대응지원 포털 KnowTBT 內 품목 매핑 확대

- 우리나라 주력수출품목, TBT이슈품목, 정부정책 등을 반영, 정보 수요가 많은 주요 5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20개 국가 40개 품목에 대한 국가별 매핑정보를 제공
- '20~22년까지 제공되지 않은 화학, 철강, 섬유, 선박 등의 분야 및 친환경 인증, 포장 규제 등 환경문제, 탈탄소로 대두된 규제에 대한 기업수요 반영

< 현행 기술규제 정보 확대 방안(안) >

구분		'22년 품목 선정기준	'23년 신규품목 선정기준
정보수집대상	품목	중소기업 수요 기반의 품목 중, 안전, 에너지 등 전 세계 강제 규제빈도가 높은 품목을 중점적으로 반영	20~22년까지 제공되지 않은 규제 분야 및 탈탄소 관련 규제정보 기업수요 반영

○ (해외인증정보확대) 기업수출 시 요구되는 주요규제를 검토하여 해외인증제도 DB를 대폭 확대

- 기업수출 시 요구되는 주요규제*, WTO TBT기술규제 대응안전(기업간담회 기업애로)등을 고려, KnowTBT 규제 정보 공백구간을 검토하여 해외인증제도 정보 DB를 추가 구축

* 탄소중립, ESG, 4차산업, TBT동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

- TBT통보가 빈번한 산업분야 및 자체 보유한 네트워크 및 정보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외인증정보 확대 구축
- KnowTBT에서 공지되는 WTO TBT 통보/미통보문의 최종 시행문을 확인하고 이를 해외기술규제맵 정보에 반영함으로써 규제정보를 최신화

참고 4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 선제적 대응

□ 규제동향 조사·분석 대응 필요성

- 現 신산업·신기술 규제정보의 입수 조사·전파하는 지원 체계 구축필요
 - 탄소중립, 디지털전환(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 정보의 입수·조사·전파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 부재로 이를 보완하는 체계 구축 필요

* (주안점)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정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규제 도입 전 발굴 및 기업 지원



- 환경 및 디지털 규제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 및 에너지 효율 강화와 관련된 에코디자인, 화학물질 기술규제 시행에 맞춘 현안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추진 내용

- 5대 TBT* 주요 이슈 조사·모니터링
 -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주요분야에 대해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EU, 미국 등 선진국의 신산업분야 규제 및 적용표준 조사/분석
 - *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신재생에너지, 에코디자인, 화학물질
 - (조사·모니터링 방법) TBT 관련 주요 중앙 및 지방정부, 유관기관, 해외지사, 관련 기사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관련 도입 예상 정책발표 현황, 시장 반응, 현 기술 수준 내용 조사·수집

[표] 신산업·신기술 기술규제 조사를 위한 국가별 웹사이트

국가	규제당국명	웹사이트주소
EU	European Environment Agency	https://www.eea.europa.eu/
	Department of Energy	https://ec.europa.eu/energy/home_en
	Department of Research and innovation	https://ec.europa.eu/info/research-and-innovation_en
	UNECE	https://unece.org/transport/vehicle-regulations
미국	Department of Energy	www.energy.gov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www.faa.go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www.fcc.gov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www.transportation.gov

- **(TBT대응 교류회 운영)** 신산업·신기술 해외 TBT 애로의 신속해소를 위해 「TBT대응 교류회」 운영
 - **(교류회 구성)** 기업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협·단체 소관부처에 소속된 규제 정책 기술동향 표준 시장니즈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 TBT 대응 교류회를 구성하고 기업의 기술규제 현안 해소 논의 및 후속 조치방안 수립
 - * 산·학·연·시험인증기관 기술·표준 전문가, 해당 산업군 협·단체 이해관계자, 신기술 규제 정부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 담당자 등 분과별 8인 내외
 - **(신속 대응)** 신산업·신기술 규제에 대한 기업의견(문의사항 등)에 대해 표준 기술 규제 정부 지원 연계 방안 마련 등 신속한 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방안 마련
 - * 휴대폰 태블릿 에코디자인 규제 신속 검토 및 대응을 통해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개선 및 타 제품 EU 에코디자인 규제 대비 과도한 기준 개선 요청
- **(동향보고서 발간)**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EU, 미국 등 선진국의 신산업분야 주요 이슈 동향 보고서 발간 및 전파
 - 탄소중립, 디지털전환(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글로벌 정책 및 규제 동향, 표준 개발 내용을 바탕으로 도입 예상 규제의 수준, 도입 일정 예측
 - 에코디자인, 화학물질 관련 산업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이슈사항 및 대응 방향 정리
 - KnowTBT 및 유관협단체 연계 설명회를 통해, 주요 규제 관련 TBT 이슈 동향보고서, 가독성을 향상 시킨 카드뉴스 신속 전파
- **(기업 소통)** 탄소중립, 디지털전환(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신재생에너지, 에코

디자인, 화학물질 규제 TBT 현안 주요 이슈 기업 소통 체계 구축

- 기업방문, 설명회, 전시회 연계 등을 통해, 관련 규제 및 기술 동향 관련 기업 교육
- 유관 기관과 연계한 설명회 개최 및 최신 동향 정보 전파
-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TBT 대응 교류회의 규제 대응 현황 공유 및 산업계 의견수렴

< 분과별 TBT 주요이슈 동향보고서 및 카드뉴스 >

구분	TBT 주요이슈 동향보고서	카드뉴스
예시	 	 

□ 차년도 발전 방향

- **(신속 대응팀 강화)** 기존 탄소중립 TBT 대응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여 신산업·신기술 무역기술장벽 현안 발굴, 기업 소통 확대 등 보다 산업계의 니즈를 반영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의 도입 및 시행 여부에 따라 산업계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분야의 전담 분과 추가

* 사례: TBT대응협의회를 통한 휴대폰·태블릿 에코디자인 규제 신속 검토 및 대응하여 기업 수출 애로 사항 선제적 대응 완료('21.11.12)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신재생에너지 종합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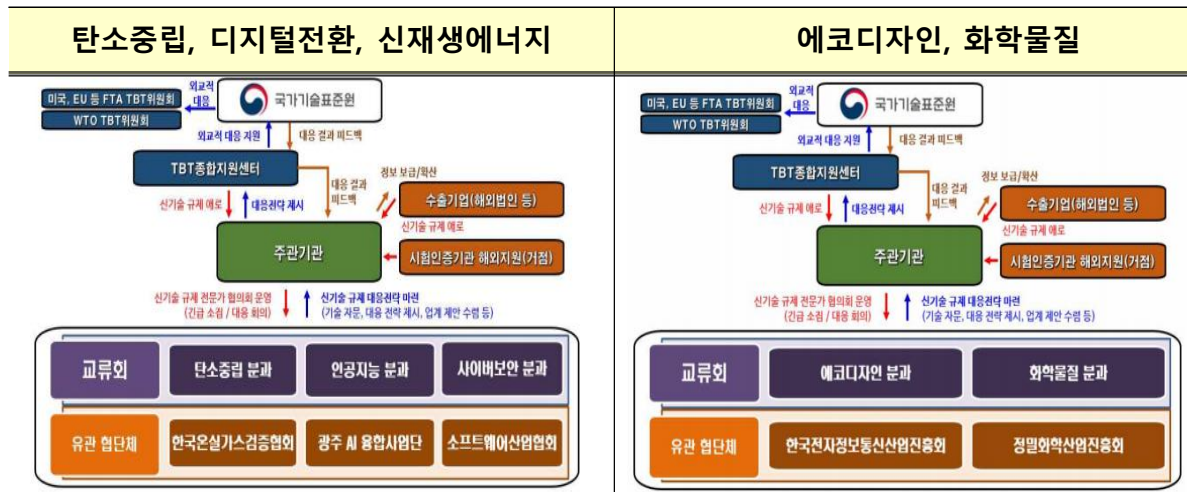
기존 기능	현안 발굴 강화	기업 소통 확대	중간 결과발표
동향보고서 발간 설명회 개최	신산업 무역기술장벽 현안 발굴	산업계 이슈 공유 및 업계 의견 소통	신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 현황 및 결과 공유
	유관 협단체 활용	TBT 대응 교류회 활용	산업계 관련 기업

<에코디자인, 화학물질 종합 대응체계>

기존 기능	현안 발굴 강화	월간 레터 발간	기업 소통 확대
동향보고서 발간 설명회 개최	신산업 무역기술장벽 현안 발굴	산업계 현안 이슈에 대한 신속 공유	산업계 이슈 공유 및 업계 의견 소통
	유관 협단체 활용	유관 협단체 전파	TBT 대응 교류회 활용

- (대응 교류회 확대) 기후환경대응을 위한 쏜분야 신기술에 대한 로드맵에 따른 기존협의회 및 신산업·신기술 규제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대응 교류회 확대 운영

< 해외기술규제 대응 교류회 운영 체계(안) >



< 해외기술규제 대응 교류회 구성(안) >

구분	분야	관련 내용	유관 협단체
도입 예정 규제의 선제적 대응	탄소중립	EU 탄소국경제도(CBAM),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 등	한국온실가스검증협회
	디지털전환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EU)인공지능, 사이버보안법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현안 중심의 대응	에코디자인	(EU) 에코디자인 규제 지속가능제품 규제	한국전자정보통신진흥회
	화학물질	REACH, RoHS, TSCA, 유해화학물질 관련 국제 협약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기대효과

- **(산업적 효과)** 규제 대응이 시급하거나 중·장기적인 대응준비가 필수적인 신산업·신기술 규제에 관한 정보를 입수·조사·분석·전파하는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으로 **수출 기업 지원 효과**
 - 주요 TBT현안에 대한 긴급 현안의 대외 협상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시 활용 가능하며, 대응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무역 역량 강화 및 국가적 TBT 기업지원 기반 강화
- **(경제적 효과)** 신산업·신기술 관련 도입이 예상되는 규제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수출기업의 TBT 애로를 해소하고 원활한 수출에 기여
 - 탄소중립, 디지털전환(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관련 수출액은 약 7조원
 - * 탄소중립 관련 對EU 수출규모('21년, 산업부 보도자료) : 철강(43억불), 알루미늄(5억불), 시멘트(140만불), 비료(480만불)
 - * 국내 디지털전환(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22년, 한국IDC) : 9,435억원
 - 에코디자인, 화학물질 관련 수출액은 약 15조원
 - * 對EU 전기·전자제품 수출 규모(출처: K-Stat) : 12,332,964,000달러
- **(정책 홍보 및 TBT 인식 제고)** 신기술 TBT 대응에 대한 정책 홍보 강화 및 수출기업이 활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TBT 최신 트렌드 제공을 통해 인식 제고
 - TBT 트렌드 보고서 발간, 뉴스레터, 카드뉴스, SNS 등 정책홍보 및 정보제공

참고 5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정 및 표준 분석 필요

□ 필요성

- **(대외적 배경)** 중동(표준화기구; GSO), 남미(메르코수르),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아프리카표준화기구(ARSO) 등 신흥국의 세계 지역 경제화 및 기술규제 강화 추세
 - * 지역연합체(별)로 단일 강제인증제도 (중동 걸프협력회의-GCC, 유라시아경제연합-EAC, 유럽연합-CE) 도입 및 공통기술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 **(중동지역)** 사우디 등 중동 7개국은 2025년 전후로 화장품, 기계류, 유해물질제한(RoHS), 건축자재, 전자파적합성 등 18개* 분야에서 단일인증인 GSO 인증을 강제화할 예정
 - * GSO(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회원국 :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예멘(걸프 7개국)
- **(중남미지역)** 브라질 주축의 메르코수르*는 '22년부터 4개국의 공통 기술규정/표준도입 확대 예정으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각 국가마다 강제인증 시행예정
 -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對메르코수르 수출 특징: 약 66억 달러규모('19년) / 자동차 부품, 반도체가 약 99%
- **(유라시아지역)** 유라시아연합 5개국은 공통기술규정 제·개정을 통하여 신규 인증 품목이 증가하는 추세
 - * 對유라시아연합 수출 특징: 약 80억불규모('19년), 한국 상품의 인지도 및 삼성, 현대 등 한국 대기업 이미지 상승 중으로 지속적 수출 증가 예상 (주수출품목: 승용차 및 관련 부품, 타이어, 기계보일러, 전자제품 등)
- **(대내적 배경)** 기술 규제가 급격히 늘고 있고 규제 당국자 접촉 및 규제정보 입수가 쉽지 않아,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제 대응체계가 부족한 상황
 - 국내 산업계는 중점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해외 기술규제 분야로 '신흥시장국 대상 기술규제(36.4%) '지역연합(체) 규제(34.6%) 대응을 필요

□ 주요 추진 내용

- **(장기 미해소 규제 해소)** WTO TBT 위원회, FTA TBT 등 공식 절차로 제기하였으나 해소되지 않은 장기 미해소 규제에 대해 규제당국 간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기술규제 애로 해소 (5개국 규제 개선 4건, 개선검토 3건, 정보확인 5건 애로 해소)

국가	규제명	기업애로 해소 성과	협의결과	'21년 수출 (백만불)
인도	전기전자 안전인증 (냉장고)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해 관련 표준을 개정작업 중	규제개선	38
		냉장고 품질관리명령 규제는 22년 1월 시행 예정	정보확인	
러시아	자동차 안전인증	동차 안전규제('22년 7월시행)에 대한 오차방법 계산에 대한 규제내용을 삭제함	규제개선	4014
		교통사고 상황에 대한 '판단, 등록, 전송해야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제공	정보확인	
		E-Call 시스템에 대한 정보/경고신호 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인지에 대한 정보제공	정보확인	
		최소 안전요건 마련 등 규정 부록에 명시하도록 함	규제개선	
인도네시아	전기전자 안전인증	국제표준(IECEE CB) 수용에 대해 내부논의 중이나 완전 수용은 불가능함	정보확인	870
	공산품 라벨링	신규 라벨링 규제에 대해 건설장비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확인함	규제개선	1,023
중동(GSO)	기계장비 기술규제	기계장비 기술규제의 시행일 및 유효기간에 대해 '22년 이후 품목간소화로 적용할 예정	정보확인	465

- **(개선사례, 인도)** 냉장고에 적용되는 인도 표준(IS 1476, IS 15750)의 고전압 시험기준을 국제표준과 같이 2초에서 1초로 개정 예정*

* 현재 국제표준 기준과의 부합화를 위해 관련 표준을 개정 중임을 확인

- **(개선사례, EAEU)** ①비상호출시스템(E-Call 시스템) 장치의 국제표준 시간과의 동기화 시 오차범위 평가방식 및 ②고도자율주행기능 차량의 최소 안전요건 확보 관련 규정 삭제 예정*

*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관련 기업 공청회를 진행 결과 해당 규정은 삭제하기로 함

- **(사전 정보제공)** 신설·개정 규제동향 정보를 사전에 전파하여 모호한 규제정보 명확화(유권해석 등)로 기업의 TBT 역량 제고

- **(BIS 최신 규제 동향)** 전기차,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 인프라,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및 빅 데이터 등 신산업 16개 분야에서 표준 개발·도입 예정*

* 인도표준국 내 신산업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개정 진행 중인 세부 분야·제품별 표준 정보 확인

- **(SNI) 전기전자*** ·철강**의 최신 SNI 표준이 개발 중으로 22년 적용 예정

* IEC 60335-1(가전제품의 안전-일반요구사항) 및 IEC 60335-2-24(냉장고, 아이스 메이커 안전 기준)

** SNI 8986:2021(기계구조용 열간압연 탄소강), SNI 8991:2021(전기도체 및 덕트용 알루미늄 합금봉) 등

□ 차년도 발전 방향

- **(신흥연합 협력 정례화)** 중동, 중남미 및 유라시아 등 시장성이 큰 국가연합에 대해 정례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인 정기적 교류를 통한 TBT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 선제적 정보교류, 애로해소, 전문가 인적교류 등 국가연합 별 세부 Action Plan을 마련하고, 이행 현황에 대해 정기적 점검 실시
- 향후 CPTPP, RCEP, 태평양동맹, 안데스공동체 등 미발굴 연합체들과의 협력 교두보 마련을 위한 Road-Map 제시

기존		정례화 (신설)	신속 애로해소 (신설)	협력프로그램운영 *당국자 위주속 현지 기업간담회 및 국내 설명회
신흥 지역연합 규제분석 중심	+	매년 Action Plan 선정 및 정례안건 협력	협력 기반 양자회의를 통한 능동적 규제해소 규제 Q&A Hot-line 활성화	<div>[우리측 방문 시]</div> <div>최신 규제정보 상호교류 현지 기업간담회 등</div> <hr/> <div>[상대측 방문 시]</div> <div>국내 규제자 초청 설명회 및 기업-규제자 차담회 등</div>

- **(애로해소 채널)** Action Plan을 근거로 한 정기 양자회의 개최, 정기적 교류를 기반으로 한 신속·정확한 규제 애로 해소 채널로 활용
- **(홍보·전파 강화)** 규제당국과의 규제이슈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에 전파하여 기업이 발생가능한 규제장벽을 선제적으로 대응
 - * △규제자 초청 직접 질의응답의 장 마련, △기업-규제자 차담회 개최, △對지역연합 한국 수출기업 정기 Q&A레터 발송 및 회신 체계 구축, △현지 방문 시, 현지 기업 (해외지사, 인증대리인 등) 간담회개최 및 최신 규제정보 공유·정책홍보 등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기대효과

- **(TBT 역량 강화)** 국제 경쟁력 강화와 기술규제 정보공유를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
 - 해당국 기술규제 당국간 상시 연락망 등을 활용한 효율적 운영으로 우리 측 규제현안을 규제당국과의 직접 협의를 통해 실질적 규제해소 가능
 - 최신 기술규제 전파로 대·중소기업의 기술규제 해소·완화 및 TBT 관심도 및 참여 확대

참고 6 중국 및 新남방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표준분석

1. 중국 및 新남방주요 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기술표준분석

- 중국 기술표준(GB)분석 확대 및 베트남, 인니, 인도의 신남방지역 수출확대 및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 품목의 기술표준 분석 필요
 - (1) 중국표준(GB)분석 : 전기차배터리, 빅데이터 신산업표준분야 및 수출 유망소비재

예시)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되는 강제규제: 안전, 순환수명, 호환성, 재활용, 성능

제 품	분야	적용 국가표준
전기차 배터리	안전	GB 38031
	순환수명	GB/T 31484-2015
	호환성	GB/T 34013-2017
	재활용	GB/T 34014
	성능	GB/T 31486-2015, GB/T 31467.1-2015, GB/T 31467.2-2015

(2) 베트남표준(TCVN)분석 : 주방가전, 페인트 등 생활소비재 표준

(3) 인도네시아표준(SNI)분석 : 전기온수기, 무선통신 기기 등 표준

(4) 인도(ISI) 분석: 가전, 배터리, 온수기 등 표준

국가(표준명)	22년 주요 표준분석 품목
중국(GB)	<p>(유망소비재) 치약, 만능요리기, 기능성 생활 가전제품*</p> <p>* 에어프라이어, 전기오븐, 살균소독기 등 분석(코로나 19로 인한 재택 및 홈코노미 제품 성장추세 참고: 2021 KOTRA 권역별 진출전략 중국편)</p> <p>(신산업) 전기차 배터리, 신에너지차량* 안전 및 성능표준, 빅데이터 인터페이스 기본요건, 빅데이터 컴퓨팅 시스템 통용 요건, 저장공간 및 프로세싱 시스템 기능 시험 요구사항 등</p> <p>*신에너지차: 신형 동력시스템으로 완전히 또는 주로 신재생 에너지로 구동하는 자동차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순수전기자동차, 연료전지(수소) 자동차 등</p>
베트남(QCVN, TCVN)	<p>(강제규제) 노트북, 헤어드라이기, 믹서, 전기스토브, 에어컨</p> <p>(강제규제 신규추가* 품목) 페인트, 형광등, LED조명기구 등</p> <p>*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20.7.31 램프 및 페인트 유해물질 관리방안 발표</p>
인도네시아(SNI)	<p>(강제규제) 주방용 전동기기, 액체가열기, 에어컨, 냉장고 등</p> <p>(신규규제 신규추가* 품목) 대형 TV, 액티브 스피커, DVD플레이어 등</p> <p>* 인도네시아 표준화기관(BNS)은 오디오/비디오 기기의 SNI안전규격 신규추가 규제를 발효('19.6.26부터~), 기존 전자파 분야에 안전분야의 시험을 추가로 수행하여, SNI인증을 획득해야 수출이 가능</p>
인도(ISI)	<p>(강제규제) 에어컨, 배터리, 온수기, TV 등</p> <p>강제인증제도형식(SCHEME)별 대상조사 등</p>

1 중국의 공업표준화 표준업무 요점

- (개요) '21년 공업 및 정보화부는 제조 강국, 인터넷 강국, 품질 강국, 데이터 강국의 건립을 취지로 전 산업을 아우르는 표준을 제정할 것을 추진하는 업무요강을 발표
- 중점 및 기초 공익 강제성국가표준 800여개 이상을 제개정 할 예정이며, 10개 이상의 항공, 선박, 정보화, 생태계, 데이터 산업 등을 망라
- 주요 목적 및 내용

제·개정 분야	세부내용
공급망 개편	안정적인 공급망 개편 계획 중소기업 육성 정책
신소재 관련 표준 제정	항공엔진용 고온 합금 재질, 민간 항공기, 알루미늄 재질, 그래핀, 전자 전용재료, 천연섬유재료, 리사이클링 섬유재료
공업 표준 제정	히트류 철강 환경기능재료, 화학비료, 전호로 제강, 절삭기계, 데이터 시스템, 의료기기, 기초부품, 전자원기기, 공업 소프트웨어 및 전용설비
소비재 표준 제정	자동차안전, 유해물질함량제한(RoHS), 에너지효율 및 제품에너지효율, 시멘트, 석탄 및 형광석선별, 무선충전설비 및 무선전자파기술요구
공업 지능화 관련 표준 제정	스마트제조, 스마트 해운, 액화기체해운, 전력설비, 석화범용장비, 중형기기, 에너지절감환경설비, 농업설비, 비료, 실버용품, 철강물류
로봇 표준 제정	로봇에 대한 범용적 표준 마련 (공업로봇, 청소로봇, 소방서비스로봇, 작업로봇)
자동차 표준 제정	승용차, 상용차, 위험물질 운반 화물자동차 등 주요부품
경공업 표준 제정	방직, 경공, 식품
신산업 정보통신 표준 제정	5G 및 그 이상의 이동통신 설비 관련 서비스 및 관리, 고속 인터넷, 미래인터넷, 사물인터넷(IoT), 이동사물연결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 양자정보, 위성기술 및 항공위치 관련

□ 시사점

- 본 업무요강은 중국의 또한 기존의 공업, 제조업을 지능화하고 차세대 신산업의 강제성국가표준을 정립할 것이라는 계획이 담겨있어, 관련 제품의 표준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2 베트남 표준 및 기술규정 현황

- **(표준화기관)** 품질기술원(Directorate for Standards)과 기술표준원(STAMEQ, Metrology and Quality of Vietnam)은 베트남의 표준화, 측정, 품질관리분야 담당
- **(표준개요)** 강제사항인 기술기준(QCVN,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738건 및 국가표준(TCVN, National Technical Standards) 11,363건 등 총 12,000여 건의 표준을 운영 중임

* 관련법률 : No: 68/2006/QH11: On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Appendix-1

- **(표준분야)** 제품 및 상품(연료, 헬멧, 장난감, 전기전자, EMC, 철강, 건축자재 등), 서비스 및 프로세스, 환경, 사회경제활동 등 총 5개 분야가 해당

* 국제표준인 IEC, ISO와 베트남 강제표준 간 조화비율은 전체의 약 38%이고, 자국언어로 표준을 발행함에 따라 별도의 표준내용 확인 필수

- **(인증제도)** 대표적인 강제인증으로는 CR Mark인증(안전 및 EMC)이 있고, 대상 품목군은 현재 12개 품목군*임(인증기간 3년) 102종제품**에 해당

* (1) 가솔린 바이오 및 디젤, (2) 헬멧, (3) 장난감, (4) 전기제품, (5)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 (건축자재), (6) LPG, (7) 전자파 제품(EMC), (8) 시멘트 클링커, (9) 시멘트와 콘크리트용 혼화제, (10) 비료, (11) 식품, (12) 가축사료 등 12개 품목

** 102종 제품의 경우, 12개 품목군에 적용되는 TCVN(TCVN이 없는 경우 상위강제규정인 QCNV기준) 기준 제품군 수 산출

- CR Mark인증에서 요구되는 품목군별 기술규정은 52종이고, 각 규정 내 적용표준 수는 1~20건으로 제품마다 상이
- 그 밖의 강제인증으로는 에너지효율(VNEEP), 통신(VNTA), 의료기기허가(MOH) 등이 존재

- **(주요 기업애로)** 인증제도의 복잡성*, 既 제공 중인 규제정보의 부정확함** 등 수출에 필요한 규제 정보 자체의 물리적 부족으로 기업애로 부상

* CR마크 인증 취득 형식이 제품별 1-8단계로 구분, 취득절차 상이

** 규제도입 신흥국으로 에너지 효율, 무선통신, 유해물질제한(RoHS) 등 제품 별 다중분야 규제 적용 추세이며 매년 새로운 규제의 도입, 기존규제의 개정이 활발히 진행

3 인도네시아 표준 및 기술규정 현황

- **(표준화기관)** 국가표준화기구(BSN,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 는 대통령령(President Decree) No. 12/1997)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
 - 인도네시아의 표준 개발 업무를 담당하여 계측, 표준, 시험 품질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규격을 개발
- **(표준개요)** 국가표준화기구(BSN)에 의해 국가표준(강제)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를 운영 중에 있고, 12,405건으로 집계('20.4월)¹⁾
- **(표준분야)** 일반, 서비스, 환경 및 안전, 산업(전기전자, 통신, 철도, 선박, 비행기, 건축자재, 화학, 의료 등), 제품 및 서비스, 시험방법 등 총 42개 분야가 해당
 - * 국제표준인 IEC, ISO와 SNI표준 간 조화비율은 전체의 16%(1,955건)
- **(인증제도)** 대표적인 강제인증으로는 국가표준명과 동일한 SNI인증(Standar Nasional Indonesia)을 운영하고 있고, 대상 품목군은 현재 205개 품목군*, 500개 제품 내외임(인증기간 3년)
 - SNI인증에서 요구되는 품목군별 기술규정은 205종이고, 각 규정 내 적용 표준은 1건~20건으로 제품마다 상이
 - * 농업 및 식품, 철강, 비료, 화학, 신발, 가죽, 전기전자, 섬유 및 의류 등 205개 품목
 - ** 우선 분석대상 표준 : 인도네시아 : 강제표준(SNI) 12,000 종 중 (SNI인증(강제) 관련 기술 규정 205종) + (대상제품 500개 × 표준 5종) = 2,705종
 - 그 외 강제인증으로는 통신승인(SDPPI), 할랄인증(Hallal), 의료기기허가(DOH) 등이 존재
- **(기업애로)** 국제표준인증 미인정 및 국외 시험인증 진행 불가*등 인증취득에 제약이 많아, 기업애로 부상
 - * 국제표준규격인증을 취득했더라도 SNI 강제 취득 대상이면 인도네시아 현지 LSPro 시험기관을 통해 인증을 취득해야 수출 및 유통 가능, 이에 비용·시간 부담이 증가
 - **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CB성적서 불인정으로 인해, 오로지 현지 시험결과만 인정

1)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정보사이트 : <http://sispk.bsn.go.id/RegulasiTeknis/SniWajib> 검색

4 인도 표준 및 기술규정 현황

- **(표준화기관)**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은 1947년 설립된 ISI(Indian Standards Institution)에서 BIS Act 의해 1986년 개칭된 정부기관
- **(표준개요)** 인도표준국에 의해 국가표준인 IS(Indian Standards) 표준 19,500여건을 운영 중임('21년 4월 현재)
- **(표준분야)** 화학, 의료기기, 공학, 전자기기, IT, 식품, 섬유, 생산, 경영, 시스템, 서비스 등 분야의 표준이 있음
 - * 국제표준인 IEC, ISO와 IS표준 간 조화비율은 전체의 26% ('18년 3월 5049건)
- **(인증제도)** 대표적 인증으로는 ISI 인증(Mark Scheme)*과 CRS 강제등록(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을 운영하고 있고, 대상 제품 수는 각 352개, 75개 제품임(인증기간 2년)

- 외국산 제품은 인도 FMCS(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 절차에 따라 ISI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 Scheme I : 시멘트, 가전기기, 배터리, 식품,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등 352개 품목

** Scheme II : AV, IT기기, 태양광 발전시스템, 저전압 스위치 등 75개 품목

인증스킴	명칭	해당품목	품목개수	표준개수
Scheme I	ISI 마크인증	시멘트, 가전제품, 배터리, 식품 및 관련제품,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변압기, 전동모터, 가정용 온수기, 주방용품, 에어컨 등	39류 352종	351개
Scheme II*	CRS 강제등록	AV, IT기기, 태양광 발전시스템, 저전압 스위치 등	75종	37개
Scheme IV	적합성 인증서	변압기의 스템핑 / 라미네이션 / 코어 자전거용 역반사 장치	2종	4개

- 그 외 강제인증으로는 통신인증(TEC), 무선승인(WPC ETA), 에너지효율(BEE), RoHS 인증(EPR), 차량부품 안전인증(AIS),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인증(CDSCO) 등이 있음
- **(기업애로)** 인도의 시험기준은 국제기준 채용정도가 낮고, 현지 시험소 시험결과만 인정
 - 인증 획득 시 현지대리인이 요구되고, 인증비보다 과도한 컨설팅비 및 인증 취득기간 소요(6개월 이상) 등 정보부족 및 과도한 규제운용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가 발생

참고 7 한·중 FTA TBT 종합지원 '표준분석' 실적

□ 최근 5년('18~'22) 중국 표준분석 실적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중국 표준분석	108종	94종	130종	110종	111종	553종
중국 규제가이드북	3권	5권	5권	4권	2권	19권

* '16년의 경우 사업 착수로, 표준의 내용분석이 아닌 한-중간 표준 일치정도를 비교했음

□ '22년 중국 표준분석 주요 실적

'22년 사업 주요 성과		
중국 기술규제·표준 분석	분석 대상표준(GB) 및 비교표준(KC등), 중국 규제 조사	111종
	품목별 중국 기술표준 규제맵	50종
	중국 수출·인증 가이드북	2권

- '21년도 수출기업 TBT 애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분석 희망 제품 중 선정지표(시급성/파급성/의존성/시장성 등)를 고려하여 분석 순위 선정
-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의 111종 표준을 분석, 기술표준 규제맵을 제작(50종)하여 규제포털(KnowTBT)에 제공하고, 주요 주제별 가이드북을 제작/배포(2종)

[22년도 분석대상 중국 품목]

제품군명	세부 제품명
전기, 친환경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기자전거 충전기,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차량용 타이어, 와이퍼, 시트, 휠 등
직물, 의류	외투, 속옷, 오리털 이불 등
가전제품	환기팬, 토스트기, 제빵기구, 착즙기, 믹서기 등
LED, LED 컨버터	책상 스탠드, LED 조명등, 램프 등
위생용품, 미용용품	전동칫솔, 구강 세정기, 치약 등

[표준분석 결과물 예시]

가이드북	표준길라잡이
	

참고 8

국내 FTA TBT 추진 현황 ('23.1월 현재)

단 계	FTA	이행관련 주요사항
발효된 FTA (21개)	- 한-칠레('04.04.)	o 칠레 전기·전자제품 인증절차 개선
	- 한-싱가포르('06.03.)	o 한-싱 MRA 관련 안전인증기관 지정 갱신
	- 한-EFTA('06.09.)	o 한-EFTA FTA 공동위원회 TBT 분과
	- 한-ASEAN('09.05.)	o 한-ASEAN TBT 대화체
	- 한-인도(CEPA, '10.01.)	o 한-인도 TBT/SPS 공동작업반
	- 한-EU('11.07.)	o 한-EU FTA 전기전자규제대화체, 상품위원회
	- 한-페루('11.08.)	o 한-페루 FTA TBT 위원회
	- 한-미('12.03.)	o 한-미 FTA TBT 분과 위원회
	- 한-터키('13.05.)	o 한-터키 FTA 공동위원회 TBT 분과
	- 한-호주('14.12.)	o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 TBT 분과
	- 한-캐나다('15.01.)	o 자동차, 목재 등 기술규제 정보교환
	- 한-중('15.12.)	o 한-중 FTA TBT 분과 위원회
	- 한-뉴질랜드('15.12.)	o 한-뉴질랜드 FTA TBT 분과 위원회
	- 한-베트남('15.12.)	o 한-베 FTA TBT 분과 위원회
	- 한-콜롬비아('16.07.)	o 콜롬비아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정 협상
	- 한-중미('21.03.)	o 한-중미 FTA TBT 위원회
	- 한-영 ('21.01.)	o 한-영 FTA TBT 분과 회의
	- RCEP ('22.02.)	o 아세안, 인도 등 FTA/TBT 협정 개선 효과
	- 한-이스라엘 ('22.12)	o 한-이스라엘 TBT 위원회
	- 한-캄보디아 ('22.12)	o 상품 챗터 내 TBT 관련 조항 마련
	- 한-인니('23.1.)	o 상품 챗터 내 TBT 관련 조항 마련
타결된 FTA (1개)	- 한-필리핀('21.10.)	o WTO TBT 협정상 권리·의무 확인
협상진행 FTA (6개)	- 한-GCC('08.07.~)	o 제6차('22.6월) 협상에서 TBT분과 타결
	- 한-중-일('13.03.~)	
	- 한-에콰도르('16.01.~)	o 제7차('22.9월) 협상에서 TBT분과 타결
	- 한-메르코수르('18.09.~)	
	- 한-말레이시아('19.07.~)	
	- 한-우즈베크('21.04.~)	
재개, 개시 여건조성 (4개)	- 태평양동맹PA('19.09.) : TOR 협상 중	
	- EAEU('17.09.) : 공동실무작업반설치 합의	
	- 한-UAE('21.10.): CEPA 추진 선언	
	- 환태평양 CPTPP('21.12.) : CPTPP 가입 선언	

참고 9 中상해 TBT대응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현지대응

□ '21년 사업 주요 내용

- (사업명) 중국 상해 TBT 대응지원센터 운영 및 현지 간담회·설명회 개최
- (범위) 중소기업 규제 정보의 신속 파악 및 현지진출기업의 애로 대응지원을 위한 상설 대응 협력체계 구축·운영
- (목표) 상시기업애로접수·지원, 규제대응 협의회 개최·운영 및 中정부간 협력채널 구축·운영

구분	내용	비고
기업애로지원	- 상시 접수지원·대응 : 10건	- 현지 기업 대상 정기 애로 수요조사 실시 예정('21.6월~)
현지 정기 협의회 개최·운영	- 간담회: 1회(7월) - 설명회: 1회(10월, 화상형식)	- ('20) COVID-19로 한-중 양국 온-오프라인 영상 행사로 대체 운영 - 동영상 방문자수는 864명, 조회수는 1,158건('20.11.24 기준) - KOTRA 상하이무역관과 협업 개최('18~)
홍보	- 2회(7월, 11월)	- KOTRA홈페이지 활용한 현지 기업 대상 소식지 발송
협력채널 운영	- 中정부간 협의회 개최(1회) - 네트워크관리카드(25건)	- 공업정보화부 구축계획 - 규제, 시험 관련 정부, 민간 등

□ '22년도 사업추진 주요내용

- (목표) 현지 TBT지원센터의 기업지원역량 제고 및 中정부간 협력채널 구축 확대

구분	내용	비고
기업애로지원	- 상시 접수지원·대응 : 15건	- 현지 기업 대상 정기 애로 수요조사 실시 예정('22.6월, 9월)
현지 정기 협의회 개최·운영	- 간담회: 2회(7월, 11월) - 설명회: 1회(10월, 화상형식)	- COVID-19 상황에 따라 회의형식 변경(영상/대면) - 최신 발표 규제, 정책 관련 中전문가 초청 개최
홍보	- 3회(7월, 9월, 11월)	- KOTRA홈페이지 활용한 현지 기업 대상 소식지 발송
협력채널 운영	- 中정부간 협의회 개최(1회, 11월) - 네트워크관리카드(25건)	- 공업정보화부(지속대응), 환경부 구축계획 - 2차 기업간담회 개최시 병행 예정 - 규제, 시험 관련 정부, 민간 등

참고 10 '22년 「인도 현지 TBT 대응 협의체」 운영

□ 추진 배경

- 최근 인도의 TBT 급증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발생

(‘20년)

- 에어컨 및 관련 부품인증 시험·인증 TBT (수출액 약1조1,131억), 화학물질 5종 시험·인증 TBT (수출액 : 약1,081억)

(‘21년 상반기)

- 평판 및 안전유리 시험·인증 TBT (수출액 약3천억), 냉장기기 품질관리 명령 TBT (수출액 약2조원), 화학물질 3종 시험·인증 TBT (수출액 약1,066억) 외 2건

- 인도의 시험인증 TBT 최신정보를 현지에서 신속하게 수집·확인하여,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TBT 애로 해소* 지원 위해 현지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인도 수출 기업의 주요 애로 사항 (‘20. 8월 온라인설명회)

- 139. 인증정보, 인증 전문 대행기관 부족, 높은 인증 컨설팅 비용, 과도한 인증신청기간(6개월)
- 140. 국제기준과 조화도가 낮은 시험 규격요구사항, 현지 지정 시험소에서 시험 요구
- 141. 신산업제품, 우리기업 수출유망품목등 신제품의 규제 도입시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

□ 주요 내용

- 인도 현지 국내기업 진출 거점지역(첸나이 등)을 중심으로 ‘인도 현지 TBT 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규제정보 수집, 애로지원활동

- (TBT 지원체계 구축) 旣 진출 기관*, 현지 기업, TBT 지원팀으로 「인도 현지 TBT대응 협의체」를 구성, TBT 애로해소 상시 지원체계 마련

* 인도 뭄바이, 첸나이 CEPA 활용지원센터, 무역협회 뉴델리지부 등旣진출 기관과의 협업

- (규제대응 기업간담회) 「인도 현지 TBT대응 협의체」 주관으로 현지 진출 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TBT애로 발굴*

* 정부의 對인도 TBT규제대응활동 소개, 현지기업이 겪는 미통보 기술규제 등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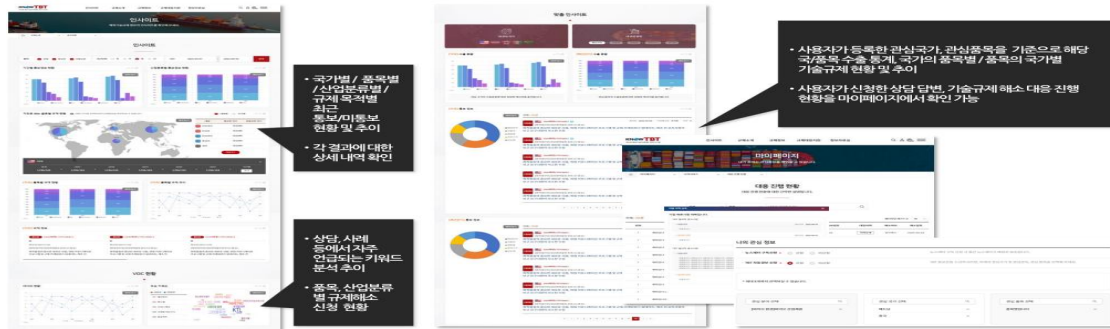
- (현지기관 설명회) 현지 규제기관 인허가 담당자들과의 협력채널을 마련*, 상시 규제정보 입수 및 기업 전파를 위한 설명회 개최 등

* 인도표준원(BIS) 등의 규제당국과 협업하여 현지설명회 개최,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 도모

참고 11 KnowTBT 포털 운영

□ 국내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 및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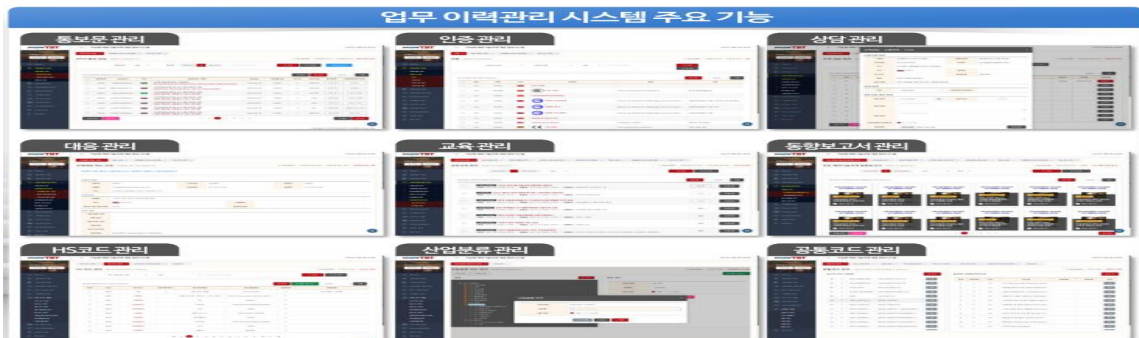
-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인화 서비스(국가별, 품목별) 구현으로 기업(사용자)의 취급 품목에 적용되는 맞춤형 기술 규제 정보 선제적 제공



사용자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 화면

□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업무지원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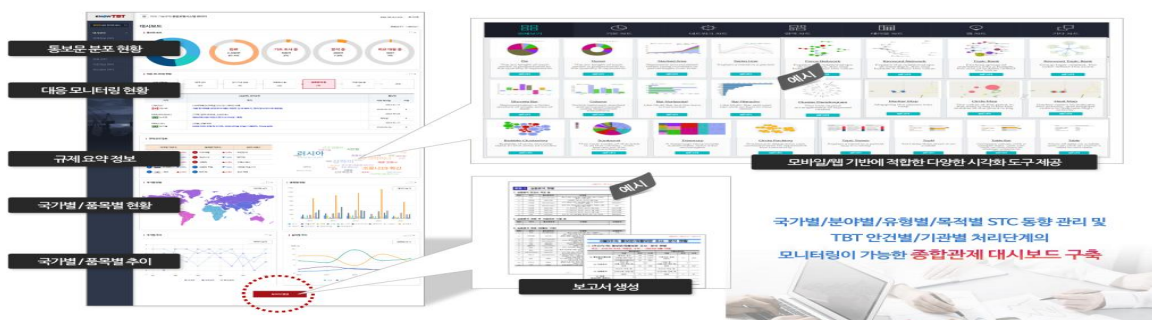
- 체계적인 업무이력관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의 빠른 의사결정 지원



업무이력관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품질 제고와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정보 제고

- TBT 관련 해외 규제 당국과 협상·협력 이력 등 TBT 대응 현황, 기업 TBT 애로 해소사례 등을 종합 관리하여 정책 품질 제고



업무이력관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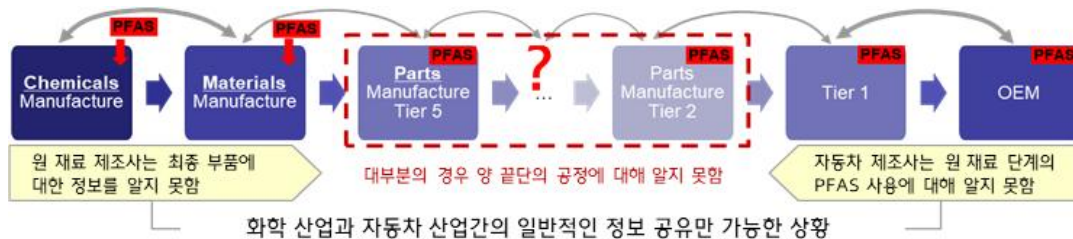
참고 12 주요 수출국의 화학물질 규제정보 조사/대응

□ 필요성

- **(대외적 배경)** EU화학물질청 1천여종 PFAS(과불화합물) 사용금지 예정 등으로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제품 등 우리 수출 전방위제품에 영향
 - * 스톡홀름협약에 의한 POPs(잔류성오염물질)도 물질 자체뿐 아니라, 포함 제품까지 확대 동향
 - ** EU, 미국 등 선진국 외의 신흥시장국의 화학물질 규제정보 입수에 애로
- **(대내적 배경)** 화학물질 해외규제 동향에 따라,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국내업체에서 TBT 대응지원 요청
 - * '22년 화학물질교류회에서 기업 제기

□ 주요 추진 내용

- **(신흥국 모니터링)** 산업군별로 필요한 모니터링 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여 신흥시장국의 규제정보 모니터링
- **(공급망단계별 화학물질 사용정보 조사)** 완제품의 규제 화학물질 포함총량 산출을 위해 소재, 부품, 완제품 단계별 사용정보 조사연구



□ 발전 방향

- **(민·관 협력 강화)** 기업, 전문가, TBT종합지원센터, WTO 중앙사무국 등으로 구성된 화학물질교류회를 통해 규제정보 모니터링, 획득한 정보의 대응사업 개발,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응 협력 지속적 추진

□ 기대효과

- **(TBT 사전대응)** 수출 주력 산업군별로 EU, 미국 등의 화학물질 규제 사전준비로 TBT 애로 해소

사 업 명
(22)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37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술규제 개혁선진화 체계구축 (3736-302)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정의용	-	신명철
		기술규제조정과	043-870-5550	-	043-870-555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구축 (3736-302)	1,138.7	1,178.0	1,060.0	1,060.0	118.0	1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48.0	1,148.0	1,138.7 [1,138.7]	-	9.3	1,178.0	1,178.0	1,170.0 [1,170.0]	1,178.0	1,170.0 [1,170.0]	-	8.0	1,060.0	
· 기술규제영향평가	572.0	572.0	571.9 [571.9]	-	0.1	591.6	591.6	589.9 [589.9]	591.6	589.9 [589.9]	-	1.7	529.0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171.0	171.0	161.9 [161.9]	-	9.1	174.0	174.0	169.2 [169.2]	174.0	169.2 [169.2]	-	4.8	161.0	
· 인증제도 실효성 검 토	405.0	405.0	404.9 [404.9]	-	0.1	412.4	412.4	410.9 [410.9]	412.4	410.9 [410.9]	-	1.5	370.0	
○ 비목별 분류(합계)	1,148.0	1,148.0	1,138.7 [1,138.7]	-	9.3	1,178.0	1,178.0	1,170.0 [1,170.0]	1,178.0	1,170.0 [1,170.0]	-	8.0	1,060.0	
· 일반수용비(210-01)	33.1	33.1	24.2 [24.2]	-	8.9	33.1	33.1	31.7 [31.7]	33.1	31.7 [31.7]	-	1.4	33.0	
· 임차료(210-07)	10.0	10.0	9.8 [9.8]	-	0.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10.0	
· 국내여비(220-01)	4.7	4.7	4.7 [4.7]	-	-	4.3	4.3	4.3 [4.3]	4.3	4.3 [4.3]	-	-	4.0	
· 사업추진비(240-01)	9.2	9.2	9.2 [9.2]	-	-	8.4	8.4	8.4 [8.4]	8.4	8.4 [8.4]	-	-	9.0	
· 일반연구비(260-01)	1,091.0	1,091.0	1,090.8 [1,090.8]	-	0.2	1,122.2	1,122.2	1,115.6 [1,115.6]	1,122.2	1,115.6 [1,115.6]	-	6.6	1,004.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48.0	1,148.0	1,138.7 [1,138.7]	-	9.3	1,178.0	1,178.0	1,170.0 [1,170.0]	1,178.0	1,170.0 [1,170.0]	-	8.0	1,060.0	
· 기술규제영향평가	572.0	572.0	571.9 [571.9]	-	0.1	591.6	591.6	589.9 [589.9]	591.6	589.9 [589.9]	-	1.7	529.0	
- 일반수용비(210-01)	4.0	4.0	4.0 [4.0]	-	-	4.0	4.0	2.7 [2.7]	4.0	2.7 [2.7]	-	1.3	4.0	
- 사업추진비(240-01)	4.0	4.0	4.0 [4.0]	-	-	3.6	3.6	3.6 [3.6]	3.6	3.6 [3.6]	-	-	4.0	
- 일반연구비(260-01)	564.0	564.0	563.9	-	0.1	584.0	584.0	583.6	584.0	583.6	-	0.4	521.0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중소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171.0	171.0	[563.9] 161.9	-	9.1	174.0	174.0	[583.6] 169.2	174.0	[583.6] 169.2	-	4.8	161.0
- 일반수용비(210-01)	29.1	29.1	[161.9] 20.2	-	8.9	29.1	29.1	[169.2] 29.0	29.1	[169.2] 29.0	-	0.1	29.0
- 임차료(210-07)	10.0	10.0	[20.2] 9.8	-	0.2	10.0	10.0	[29.0] 10.0	10.0	[29.0] 10.0	-	-	10.0
- 국내여비(220-01)	3.7	3.7	[9.8] 3.7	-	-	3.0	3.0	[10.0] 3.0	3.0	[10.0] 3.0	-	-	3.0
- 사업추진비(240-01)	2.2	2.2	[3.7] 2.2	-	-	2.0	2.0	[3.0] 2.0	2.0	[3.0] 2.0	-	-	2.0
- 일반연구비(260-01)	126.0	126.0	[2.2] 126.0	-	-	129.9	129.9	[2.0] 125.2	129.9	[2.0] 125.2	-	4.7	117.0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405.0	405.0	[125.2] 404.9	-	0.1	412.4	412.4	[125.2] 410.9	412.4	[125.2] 410.9	-	1.5	370.0
- 국내여비(220-01)	1.0	1.0	[404.9] 1.0	-	-	1.3	1.3	[410.9] 1.3	1.3	[410.9] 1.3	-	-	1.0
- 사업추진비(240-01)	3.0	3.0	[1.0] 3.0	-	-	2.8	2.8	[1.3] 2.8	2.8	[1.3] 2.8	-	-	3.0
- 일반연구비(260-01)	401.0	401.0	[3.0] 400.9	-	0.1	408.3	408.3	[2.8] 406.8	408.3	[2.8] 406.8	-	1.5	366.0
			[400.9] [406.8]					[406.8] [40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내 기술규제 신설·강화 사전방지, 기업 애로 발굴 해소,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를 통한 기술규제 사후관리 실시 등 소주기적 기술규제 관리 추진
 - *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과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개혁작업단)이 기술규제 분야 개혁 추진
- **(기술규제영향평가)** 정부입법 신설·강화 법령 중 기술규제(기술기준, 시험, 인증 등)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최선의 대안 제시
- **(중소중견 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기술규제정책포럼,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개선하여 기업부담 완화
-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검토·의견제시, 1주기('19~'21년)에 이어 2주기('22~'24년) 24개 부·처·청 222개 인증제도(적합성평가)에 대한 존치 필요성 등 실효성 검토
 - * 3년 주기, ('22년) 64개 제도, ('23년) 79개 제도, ('24년) 79개 제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0.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12.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30호)

제2조(설치 등)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 ② 각 작업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 ③ 각 작업단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2.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 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3.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관련 민원처리,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2.12.12.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신설
- '12.12.13. 국무총리실, 국무총리훈령 개정
- '13. 1. 1.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 '13. 2. 국정과제 '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합리화'에 '137-5. 기술 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한 기술인증제 합리화' 포함
- '13. 4.15.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국무총리훈령 제601호로 개정
- '18. 3. 국정과제 '34-6.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혁신'에 포함
- '18. 6.12.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조항을 신설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 '18.12.24. 국무총리훈령 제730호로 개정
- '23. 7.1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127	1,127	1,148	1,178	1,06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국민(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기술규제영향평가
: ('23) 591.6백만원 → ('24요구) 529백만원, △62.6백만원
- (요구) 기술사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분석단가 상향, 분석물량은 감량하여 최종 감액
- (산출) 간사기관 운영비 4백만원
사업추진비 4백만원
기술규제 영향평가 전문가 분석 521백만원
- ②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 ('23) 174백만원 → ('24요구) 161백만원, △13백만원
- (요구) 기술사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분석단가 상향, 분석물량은 감량하여 최종 감액
- (산출)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운영비 6백만원
기술규제위원회·전문분과위원회 회의비 및 자문비 23백만원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워크숍, 기술규제위원회 개최 등 10백만원
국내여비 3백만원
사업추진비 2백만원
기술규제 기업애로 전문가 분석 117백만원
- ③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23) 412.4백만원 → ('24요구) 370백만원, △42.4백만원
- (요구) 기술사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분석단가 상향, 분석물량은 감량하여 최종 감액
- (산출) 국내여비 1백만원
사업추진비 3백만원
의원입법 인증제도 전문가 분석 45백만원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전문가 분석 321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0,740	<p>○ 일반수용비(210-01) : 33,100천원</p> <p>가. 간사기관운영비 (4,000천원)</p> <p>나.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운영비(6,000천원)</p> <p>다. 기술규제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회의비 및 자문비(23,1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00원x16명x10회 = 24,000천원 • 조정재원 (-900천원) <p>○ 임차료(210-07) : 10,000천원</p> <p>가.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워크숍, 기술규제위원회 개최 (1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7회x1,500,000원=10,500천원 • 조정재원 (-500천원) 	195,662	<p>○ 일반수용비(210-01) : 33,000천원</p> <p>가. 간사기관운영비 (4,000천원)</p> <p>나.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운영비(6,000천원)</p> <p>다. 기술규제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회의비 및 자문비(23,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00원x16명x10회 = 24,000천원 • 조정재원 (-1,000천원) <p>○ 임차료(210-07) : 10,000천원</p> <p>가.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워크숍, 기술규제위원회 개최 (1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7회x1,500,000원=10,500천원 • 조정재원 (-500천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국내여비(220-01) : 4,310천원 가. 전문문과 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등 참석(4,310천원) • 108회×40,000원=4,320천원 • 조정재원 (-1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408천원 가. 전문분과 위원 면담, 기업 애로 간담회 개최 등(8,408천원) • 오찬, 만찬비 등 : 12회×28명×25,000원=8,400천원 • 재원조정(+8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122.182천원 가. 기술규제영향평가 전문가 분석(584,000천원) • 310건×1,884천원=584,040천원 * 1건당 검토비용 : ('21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401천원×4일) + 자료구입비 280천원 = 1,884천원 • 재원조정(-40천원) 나. 기술규제 기업애로 전문가 분석(129,900천원) • 108건×1,203천원=129,924천원 * 1건당 검토비용 : ('21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401천원×3일) = 1,203천원 • 재원조정(-24천원) 다. 의원입법 인증제도 전문가 분석(117,282천원) • 105건×1,117천원=117,285천원 * 1건당 검토비용 : ('21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401천원×2일) + 자료구입비 315천원 = 1,117천원 • 재원조정(-3천원) 라.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291,000천원) • 79건×3,689천원=291,431천원 * 1건당 검토비용 : ('21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401천원×9.2일) = 3,689천원 **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2주기('22~24) 총 검토 건수는 222개 제도로 '23년 검토 대상 제도는 79개 • 재원조정(-431천원)		○ 국내여비(220-01) : 4,000천원 가. 전문문과 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등 참석(4,000천원) • 80회×50,000원=4,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9,000천원 가. 전문분과 위원 면담, 기업 애로 간담회 개최 등(9,000천원) • 오찬, 만찬비 등 : 36회×10명×25,000원=9,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004,000천원 가. 기술규제영향평가 전문가 분석(521,000천원) • 254건×2,048천원=520,192천원 * 1건당 검토비용 : ('22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442천원×4일) + 자료구입비 280천원 = 2,048천원 • 재원조정(+808천원) 나. 기술규제 기업애로 전문가 분석(117,000천원) • 88건×1,326천원=116,688천원 * 1건당 검토비용 : ('22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442천원×3일) = 1,326천원 • 재원조정(+312천원) 다. 의원입법 인증제도 전문가 분석(45,000천원) • 38건×1,198천원=45,524천원 * 1건당 검토비용 : ('22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442천원×2일) + 자료구입비 314천원 = 1,198천원 • 재원조정(-524천원) 라.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321,000천원) • 79건×4,066천원=321,214천원 * 1건당 검토비용 : ('22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442천원×9.2일) = 3,689천원 **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2주기('22~24) 총 검토 건수는 222개 제도로 '23년 검토 대상 제도는 79개 • 재원조정(-214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술규제 영향평가 의견 반영률 (단위: %)	목표	71	72	73	73	74	'20~'21년 실적치의 평균인	기술규제영향평가 의견반영률 =	국가기술표준원 내부자료 (국무조정실)
	실적	72.1	72	79.7	72.5	-	74.6%을 반영하여	의견수렴건수	
	달성도	100	100	109	99.3*	-	'23년 대비 1% 상향	/검토의견제시건수 x 100	

* 전년대비 의견 제시건수는 전년대비 184% 수준(59건 '22년 → 109건 '23년)으로, 의견 반영건수는 전년대비 168% 수준(47건 '22년 → 79건 '23년)으로 증가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규제 영향평가 : 382건 검토(조정 의견 제시 79건 → 반영 57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126건) → 개선(36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197건(검토 의견 제시 19건)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64개(통·폐합 7개, 개선 20개, 존속 37개)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규제 영향평가 : 341건 검토(조정 의견 제시 74건 → 반영 53)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107건) → 개선(16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182건(검토 의견 제시 11건)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64개(통·폐합 3개, 개선 30개, 존속 30개, 제외 1개)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규제 영향평가 : 226건 검토(조정 의견 제시 59건 → 반영 47)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96건) → 개선(18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35건(검토 의견 제시 5건)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64개(통·폐합 11개, 개선 39개, 존속 14개)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규제 영향평가 : 169건 검토(조정 의견 제시 109건 → 반영 79)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89건) → 개선(4건*) * '23년 상반기 限 실적으로, 부처협의 진행 중(부처별 의견 회신 : 1.12. 예정)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44건(검토 의견 제시 2건)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안) : 79개(통·폐합 20개, 개선 37개, 존속 22개)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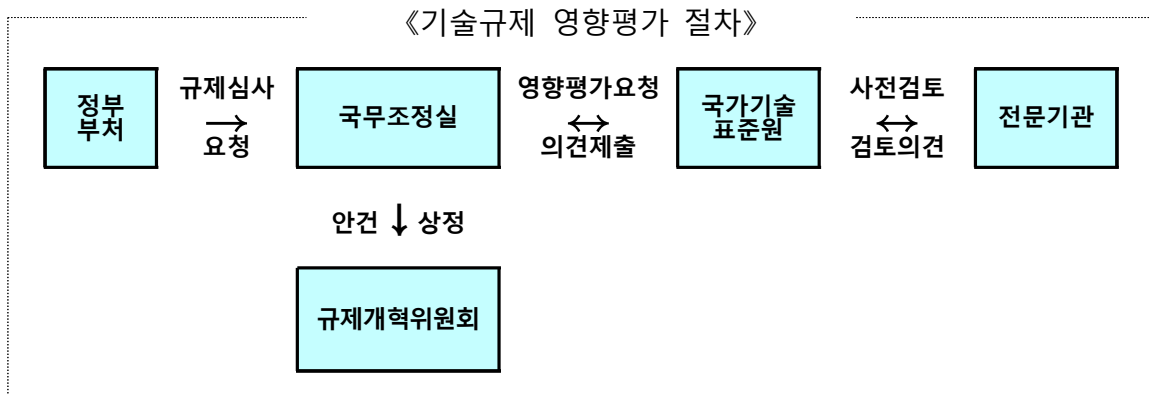
- **(기술규제영향평가)** 정부입법 신설·강화 법령 중 기술규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업 부담완화
 - **(중소중견 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기업현장에서 불합리·과도하다고 느끼는 기술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한 기업 애로해소 및 기업환경 개선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범부처 인증제도(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당위성, 완성도, 적절성 측면 분석 검토를 통한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 유사제도는 통합하여 국민(기업) 부담완화 및 의원입법 인증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제시로 불합리한 제도 신설 방지
- * 79건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로 인증 유효기간 확대, 수수료 완화 등의 간접효과 예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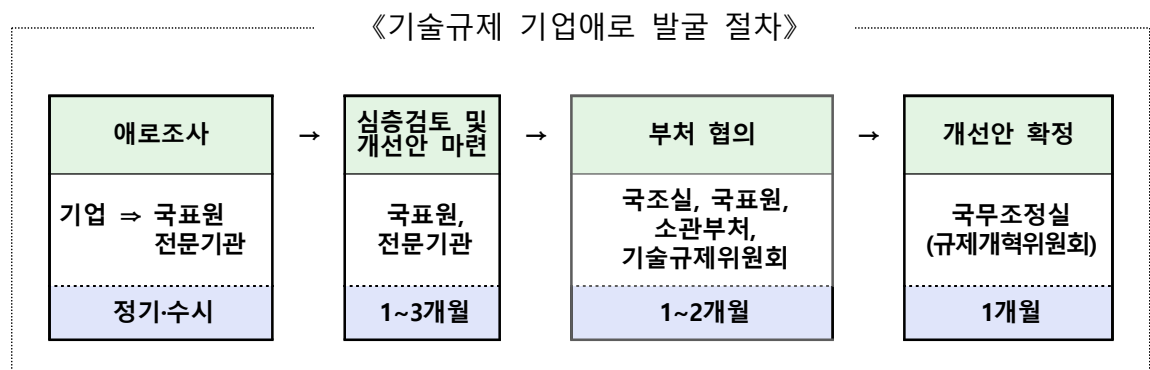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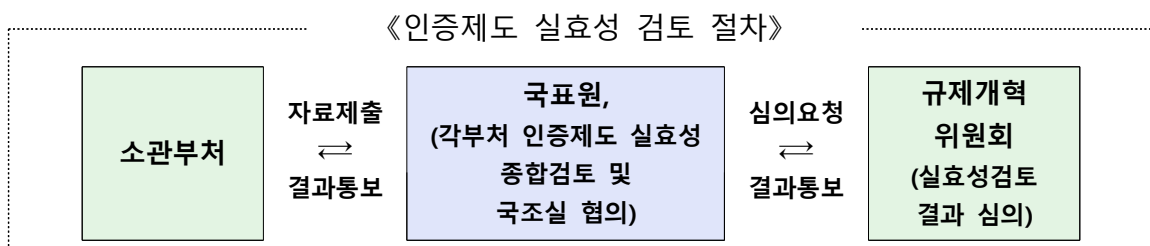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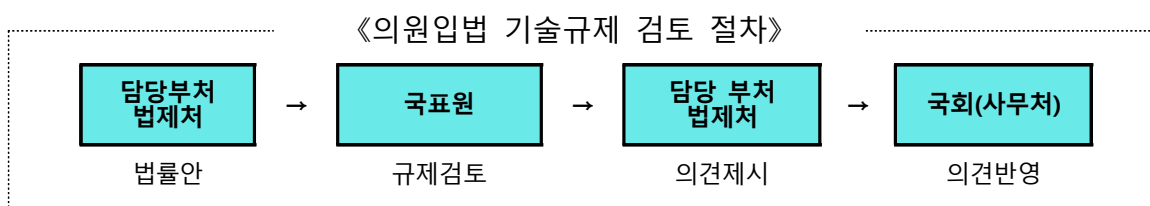
① 기술규제영향평가



② 중소중견기업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



③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1,148	1,205	1,296	1,477	1,699	
'23~'27		1,178	1,060	1,156	1,221	1,28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술규제 신설·강화 사전 방지
 - 소 부처의 법령 등 제·개정 시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해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의견제시
- 기술규제 사후 정비 및 개선
 -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타당성·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 수렴,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
 - 대표적 기술규제인 법정인증제도에 대해 매 3년 주기로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 통합, 폐지 등 제도 정비
-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 방지하고 사후 제도정비·개선 등을 위한 규제개혁 위원회 산하 기술규제위원회·전문분과위원회 운영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사업 주요내용인 기술규제 등의 전문가 분석 비용* 증가되었으나 '24년 예산이 10% 감액되어 분석을 위한 전문가 검토품질 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검토가능건수 : 총 523 → 380건, △143건, 검토기간 : 평균 △1.3일)됨에 따라, 예년 수준의 분석 품질을 유지하고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 필요
 - * 기술사 평균임금은 연평균 6.7% 상승('21~'23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1,127	-	1,127	-	-	-	1,127	1,122	99.6	99.6	-	5
2021	1,127	-	1,127	-	-	-	1,127	1,111	98.6	98.6	-	16
2022	1,148	-	1,148	-	-	-	1,148	1,139	99.2	99.2	-	9
2023	1,178	-	1,178	-	-	-	1,178	1,170	99.3	99.3	-	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21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22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23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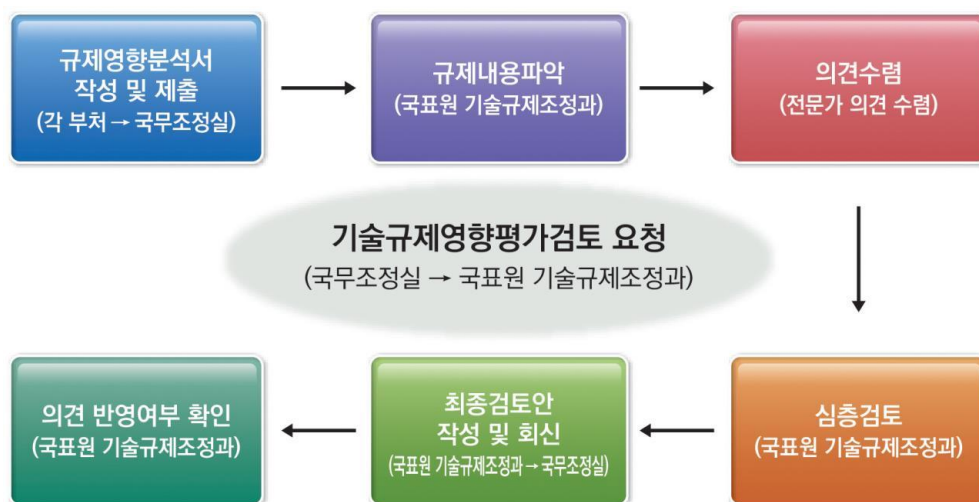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기술규제 영향평가 설명자료

- **(기술규제영향평가)**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에 기존 유사제도와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KCS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
- **(목적)** 각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
 - **(절차)** 부처에서 입법·행정예고를 마친 규제안을 국무조정실로 송부 하면,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안을 검토하여 각 담당기관에 경쟁영향평가, 중소기업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뢰
 - 이때 규제안을 검토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단임
 - **(대상)** 법령 등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시험·검사·인증 등)에 대해 실시

< 기술규제영향평가 절차 >



참고 2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설명자료

1. 추진배경

- 적합성평가란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평가·증명하는 것으로, 인증, 검사, 형식승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 법률적인 용어로 적합성평가(표준·기준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인증제도”로 통용. '22.4월 기준 222개 법정 인증제도 운영중

- 인증제도는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등 순기능 제공

안전(제품)	환경보호	보건(식품)	산업육성
			
			
전기용품 무선통신기기	건축물	유기농 식품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 그러나,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기준 등으로 기업의 비용·시간적 부담 초래, 시장 진입규제로 작용 등 기업 애로를 유발

- 정부는 이런 유사·중복, 불합리한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인증제도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검토하는 제도 도입*

* 관계부처 합동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규제개혁위원회 보고, '14.8월)

- 이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의 존속 필요성 검토 조항을 신설한 「국가표준기본법」('18.6.12) 및 동법 시행령 개정('18.12.21)

< 국가표준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

- ① 기존 법정 적합성평가제도(인증 등) 존속 필요성 검토 근거 규정 신설
- ② 규제개혁위원회를 기존 적합성평가제도의 존속 필요성 검토·심의 기구로 규정
- ③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하여 통보한 사항에 대해 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

※ 산업부(국표원)가 사전검토하여 규개위에 보고토록 국무총리 훈령 정비('18.12)

2. 추진체계

- 적합성평가제도가 부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필요성·적절성·완성도 측면에서 분석·검토

필요성	적절성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활성화 및 존치 타당성 ▶ 시장에서의 인증수요 ▶ 유사·중복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국제 표준과의 조화 ▶ 유효기간, 비용 등 유지부담 ▶ 적합성 평가기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평가절차 범위 등의 명확성 ▶ 시장진입의 방해요소로 작용 여부 ▶ 사후관리 등 관리 절차

※ 2주기 실효성 검토('22~'24)는 1주기 검토와 차별화하여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므로 심층 분석·검토가 가능하도록 기준 설정함

- 전문가·이해관계자의 검토 및 분석,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기술 규제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종합의견서(안) 도출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선안을 확정하고 담당 부처에서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이행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



3. 검토 대상

□ (검토 대상) 2주기 검토대상은 1주기에 존치된(186개중 20개 통·폐합) 166개 제도에, 신규 대상 56개* 제도를 추가한 총 **222개 제도**임

* 신규대상 56개 제도 : ①1주기 기간중 신설된 25개 제도, ②1주기대상에서 제외(우수문화상품지정 등) 또는 누락(실내공기우수시설인증 등)되었던 31개 제도

○ 안전, 환경, 보건 등과 관련된 **의무인증이 89개 제도(40%)**이며 제품, 서비스, 조직의 품질 등과 관련된 **임의인증이 133개 제도(60%)**임

* 이중 제품과 관련이 없는 경영체계, 서비스, 시설 등과 관련된 임의인증은 55개 제도(전체의 25%)임.

□ (연도별 계획) 1주기 검토연도와 연계하고 연간 부처별 검토* 및 유사제도 등을 고려하여 '**22년 64개, '23년 79개, '24년 79개** 제도를 검토

* 국토부(35개), 해수부(30개), 환경부(24개), 산업부(23개), 농축산부(19개)의 5개 부처의 인증 제도가 131개(59%)이며 부처 부담을 고려하여 연도별 적정배분

< 참고 : 연도별 검토대상 기본원칙 >

① 1주기 존치제도(168개)는 1주기와 동일한 연차에 검토(1주기 1차년도('19) 검토한 제도는 2주기 1차년도('22)에 검토) 하되, 부처별로 연간 균등배분을 위해 일부 조정

* 부처가 제출한 희망 검토연도에서 조정된 제도는 14개(6%)

② 신기술인증 등 유사제도, 상호 연관성*이 큰 제도는 가급적 동일 연도에 검토

* KS인증(산업부), 전기용품 KC인증(산업부), 환경표지인증(환경부) 등을 '22년 동일연도에 검토

③ '22년은 검토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64개, '23~'24년은 각각 79개를 배정

4. 검토 중점 방향

- (제도 통폐합을 원점에서 재검토) 새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인증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도는 과감히 통폐합 유도
 - ① 단순 홍보 수단의 인증, ② 소수 기업만 획득하는 인증, ③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인증 등은 원칙적으로 통폐합을 전제로 검토

< 법정 인증제도 통폐합 검토대상 >

- ① 국민안전, 환경보호 등과 반드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인증과 달리, 인증 마크를 단순 홍보 또는 비즈니스 수단으로 활용하여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도
 - * 특히, 경영체계, 서비스, 시설 등과 관련된 55개 임의 인증제도에 대해 집중 분석
- ② 3년이상된 제도임에도 소수 기업만 인증을 획득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정부의 정책적 지원없이 인증 활성화가 사실상 불가)
 - *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필요성이 낮은 인증이 '인증을 위한 인증'으로 변질화될 우려를 사전 차단
- ③ 해외에 유사 인증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인증제도
 - * 1주기에 존치된 166개 인증제도중 43개 제도(26%)가 해외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

- (품목단위 규제개선) 제도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업이 개선결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증방법 및 비용 등을 혁신적으로 완화
 - 제도별 품목단위까지 심층 분석을 통해, ① 인증품목 축소, ② 인증 기간 및 비용 절감, ③ 인증 유효기간 확대, ④ 기준 완화 등을 검토
 - ※ 특히, 20년 이상된 제도*(75개, 전체의 33%)와 다수 인증으로 애로를 겪는 LED 등의 품목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완화 강구

< 인증방법 등 규제 완화 검토대상 >

- ① 정부가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품목 제외 등 인증대상 축소
- ② 시험 적체로 제품출시가 지연되거나 인증비용에 과도한 부담이 있는 분야는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요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방안 마련
- ③ 파생모델 면제범위 확대, 유효기간 확대 등을 통해 유지관리 부담 완화
- ④ 인증기준은 원칙적으로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에 일치화

- **(절차 간소화)** 유사 인증제도간 상당부분 중복적 요소가 있거나 획일화된 절차*로 불합리성이 있을 때, 절차를 대폭 간소화 강구

* 로봇과 같은 소량 다품종 품목에 대해 공장심사를 적용할 경우 애로 발생

- ①유사 인증제도와 연계한 면제제도 도입, ②공장심사 등 일부 심사체계 제외, ③시험성적서 수용범위 확대 등 절차적 간소화를 검토

< 인증 절차의 간소화 방법 검토대상 >

- ① 타 제도의 제품, 공장, 경영체계 등의 심사 결과를 포괄적으로 수용(면제)
* 예, '전기용품 KC 안전인증(의무)'은 'KS 인증(임의)'을 취득하면 면제 혜택을 부여중
- ② 품목 특성에 따라, 공장심사 없이 제품시험만으로 인증하는 방안 마련
- ③ 일정요건*을 갖춘 자체 시험성적서나 해외발행 시험성적서 등을 수용
* 예, 국가공인시험기관(기업내 시험소도 포함)이나 상호인정 체결된 해외 시험기관
- ④ 기타, 신청 구비서류 감축, 신고절차 간략화, 심사원 자격 완화 등

- **(규제 입증책임제 적용)**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도의 폐지 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부처가 존치 필요성을 기술규제위원회 등에서 입증*

* 법정제도에서 제외할 경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 의무

- 제도상의 규제완화,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도 중요 쟁점사안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부처 입장을 입증
- 필요 시, 산업·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쟁점사안이 있을 경우, “인증제도 규제 청문회(가칭)” 등을 개최하여 쟁점을 해결 모색

* 청문회는 사안에 따라 ‘국조실’ 또는 ‘기술규제개혁작업단’ 주관으로 운영

- **(유관단체와의 협력)** 기업 현장의 애로 발굴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 유관 경제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국조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정비과), 중기음부즈만, 기술규제개혁작업단(기술 규제 애로발굴 부서) 등의 제도개선 사항도 연계하여 심층 검토

5. 기대효과

- (경제적 기대효과) 폐지로 규개위 안전 상정 예정인 4개 제도로 인한 기업의 직·간접비 감소만 연간 160억* 이상으로 예상됨

* (직접비) 인증수수료 절감에 따른 직접비용 감소 27억, (간접비) 매출증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133억

- 불합리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한 기업·국민 불편 해소
 - 필요성이 낮거나, 인증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 없는 제도는 폐지하여, 기업의 잠재적인 부담 해소 및 행정력 낭비 방지
 - 인증대상 축소, 인증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절차 간소화 등 제도별 맞춤형 정비를 통해 기업·국민에게 체감도 있는 불편 경감
- 인증제도 실효성검토로 부처의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 촉진
 - 부처 자체검토와 함께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술규제 위원회의 객관적·전문적 검토 등 소통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 모든 인증제도는 3년 주기 재검토하여, 산업·정책 환경변화 등에 따른 합리적이고 진전된 기술규제 정비 지속 추진

참고 3-1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 통합·폐지, 개선 사례

□ 인증제도 통합·폐지 사례

-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히 통합·폐지

① 유사·중복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 (국토부)

현행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나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제도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

개선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을 '우수물류기업 인증'에 통합

② 타 제도 대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과기부)

현행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부여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통해 안전관리가 가능해 별도의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연구소 등에 이중부담으로 작용하여 폐지

우수 종축업체 인증 (농식품부)

현행 종축업체의 전문화·청정화, 우량 종축 확보, 고능력 종축 보급률 제고를 위하여 운영

개선 가축검정제도와 정액품질확인으로 대체 가능하며, 해외 유사사례가 없어 폐지

③ 낮은 실효성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 (국토부)

현행 철도, 도로, 지하철,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규격통합이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농식품부)

현행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과정을 평가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주로 민간·지자체에서 운영 중

개선 도농교류 교육은 국가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지자체 특성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인증 폐지, 지자체 자율운영 지원

□ 인증제도 개선 사례

- 인증방법 개선 및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연장

① 인증기간 및 비용

환경표지 인증 (환경부)

현행 기존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나, 인증심사 수수료 이외에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인증심사시 제품 내구성·안전성 등 **환경과 무관한** 평가항목 **시험**을 실시

* (예시) 광주 A가구 제조업체 환경표지인증 수수료('19년 제품수량 80개 기준)
▲ 갱신수수료 4,020,060원 ▲ 인증마크사용수수료 3,463,419원

개선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환경과 **무관한 인증기준 삭제**

② 중복검사 면제

ICT 융합품질인증 (과기부)

현행 ICT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품질 검증을 통해 제품의 안정적인 시장진출 지원하는 제도이나, **파생모델 인증기준이 없어** 제품을 일부변경한 유사제품도 신규 인증과 **동일한 인증 절차** 진행

개선 파생모델의 경우 **시험검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 방법 등 파생모델 인증기준 등 제도 정비

전승공예품 인증 (문화재청)

현행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 공예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나, 유사제도인 **우수공예품 지정**(문체부)과 **시험항목이 일부 중복**되며, **유해성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개선 우수공예품과 **동일항목 시험은 면제**, 유해성검사는 **국가·국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수용하여 절차 간소화 추진

③ 시험성적서 수용 확대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 성능 (소방청)

현행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자체 시험 결과만 인정**

개선 국제표준인 ISO 12863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성적서를 수용**

4 유효기간 연장

◆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의 인증 재시험·재심사 부담 경감

성능 인증 (중기부)

현행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품질·성능을 인증하여 개발제품 구매 및 R&D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되어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도움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 → 4년으로 연장

소방장비인증 (소방청)

현행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한 소방장비에 대한 인증으로, 인증심사를 서류, 제품, 현장 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증 비용이 건당 950만원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 → 3년으로 연장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복지부)

현행 안전하고 질높은 고령자 대상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로써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인증 유효기간이 2년으로 인증제도 평균보다 짧음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 → 4년으로 연장

녹색인증 (산업부)

현행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로, 녹색인증 제품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중기부 우선구매, 특허청 우선심사 등 공공시장 진출시 다양한 혜택 부여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 → 4년으로 연장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산업부)

현행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이 일정기준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취득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액감면 등 혜택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 → 4년으로 연장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공정위)

현행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용역 등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로,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등 혜택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 → 3년으로 연장

참고 3-2

기술규제 영향평가 및 기업애로 개선 사례

<기술규제 영향평가 개선 사례>

<div data-bbox="204 383 272 456"></div> <div data-bbox="328 389 675 443">가정용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div> <div data-bbox="228 495 288 521">개정전</div> <div data-bbox="328 481 702 557">기체연료 2등급 보일러의 시험방법으로 가스온수 보일러 관련 표준만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콘덴싱 방식에 대응하기 어려움</div> <div data-bbox="228 629 288 656">개선</div> <div data-bbox="328 616 711 694">기체연료 2등급 보일러 시험방법으로 KS B 8127 (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을 추가해 콘덴싱 보일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div> <div data-bbox="328 705 432 891"></div> <div data-bbox="456 728 544 831"></div> <div data-bbox="456 840 564 887">가스보일러 (KS B 8109)</div> <div data-bbox="564 763 587 792">+</div> <div data-bbox="603 728 691 831"></div> <div data-bbox="603 840 722 887">콘덴싱가스보일러 (KS B 8127)</div>	<div data-bbox="798 383 895 456"></div> <div data-bbox="938 389 1273 439">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개정안</div> <div data-bbox="834 495 895 521">개정전</div> <div data-bbox="938 481 1326 553">살균제 및 살조제 사용가능 주성분 함량기준 중 기존 시험방법으로 분리 측정이 어려운 항목*이 있어, 기준 합리화가 필요함</div> <div data-bbox="938 562 1297 602">* 살균제 주성분 중 수산화칼륨과 수산화나트륨 살조제 주성분 중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차아염소산칼륨 등</div> <div data-bbox="834 640 895 667">개선</div> <div data-bbox="938 629 1323 656">기존 시험방법으로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변경</div> <div data-bbox="975 696 1289 891"></div>
--	--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 사례>

<div data-bbox="177 1032 272 1106"></div> <div data-bbox="341 1039 539 1093">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 (국토교통부)</div> <div data-bbox="228 1144 288 1171">개정전</div> <div data-bbox="341 1131 675 1209">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 기준이, 모바일을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기준 개선 필요</div> <div data-bbox="228 1281 288 1308">개선</div> <div data-bbox="341 1267 722 1326">모바일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관련 인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함</div> <div data-bbox="341 1352 703 1545"></div>	<div data-bbox="788 1032 895 1106"></div> <div data-bbox="938 1039 1050 1093">승강기검사 (행정안전부)</div> <div data-bbox="834 1144 895 1171">개정전</div> <div data-bbox="938 1131 1302 1214">승강기 심사 설계심사 시 보완요청에 대한 조치기간이 1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보완을 반영하기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부족함</div> <div data-bbox="834 1296 895 1323">개선</div> <div data-bbox="938 1281 1315 1339">설계심사 보완기간을 2개월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div> <div data-bbox="868 1375 1257 1545"></div>
---	---

사 업 명						
(23)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373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	110	117
명칭					산업·중기·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2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IT기반기술 표준정보화 체계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노재홍	유용재	-
		기술규제대응국			
	사업시행주체	기술규제협력과	043-870-5550	043-870-5562	-
		직접수행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IT기반기술표준 정보화체계구축	2,307	2,759		2,389	2,389	△370	△13.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액	불용 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 예상 액	불용 예상 액		
									이월액 예산 현액	계외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50	2,850	2,307	461	82	2,759	3,220	3,145	2,759	2,684	-	75	2,398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80	480	475	-	5	480	480	472	480	472	-	8	480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85	185	183	-	2	185	185	182	185	182	-	3	185	
· 전산장비 및 SW구매	230	230	230	-	-	160	160	153	160	153	-	7	160	
· 자·형표준인증플랫폼구축	1,955	1,955	1,419	461	75	1,934	2,395	2,338	1,934	1,877	-	57	1,564	
○ 비목별 분류(합계)	2,850	2,850	2,307	461	82	2,759	3,220	3,145	2,759	2,684	-	75	2,389	
· 관리용역비(210-15)	665	665	658	-	7	665	665	654	665	654	-	11	665	
· 일반용역비(260-01)	1,575	1,575	1,052	461	62	1,864	2,325	2,269	1,864	1,808	-	56	1,514	
· 자산취득비(430-01)	610	610	597	-	13	230	230	222	230	222	-	8	2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850	2,850	2,307	461	82	2,759	2,759	3,145	2,759	2,684	-	75	2,389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80	480	475	-	5	480	480	472	480	472	-	8	480	
- 관리용역비(210-15)	480	480	475	-	5	480	480	472	480	472	-	8	480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85	185	183	-	2	185	185	182	185	182	-	3	185	
- 관리용역비(210-15)	185	185	183	-	2	185	185	182	185	182	-	3	185	
· 전산장비 및 SW구매	230	230	230	-	-	160	160	153	160	153	-	7	160	
- 자산취득비(430-01)	230	230	230	-	-	160	160	153	160	153	-	7	160	
· 자·형표준인증플랫폼구축	1,955	1,955	1,419	461	75	1,934	1,934	2,338	1,934	1,877	-	57	1,564	
- 일반연구비(260-01)	1,575	1,575	1,052	461	62	1,864	1,864	2,269	1,864	1,808	-	56	1,514	
- 자산취득비(430-01)	380	380	367	-	13	70	70	69	70	69	-	1	60	

* 22년 이월액 사유: 소프트웨어진흥법(제45조, 적정사업기간 산정 등)에 따른 적정사업기간 준수(이월액 전액집행완료)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부처 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구축('14~'16)된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e-나라표준인증, <https://standard.go.kr>)의 안정적인 운영서비스 지원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홈페이지 등 5개 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유지보수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대국민 정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직원들의 행정·정책업무 수행 지원

- (전산장비 및 SW 구매)

국가기술표준원 업무포털 및 홈페이지 구현을 위한 PC 백신 라이선스 비용, 비표준 플러그인 제거, 윈도우 10 OS 도입 등 HW 및 SW 최신화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

기업의 대표적인 규제 애로 건의 과제로 국가별·제도별·품목별로 ❶국내·외 표준인증 데이터 확충, ❷지능상담·검색서비스 제공, ❸기술규제 혁신 협업환경 조성을 통해 현장 중심 맞춤형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② 추진경위

- '07.12월 : IT 기반의 국가표준 정보화 전략('08~'12) 수립

- '09.2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부처별 실행계획('09~'12)에 반영
- '12.7월 :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VIP 보고(국경위)
 - * 국가표준·인증 선진화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필요성 공감 및 조속히 구축 지시
- '13.5월 : 국정과제 '정부3.0'(행자부 주관)의 세부 사업과제로 반영
- '14.3월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VIP 지시 및 후속조치 이행
 - *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것은 의견제시 가능토록 실시간 정보 제공할 것
- '14.5월 :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도입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조기구축 요구
- '14.6월 : 총리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중요성 언급
- '15.11월 : 총리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인증제도 혁신방안)
- '21. 7월 : 국정현안점검회의 보고(기업활력제고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혁신방안)
 - * 현장중심의 지능형 기술규제 정보서비스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4
사업비	959	895	2,850	2,759	2,38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기업(중소기업 및 신생벤처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 (1) 범부처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2023) 480 → **(2024) 480백만원**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e-나라표준인증 포털) 관제 및 통합 DB 운영관리 지원
 - 산출 : 426백만원(개발비5,530백만원×요율7.7%)+54백만원(상용SW797백만원×요율6.9%)
- (2)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2023) 185 → **(2024) 185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전문업무포털(5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지원
 - 산출 : 시스템 및 인프라 유지보수인건비 185백만원(3명×12개월×5.14개월)
- (3)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구매 : (2023) 160 → **(2024) 16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서버·PC 등 보안관리 SW 라이선스 비용 및 장비 구매
 - 산출 : 14백만원(PC백신500개×0.028백만원)+9백만원(윈도우서버 백신30개×0.3백만원)+5백만원(리눅스서버백신5개×1백만원)+17백만원(보안SW라이선스 500개×0.034백만원)+15백만원(SSL3개×5백만원)+100백만원(한글200개×0.095백만원+MSword200개×0.25백만원)
- (4) 지능형 표준인증 통합플랫폼 구축 : (2023) 1,934 → **(2024) 1,564백만원**
 - 기업 시장진출에 필요한 표준인증 등 기술요건 정보를 디지털혁신기술(A)을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추진
 - 산출 : 1,414백만원(시스템개발비 702MM+7944P)+50백만원(서버 ESB 아답터)+100백만원(유틸리티 81MM)

예산	'23 예산 산출내역	예산	'24 예산 산출내역																																																																																																																																																				
2,759	<p>○ 관리용역비(210-15) : 665백만원</p> <p>가.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8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보수 인건비 : 426백만원(개발비5,530백만원×요율7.7%) + 54백만원(상용SW797백만원×요율6.9%) <p>나.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8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보수 인건비 185백만원(3명×12개월×5.14개월) <p>○ 일반연구비(260-01) : 1,864백만원</p> <p>가.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개발 1,864백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단가(백만)</th><th>수량</th><th>금액(백만)</th></tr> </thead> <tbody> <tr> <td>표준인증 데이터베이스 구축</td><td>3.85</td><td>848M</td><td>327</td></tr> <tr> <td>지능기반 품목분류체계 표준화</td><td>11.4</td><td>10MM</td><td>114</td></tr> <tr> <td>지능형 연계분석활용 플랫폼</td><td>0.589</td><td>1,031FP</td><td>607</td></tr> <tr> <td>인공지능 표준인증 시스템</td><td>7.2</td><td>24MM</td><td>173</td></tr> <tr> <td>기계학습형 표준문서체계 구축</td><td>7.33</td><td>24MM</td><td>176</td></tr> <tr> <td>중복 표준인증 검증시스템</td><td>7.67</td><td>15MM</td><td>115</td></tr> <tr> <td>정부인증제도 협업시스템 구축</td><td>0.6</td><td>251FP</td><td>151</td></tr> <tr> <td>유틸리티</td><td>24.8</td><td>8.1MM</td><td>201</td></tr> <tr> <td>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td><td></td><td></td><td>1,864</td></tr> </tbody> </table> <p>○ 자산취득비(430-01) : 230백만원</p> <p>가. 전산장비 및 업무용SW도입 160백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단가(백만)</th><th>수량</th><th>금액(백만)</th></tr> </thead> <tbody> <tr> <td>PC 백신(V3) 라이선스</td><td>0.028</td><td>500개</td><td>14</td></tr> <tr> <td>보안 SW(나카컴) 라이선스</td><td>0.034</td><td>500개</td><td>17</td></tr> <tr> <td>윈도우 서버백신 라이선스</td><td>0.3</td><td>30개</td><td>9</td></tr> <tr> <td>리눅스 서버백신 라이선스</td><td>1</td><td>5개</td><td>5</td></tr> <tr> <td>웹보호 라이선스(SSL)</td><td>3</td><td>5개</td><td>15</td></tr> <tr> <td>한글 워드프로세서(최신판)</td><td>0.1</td><td>250개</td><td>25</td></tr> <tr> <td>MS 워드프로세서(최신판)</td><td>0.3</td><td>250개</td><td>75</td></tr> <tr> <td>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td><td></td><td></td><td>160</td></tr> </tbody> </table> <p>나.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장비 도입) 7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연계 70백만원(어댑터 3종×23.3백만원) 	구분	단가(백만)	수량	금액(백만)	표준인증 데이터베이스 구축	3.85	848M	327	지능기반 품목분류체계 표준화	11.4	10MM	114	지능형 연계분석활용 플랫폼	0.589	1,031FP	607	인공지능 표준인증 시스템	7.2	24MM	173	기계학습형 표준문서체계 구축	7.33	24MM	176	중복 표준인증 검증시스템	7.67	15MM	115	정부인증제도 협업시스템 구축	0.6	251FP	151	유틸리티	24.8	8.1MM	201	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			1,864	구분	단가(백만)	수량	금액(백만)	PC 백신(V3) 라이선스	0.028	500개	14	보안 SW(나카컴) 라이선스	0.034	500개	17	윈도우 서버백신 라이선스	0.3	30개	9	리눅스 서버백신 라이선스	1	5개	5	웹보호 라이선스(SSL)	3	5개	15	한글 워드프로세서(최신판)	0.1	250개	25	MS 워드프로세서(최신판)	0.3	250개	75	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			160	2,389	<p>○ 관리용역비(210-15) : 665백만원</p> <p>가.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8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보수 인건비 : 426백만원(개발비5,530백만원×요율7.7%) + 54백만원(상용SW797백만원×요율6.9%) <p>나.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8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보수 인건비 185백만원(3명×12개월×5.14개월) <p>○ 일반연구비(260-01) : 1,514백만원</p> <p>가.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개발 1,514백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단가(백만)</th><th>수량</th><th>금액(백만)</th></tr> </thead> <tbody> <tr> <td>표준인증 데이터베이스 구축</td><td>15.57</td><td>1766MM</td><td>275</td></tr> <tr> <td>지능기반 품목분류체계 표준화</td><td>14.1</td><td>1036MM</td><td>147</td></tr> <tr> <td>지능형 연계분석활용 플랫폼</td><td>0.80</td><td>357.1FP</td><td>286</td></tr> <tr> <td>인공지능 표준인증 시스템</td><td>14.53</td><td>1720MM</td><td>250</td></tr> <tr> <td>기계학습형 표준문서체계 구축</td><td>13.20</td><td>2135MM</td><td>282</td></tr> <tr> <td>정부기술기준 협업시스템 구축</td><td>0.81</td><td>215.0FP</td><td>174</td></tr> <tr> <td>유틸리티</td><td>27.2</td><td>368MM</td><td>100</td></tr> <tr> <td>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td><td></td><td></td><td>1,514</td></tr> </tbody> </table> <p>○ 자산취득비(430-01) : 210백만원</p> <p>가. 전산장비 및 업무용SW도입 160백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단가(백만)</th><th>수량</th><th>금액(백만)</th></tr> </thead> <tbody> <tr> <td>PC 백신(V3) 라이선스</td><td>0.028</td><td>500개</td><td>14</td></tr> <tr> <td>보안 SW(나카컴) 라이선스</td><td>0.034</td><td>500개</td><td>17</td></tr> <tr> <td>윈도우 서버백신 라이선스</td><td>0.3</td><td>30개</td><td>9</td></tr> <tr> <td>리눅스 서버백신 라이선스</td><td>1</td><td>5개</td><td>5</td></tr> <tr> <td>웹보호 라이선스(SSL)</td><td>3</td><td>5개</td><td>15</td></tr> <tr> <td>한글 워드프로세서(최신판)</td><td>0.1</td><td>250개</td><td>25</td></tr> <tr> <td>MS 워드프로세서(최신판)</td><td>0.3</td><td>250개</td><td>75</td></tr> <tr> <td>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td><td></td><td></td><td>160</td></tr> </tbody> </table> <p>나.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장비 도입) 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연계 등 50백만원(어댑터, 서버 50백만원) 	구분	단가(백만)	수량	금액(백만)	표준인증 데이터베이스 구축	15.57	1766MM	275	지능기반 품목분류체계 표준화	14.1	1036MM	147	지능형 연계분석활용 플랫폼	0.80	357.1FP	286	인공지능 표준인증 시스템	14.53	1720MM	250	기계학습형 표준문서체계 구축	13.20	2135MM	282	정부기술기준 협업시스템 구축	0.81	215.0FP	174	유틸리티	27.2	368MM	100	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			1,514	구분	단가(백만)	수량	금액(백만)	PC 백신(V3) 라이선스	0.028	500개	14	보안 SW(나카컴) 라이선스	0.034	500개	17	윈도우 서버백신 라이선스	0.3	30개	9	리눅스 서버백신 라이선스	1	5개	5	웹보호 라이선스(SSL)	3	5개	15	한글 워드프로세서(최신판)	0.1	250개	25	MS 워드프로세서(최신판)	0.3	250개	75	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			160
구분	단가(백만)	수량	금액(백만)																																																																																																																																																				
표준인증 데이터베이스 구축	3.85	848M	327																																																																																																																																																				
지능기반 품목분류체계 표준화	11.4	10MM	114																																																																																																																																																				
지능형 연계분석활용 플랫폼	0.589	1,031FP	607																																																																																																																																																				
인공지능 표준인증 시스템	7.2	24MM	173																																																																																																																																																				
기계학습형 표준문서체계 구축	7.33	24MM	176																																																																																																																																																				
중복 표준인증 검증시스템	7.67	15MM	115																																																																																																																																																				
정부인증제도 협업시스템 구축	0.6	251FP	151																																																																																																																																																				
유틸리티	24.8	8.1MM	201																																																																																																																																																				
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			1,864																																																																																																																																																				
구분	단가(백만)	수량	금액(백만)																																																																																																																																																				
PC 백신(V3) 라이선스	0.028	500개	14																																																																																																																																																				
보안 SW(나카컴) 라이선스	0.034	500개	17																																																																																																																																																				
윈도우 서버백신 라이선스	0.3	30개	9																																																																																																																																																				
리눅스 서버백신 라이선스	1	5개	5																																																																																																																																																				
웹보호 라이선스(SSL)	3	5개	15																																																																																																																																																				
한글 워드프로세서(최신판)	0.1	250개	25																																																																																																																																																				
MS 워드프로세서(최신판)	0.3	250개	75																																																																																																																																																				
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			160																																																																																																																																																				
구분	단가(백만)	수량	금액(백만)																																																																																																																																																				
표준인증 데이터베이스 구축	15.57	1766MM	275																																																																																																																																																				
지능기반 품목분류체계 표준화	14.1	1036MM	147																																																																																																																																																				
지능형 연계분석활용 플랫폼	0.80	357.1FP	286																																																																																																																																																				
인공지능 표준인증 시스템	14.53	1720MM	250																																																																																																																																																				
기계학습형 표준문서체계 구축	13.20	2135MM	282																																																																																																																																																				
정부기술기준 협업시스템 구축	0.81	215.0FP	174																																																																																																																																																				
유틸리티	27.2	368MM	100																																																																																																																																																				
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			1,514																																																																																																																																																				
구분	단가(백만)	수량	금액(백만)																																																																																																																																																				
PC 백신(V3) 라이선스	0.028	500개	14																																																																																																																																																				
보안 SW(나카컴) 라이선스	0.034	500개	17																																																																																																																																																				
윈도우 서버백신 라이선스	0.3	30개	9																																																																																																																																																				
리눅스 서버백신 라이선스	1	5개	5																																																																																																																																																				
웹보호 라이선스(SSL)	3	5개	15																																																																																																																																																				
한글 워드프로세서(최신판)	0.1	250개	25																																																																																																																																																				
MS 워드프로세서(최신판)	0.3	250개	75																																																																																																																																																				
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			16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만건)	목표	544	639	668	785	864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 및 전년도 실적 증가율 감안	연간 포털검색 이용건수 (로그기록 기준)	e-나라표준인증 로그분석을 통한 데이터 수집 합산
	실적	619	713	1,112	1,167	-			
	달성도	113.7	111.6	166.5	148.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e-나라표준인증 포털 접속자수 연간 2억페이지 달성(17년 부터 누적 접속자수)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2021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국립국어원과 표준용어 10만건 연계 추진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기획 및 추진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보안업무 강화
2022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안정적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④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1차)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서비스 개시(스마트 검색·챗봇 상담 서비스 등, '23.5~)
2023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안정적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④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2차) - 사업계획 수립, 보안성 검토, 사전협의(행안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달발주 - 정보화 사업 위탁감리 조달발주 및 SW분리 발주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사업자 선정(6월) 및 시스템 개발 추진 중(~'24.1월)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표준인증 DB 확대 구축 및 지능형 시스템으로 디지털 전환하여 표준인증 플랫폼 이용자수가 연간 1,000만건 이상 상회(로그기록 기준) 추진
- 기업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국내외 표준인증 데이터 확충, 정보 접근성·신속성 확대를 위해 지능형 상담·검색 시스템 구축 등 현장중심 맞춤형 지능 정보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국가기술지원원	-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및 이행과제 작성 * 시스템 수요분석 및 사업환경 분석 등을 통해 이행과제 발굴분석 및 수행전략 마련
↓		
② 사업자 선정 및 착수보고회	국가기술지원원 사업자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및 당해연도 사업 수행계획 발표
↓		
③ 중간보고	국가기술지원원 사업자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중간점검
↓		
④ 사업결과 보고	국가기술지원원 사업자	-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연간 시스템 운영 결과 평가 및 피드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2,759	3,595	4,095	1,695	1,695	
'23~'26		2,759	3,000	2,750	2,750	2,7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지적 및 조치사항 없음
- '20년 언론보도(e-나라표준인증 포털 1억페이지뷰 돌파 등)
- '23년 언론보도(e-나라표준인증 포털 지능형 서비스 개편)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지능형 표준인증 통합 플랫폼 구축
 - 국내 표준인증 정보수요 충족, 해외 표준인증 정보수요 확대를 위해 신규 DB 구축
 - 정형 데이터 수집 체계에서,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 등 빅데이터 체제 구축
 - 부처간 표준인증 정보공유 및 활용확산을 위한 협업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확산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지능형 서비스 도입 및 비대면 서비스 확산
 - * 실시간 표준인증 상담수요 충족을 위해 인공지능 상담서비스(챗봇) 구축 추진
 - *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및 수출 진흥을 위한 국내외 인증 맵 서비스 지원
 -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제공

* 22년 ~ 24년 3개년간 “지능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부 예산안 반영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수요자 중심 기능개선으로
원내 행정·정책업무 지원 및 맞춤형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연중)
 - * 표준·제품안전·해외기술규제·시험인증 정책 및 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 추진

* 정부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센터로 전산실 이전 등 고려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21년 통합재정사업자율 평가결과 : 보통
- 2022년 통합재정사업자율 평가결과 : 우수
- 2023년 통합재정사업자율 평가결과 : 보통
- 2023년 산업부 정부혁신우수사례 선정 / 2023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왕중왕전 진출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959	-	959	-	-	-	959	956	99.6	99.6	-	3
2021	895	-	895	-	-	-	895	888	99.2	99.2	-	7
2022	2,850	-	2,850	-	-	-	2,850	2,307	80.9	80.9	461*	82
2023	2,759	-	2,759	461*	-	-	3,220	2,684	97.3	83.4	-	7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적정사업기간) 준수를 위해 용역잔금 이월(정보화 용역사업 2건) 및 사업 완수에 따라 전액 집행('23.1월)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19년~2022년 결산사항

2020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21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22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 이월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5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적정사업기간 준수를 위하여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기간 만료일('23.1월말) 검수 후 잔액 지급예정
2023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별첨 참조

참고 1

지능형 표준인증 통합플랫폼 구축사업('22~'24, 요약)

□ 추진배경 및 목적

* 국정현안점검회의 총리보고(기업화력 및 수출진흥 기술규제 혁신방안, '21.8)
(전략 1-3, 현장중심의 지능형 기술규제 정보서비스 제공, '2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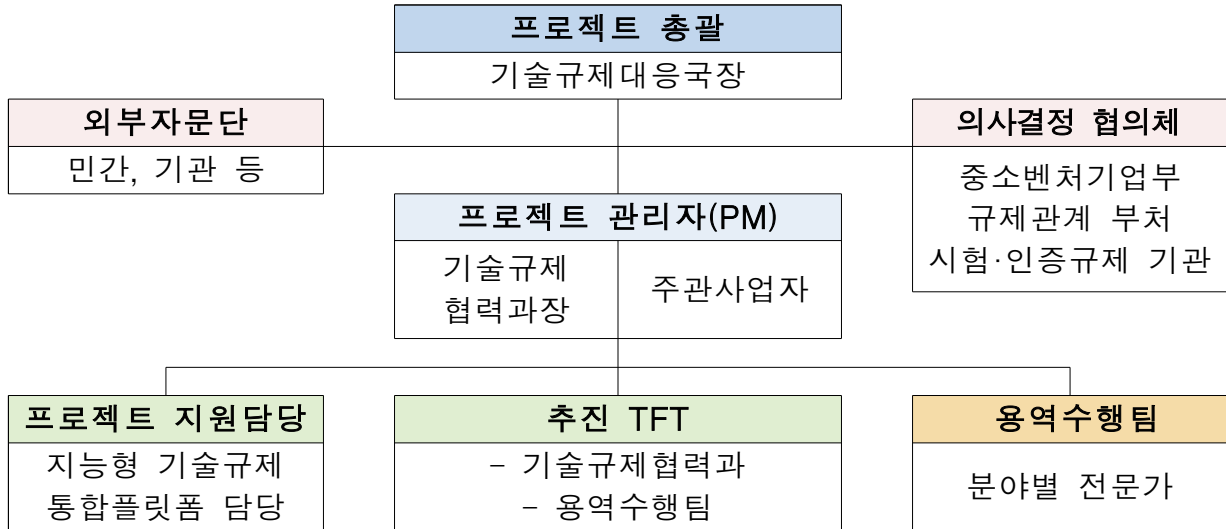
- 부처별·제도별 산재된 표준·기술기준·인증정보 통합구축 및 디지털 혁신 기술(AI 등) 활용 중복 해소로 기업 친화형 기술규제 환경 조성
 - * 기술규제 관계부처·기관의 효과적인 표준·기술기준·인증 데이터 수집·분석과 기술규제 심사제도 도입·활용을 위한 범정부 협업 정보기반 구축
- 표준·기술기준·인증 통합 정보망을 활용하여 기업이 시장 진출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품목별 맞춤 정보 서비스 구현
 - * 중소기업은 국가별·제도별·품목별 표준·기술기준·인증정보 제공 다수건의 중첩양회 FTA 간담회 등

□ 사업내용(세부산출 예산내역서 첨부3 참조)

- ① (데이터기반 규제해소) 기업·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빈번한 중복 기술기준·인증 AI 검증시스템* 및 협업 정보시스템** 구축
 - * 기술기준.표준.인증 데이터 학습을 통해 AI 기반 중복 검증모델.시스템 개발
 - **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지원을 위한 정부 기술기준.인증 협업정보시스템 제공
- ② (지능형 정보 서비스) 수집된 국내외 표준인증 데이터 학습을 통해 전문가 수준의 필요 정보 추천 검색, 질의, 응답 시스템 구축(챗봇)
 - * 상담사례(국민신문고+표준인증콜센터 30만건) 및 통합DB 머신러닝 → 인공지능상담체계 구축
 - ** 사용자 검색 패턴 인지 학습 → 유사 검색어 및 연관 자료 추천 서비스 제공
- ③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국가별·제도별·품목별 통합 데이터 수집·저장·가공·분석·활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통합검색 제공
 - * 국내·해외 표준.기술기준.인증 통합 정보망 및 지능형 플랫폼 구축
 - *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품목 검색 기반 데이터 서비스 체계 구축
(HS 코드, 기술기준.인증 품목 코드, 유사·동의어 품목 코드별 정보 맞춤 추천)

□ 추진체계 (또는 추진절차)

○ 지능형 표준인증 통합플랫폼 구축



구분	구성	역할
프로젝트 총괄	- 기술규제대응국장	지능형표준인증시스템 구축사업총괄 사업계획 수립/검토, 행정업무 지원 사업산출물 품질 검사
외부자문단	- 민간 혹은 기관의 자문단	사업관련 표준인증 전문가 자문
의사결정 협의체	-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 산업기술시험원 담당 - KOTRA 무역기반본부담당	주요 의사결정 지원 이해관계자
프로젝트 관리자	- 기술규제협력과장 - 주관사업자 PM	업무 및 주요사안 협의 프로젝트 수행 사업관리(일정, 보고)
프로젝트 지원담당	- e-나라표준인증 담당	현 정보시스템 분석 지원 사업운영 시 인프라/보안 지원
추진 TFT	- 기술규제협력과 - 용역수행팀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분석설계·개발 사업 프로젝트 관리 수행 사업 품질 관리 및 감리수행
용역수행팀	- 용역 수행팀 기술별 구성원	최종산출보고서 작성 및 시연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표준·인증 정보 접근 등 디지털 격차가 기업경쟁력 약화 요인

- (국내)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제품별 표준·인증 정보 확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
 - * 중소기업 41.7%는 인증정보(품목별 인증대상 여부, 인증 절차, 시험 표준 등) 획득이 어렵다고 인식('20년 중소기업 인증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 (해외) 수출 기업도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품목별 기술요건 및 국가별 인증정보 제공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

< 수출 경제 협회·단체를 통한 표준인증 정보 지원 건의 사항 >

-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애로 건의, '19.4) 해외 시장 진출 등 수출시 필요한 해외 인증 획득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 요청
- ②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무역협회 건의 '19.7) 신남방 지역 진출 및 제품 수출을 위해 국가별·제품별 종합적인 인증제도 정보 확보가 어려움

◆ 급증하는 표준·인증 정보 수요에 혁신적 디지털 전환 필요

- (기업) 비대면 정보 수요가 증가* 하는 등 폭넓은 기업 정보 수요 충족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온라인 디지털 기반 확대 시급
 - * 1381 표준인증 콜센터 상담문의 현황 : ('14) 19,752건 → ('19) 87,130건(4.4배 증가↑)
- (정부) 정부도 국가별·품목별 새롭게 확장하는 표준·인증 제도에 대한 신속한 데이터 입수를 통해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필요
 - * 표준인증 등 기술규제 도입 통보현황(WTO) : ('00) 633 → ('10) 1,869 → ('19) 3337건

◆ 디지털 혁신 플랫폼(AI 도입 등) 구축을 통해 기업간 표준·인증 정보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장진출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

◆ 현장은 표준·인증 전문가 수준으로 체감 가능한 정보지원 요구

□ 중소기업은 ▲ 수출국가별·제도별 정보제공, ▲ 인증 단계별 맞춤정보 지원, ▲ 과도한 규제해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애로 건의

① 공급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 정부 제도별로 맞춤형 표준·인증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외부 컨설팅에 의존

< 현장애로·건의사례 >

-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인증에 대한 정보도 없어 외부 컨설팅을 받게 되고 비용도 2배 이상으로 부담스럽다('20 중소기업 인증취득 실태조사)
- » (시사점)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한 분산된 표준·인증 정보를 통합하고 新시장 진입기회를 찾도록 디지털 전환(AI 도입 등)을 통해 정보접근성 혁신 필요

② 복잡한 인증 절차에 업무부담 가중

- 국가별·품목별로 다수 인증 획득을 요구하고 있고 평가 표준도 다양하기 때문에 절차별 정보에 대한 밀착 지원 요구

< 현장애로·건의사례 >

- ◎ 제품 수출시 국가·품목별 인증, 획득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어 절차 진행에 애로가 크다('20 온라인 수출기업 FTA 활용간담회)
- » (시사점) 수출인증 절차별 핵심정보(품목별 표준, 시험항목, 공장심사 등)를 기업이 이해하기 쉽게 디지털화하여 시간과 비용 부담 대폭 절감 추진

③ 선제적인 표준·인증 규제 해소 요구

- 국제수준 보다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표준·인증제도·절차에 대해 신속한 데이터 입수·분석에 근거한 합리적 해소 노력 필요

< 현장애로·건의사례 >

- ◎ (국내) 기술규제영향평가, 인증제도 실효성평가 등 사전·사후관리 제도적 기반은 갖추었으나 데이터 수집·분석에 상당한 시간 소요
- ◎ (해외) 국가별 숨은 표준·인증 규제에 대한 정보파악 등 사전인지 어려움
- » (시사점) 데이터에 기반한 협업 플랫폼 구축으로 규제행정 환경을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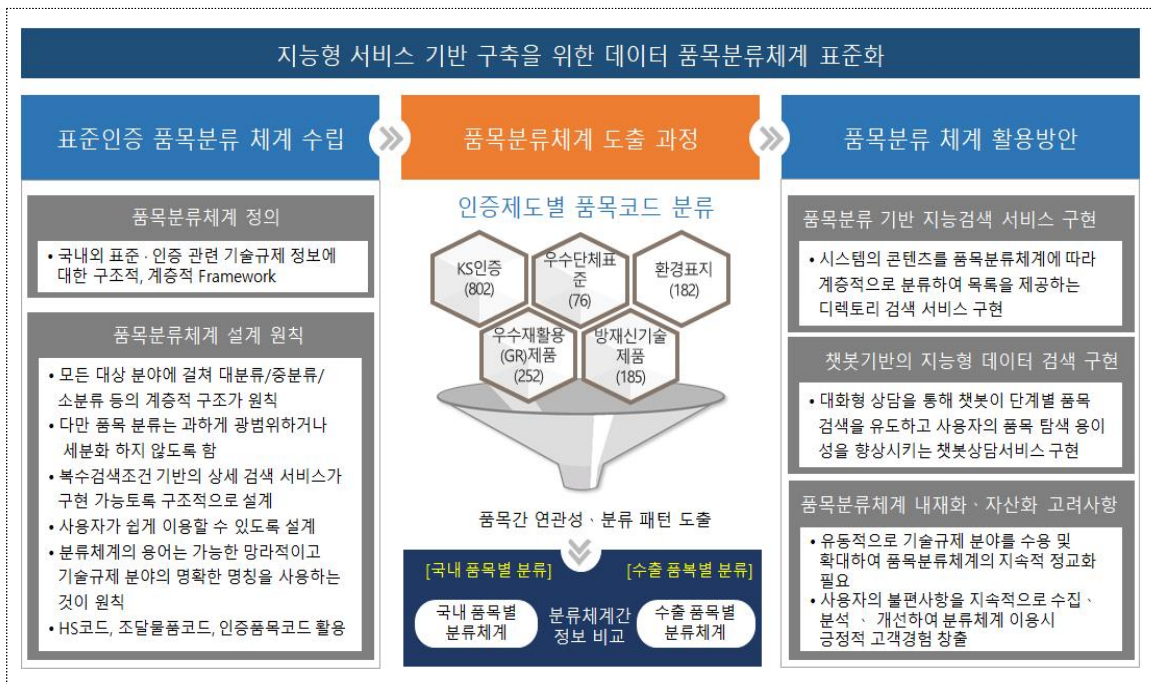
② 추진내용(과제별 세부 소요산출 내역 별첨)

- (지능형 데이터기반 구축) 국가별·제도별·품목별 필요한 표준·인증 데이터 수집·저장·가공·분석·활용 서비스 체계 구축

과제① 인증 획득 데이터담 구축(해외인증사례 2만건 → 해외인증 데이터 100만건+α 등)



과제②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해 키워드 검색에서 품목 검색 기반으로 표준·인증 데이터 분류체계 표준화(HS 코드, 인증품목 코드, 조달물품 코드, 유사동의 품목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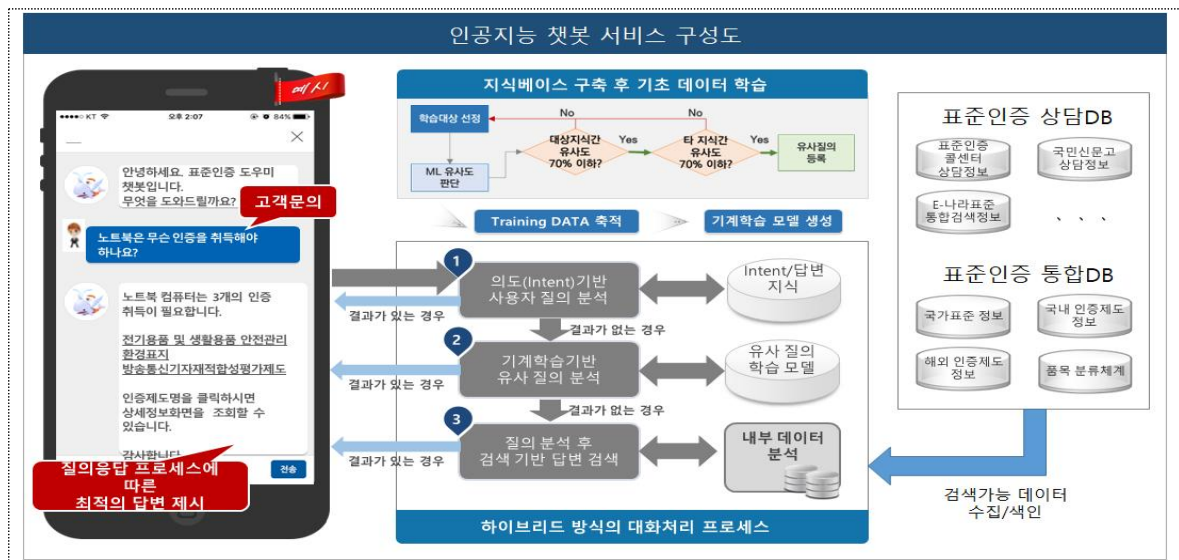


과제③ 지능형 검색·상담 서비스 제공 및 표준인증 정보연계 분석·기반 서비스를 위한 통합 포털 시스템 개발(⇒ 지능형 플랫폼 연계·분석·활용 플랫폼)

- **(현장체감 지능정보 구현)** 수집된 국내외 표준인증 데이터 학습을 통해 전문가 수준의 필요 정보 추천 검색, 질의, 응답 시스템 구축

과제④ 상담사례(국민신문고 표준인증콜센터 30만건) 및 통합DB 마인팅 → 인공지능상담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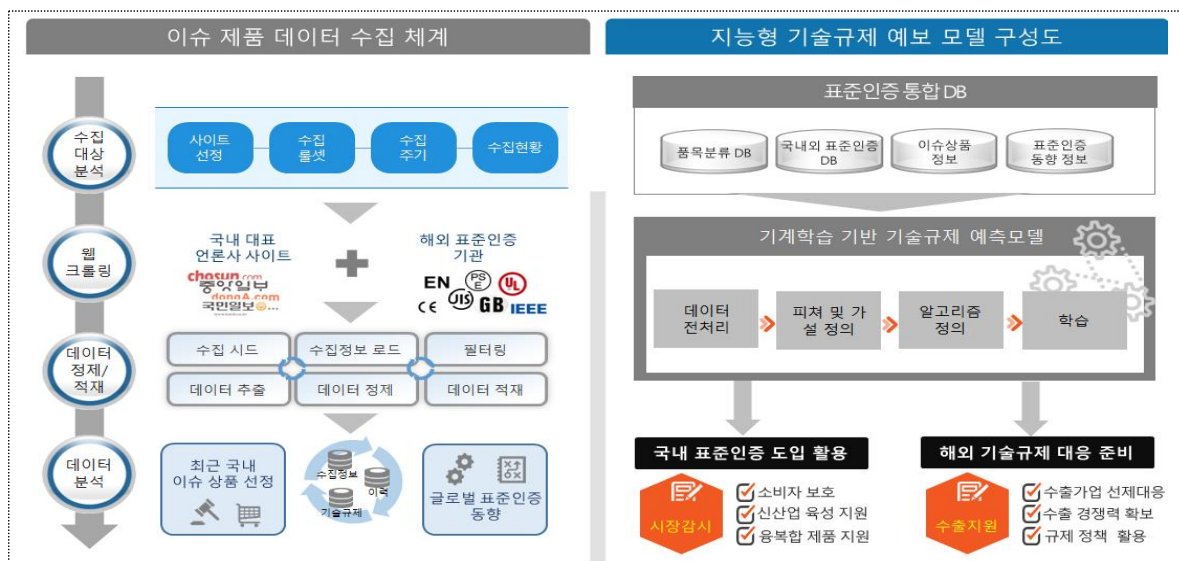
과제⑤ 모바일 지능형 상담·검색 서비스 체계 구축 → 현장 활용성 확대



- **(지능형 협업관리 시스템)** 부처의 효율적 표준·인증 데이터 정보·수집·분석 및 중복검증을 위한 지능형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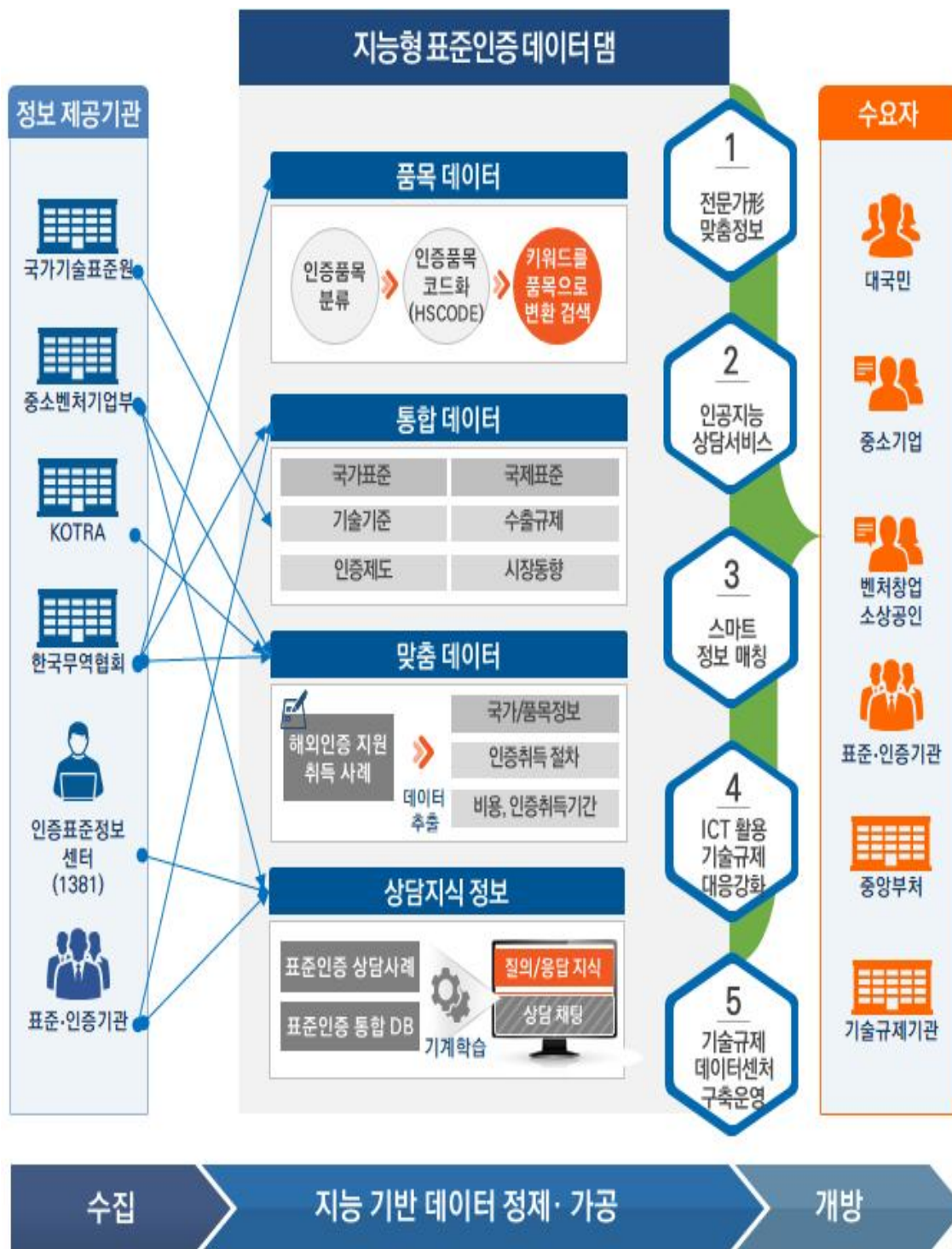
과제⑥ 기계가독형 표준문서·(인증)기술기준 문서체계 및 협업시스템 구축

과제⑦ 표준인증 데이터 분석협업 시스템 구축 → 표준인증 동향 파악 및 대응정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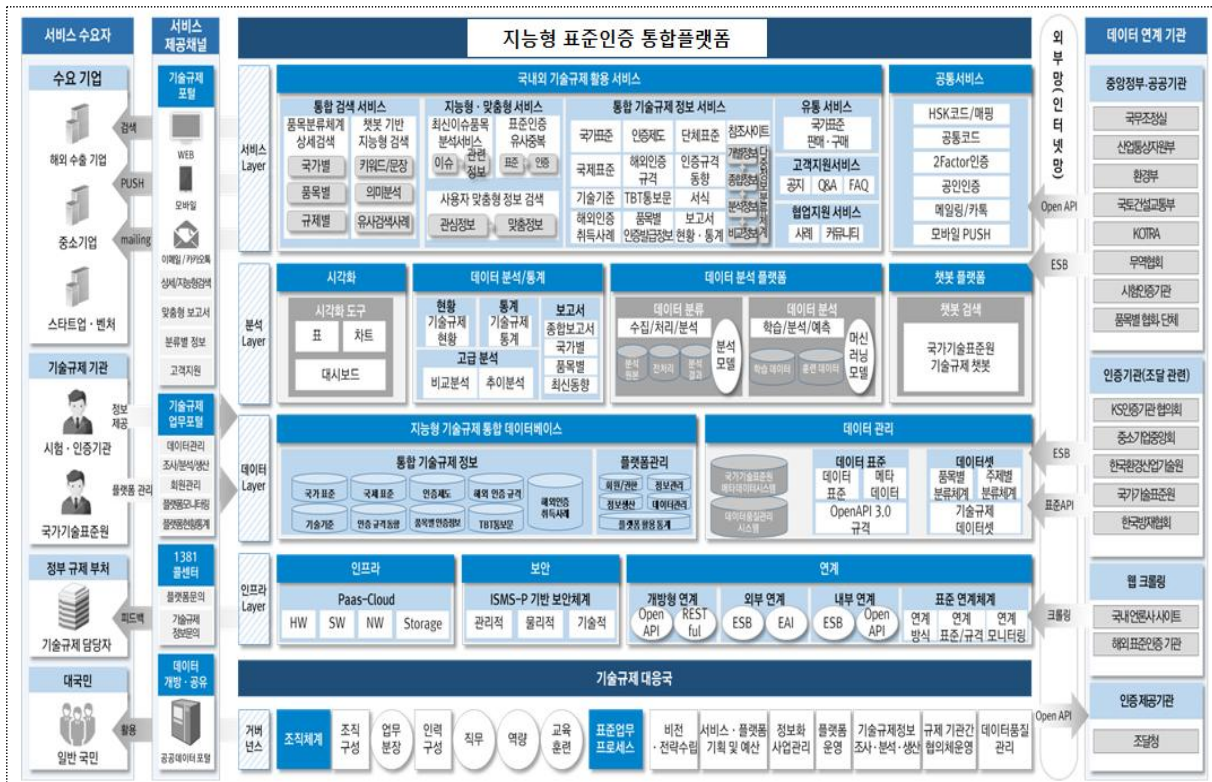


3 목표 시스템 개념도

【 지능형 표준인증 통합 플랫폼 서비스 】



3 목표시스템 및 소요예산 산정(22~24년, ISP 현황)



< 연도별 추진내용 및 소요예산(세부내역 별첨, '20년 ISP 결과 참조) >

연도	추진 내용	소요예산 (단위: 백만 원)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데이터 표준화체계 구축, 표준인증 및 상담 DB 구축(1차) - 챗봇 시스템 구축, 지능형 공통 인프라 구축 	1,955 (1차년도)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정확도정교화 향상, 표준인증 및 상담 DB 구축(2차) - 챗봇 시스템 고도화, 표준인증 맵 서비스 구축(1차) 	2,770 (2차년도)
'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연계·공유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시스템 구축 챗봇시스템 안정화 표준인증 및 상담 DB 구축(3차) - 표준인증 맵서비스 고도화(2차) 표준인증 협업 및 연계공유 강화 	3,370 (3차년도)
합계		8,095

4 기대효과

"시장으로 通하는 표준·인증 디지털 허브"



1 기술 혁신·경쟁력 제고

고품질 표준인증 데이터 수집·분석지원

- 표준인증 수출규제·시장동향 지능형 데이터기반 구축
- 지능형 표준인증 통합플랫폼 구축
- KS 표준문서의 기계가독 표준화 추진

2 시장개척 및 수출진흥

국내·해외 표준인증 통합정보서비스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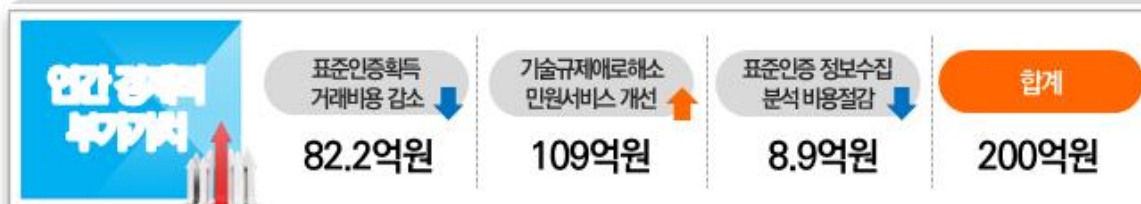
- 실시간 인공지능 표준인증 상담서비스
- 지능형 표준·인증 검색서비스 구현
- 스마트 기술규제 동향 알림 서비스

3 규제혁신 환경조성

데이터에 근거한 선제적 기술규제 대응

- 유사·중복 인증 검증시스템 구축
- 기술규제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 기술규제 데이터 분석 및 대응 지원

시험인증·거래비용 감소로 연간 “연간 200억” 가치창출



* 산출근거 : 지능형 기술규제 통합플랫폼 정보화전략기획(ISP, 20.6)

참고 3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1차) 서비스 개요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1차) 완료 및 서비스('22.6 - '23.1)

인공 지능 기술(AI)을 적용하여 기업이 필요한 표준인증 정보를 신속·편리하게 똑똑한(SMART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서비스 제공

① 현장 중심의 스마트(SMART)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제공

① 스마트 검색(Search) : 이(e)나라표준인증 포털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기업이 인증 획득에 편리하게 법정 인증 품목(4만여종)에 근접한 표준인증 관련 정보를 최적화*하여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기업이 현장에서 실제 생산·판매하는 『품목별 표준인증』 정보를 더욱 빠른 시간 내에 수집이 가능하다.

< *품목별 표준인증 최적화 검색 예시 >

현재(AS-IS)	개선(TO-BE)
▶ 「검색어 일치」 표준·인증 정보만 제공	▶ 검색어 연관 「품목별 표준·인증」 정보를 맞춤 추천
(예시) 학용품 검색어 입력 → 학용품 표준인증 정보만 제공	(예시) 학용품 검색어 입력 → 자유개 물감 색종이 필통 등 학용품 연관 품목별 표준인증 정보까지 확대 제공

② 스마트 알림(Alarming) : 국내·외 표준인증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최신 뉴스 및 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국제표준화기구(회원국), 국가별 기술규제 정책기관, 국내 표준·인증 관계부처 등 150개국 300여개 기관에서 자동 수집된 정보를 품목별로 맞춤 제공*하여 최신 표준인증 기술동향 파악 및 기술장벽에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 사용자는 이(e)나라표준인증 포털에서 이메일 신청·등록만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③ 스마트 상담(Messenger) : 표준인증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하듯이 온라인 챗봇* 서비스도 제공한다. 챗봇창에 품목명을 입력하면 인증대상 여부, 인증 평가기준, 인증 절차 등 인증 획득 과정별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상담한다. 챗봇 서비스는 「1381 표준인증 콜센터」와 연계되어 기업의 국내 인증 애로를 해소하는 통합 상담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1381 표준인증 콜센터 상담자료('18~'21) 1만여건을 분석하여 상담 지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④ 스마트 추천(Recommend) 및 ⑤ 스마트 연결(Tree) : 품목별 연관 검색어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추천하여 초보인증 담당자도 검색 한 번으로 관련 정보 습득이 가능하다. 또한, 「표준-인증-기술기준 관계도」 정보를 활용하면 다수 인증이 필요한 품목을 확인하거나 관련 시험평가 기준·항목을 찾는 데 활용하면 인증획득 시간·비용을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연결망 기법(Social Network Analysis) : 검색어와 연결성을 연관 맵(Map) 형식으로 시각화 제공

②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서비스 화면 구성도

로그인 | 알림설정

연간 방문자수 35,122,124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필요한 표준인증정보

나라표준인증 KOREAN STANDARDS & CERTIFICATION

① 스마트 검색

이슈 품목 10 | 10 | 프로그램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인기검색어 | 이차전지 | 박람회 | 가구 | 냉방고 | 컴퓨터

② 스마트 알림

스마트 알림

스마트 알림

TOP

③ 스마트 상담

스마트 상담

① 스마트 검색 : 검색어를 입력하면 인증획득에 편리하게 법정 인증품목(4만여종)에 근접한 표준·인증 정보 맞춤 제공

② 스마트 알림 : 국내·해외 300여개 표준인증기관으로 수집된 최신 기술·정책동향 제공(메일링서비스 등록 메뉴)

③ 스마트 상담 : 품목별 인증대상 여부, 인증평가기준, 인증 절차 등 표준인증제도 문답식 상담 서비스(챗봇) 제공

부처별 인증·기술기준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관세청 | 기상청 | 문화재청 | 방위사업청 | 산림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여성가족부 | 특허청 | 해양경찰청

분야별 국가표준 정보

월별국가표준

2022 2023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0 0 0 0

제정 개정 확인 폐지

←

물류

조선

항공우주

정보

기분

→

항공우주

항공우주 일반 표준부품, 항공기체·재료, 항공우주전자기, 항공전자장비, 지상지원장비, 기타

알림하세요

스마트 알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TOP

해외

인증제도동형

인증제도동행

[국토교통부] 스마트 도시
9곳, 스마트 서비스 4개 인
증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1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 결과 9곳의 도시와 4개의 서비스가 ...

 첨부파일


스마트알림

TOP

해외

 DE

인더스트리 4.0 표준화 로드맵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표준 로드맵의 목적은 각 분야의 이해
관계자에게 중요한 기본 요구사항...

2023-03-22



스마트알림



TOP

표준용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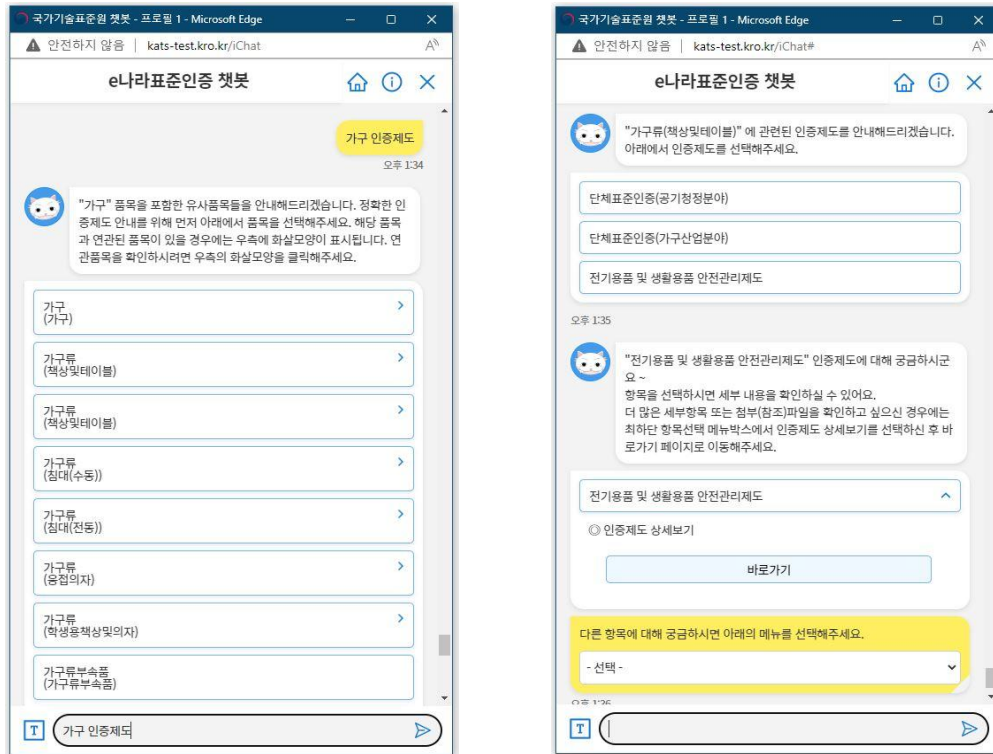
TOP

e-나라3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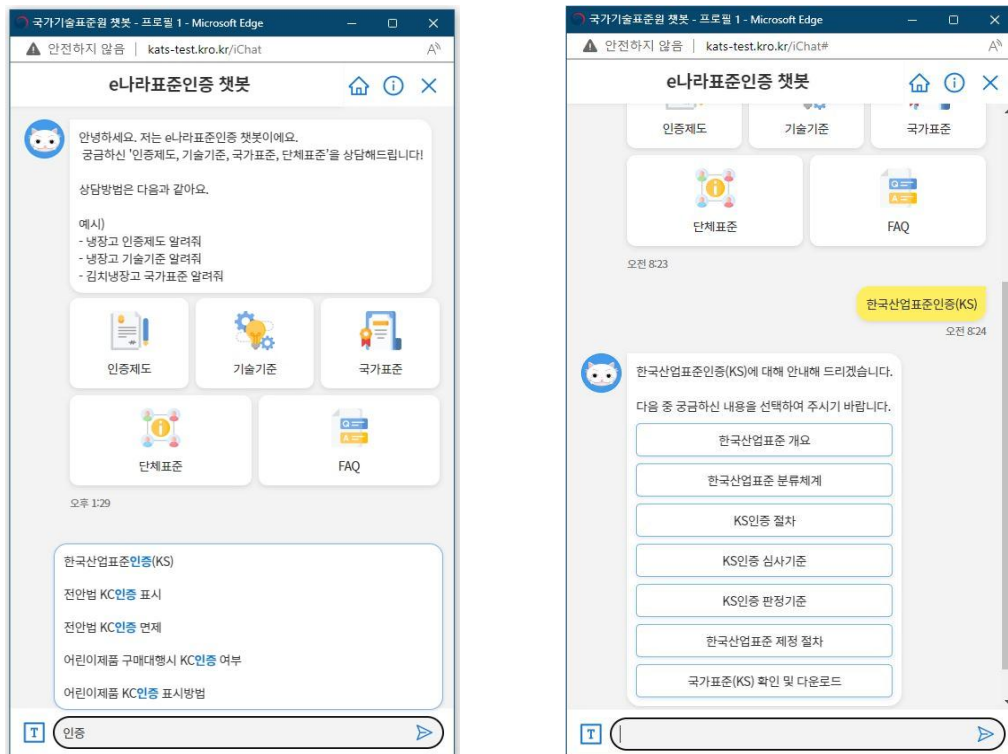
e나라 표준
활한 서비스
자원이 예

2019-08-02

◎ 챗봇을 통해 품목 관련 인증 정보를 상담한 결과(예시 : ‘가구’)



◎ 챗봇을 통해 KS 인증제도, 어린이제품·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 상담도 가능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서비스 개요(1차년도) >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해외 기술규제 및 인증 정보 연계 제공

추진내용
TBT 동보문 및 해외 인증 정보를 TBT 포털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해외 110개국 131개 사이트

시간·비용 절감 효과

개선효과
다수 인증이 필요한 품목을 확인하거나 관련 시험평가 기준·항목을 찾는 데 활용하면 인증획득의 시간·비용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기대효과

시장으로 통하는 표준·인증 디지털 허브

01 기술혁신 전망액 세고

02 시장개척 및 수출진출

03 규제혁신 환경조성

- ☑ 시장 맞춤형 정보서비스(S.M.A.R.T 지원)
- ☑ 고품질 표준인증 데이터 표준화로 비용과 시간 절감
- ☑ 데이터 기반 산업적 기술규제 대응

시험인증·거래비용 감소로 연간 200여 가치창출
* 산출근거: 지능형 기술규제 통합플랫폼 정보와전략기획(ISP, 2016)

표준인증획득 거래비용 감소
82.9대응

기술규제정보접근 민원서비스 개선
109대응

표준인증 정보수집 분석 비용절감
8.9대응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향후계획(추진로드맵)

1 단계 (23년 1월 구축완료)

품목별 데이터 표준화
표준인증 및 상담 DB 구축(1차)
지능형 챗봇 서비스
지능형 스마트 검색 모듈 고도화
종목규제 검증시스템
지능형 표준인증 통합플랫폼 구축

2 단계 (23년까지 구축예정)

지능형 데이터 링크화
표준인증 및 상담 DB 구축(2차)
챗봇서비스 고도화 및 표준인증 웹 서비스(1차)
지능형 스마트 검색 모듈 고도화
기계가독형 인증·기술기준 합입시스템 구축
먼저 및 정보지원 (S-2Zone) 전환

3 단계 (24년까지 구축예정)

지능형 표준인증 모바일 서비스
표준인증 및 상담 DB 구축(3차)
표준인증 웹 서비스 고도화(2차)
표준인증 협업 및 연계 공유 강화
기술규제 데이터 센터

국가기술표준원

정부 표준인증 정보, 기업에 꼭 찍어 알려준다!

온·오프라인 표준인증 포털, 지능형 서비스 체계로 산업 기반 추진
지능형 검색·상담 서비스로 인증획득 시간·비용 대폭 절감 기대

나라표준인증
표준인증.kr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Search 스마트 검색

추진내용
검색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행정 인증제도 품목(4.6만여종)에 근접한 표준인증 관련 정보를 최적화하여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어휘: 98% 문맥: 95% 문단: 75% 종합: 95%

빠른 시간대에 생산제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

개선효과
기업은 실제 생산·판매하는 품목별 표준인증 정보를 더욱 빠른 시간대에 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Messenger 스마트 상담

추진내용

- 인증대상 여부, 인증 평가기준, 인증 절차 등 인증 획득 과정별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상담합니다.
- 공산품 전기용품 KS 표준제도 어린이제품 인증제도 관련 상담도 가능합니다.

개선효과
표준인증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온라인 상담(챗봇)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Alarming 스마트 알림

추진내용
국내외 표준인증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최신 뉴스 및 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합니다.
(150개국 300여개 기관에서 자동 수집된 정보를 품목별로 맞춤 제공)

개선효과
최근 표준인증 기술동향 파악 및 기술장벽에 대응하도록 지원합니다.

국내외 표준인증기관 웹사이트, 표준 인증 고시공시 정보로부터
데이터 자동수집 > 분석 > 저장 > 알림 서비스를 제공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Recommen & Tree 스마트 추천 & 스마트 연결

추진내용
부차원·제도별로 상호 연관된 표준인증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추천하여 초보인증 담당자도 검색 한 번으로 품목별 통합 정보 분석이 가능합니다.

개선효과
다수 인증이 필요한 품목을 확인하거나 관련 시험평가 기준·항목을 찾는 데 활용하면 인증획득의 시간·비용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참고 4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현황 및 운영성과

○ 사업 추진현황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개편 등 기능 고도화, 오픈 플랫폼을 이용한 콘텐츠 확장으로 추가 재원 없이 정책 정보 채널 확대
 - * 국가기술표준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표준·안정 정책 콘텐츠 제작·보급
- 국가기술표준원 정책정보 전달력 확산을 위해 홈페이지 개편 등 대국민 만족도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 * 홈페이지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 ('21) 84점 → ('22) 84.5점

○ 사업 추진성과

- 국가기술표준원 핵심정책 포토뉴스, 카드뉴스 제작·보급, 각종사업 고시·공고 등 대국민 정책홍보·정보제공 수단으로 활용

< 카드뉴스 제작·보급 >



- 디지털 아카이브(블로그, 유튜브, 포스트 등) 신설 등 국민과 소통을 위한 접촉 면적 대폭 확대
 - * 국가기술표준원 정책 뉴스를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콘텐츠 제작·보급

국가기술표준원 블로그	국가기술표준원 포스트	국가기술표준원 유튜브

참고 5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SW 현황

☐ 홈페이지 · 업무포털 지원 전산장비(HW)

구분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서버 / 스토리지	통합가상화 서버(업무망)	HP Blade BL460c G8	1
	통합가상화 서버(인터넷망)	HP Blade BL460c G8	1
	통합가상화 스토리지(업무망)	HP Storwize V3700	1
	통합가상화 스토리지(업무망)	MSA 2052	1
	통합가상화 스토리지(인터넷망)	HP Storwize V3700	1
	통합가상화 스토리지(인터넷망)	MSA 2042	1
	e-KOLAS AP	IBM P720	1
	e-KOLAS DB	IBM P720	1
	e-KOLAS 스토리지	IBM DS3512	1
	e-KOLAS HMC	IBM X3550 M3	1
	사이즈코리아 웹서버	DELL R410	4
	사이즈코리아 DB서버	DELL R610	2
	사이즈코리아 파일서버	HP DL360 G5	2
	사이즈코리아 PSM	DELL 1950	1
	백업서버	Arcserve-9040V	1
	IP관리 서버(업무망)	IBM X3550 M3	1
	IP관리 서버(인터넷망)	IBM X3550 M3	1
	IP관리프로그램 관리 서버(내부망)	INI MAX IPKeeper	1
	IP관리프로그램 관리 서버(인터넷망)	INI MAX IPKeeper	1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서버	DELL PowerEdge R520	1
	PMS 및 PC 보안관리 서버	HP DL380 G6	1
	보안USB 서버(업무망)	HP ProLiant DL380 G6	1
	보안USB 서버(인터넷망)	HP ProLiant DL380 G6	1
	보조기억매체관리 서버(업무망)	IBM X3550 M3	1
	보조기억매체관리 서버(인터넷망)	IBM X3550 M3	1
	웹키퍼 미러링 서버	CT-1000	1
	V3 배포서버(업무망)	AhnLab EMS 2000A	1
	V3 배포서버(인터넷망)	AhnLab EMS 2000A	1
	개발서버(업무망)	HP Proliant DL380 Gen9	1
	개발서버(인터넷망)	HP Proliant DL380 Gen9	1
	소계		35

구분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전송장비	업무망 백본스위치(메인백본)	제품명 : BigIron RX-4 제조사 : BROCADE	1
	인터넷망 백본스위치(메인백본)	제품명 : OmniSwitch OS9700 제조사 : Alcatel Lucent	1
	업무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FWS 624 제조사 : BROCADE	35
	인터넷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OmniSwitch OS6700 제조사 : Alcatel Lucent	1
	인터넷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OmniSwitch OS6300 제조사 : Alcatel Lucent	7
	인터넷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OmniSwitch OS6400 제조사 : Alcatel Lucent	32
	업무망 L4 스위치	제품명 : PIOLINK 제조사 : Application Switch 3000	1
	인터넷망 광포트	제품명 : OS9-GNI-U24 제조사 : Alcatel Lucent	1
	소계		
보안장비	NAT 방화벽	제품명 : AhnLab TrusGuard 제조사 : 안랩	1
	업무망 방화벽	제품명 : ISG-1000 제조사 : 주니퍼	1
	인터넷망 방화벽	제품명 : WeGuardia XTM6000 제조사 : 퓨처시스템	1
	인터넷망 웹방화벽	제품명 : WAPPLES-2400 제조사 : 펜타시큐리티	1
	좀비PC방지용 방화벽	제품명 : AhnLab TrusWatcher 제조사 : 안랩	1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	제품명 : VENUS 제조사 : 엑스큐어넷	1
	IP 관리 시스템	제품명 : IPKEEPER 제조사 : 아이앤아이맥스	2
	IPS(사이버안전센터 연동)	제품명 : Sniper IPS NE2000 제조사 : 윈스	1
	소계		
총 합 계(서버 · 스토리비, 전송장비, 보안장비)			112

□ 상용 패키지 SW

패키지명	패키지 SW		
	모델명	용도	수량
제품명 : VMWare vCenter	제조사 : VMWare	가상화서버 운영 SW	4
제품명 : VMWare vSphere	제조사 : VMWare	가상화서버 관리 SW	4
제품명 : IPKeeper	제조사 : INIMAX	IP관리 솔루션	1
제품명 : D'amo	제조사 : 펜타시큐리티	개인정보보호 솔루션(DB 암호화)	1
제품명 : Privacy-i	제조사 : 소만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PC 보안)	1
제품명 : ChakraMax	제조사 : (주)펜타시큐리티	개인정보 접근제어	1
제품명 : UBI SAFER-PSM MASTER	제조사 : 이지서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보안관리 솔루션)	1
제품명 : UBI SAFER-PSM MANAGER	제조사 : 이지서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로그수집 서버)	1
제품명 : UBI SAFER-PSM AGENT	제조사 : 이지서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로그수집 에이전트)	1
제품명 : PDF-Gateway	제조사 : 이파피루스	KS표준 e-book열람시스템	1
제품명 : NetClient	제조사 : (주)닥터소프트	SW자산관리 솔루션	2
제품명 : SafeUsb	제조사 : 닥스테크(주)	보조기억매체 관리 솔루션	2
제품명 : Rpoint	제조사 : 코드링크	인터넷망PC 문서삭제 SW	1
제품명 : nProtect Enterpirse	제조사 : 잉카인터넷	PC 보안솔루션	1
제품명 : Backup Exec	제조사 : Symantec	백업SW	1
제품명 : BigLook WASS	제조사 : 이븐스타	웹취약점 점검 SW	1
제품명 : MS-SQL 2008	제조사 : Microsoft	통합DB운영	1
제품명 : Window Server 2008	제조사 : Microsoft	서버 운영체제	2
제품명 : ContentWise CMS	제조사 : ContentWise	업무포털 CMS	1
제품명 : Jeus+Webtob	제조사 : 티맥스소프트	e-KOLAS WEB/WAS	1
제품명 : Tiberio	제조사 : 티맥스소프트	e-KOLAS DBMS	1
합 계			30

사 업 명
(24)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71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국가기술표준원	-	110	116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총괄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3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국가기술표준원정책수립운영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전용옥	김상걸	이주현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1,312	1,665	1,702	1,702	37	2.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28	1,628	1,312 [1,312]	-	316	1,665	1,665	1,346 [1,346]	1,665	1,346 [1,346]	-	319	1,702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1,628	1,628	1,312 [1,312]	-	316	1,665	1,665	1,346 [1,346]	1,665	1,346 [1,346]	-	319	1,702
○ 비목별 분류(합계)	1,628	1,628	1,312 [1,312]	-	316	1,665	1,665	1,346 [1,346]	1,665	1,346 [1,346]	-	319	1,702
· 상용임금(110-03)	790	790	676 [676]	-	114	810	810	693 [693]	810	693 [693]	-	117	695
· 일반수용비(210-01)	-	-	-	-	-	8	8	8 [8]	8	8 [8]	-	-	40
· 임차료(210-07)	450	450	359 [359]	-	91	450	450	389 [389]	450	389 [389]	-	61	360
· 유류비(210-08)	14	14	9 [9]	-	5	15	15	12 [12]	15	12 [12]	-	3	9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29	129	129 [129]	-	-	131	131	125 [125]	131	125 [125]	-	6	359
· 복리후생비(210-12)	11	11	11 [11]	-	-	10	10	10 [10]	10	10 [10]	-	-	10
· 업무추진비(240-02)	8	8	8 [8]	-	-	8	8	8 [8]	8	8 [8]	-	-	8
· 포상금(310-03)	2	2	2 [2]	-	-	2	2	2 [2]	2	2 [2]	-	-	2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70	70	51 [51]	-	19	72	72	59 [59]	72	59 [59]	-	13	81
· 고용부담금(320-09)	153	153	66 [66]	-	87	158	158	39 [39]	158	39 [39]	-	119	136
· 자산취득비(430-01)	1	1	1 [1]	-	-	1	1	1 [1]	1	1 [1]	-	-	2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28	1,628	1,312 [1,312]	-	316	1,665	1,665	1,346 [1,346]	1,665	1,346 [1,346]	-	319	1,702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1,628	1,628	1,312 [1,312]	-	316	1,665	1,665	1,346 [1,346]	1,665	1,346 [1,346]	-	319	1,702	
- 상 용 임 금 (110-03)	790	790	676 [676]	-	114	810	810	693 [693]	810	693 [693]	-	117	695	
- 일 반 수 용 비 (210-01)	-	-	-	-	-	8	8	8 [8]	8	8 [8]	-	-	40	
-임차료(210-07)	450	450	359 [359]	-	91	450	450	389 [389]	450	389 [389]	-	61	360	
-유류비(210-08)	14	14	9 [9]	-	5	15	15	12 [12]	15	12 [12]	-	3	9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29	129	129 [129]	-	-	131	131	125 [125]	131	125 [125]	-	6	359	
- 복 리 후 생 비 (210-12)	11	11	11 [11]	-	-	10	10	10 [10]	10	10 [10]	-	-	10	
- 업 무 추 진 비 (240-02)	8	8	8 [8]	-	-	8	8	8 [8]	8	8 [8]	-	-	8	
- 포상금(310-03)	2	2	2 [2]	-	-	2	2	2 [2]	2	2 [2]	-	-	2	
- 민간경상보조 (320-01)	70	70	51 [51]	-	19	72	72	59 [59]	72	59 [59]	-	13	81	
- 고 용 부 담 금 (320-09)	153	153	66 [66]	-	87	158	158	39 [39]	158	39 [39]	-	119	136	
- 자 산 취 득 비 (430-01)	1	1	1 [1]	-	-	1	1	1 [1]	1	1 [1]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2) 사업개요: 해당없음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65,000 천원	○ 상용임금(110-03) : 809,674천원 가. 기계, 전기, 조경, 미화 전문직 인건비 (809,674천원) · 전문직 인건비 : 3,066,947원×22명×12개월=809,674천원	1,702,000 천원	○ 상용임금(110-03) : 694,672천원 가. 기계, 전기, 조경, 미화 전문직 인건비 (694,672천원) · 전문직 인건비 : 3,046,807원×19명×12개월=694,672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8,110천원 가. 안전 보건 관련 용역비 (8,110천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용역 : 8,110천원×1식=8,11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0,000천원 가. 안전 보건 관련 용역비 (40,000천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용역 : 40,000천원×1식=40,000천원
	○ 임차료(210-07) : 450,000천원 가. 통근버스 임차료 (450,000천원) · 통근버스 임차료 : 5대×200일×450천원=450,000천원		○ 임차료(210-07) : 360,000천원 가. 통근버스 임차료 (360,000천원) · 통근버스 임차료 : 4대×200일×450천원=360,000천원
	○ 유류비(210-08) : 14,760천원 가. 소형승용(코나 등) (1,500천원) · 소형승용 유류비 : 1,500천원×1대=1,500천원		○ 유류비(210-08) : 9,000천원 가. 소형승용(코나 등) (1,500천원) · 소형승용 유류비 : 1,500천원×1대=1,500천원
	나. 소형버스(에어로타운) (2,500천원) · 소형버스 유류비 : 2,500천원×1대=2,500천원		나. 소형버스(에어로타운) (1,000천원) · 소형버스 유류비 : 1,000천원×1대=1,000천원
	다. 소형화물(봉고) (1,300천원) · 소형화물 유류비 : 1,300천원×1대=1,300천원		다. 소형화물(봉고) (1,500천원) · 소형화물 유류비 : 1,500천원×1대=1,500천원
	라. 중형승합(쏘라티 등) (9,500천원) · 쏘라티 유류비 : 2,500천원×1대=2,500천원 · 카니발 유류비 : 3,500천원×2대=7,000천원		라. 중형승합(쏘라티 등) (5,000천원) · 쏘라티 유류비 : 2,500천원×1대=2,500천원 · 카니발 유류비 : 2,500천원×1대=2,5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31,000천원 가. 건물 관리 유지비 (65,000천원) · 외벽, 보도, 주차장, 소화설비 등 : 65,000천원×1식=65,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59,000천원 가. 건물 관리 유지비 (120,000천원) · 외벽, 보도, 주차장, 소화설비 등 : 120,000천원×1식=120,000천원
	나. 기계, 전기, 통신 유지비 (66,000천원) · 지열, 공조, 수배전, CCTV 등 : 66,000천원×1식=66,000천원		나. 기계, 전기, 통신 유지비 (149,000천원) · 지열, 공조, 수배전, CCTV 등 : 149,000천원×1식=149,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0,494천원 가. 기계, 전기, 조경, 미화 전문직 복리후생비 (10,494천원) · 전문직 복리후생비 : 477,000원×22명=10,494천원		다. 조경 등 (50,000천원) · 유지비 : 50,000천원×1식=50,00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8,480천원 가. 시설안전평가회의 (4,500천원) · 시설안전평가회의 : 500천원×9회=4,500천원		라. 차량 등 시설 유지비 (40,000천원) · 유지비 : 40,000천원×1식=40,000천원
	나. 시설안전기관간담회 (1,580천원) · 시설안전기관간담회 : 316천원×5회=1,58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9,994천원 가. 기계, 전기, 조경, 미화 전문직 복리후생비 (9,994천원) · 전문직 복리후생비 : 526,000원×19명=9,994천원
	다. 시설분야별직원간담회 (2,400천원) · 시설분야별직원간담회 : 300천원×8회=2,40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8,000천원 가. 시설안전평가회의 (4,500천원) · 시설안전평가회의 : 500천원×9회=4,500천원
	○ 포상금(310-13) : 2,000천원 가. 포상금 및 상금 (2,000천원) · 직원 포상금 : 2,000천원×1회=2,000천원		나. 시설안전기관간담회 (1,400천원) · 시설안전기관간담회 : 280천원×5회=1,400천원
			다. 시설분야별직원간담회 (2,100천원) · 시설분야별직원간담회 : 300천원×7회=2,100천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p>○ 민간경상보조(320-01) : 72,000천원</p> <p>가. 공동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비 (72,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비 : 600천원×12개월×10명=72,000천원 <p>○ 고용부담금(320-09) : 157,482천원</p> <p>가. 기계, 전기, 조경, 미화 전문직 고용부담금 (157,482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직 고용부담금 : 7,158,273원×22명=157,482천원 <p>○ 자산취득비(430-01) : 1,000천원</p> <p>가. 기타시설장비 구매 (1,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구매 : 1,000천원×1식=1,000천원 		<p>○ 포상금(310-13) : 2,000천원</p> <p>가. 포상금 및 상금 (2,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포상금 : 2,000천원×1회=2,000천원 <p>○ 민간경상보조(320-01) : 81,000천원</p> <p>가. 공동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비 (81,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비 : 675천원×12개월×10명=81,000천원 <p>○ 고용부담금(320-09) : 136,135천원</p> <p>가. 기계, 전기, 조경, 미화 전문직 고용부담금 (136,135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직 고용부담금 : 7,165,000원×19명=136,135천원 <p>○ 자산취득비(430-01) : 2,199천원</p> <p>가. 기타시설장비 구매 (2,199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구매 : 2,199천원×1식=2,199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1,628	1,665	1,751	1,904	2,088	
'23~'27		1,665	1,748	1,818	1,873	1,91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으로 시설 전문직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을 매년 지출
- 국가기술표준원 청사 관리, 시설장비 유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지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1,644	-	1,644	-	-	-	1,644	1,595	97.0	97.0	-	49
2021	1,592	-	1,592	-	-	-	1,592	1,357	85.2	85.2	-	235
2022	1,628	-	1,628	-	-	-	1,628	1,312	80.6	80.6	-	316
2023	1,665	-	1,665	-	-	-	1,665	1,346	80.8	80.8	-	31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67	67	57	57	-	57	57	-	-	85.1
2021	56	63	63	63	-	63	63	-	-	100
2022	70	70	51	51	-	51	51	-	-	72.9
2023. 12월기준	72	72	59	59	-	59	59	-	-	81.9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 이·전용 등 사유: 임차료(210-07)가 부족하여, 시설장비유지비(210-09)에서 세목조정 / 근로자 퇴직연금 지급을 위해 고용부담금(320-09)가 부족하여, 상용임금(110-03)에서 세목조정
2021	- 이·전용 등 사유: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민간경상보조(320-01)가 부족하여, 고용 부담금(320-09)에서 세목조정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div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사 업 명</div> <div style="font-size: 1.1em; margin-top: 10px;">(25) 기술표준정책(7134-302)</div>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302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국가기술표준원정책수립운영	기술표준정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2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술표준정책	국가기술표준원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품질경영 문화 확산		적합성정책국 시험인증정책과	박형민	김상태	
전문관 고용 포상금 운영 청년인턴 고용		지원총괄과	전용옥		신지원
			043-870-5320		043-870-532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기술표준정책	627	739	949	949	210	28.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3	723	627	-	96	739	769	683	769	683	-	86	949	
· 전문관 고용	604	604	508	-	96	619	619	535	619	535	-	84	637.2	
· 품질경영문화 확산	115	115	115	-	-	116	116	116	116	116	-	-	204.8	
· 포상금 운영	4	4	4	-	-	4	4	4	4	4	-	-	4	
· 청년인턴고용	-	-	-	-	-	-	30	28	30	28	-	2	103	
○ 비목별 분류(합계)	723	723	627	-	96	739	769	683	769	683	-	86	949	
· 상용임금(110-03)	499	499	412	-	87	511	511	494	511	494	-	17	525.6	
· 일용임금(110-04)	-	-	-	-	-	-	29	27	27	27	-	2	97	
· 일반수용비(210-01)	61	61	61	-	-	61	62	62	62	62	-	-	141.8	
· 복리후생비(210-12)	9	9	9	-	-	9	9	9	9	9	-	-	8.7	
· 일반용역비(210-14)	54	54	54	-	-	54	54	54	54	54	-	-	64	
· 국내여비(220-01)	-	-	-	-	-	-	-	-	-	-	-	-	5	
· 포상금(310-03)	4	4	4	-	-	4	4	4	4	4	-	-	4	
· 고용부담금(320-09)	96	96	87	-	9	99	100	33	100	33	-	67	102.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23	723	627	-	96	739	769	683	769	683	-	86	949	
· 전문관 고용	604	604	508	-	96	619	620	536	620	536	-	84	637.2	
-상용임금(110-03)	499	499	412	-	87	511	511	494	511	494	-	17	525.6	
-복리후생비(210-12)	9	9	9	-	-	9	9	9	9	9	-	-	8.7	
-고용부담금(320-09)	96	96	87	-	9	99	100	33	100	33	-	67	102.9	
· 품질경영문화 확산	115	115	115	-	-	116	116	116	116	116	-	-	204.8	
-일반수용비(210-01)	61	61	61	-	-	62	62	62	62	62	-	-	140.8	
-일반용역비(210-14)	54	54	54	-	-	54	54	54	54	54	-	-	64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포상금 운영	4	4	4	-	-	4	4	4	4	4	-	-	4
-포상금(310-03)	4	4	4	-	-	4	4	4	4	4	-	-	4
· 청년인턴고용	-	-	-	-	-	-	29	27	29	27	-	2	103
-일용임금(110-04)	-	-	-	-	-	-	29	27	29	27	-	2	97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1
-국내여비(220-01)	-	-	-	-	-	-	-	-	-	-	-	-	5

※ 동 사업은 직접 수행 사업으로 집행액과 실집행액이 동일함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문관 고용)** 국가기술표준원 정책·업무(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를 지원하는 전문관(16명) 인력 운영을 통해, 업무 능률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 **(국가품질경영문화 확산)**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 품질향상, 가격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등의 혁신활동 성과 포상을 통해, 품질경영 문화를 활성화하여 국가품질 경쟁력을 강화
- **(포상금 운영)** 국가기술표준원 우수 부서 연말 포상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와 개인 역량 제고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8조(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 산업표준화법 >

○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 ①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또는 서비스품질개선 등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및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의4(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 ①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다음 각 목의 상
가. 국가품질대상 나. 국가품질경영상 다. 국가품질혁신상
2. 품질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 국가품질명장 및 품질경영유공자
3. 품질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집단: 우수품질분임조상(금상, 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여 포상한다)

-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상(副賞) 및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포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또는 소집단의 임직원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품질경영 관련 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강의료 지원
2. 품질경영에 관한 국내외 연수 경비의 지원(수상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속한 소집단인 경우와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추진경위

○ 국가표준화체계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06.0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12.0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2016.04.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17.12. 『유망 신산업(12대 분야) 표준화 로드맵』수립
- 2019.06.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수립」(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국가품질경영대회 : 1975년 10월 ‘제1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로 시작

< 최근 3년간 정부포상 수여 규모 >

종 류	'22년	'21년	'20년
훈장	3	4	3
포장	3	2	3
대통령 표창	18	18	18
국무총리 표창	13	13	13
소계	37	37	37

- 역대 주요 참석인사

- 1975. 제1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김종필 국무총리)
- 1992. 제18회 전국품질경영대회(노태우 대통령)
- 1994. 제20회 전국품질경영대회(김영삼 대통령)
- 2019.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이낙연 국무총리)
- 2020.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정세균 국무총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7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724	711	723	739	949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관, 품질경영 우수기업 및 개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전문관 고용 : ('23) 619백만원 → ('24 정부안) 637.2백만원

- (요구)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전문관 인건비 요청
- (산출) 상용임금 525.6백만원(16명×2.73백만원×12개월)+복리후생비 8.7백만원(16명×0.54백만원) + 고용부담금 102.9백만원(16명×6.43백만원)

(2) 국가품질경영 문화 확산 : ('23) 116백만원 → ('24 정부안) 204.8백만원

- (요구) 품질경영에 기여한 우수 기업·유공자 포상을 위한 심사비와 포상물 제작비 지원을 위함
- (산출) 심사수당 140.8백만원(0.3만원×5개분야×3일×30명)+포상물 제작비 64백만원

(3) 포상금 운영 : ('23) 4백만원 → ('24 정부안) 4백만원

- (요구) 국가기술표준원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을 위함
- (산출) 포상금 4백만원(4개과×100만원)

(4) 청년인턴고용 : ('23) - 백만원 → ('24 정부안) 103백만원

- (요구) 정부기관 업무 경험을 제공하여, 청년인턴의 실무경험 및 국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함(정부 청년고용정책)
- (산출) 청년인턴 임금 97백만원(11백만원(2.24백만원×1.6명(채용인원의 20%)×3개월) + 86백만원(2.24백만원×6.4명(채용인원의 80%)×6개월)) + 국내여비 5백만원 + 사무운영비 1백만원

○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39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관 고용 : 61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임금(110-03) : 511백만원(16명×266만원×12개월) - 복리후생비(210-12) : 9백만원(16명×54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99백만원(16명×620만원) ○ 국가품질경영 문화 확산 : 11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210-01) : 62백만원(심사수당) - 일반용역비(210-14) : 54백만원(포상물 제작비) ○ 포상금 운영 :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310-03) : 4백만원 	949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관 고용 : 637.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임금(110-03) : 525.6백만원(16명×273만원×12개월) - 복리후생비(210-12) : 8.7백만원(16명×54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02.9백만원(16명×646만원) ○ 국가품질경영 문화 확산 : 204.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210-01) : 140.8백만원(심사수당) - 일반용역비(210-14) : 64백만원(포상물 제작비) ○ 포상금 운영 :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310-03) : 4백만원 ○ 청년인턴고용 : 10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임금(110-04) : 97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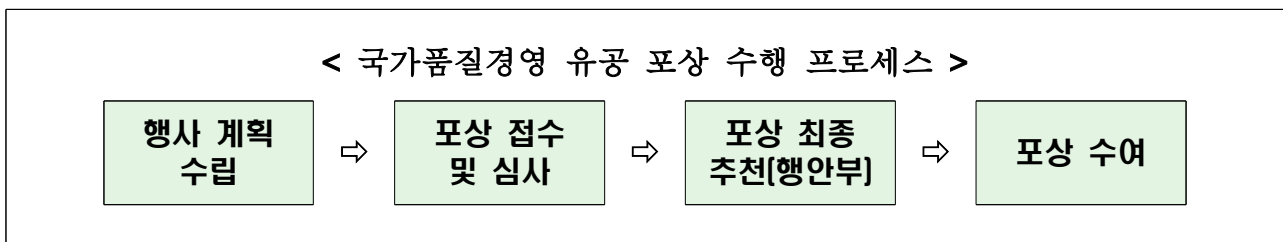
2020	전문관 16명 고용, 품질경영 우수 기업 및 개인에게 훈·포장 등 447점 수여
2021	전문관 16명 고용, 품질경영 우수 기업 및 개인에게 훈·포장 등 391점 수여
2022	전문관 16명 고용, 품질경영 우수 기업 및 개인에게 훈·포장 등 402점 수여
2023	전문관 16명 고용, 품질경영 우수 기업 및 개인에게 훈·포장 등 415점 수여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문관의 안정적 고용 및 국가품질경영대회 지속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 수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723	862	921	985	1,023	
'23~'27		739	1,976	2,037	2,103	2,17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술표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관 인건비 등을 지출- 품질경영 유공자를 포상·격려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을 위해 지출 |
|--|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0	724	-	724	-	-	-	724	717	99.0	99.0	-	7
2021	711	-	711	-	-	-	711	675	94.9	94.9	-	36
2022	723	-	723	-	-	-	723	627	86.7	86.7	-	96
2023	739	-	739	-	30	-	769	683	92	88.8	-	86

※ '국제부담금' 비목이 2020년부터 철강세라믹과 소관 '국제부담금(1932-304)' 사업으로 이관됨

※ 23년도 청년인턴 고용에 따라, 30백만원 전용하여 인건비 집행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전문관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7백만원 불용
2021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전문관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6백만원 불용
2022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전문관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96백만원 불용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청년인턴 고용에 따라, 30백만원 전용하여 인건비 집행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전문관 휴직 및 연도중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86백만원 불용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3.6.13	국가기술표준원 인건비 (7102-101)	110-01	17	기술표준정책 (7134-302)	110-04	청년인턴 고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을 위함
23.6.13	국가기술표준원 인건비 (7102-101)	110-01	1	기술표준정책 (7134-302)	320-09	청년인턴 고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을 위함
23.11.17	국가기술표준원 인건비 (7102-101)	110-01	12	기술표준정책 (7134-302)	110-04	청년인턴 고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을 위함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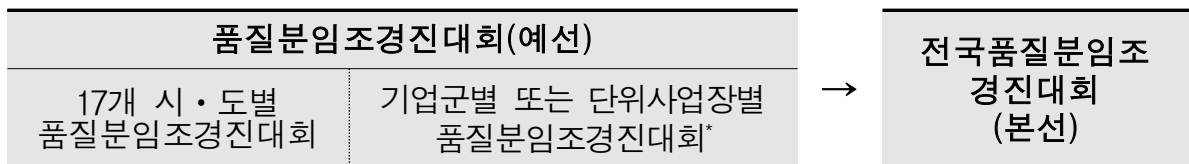
참고1 품질분임조 및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요

□ 품질분임조 개념 및 현황

- **(개념)** 산업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품질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소집단
 - * 공업표준화법 제정('61.9)으로 KS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해 시작한 '제조 현장 품질관리 운동'이 그 시효
- **(현황)** '75년부터 '23년까지 7,742팀이 수상
 - * 1만여 사업장에서 5만4천여 개 분임조(분임원수 54만여 명)가 연간 3조원의 재무성과 달성 등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 **(목적)** 품질분임조를 산업계 개선 활동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벤치마킹을 유도하여 품질경쟁력 강화
- **(법적근거)**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 **(부분)** 현장개선, 사무간접, 서비스, 안전품질, 6시그마, 설비(TPM), 보전경영(EAM), 스마트팩토리, 사회적가치창출, 상생협력, 탄소중립, 자유형식(제조), 자유형식(서비스), R&D, 학습조직(CoP), 제안사례 등 16개 부문
- **(대상)** 품질경영추진본부 등록 품질분임조 중 시·도 예선대회 또는 기업군·사업장별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분임조가 전국대회 출전



* 품질경영추진본부의 승인을 받은 200개 이상 분임조가 있는 단위사업장은 자체 품질분임조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분임조 선발

- **(내용)** 전국대회(본선)에서 품질분임조 활동내용에 대한 현장 발표 평가를 통해 금·은·동 메달 선정

참고2 국가품질경영 유공 정부포상 개요

- **(목적)** 제조 및 서비스 산업에서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 등 품질경영 혁신활동에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한 공로자와 우수기업에게 서훈·표창 수여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품질경영 포상)

- **(연혁)** 1975년 10월 '제1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 **(포상분야)** 품질경영 유공(단체 및 개인), 우수품질분임조상, 국가품질명장, 품질경쟁력우수기업 포상 및 증서 수여

- **(참석자)** 국무총리, 산업부 차관, 국표원장, 수상자 등 2,000여명 참석

※ 역대 주요참석 인사

- * 1975. 제1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김종필 국무총리)
- * 1992. 제18회 전국품질경영대회(노태우 대통령)
- * 1994. 제20회 전국품질경영대회(김영삼 대통령)
- * 2019.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이낙연 국무총리)
- * 2020.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정세균 국무총리)
- * 2023.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한덕수 국무총리)

- **포상 종류 및 수량** : 정부포상 37점 등 총 415점

훈격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계
유공자	3(금·은·철탑)	3	7	7	20
단체	-	-	11	6	17
계	3	3	18	13	37

* 장관표창 25, 장관상 5, 원장표창 10, 협회장표창 13, 우수분임조상 272, 국가품질명장 10, 품질경쟁력우수기업 43

참고3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이력

연도	대회명	개최지	주빈
1975	제1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 대회	1,500	김종필 총리
1976	제2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 대회	1,900	장예준 장관
1977	제3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 대회	1,900	장예준 총리
1978	제4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 대회	1,600	최규하 총리
1979	제5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 대회	1,600	최각규 장관
1980	제6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 대회	1,500	남덕우 총리
1981	제7회 전국품질관리 대회	4,000	서석준 장관
1982	1982 전국공장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 대회	4,200	김동휘 장관
1983	1983 전국공장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 대회	1,200	진의중 총리
1984	1984 전국공장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 대회	1,200	신병현 부총리
1985	1985 전국공장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 대회	1,200	신병현 부총리
1986	1986 전국공장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 대회	1,200	나용배 장관
1987	1987 전국공장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 대회	1,700	나용배 장관
1988	제14회 전국품질관리·표준화 대회	1,500	나용배 부총리
1989	제15회 전국품질관리·표준화 대회	1,500	한승수 장관
1990	제16회 전국품질관리·표준화 대회	700	박필수 장관
1991	제17회 전국품질관리·표준화 대회	700	정원식 총리
1992	제18회 전국품질경영대회	4,000	노태우 대통령
1993	제19회 전국품질경영대회	4,000	황인성 총리
1994	제20회 전국품질경영대회	4,000	김영삼 대통령
1995	제21회 전국품질경영대회	4,000	이흥구 총리
1996	제22회 전국품질경영대회	4,000	이수성 총리
1997	제23회 전국품질경영대회	4,000	고 건 총리
1998	제24회 전국품질경영대회	4,000	김종필 총리
1999	제25회 전국품질경영대회	1,700	김종필 총리
2000	제2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700	이한동 총리
2001	제2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300	장재식 장관
2002	제2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300	김석수 총리
2003	제29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400	고 건 총리
2004	제3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2,000	이해찬 총리
2005	제3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800	이희범 장관
2006	제32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600	한명숙 총리
2007	제33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800	김영주 장관
2008	제34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500	임채민 차관
2009	제3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500	정운찬 총리
2010	제3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700	박영준 차관
2011	제3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600	김형식 총리
2012	제3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600	김형식 총리
2013	제39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900	정홍원 총리
2014	제4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800	정홍원 총리
2015	제4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800	황교안 총리
2016	제42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800	정만기 차관
2017	제43회 국가품질경영대회	2,000	정동희 원장
2018	제44회 국가품질경영대회	2,000	성윤모 장관
2019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2,000	이낙연 총리
2020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현장 40	정세균 총리
2021	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현장 91	이상훈 원장
2022	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2,000	장영진 차관
2023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	2,000	한덕수 총리